

2023

연구결과 요약집

Summaries of 2023
Research Reports

발 간 사

우리 연구원은 인천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고 그에 맞는 합리적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 한 해 연구원은 시정 핵심사업인 제물포르네상스뉴홍콩시티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시민행복도시 실현을 위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도시비전 구상 및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미래 경제산업 전략을 설계했습니다. 또한, 시민 행복 증진을 위한 도시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탐색하였습니다.

행정체제 개편, 도시기본계획 변경 등 원도심 재생과 초일류 도시 도약을 위한 분야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 추진단 신설을 통해 지역경제와 산업부문 동향 조사 및 체계적 전략 수립, 기후위기, 투자분석, 재난 안전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고자 했습니다.

『2023년도 연구결과 요약집』은 2023년 한 해 동안 수행한 연구과제 중 대외 공유 필요성을 고려하여 선별한 연구과제의 연구개요, 정책 건의 사항을 연구 분야별로 분류하여 집대성한 성과입니다. 연구주제별 민·관·학 소통의 일환으로 실시한 학술행사 결과물도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연구진들의 부단한 노력 끝에 나온 이 책이 관련 연구자와 공무원뿐만 아니라, 인천의 미래를 걱정하고 준비하는 지역 사회 각계각층의 모든 분에게 유익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2024년에도 인천의 미래를 선도하는 연구와 시민이 체감하는 연구에 연구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인천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지속 가능한 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데 더 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024년 3월

인천연구원장 박호군

2023년도 연구결과 요약집

연구사업개요

연구과제 구분

기초연구

인천시 정책 및 현황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으로 중·장기적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

연구자별로 각 연구 분야에서 중·장기적 정책을 심도 있게 고찰하기 위해 엄격한 과제선정 과정을 통해 추진하게 되는 연구원의 기초 연구사업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분야별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자료와 정책 논리를 제공하는 연구

정책연구

인천시 시책 수립 및 정책 결정을 위한 정책 수요에 대응하는 연구

연 2회 상하반기 각 부서의 요청과 정책기획관실의 조정과정을 통해 선정하는 연구과제로서 연구자의 전문가적 식견을 기초로 단기적 검토를 통해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정책집행에 직접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연구

기획연구

정책 이슈 발굴을 통해 인천시 정책 방향 및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

인천시 차원에서 긴급하게 요구되는 시정 현안에 대응하고, 여러 분야가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학제 간 통합연구와 같이 기초연구 형태로 추진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의 협조하에 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연구

현안연구

시급한 현안 이슈에 대하여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연구

시의성이 요구되는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해 쟁점별 이슈를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정리하여 관련 부서에 제공하는 연구

이슈브리프

현안이슈 및 잠재적 정책 이슈에 대하여 제언하는 연구

현안이슈에 대한 분석 결과 제공 및 연구자의 전문적 식견에 기반하여 인천시 정책판단의 근거를 제시하는 단문 연구보고서

수탁연구

법정계획 등 시정 분야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연구

인천시 정책의 기본방향을 결정하는 분야별 법정계획과 광범위한 기초조사 등이 수반되는 연구로서 조사비, 외부 인건비 등 추가적인 사업비가 필요하며, 발주부서에서 사전에 연구수행의뢰가 이루어지면 연구원 내부의 용역 사업심의위원회에서 수행 여부를 심의·의결하여 별도의 계약 과정을 통해 추진하는 연구

연구과제 추진실적

『2023년도 연구결과 요약집』은 2024년 3월말 기준 발간된 과제를 선별하여 총 120편 수록

(단위: 건)

구분	소계	행재정 남북	교육 복지	문화 관광	경제	환경 안전	동북아· 국제	교통 물류	도시 계획	투자 분석
소계	248	24	17	9	30	41	14	36	45	32
기초연구	3	-	-	-	-	1	-	1	1	-
기획연구	96	6	5	4	13	20	7	6	11	24
정책연구*	44	5	4	3	4	4	-	9	13	2
현안연구**	66	12	4	2	8	8	6	9	12	5
수탁연구	39	1	4	-	5	8	1	11	8	1

* 정책연구에 시정밀착형 정책연구, 군·구협약 정책연구를 포함함.

** 현안연구에 이슈브리프를 포함함.

국내·국제 학술행사

국내학술행사	2023 인천시정연구네트워크 정기총회 및 공동연구발표회 외 22건
국제학술행사	제7회 동아시아 문호도시 정책포럼 외 6건

2023년 4대 역점사업 연구단

I. 제물포르네상스연구단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실천적 대안모색 및 공간의 재해석		제물포르네상스연구단	5
기획	제물포르네상스 공원녹지 정비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권전오	26
	인천내항 일대 수변공간 가치창출을 위한 친수공간 조성방향	기윤환	31
	제물포르네상스 환경적 쟁점 및 대응방향	김성우	38
	인천시 역사문화자원 보전형 주거지정비 모델 연구: 중·동구를 중심으로	이왕기	42
	인천 제물포르네상스 도시디자인 계획 요소 연구	이인재	47
	제물포르네상스 도시형 혁신공간 조성을 위한 실천대안 연구	조상운	52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 스마트도시 구현방안	민혁기	56
	인천 내항 배후산업공간의 역사적·장소적 가치 해석	안내영	61
	제물포르네상스 시민참여 방안 연구	윤혜영	67
현안	인천 내항 일원 항만기능 이전에 따른 배후물류시설 실태 및 기능변화	김운수	71

II. 글로벌도시연구단

인천의 글로벌 도시경쟁력 진단과 제언		글로벌도시연구단	76
기획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성과와 발전방향	기윤환	84
	인천시 차세대 재외동포 교육지원 방향과 과제	배은주	90
	재외한인 플랫폼 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방향과 과제	김수한	97
	경쟁력 관점에서의 인천경제자유구역 정주여건 분석	윤혜영	103
	소셜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천시 도시브랜드 분석과 시사점	조혜정	112
	인천의 기후변화 대응 글로벌 협력 방향과 과제	한준	115

III. 글로벌산업전략연구단

도시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략 연구		글로벌산업전략연구단	123
기획	인천시 Sea&Air 복합운송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강동준	135
	대만 발전모델의 재편과 신성장 연구	김수한	139
	인천시 전략산업의 인적자원 육성방안 연구	민규량	147
	인천시의 글로벌 투자 유치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윤석진	155
	인천시 연구개발(R&D) 특성 및 역량강화 방안	이정영	158
	인천시 디지털 신산업 현황과 미래전략	최태림	163

IV. 시민행복연구단

시민행복 증진을 위한 정책 방안		시민행복연구단	174
기획	인천시 포용적 평생교육 실태의 지표 분석과 정책과제	배은주	177
	시민 관광향유 증진을 위한 정책 방향 및 과제	심진범	183
	지역맞춤형 보건의료연계 통합돌봄서비스 활성화 연구	이용갑	192
	인천시민의 공공행복 수준 조사	이미애	214
	인천광역시 재난복지 실현 방안	조성윤 정혜은	227
현안	소셜 빅데이터를 통해 본 인천시민의 행복	서봉만	236

도시사회연구부

I. 행·재정·남북관계 분야

기획	행복도시 인천 구현을 위한 인천시 남북 이산가족 정책방향과 과제	남근우	242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의 확대 추진방향과 과제	남근우	252
	9·15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 중장기 발전방안	남근우	263
정책	인천시 시비보조사업의 보조율 개선 방안	이미애	275
	인천 중구 공항 소음대책(인근)지역 주민지원사업 활성화 방안	이정철	286
현안	인천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례 제도 연구	채은경	290
	인천시 서해5도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대안 탐색 연구	이정철	291
	인천시 시정혁신과제 평가지표 관리방안 연구	이정철	292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 사전 검토 연구	이정철	293
	수요 기반 인천고등법원 설립 필요성 검토	채은경	305
이슈 브리프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의 추진방향과 과제	남근우	306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에 따른 인천시 대응과제	이미애	307
	인천시민의 삶과 공공행복	이미애	308

II. 교육·복지 분야

기획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 성과분석 및 지속가능성 방향 연구	이용갑	312
정책	'건강도시 인천' 조성 방안 연구	이용갑	332
	인천시 가족센터 설치 필요성 및 운영 방안 검토	정혜은	356
	아동양육시설 경계선지능 및 ADHD 아동 지원 강화 방안	정혜은	360

현안	중·동구 원도심 지역 일반고등학교 활성화 방안	배은주	363
	인천형 생애주기별 맞춤형 저출산 정책방안	정혜은 채은경 민규량 배은주	364
이슈 브리프	인천은 여성에게 안전한 도시인가?	정혜은	365

III. 문화·관광 분야

정책	인천시 생태관광마을 육성방안 연구	심진범	369
현안	서해~한강 연결사업과 연계한 섬 관광 활성화 방향	심진범	377

경제환경연구부/인천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

I. 경제·국제 분야

기획	부동산 세제 발전 방향	허동훈	381
	클라우드펀딩과 고향사랑기부제 연계 방안	조승헌	385
	인천시 성과확산을 위한 기술사업화 활성화 방안	이정영	387
정책	소상공인 정책현안 진단 및 대응방향 마련	민규량	392
	인천 향토음식 자원 발굴 및 육성방안	서봉만	397
	인천광역시 항공금융 정책 방향 연구	윤석진	402

CONTENTS

현안	인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본 방향과 과제	김수한	406
	재외한인과 연계한 경험의 방향과 한상비즈니스센터의 역할 검토	김수한	409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김수한 박찬열	412
	글로벌 혁신산업도시 조성을 위한 전략산업 창업 활성화 방안	서봉만	414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을 통한 기업 유치 인센티브 개선 방향 검토	윤석진	415
	글로벌네트워크 중심도시 발전모형 연구	윤석진	416
	인천지역 생산자서비스업의 특성 분석 및 활성화 방안	박지은 윤석진	417
이슈 브리프	재외한인과 함께하는 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 정비 방향 제언	김수한	418
	인천지역 반도체산업 현황과 지원정책 수요 검토	윤석진	419
	글로벌 게이트웨이 발전 전략과 뉴홍콩 프로젝트에 대한 시사점	윤석진	420
	인천지역 반도체산업 현황과 지원정책 수요 검토	윤석진	421

II. 환경 분야

기초	인천 연안 미세플라스틱 특성 연구	최여울	425
기획	한강하구 탄소흡수력 현황 및 관리방안	김성우	431
	인천광역시 화학물질 취급·배출 특성 연구	최여울	435
기획	인천광역시 온실가스 배출의 탈동조화 및 요인분해 연구	한준	441
	지역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연구	조경두 윤수향	445
	인천광역시 탄소중립을 위한 시민참여형 행동계획 및 이행평가 연구	조경두 최종석	453
	인천광역시 도로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공간 할당을 위한 방법론 연구	이태휴 한준	457
	인천 안전도시 이미지 강화 정책 방안	안승현 조성윤	466

CONTENTS

기획	인천광역시 안전문화 확산 및 정착 방안	안승현 조성윤	475
	인천광역시 지역안전지수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염재원 조성윤	483
	인천광역시 도시침수 위험성 분석 및 피해 저감방안 연구	염재원 조성윤	488
정책	인천광역시 중대시민재해 주요 이슈 및 대응 방안	조성윤	492
	인천광역시 환경교육센터 발전방향 연구	한준	501
현안	소래습지국가도시공원 추진을 위한 연결성 강화방안	권전오	505
	인천광역시 주민안전협의체 구축 방향	안승현 조성윤	506
	인천광역시 주소정보시설을 활용한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발전 방안	염재원 조성윤	507
이슈 브리프	개발제한구역내 자연환경복원 후보지 도출	권전오	508
	인천광역시 지진 대응 이슈 및 정책 방향	조성윤	509
	RE100의 주요 동향 및 시사점	한준	510

교통물류연구부

I. 교통·물류 분야

기획	C-ITS사업 고도화를 위한 빅데이터 적용 방안 연구	김종형	515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의무설치 예외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정동재	519
정책	해양산업클러스터 핵심산업(군) 선정 및 기본구상	김운수	523
	글로벌 물류허브 육성을 위한 인천형 물류 체계 연구	김운수	527
	송도 트랩계획을 고려한 인천타워대로~첨단대로 자전거 전용도로 구축 방안 검토	박민호	531
	영종국제도시 신교통수단 도입 기본구상 연구	정동재	535
	특별교통수단 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	정동재	539

CONTENTS

현안	인천시 중앙버스전용차로 추진 연구	김종형	543
	시내버스 준공영제 효율화 방안(안)	김종형	544
이슈 브리프	해사전문법원 인천 설립 당위성	강동준	545

도시공간연구부

I. 도시계획 분야

기초	인천개항장 기후친화 보행공간 계획기법 시범적용 및 효과분석 연구	김유정	549
기획	인천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방안 연구	윤혜영	554
정책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및 지원을 위한 정책방향	기윤환	559
	인천시 공공주택공급을 위한 정책방향	기윤환	563
	인천광역시 특별건축구역 활성화 적용 방안	조상운	574
	인천광역시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	김유정	581
	근로자임대아파트 활용방안 연구	안내영	586
	영흥 공공사업 추진부지 활용방안 연구	윤혜영	590
	현안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을 위한 개발 관련 법률 특례 방향	기윤환
이슈 브리프	뉴홍공시티 및 제물포르네상스 추진을 위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방향	기윤환 이종현 채은경 윤석진	597
	인천광역시 중·동구 인구감소 대응 정책방향	민혁기	598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을 통한 수도권규제 해소방향 연구	이종현	599
	내항일원 고층건축물 증가에 따른 도시경관 관리 제안	이인재	600
	반려동물을 위한 도시계획: 인천 동물친화도시 구상	윤혜영	601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

I. 투자분석 분야

기획	공공 문화·체육시설의 공간적 불균형 분석	박찬운	605
정책	인천경제자유구역 산업용지 개발의 공공성 확보 방안	박찬열 배덕상	616
현안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인천 개최의 경제적 효과 분석	박찬열	623
	신규 조성 산업단지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박찬열	624
	중봉터널 민간투자사업 사전검토 및 민간 투자사업 검토 절차 제언	박찬열 배덕상	626
이슈 브리프	2023년 인천 부동산 시장 진단	배덕상	627

국내·국제 학술행사

I. 국내 학술행사

2023 인천시정연구네트워크 정기총회 및 공동연구발표회	631
2023 도시정보 콜로кви움	633
“재외동포와 함께하는 글로벌도시, 인천” 전문가토론회	635
인천 미래 경제·산업 발전 방향 시민공청회	637
도시연구세미나 (24~25회)	639
한국ITS학회 2023년도 춘계학술대회 인천 세션	642
제물포르네상스 전문가발표회 (1~2차)	644
인천경제발전 시민 대토론회	646
2023년 인천경제연구회 3차 세미나	648
인천광역시의회-인천시정연구네트워크 정책소통 토론회	650
2023년 제3차 수도권포럼	654
제물포르네상스 연구성과 공유회	656

C O N T E N T S

인천도시역사포럼 (제1~2차)	658
2023 황해평화포럼	660
인천연구원-한국은행 인천본부 공동주최 인천시 경기진단 세미나	663
인천연구원 글로벌산업전략연구단 연구성과 토론회	665
2023 인천 안전도시 세미나	667
2023년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 세미나	669
시민행복연구단 연구성과 공유회	671
인천녹색기후아카데미 (2023년 제1~4차)	673
인천기후환경포럼 (2023년 제1~4차)	675
황해평화포럼 정책세미나 (제26~28차)	678
인차이나클러스터 (2023년 제1~13차)	680

II. 국제 학술행사

제7회 동아시아 문호도시 정책포럼	689
제3회 저탄소도시 국제포럼	692
2023 인천 국제재난복원력 지도자 포럼	694
인차이나포럼 2023 국제컨퍼런스	697
제7회 Megacity Think Tank Alliance Forum	700
2023 국제기후금융·산업컨퍼런스	702
제16회 인천연구원-키타큐슈시립대학 공동연구발표회	706

2023년도 연구결과 요약집

2023년 4대 역점사업 연구단

2023년도 연구결과 요약집

I

제물포르네상스 연구단

● 단행본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실천적 대안모색 및 공간의 재해석

● 기획연구

제물포르네상스 공원녹지 정비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인천내항 일대 수변공간 가치창출을 위한 친수공간 조성방향

제물포르네상스 환경적 쟁점 및 대응방향

인천시 역사문화자원 보전형 주거지정비 모델 연구: 중·동구를 중심으로

인천 제물포르네상스 도시디자인 계획 요소 연구

제물포르네상스 도시형 혁신공간 조성을 위한 실천대안 연구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 스마트도시 구현방안

인천 내항 배후산업공간의 역사적·장소적 가치 해석

제물포르네상스 시민참여 방안 연구

● 현안연구

인천 내항 일원 항만기능 이전에 따른 배후물류시설 실태 및 기능변화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실천적 대안모색 및 공간의 재해석

■ 제물포르네상스연구단

1. 배경 및 목적

❖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

- 인천시는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을 시정목표로 채택하면서 핵심가치로 '균형·창조·소통'을 제시했으며, 이중 원도심 혁신을 통해 균형있게 발전하는 도시를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의 심장 제물포르네상스'를 핵심공약으로 설정함
- 제물포르네상스는 대한민국의 근대화를 이끈 인천 내항(옛 제물포) 및 주변 원도심 지역을 대상으로 내항 일대를 미래성장산업과 청년창업의 산실로 만들고, 내항 일대가 가지는 근대역사, 독특한 해양·경관자원을 활용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해양관광도시를 조성하여 중구 또는 동구 일대, 나아가 원도심 전체로 확산한다는 개념임
- 2023년 인천시가 공개한 제물포르네상스 추진계획에 의하면, 비전은 '초일류도시 인천실현을 위한 제물포르네상스', 목표는 '문화와 관광, 산업이 융합되는 사람중심의 원도심 구현'으로 4대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음
 - 추진방향은 ①원도심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및 교통체계 구축으로 재창조, ②역사와 문화를 연계한 관광 콘텐츠로 다양화, ③원도심을 개편하여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④재개발사업 주도 및 앵커시설 등 조기 추진이 제시됨
 - 추진계획은 내항 일대를 중심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중·동구 전역을 대상으로 노후 주거지 정비, 수변·녹지축, 광역교통축 설정, 권역별 핵심기능의 배분 등이 제시됨

[그림 1] 제물포르네상스 추진 비전과 전략

비전	초일류도시 인천 실현을 위한 제물포르네상스	
목표	문화와 관광·산업이 융합되는 사람중심의 원도심 구현	
4대 전략 / 12대 과제	1 원도심 R 정주여건 개선 및 교통체계 구축으로 재창조	① Jemulpo 프로젝트 및 지원체계 구축을 활성화 방안 마련 ② Effect 속도감 있는 신속한 사업추진으로 체감 효과 제고 ③ Momentum 강력한 추진력으로 원도심 핵심 앵커사업 추진
	2 문화관광 R 역사와 문화를 연계한 관광 콘텐츠로 다양화	④ Unknown 알려져 있지 않은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⑤ Level up 기존 문화관광 시설을 새롭게 더 업그레이드 ⑥ Promenade 숲길·바람길·산책길로 즐길 수 있는 관광명소 조성
	3 산업경제 R 원도심을 개편하여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⑦ Only 원도심의 산업경제를 살리는 오직 목표로 성장동력 마련 ⑧ Re 청년 창업공간 및 스타트업 등 환경조성으로 다시 도약 ⑨ Naissance 원도심을 새롭게 탄생시켜 일자리 창출 도모
	4 내항개발 R 재개발 사업 주도 및 앵커시설 등 조기 추진	⑩ Great 비전과 계획을 크고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개발선도 ⑪ Pro 전문가 및 유관기관 등과 협업하여 항만기능 조기종료 ⑫ Ject 마스터플랜을 현 실정에 맞게 재검토하여 내실화
실행력 제고 방안	조직개편, 제도개선 ① 제물포르네상스 기획단 업무조정 및 기구 확대 개편 ② 내항 주변지역 지원법, 준설토 투기장 소유권 관련 법령 등	재원조달, 홍보방안 ①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한 유연한 재원 마련 ② 제물포르네상스 홍보방안 대책 마련

자료(출처): 인천광역시(2023),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계획

❖ 연구의 목적

-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는 지역이 가지는 특성을 고려하여 초일류도시 인천을 구현하는 중장기 프로젝트로, 실천적 전략을 통한 단계적 추진이 필요하다라는 인식하에 전체 연구주제는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 액션플랜(action plan) 연구’로 설정함
- 또한, 현재 인천시가 수립중인 ‘제물포르네상스 마스터플랜’에서 다루어야 할 정책이나 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이차적 목적으로 함
- 2022년 수행한 내항뿐만 아니라 중·동구가 가지는 과제와 쟁점의 연구결과와 연계하여 ‘실천적 대안 모색’ 및 ‘공간의 재창조’이라는 2개의 세부 주제를 정함¹⁾
 - 주제 1 :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 실천대안 연구
 - 주제 2 : 제물포르네상스 장소적 가치 및 공간 재창조

1) 인천연구원(2022),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의 핵심 가치 및 쟁점 도출

❖ 연구의 범위

- 제물포르네상스의 공간적 범위는 영종도를 제외한 중구와 동구 행정구역 전체이며, 총면적은 21.88km²임
- 중구 8개 동 14.74km², 동구 11개 동 7.14km²

[그림 2] 연구의 공간적 범위



2. 세부 연구주제의 설정

❖ 제1부 :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 실천대안 연구

-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 실천대안 연구는 2022년 연구결과를 토대로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에서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쟁점에 대하여 대안적인 계획방향 및 실천모델을 제시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함
-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를 계획하다’,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실천하다’라는 테마를 설정하고 마스터플랜 수립이나 실천적 사업발굴에 필요한 과제를 다루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6개 연구주제를 수행함
- ‘인천시 역사문화자원 보전형 주거지정비 모델 연구(중·동구를 중심으로)’는 중·동구 일대의 노후 주거지의 물리적 환경개선 역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지만,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역사문화자원의 보존과 소멸이라는 갈등이 대립하고 있는 실정임. 주거지 정비를 위한 중요한 역사문화자원의 훼손은 회복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체계적 보전과 활용을 전제로 하는 주거지 정비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제물포르네상스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실천수단으로 작동하기 위한 정책모델을 구상함
- ‘시민참여형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 실천전략 연구’는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시민참여 과정이나 경험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가능한 시민참여 형태를 살펴봄. 참여형 사업사례에서 시도되었던 시민참여의 형태와 프로세스, 유형 등을 통해 향후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에서 제안할 사업에서의 시민참여의 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 ‘제물포르네상스 도시디자인 계획요소’는 건축과 도시계획, 공공공간 등을 다룬 제물포르네상스에서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도시디자인 기법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도시디자인 기법을 적용하여 도시재생 사업화에 성공한 국외도시 사례를 검토하여 인천 제물포르네상스 계획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 이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안함
- ‘인천 내항 일원 항만기능 이전에 따른 배후물류시설 실태 및 기능변화’는 장기적인 내항기능 이전에 대비하여 내항 일원의 배후 물류시설의 유희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그 변화실태를 살펴보고 장기 항만기능 변화에 따른 시설의 재배치 방향을 전망함
- ‘제물포르네상스 환경적 쟁점 및 대응방향’은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현재 발생하고 있는 대기오염·수질오염 등과 같은 환경적 문제를 사업추진과 함께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하에 환경적 쟁점을 파악하고,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의 환경관리적 측면에서의 정책적 대응방향을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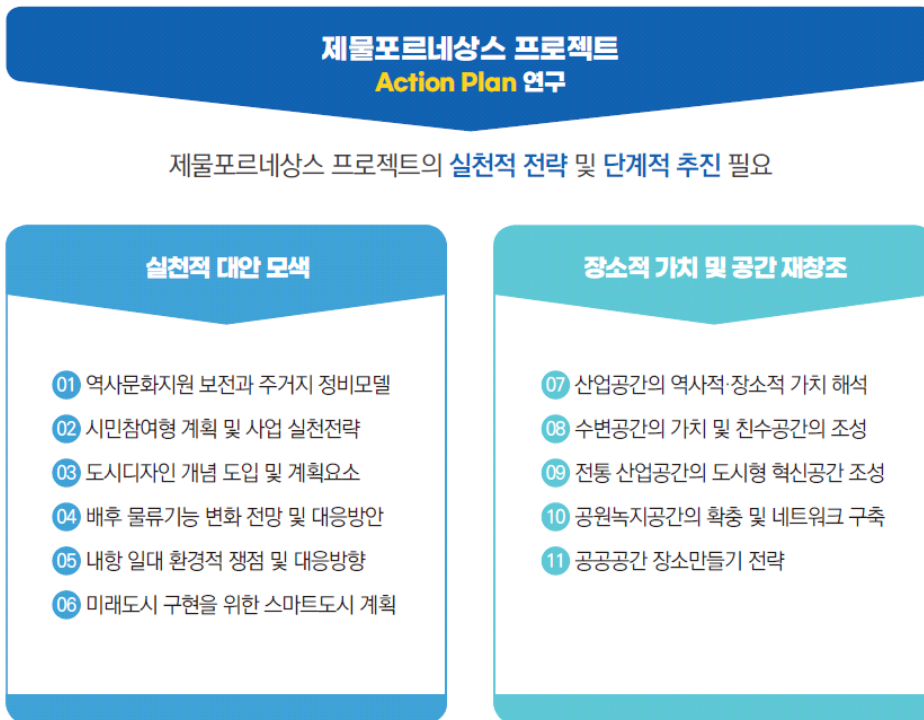
-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 스마트도시 구현방안’은 미래 도시의 핵심 개념중 하나로 등장한 스마트도시의 구현을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에서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하에 지역의 공간 특성을 바탕으로 그 실천방안을 제시함

❖ 제2부 : 제물포르네상스 장소적 가치 및 공간 재창조

- 그동안 개항기 근대역사자원이나 내항 등에 대한 가치 및 재생에 대한 논의는 활발히 진행되었으나, 인천 내항 일원이 가지는 중요한 산업자산 및 수변공간에 대한 장소적 가치 발굴 및 공간의 재해석을 통한 재창조 또는 재생에 대한 논의는 별로 다루어지지 않음. 이에 지역이 가지는 산업자산이나 수변자산의 실태 및 공간의 재창조 방안을 모색하여 지역특성을 반영한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추진에 활용하고자 함
- ‘인천 내항 일원 장소적 가치의 발굴, 재해석하다’라는 테마를 설정하고, 마스터플랜 수립이나 실천적 사업발굴에 필요한 과제를 다루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5개 연구주제를 수행함
- ‘인천 내항 배후산업공간의 역사적·장소적 가치 해석’은 우리나라 근·현대 산업역사 관점에서 내항 배후 산업공간의 장소적 가치가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지역이 가진 산업역사를 통해 역사적·장소적 가치를 발굴하고, 이를 활용한 산업공간의 재창조 방안을 모색하여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차별화된 장소적 의미를 부여함
- ‘인천 내항 일대 수변공간 가치창출을 위한 친수공간 조성방향’은 내항 전체와 주변지역의 수변공간에 대한 활용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내항 정온수역 등 수변공간에 대한 역사, 문화, 건축 등 고유 가치를 도출하고, 이들 공간을 상호 연계하여 창의적인 친수공간조성을 위한 방향을 제시함
- ‘제물포르네상스 도시형 혁신공간 조성을 위한 실천대안’은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가 미래 인천 경제를 선도하는 기업 및 인재의 유치에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지역이 가진 내항 및 배후의 유희공간 발생가능성과 지역자산을 활용하여 지식경제시대에 지역발전모델로 등장한 ‘도시형 혁신공간(innovation district) 형성’이라는 새로운 실천전략(공간전략) 및 실천대안을 모색함
- ‘제물포르네상스 공원녹지 정비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은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지역이 가진 장소적 가치의 향상을 위해 공원녹지 공간의 재생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자유공원 등 공원녹지 거점의 활성화 방안과 함께 거점 간의 네트워크를 통한 문화·관광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실천방향 및 구상안을 제시함

- ‘제물포르네상스 공공공간을 활용한 장소만들기 전략’은 장기 사업인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내항 1·8부두 우선개방 공간의 활성화를 통한 미중물 효과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하에 우선개방공간을 활용한 시민참여형 프로젝트 발굴 및 장소만들기 전략을 제안하여 시민의 심리적·물리적 접근성을 강화하는 다양한 실험적 사업을 통해 시민이 먼저 찾는 내항만들기를 도모함

[그림 3] 연구의 목적 및 세부 연구주제



3. 내항 배후 산업공간의 공간특성 및 해석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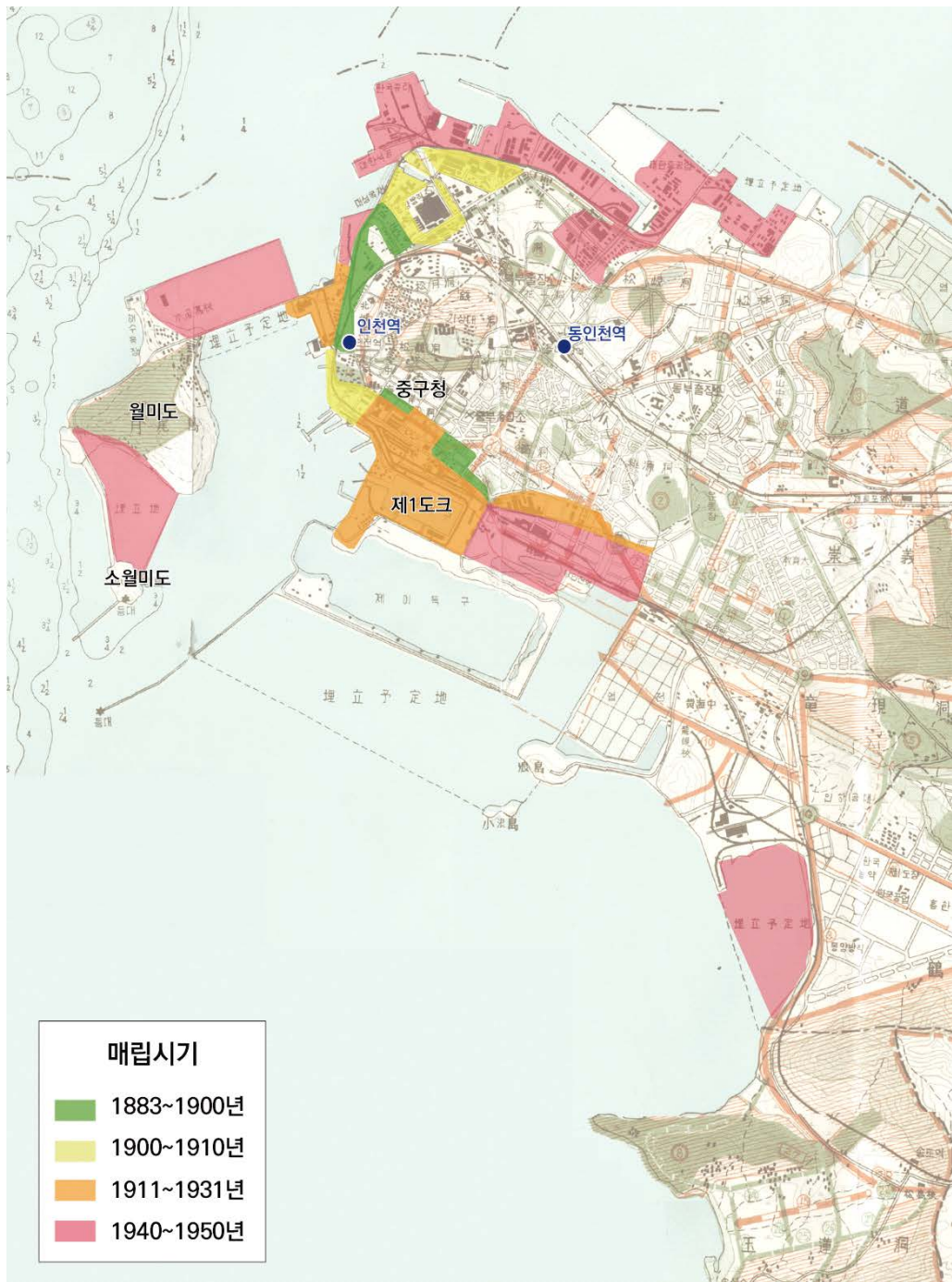
1) 내항 배후 산업공간과 산업유산

❖ 산업공간 확보를 위한 매립의 역사

- 인천 내항 배후 산업공간은 매립에 따라 형성되었으며, 매립시기에 따라 성격이 달라짐
 - 내항 배후 산업공간은 오늘날 내항, 연안항, 남항, 화수부두, 만석부두, 십자수로 등 현재 바다와 접한 지역은 대부분 매립으로 형성되었다는 특징을 가짐
 - 인천역이 위치한 만석동과 동인천역이 위치한 송현동은 1883~1900년 사이에 매립되었으며, 현재 동일방직 인근 만석동은 1900~1910년에 매립된 반면, 현재 일진전기 등 공업지역의 주요 지역을 이루고 있는 화수부두 쪽은 1940~1950년에 진행
 - 십자수로 인근은 1960년대 매립이 진행되었으며, 내항 1부두와 2부두 일부, 8부두 중심으로 1950년대 이전에 매립되고, 갑문 설치에 따라 형태가 변화해 왔음
 - 연안항과 남항은 1970년대 이후 매립하면서 형성됨
- 본래 육지부였던 개항장 일대와 1900년 이전 매립된 인천역, 동인천역 지역은 개항기와 일제강점기 산업화 유산이 집중되어 있음
 - 1945년 이전에 매립된 만석동과 화수부두 일대는 일제강점기부터 시작된 철강, 목재, 방적 산업의 유산이 산재해있고 관련 산업은 아직도 건재한 편임
 - 1970년대 매립된 연안항과 남항일대는 역사는 짧지만 연안항이 존재하고 물류, 수산업 관련 산업이 밀집된 곳임

2) 2023년 인천연구원 기획과제(「인천 내항 배후산업공간의 역사적·장소적 가치 해석(안내영)」, 「제물포르네상스 도시형 혁신공간 조성을 위한 실천대안 연구(조상운)」 등)를 참조하여 작성

[그림 4] 1945년 이전 내항 일대 매립 종합도



자료(출처): 인천광역시(2004), 지도로 보는 인천 120년 참고 재작성

[그림 5] 1945년 이후 내항 일대 매립 종합도



자료(출처): 인천광역시(2004), 지도로 보는 인천 120년 참고 재작성

❖ 산업공간 형성시기와 산업 특성

○ 내항·개항장지구

- 내항·개항장지구의 산업유산은 개항기와 일제강점기의 근대공업 관련 산업유산과 항만 지원관련 산업유산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소규모 공장은 해방 이전 정미소와 양조장, 장유공장과 관련 있는 것이 대부분이고 관련 사택들이 존재함
- 항만과 관련한 창고, 항만관련 업무시설, 옛 은행 건물 등 항만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산업유산이 대다수임
- 인천기상대와 시간을 알리던 방송탑도 인천항의 기능과 관련이 큼

[표 1] 내항·개항장지구 산업유산

구분(개)	산업유산 명칭	세부사항	건립연도(년)	
공장 (14)	소규모 (5)	화도교회선교관(구)김태훈 정미소	정미소	1933
		경동감리교회(구)주명기정미소	정미산업	1929
		인현동 8-1 상가건물 (구)마스다야 양조장	양조장	1939
		인현동 8-15 창고 (현 가요주점)	양조장	1939
		구인천정미소	정미소	1930
	대규모(1)	만석동 25-1 공장(1동)	제분공장	1935
		내동 143-1 주택(유항렬 가옥)	도선사주택	1933
		송현동 56-82 주택군	영단주택	1940
		창영동 구 인천 양조장 사택	양조장사택	1920
		창영동 7 주택 (구)인천양조장 사택	양조장사택	1927
창고	특수창고 (9)	인천아트플랫폼(E동)	아트플랫폼	1933
		인천아트플랫폼(H동)	아트플랫폼	1943
		인천아트플랫폼(A동)	아트플랫폼	1902
		인천아트플랫폼(C동)	아트플랫폼	1948
		인천아트플랫폼(B동)	아트플랫폼	1948
		중앙동1가 3-3 창고	붉은벽돌창고	미상
		인천개항박물관 부속 수장고	붉은벽돌창고	1945
		한류영상콘텐츠관 (구)가와바타 창고	붉은벽돌창고	1942
아카이브카페빙고		얼음창고	1920	
업무시설 (5)	조선일보 중부지국	일제강점기업무시설	미상	
	선광문화재단	업무시설	1945	
	인천문화재단	조선상업은행건물터	2002	
	인천지방해양수산청(구)해사국	해사국	1948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인천출입관리소	1961	
공간환경 (7)	송현동 순대골목	시장	1962	
	송현시장	시장	1958	
	송림시장	시장	1958	
	인천내항 제1부두	1부두	미상	
	인천아트플랫폼	인천아트플랫폼	미상	
	신포시장	시장	미상	
기반시설 (2)	신포문화의 거리(기업은행 위치)	시장	미상	
	자유공원 방송탑	방송탑	1925	
	인천기상대	기상대	1925	

❖ 화수·만석지구

- 제분공장, 제철공장, 기계공장, 방직공장 등 대규모 공장과 관련 사택군의 산업 유산이 다수임. 1930년대 군수산업이 입지했던 역사와 해방 후 대규모 공장으로 경제 성장기를 이끌었던 역사를 특징을 반영하고 있음
- 무역항이 아닌 서민들의 삶을 담고 있는 화수부두와 북성포구가 있음
- 소월미도에 갑문과 갑문타워, (구)갑문청사와 같은 갑문관련 산업유산이 있음
- 7부두에 위치한 대한씨이로는 내항의 독특한 경관을 지배하고 있음

[표 2] 화수·만석지구 산업유산

구분(개)	산업유산 명칭	세부사항	건립연도(년)		
공장 (17)	소규모 (2)	구)조일장유주식회사 공장	장유공장	1943	
		동아원 인천공장(구)사이토정미소	정미소	1924	
	대규모 (7)	대한사료	사료	1947	
		대한제분 인천공장	제분	2004	
		대한제당 인천공장	제당	1979	
		선창산업 12동	목재	1980	
		일진전기(주) 공장	전기	1938	
		현대제철 (현대제철빌딩)	제철	1964	
	부속시설 (8)	동일방직(의무실)	방직	1930	
		대한제당 중앙연구실	공장연구소	1984	
		화수동 7-328	공장사택군	1938	
		화수동 35-14 주택군	노동자주택군	1944	
		송현동 66-655 주택군	조선기계제작소사택	1941	
		화수동 37-194 구)인천공장창 관사	인천공장창관사	1945	
		만석동 69-1 공장	공장연구소	1943	
	참고	일반참고 (2)	대성목재 2동 참고	목재참고	1936
			만석동 1-4 참고(40동)	참고건물군	1962
업무시설(1)	인천항 구)갑문청사	항만	1978		
공간환경 (2)	화수부두	부두	1930		
	북성포구	포구	미상		
기반시설 (3)	인천항 갑문타워	항만	1974		
	인천항 갑문	항만	1974		
	대한씨이로	씨이로	1971		

○ 연안항·남항지구

- 연안항·남항지구는 1970년대 이후에 매립된 지역으로 오래된 산업유산은 많지 않음
- 본래 육지지역이었던 신흥동 지역에 오래된 붉은 벽돌 창고와 정미소터가 존재함
- 항만과 관련한 연안여객터미널, (구)국제터미널, 인천세관 등을 산업유산이라 할 수 있음

[표 3] 연안항·남항지구 산업유산

구분(개)		산업유산 명칭	세부사항	건립연도(년)
공장 (2)	소규모(1)	구)스기노정미소	정미산업	1930
	대규모(1)	CJ제일제당(주) 원료입하실	제당공장	1935
창고	특수창고 (3)	신흥동3가 38-2 창고	붉은벽돌창고	1957
		신흥동1가 34-33 창고	붉은벽돌창고	미상
		신흥동1가 34-34 창고	붉은벽돌창고	1949
업무시설 (5)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연안여객터미널	미상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국제여객터미널	미상
		인천본부세관	인천세관	1992
		한국은행 인천지점	은행	1950
		창신조	부두노동단체건물	1910
기반시설(1)		수인선(협궤철도) 제일화학 위치	수인선	미상

❖ 근대화시기 근대공업의 발달로 남아있는 산업유산

- 근대화시기와 일제강점기까지 주요 산업이었고 인천항을 중심으로 인천 경제의 중심이었던 개항장에 집중 분포함
- 개항장 일대에는 근대화 시기 가장 먼저 근대화를 겪은 곳인 만큼 여러 가지 근대 공업이 나타난 장소로, 현재까지 정미업, 양조업, 장유업 관련 산업유산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쌀 수출을 담당한 정미업과 함께 쌀을 이용한 양조업이 발달하고 관련 산업이 집적
 - 대두 및 보리 등 원료과 소금 수급이 용이하여 간장 등 장유업 또한 발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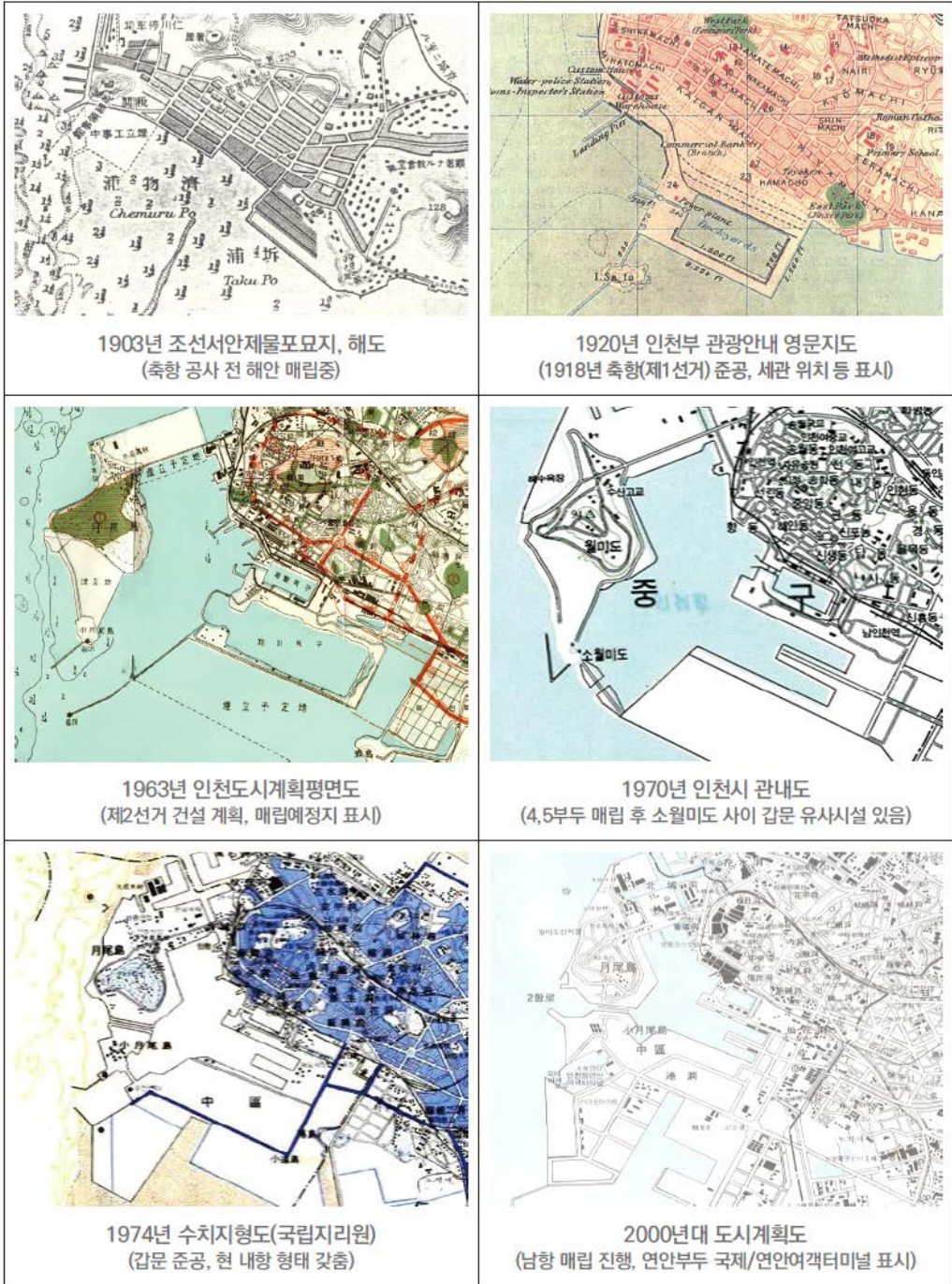
[표 4] 개항장 일대의 정미업, 양조업, 장유업 관련 산업유산

구분	명칭	연도(년)	현황
정미업 (9)	조선정미주식회사 인천지점	1917	사택, 창고등 부분현존
	동인천 이마트(구)가토정미소	1919	동인천 이마트 근처
	인천미두취인소 터	1896	인천스카이에듀홍보관
	타운센트정미소	1892	크라온 볼링장(부분현존)
	고려정미소	1908	벽, 굴뚝 등 부분현존
	다카노정미소	1904	없음
	유군성정미소	1924	사택, 창고등만 현존
	조선미곡창고주식회사	1930	대한통운주식회사(붉은벽돌창고 및 사택 현존)
	이흥선정미소	1925	정원만 인천정보산업고등학교 후원으로 남아있음
양조업 (16)	나오노정미소	1920	창고(현재 유흥업소 및 사택현존)
	정진수 이순일 정미소	1927	없음
	오쿠다정미소(난바, 요시무라)	1919	하이마트창고(사택, 창고등 부분현존)
	대륙정미소	1924	우물만 남음
	아리마정미소	1924	공장, 창고, 사택 현존
	요시무라 정미소	1927	사택, 창고등 부분현존
	난바정미소	1927	하이마트창고(사택, 창고등 부분현존)
	용강양조장	일제강점기	
	다카스키양조장	1905	부분현존(창고)
	후카미양조장		
	마쓰다야 양조장	일제강점기	
	조선운송주식회사(마루보시창고)	일제강점기	
	조일양조장터	1919	철거(주차장)
	다카스키양조 판매장(산업시설)	1905	부분현존(창고)
	다이와양조장및주인집	일제강점기	주차장
	히야시다양조장	일제강점기	
장유업 (3)	쿠라시계간장양조장	1905	
	나라모토간장양조	미상	
	노다간장주식회사조선지점	1896	송림지구대

❖ 인천 내항 선거 및 갑문이 가지는 역사적·경관적 가치

- 인천항은 1883년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개항된 항구이자 국내 유일의 갑문항임
 - 당시 개항장은 제물량 일대의 항구로 개항 이전부터 항구로 이용되었으며, 조선 초기 제물포라는 명칭으로 불렸고, 우리나라 유일의 군항으로 서해의 수비를 위한 군사적 요충지 역할을 수행했음
- 1884년 9월 인천 유관기관의 협력을 얻어 인천 상인단체의 출자로 항구로 개발되기 시작하였으며, 1906년 항만시설 개설 계획이 수립되면서 근대 항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됨
 - 1893년 현재의 파라다이스 호텔(구 올림포스 호텔) 남쪽 도로를 매립하여 석축을 축조하였고, 소월미도 끝과 팔미도 서쪽 끝에 등대를 설치
 - 1906년부터 시작된 인천항 수축계획에 의해 축항공사가 시작되었고, 1918년 현 1부두에 최초 갑문식 1도크가 준공되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유일한 갑문이며, 제1도크의 경우 당시 동양 최대의 갑문이었음
 - 축항 건설 당시 월미도를 연결하는 제방이 함께 만들어졌고, 이때부터 월미도는 관광명소로 역할을 하였음(월미도 조탕, 해수욕장, 시습농장 등)
- 1966년부터 1974년까지 총 공사비 149억 원을 투입하여 월미도와 소월미도 사이에 새로운 갑문을 확대 건설하고 기존 제1도크를 포함한 내항 전체를 도크화하는 공사를 완공함
- 인천항 갑문은 항만 구조물 중에서도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산업유산으로 항만이 가진 독특한 경관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선거 건립을 위한 매립 및 갑문 설치 과정에서 다양한 역사적 스토리가 존재함
 - 1911년 시행된 인천항 도크 축조 당시, 김구선생이 노역에 동원되었다는 역사적 기록이 존재

[그림 6] 인천항 선거 및 갑문 관련 시설 건립과정



자료(출처): 지도로 보는 인천의 변화(2014)

2) 항만 배후 산업공간의 토지이용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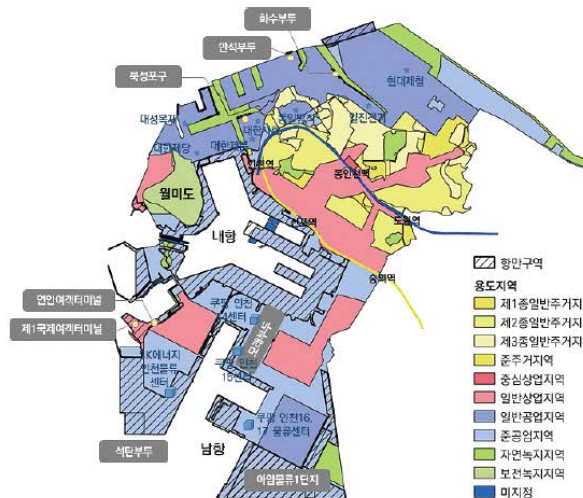
❖ 중·동구 전체 공업지역이 60% 이상을 차지

- 용도지역은 준공업지역 8.6km², 일반공업지역 4.6km², 일반상업지역 3.5km², 제2종일반주거지역 1.8km² 순으로 구성됨
- 일반공업지역은 만석·화수부두 주변과 아암물류1단지 북측에 주로 지정되어 있으며 대규모 제조업 공장이 입지하고, 준공업지역은 내항과 남항 일대에 지정되어 있으며 물류창고가 주로 분포하고 있음
- 중심상업지역은 동인천역 부근, 일반상업지역은 제1국제여객터미널, 연안부두어시장 일대에 지정되어 있으며, 일반주거지역은 인천역과 동인천역 북측에 위치함

[표 5] 용도지역별 면적

(단위: m², %)

용도지역	면적	비율	용도지역	면적	비율
제1종일반주거지역	57,397	0.3	일반공업지역	4,601,187	20.4
제2종일반주거지역	1,832,337	8.1	준공업지역	8,601,400	38.1
제3종일반주거지역	1,252,613	5.6	자연녹지지역	1,536,258	6.8
준주거지역	404,214	1.8	보전녹지지역	613,862	2.7
중심상업지역	22,284	0.1	미지정	93,710	0.4
일반상업지역	3,534,127	15.7	합계	22,549,388	100.0



자료(출처): 국가공간정보포털_도시지역(2023.06.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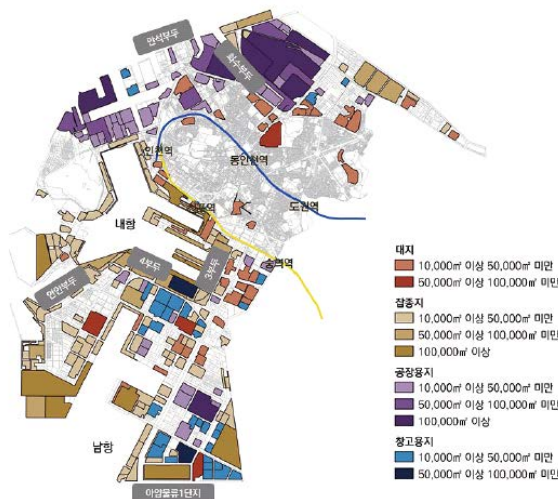
❖ 대형 공장·창고로 넓은 면적의 필지 규모 다수

- 공업지역의 특성상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필지 규모는 1만㎡ 이상 5만㎡ 미만으로 34.1%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10만㎡ 이상 14%, 500㎡ 미만 12.5% 순으로 나타남
 - 1만㎡ 이상의 필지 중 대지는 동인천역, 제3부두, 연안부두 주변, 잡종지는 내항과 남항 주변, 공장용지는 만석·화수부두 주변, 공장용지는 4부두와 아암물류1단지 주변으로 위치함
- 이를 볼 때, 향후 내항기능 이전에 따라 잡종지, 공장용지, 창고용지 등 대형 유휴 필지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에 따른 개발잠재력이 크다고 볼 수 있음

[표 6] 지목별 면적

(단위: %)

구분	총면적 비율	지목 중 일부					
		공원	대지	잡종지	공장용지	창고용지	학교용지
500㎡미만	12.5	0.1	9.2	0.6	0.4	0.0	0.0
500㎡이상 1천㎡미만	3.6	0.0	1.2	0.5	0.6	0.1	0.0
1천㎡이상 1.5천㎡미만	2.4	0.0	0.6	0.5	0.3	0.0	0.0
1.5천㎡이상 3천㎡미만	5.9	0.1	1.1	1.4	0.9	0.2	0.1
3천㎡이상 1만㎡미만	16.8	0.4	2.4	4.6	2.1	1.3	0.6
1만㎡이상 5만㎡미만	34.1	1.3	4.5	9.7	5.2	3.1	2.2
5만㎡이상 10만㎡미만	10.7	0.0	1.3	4.3	2.9	0.7	0.0
10만㎡이상	14.0	2.1	0.0	5.7	5.2	0.0	0.0
총합계	100.0	4.2	20.4	27.4	17.7	5.5	3.0



자료(출처): 국가공간정보포털_연속지적도(2023.06.12.)

❖ 중구는 창고·공장, 동구는 공장·판매시설 위주 입지

- 공업지역 내 분포하고 있는 건축물의 주용도를 기준으로 연면적 비율을 파악한 결과 창고시설 37.8%, 공장 37.5%, 판매시설 6.3%, 근린생활시설 4.7% 순으로 나타남
 - 중구는 창고 56.2%, 공장 23.1%로 약 80% 면적을 차지하고 있음
 - 동구는 공장 61.4%, 판매시설 16.3%로 약 78% 면적을 이루고 있음

[표 7] 공업지역 내 건축물 주용도별 현황

(단위: m², %)

구분	총 합계	면적비율 1.5% 이상 주용도							
		창고	공장	판매	근린생활	의료	자동차	운수	
대상지	건축물 연면적	5,071,840	1,917,953	1,901,891	317,475	237,773	155,022	128,685	93,171
	비율	100.0	37.8	37.5	6.3	4.7	3.1	2.5	1.8
중구	건축물 연면적	3,166,406	1,780,478	732,402	6,171	162,591	80,183	80,183	93,111
	비율	100.0	56.2	23.1	0.2	5.1	3.4	2.5	2.9
동구	건축물 연면적	1,905,434	137,475	1,169,489	311,304	75,182	48,502	48,502	60
	비율	100.0	7.2	61.4	16.3	3.9	2.5	2.5	0.0



자료(출처): 건축데이터 민간개방시스템_건축물대장(2023.04), 국가공간정보포털_건물통합정보(2023.01.)

- 창고시설 연면적은 2014년 대비 2023년 기준 92.5%가 증가하였으며, 중구의 내항 3부두와 남항 인접지역에 10만㎡ 이상의 대형창고가 입지하고 있음
 - 동구의 창고시설 연면적 증가율은 3.8%로 2014년과 비교하여 큰 변화는 없음
- 공장 연면적은 2014년 대비 2023년 기준 11% 증가하였으며, 주로 만석·화수부두와 남항 인접지역에 위치하고 있음
 - 중구는 300㎡ 이상 5천㎡ 미만의 규모가 주로 증가하였고, 동구는 주로 100㎡ 이상 500㎡ 미만으로 소규모 위주의 증가세를 보임
- 운수시설 연면적은 2014년 대비 2023년 기준 23% 감소하였으며, 대부분 중구의 2부두, 4부두, 석탄부두 인접지역에 밀집하고 있음
 - 1만㎡ 이상 10만㎡ 미만 규모의 운수시설 건물이 62.8% 감소함
-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 연면적은 2014년 대비 2023년 기준 12.4%가 증가하였으며, 중구 내항 5부두 인접지역에 인천국제수산물타운이 입지하고 있고, 동구 송림동, 송현동에 인천산업용품유통센터가 입지하여 1만㎡ 이상의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 면적을 유지하고 있음
 - 중구는 소규모 시설이 감소하고 1천㎡ 이상 면적의 건물이 증가하였고, 동구는 3천㎡ 이하의 규모로 시설이 증가함

3) 대규모 유희공간의 발생과 새로운 움직임

❖ 대규모 개발사업의 난항

- 인천역 일대는 2016년 입지규제최소구역(면적 24,693㎡)으로 지정되었으나 민간유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년간 제대로 추진되지 못함
- 동인천역 일대는 2009년 인천시가 공영개발로 도시재생사업을 시도, 2016년 민간개발사업으로 ‘동인천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 2019년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동인천역 역전 프로젝트’가 선정되어 사업비 일부를 집행하였으나, 2022년 연말부터 전면개발방식을 검토하고 있으며, 도시재생사업 취소 방안을 고려 중임
 - 2023년 3월 국토부의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추진계획 발표에 따라, 인천시는 인천역과 동인천역 일원에 대해 혁신구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임(이종일, 2023.02.02.)

-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은 '15년 사업계획이 고시되었으나, 2차례 민간사업 공모가 무산되어 현재 IPA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예비타당성을 2023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임

[표 8] 내항 일대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경과

사업 부지	추진 경과
인천역	2015.04.: 인천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경제기반형)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시↔코레일) 2016.07.: 인천역 일원 입지규제최소구역 결정 고시(국토부고시 제2016-497호) 2016.11.~2017.03.: 인천북항역사 개발사업 조사용역 착수/용역 완료 2018.10.: 인천역 부지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모집 공고 2019.01.: 사업신청서 접수 완료, 사업신청자 없음 2019.06.: 혁신지구 지정을 위한 기본구상(안)용역 착수
동인천역	2009: 인천시가 공영개발로 도시재생사업 시도, 무산 2016: 민간개발사업으로 '동인천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 무산 2019: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동인천역 역전 프로젝트'가 선정, 사업비 일부 집행 2022: 연말부터 전면 개발방식 검토, 도시재생사업 취소 방안 고려 중
내항 1·8부두	2015.03.: 인천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 사업계획 고시(해수부고시 제2015-23호) 2015.04.: 인천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 사업시행자 공모 공고(해수부공모 제2015-278호, 무산) 2016.04.: 8부두 일부 개방 [2선석(80, 81), A=49,830㎡] 2017.08.~2019.06.: 인천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 용역 2018.03.~2018.12.: 인천내항 일원 통합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해수부, 인천시, LH, IPA) 2019.01.: 인천내항 일원 미래비전 선포식 개최(해수부) 2019.07.: LH 사업참여 철회 2020.09.: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계획서 제출(IPA→해수부) 2021.02.: 재개발사업 추진결정 통보(해수부→IPA) 2021.08.: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정(해수부→IPA) 2022.03.: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사업시행자 지정(해수부→IPA) 2023.10.: 시민 우선개발 예정

자료(출처): 인천광역시 재생콘텐츠과(2019), 인천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 인천항만공사(2022),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이종일(2023.02.02.), 인천시, 동인천역 재생사업 중단... '오락가락' 행정 불신

❖ 대규모 유희부지에 대한 새로운 움직임

- 동구에 위치한 대표적인 대규모 공장부지인 일진전기(1956년 준공)는 2015년에 폐업신고 하였으며, 1934년에 가동한 동일방직은 2018년부터 공장 가동을 멈춤
 - 2019년 국토부는 일진전기 부지 22,752㎡를 대상으로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 지구'로 지정하여 동구, LH가 참여하고, R&D센터, 창업지원센터, 문화여가·공공복지·주거 및 교육시설, 행복주택 등을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일진전기 측에서 부지매각을 거부함(황남건, 2023.07.11.)
 - 인천시는 2022년 2월 만석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이 중 동일방직 부지, 태성철강 주변, 동아원 부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그림 7] 만석지구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자료(출처): 이범수(2022.02.03.)

- 안내영(2021)은 최근 3년간(2019년~2021년) 향동7가, 신흥동3가에 신축된 물류센터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분석결과 신축된 물류센터는 10개소이며, 50m 이상인 대형 물류센터가 다수 건설되었던 것으로 조사됨
- 남향과 연안향 인근의 대형필지에서 필지들이 세분화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큰 필지에서 중필지로 나누어지고, 이후 반복적으로 더 세분화되는 현상이 나타남

[그림 8] 남향 및 연안향 필지 세분화 현황



자료(출처): 안내영(2021), 인천항 기능변화에 대비한 내향·남향 배후지역 미래 발전 구상, p.124-125

제물포르네상스 공원녹지 정비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 권전오 경제환경연구부 선임연구위원

1. 연구목적

- 제물포르네상스 사업의 공간적 범위를 광의로는 중구, 동구 전역과 협의로는 내항과 주변지역으로 설정하였음. 중구, 동구 전역의 공원녹지, 비오톱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물포르네상스 사업을 위한 공원녹지분야 핵심거점을 판단하였음. 그리고 각 거점의 공원녹지 재생 및 활성화 방안 도출과 거점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관광개발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공원녹지분야 실천방향 및 구상안을 제시함.

2. 중동구 공원녹지 분포 현황

- 도시생태현황도를 이용하여 중·동구의 공원녹지, 유사 비오톱 현황을 분석하였음.
 - 중·동구는 항만, 공업, 교통 시설이 59.6%를 차지하는 산업도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공원녹지 3.7%, 산림 1.9%로 시민이 휴양하거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자연공간 및 공원녹지 공간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었음.
- 중구의 대표 공원은 근린공원으로 월미공원, 자유공원이며 어린이공원은 울목공원이 있음. 1,500m² (어린이공원 규모)이상 크기의 쉼터가 8개소 있으며 이중 연안부두 해양광장(상트페테르부르크 광장)과 남향친수공간쉼터(남향친수공원), 역사문화공원쉼터(인천세관역사공원)가 있음.
- 동구의 대표 공원은 송현근린공원, 인천교근린공원, 화도진근린공원과 만석어린이공원이 있음. 대표 완충녹지는 인천산업용품 유통센터 일원에 있는 인천교녹지가 가장 규모가 큼.
- 제물포르네상스 대상지인 중·동구지역은 공원녹지와 유사 비오톱이 타 지역에 비해 면적이 부족하였음. 주요 공원들은 생활권별로 분산 배치되어 있으며 이 조차 산지형 공원(자유공원, 월미공원, 송현공원, 화도진공원 등)이 대부분이었음.

3. 공원녹지 정비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1) 공원녹지분야 정책방향

- 내항을 재개발하는 과정에서 신규 공원을 확보하여 원도심에 부족한 공원을 공급하는 계기로 활용해야 함. 아울러 기존 공원과 내항에 조성되는 공원의 네트워크를 추진함.
- 주요 거점을 자유공원, 월미공원, 연안부두 일원, 내항 내 공원으로 설정함.
- 내항 개발을 통해 주요 거점간 네트워크 구축, 해양접근성 강화 및 해양친수공간 네트워크를 구축함.

[그림 1] 중·동구 공원녹지 특성분석을 통한 제물포르네상스 공원녹지 정책방향



2) 주요 거점별 공원녹지 재생방향 및 구상

(1) 자유공원

- 개항장 일원에 분포하고 있는 주요 관광거점과의 연계성 강화
- 공원 접근 편의성을 위해 에스컬레이터 등 승강시설 설치(서편 차이나타운)
- 정상부 집객력 강화를 위해 정원 재조성, 조망시설(전망대) 설치, 집객시설 설치, 산책로 정비 추진

(2) 월미공원

- 바다쪽에서 접근할 때, 과거 자유공원이 가졌던 랜드마크로서의 입지를 월미공원이 이어 받았다고 판단됨. 랜드마크로서의 상징물 도입 필요
- 정상부에서 진행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 강화: 해돋이, 해넘이, 경관조망, 관광프로그램
- 정상부로의 접근성 개선 필요

(3) 연안부두

- 연안부두 해안친수공간 연결
 - 샤프테르부르크 광장-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주변-역무선부두-연오랑 등대길-바다쉼터를 연결하는 해안친수공간 조성
- 남향 친수공간 연결
 - 축항대로 118길과 남향을 따라 기존 남향친수공원을 연장한 녹지축 조성, 이를 통해 도로에서 발생하는 먼지를 저감하고 친수공간의 쾌적성을 증진함.
- 연안부두 일원 중심가로 재설정
 - 향후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제주행)이 재개발 또는 정비되고 저유소 등의 부지가 개발된다면 중심가로는 연안여객터미널(제주행)과 라이프 비취맨션(남쪽)을 잇는 연안부두 75번길이 될 수 있음. 따라서 보행자 중심의 가로 정비가 필요함.

(4) 내항

- 개항장 중심지 판단
 - 중구청 일원을 중심으로 동쪽 신포국제시장과 함께 서쪽 차이나타운이 균형있게 발전하여야 함.
- 공원녹지 조성방향
 - 중구청에서 항만까지 메인 스트리트(중심축) 설정 필요(보행환경개선)
 - 장풍득수의 개념 도입
 - 겨울철 찬바람을 막고 여름철에 물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자연 순응형 계획 필요
 - 폭염대비
 - 여름철 시원한 바람을 원도심 안으로 유입될 수 있는 개방형 설계 추진(바람길)
 - 여름철 뜨거운 햇살(폭염)을 차단할 수 있는 공원녹지 조성, 포장 면적이 노출된 공간 최소화
 - 기존 철도변 완충녹지 보전
 - 해안친수공간 조성
 - 공원과 광장을 통합한 개방형, 광장형 공원설계 도입
 - 수변을 따라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소공원 및 광장 배치
 - 내항 바다를 조망하며 휴식하는 공원 조성
 - 집객시설 제공
 - 생활체육시설, 각종 운동대회 개최, 물놀이장 조성, 반려동물 훈련장 운영 등

3) 공원녹지 네트워크 구상

- 해안 친수공간 네트워크(만석화수부두~월미문화의 거리~연안부두)
 - 월미문화의 거리를 중심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 토지매입을 통한 친수공간 확보
 - 인방사 이전을 통해 친수공간 연계, 옛 연안부두 국제선 터미널부지 재개발시 주변의 공원녹지 네트워크 고려
- 자유공원~내항~인천종합어시장 네트워크
 - 내항 개발시 공원녹지 및 보행네트워크를 통해 자유공원에서 인천종합어시장까지 연계
- 자유공원~월미공원 네트워크

- 공원녹지, 해양친수공간, 공공공지, 광장 등을 조성하여 보행을 연결하고 자전거, 개인이동수단을 통해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환경도 함께 개선
- 내항 개발을 통해 주요 거점의 기능 강화
 - (자유공원) 자유공원과 개항장 일원은 공원녹지, 광장, 주차장 등이 부족함. 이를 1,8부두에서 보완해야 함.
 - (월미공원) 내항 6부두와 갑문일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월미도와 월미문화의 거리에 부족한 점을 적극 보완하는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월미산 동쪽 6부두에 친수공간이 추가로 개발되고 월미공원에 부족한 주차공간 추가 공급, 월미산 외곽을 순환하여 이용하는 공원녹지 개발계획 필요
 - (연안부두) 인천종합어시장과 연안부두라는 관광거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대규모로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함. 내항 개발시 5부두 일원에 대규모 공원 조성 필요

5. 기타 정책제언

- 자유공원, 월미공원, 연안부두, 내항 등 주요 거점을 대상으로 공원설계 공모사업 진행
- 우리나라 최초의 서구식 공원인 자유공원과 인천의 상징인 연안부두와 연계된 상크페테르부르크 광장을 인천시가 직접 관리 추진
- 근대 개항장의 핵심 장소인 자유공원을 근린공원에서 주제공원인 역사공원으로 재분류

인천내항 일대 수변공간 가치창출을 위한 친수공간 조성방향

■ 기윤환 도시공간연구부 선임연구위원

1. 연구개요

- 인천내항은 수출주도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무역항이었으나, 산업구조 개편과 신항개항 등으로 인하여 내항 및 주변 원도심은 쇠퇴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음
- 2016년 정부는 노후·유휴 상태의 항만과 그 주변지역에 대한 효과적인 재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등을 위해 제2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¹⁾을 통하여 내항 1·8부두도 항만재개발 대상구역에 반영함
- 인천시는 해양도시로써 바다와 연계한 해양친수공간에 대한 요구도가 높으며, 인천해양친수공간 기본계획, 인천내항 마스터플랜 등에서 해양친수공간의 중요성과 방향에 대한 제시가 이루어졌으나, 주변지역을 포괄하지는 못하고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인천내항 전체와 주변지역의 수변공간에 대한 역사, 문화, 건축 등의 고유 가치를 도출하고, 이들 공간을 상호 연계하여 창의적인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음
 - 본 연구는 내항기능이전을 전제로 하여 타당성 등 실행가능성을 포함하지 않고, 인천시가 추진 중인 제물포르네상스프로젝트의 정책방향성 제안에 초점이 맞추어짐

2. 인천내항 일대 친수공간 조성방향

1) 공간적 가치와 연계한 친수공간 기능배분 방향

❖ 내항의 중심: 역사·문화적 가치의 연계 1·2·8부두

- 인천개항, 개항장문화지구 등 원도심 지역과 연결성이 가능한 지역인 1·8부두와 인천내항의 중심적 위치인 2부두는 내항의 역사, 문화, 상업·업무 등 중심적 역할 수행이 가능함

1)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6-142호 (2016.10.31.)

- 1부두는 내항 축조시 최초로 건설되었고, 초기 갑문이 있었으며 김구 선생 등 노역에 참여한 노동자의 역사적 흔적이 있는 상징적인 공간임
- 2부두는 내항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중앙에 위치한 상징적인 공간으로 부두시설과 배후지를 활용한 중심상업 및 업무기능 집적을 통한 역사문화공간과 연계가 필요함
- 개항장문화지구 기능을 연결할 수 있는 1부두~2부두~6부두를 순환하는 보행축 설정을 위하여 수공간내 시설설치 검토가 필요함

❖ 외항의 중심: 해양문화 가치창출을 위한 소월미도

- 소월미도는 내항과 바다를 연결하는 관문이자 바다와 직접적으로 인접한 지역으로 해양문화, 체험 등을 위한 외항의 중심지 역할 수행이 가능함
- 소월미공원은 본래의 섬지역으로 보전활용이 필요하며, 갑문등대는 인천항으로 들어오는 선박의 안전과 안내를 돕는 역할을 수행하여 기능의 지속성 확보가 필요함
- 소월미도는 외항의 중심지로 바다를 체험하고 해양레저를 즐길 수 있는 해양문화와 해상교통의 중심 역할, 관광·상업·문화기능을 집적한 해양관광거점이 가능함

❖ 웰빙여가 기능: 월미산과 연계한 6부두

- 월미도는 월미산, 월미공원, 월미문화의 거리, 월미테마파크, 한국이민사박물관 등 문화와 자연환경, 위락기능이 복합적으로 집적된 지역으로 6부두는 월미공원과 인접하여 내항에서 월미산으로 연계되는 휴식, 여가 등의 기능으로 설정함
- 6부두와 월미공원 전통정원을 연계한 휴식기능을 부여하여 내항의 동적인 공간과 연계한 정적인 공간으로 웰니스(wellness)를 추구할 수 있는 중심지 역할이 가능함
- 6부두는 월미도의 문화, 먹거리, 관광 등과 연계하여 헬스, 뷰티, 스파 등 건강기능의 집적이 적절함

❖ 상업·업무 기능: 광역교통접근성 중심 2·3부두

- 2·3부두는 남북축의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서해대로, 아암대로 등과 동서축의 인천대로의 중점 등이 연결된 광역교통의 중심지역임
- 2부두는 1부두의 기능 연계를 통한 상업·업무기능의 집적, 3부두는 중심상업·업무기능을 보조할 수 있는 보조상업과 신산업 기능 집적 등으로 차별화가 필요함

- 3부두는 4·5부두 배후지역의 산업기능과 2부두의 상업·업무기능을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토록 유도함

❖ **신산업 기능: 산업공간과 연계한 4·5부두**

- 4·5부두는 연안부두, 남항과 연결되는 배후지역에 공업과 물류기능이 집적한 지역으로 기존 산업기능을 확대한 신산업 중심지역으로 설정하여 기업활동, 창업, 여가, 주거, 상업, 문화 등이 복합된 기능의 집적이 필요함
- 신산업 공간은 스마트시스템, AI, UAM, 빅데이터 등으로 생산활동에 의존하는 제조공장지대와 달리 일과 여가·문화생활 등이 혼합된 형태가 요구됨

❖ **수산업 중심: 연안부두**

- 연안부두는 어업활동을 위한 어선과 관공선, 여객터미널 등이 입지해 있으며, 어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인천종합어시장, 수협공판장과 냉동공장, 수협가공물류센터 등 수산업 생산활동의 중심 지역임
- 과거 인천의 연안부두는 횃집 등과 함께 어시장 이용이 활발하여 바다고기, 해산물 등과 연계한 기능의 집적이 적절함

[그림 1] 내항 일대 공간적 가치에 따른 친수공간 도출 및 공간구상 방향



2) 내항 수공간(정온수역) 활용방향

❖ 수공간(정온수역)의 공간형태 및 해양·생태 등 친수적 가치

- 내항 수공간은 면적 약 1.87km²(56만평)이며, 전체 수량 약 1,500만m³(1m³ = 1kl)로 대규모의 공간과 수량을 보유하고 있음
- 인천내항은 갑문에 의해 형성된 국내 최초 최고의 수공간이라는 공간적 형태와 가치를 보유하고 있음
 - 우리나라 기준으로 최초로 형성된 갑문과 최고의 크기, 최대 규모의 내항 수공간, 바닷물에 의한 해양적 가치 등은 매우 중요한 공간적 가치라 할 수 있음
- 내항 수공간은 갑문을 중심으로 내부에 형성된 공간형태와 바닷물에 따른 해양적 가치를 보유하고 있음
- 해양적 가치와 내항의 수공간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온수역의 수질확보가 최우선적인 조건이며, 수질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내항친수공간과 주변 지역의 활용이 무의미함
- 수질확보를 위해서는 갑문의 효율적인 운영, 수처리 시설이나 수순환체계 등의 확보 등 다각적인 방안의 검토가 필요함

❖ 수공간의 양호한 수질 유지를 위한 환경적 가치 확보

- 내항의 친수공간 활용을 위해서는 정온수역내 양호한 수질 유지가 가장 필수적이며 기본적으로 확보되어야 함
- 양호한 수질 확보를 통하여 바닷물고기, 해초 등 해양생태계의 구현, 수공간을 활용한 체험공간 조성, 전시장 및 아쿠아리움 등 해양문화시설 연계 등이 가능함
- 정온수역의 수질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방문자, 친수공간, 주변지역 시설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내항 활성화에 장애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 사람 중심의 수공간 활용과 친수공간 조성

- 사람 중심의 수공간 활용은 방문자가 직접 정온수역내 수공간을 손으로 만지고 들어갈 수 있는 자연적인 체험이 가능한 활동을 의미함
- 인천의 해양지역은 철조망 등의 군사시설, 방파제 등의 안전시설, 항만·물류시설의 보안을 위한 인공적인 철조망 등에 의해 방문자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아 눈으로만 볼 수 있는 지역이었음

- 내항재개발에 의해 조성되는 친수공간은 수공간내 보행과 휴식 등이 가능한 친수보행데크를 설치하여 수공간을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내항 내부 중심지역이라 할 수 있는 1·2부두의 친수공간은 친수광장, 친수보행데크 등을 설치해 방문자 중심의 친수공간 조성이 필요함
- 특히, 사람 중심의 수공간 활용을 위해서는 양호한 수질확보와 해양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수환경 관리가 보장되어야 함

❖ 개항장문화지구~내항~월미도 연결 중심 보행 축 형성

- 인공적 공간은 수공간의 인지성 강화를 위해 해양체험, 해양문화, 여가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부여를 통해 적극적인 활용도 고려할 수 있음
- 인공적 공간의 위치는 1·8부두, 2부두, 6부두를 연결할 수 있는 중간지점이 적절함
- 이를 통해 내항 주변의 개항장문화지구~1·8부두~2부두~6부두~월미도로 연결되는 중심 보행축 역할 수행이 가능함

❖ 넓은 수공간 접근성 확보를 위한 수상교통수단 도입

- 내항 수공간의 면적은 약 1.8km²로 대규모이며, 부두간 거리도 멀어 수상대중교통 수단의 도입은 필수적임
- 수상대중교통의 중심지는 인천역, 신포역 하차 후 내항으로 연결되는 1부두와 8부두 중간 지점이 적합하며, 각 부두의 친수공간에 정거장을 설치하여 접근성 확보 필요
- 수상대중교통수단 도입시 해양레저활동을 위한 요트, 보트, 유람선 등과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하여 안전성을 확보해야 함

❖ 해양문화체험을 위한 수상레저 활동 공간 활용

- 인공적 공간은 수공간의 인지성 강화를 위해 해양체험, 해양문화, 여가 등을 수행토록 유도해야 하며 공간적 해양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8부두와 2부두 사이의 수공간은 내항의 중심지역으로 시민의 여가, 휴식활동과 연계하여 사람들이 수공간에 발을 담그고 만질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여 친근감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갑문과의 접근성이 양호한 6부두와 5부두는 해양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마리나, 요트정박장 등을 조성하여 적극적인 해양활동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그림 2] 내항 수공간(정온수역) 활용방향



3. 정책제언

❖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의 내항일대 친수공간 조성 활용

- 본 연구는 내항 일대의 공간적 가치를 기준으로 친수공간 조성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인천시에서 추진 중인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의 내항 일대 친수공간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필요가 있음
- 내항일대의 공간적 가치와 연계한 공간배분 구상에 따라 ①내항과 주변지역의 역사·문화적 가치와 연계한 내항 중심지역 1·2·8부두, ②소월미도의 해양문화 가치창출을 위한 외항의 중심지역, ③월미산과 연계한 웰빙여가 기능 중심 6부두, ④광역교통접근성에 의한 광역적 상업·업무 기능 중심 2·3부두, ⑤배후 산업공간과 연계한 신산업 기능 중심 4·5부두, ⑥수산업 중심 연안부두, ⑥내항 수공간(정온수역) 활용방향 등은 거시적 차원의 공간구상시 활용이 가능함
- 세부적으로 제시하는 친수광장, 보행로, 수공간내 인공적인 보행연결로 활용방안 등은 공공공간 조성시 친수공간원칙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음

❖ 해양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원칙 및 가이드라인 마련

- 인천시는 인천 해양친수도시 기본구상(2017) 및 기본계획(2021) 등의 계획을 수립하였지만, 해양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원칙이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지는 않은 실정임
- 해양친수공간의 공공공간, 경관 확보, 공간 조성 등을 위한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바다와 인접한 공간의 적극적인 활용과 체계적인 관리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 해양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원칙은 공공성, 접근성, 다양성, 정체성(역사성), 상징성(장소성), 편의성(기능성), 편리성, 안전성, 친환경성, 복합성, 개방성, 연계성(방향성), 시민참여, 지속성, 활력성, 심미성 등의 원칙에 기초하여 도시공간에 적용토록 세부화 시킬 필요가 있음
- 도시공간에서 친수공간의 가치는 대규모의 개방적인 공공공간 제공, 수변공간의 역사적 지속성을 바탕으로 조성된 장소 제공, 도시공간과 연계한 통합적 공간 제공, 환경적·생태적 지속가능성 제공, 자연적으로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 제공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원칙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함
-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광장 등 시설설치, 경관확보를 위한 방향, 수공간 활용, 상업공간 연계 등 부문별 사업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제물포르네상스 환경적 쟁점 및 대응방향

■ 김성우 경제환경연구부 선임연구위원

1. 연구 개요

-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에서는 대한민국 근대화를 이끈 제물포를 원도심과 내항 중심의 문화·관광, 산업이 융합되는 새로운 미래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원도심, 문화·관광, 산업경제, 내항개발 등 총 4개 분야의 르네상스 전략과제 및 실행력 제고 방안을 추진해 나가고 있음
- 연구의 주요 목적은 제물포르네상스 계획 및 사업과 관련하여, 환경질 현황과 환경적 쟁점을 파악하고,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의 기획 및 추진에 있어 환경관리적 측면의 정책적 대응방향을 제시하는 것임

2. 사업구역의 환경질 현황

- 사업구역 인근 대기 측정소의 월별 평균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인천 평균과 비교하였을 때 비슷한 추이를 보이며, NO₂, SO₂, 미세먼지는 인천 평균에 비해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이나, CO와 오존은 인천 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보임
- 인천 내항 인근 등 사업구역 연안의 수질은 전반적으로 보통보다 나쁜 수준임
 -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보포털의 인천3~5 수질 검사 자료에 의하면 총질소와 총인의 농도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인천연안 특별관리해역 관리계획'에 의한 목표(WQI 연평균 2등급)를 달성하기에는 전반적으로 수질이 나쁜 편임
 -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인천항 주변 정점별 해양수질조사 결과에 의하면 인천항과 가장 가까운 정점17의 WQI는 4~5등급으로 나타났고, 정점1~3은 1~3등급을 보이거나 주변의 다른 정점들에 비해 나쁜 편이고 최근으로 올수록 전반적인 해양수질이 나빠지는 추세를 보임

- 인천광역시에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통해 실시한 한강하구 환경기초조사에서도 정점 8~10의 수질은 대체로 3~5등급을 보여 비교적 나쁜 편으로 나타남
- 인천광역시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실천 계획에서 분석한 인천 연안생태계 결과 인천광역시 해역 저서동물의 평균 서식밀도와 생물량이 전국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을 보임. 또한, 인천광역시의 한강하구 환경기초조사 연구용역에 의하면 사업 대상지 인근의 저서생태계 건강도 종합평가 결과는 좋음(4), 보통(5), 나쁨(6)으로 각각 나타남
- 그 외에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주요 사업구역이 속하고 있는 인천 중구의 생활폐기물 현황, 토지이용 현황, 사회경제 현황을 파악하여 제시하였음

3. 사업추진에 따른 환경영향 검토

- 제물포르네상스를 통해 친환경 차량 증대 및 노후차 운행 제한, 친환경 선박 전환 등의 대책이 시행되면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지금보다 감축할 수 있으며, 스마트 항만 구축으로 친환경 에너지원 사용 비중이 증가하면 온실가스 배출량도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인천항에 입출항하는 선박에 의한 대기오염의 영향은 인천항 대기질 개선 시행계획이 수립·시행 중이므로 향후 개선될 것으로 전망함
-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주요 사업대상지인 인천항 주변의 수질이 앞서 파악한 바와 같이 현재로서는 전반적으로 나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한강본류 및 한강하구를 통하여 인천연안으로 유입되는 배경농도를 비롯하여 인근 인천·경기지역의 산업단지 등에서 배출되는 오염원에 대한 개선대책이 없이는 단시일 내에 좋은 수준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함
-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 중이나 완료 후에도 해수의 흐름이나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대상지가 특별관리해역 및 향후 연안오염총량관리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해당 계획대로 이행된다면 해양쓰레기 등 각종 오염물질 유입저감으로 인하여 개선될 여지가 있음
- 기타 환경적인 영향은 미미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됨

4. 사업구역의 환경적 주요 쟁점별 대응방향

[표 1] 제물포르네상스 계획의 주요 환경적 쟁점 및 정책적 대응방향

쟁점 구분	대응방향	비고
인천 내항 워터프런트 수질관리	인천 내항 비점오염원관리체계 구축 해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 탄소중립	제물포르네상스 계획의 인천시 탄소중립 전략과의 부합성 검토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 특유의 탄소중립 공약 선언	목표 년도 2045

- 파도가 잔잔한 인천 내항의 정온 수역을 일부분 구획하여, WQI 3등급보다 낮은 수질인 갑문 외측의 해수를 활용하여 인천 내항의 항만시설·자원 연계 콘텐츠를 확충할 계획을 시행한다면, 해당 시설·콘텐츠의 목적에 적합한 수질의 용수 공급을 위한 별도의 수질 관리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음
 -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에서는 바다를 품고 있으나 산업 시설 등에 가로막혀 워터프런트 공간이 없는 원도심에 시민들이 간접적으로 해양을 경험할 수 있는 인피니티 풀, 인공서핑파크, VR 해양레저 스포츠센터 등의 인공 해양레저 공간을 조성할 계획인데, 이들 시설 및 공간의 운영 시에, 인천내항 갑문 외측의 인천연안 해수를 활용하기에는 현재 수질이 부적합하며, 향후 적정 수질의 용수 공급 가능 여부가 주요 쟁점 사항이 되리라 판단함
- 인천 내항 워터프런트 수질관리 쟁점에 대응하여 인천 내항 비점오염원관리체계 구축 및 해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을 추진할 것을 제안함
 - 인천 내항 비점오염원관리체계 구축의 주요 내용은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을 통한 저영향 개발(LID)기법 적용 확대, 비점오염저감형 그린 빗물인프라(Green Stormwater Infra) 구축, 하수저류시설 설치 확대 등을 통한 초기우수 처리강화 등임
 - 인천 내항의 항만시설·자원 연계 시설·콘텐츠의 목적에 적합한 수질의 용수를 일정 수량 공급하기 위하여 해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현 시점에서는 필요한 용수의 수량 및 수질을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국내 최초로 약 4km 거리의 서해 바닷물을 해수처리시설에서 3단계 정수 과정을 거쳐 유지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송도센트럴파크 사례를 참고하여 제시함
- 항만재개발의 선진 사례인 독일 함부르크, 스페인 바르셀로나, 미국 시애틀, 영국 런던 등의 사례에서 파악할 수 있듯이, 항만재개발 중심의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추진과 함께

- 지속가능성 제고 및 탄소중립 달성을 사업의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있어,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 계획 수립 시에 탄소중립이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음
-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 탄소중립 쟁점에 대응하여 제물포르네상스 계획의 인천시 탄소중립 전략과의 부합성 검토 및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 특유의 탄소중립 공약 선언을 추진할 것을 제안함
 -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 관련하여 탄소중립 쟁점의 대응방향으로는 우선적으로 인천광역시 탄소중립 전략 및 중앙정부의 관련 계획과 제물포르네상스 계획 사이의 부합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2045 인천광역시 탄소중립 비전 선언에 따른 구체적인 실천 공약으로서, 원도심 균형발전의 핵심 사업인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의 특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구체적인 탄소중립 공약을 선언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 사업구역 일대를 대상으로 현재의 보행 수준, 자전거 등 친환경이동수단 이용 수준, 대중교통 이용 수준 등에 대한 정량적인 조사·분석이 선행되어야 함

인천시 역사문화자원 보전형 주거지정비 모델 연구: 중·동구를 중심으로

■ 이왕기 도시공간연구부 선임연구위원

1. 연구개요

- 인천 내항이 위치한 중·동구 일대는 개항 이후로 공공, 업무, 상업 등 각종 도시기능이 형성되고 집중했던 도심지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근대 역사문화자원이 다수 분포하게 됨. 하지만 1990년대 이후 분산정책에 따른 외곽지역의 신도시 개발로 인해 인구감소와 함께 도시기능은 점차 쇠퇴하였으며, 쇠퇴한 원도심 노후주거지를 개선하려는 정비사업과 재생사업이 지속하여 진행하고 있음
- 그런데 노후 시가지의 물리적 환경 정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역사문화자원의 멸실과 훼손 문제가 발생하면서 고유 자산의 보전과 활용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중·동구 역사문화자원의 보전·활용을 유도하면서, 물리적으로 쇠퇴한 저층주거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2. 역사문화자원 보전과 주거지정비 제도 분석

1) 역사문화환경 보전을 위한 제도

- 역사문화환경 보전을 위한 제도에는 대표적으로 「문화재보호법」,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건축자산법)」이 있음
-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 지정에 따라 보조금 지원, 세제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보호물, 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지정 등 강력한 관리체계를 가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개발행위에 대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기 때문에, 주거지정비 주체에게는 개발의 규제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음
- 건축자산법은 사회적·경제적·경관적 가치를 지닌 건축자산에 대한 관리 제도임. 보전관리의 필요성이 있는 건축자산을 우수건축자산,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자체마다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관리함. 인천시에서도 건축자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과정에서 건축자산 기초조사와 목록 작성이 진행되었으나, 개별 건축자산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지침은 없는 상태임

- 문화재청은 비지정문화재인 근현대 역사문화자원까지 포괄하는 정책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으며, 인천시에서도 '인천형 근대문화유산 종합계획'을 검토 중임

2) 주거지정비와 도시재생 관련 제도

- 대표적인 주거지 정비수단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역사문화자원의 보전과 활용 등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을 하지 않으나,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통하여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정비계획수립 방향과 지침을 제시할 수 있음
- 인천시가 수립한 「2030 인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는 '특성주거지 관리계획'과 '주거생활권 계획'에서 역사문화자원 보전·관리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모두 포괄적 관점만 제시할 뿐 구체적인 관리지침을 포함하지 않음
- 「도시재생법」에서는 역사문화자원 보전과 활용을 직접적으로 규정하지 않으나, 하위 계획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수립할 때 지역자산을 조사·발굴하고 이에 대한 재생방향 및 전략을 수립한다는 점에서 연관성이 있음

3. 역사문화자원과 주거지정비와의 쟁점

1) 역사문화자원과 주거지정비 현황 및 특성

- 중·동구에 분포하는 문화재는 41건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2.7km²이며 건축자산은 254건이 지정되어있는 등 근현대 시기에 형성된 역사문화자원이 개항장 문화지구 일대에 집중하여 분포함. 저층주거지는 중구(1.0km²) 북성동, 신포동, 동인천동 일대에 분포하며, 동구(1.4km²)에는 송림2동, 화수1·화평동 일대에 집중되어 있음. 향후 정책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저층주거지 면적은 956,974m²로, 보존지역 면적의 약 35%인 것으로 파악됨
- 중·동구에서는 도시정비사업 25건이 추진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전면철거방식이라는 점에서 역사문화자원 일부의 소멸 및 훼손 문제가 발생함. 또한, 중앙정부 및 인천형 도시재생사업 각 11건이 추진되고 있으나, 2020년 전후 부동산경기 상승에 따라 재생사업구역을 정비사업구역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이들 지역에서도 주거지정비와의 충돌 가능성이 있음

2) 역사문화자원과 주거지정비와의 상충

- 중구에서 진행되는 화수·화평구역과 경동구역 재개발사업, 신흥동 지역주택조합 정비사업 등에서 문화재 및 건축자산 보존에 대한 주거지정비와의 상충 문제가 발생함. 장기간에 걸친 문화재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심의과정에서 문화재 보전·활용과 관련하여 정비계획 수정과 보완과정을 지속하였음. 이처럼 정비사업마다 행해지는 개별적인 심의와 결정방식으로는 역사문화자원 보전과 활용에 있어 일관적이고 통합적인 결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역사문화자원 업무는 물론 주거지정비 업무도 다수의 부서가 담당하고 있어, 부서 간 충분한 사전협의와 함께 시스템적으로 연동하는 업무구조가 필요함

4. 역사문화자원 보전형 주거지정비 모델 구상

1) 역사문화자원 보전형 주거지정비 방향

- 인천시 중·동구에 밀집한 역사문화자원을 보전하고 활용함과 동시에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는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중요함. 이를 위해서 역사문화자원 심층조사, 주거지정비 정책지침 마련, 행·재정적 지원 등 세 가지 접근을 제안함

[표 1] 인천시 역사문화자원 보전형 주거지정비 접근 방향

역사문화자원 심층조사와 유형별 관리지침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보호법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기준 조정 • 조사체계 재정립을 통한 심층조사 실시 • 심층조사에 따른 자원 유형화(보존, 복원, 흔적남기기, 아카이빙 등) • 역사문화자원 유형별 활용 및 관리지침 제시
역사문화자원 보전형 주거지정비 지침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건축자산과 등록문화재 선정, 건축자산 진흥구역 등 지정 추진 • 역사문화자원을 고려한 정비사업 가이드라인 마련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주거생활권계획을 통한 통합 관리지침 제공 • 도시재생사업에서의 주거지정비 지침 연계 활용
행·재정 지원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부서(문화유산과, 건축과, 주거정비과, 도시균형정책과) 업무 연계 • 역사문화자원 보전과 활용에 따른 재정지원 강화 • 역사문화자원 보전형 주거지정비에 따른 개발 특례 제공 • 사업성 보전을 위한 결합정비방식 연계 활용

2) 역사문화자원 유형별 관리지침 수립

- 역사문화자원의 체계적 활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통일된 구조의 자료(출처) 구축이 필요하며, 자원의 유형화와 유형별 보전 및 관리에 대한 기본원칙과 지침 마련이 선행되어야 함. 기본원칙과 지침 마련 이전에는 주거지정비 시행 주체의 자원조사 및 보전·활용계획 수립 의무화에 기반하여 문화재위원회와 같은 심의기구에서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주거지정비 지침과 방향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음
- 현재 추진 중인 인천광역시 문화유산과의 ‘인천형 근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계획’ 수립과정에서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개념 정립과 범위, 기본원칙을 제시할 예정임. 이를 기반으로 하는 인천시 정책의 원칙과 방향 설정이 필요함

3) 역사문화자원 보전형 주거지정비 지침 마련

- 보전과 관리 필요성이 높은 역사문화자원은 보다 적극적인 공공의 관리와 지원이 필요함. 건축자산법의 ‘우수건축자산’ 또는 문화재보호법의 ‘등록문화재’ 지정을 통한 체계적 관리를 유도해야 함
- 자산이 집중된 선(線)적 또는 면(面)적인 공간에 대해서는 건축자산법의 ‘건축자산 진흥구역’이나 문화재청에서 추진했던 ‘근대역사문화공간’ 등의 구역지정을 추진하며, 현재 인천시 중구청 일대에 지정한 ‘문화지구’ 형태도 활용 가능함
- 정비사업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역사문화자원 보전과 활용을 위한 단계별 조치사항과 절차를 제시하도록 함. 또한, 도시정비법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주거생활권계획을 통하여 지역별 공간특성을 감안한 정비계획 수립지침을 제공하는 것과 도시재생법의 ‘도시재생전략계획’에서 활성화계획 수립 시 역사문화자원의 보전과 활용에 대한 해당 지역별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제안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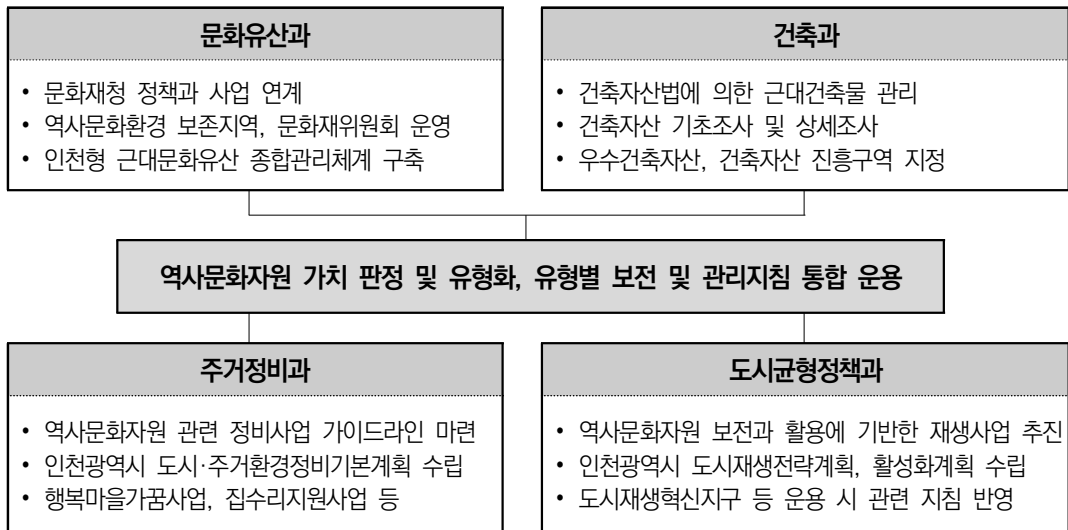
[표 2] 역사문화자원 보전과 관리수단 유형

우선 보존·관리대상	집중 관리지역	정비사업 지침	생활권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건축자산 • 등록문화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자산 진흥구역 • 근대역사문화공간 • 문화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비사업 절차 지침 • 정비계획 수립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주거생활권계획 • 도시재생전략계획 :활성화계획

4) 행·재정 지원체계 구축

- 우선 문화유산과와 건축과가 협업하여 심층조사를 통한 자원의 정확한 가치 판단과 이에 따른 유형별 관리 또는 보전 지침을 제공해야 함. 이후 주거정비과는 이 지침에 근거하여 정비사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주거생활권계획에 관련 내용을 반영해야 함. 도시균형정책과는 도시재생전략계획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활성화계획 수립 시 반영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시해야 함
- 역사문화자원의 보전과 활용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문화유산과와 건축과의 역할이 중요하며, 부서 간 업무연계를 위해서는 문화유산과가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됨. 근대문화유산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추진 중인 ‘인천형 근대문화유산 종합계획’의 결과가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음. 별도의 조직을 구성하는 방안보다는 상설 협의기구를 설치·운영하는 방안이 적절함

[표 3] 역사문화자원과 주거지정비 관련 부서 담당업무 관계



- 역사문화자원을 관리하고 이와 연계하여 주거지정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재정지원이나 규제 완화 사항은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어야 함. 또한, 재정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건축자산 기금을 신설하거나 정비기금 확대가 필요하며, 한시적이지만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를 확충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함

인천 제물포르네상스 도시디자인 계획 요소 연구

이인재 도시공간연구부 선임연구위원

1. 연구개요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기존에 추진해 온 인천 내항 일대의 사업방식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접근방식의 시도가 요구되는데, 그 중 도시디자인 개념과 기법을 적용하여 도시재생 사업화에 성공한 국외도시 사례를 검토하고, 인천 제물포르네상스 계획에 대한 시사점 및 계획방향을 제안하고자 함

[그림 1] 도시디자인 개념이 미적용된 동인천역 가로 현황



❖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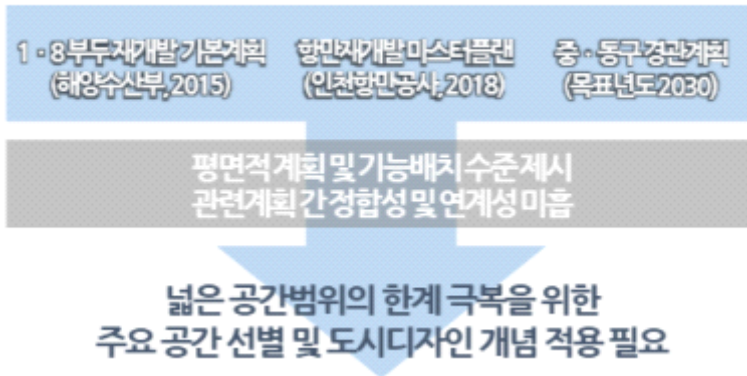
- 연구의 주요내용은 인천 내항 및 제물포르네상스 계획 및 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도시재생에서 도시디자인 수법을 활용한 사례검토 후, 제물포르네상스 도시디자인의 추진 방향을 제안하고자 함

2. 인천내항 일대 관련계획 검토

- 현재 인천내항과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관련계획을 검토한 결과, 평면적 계획 및 기능배치 수준의 제시에 머무르고 있는 현황이며, 관련 계획 간 정합성 및 연계성이 미흡하다는 부분이 문제점으로 도출됨
- 인천내항 일대를 대상으로 하는 제물포르네상스 사업은 공간적 범위가 넓어서 세부적인 계획이 도출되기엔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주요 계획공간의 선별 및 유형화 등을 통해 도시디자인 개념을 적용한 계획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그림 2] 내항일대 관련계획 검토 종합

내항일대 관련계획 검토



3. 도시재생에서의 도시디자인 수법 적용 사례검토

- 현재 조성된 항만재생 선진 사례지역의 도시디자인 수법을 종합하면,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디자인 요소는 보행축, 공공공간(오픈스페이스), 랜드마크, 경관계획(스카이라인 및 통경축) 등 총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
- 주요 요소로 첫째, 기존 도심과 항만지역을 잇는 보행축의 조성, 둘째, 충분한 공공공간 및 오픈스페이스와 녹지 조성, 셋째, 주요 랜드마크의 조성을 통한 기능과 경관을 고려한 도시공간 창출, 넷째, 가이드라인 등 규제와 협정을 통한 통경축 및 스카이라인 계획 등을 도출함

[그림 3] 도시디자인 수법이 적용된 도시재생사례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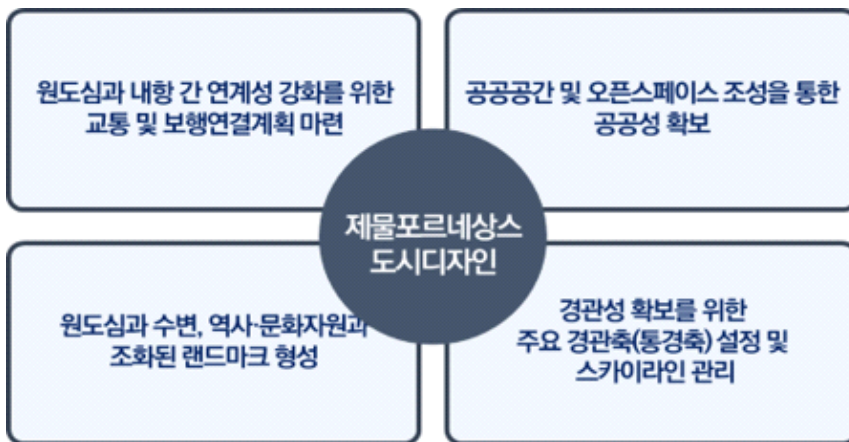


4. 제물포르네상스 도시디자인 기본방향 설정

❖ 제물포르네상스 도시디자인 추진 방향

- 제물포르네상스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기본방향을 총 4가지로 설정함
- 첫째, 원도심과 내항 간 연계성 강화를 위한 교통 및 보행 연결계획 마련 필요
- 둘째, 공공공간 및 오픈스페이스의 적극적인 조성을 통한 도시 내 공공성 확보 필요
- 셋째, 원도심과 수변, 역사·문화자원과 조화된 랜드마크의 형성을 위한 계획 마련
- 넷째, 경관성 확보를 위한 주요 경관축(통경축) 설정 및 스카이라인의 관리

[그림 4] 제물포르네상스 도시디자인 기본방향



[그림 5] 도시디자인 수법 적용이 필요한 주요 거점 위치



❖ 도시디자인 수법의 적용이 필요한 주요 거점 선정

- 제물포르네상스 핵심사업지역 내에서 도시디자인 수법의 계획 적용이 필요한 공간을 현황분석을 통해 7곳 선정하였음
 - ① 주요 거점간의 연결이 필요한 동인천~신포역~내항 구간
 - ② 경인가도로 역사문화 보존이 필요한 내항~싸리재길~배다리 구간
 - ③ 내항과 중구~동구를 잇는 주요 보행축인 흥예문로~수문통로 구간
 - ④ 근현대 건축물이 밀집하고 있는 중구청 일대
 - ⑤ 중·동구 지역 간 연계의 핵심적 역할이 필요한 동인천역과 역 주변
 - ⑥ 수변공간 간의 연계가 필요한 내항~북성포구~만석부두~화수부두 구간
 - ⑦ 항만과 주변지역의 경관축 및 스카이라인 형성 필요 지역

- 제물포르네상스 도시디자인 수법 및 계획 제안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음

[표 1] 제물포르네상스 도시디자인 수법 적용 종합

구간	목표	디자인 수법
동인천~신포역~내항 구간	- 주요 거점 연결	- 중심 보행축 설정 - 안전하고 다양한 교통수단 이용
내항~개항로~싸리재길~배다리 구간	- 역사·문화 자원 활용	- 역사 및 문화자원 보존을 기반으로 계획 가이드라인 제시
내항~홍예문~동인천역광장~수문통로	- 주요 거점 간 보행연결	- 보행환경 개선
중구청 일대	- 도시경관 유지 - 근대 건축물의 보존	- 통경축 확보
동인천역 일대	- 공공공간, 오픈스페이스 확보	- 통합적 입체개발
북성포구, 만석부두, 화수부두 일대	- 오픈 스페이스 확보	- 공장이전지 보전 및 활용
내항 및 주변지역	- 도시경관 관리	- 경관축·통경축·스카이라인 설정

5. 정책제언

- 제물포르네상스의 성공적 추진과 효과적인 계획을 위해서는 제물포르네상스 계획 내 도시디자인 수법 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하며, 내항 접근성 및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 확보를 위한 공공공간(오픈스페이스, 녹지, 공원) 등의 적극적 조성이 필요함
- 주요 보행축, 경관축의 설정 및 조성을 통해 거점 간의 물리적, 시각적 연계방안 마련이 중요하며, 이는 주요 교통, 보행, 경관의 시퀀스(흐름) 등을 고려한 개발 밀도 및 높이, 배치 계획을 수립해야함
- 주요 랜드마크 성격의 역사·문화 자원의 지속적 발굴 및 건축 자산의 보존을 위한 제도의 개선 또는 신설 제도의 마련이 필요

제물포르네상스 도시형 혁신공간 조성을 위한 실천대안 연구

■ 조상운 도시공간연구부 선임연구위원

1. 서론

- 제물포르네상스는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 구현’을 목적으로 인천 물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쇠퇴하고 있는 내항 및 주변 지역에 문화와 관광, 산업을 융합한 미래 성장산업과 청년창업의 산실, 그리고 해양관광 공간을 조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민선8기 핵심 프로젝트 중 하나임
- 내항 일대는 인천의 역사도심으로 항만 및 산업기능의 쇠퇴로 인한 정주인구의 감소 및 상권 침체와 더불어 기존 공장 등 산업기능들이 유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지역 전반에 걸친 물리적 노후화를 비롯 열악한 도심기능 및 환경악화 등 여건부족으로 민간투자에 기대한 개발사업은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임
- 본 연구에서는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가 미래 인천 경제를 선도하는 기업 및 인재의 유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고, 원도심으로서 잠재력을 활용하여 지식경제시대에 지역발전모델로 등장한 ‘도시형 혁신공간(innovation district) 형성’이라는 새로운 실천전략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실천대안을 모색하고자 함

2. 도시형 혁신공간(Innovation District)의 이해

- 도시형 혁신공간이란 혁신을 선도하는 앵커기관 및 기업이 스타트업,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액셀레이터와 함께 집적 또는 연계(클러스터)된 공간으로, 물리적으로 콤팩트(고밀도로 한곳에 집중)하고, 대중교통 접근성이 양호하고, 우수한 네트워크 환경이 정비되어 주택, 업무, 상업공간이 복합적으로 혼재되어 있는 지역을 말함

- 즉, 성공적 도시형 혁신공간에서는 혁신경제를 주도하는 앵커기업이나 기관과 함께 그 주변으로 혁신 기업이나 인재를 집적시키기 위한 대중교통이나 보행접근성이 양호해야 하며, 물리적으로 복합적인 재개발(토지이용)이 가능한 공간이 존재한다는 것이 특징임
-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도시형 혁신공간은 ① 앵커기관 주변 집적형(anchor plus model), ② 재활성화된 도심지역(re-imagined urban areas model), ③ 도시화된 과학단지(urbanized science park model)의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됨. 본 연구는 역사적 항만이나 워터프론트 주변의 오래된 산업지역을 대상으로 물리적이고 경제적 재생을 통해 혁신공간으로 변화한 사례인 재활성화된 도심지역 모델이 제물포르네상스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서 유효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오래된 도심에서의 도시형 혁신공간을 형성시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대중교통 접근성, 보행가능성, 그리고 질 높은 다양한 공공공간의 확충 등 도시디자인 및 장소만들기의 공간전략이 필수적인 것으로 나타남
- 업무, 상업, 주거 등 고밀도의 복합용도 개발을 통한 공간적 집적을 도모하고, 관광이나 워라밸 중심의 개발 보다는 고용창출에 기반을 둔 혁신기업의 유치에 위한 오피스 개발이나 복합용도 개발을 우선시 함
- 지역으로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강화하고, 지역 내 보행연결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공공공간의 조성 및 업그레이드를 통한 장소적 매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함
- 커뮤니티 공간, 이벤트 공간 등 혁신적 생태계의 개방공간에 대한 설계 또한 필요함

3. 국내·외 도시형 혁신공간 조성 사례 시사점

- 先 도시환경의 개선, 後 앵커기업 또는 기관의 유치
 - 민간투자를 통한 복합용도 개발 및 앵커기업 및 인재유치를 위해 우선적으로 열악한 도시환경을 정비하는 프로젝트의 시행하여 개발여건을 향상
- 촉매적 개발 : 민간 또는 공기업에 의한 조기 투자 및 개발
 - 일정 규모 이상의 유향화된 항만시설, 창고부지, 공장부지 등을 활용하여 용도지역 상향을 통하여 선도적 재개발을 추진하고, 공적투자에 기반에 질 높은 공공공간을 확충
- 인프라 확충 : 대중교통 확충 및 기존 인프라 구조적 개선

- 고속도로, 철도 등 기존 인프라의 구조적 개선을 통한 지역 단절요소를 제거하거나, 지역으로의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을 위해 트램, 버스 등 대중교통 개선
- 보행중심의 매력적 공공공간 조성 및 활성화를 통한 장소만들기 전략 연계
 - 질 높은 공공공간 개선 및 확충에 대한 공적투자 확대와 공공공간의 유지관리 나아가 다양한 활성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
 - 근무하기 좋고(work), 살기 좋은(live), 놀기 좋은(play) 공간개념을 가지고, 보행 중심의 매력 증진을 위한 도시디자인 및 장소만들기 전략과 연계
- 액셀레이터의 역할이 중요
 - 혁신기업의 사업화나 스타트업 등을 지원하는 투자기관인 액셀레이터 유치를 통해 창업이나 기업 입지의 도입장벽을 제거하는 등 민관파트너십을 강화
- 정부 및 정책 환경 : 시장의 강력한 리더십 및 지방정부 역할
 - 도시형 혁신공간의 성공은 시장의 강력한 의지와 리더십이 지역을 혁신경제로 전환하는데 큰 영향을 미침
 - 이를 위해 지방정부 주도의 도시형 혁신공간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전통적 규제방식에서 벗어나 공적자금의 조기 투자 및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촉진적 방식으로 전환

4. 도시형 혁신공간 조성 실천과제: 공간전략을 중심으로

❖ 목표 및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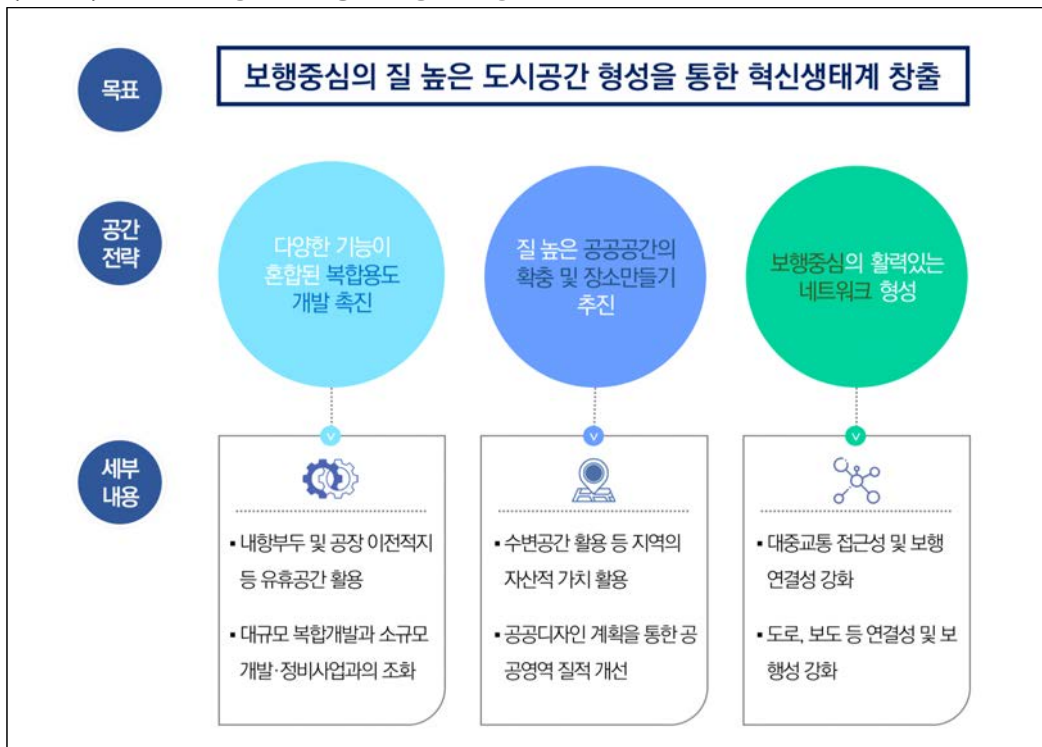
- 제물포르네상스는 혁신기업이나 인재의 유치를 위해 역사도심이라는 잠재력을 기반으로 하되, 열악한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는 공간전략의 방향을 명확하게 정립하는 것이 필요함
- 목표는 ‘보행중심의 질 높은 도시공간 형성을 통한 혁신생태계 창출’로 설정하고, 세부 공간전략은 ‘다양한 기능이 혼합된 복합용도 개발 추진’, ‘질 높은 공공공간의 확충 및 장소만들기 추진’, ‘보행중심의 활력있는 네트워크 형성’으로 설정함

❖ 실천과제

- 다양한 기능이 혼합된 수직적·수평적 복합용도 개발 촉진
 - 내항부두 및 공장 이전지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복합용도(업무 및 연구, 상업, 주거, 관광 등) 개발을 통한 혁신기업 및 인재의 공간적 집적을 도모

- 배후 민간 소유부지의 점진적 재개발과의 적절한 조화를 통한 일체적 정비 추진
- 질 높은 공공공간의 확충 및 장소만들기 추진
 - 혁신주체가 선호하는 대면과 만남, 교류 활동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질 높은 공공공간을 확충하되, 단기적 물리적 개선이 아닌 실천적 프로세스를 통해 점진적으로 육성
 - 지역이 가진 수변공간 및 근대건축자산 등 가치를 활용하여 하나밖에 없는 Only One 공간을 창출
- 보행중심의 활력있는 네트워크 형성
 - 가로공간은 단순히 통행하는 곳이 아닌 머물고 활동이 일어나는 있는 견고 싶은 장소로 규정하고, 공간의 이용 활성화를 중시
 - 도로 및 보도의 연결성 및 보행성(자전거 포함)을 강화하기 위한 견고 싶은 가로공간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및 지원제도 운영

[그림 1] 제물포르네상스 도시형 혁신공간 조성 목표 및 전략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 스마트도시 구현방안

■ 민혁기 도시공간연구부 연구위원

1. 연구 개요

- 스마트도시는 미래 도시 및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도시 개념 중 하나이고, 인천시 ‘원도심 스마트사업 확산 추진’ 등 민선8기 주요 공약사업에도 불구하고 내항과 주변 원도심의 스마트도시 구현, 실행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수단이나 추진방안에 대한 학술·정책 연구 및 논의가 많지 않은 상황임.
- 본 연구의 목적은 스마트도시의 개념과 기술, 법·제도, 적용 사례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과 지역 공간 특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한 실천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2.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 스마트도시 구현방안

1) 정책 기본방향

- 인천 원도심의 재생·활성화는 인천시 공간정책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이며, 인구감소와 고령화, 기반시설 노후화 및 지역경제·산업의 침체를 고려하면 앞으로 더욱 증대한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됨.
- 스마트도시는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도시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개념으로서, 대규모 기반시설 투자가 어려운 원도심의 공간특성과 침체하는 지역산업을 첨단화 전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스마트도시는 인천 원도심에 중요한 발전전략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유럽(헬싱키, 바르셀로나), 미국(컬럼버스) 등 주요 선진 지역의 도시들 역시 원도심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으로 스마트도시 전략을 채택·적용함.
- 스마트도시 이론·사례 검토(2장)와 인천시 현황 검토(3장)의 주요 결과 및 시사점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물포 르네상스 스마트도시 정책 기본방향을 도출함.

[표 1] 제물포 르네상스 스마트도시 정책의 기본방향 도출

스마트도시 이론 및 사례 검토(제2장)	인천 원도심 현황 및 여건 검토(제3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도심 지역발전 및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도시 조성·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성시가지 특성을 반영한 “스마트한” 솔루션 필요 ✓ 통합·연계형 스마트도시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 사람, 제도의 통합 필요 - 지역내 다양한 정책사업 반영 필요 - 서비스 운영·관리, 빅데이터 생산·수집·가공, 모니터링 등 전주기 운영모델 고려 필요 ✓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리빙랩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체감도가 높은 지역 이슈 및 지향점 도출 - 지역주민의 서비스 수용력 증진, 서비스의 지역적합도 및 실현가능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동구 원도심 지역문제 해결방안 마련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감소·고령화, 기반시설 노후화, 산업침체 등 원도심 도시문제 개선 필요 - 중·동구의 잠재력을 발휘하는 정책 필요 ✓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스마트도시 전략 구체화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계획 및 구상의 스마트도시 전략 구체화 필요 - 혁신기술 실증, 생태계 조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 ✓ 관련 정책사업 연계 추진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항개발, 주거지 재생, 교통·녹지·스마트 기반시설, 문화·관광 등 각 정책사업의 연계 계획·추진 필요 - 중앙부처 공모사업 적극 신청, 사업추진

제물포 르네상스 스마트도시 정책 기본방향

- ✓ 원도심 지역특성을 반영한 장소별 스마트도시 특화사업 추진
- ✓ 스마트 첨단기술 실증을 통한 스마트산업 생태계 조성
- ✓ 시민과 공공, 전문가, 기업이 함께하는 스마트 거버넌스 구축
- ✓ 통합·연계형 스마트도시 정책사업 추진

2) 제물포 르네상스 스마트도시 모델

- 스마트도시는 기술과 인적자원, 제도와 같은 대표적인 스마트도시 요소로 구성되며, 중·동구 원도심 스마트도시 사업은 제물포 르네상스의 4대 전략과 연계·통합되어 장기적으로 사회적·경제적·환경적 발전을 목표로 함.

[표 2]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스마트도시 추진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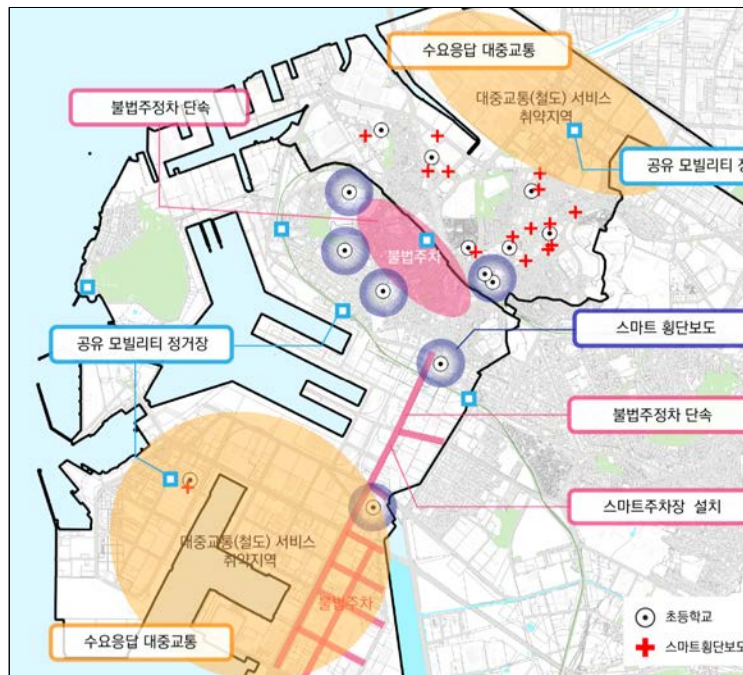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 4대 전략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스마트도시 추진 방향	원도심 스마트도시 조성 목표
(원도심) 정주여건 개선 및 교통체계 구축으로 재창조	지역주민을 위한 원도심 맞춤형 스마트도시 서비스·시설 보급 ; 스마트 행정·복지서비스, 스마트 모빌리티·주차·보행시설, 스마트 환경·재해 모니터링시설 등 <스마트도시 구현방안1>	(사회)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이용한 원도심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도시문제 해소
(문화·관광) 역사와 문화를 연계한 관광 콘텐츠로 다양화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지역 문화·관광자원 연계 및 콘텐츠 강화, 보행 및 대중교통 친화공간 조성 <스마트도시 구현방안2>	(경제) 쇠퇴하는 원도심 산업·기업의 경쟁력 강화, 첨단기업 및 자본 유치

(산업·경제) 원도심을 개편하여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스마트도시 첨단기술 실증 생태계 조성, 첨단기업 유치 및 지원시설 조성 <스마트도시 구현방안3>	
(내항개발) 재개발 사업 주도 및 앵커시설 등 조기 추진	내항재개발 구역 첨단 스마트도시 인프라 확충 및 스마트빌딩·공동주택 건축 <스마트도시 구현방안4>	(환경) 스마트도시 기술을 활용한 노후·쇠퇴 원도심 환경오염물질 저감, 에너지 효율화
	도시 빅데이터 수집 및 관리와 스마트도시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플랫폼 구축 및 운영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시스템>	

3) 스마트도시 구현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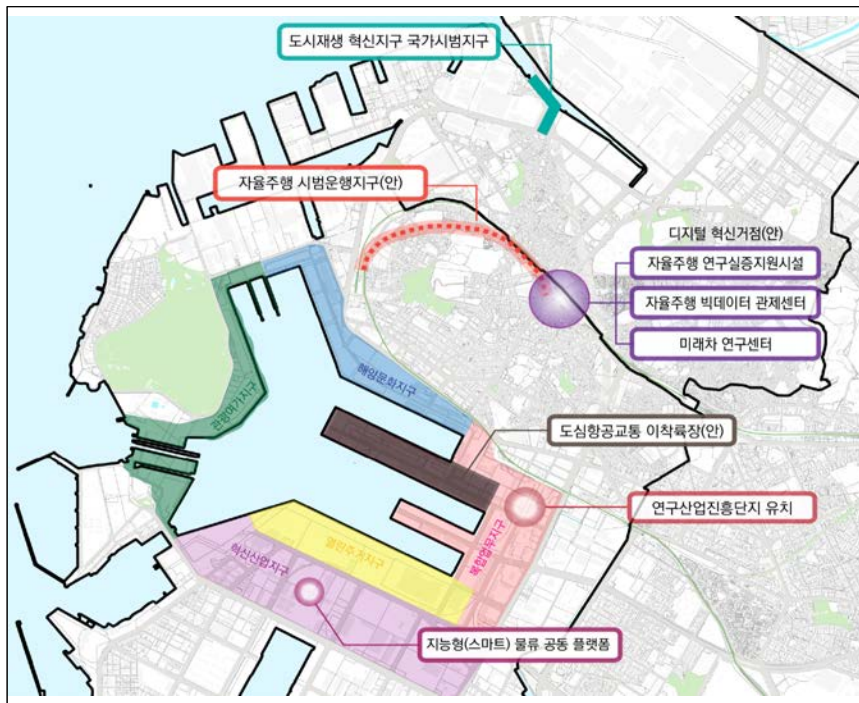
- 고령인구 비중이 높고 노후 건축물·기반시설이 밀집한 중·동구 원도심은 보행 및 재해·사고 등 안전문제와 노인복지, 교통환경 등 이슈의 개선이 필요함.
- 스마트폴, 스마트횡단보도, 스마트경로당, 스마트도서관, 스마트주차장, 수요응답 대중교통, 공유모빌리티 정거장 등 적용·확대

[그림 1] 원도심 분야(모빌리티) 스마트도시 서비스 제안



- 혁신기술 실증을 통해 스마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원도심 지역 스마트도시 인프라 확충을 통해 미래성장산업 및 창업동력을 확보함.
- 자율주행차 시범운영지구 지정, 도심항공교통 이착륙장 조성, 동인천역 등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 연구산업진흥단지 유치 등 추진

[그림 2] 산업·경제 분야 스마트도시 서비스 및 관련 사업 제안



3. 정책 제언

❖ 원도심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 기능 및 조직 확대

-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의 이상적인 개념을 고려하면 CCTV 영상데이터 이외의 도시의 다양한 빅데이터(교통, 행정, 환경 등)를 모두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통합플랫폼 기능이 확대되고 관련 조직이 확대, 전문인력이 충원되어야 함.

❖ 원도심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 스마트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원도심은 신도시 지역과 차별화된 스마트도시 전략과 사업이 지역특성에 맞춰 추진되어야 하며 인천 원도심 또는 구 단위의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원도심 스마트도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스마트도시 리빙랩 확대 운영

- 수많은 원도심 도시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가시적인 사업 효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원도심 문제를 논의하고 개선하는 방식으로서의 리빙랩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확대할 필요가 있음. 향후 기존 인천시 및 국내외 도시에서 추진되는 스마트도시 리빙랩 추진사례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성공 및 실패 원인을 파악하고, 인천시 군·구 리빙랩 사업 추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인천 내항 배후산업공간의 역사적·장소적 가치 해석

■ 안내영 도시공간연구부 연구위원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제물포르네상스는 제물포(공간)+르네상스(목표)의 합성어로 쇠퇴한 인천 원도심(제물포)을 다시 부흥시킨다는 의미로, 쇠퇴한 공간을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부흥시킬 것인가'에 대한 가치 판단과 그 대상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제물포르네상스 대상지 중 개항장과 내항은 근대 역사와 우리나라 대표항으로서의 정체성과 의미를 정립하고 재생에 관한 논의와 노력이 꾸준히 진행되어 왔으며, 그간 진행된 각종 재생사업에서도 성과를 이룩하고 있음
- 반면 내항 배후산업공간은 근현대산업역사에서 중요한 공간이었지만, 항만의 배후공간, 공업지역으로만 인식되고 있으며, 간혹 산업유산을 통해 산업역사가 다뤄지는 경우에도 일부 건축물의 가치에 한정될 뿐 장소적 해석은 미흡함
 - 우리나라 최초 임해중공업지대가 화수·만석부두에 형성, 인천항은 개항 후 근대화시기부터 한국전쟁 후 급격한 경제성장기 동안 한국 최대의 무역항으로 기능, 60~70년대 경제성장기에서 인천 내항 배후산업공간은 한국 경제성장을 이끄는 공간이었고 노동운동사에서도 중요한 공간임
- 최근 산업유산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이를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도 다양해짐. 이는 산업유산을 통해 지역 산업의 번성기를 투영할 수 있고 생산구조와 지역민 생활양식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임
- 산업유산에 내재한 산업역사의 도출과 현재 산업생태계의 시간적·공간적 분석을 통해 제물포르네상스 대상지가 산업 측면에서 가지는 역사적·장소적 가치를 발굴하고자 함
- 이를 바탕으로 산업공간의 재창조 방안을 모색하고,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차별화된 장소적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고자 함

2. 내항 배후산업공간의 역사와 현황

- 산업과 관련한 인천의 시기 구분과 내항 배후산업공간의 매립과정을 고려하여, 1)내항·개항장지구, 2)화수·만석지구, 3)연안항·남항지구로 구분하여 현황을 분석함

1) 특화산업 분석

- 내항·개항장지구는 LQ가 2이상인 산업은 '사회복지 서비스업'과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협회 및 단체'임. 항만과 관련한 창고, 운송서비스, 관련 행정 및 단체들이 집중되어 있음
- 화수·만석지구는 '1차 금속제조업'의 LQ가 11.35%로 매우 높고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등 금속, 기계 등 제조업에 특화되어 있으며,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이 5.46으로 상당히 높은데 세분류상 '선박 및 수유 부유 구조물 건조업'으로 화수부두와 만석부두에 선박과 관련 부품 제조업이 있기 때문임
- 연안항·남항지구는 '비금속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LQ가 25.15로 매우 높음. 세분류 상 '석재, 쇄석 및 모래, 자갈 채취업'과 '천일염생산 및 ·암염채취업'으로, 모래부두와 수산물판매시장에 의해 연안항·남항에 집중된 산업임. 또한 '수상운송업' 18.67,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은 7.41로서 항만 배후부지의 성격이 강함

2) 항만 관련 사업체 분포

- 사업체나 종사자 수가 많지 않아도 항만이나 해안가, 주변 산업과의 연계에서 특화되어 나타나는 산업이 있어, 항만 배후지역에 특화되어 있는 창고 관련업과 수산물가공·판매 관련업, 운송 관련업의 공간 분포를 살펴봄
- 창고 관련업 중 일반창고업은 연안항·남항지구, 만석부두, 화수부두에 넓게 분포하고 있으며, 냉장 및 냉동창고업은 연안항 주변에, 위험물저장시설은 남항위주로 분포함
- 수산물 가공·판매와 관련해서는 '수산물가공식품도매업'이 연안항 주변에 집중 분포하며, '수산물가공 및 저장처리업'과 '천일염생산 및 암염채취업'도 주변에 분포함
- 운송과 관련한 업종 중 '내항 여객운송업', '내항 화물운송업', '기타 해상운송업'은 연안항과 남항에, '기타수상운송지원 서비스업'과 '통관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은 신포역 주변에 집중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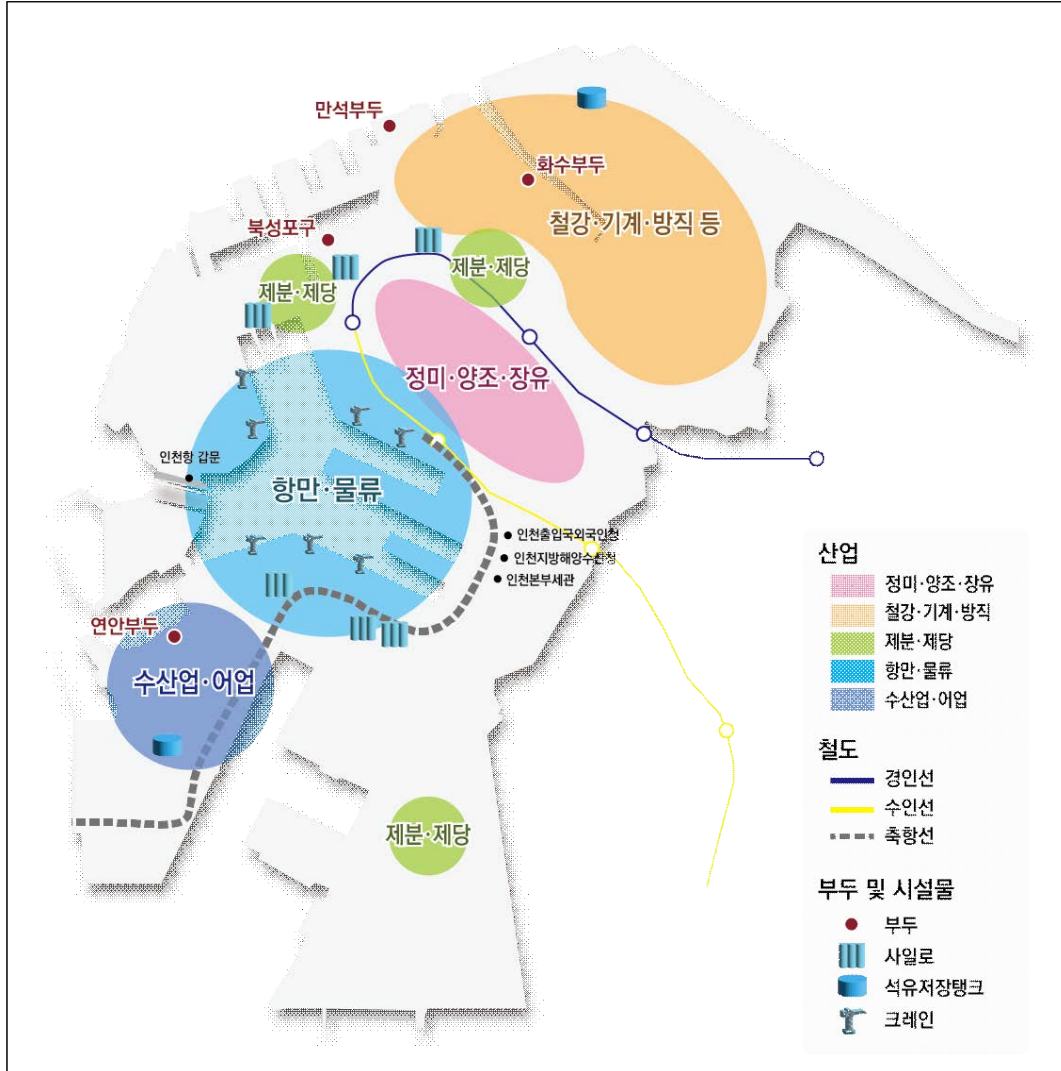
3) 건축자산 기반 산업유산 조사

- 2019년 구축된 인천시 건축자산 중 대상지 내 위치한 건축자산은 총 240개이며, 이중 공장, 창고, 업무시설 등 산업유산으로 볼 수 있는 건축자산을 조사한 결과, 대상지 내 산업유산은 총 73개로 파악됨
- 이는 인천시 전역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이며 산업유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아 한계가 있음. 이에 건축물대장과 선행연구를 활용하여 산업유산 검토대상을 보완하여 대상지내 총 126개 산업유산을 조사함

4) 인천 내항 배후산업공간의 시기별·공간별·산업별 연계성

- 산업과 관련한 인천시 시기 구분은 개항기(1883~1910), 일제강점기(~1945), 해방후 전후복구기(~1962), 경제개발5개년계획 추진기(~1981)로 구분할 수 있음
- 내항 배후산업공간은 산업별로 시기와 공간의 연계성을 가지며, 특히 인천항은 개항장을 중심으로 시기별 매립이 이루어지면서 매립 시기에 따라 공간이 확연히 구분되고 시기별 발달한 산업이 공간적 구분이 나타남
 - 개항장 일대를 중심으로 집중 분포하는 정미업, 장유업, 양조업은 근대화시기와 일제강점기까지 주요 산업이었음
 - 인천 내항은 개항기부터 지금까지 한국의 중요 무역항으로서, 동양 최초, 최대 갑문시설, 인천세관, 크레인, 선거, 사일로 등 다양한 항만관련 자원을 가지고 있음
 - 화수·만석지구는 1930년 태평양전쟁이 발발하면서 관련 공장이 집중하기 시작하였고 해방후에도 대규모 철강, 방직, 기계 등 산업의 중심지였고 70~80년대 경장성장기의 주 무대였으며, 현재까지도 철강, 기계, 목재 등 제조업 중심지로서의 면모를 보임
 - 연안항·남항은 1970년 이후 형성되었지만 항만 배후산업기지로 관련 산업이 가장 집중한 곳으로, 창고업, 수송관련산업이 집중되었고 수산물도소매 관련 산업도 집적됨
 - 신포시장과 수인곡물시장 등도 다양한 층위의 시간과 공간의 연계성을 갖고 있음
- 이처럼 내항 배후산업공간은 시기별, 공간별, 산업별로 서로 연관성이 있고 관련 산업 또한 집적되어 있으며, 산업유산의 분포가 시기별, 공간별, 산업별 연관성이 높은 만큼 산업유산의 활용에 있어 역사적·장소적 접근이 매우 중요함

[그림 1] 인천 내항 배후산업공간의 시기별·공간별·산업별 연계성



	개항기 (1883~1910)	일제강점기 (1910~1945)	해방, 전쟁, 전후복구기 (1945~1962)	경제개발5개년계획 추진기 (1962~1981)
정미·양조·장유	개항-해방 전			
철강·기계·방직			1930년-근대	
제분·제당			해방 이후-근대	
항만·물류	1883년 제물포 개항	1918년 축항(1부두) 준공	1930년대-매립 진행, 인천항 확장	1974년 감문 준공
수산업·어업	북성포구, 만석부두, 화수부두 어시장 활성화		1975년 아객도터미널, 수산센터 연안부두 이전	
철도	1899년 경인철도 개통		1911년 축항선 개통	1937년 수인선 개통

3. 산업유산을 통한 역사적·장소적 가치 해석과 활용방안

1) 주안점

- 첫째, 장소적 접근이 중요함. 산업유산 활용은 개별 건축이나 시설로서가 아니라 역사적 시기와 장소적 접근이 필요함
- 둘째, 내항 및 개항장의 독특한 경관과 분위기만으로 장소성을 만들어내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산업역사와 시민생활사를 더해 스토리텔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사라진 산업 공간은 그 가치를 계승하여 활용하거나 새로운 산업공간으로 바꾸어 창조혁신으로, 현존하는 산업은 고도화하고 장소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2) 인천 내항 배후산업공간의 산업유산 활용방안 제안

- 개항장은 인천시에서 역사성과 장소성이 강한 지역으로 이에 정미업, 양조업, 장유업 등 산업의 역사를 더하여 장소성을 더욱 풍부하게 할 수 있음
- 내항의 갑문, 부두시설, 크레인 등과 세관, 출입국관리소, 국제·연안여객터미널 등 항만 관련시설을 활용, 인천항 역사적 가치를 계승한 내항재개발이 이루어져야 함
- 일진전기 등 유희화된 대규모 산업공간을 혁신창조공간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미래산업을 육성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음
- 동일방직 사택군, 기숙사, 의무실 등은 노동자들의 생활과 관련 있는 시설로 노동역사관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며, 교육·체험 학습 공간으로 활용 가능함
- 만석부두, 화수부두, 북성포구는 옛 포구의 정취를 지니고 있고, 연안부두와 수산물시장은 주변 재정비와 수변공간과 연계하여 매력있고 활기찬 수변문화공간으로 활성화
- 축항선, 수인선 선로와 주변 유희공간을 활용하여 공원과 산책로를 조성하여 부족한 휴식공간과 항만 내부의 새로운 경관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
- 인천 내항 배후산업공간의 산업유산은 인천인들의 삶과 여러 가지 이야기와 가치, 역사적 맥락, 장소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산으로, 제물포르네상스가 추구해야 할 가치들을 포함하고 있어 제물포르네상스의 역사성, 장소성을 더욱 풍부하게 하고 활성화하는 데에 산업유산이 주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그림 2] 인천 내항 배후산업공간의 산업유산 활용방안 종합

1 개항장에 산업 역사를 더하여 장소성 강화

정미업, 양조업, 장유업

- 정미업, 양조업 등 산업유산에 기반한 스토리텔링 강화



2 내항재개발에 역사적 가치 부여

항만 관련 산업유산

- 부두, 갑문, 크레인 등과 세관 등 항만관련 업무시설 활용



3 근대산업현장을 혁신창조공간으로

일조장치, 창고 등 대규모 산업유산

- 대규모 공장, 창고 등 유휴공간, 새로운 산업공간으로 전환



4 근대산업화 노동역사 체험공간으로

동일방직사택모, 깡이부리마을

- 노동자들의 삶의 흔적을 보전한 교육, 체험 공간 조성



5 매력적이고 활기찬 연안바닷가로

연안부두와 수산물시장

- 수변공간과 연계한 문화, 여가 공간 확대로 상업거리 활성화



6 폐선을 활용한 트램과 공원

축항선, 수인선 선로와 주변공간

- 폐선로 및 주변 유휴공간을 활용한 공원 및 거점 조성



제물포르네상스 시민참여 방안 연구

■ 윤혜영 도시공간연구부 연구위원

1. 서론

-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인천시의 역점 사업으로서 인천 내항을 중심으로 중·동구 일대의 재생·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
- 프로젝트의 공간적 범위가 되는 중·동구의 주민을 비롯하여 인천시 정책으로서의 지역 재생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희망도가 높으며, 공간 정책에 대한 참여 필요성도 있음
- 내항재개발 사업의 경우 주민이 이해관계자로 위치 매김을 하였으나,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시민참여는 갈등관리가 아닌 소통을 통한 의견 수렴과 정책개발로 연결될 필요성이 있음
- 본 과제는 시민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인천시 역점사업인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추진 과정에서 시민이 참여 가능한 형태에 대하여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향후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에서 제안할 사업에서의 시민참여의 가능성을 높여 시민이 참여하여 추진하는 협력형 사업으로서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한편 추진 과정에서의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상호 간 이해·소통하는 사업 추진과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2. 활용 가능한 시민참여 기법

1) 도시정책·사업 추진에서의 시민참여

- 도시의 형성과 변경에 관여하는 주민참여는 계획수립 과정과 정책 및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참여로 구분하여 볼 수 있음
 - 계획수립에서의 시민참여: 계획가의 소통 주체로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침

- 도시정책 및 사업추진에서의 시민참여: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세부적인 아이디어 제시, 조직화하여 사업을 주도, 운영상의 개선방안에 대한 자문 및 피드백 등
- 국내에서는 도시정비사업 또는 도시재생사업과 같이 주민이 이미 살고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나 마을만들기·주민참여예산제와 같은 주민주도형 사업에 주민참여를 도모하고 있음
- 최근에는 스마트 도시와 연계하여 지역 문제해결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의 실증에 여러 사람이 참여, 해법을 찾아보고자 하는 목적의 리빙랩 운영에 참여형 사업을 추진
- 시민참여형 사업 추진의 순기능은 ① 시민의 공동체화와 그에 따른 사회적 자본의 축적, ② 문제해결의 역할을 통한 정책효과의 증가, ③ 참여 수준이 높을수록 사업에 대한 만족도와 긍지도 높아짐에 따라 사업 지속성과 주민 역량 강화 등이 있음

2) 활용 가능한 시민참여 기법

- 도시재생법 시행 이후 도시재생사업에서 주민역량의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대학이나 주민 아이디어 중심의 사업 추진, 마을기업·사회적기업 등의 조직을 통한 사업 시행, 개별사업 추진 등에 주민 의견 수렴과 네트워크 구성 등의 방식을 도입함
- 이와 같은 경험들은 시행 과정을 통해 지역 역량 강화의 목적을 달성하며, 주민참여나 주민의 역할에 대한 인지력을 높임
- 닉 웨이츠(2008)의 제안을 바탕으로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에서 활용 가능한 시민참여의 기법에 대한 제안이나 기존에 시도되었던 방법 등을 수렴·재구성하면 [표 1]과 같은 기법 등의 적용을 검토할 수 있음

[표 1] 시민참여 기법

기법		
활동 주간 (Activity week)	커뮤니티 계획 포럼 (Community Design Forum)	커뮤니티 디자인 센터 (Community Design Centre)
전자지도 또는 지도화 (Electronic Map·Mapping)	아이디어 대회	실행 펀드 (Feasibility Fund)
재검토 세션 (Review Session)	아이디어 워크숍 (Idea Workshop)	온라인 플랫폼 (Online Platform)

3.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 내 시민참여 필요성

❖ 프로젝트의 공간적 범위

-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의 내용으로 주거지 재생과 원도심 개편 등 주거영역을 포함하는 사업이 있어 주민의 사유재산과도 연관성이 있으며, 또한 다수의 물리 사업 추진에 대한 이해와 납득, 지원이 필요함

❖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사업이 포함

- 이미 오랜 갈등이 이어져 온 내항 재개발사업을 위시한 여러 갈등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음
- 시민 주체를 포함한 갈등 관리 및 해결의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사업과 지역 활성화의 지속성 확보

- 공공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주민참여의 활성화와 신뢰 구축은 단순한 이용자의 역할에서 공동 운영자로서 사업 지속성을 함께 견인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함
- 공공의 사업 추진에 대한 이해와 신뢰의 구축은 향후 민간으로 사업이 이전되거나 확대될 경우, 보다 책임 있는 역할 부여가 가능함

❖ 시민사회 경험의 자원화와 지역사회 조직화

- 제물포 르네상스 대상지의 주민과 시민단체 중 일부는 이미 기존에 추진되었던 정비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음
- 지역 자산 활용 및 전파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는 지역 내 시민단체 등은 사회적 자본의 강화와 시민사회의 역량 증대로 연결될 수 있으며, 이러한 역량의 강화는 지역사회 조직화(Community Organizing)로의 전환의 동기가 될 수 있음

❖ 계획 수립 시 시민참여 과정 누락에 대한 보완

-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는 중·동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시민참여나 과정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포함하지 않음
- 공공에서 주도적으로 수립하여 계획 내용이나 절차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상황임에 따라 절차적 한계의 보완 측면에서 사업 진행 과정에서 협력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4.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 내 시민참여 모델 제안

- ❖ **인천시민 대상, 온라인, 홍보와 인식 확대: 어플리케이션·홈페이지 활용**
 - 홍보나 인식 확대를 위해서 관련 홈페이지나 어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하여 특정 건축물의 부분이나 공공시설의 색 고르기, 가로수 선택, 공공시설 형태 선택 등 프로젝트 사업 추진에 대한 설문이나 의견 응답 등을 통해 참여하고 사업대상지를 인지하도록 함
- ❖ **인천시민 대상, 지역 활성화 기여: 시민펀드와 활용사업 매칭**
 - 소액으로 가능한 시민펀딩과 그에 매칭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안내하는 형태로서, 프로토타입으로 중·동구를 시범 실시하여 펀딩을 실시하고 재원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안내하는 방식을 적용한 결과를 확인한 후 이를 시 전체로 확대할 수 있음
- ❖ **인천시민 대상, 오프라인, 아이디어 검토: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 제안**
 - 상상플랫폼 등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 내 주민의 집합, 활동이 가능한 공간을 활용하여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에 대한 개요와 현재 상황, 세부 사업 추진 현황과 문제 등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함
- ❖ **중·동구 주민 대상, 오프라인, 워크숍: 사업 내 협력 주체**
 - 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사업이나 주민참여가 일부 검토된 사업, 사유재산이 일부 포함된 계획 등에 있어서는 계획 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더라도 초기부터 참여형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단계를 고민할 필요성이 있음
 - 갈등 영역에 있는 사업보다 하나의 결과 도출이 가능한 사업으로 선정할 필요성이 있음
- ❖ **중·동구 주민 대상, 오프라인, 공동체 활성화: 아이디어 플랫폼**
 - 마을만들기나 도시재생사업과 같이 사업비를 공공재원으로 지원하지 않는 대신,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는 구조의 지원 플랫폼을 검토할 수 있음
 - 이 참여모델의 목표는 주민의 아이디어 제안에 대한 시범 사업 실시 등을 통해 중·동구에서 동작하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 구조를 가지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다수의 주민이 지역공동체로서 지역에 대한 애착을 갖도록 하는 것임

인천 내항 일원 항만기능 이전에 따른 배후물류시설 실태 및 기능변화

■ 김운수 교통물류연구부 선임연구위원

- 컨테이너물류 중심이 남항에서 인천신항으로 이전되고 내항의 컨테이너터미널 폐쇄에 따라 내항 주변 야적장 및 보세창고의 기능이 축소됨과 동시에 최근 전자상거래와 택배 등의 생활물류가 급증하면서 풀필먼트 물류센터의 수요 증가함.
-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 제물포르네상스의 핵심지역인 내항 일원의 배후물류시설에 대한 이용실태와 향후 항만기능 이전에 따른 시설유휴화를 대비가 필요함.
- 인천항 컨테이너화물 집중도는 내항 100%('03)→0%('22), 남항 67.5%('14)→36.5%('22), 인천신항 12.5%('15)→67.5%('22)로 변화, 인천신항이 중심기능 수행함.
- 인천 내 연면적 1천㎡ 이상인 창고시설은 서구(인천북항, 경인항)에 173개(189만 ㎡), 중구(인천 내항·남항)에 170개(188만 ㎡)로 집계되며, 서구와 중구의 창고시설 연면적은 전체 대비 88.2%를 차지함. 최근 인천신항이 개장하면서 연수구의 창고시설이 급증하고 있음.
- 보세창고의 연면적은 인천내항 위주로 운영되던 2004년 대비 인천항 남항·북항·신항, 경인항 등이 운영하는 2023년에 약 118%가 증가함. 그러나 중구 연안동의 경우 104만㎡('04)에서 54만㎡('23)로 크게 감소함.
- 이는 항만 주변에 산재해 있는 항만창고, 보세창고 등은 부두기능 이전에 따라 임항창고의 수요보다는 도심 물류창고 기능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
- 항만기능을 지원하는 배후시설은 항만에 인접하여 형성되기에 인천신항의 성장에 따라 내항과 남항의 배후시설은 지속적으로 기능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내항과 남항의 배후지역에 대한 물류단지의 계획 및 개발에 대한 인허가 기능, 수요검증 등 도시의 전체적인 계획하에서 보다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필요함.

II

2023년도 연구결과 요약집

글로벌도시연구단

- 단행본

인천의 글로벌 도시경쟁력 진단과 제언

- 기획연구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성과와 발전방향

인천시 차세대 재외동포 교육지원 방향과 과제

재외한인 플랫폼 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방향과 과제

경쟁력 관점에서의 인천경제자유구역 정주여건 분석

소셜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천시 도시브랜드 분석과 시사점

인천의 기후변화 대응 글로벌 협력 방향과 과제

인천의 글로벌 도시경쟁력 진단과 제언

■ 글로벌도시연구단

1. 서론

- 인천연구원은 인천 민선 8기 시정 목표인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의 연구지원을 위하여 2022년 하반기 글로벌도시연구단을 조직하여 운영함
- 글로벌도시연구단은 2022년 연구 성과를 집성하여 「글로벌 도시 인천을 위한 진단과 제언」을 발간함. 경제지리, 국제정치, 경제·물류, 기후환경, 교육·문화 분야 7명의 연구진이 참여한 연구를 통해 급변하는 국제 환경에서 인천이 지향해야 할 글로벌 도시의 방향 및 주요 과제를 탐색하였음
- 연구단은 1차년도 연구 성과에 기초하여 2023년 상반기에는 글로벌 도시의 경쟁력에 초점을 맞춰 △도시경쟁력 인덱스 및 브랜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경쟁력 현황 △글로벌 연결성 강화를 위한 방안 등을 주제로 한 총 7개의 연구를 진행하였음
- 이 책은 글로벌도시연구단의 2차년도 주요 연구 성과를 요약하여 엮은 것임. 책의 프롤로그에 해당하는 본 장에서는 우선 글로벌 도시경쟁력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점차 다양화하고 있는 글로벌 도시경쟁력 구성 요소와 개념, 그리고 글로벌 도시 유형을 소개함. 다음으로 책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 연구의 주요 내용 및 함의를 정리함
- 이를 통해 글로벌 도시 및 도시경쟁력 개념의 확대·다양화 경향, 그리고 지속 가능한 지구촌 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세계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보다 혁신적이고 사회 포용적 가치를 담은 지향, 그리고 다각적 글로벌 네트워크가 필요함을 강조함

2. 글로벌 도시의 개념

- 지난 세기말 이후 탈냉전과 빠른 세계화 조류 속에서 글로벌 도시에 대한 각계의 활발한 논의가 있었음
- 세계도시 등으로 대변되는 글로벌 도시(global city, world city)는 1787년 독일의 문호 괴테가 문화적으로 탁월성을 지닌 도시 파리와 로마를 ‘Weltstadt(벨트슈타드, 세계도시)’로 일컫은 것에서 유래되었으며, 이후 경제의 세계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주로 경제적 측면에서 논의되어옴(남영우, 2006; 최조순 외, 2014)
- 사스키아 사센(Saskia Sassen)은 세계도시를 “글로벌 경제활동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고차 서비스 활동과 텔레커뮤니케이션 시설이 집중된 장소로서 다국적기업의 본사가 집적하는 경향이 큰 도시”로 정의함(Sassen, 2016)
- 즉, 글로벌 도시란 범세계적인 경제체제에서 초국적 제반 활동을 관리·통제할 수 있는 중심지를 가리킴. 런던·도쿄·파리 등 선진국의 수도, 홍콩·싱가포르 등 도시국가를 비롯한 수많은 도시가 외국자본과 다국적기업 본부의 유치, 혁신역량 제고, 글로벌 인재 유인 등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강화, 글로벌 수위 도시로 발돋움하고자 각축을 벌여옴
- 국내에서는 1997년 IMF 외환위기 발생으로 한국경제가 세계 경제에 편입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세계도시’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됨(남영우, 2006; 최조순 외, 2014)
- 한편, 도시의 경제적 요소를 중시한 초기 개념과 달리 시간이 흐름에 따라 도시의 영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영역은 점차 다각화되었음
- 현시대의 글로벌 도시는 “기존의 경제적·정치적 영역에 사회·문화·환경·과학기술·안전 등 사회의 주요 가치를 포괄하는 세계적인 매력을 두루 갖추고 있고, 다국적기업과 글로벌 인재, 노동자들이 선호하는 가치들이 풍부하여 세계의 긍정적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도시”로 이해할 수 있음(최조순 외, 2014)
- 글로벌 도시를 추구하는 인천시 역시 글로벌 도시의 경제적 측면을 강조함과 동시에 도시의 구조적 차원과 다방면의 정주 여건, 제도적 기반 등이 종합적으로 잘 갖춰진 도시를 추구하고 있음
- 인천시의 「인천광역시 글로벌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인천시는 글로벌 도시를 “도시의 경쟁력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세계인들이 경제활동을 하기에 좋은 최적의 비즈니스 환경이 조성되어 있고, 혁신적인 도시구조·정주여건·법제가 완비되어 세계 정치·경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도시”로 규정함(인천광역시 글로벌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표 1-1] 글로벌 도시의 개념

구분		내용
학술적 정의	Hall (1966)	단순히 대규모 도시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도시 중 극히 일부가면서 정치 권력·국가 및 국제 정부의 의석수, 관련 전문기관의 집중·무역연합·피고용인 연합·기업재단 등의 기능이 결집된 지역
	Feagin & Smith (1978)	다국적기업에 의한 신국제분업의 상황에서 다국적기업의 세계적 네트워크가 물리적으로 자리 잡은 장소이나 자본주의 세계 경제를 하나로 묶는 구심점 역할을 담당하는 도시 초국적기업의 네트워크상에서 각 도시는 경제성장 및 변화의 단계를 거치며 특정 원료나 생산·분배·마케팅·금융 및 기타 서비스 활동의 중심지로 전문화
	Cohen (1981)	신국제분업으로 발생한 기업의 구조 및 생산자서비스 구조의 변화가 세계도시 출현을 증대시켰으며, 이러한 세계도시는 신국제분업의 조정 및 통제를 위한 전략적 기제 임무를 수행하는 도시 국제적 의사결정의 중추가 되는 대기업이 집중하고, 이러한 기업의 집중으로 인해 은행·법률회사·회계·경영컨설팅회사 등을 포함하는 고급생산자 서비스 활동이 집중되는 도시
	Thrift (1988)	새로운 정치, 경제 질서의 변화에 따라 단순 생산 및 지원체계에서 경영·연구개발·전략계획·은행·보험·부동산·회계·법률서비스·컨설팅·광고 등과 같은 고차원적인 생산자 지원 서비스의 경제활동이 활발한 중심도시
	Sassen (2014/2016)	글로벌 경제활동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고차 서비스 활동과 텔레커뮤니케이션 시설이 집중된 장소로서 다국적기업의 본사가 집적하는 경향이 큰 도시
	↓	
	최조순 외 (2014)	기존의 경제적·정치적 영역에 사회·문화·환경·과학기술·안전 등 사회의 주요가치를 포괄하는 세계적인 매력을 두루 갖추고 있고, 다국적기업과 글로벌 인재, 노동자들이 선호하는 가치들이 풍부하여 세계의 긍정적 변화를 리드할 수 있는 도시
법률적 정의	「인천광역시 글로벌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도시의 경쟁력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세계인들이 경제활동을 하기에 좋은 최적의 비즈니스 환경이 조성되어 있고, 혁신적인 도시구조·정주여건·법제가 완비되어 세계 정치·경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도시

자료: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3-43호; 최조순 외(2014); Sassen(2014, 2016)

3. 지속가능한 발전과 도시경쟁력

- 21세기 세계화 시대에서는 도시가 점차 개방화·지방화되면서 국가 간 경쟁보다는 지역 또는 도시 간 경쟁이 심화하는 경향을 보임
- 기존에는 도시경쟁력을 판단하는 데 보편적으로 경제적, 정치적, 기술적 측면이 강조됨에 따라 개별도시의 급속한 경제 발전을 이뤄내기는 했으나, 한편으로 도시의 낮은 삶의 질, 난개발, 환경오염, 인구이동으로 인한 도시 불균형 발전과 도심공동화 등의 새로운 사회문제를 초래함(최조순 외, 2014)
-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속가능성을 근간으로 하는 새로운 도시재생의 경쟁력패러다임이 등장함. 이를 바탕으로 사회·경제·문화·커뮤니티 및 지역 공동체·삶의 질·안전·인권 등 도시 전반에 대한 포괄적 도시 발전이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요인으로 다뤄지고 있음(최조순 외, 2014)
-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중요성은 점차 강조되고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도시경쟁력의 궁극적 목표는 경제 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삶의 질 제고, 지속적 인간개발로 요약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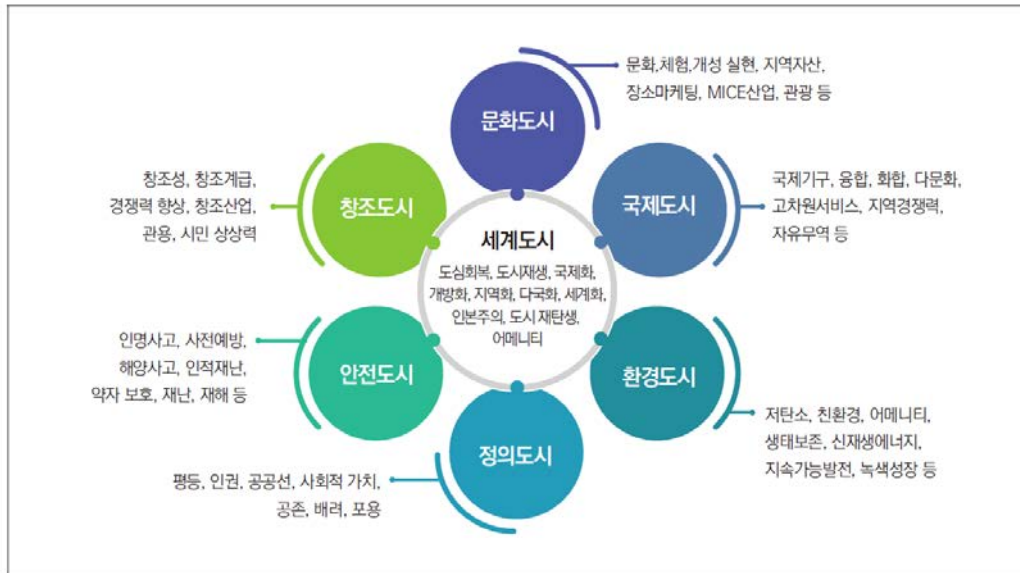
[그림 1-1] 글로벌 도시 패러다임 변화와 도시경쟁력



자료: 최조순 외(2014) 참고하여 작성

- 이와 같은 글로벌 도시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최조순 외(2014)는 광의의 도시재생 관점에서 글로벌 도시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며, 글로벌 도시를 국제도시, 창조도시, 문화도시, 환경도시, 정의도시, 안전도시 등으로 유형화함
 - 국제도시는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제반 경제활동에 있어 규제를 최소화하여 사람, 상품, 자본 이동의 자유와 기업활동에 대한 최대한의 편의를 보장하는 공간”을 의미함. 국제도시는 그 특성에 따라 ‘국제자유도시’, ‘국제회의도시’, ‘국제산업물류도시’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창조도시는 “인간이 자유롭게 창조적 활동을 함으로써 문화와 산업의 창조성이 풍부하고, 동시에 탈대량적 생산의 혁신적이고 유연한 도시경제 시스템을 갖춘 도시”를 의미하며 ‘시민의 상상력과 창조력 발휘’를 핵심 역량으로 봄
 - 문화도시는 “풍부한 문화자원과 문화시설 등 문화적 기반이 갖춰졌으며, 문화예술에 대한 정책지원이 갖춰진 도시”로, 창조적 도시경영이 가능하고, 도시다움과 인간의 개성을 실현할 수 있으며, 약한 연대를 기반으로 한 커뮤니티가 도시 운영의 주체가 되는 도시를 말함
 - 환경도시는 1992년 지구 환경 보전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국제회의인 리우회의 이후, 개발과 환경 보전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전 세계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대두된 개념임. 이는 명확하게 개념화된 용어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근간으로 도시가 청정한 환경을 유지하면서 지속해서 발전하여 쇠퇴하지 않는 도시’를 일컫음. 예컨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전원도시)이나, 생태적 지속가능성(생태도시), 국제기후변화에의 대응(저탄소도시) 등의 가치를 추구하는 도시를 말함
 - 정의도시 역시 명확한 정의는 없으나, ‘정의’라는 단어가 ‘올바른’, ‘공정한’, ‘형평성 있는’과 같은 의미를 내포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사회정의가 실현되고 도시공동체와 시민들이 자신들의 열망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려하는 도시라고 볼 수 있음. 정의도시는 강조하고자 하는 가치에 따라, ‘인권도시’, ‘공동체도시’, ‘평화도시’, ‘여성친화도시’ 등의 용어로 구체화하기도 함
 - 안전도시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사고로 인한 손상을 줄이고 안전을 증진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의미함. 이러한 개념은 특정 지역사회가 사고나 손상으로부터의 ‘완전한 안전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을 증진하고 유지할 수 있는 노력’이 지속해서 이루어지도록 요구할 수 있는 도시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임

[그림 1-2] 글로벌 도시의 다양한 유형



자료: 최조순 외(2014) 참고하여 작성

4. 책의 구성 : 인천의 글로벌 도시경쟁력 진단과 제언

- 인천시 관련 조례에서 담겨 있는 글로벌 도시의 개념 및 지향은 여전히 경제활동과 비즈니스 환경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 기존부터 논의되어 온 국제도시 개념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글로벌 도시의 경쟁력은 단순히 다른 도시를 능가하는 상대적인 경제역량의 우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님. 지구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일궈 낼 수 있는 다양하고 포용적인 사회·문화, 정치적 역량과 가치의 수준을 포함함
- 향후 인천이 지구촌의 지속 발전을 가능하게 하고 시민의 안전하고 창조적인 삶을 위한 세계적인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성을 벗어난 보다 혁신적인 지향과 정책적 접근이 필요함
-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다양한 척도를 활용한 인천 도시경쟁력의 진단이 긴요하며, 경제·산업 분야 외에 인천과 세계를 잇는 보다 새롭고 다양한 연결망의 모색이 필요함. 인천연구원 글로벌도시연구단의 2023년 연구는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음
- 글로벌도시연구단의 2차 연도인 2023년의 주요 연구 결과를 묶은 이 책은 총 3부로 구성되어 있음. 우선 제1부 <인천의 글로벌 도시경쟁력 및 브랜드 분석>은 본 장외에 2개의 장으로 이뤄져 있음

- 「**글로벌 도시경쟁력 지표 사례의 비교 분석과 시사점**」(이정철·안지선)은 인천시의 글로벌 도시경쟁력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 사례를 탐색함. 글에서는 인천시가 평가대상에 포함된 주요 지표 사례인 GUCR에 기반하여 인천의 도시경쟁력 수준을 진단하고 국제적 도시로 부상하기 위한 인천의 정책 방향 및 관리적 과제에 대해 제언하고 있음
- 도시경쟁력과 브랜드의 상관성에 주목하고 있는 「**소셜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천시 도시브랜드 분석**」(조혜정·이선정)에서는 인천시 도시브랜드 실태를 분석하고 활용 방안을 제안하고 있음. 연구에서는 블로그나 소셜미디어와 같은 온라인상의 정보가 도시브랜드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네이버 블로그·Youtube·기사 등 소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인천시 도시브랜드에 대한 인식과 이미지를 조사하고 텍스트 마이닝 분석을 시행함
- 제2부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도시경쟁력 진단>은 인천 글로벌 경쟁력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 20년의 주요 성과와 향후 과제를 내용으로 하는 2개의 연구로 구성되어 있음
 -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성과와 발전방향**」(기윤환·정진원)은 2003년 경제자유구역 지정이후 20년간 정책·제도, 개발, 투자유치, 정주여건 등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여 과제를 도출하고 향후 인천경제자유구역 발전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경쟁력 관점에서의 인천경제자유구역 정주여건 분석**」(윤혜영·정진원)에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정주여건에 초점을 맞춘 현황 분석 및 면접조사 등을 통해, 보다 경쟁력과 매력적 정주여건을 갖춘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위한 정책을 제언하고 있음
- 제3부 <새로운 글로벌 도시네트워크의 조성>은 인천 지역과 세계를 잇는 다각적 네트워크 조성 방안을 탐색한 3개의 연구로 이뤄져 있음
 - 「**기후기술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통한 글로벌 협력의 모색**」(한준·문보경)에서는 기후변화 산업 및 금융 네트워크의 중심지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인천시가 향후 주목해야 할 분야로 지역 기후기술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꼽고 있음.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유망 기업 발굴·지원을 위한 정보 DB의 구축 등 토대 마련이 시급함을 지적하고 있음
 - 「**재외한인 플랫폼 도시 조성을 위한 인천의 기본 구상**」(김수한·전유정)은 재외동포청의 인천 유치를 기회로 삼아, 인천이 세계 각지의 750만 재외한인과 모국인 한국을 연결하는 중심도시로 발돋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연구에서는 재외한인 가치창조거점·비즈니스 허브·포용도시를 지향점으로 삼아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인천의 정책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 인천시가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글로벌 인재를 육성·활용하는데 차세대 재외동포 네트워크 구축이 긴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인천시 차세대 재외동포 교육지원 방향과 과제」(배은주·윤주현)에서는, 차세대 동포를 대상으로 한 국내 교육의 새로운 방향과 과제, 그리고 인천의 다양한 지역자산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음
- 지구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선도하는 진정한 세계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인천의 지향과 과제의 모색. 2022년 하반기부터 이어온 쉽지 않은 글로벌 도시 연구에 함께 한 여러 연구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림
- 아무쪼록 인천연구원 글로벌도시연구단의 2023년 「인천의 글로벌 도시경쟁력 진단과 제언」이 보다 균형 잡힌 다양한 글로벌 도시 논의를 촉발하는 데 작은 기여를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참여 연구진과 같이 2024년 글로벌 도시 인천을 위한 연구를 준비하도록 하겠음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성과와 발전방향

■ 기윤환 도시공간연구부 선임연구위원

1. 연구개요

- 2003년 8월 정부는 인천시 송도신도시, 영종도, 서북부(김포)매립지를 경제자유 구역으로 지정하였고, 이후 부산, 광양으로 확대되었으며, 2023년 기준 전국 9개 광역지자체에 지정되었을 정도로 20년이 경과하는 동안 전국화가 이루어짐
-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및 기업투자유치에 중점을 두면서 투자유치 무산과 지연 등으로 구역 해제 및 조정, 개발사업에서 혁신산업으로 전환 등 다양한 과제와 정책적 변화가 이루어짐
- 경제자유구역 지정 20년이 경과한 2023년 기준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사업추진율은 송도 75.4%, 청라 89.0%, 영종 62.5%(인구 기준)로 가장 성과가 높은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약 43만 명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정착하였음
- 이에 본 연구는 2003년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20년간 정책 및 제도, 개발, 투자유치, 정주여건 등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여 과제를 도출하고 향후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음

2. 경제자유구역 성과분석 결과

1) 전국, 지구별 경제자유구역 비교

❖ 전국 경제자유구역 대비 높은 성과

-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부문별 성과 분석 결과, 지정 20년이 된 인천경제자유구역은 타 경제자유구역 대비 사업체, 인구 등에서 양적 성장에서 경쟁력이 있음
-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국 7개 경제자유구역 대상 성과평가에서 2019년부터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아 최고 성과 지역으로 인정하고 있음

-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타 지자체 경제자유구역과 성과 비교 평가 결과는 투자사업체, 투자액 등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줄 수 있음
- 연구개발 사업체 수의 경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보다 적은 만큼 R&D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고 유인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표 1] 인천경제자유구역 기준 타 경제자유구역과 부문별 성과 비교 평가(2021년 기준)

구분	투자사업체수	투자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중점유치업종 사업체수
평가	↑	↑	↑	↑	↑
구분	연구개발 사업체	연구개발 인력	전체사업체 매출	전체사업체 매입	-
평가	=	↑	↑	↑	-

주: 비교대상간 상대적 평가임을 밝히며 기호의 의미는 다음과 같음. ↑: 높음 / =: 보통 / ↓: 낮음

❖ 인천시와 경제자유구역 비교

-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인천시 성과 비교 평가 결과, 외국인 비중, 외국인 직접투자, 사업체수 LQ 및 미래산업 특화도는 인천 원도심(내륙) 보다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음
 - 사업체수 특화도는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업/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 행정/교육 서비스업/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19개 대분류 산업 중 11개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산업 특화도가 인천시 산업특화도 보다 우위를 보임
- 종사자수 LQ는 인천이 인천경제자유구역보다 높게 평가되었는데 인천 원도심 내 산업단지 등이 다수 분포되어 있고 인구비중상 인천시 원도심이 높기 때문에 종사자수 기준 사업체 LQ가 인천시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됨

[표 2]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 성과 비교 평가(2021년 기준)

구분	외국인 비중		주택공급량		외국인 직접투자	
	IFEZ	인천	IFEZ	인천	IFEZ	인천
평가	↑	=	↑	=	↑	=
구분	사업체수 특화도		종사자수 특화도		미래산업 특화도	
	IFEZ	인천	IFEZ	인천	IFEZ	인천
평가	↑	=	=	↑	↑	=

주: 비교대상간 상대적 평가임을 밝히며 기호의 의미는 다음과 같음. ↑: 높음 / =: 보통 / ↓: 낮음

❖ 경제자유구역 내 국제도시별 비교

- 인천경제자유구역 국제도시별 성과 비교 평가 결과, 인구가 가장 많은 송도국제도시의 여건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주택공급량, 외투기업 현황, 사업체종사자수 및 전반적인 정주여건 정도에서 영종 및 청라국제도시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되었음
- 영종국제도시의 경우, 송도 및 청라국제도시보다 인구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상업업무, 문화체육, 의료복지의 정주여건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됨

[표 3] 인천경제자유구역 국제도시별 성과 비교 평가(2021년 기준)

구분	총 인구 외국인수			주택공급량			외투기업 유치현황			사업체종사자수			상업업무 정주여건		
	송도	영종	청라	송도	영종	청라	송도	영종	청라	송도	영종	청라	송도	영종	청라
평가	↑	↓	=	↑	=	↑	↑	↓	↓	↑	↓	↓	↑	↓	=
구분	문화체육 정주여건			교통 정주여건			의료복지 정주여건			교육 정주여건			공원 정주여건		
	송도	영종	청라	송도	영종	청라	송도	영종	청라	송도	영종	청라	송도	영종	청라
평가	=	↓	=	=	=	↑	=	↓	=	=	=	↓	↑	↑	↓

주: 비교대상간 상대적 평가임을 밝히며 기호의 의미는 다음과 같음. ↑: 높음 / =: 보통 / ↓: 낮음

2) 주거신도시 보다 산업 중심의 자족도시 구축

❖ 인구 대비 낮은 주택수와 과밀한 거주인구

- 인천경제자유구역 주택공급량은 2003년 12,100세대에서 2023년 3월 기준 141,463호로 해당 기간 내 129,363호 증가함
- 하지만, 2022년 기준 경제자유구역 1천인 당 주택수는 337.8호이며, 송도국제도시 358.1호, 영종국제도시 378호, 청라국제도시 277.1호 등으로 인천시(390.3호), 서울시(402.4호), OECD 평균(2020년 462호) 등보다 낮음
 - 주거 중심의 신도시와 비교 시 2기, 3기 신도시 평균보다는 낮은 수준이며, 유사한 신도시인 판교(333호), 계양테크노밸리(415호) 보다 낮은 수준으로 과다한 주택공급 위주의 개발은 아닌 것으로 사료됨
- 주택당 거주 인구수는 2022년 경제자유구역이 3.0인/호로 과밀한 상황이며, 계획지표에 부합하게 주택공급이 이루어져야 신도시 수준의 2.6인/호 수준으로 나타남
-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아파트 중심의 주거신도시와 비교 시 주택공급수는 많지 않은 상황이며, 주택당 과밀하게 거주하고 산업기능과 연계한 자족신도시와 유사한 수준임

❖ 자족기능 확보 가능한 산업용지 대비 외투기업 유치 미흡

- 2022년 기준 경제자유구역의 산업, 연구, 투자유치 등의 자족용지 비율은 11%(중심 상업업무용지 비율 제외)로 자족기능이 확보된 판교신도시(10%)와 유사한 수준임
- 송도국제도시는 19.6%(중심상업업무용지 비율 제외 시 11.5%), 영종국제도시는 15.1%(중심상업업무용지 비율 제외 시 8.6%), 청라국제도시는 22.6%(중심상업업무용지 비율 제외 시 16.5%) 수준으로 영종국제도시가 상대적은 낮은 비율을 보임
-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 주거형 신도시보다는 높은 수준의 산업·연구용지를 보유하고 있지만, 경제자유구역이 외투 및 외국기업 중심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정된 것에 비해 기업 및 연구기능 유치를 위한 용지는 낮은 수준으로 판단되며, 특히,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지속적으로 축소된 것은 경제적 이득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으로 사료됨

3) 인천시 인구 유입 및 재정 확보, 국가경제에 기여

- 2023년 기준 경제자유구역 내 정주민구는 431,478명으로 인천시 인구의 약 15%가 거주하는 지역으로 성장하였으며 외부 유입 인구에 의한 인천시 인구증가에 기여함
- 인천경제자유구역이 개정한 2003년 경제자유구역의 지방세 수입은 739억 5,200만 원에서 2022년 1조1,162억5백만 원으로 20년간 약 1조422억5,300만 원 증가하였고, 인천시 지방세 수입의 약 20% 정도를 차지함
- 경제자유구역의 지방세 수입은 2020년 이후 1조 원 이상으로 증가하였으며, 인천시 지방세 증가액의 최대 44%(2020년)까지 경제자유구역에서 기여함
- 지방세 대비 높은 국세 비율을 고려할 경우, 국가경제부흥에 기여한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됨

4) 경제자유구역의 외투유치, 투자액 등 증가율 정체

- 경제자유구역별 전체사업체 투자사업체수 및 투자액 고찰 결과, 타 경제자유구역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사업체수 및 투자액이 가장 많지만 외국인투자 신고 증가율은 2017년 이후 증가율이 계속 감소하고 있음
- 인천경제자유구역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는 타 경제자유구역보다 높은 상황으로 2021년 기준 전국 경제자유구역 대비 각각 48.9% 및 46%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3. 인천경제자유구역 발전방향

1) 경제자유구역의 차별화를 통한 발전

❖ 글로벌 도시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 전환

- 경제자유구역 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목표는 규제완화 등을 통한 '개방 선도지구 및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Test Bed'와 혁신,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경제 전환 테크노폴리스' 등이라 할 수 있음
- 이에 수도권과 비수도권 차별적 대응 등의 문제 해소와 지역균형발전 목표 달성보다는 Test Bed, 혁신생태계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의 변경이 요구됨

❖ 수도권 규제 완화 및 외투기업 인센티브 강화를 통한 활성화 유도

- 현재 수도권 규제는 수정법에 의한 규제와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한 국내복귀기업, 첨단기술기업, 현금지원 등에서 규제를 받고 있음
- 수도권 규제 완화를 통한 개발 권한 확보, 경제자유구역법상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별적 대응 개선 등을 통하여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 경제자유구역법상 수도권 내 국내복귀기업, 첨단기술기업, 대학 등을 유치하여 혁신 생태계를 조성토록 하고,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국비 지원 강화 등이 요구됨

2)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인력공급체계 및 정주환경 구축

❖ 대학, 연구소 유치와 기업 연계 취업 활동 유도

-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수도권 규제로 인하여 대학교의 신설이 제한되어 있어 산·학·연 연계를 통한 통합적 기술개발, 창업 활동 등에서 취약한 상황임
- 2022년 인천경제자유구역 발전계획에서 제시하는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 제조·혁신 클러스터 전환 등을 위해서는 대학, 연구소 등을 지역 내에 유치하여 경제자유구역에서 활발한 교류를 통한 혁신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 또한, 인천글로벌캠퍼스와 연계한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기업 간의 인적교류는 미흡한 상황으로 인턴프로그램, 창업프로그램 등 취업과 연계한 교류를 확대하여 고급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 외국인 정주지원 등 정주환경 확보

- 경제자유구역의 국제도시화 추진을 위해서는 외국인 정주민구를 유입하는 것과 동시에 정주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지원, 노동 여건 개선 등이 필요함
- 인천경제자유구역은 5개의 외국대학, 2개의 국제학교, 15개의 국제기구, 206개의 외국기업 등이 입주해 있지만, 외국인 정주지원 시설로는 IFEZ 글로벌센터, 외국인 기업 통합지원센터 등 2개 시설로 미흡한 상황이며 송도국제도시에 집중되어 있음
- 외국인 정주지원을 위한 통합지원센터와 함께 지구별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영종, 청라국제도시 내 여건 개선과 취업 연계를 위한 박람회 개최 등 다각적인 차원에서 지원하여 안정적인 거주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해야 함

3) 통합적 투자유치 시스템 구축 및 혁신성장을 위한 확대 필요

❖ 통합적 FDI 유치 시스템 구축

- 인천시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천광역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투자유치조직은 이원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경제자유구역의 효율적인 FDI 유치를 위해서는 독립된 의사결정기구로서 통합적인 FDI 위원회를 설립할 필요가 있음
- 통합 FDI 위원회는 독립적인 의사결정기구로서 해외 자본 유치를 위한 목표와 전략 제시, 각 FDI 유치 기관들의 관계 조정, 각 유치 기관이 최대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부여해야 함

❖ 경제자유구역의 인천시 기여가 높은 상황에서 혁신성장 확대 필요

-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지정 2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사업추진율이 송도 75.4%, 청라 89.0%, 영종 62.5%(인구 기준) 등으로 평균 70%에 이르고 있음
-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창출되는 지방세는 1조 원이 넘어서면서 인천시 지방세의 약 20%를 감당할 정도로 성장하였음
- 산업 부문 측면에서 송도국제도시의 바이오 클러스터, 영종국제도시의 항공·물류 관련 산업은 특화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인천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혁신성장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확대 등이 필요한 상황임

인천시 차세대 재외동포 교육지원 방향과 과제

■ 배은주 도시사회연구부 선임연구위원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990년대부터 재외동포 교육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법률을 마련하면서 한국어 중심의 민족정체성 확립과 현지 적응을 목표로 하는 재외동포 교육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었는데, 21세기 들어 이민 2세대 및 3, 4세대까지 등장하면서 한민족정체성 문제, 4차 산업혁명 생태계의 강화,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의 필요성 등 다양한 이슈가 제기되자 변화하는 국제 및 국내 환경에 걸맞는 차세대 재외동포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등장하기 시작함
- 인천은 민선8기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글로벌 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으며, 2023년 5월 재외동포청 본부를 인천으로 유치하였음. 인천시가 글로벌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글로벌 인적 자산을 키우고 활용하고자 한다면, 그 인적 자산으로서 차세대 재외동포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인천시는 공항과 항만, 고대 및 근대 역사 유산, 다양한 자연생태를 접할 수 있는 갯벌, 섬, 그리고 평화와 통일을 염원할 수 있는 접경지역, 국제기구 및 교육기관, 외국기업체 등 다양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 글로벌 도시로서, 차세대 재외동포 국내교육에 인천의 지역자산을 적극 활용한다면 교육의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차세대 재외동포와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초일류 도시로 발전해 나가기 위한 인적 자산의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임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외동포 청소년을 위한 국내 교육과정의 현황을 검토하고 차세대 재외동포와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을 위하여 인천시가 지원할 수 있는 국내교육의 새로운 방향과 과제를 제안하고 그 가운데 인천의 지역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일반적으로 ‘차세대 재외동포’의 개념은 “모국에서 출발한 이민 1세대와는 대조적으로 거주국에서 출생 성장한 1.5~2세대 이상”의 재외동포를 의미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차세대 재외동포 중 국내 교육지원의 주요 대상인 청소년층을 연구범위로 한정하여 ‘외국 거주

차세대 재외동포 청소년'을 주 연구대상으로 설정하고 국내에서 지원하는 교육에 한정하여 논의함

2. 재외동포 청소년 국내 교육지원 현황과 시사점

- 재외동포 교육을 위하여 교육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 국내의 교육 관련 지원을 수행하고 있는데, 국내 교육지원과 관련해서는 교육부의 국립국제교육원의 국내 교육과정과 외교부의 재외동포재단에서 실시하는 국내 초청 모국 연수 프로그램, 그리고 지자체별 재외동포 교육지원 사업을 들 수 있으며,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재외교육기관 포털을 운영하여 재외교육기관 현황 및 교육 관련 각종 정보를 제공함
 - 교육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이 제공하는 '재외동포 국내교육과정(K-HED)'은 재외동포의 한민족 정체성 함양 및 차세대 글로벌 인재 양성 목표 하의 장·단기 프로그램으로 구성됨. 관계 법령에 따라 장기과정과 단기과정으로 나누어지는데, 장기과정은 진학집중반과 한국어집중반으로 구성된 초청교육인 '대학수학준비과정'이며, 단기과정은 초청교육인 '한국어해과정'과 '원격교육과정'임
 - 외교부 관련 기관인 재외동포재단에서도 재외동포를 위한 장학사업을 비롯하여 문화사업 및 국내 교육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국내 교육지원 사업에는 재외동포 학생 및 교직원을 국내로 초청하는 모국 연수 프로그램과 온라인을 이용한 원격지원 프로그램이 있음
 - 지자체 중 재외동포 대상 국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현재 전주시가 유일한데, 전주시는 재외동포 아동·청소년 및 한국어 교사를 대상으로 '재외동포 한국전통문화연수 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 기타 민간에서 재외동포 국내 교육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로는 국제한국어교육재단(구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과 미국 한인사회의 차세대 리더 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단체인 뿌리교육재단(KAYAC, Korean-American Youth Assistance Coalition, Inc.) 등이 있으며, 한국산업은행 부설 KDB나눔재단에서도 재외동포인재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재외동포 학생 대상의 국내 교육지원 프로그램은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단기 초청·연수를 통한 모국의 사회·역사·문화 체험 성격의 프로그램임. 이는 한국어 능력 신장이나 재외동포의 사회진출 역량 강화 등 글로벌 리더 양성 측면의 교육보다는 학생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 증진, 모국과의 유대감 강화에 초점을 둔 교육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따라서 한인 후속세대가 한인으로서의 정체성도 유지하면서 글로벌 국제사회의 리더로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모국과의 유대감 강화뿐만 아니라 세계시민으로서의 역량 강화, 글로벌 리더십 함양 등 보다 다차원적인 측면의 교육지원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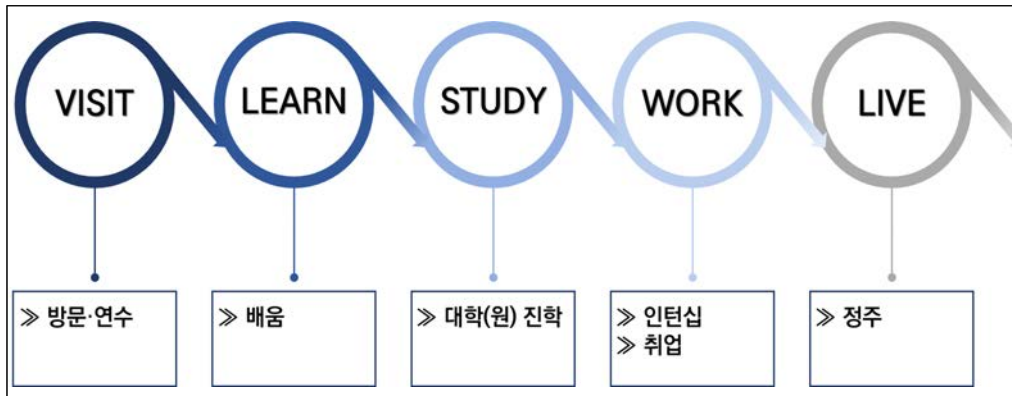
3. 인천시 차세대 재외동포 청소년 국내 교육지원의 방향과 과제

- 차세대 재외동포를 위한 국내 교육지원의 주요 대상은 청소년층이며, 인천시가 이들을 위한 국내 교육지원 사업을 실행하고자 한다면 변화하는 세대와 환경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고 인천 고유의 지역자산을 활용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함

1) 차세대 재외동포의 특성과 교육지원의 필요성

- 차세대 재외동포 청소년의 경우 혈통적 민족의식은 많이 약화되고 있고, 거주국의 언어와 문화에 더 익숙하며 글로벌 시대 거주국의 주류사회로의 진입과 성공에 대한 열망이 강하므로, 이들을 위한 국내 교육지원은 차세대 재외동포가 모국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글로벌 리더십을 갖춘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달라진 인구구조와 산업구조의 변화, 미래 인재상의 변화를 고려한다면, 차세대 재외동포 청소년은 거주국의 주류사회에 진출하여 한국의 국익을 위한 직접적 지원을 할 가능성이 있는 인재이기도 하면서, 간접적으로 한국을 지지·응원하는 한인 네트워크의 일원으로서 활동가능성이 있는 인적 자원이라는 측면에서, 한인 후속세대로서의 정체성을 지닌 재외동포 차세대로의 성장을 위해서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는 청소년 시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한인 후속세대로서의 정체성을 지닌 재외동포 차세대로의 성장을 위해서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는 청소년 시기에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면서 글로벌 리더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와 동시에 모국 및 인천에 대한 유대감을 강화하여 차세대 재외동포와 인천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 설정이 필요함
- 결국 인천시가 차세대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교육지원 사업을 기획한다면, 인천을 ‘방문하여(Visit)’, 인천에 대해 ‘배우고(Learn)’, 인천에서 ‘학습하여(Study)’, 향후 인천에서 ‘일하고(Work)’ 나아가 인천에서 ‘살게(Live)’ 될 수도 있도록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추진할 필요가 있음

[그림 1] 인천시 차세대 재외동포 국내 교육지원의 지향



2) 기본 방향: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는 세계시민으로서의 재외동포 지원

- 차세대 재외동포의 특성과 세계적 교육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차세대 재외동포 청소년을 위한 국내 교육의 방향은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는 세계시민으로서의 한인 후속세대를 양성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임
- 이는 곧 모국 및 인천과의 유대감 강화를 통하여 함께 상생발전하고, 자신의 정체성 및 의미 있는 삶의 창조를 위한 성장과 발전의 기회가 되며, 이를 통해 한인공동체 및 인류 발전에 기여하는 세계시민을 육성하는 교육의 기회가 되어야 함을 의미함
- 이를 위한 추진과제로 인천의 지역자산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음

3) 추진과제

❖ 사업단위의 다양화

- 인천시가 글로벌 인적 자산으로서 차세대 재외동포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하여 차세대 재외동포 청소년의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자 한다면, 다음 두 가지 사업단위를 병행 운영할 수 있음
 - 현재 국가 단위에서 추진하는 차세대 재외동포 청소년 모국 연수 사업의 일부를 인천시에서 위탁 운영하는 방안임
 - 인천광역시의 지자체 단위 사업으로 운영하는 방안으로, 인천의 다양한 지역자산을 활용하여 인천시의 단독 사업으로 운영할 수도 있음

❖ 다양한 사업주체와의 협력을 통한 운영

- 인천시 이외에도 다양한 사업주체와의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데, 무엇보다 국내의 청소년 특히 초중고생과의 교류 및 프로그램 운영에는 인천시교육청과 협력함으로써 보다 의미있는 사업 및 프로그램 기획이 가능할 수 있으며, 운영 또한 보다 수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또한, 대학생 대상 사업 및 프로그램의 경우 인천 내 대학과 협력하여 기획, 운영한다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으며, 인천 지역 대학생을 위한 글로벌 교육 및 교류에도 기여할 것임

❖ 다양한 지역자산 활용

- 인천에는 선사 및 고대 역사부터 근현대 역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역사 및 산업 유적이 있으며, 과거와 현재 이민의 출발지인 인천의 항만과 공항, 이를 기록한 이민사박물관 등도 있어 다양한 역사 교육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또한, 인천시는 수역으로 북한과 접하고 있는 접경지자체인 만큼 역사와 더불어 평화 및 통일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도 용이하고, 다양한 섬과 갯벌, 바다를 활용하여 생태환경 교육도 가능함
- 원도심과 신도시가 공존하고 있어 과거와 오늘, 미래를 함께 보여주고 논의할 수 있으며, 신도시에 소재하고 있는 국제기구, 글로벌캠퍼스, 다양한 외국 및 국내 기업과 산업단지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국제사회 이슈 및 경제 이슈를 함께 논의할 수 있음
- 특히 강화도를 비롯한 섬 지역에는 다양한 자연휴양림과 수련원, 야영장 등 자연을 만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옥시설처럼 전통 한옥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들도 많아 차세대 재외동포 청소년을 위한 수련 및 교육시설로도 활용가능함

❖ 교육내용 및 유형의 다양화

- 현재 재외동포 국내 교육 프로그램이 한국어, 한국(또는 지역) 전통문화 및 대학진학 등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인천의 경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모국 및 인천과 연결된 글로벌 인재 양성으로 교육내용을 다양화하고 확장할 수 있음
- 다음 [표1-1]은 지역자산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의 예시(안)임
- 다른 한편, 온라인 방식을 활용한 프로그램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온라인 프로그램을 접한 차세대 재외동포들이 직접 인천을 방문하여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될 수 있으므로 온라인 프로그램은 그 자체로도 의미있지만, 인천 방문교육을 촉진하는 계기로도 작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예컨대, 인천 지역을 소재로 하는 다양한 수준의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과 디지털 시대 메타버스 인천 방문(인천의 역사, 문화 및 관광지 소개) 프로그램, 인천 대학의 소개, 인천의 기업과 세계와의 무역 등을 예시해 볼 수 있음

[표 1] 인천시 차세대 재외동포 교육 프로그램 예시(안)

영역	프로그램	대상	활용자산
청소년 교류 활동	차세대 재외동포와 인천지역 청소년들의 교류	중고생	자연휴양림, 청소년수련원(관), 야영장 등
	차세대 재외동포와 인천지역 대학생들의 교류	대학생	자연휴양림, 청소년수련원(관), 야영장 등
	차세대 재외동포 출신 청소년들 간 교류	중고대학생	자연휴양림, 청소년수련원(관), 야영장 등
진로 직업 지원	진로 및 취업 지원서비스	중고대학생	
	진로직업 체험	중고생	인천시교육청 진로교육센터 등
	갭이어	고등학생	
	인턴십	대학생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등
	한국대학 입학생을 위한 정착 및 대학적응 지원	대학생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등
글로벌 리더십 강화	리더십	중고대학생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등
	봉사활동	중고대학생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자원봉사센터 등
	인권교육	중고대학생	글로벌캠퍼스, 인권위원회 등
	다문화교육(인권교육)	중고대학생	힘박마을, 남동공단, 남동사할린센터, 글로벌캠퍼스 등
	세계시민교육(인권교육)	중고대학생	글로벌캠퍼스, 국제기구 등
	평화통일교육(통일캠프)	중고대학생	접경지역, 강화 및 교동도 등
	생태환경 교육	중고대학생	갯벌, 섬 등
	경제교육(미래전망, 글로벌 위치)	중고대학생	산업단지, 남동공단, 외국기업 등
역사 및 전통 문화	역사 교육 및 체험	중고대학생	접경지역, 강화도, 교동도, 개항장, 차이나타운, 향교 등
	인천지역 전통문화 체험	중고대학생	강화도
한국어 학습	수준별 한국어 학습	중고대학생	

❖ 교육 및 연수 기회와 대상자 확대

- 차세대 재외동포를 위한 인천 연수 및 교육의 기회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보다 더 많은 차세대 재외동포에게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비용 등의 제약조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보다 연속성 있게 연간 단위로 연계운영하는 심화 프로그램의 경우 1차 이수자가 2차 신청 우선대상자가 될 수 있게 해 주는 등 동일 대상자가 신청 가능하도록 하여 보다 인천 방문 연수 및 교육의 기회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궁극적으로는 인천에서의 대학진학, 취업, 정주 등으로 그 방향을 지향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인천의 방문교육 프로그램의 대상에는 다양한 외국 거주 재외동포 청소년으로 거주국을 다양화하고, 프로그램 다양화를 통해 중고교생 및 대학생, 나아가 대학생 이외 청년층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것을 제안함

4. 제언

- 인천시가 차세대 재외동포 청소년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인천 초청 및 방문 교육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지원 기반과 이를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차세대 재외동포 청소년의 특성과 요구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질을 관리해야 함
 - 차세대 재외동포 청소년이 인천을 방문하여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일반 주민이 숙식을 제공하는 홈스테이처럼 일반 주민들의 참여를 도모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재외동포의 거주 국가 및 지역별 이주 역사와 배경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국가별·지역별 특화된 교육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함
 - 재외동포청의 신설과 더불어 차세대 재외동포를 위한 교육지원에 국가 및 지자체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될 경우에는 향후 국가 및 지자체의 역할 분담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재외한인 플랫폼 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방향과 과제

■ 김수한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1. 연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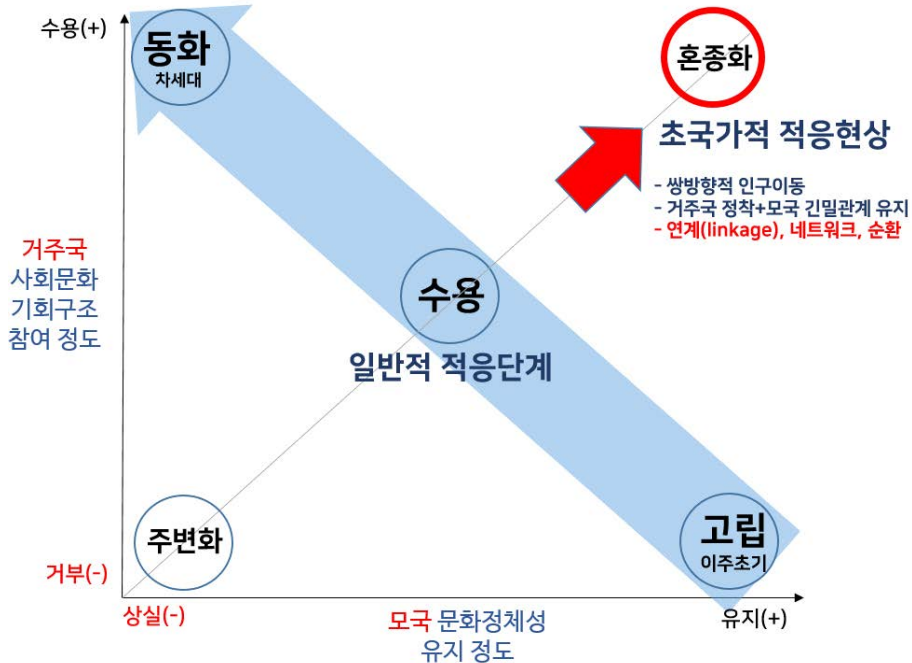
- 이 연구의 목적은 인천이 세계 각지의 750만 재외한인과 모국인 한국을 연결하는 재외한인 플랫폼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데 있음
- 본문의 2장에서는 국내외 여건 파악을 위하여 ①재외한인 현황·특징 ②세계 주요 디아스포라 집단·정책의 특징 ③정부·인천시의 정책 동향을 조사하고 시사점을 도출함 3장에서는 재외한인 관련 ④인천의 지역자산을 조사하고 그 특징을 정리함

2. 재외한인 현황 및 정책 동향

1) 국가·지역·세대별 분화와 수렴

- 이 연구에서는 세계화 국면에서 재외동포가 보이는 혼종화 경향에 주목함. 즉 재외한인을 결절점으로 하여 모국과 거주국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형성이 가능함
 - 1980년대 이후 탈냉전과 정보통신·교통의 발달로 인해 사람·정보·문화·자본의 유동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재외동포 특징이 변화하기 시작함. 특히 모국인 한국의 국가 위상이 크게 제고되면서 모국과의 긴밀 관계를 유지해 거주국 참여 정도를 심화시키는 일종의 혼종 양상이 나타남
- 연구에서는 인천이 재외동포 정책 집행기관인 재외동포청 유치를 지렛대로 삼아 재외한인 연계망을 통해 사람·문화·자본·정보의 순환과 활용의 증추 역할을 하는 ‘재외한인 플랫폼 도시’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함
- 이는 재외동포 중심지를 지향하는 인천시의 ‘1,000만 도시 인천 프로젝트’와의 시정 지향과 그 맥락을 같이하고 있음

[그림 1] 재외동포 적응단계 - 일반적 적응 vs 초국가적 적응



자료(출처): 윤인진(2013:244-252); 윤인진·이윤경(2017:36-45) 내용 참고하여 저자 작성

2) 다양한 디아스포라 유형 및 모국 정책 - 고급두뇌 링크 경향 주목

- 세계의 대표적 디아스포라 집단은 민족 본연의 특징, 이주의 성격, 거주국의 민족정책, 모국의 경제발전 단계 및 수준 등의 영향을 받으며 다양한 유형을 보임
- 해외의 여러 국가가 전통적 투자 유치 모델에서 벗어나 해외 고급 두뇌와의 링크에 주안점을 두고 전개한 재외동포 비즈니스 및 정책 사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음
- 한국 정부는 첨단산업의 세계 주도권 확보를 위해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를 4대 산업을 지정하고 특화단지 지정을 추진하고 있음. 수도권에 자리하고 있어 인천시의 경우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을 준비하고 있음
- 이 같은 정부 및 인천 여건에 주목, 첨단 신산업 분야의 세계 한인 과학기술자·경제인과의 연계를 적극적으로 도모할 필요가 있음

[표 1] 세계 주요 디아스포라 집단의 특징 및 정책·사업

구분	중국 해외동포	이스라엘 해외동포	인도 해외동포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동포: 6,000만 명 •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싱가포르, 미국 등에 집중 • 민족 문화적 동질성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동포: 1,600만 명 • 미국, 프랑스, 캐나다, 영국 등에 집중 • 강한 공동체 의식·연대감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동포: 3,200만 명 •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에 집중 • 영어 공용어 사용, 언어장벽 ↓
모국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교투자 기업 우대 조치 • 중화인민공화국귀교교권권의 보호법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와 민간기구가 결합한 귀환 동포 정책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인도인 특별 우대 조치 시행 (OCI)
주요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화상대회 • 한-세계화상 비즈니스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용 바스켓(Absorption Basket) • 대출기금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T 지식교류 네트워크 구축 • 기업가 멘토링 협업

자료(출처): 본문 조사내용 정리

3) 재외동포 정책·사업의 특징 및 고려 사항

- 재외동포청 신설로 현재 정부의 재외동포 정책 및 사업은 일종의 조정기에 있음. 기존 사업·재외동포청 자료를 참고하여 재외동포 주요 정책·사업을 법무·영사/조사/지원/협력의 4개 분야로 나눌 수 있음
- 재외동포청 주요 정책의 특징 및 이와 관련한 인천의 고려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음

[표 2] 재외동포청 주요 정책 특징 및 인천 고려 사항

정책·사업		주요 내용 및 특징	인천 고려 사항
법무 영사	정책	※ 국가 사무	-
	해외이주, 민사사법공조		
	영사, 출입국		
조사	연구 실태조사	해외공관 인구 실태조사 아시아/북방 - 미주·유럽 분화	시책 추진 위한 해외지역 정보 (북방, 경제인 등) 구축 필요
	지역별 조사		
지원	재외동포 단체 지원	한인 단체 분화 중개조직 난립	고급두뇌집단, 차세대 등 대상 특화 필요
	차세대동포 지원		
협력	해외입양인 교류 협력	네트워크/플랫폼 조성 및 지원 위주의 사업 ※외교부 특징 반영	시장서비스×/ 공공서비스 ○ 인천-선순환 영역 발굴 필요
	경제 협력		
	사회문화 협력		

자료(출처): 저자 정리

- 재외동포청의 '전통적' 지원·협력 사업을 인천에서 무분별하게 ▲편승 ▲차용할 때 자칫 형식적인 행사와 사업의 유지·참여 위주 사업에 편중될 우려가 있음
- 인천의 독자적인 해외지역·재외한인 정보 및 연계망 구축이 필요함. 이에 기초하여 인천의 지역 사회경제 수요에 부합하는 분야를 발굴하여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운용할 수 있어야 함
- 재외한인과의 연계망 구성에 있어 외교부(재외동포재단)의 전통적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한편, 화교 및 인교 등을 벤치마킹하여 고급두뇌집단·차세대 협력을 중심으로 한 특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인천이 지향하는 미래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기반 구축을 기대할 수 있음
- 재외동포 지원 서비스의 경우 외국인에 대한 기존의 일반서비스와 차별성을 두어야 함. 또한 시장을 통해 구매가 가능한 의료·관광 지원 서비스보다는 공공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선별하여 차세대 민족 정체성 회복, 귀환 동포 지원 등 재외한인 특화 서비스에 초점을 맞춘 사업의 기획과 운용이 필요함

3. 재외한인 관련 인천 지역자산 현황·특징

1) 풍부한 유·무형의 문화자산과 글로벌 협력 기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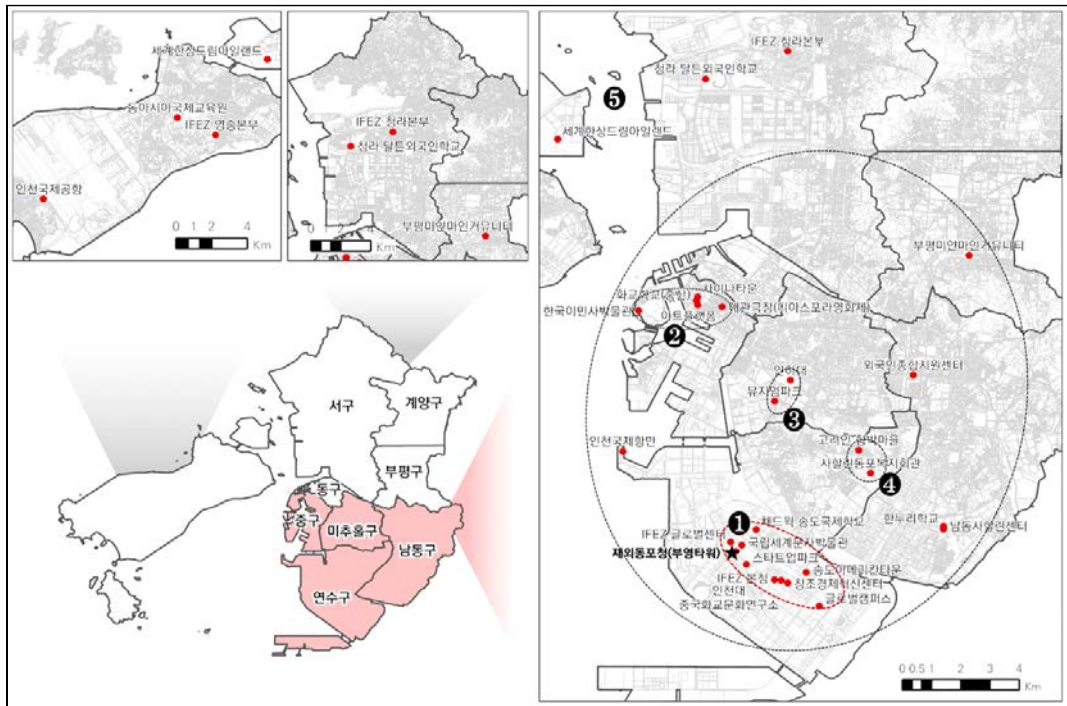
- 재외동포 이주의 출발지인 인천은 관련 다양한 사회문화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 대표적인 자산으로 한국이민사박물관, 인하대 및 관련 연구소 등을 들 수 있음. 그밖에 디아스포라 영화제를 비롯해 여러 풀뿌리 단체에서 문화 전시 및 축제 등 사업을 진행함. 문호도시라는 도시의 역사 문화와 위상,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을 통한 글로벌 도시 지향과 인프라 등이 갖춰져 있음
- 이와 같은 자산 및 여건을 활용하여 어떻게 재외한인 지역자산과 글로벌 자산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것인지? 그리고 분산된 공공 및 민간의 지역자산과 조직을 보다 총괄하여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을지가 주요 과제임

2) 권역별 특화된 지역자산 분포

- 인천의 재외한인 관련 지역자산은 재외동포청을 중심으로 한 송도 권역에 글로벌 사회·경제 자산이 집중하여 분포함

- 개항장에 문화·유산 그리고 인하대 및 2027년 조성 예정인 뮤지엄파크는 연구·문화 거점, 그리고 함박마을 중심으로 한 귀환 동포 집거지가 조성되어 있음
- 글로벌 네트워크의 중추 역할을 지향하는 재외한인 플랫폼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글로벌 사회·경제 자산이 집적해 있고 재외동포청과 인천시 재외동포 웰컴센터 기획과가 자리하고 있는 송도를 중심으로 육성하는 공간조성이 우선되어야 함
- 그러나 동시에 여러 지역에 산재해 있는 주요 지역자산을 연계하여 플랫폼 도시 조성의 시너지 효과 및 지역 균형 발전을 모색해야 함

[그림 2] 인천 재외한인 및 글로벌 관련 지역자산 분포



① 글로벌 사회·경제 중심 ② 개항장 문화·유산 중심 ③ 연구·문화 거점 ④ 귀환 동포 집거지 ⑤ 잠재 발전지역
 자료(출처): 필자 조사 자료에 기초하여 인천연구원 도시정보센터 제작

4. 정책 제언

- 대내외 정책 및 지역자산 현황에 대한 조사와 전문가 자문 및 관계자 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재외한인 플랫폼 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방향과 중점 사업을 제안함

[그림 3] 재외한인 플랫폼 도시 조성을 위한 방향과 중점 사업



자료(출처): 저자 작성

- **(구심점, 글로벌웰컴 클러스터(GWC) 조성)** 재외한인 글로벌 네트워크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재외동포 중심 도시로서의 인천 위상 및 대외적 인지도 제도를 위해서는 공간적 구심의 조성 및 이를 활용한 시민 공감대 조성 사업 필요
- **(실효성 있는 재외한인 연계망 구축)** 형식적인 행사 유치·참여가 아니라 재외한인과 지역의 발전이 선순환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연계망의 창출과 참여 필요
- **(디아스포라 사회문화 토대 마련)** 인천의 풍부한 유·무형의 디아스포라 문화자산 가치를 발산할 수 있도록 문화적 중추공간·거버넌스 확립으로 지속가능 기반 구축
- **(힘 있는 추진체계 수립·운영)** 인천은 재외동포청 유치와 동시에 1,000만 도시 인천 비전을 선포하고 관련 프로젝트를 구성함. 창발적인 인천 시정의 기획·운용을 위해서는 선도기구의 전문성과 추진 역량 긴요

경쟁력 관점에서의 인천경제자유구역 정주여건 분석

■ 윤혜영 도시공간연구부 연구위원

1. 연구의 배경, 목적 및 방법

-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2003년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생활 여건을 개선하여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지정되어 현재 20년이 지남
-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르면 지정 요건에 외국인 정주환경의 확보 또는 연계가 가능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이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상 포함되어야 함
- 경제자유구역 구성에 따라 송도, 청라, 영종 지역 내에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입되었으며, 현재의 정주 여건이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조성,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시점임
- 본 과제는 경제자유구역 내의 정주여건을 지역경쟁력과 경제자유구역 조성 목적을 바탕으로 파악하여 현황 및 과제를 명확히 하고 개선방안을 구상하고자 함
-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인천경제자유구역(송도, 영종, 청라)을 대상으로 함
- 연구의 방법으로 문헌조사 및 자료분석, 데이터 분석, 국내외 사례조사 및 인터뷰 조사 등을 진행함

2. 인천경제자유구역 현황 및 관련계획 고찰

1)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

- 경제자유구역은 2002년 제정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정됨

-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정하며, 국가와 지자체는 목적 달성을 위해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 경제자유구역은 시도지사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요청하고 개발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개발계획을 수립,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 경제자유구역 지정요건으로는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에 부합, 충분한 국내의 기업의 입주수요 확보가 가능할 것, 외국인 정주(定住)환경의 확보 또는 연계가 가능할 것 등을 갖춰야 함
-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 중 정주여건에 해당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음
 -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 교통처리계획 /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 환경보전계획
 -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시행령 제 5조에 따른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과 도시경관계획
- 이외에 외국인 생활여건의 개선(경제자유구역법 제 20조~24조)을 위해 경제자유구역에 공문서 발급 등에 외국어 서비스¹⁾ 제공, 외국교육기관 설립 및 운영,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 전용 약국 개설,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외국방송 재송신이 가능함

2)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 운영 및 현황

-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2003년 8월 11일 송도, 영종, 청라지역 총 122.42km² (이중 송도 53.36km², 영종 51.26km², 청라 17.8km²) 규모로 지정되었음
- 사업 기간은 2003년부터 2030년까지이며 인구 544,695명 중 송도 265,611명, 영종 183,762명, 청라 98,060명, 투입금액 약 81조 3,331억 원으로 계획됨

1) 시행령 제 18조에 따라 제공되는 외국어는 영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음

[그림 1] 인천경제자유구역 종합안내도



자료(출처):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https://www.ifez.go.kr/investment/content/view.do?sn=35>).

- 각 지구별 개발 방향은 송도는 바이오산업과 비즈니스 IT·BT, 영종은 항공물류·항공산업·관광, 청라는 국제업무·금융·관광레저유통 및 첨단산업으로 설정함
- 연수구 송도동 일원에 조성된 송도국제도시는 2003~2030년내 사업비 21조 5,442억 원이 계획됨
 - 송도국제도시 인구는 2023년 2월 말 기준 196,430명(이중 한국인 192,066명(97.78%), 외국인 4,364명(2.22%)), 이며 계획인구 대비 약 73.95% 거주 중임
- 중구 영종도·용유도 일원에 위치한 영종국제도시는 계획상 사업기간 2003~2027년으로 계획사업 총비용은 14조 5,579억 원임

- 계획인구는 181,024명(70,207세대)로 설정되었으며 현재 인구는 2023년 2월 말 기준 111,269명(한국인 109,371명(98.29%), 외국인 1,898명(1.71%))로 계획인구 대비 약 60.55%임
- 서구 청라동 일원에 위치한 청라국제도시는 계획내용으로 사업기간 2003~2024년, 총 사업비 6조 5,965억 원이 설정됨
- 청라국제도시의 계획인구는 98,060명(36,184세대)였지만 2023년 2월 말 기준 114,469명(한국인 113,335명(99.01%), 외국인 1,134명(0.99%))로 계획인구 대비 116.73%로 이미 초과되었음
- 각 경제자유구역의 정주여건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현황을 살피고 개발계획과 차기 계획, 인구와 산업상의 정합성 등을 확인하였음
- 국제기구, 외국인 교육시설 또는 외국 대학의 수나 개발사업 추진률 등은 구역별로 상당수 차이가 있으며, 또한 사업 규모나 고용 인원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 사업체 수를 볼 경우 입주 사업체 수 및 외투기업수 역시 구역별 편차가 큼
- 송도와 영종은 계획인구에 미치지 않았지만 청라의 경우 계획인구를 초과하였음

3) 인천경제자유구역 관련 계획

- 초기 계획인 2003년의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이후 재정비확대기본구상(2010), 산업통상자원부의 제1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2013)· 제2차 기본계획(2018) 등을 통해 각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방향과 전략 수립 및 수정 등이 이루어짐
- 정주여건에 대한 내용은 초기부터 외국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외국인 생활여건에 대해서는 주거와 교육, 의료, 여가 및 레저 분야의 시설 제공을 통한 확보를 구상하였음
- 경제자유구역 관련계획들은 모두 주거, 교육, 의료, 여가를 주요 정주여건 요소로 하고 있으며 문화다양성을 고려하여 검토, 구상되었음
- 또 영어를 포함한 외국어의 사용이나 정착지원 등이 검토되었으나 이러한 정책 방향 설정이 이후 정책지원에 이르기까지의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지는 못함

3. 인천경제자유구역 정주여건 분석을 위한 지표선정

- 경쟁력 측면에서 정주여건은 주요 정주 목적의 하나이자 정주 요인 중 하나이며, 도시경쟁력 측정과 비교에서 메인이 되는 경제적 활성화를 유인하는 인적 요소에 영향을 줌

- 도시경쟁력의 측정은 정립된 체계가 없으며 관점에 따라 세부 지표가 달라질 수 있으며, 정주여건에 대한 지표 역시 다양하지만 주로 삶의 질 측면에서 주거, 교육, 환경, 문화 등으로 설정하고 있음
- 지역경쟁력에서의 정주여건 역시 도시경쟁력과 유사한 위상으로 경제적 성과와 지역 잠재력에 영향을 미치는 인재의 집적의 관점에서 검토되고 있음
- 경제자유구역 정주여건 현황분석은 경제자유구역 내 정주여건 현황을 파악할 뿐 아니라 전 세계 도시 대비 현재의 경쟁력에 대한 시사를 얻을 수 있고 항목에 대한 데이터 습득 및 구축이 검증된 '도시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지표체계'를 우선적으로 활용함
- 전체 지표 중 경제자유구역 유관계획에서 정주여건 분야로 검토한 주거, 교육, 환경, 문화에 해당하는 지표를 도출하여 현황분석에 활용하고, 경쟁력 관점에서 도출된 지표 중 데이터 습득이 가능한 사항을 추가 반영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 정주여건 현황분석을 위해 도출한 지표(안)를 제시하였음
 - 각 지표 항목은 주거여건 4개, 교육여건 6개, 환경여건 4개, 문화여건 6개, 지역매력 여건 4개로 구성됨
- 지표별 정주여건 현황분석과 주거여건 등 5개 여건에 대한 거주민 인터뷰를 실시하였음
- 일반 정주여건, 주택, 환경, 교육, 의료, 여가, 국제도시로서의 위상과 인식, 개선사항 및 과제에 대한 사항 등을 주 내용으로 함
 - 청라 및 영종외의 경우 각 지역 거주자 중 직장도 각 경제자유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청라 7명, 영종 4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함
 - 송도의 경우 경제청의 도움을 받아 외국인 서면인터뷰 총 20부 목표로 배부하여 총 17부(중복 1부)가 회신됨

4. 인천경제자유구역 정주여건 현황분석

- 지표별 현황 분석과 거주민 인터뷰(송도국제도시 외국인 포함)를 통한 인천경제자유구역 정주여건 현황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1) 전반적인 정주여건

- 경제자유구역의 정주여건은 주택 보급이나 1인당 주거면적에 있어서는 수도권 이상 수준이며 생활편의시설의 경우 수도권과 유사하지만, 그 외 여건에 있어서는 개선 필요성이 나타남

- 거주 만족도의 경우 모든 지역에서 대체로 만족하며 공원, 스포츠시설 등의 접근성이 주요 만족 요인임
- 청라의 경우 주거여건이 이주에 영향을 미쳤으며 영종은 직장을 따라 이주를 결정하는 비율이 높음
- 현재 환경에 만족하며 이주를 계획하고 있지는 않으나 영종의 경우 향후 산업 입지 증가에 따른 인구 유입을 기대하는 반면 청라는 산업 입지 부족으로 생기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 문제와 이에 따른 인재 유입의 어려움을 느낌
- 송도의 외국인들은 정주여건에 대해서는 만족하지만 주택 임대 시 소통의 한계, 비싼 임대료, 한정적인 주거 선택, 주택 내 시설정비 미비, 갑작스러운 퇴거 통보 등 여러 어려움을 호소했으며 초기 정착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주장함
- 세 지역 모두 지역 내에서 외식이나 생필품 구매에 큰 어려움은 없으나 쇼핑의 경우 송도나 김포 등에 의존하고 있으며, 모든 지역에서 대중교통의 불편함을 느끼고 자동차 의존도가 높아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이 필요한 한편 외국인의 경우 추가로 대중교통 이용시 영어로 된 정보를 제공해주기를 원하고 있음

2) 의료서비스 부족, 문화·교육시설의 지역별 편중 및 열악한 환경여건

- 의료시설, 의료 관련 인프라 등이 인천 및 수도권에 비교하여 부족하며, 위급한 상황에 대한 대처나 중증 질환에 대한 치료 등을 지역 내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음
- 청라는 생활편의시설이나 도서관, 영화관과 같은 문화시설은 다른 지역에 비해 우수하지만 국제학교, 경기장이나 박물관, 호텔 등 산업 입지에 영향을 미치거나 집객력이 우수한 대규모 시설은 존재하지 않음
- 송도, 영종의 경우 생활편의시설과 도서관, 영화관 등 작은 생활밀접시설은 청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나 경기장이나 박물관, 호텔 등 산업유치와 집객력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은 다수 존재하며, 영종에 비해 송도에서 문화적 여건을 더 자주 누리고 있음
- 청라의 경우 교육환경에 문제가 있다고 여기고 있지 않으나 영종의 경우 학교 외의 교육시설에 대한 고민으로 이주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음
- 지역을 가리지 않고 초미세먼지와 일산화탄소, 오존에 대한 환경기준 초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송도, 청라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공기가 매우 탁한 것을 느끼고 있으며, 특히 외국인들은 이를 강하게 인지하고 대기환경 정보 제공 시에 영어로 된 정보를 추가해 주기를 원하고 있음

3) 국제도시로서의 위상

- 송도의 경우 글로벌센터를 통해 한국어 강의를 제공하거나 커뮤니티 형성에 기여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외국인들은 이를 확장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에 친숙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를 바라며, 추가로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밝힘
- 외국인에게 열린 마음으로 교류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또한 송도 이외의 지역에도 외국인과 교류 가능한 거점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청라와 영종은 일상에서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느끼고 있지 않으며, 영종의 경우 공항을 국제도시의 핵심으로 답했지만 청라에서는 크게 합의된 의견이 없고 향후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살려줄 수 있는 거점시설이나 도시의 특징 강화 필요 등을 제시함

5. 인천경제자유구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과제와 발전 방안

1) 인천경제자유구역 정주여건의 과제

- 첫째, 경제자유구역 대상으로한 관련 계획과 실제 현황과의 격차와 괴리가 발생하고 있음
 - 계획에서 주택, 의료, 교육, 문화, 정착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제시하였으나 주택의 경우 외국인의 여러 조건이나 상황에 따른 주거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초기 정착이나 생활에 대한 지원 체감도가 낮고 정보접근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둘째, 경제자유구역의 장기비전이 부재하여 경제자유구역에서 향후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생활상이 가능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움
- 셋째, 국제도시로서의 위상 강화가 필요함
 - 인터뷰 결과, 인터뷰이 중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느낀다고 응답한 사람은 거의 없으며, 신도시로서의 주거여건의 질에 대한 만족은 높지만 도시 특색은 없음
 - 외국인들의 경우 초기 정착시 스스로 또는 외국인 커뮤니티에 의존하여 여러 과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문제, 또 외국인에 대한 다소간의 배척과 교류의 어려움, 지역 내 영어로 된 정보나

사인시스템의 불충분 등 여러 측면에서 불편을 느끼고 있으며 이 역시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에 관한 문제로 귀결됨

- 넷째, 지역별 정주여건 격차와 업종특성을 고려한 개발이 필요함
 - 송도의 경우 쇼핑에 대한 자체 소비가 가능하고 외국인 교육을 위한 학교나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강좌 등 여건이 갖추어져 있는 반면 청라의 경우 쇼핑의 외부의존, 외국인의 교육여건이 좋지 않고 기업활동에 도움이 되는 호텔 등의 시설이 없음
 - 영종 역시 청라와 비슷한 상황으로, 영종은 산업특화도시로서 향후 발전 가능성은 우수하나 현 상황에서 문화시설이나 생활편의시설, 의료시설에 대한 부족과 함께 업종특성에 따른 내부교통 확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다섯째, 교통, 의료 및 환경분야의 정주여건 개선이 필요함
 - 3개 지역 모두에서 교통의 불편함과 자동차 의존성을 언급하였으며, 대중교통 중 버스의 경우에는 너무 긴 배차간격과 노선·수요의 미스매치, 철도교통의 경우 오히려 지역 내 정주를 저해하고 빨대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음
 - 의료의 경우 청라, 송도의 경우는 큰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으나 영종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의료인이 부족하고 진료과목 중 일부 영역은 인프라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었으며, 모든 지역에서 중증 이상의 병의 경우 서울로 향하고 있음을 언급함
 - 환경 분야의 경우 모든 지역에서 대기질의 문제를 언급하였고, 지역에 따라 소음이나 악취 등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음
 - 주거여건의 경우 주거환경이나 공원, 스포츠 시설 등에서 만족도가 높았지만 본격적인 입주 이후 십 년 정도 지난 상황으로 전체 시설의 노후화나 최근의 니즈에 대응할 수 있는 유지관리 체계가 갖춰져야 할 필요가 있음

2) 인천경제자유구역 정주여건 개선 및 발전방안 제언

- 첫째, 최소 20년 이상을 계획 목표로 하는 장기비전 수립을 통한 미래상황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둘째, 계획에서 제시한 여건확보를 위한 노력 측면에서는 계획에서 제시한 주택, 의료, 교육, 문화인프라 등에 대한 내용 중 현재 단계에서 현실화하지 못한 사항을 중점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 셋째, 외국인의 초기 정착 지원과 지역 내 가능한 활동, 한국어 교육, 지역 내 시설 안내 등 생활정보 등과 교류 정보를 전달하도록 조직기능 강화와 홍보 등이 필요함
- 넷째, 교통의 경우 모든 지역에서 불편함과 과제로 언급하고 있으며 자차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한 상황으로, 지역 내부교통망 구축을 통해 주거와 시설접근성, 주거와 대중교통-광역대중교통 연계를 고려해 볼 수 있음
- 다섯째, 대학 등 교육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정주여건의 개선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데, 사례를 통해 지역내 대학의 진학이나 산학협력 등의 연계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실제로 스타트업이나 관련 종사자의 정주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여섯째, 대기질이나 소음 등 환경문제 개선에 대한 관심과 함께 외국인에게도 정보접근이 가능하도록 영어로 환경정보를 제공해 주는 방안도 필요함

소셜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천시 도시브랜드 분석과 시사점

■ 조해정 도시사회연구부 연구위원

1. 연구개요

1) 연구배경 및 목적

-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마케팅에 있어서 해당 도시의 브랜드는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함. 도시브랜드는 도시를 차별화시키는 도시경영의 전략적 도구로 도시브랜드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도시의 이미지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 내는 중요한 자산이 되고 있음
- 최근 들어 블로그나 소셜미디어와 같은 온라인상의 정보가 도시브랜드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이 연구의 목적은 소셜 빅데이터를 통해 본 인천시 도시브랜드에 대한 인식과 이미지 조사를 통해 인천시 도시브랜드 실태를 분석하고 활용방안을 제안하는 것임

2. 인천시 도시브랜드 분석 및 시사점

1) 인천시 도시브랜드 소셜 빅데이터 분석 결과

- 인천시에 대한 대중의 인지도 상승과 교통 중심지로서의 이미지 확산
 - 네이버 블로그에서 인천시에 대한 문서가 3개월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키워드 분석 및 워드 네트워크 분석 결과 '인천공항'이 중심 단어로 판단되었으며, 토픽모델링의 경우 인천의 도시브랜드 이미지는 해외여행의 통로, All Ways Incheon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유튜브 분석결과에서도 인천 도시브랜드의 기능적 가치인 융복합 도시로서의 도시브랜드 이미지 분석 결과 공항, 공항철도, 서울역 등이 언급되어 인천이 해외여행 및 국내여행과 관련하여 교통 관련 키워드가 언급되고 있음
- 최근 이슈 및 인천시정 방향성과 관련한 키워드와 부정적 이미지 도출
 - 유튜브 분석 결과, 인천시가 최근 유치한 재외동포청과 관련한 키워드와 바이오, 반도체 특화단지 와 K-pop을 비롯한 음악과 축제 등의 키워드가 언급됨
 - 인천 도시브랜드의 정서적 가치인 열려있는 도시로서의 도시브랜드 이미지 분석 결과 펜타포트, 페스티벌 등의 단어가 언급되고 있는 반면, 아동학대, 폭력 등 부정적 도시이미지도 상당 부분 언급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
- 문화체험과 관광명소로서의 도시이미지 확대
 - ‘송도’ 국제도시와 ‘영종도’, ‘파라다이스’, ‘강화’ 등의 언급량이 많아 차이나타운으로만 인식되던 관광지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바다열차, 모노레일 등이 많은 언급량을 나타내, 인천의 지역적 특성인 바다와 관련된 랜드마크, 경관적 요인에 관한 언급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음

2) 정책제언

-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도시의 이미지, 인식, 트렌드 등을 이해하고 도시브랜드 활용 방안을 개발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와 분석이 필요함
 - 소셜미디어에서 나타나는 도시에 대한 언급과 의견을 분석하여 데이터에 기반한 대중의 생각과 반응을 통해 피드백과 인사이트 도출이 가능함
 -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와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소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최신 동향을 이해하고 맞춤형 도시브랜드 전략 마련이 필요함
 - 부정적인 소셜미디어의 반응을 분석하고 모니터링함으로써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과 도시의 평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함
- 인천시 도시브랜드와 관련하여 설문조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셜 빅데이터의 시계열적 분석을 통해 인천시 도시브랜드 마케팅 전략에 활용토록 해야 할 것임

-
- 소셜미디어 유형별 특징에 기반한 빅데이터 분석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인천시 도시브랜드 관련 주요 키워드 트렌드를 발표하고 데이터를 공유하여 활용함
 - 조사시기 및 조사기간에 대한 범위 확대가 필요함

○ 인천시 도시브랜드 관련 기관 간 연계 및 공동조사 실시

- 대변인실, 도시브랜드담당관실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경쟁력, 도시브랜드 관련 설문조사가 연계되지 않고 중복 추진되는 실정으므로 이에 대한 통합적 조사설계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바임
- 설문조사, 소셜데이터 분석 등 조사설계의 기획과 통합을 통한 조사의 효율성 확보가 필요함
- 인천시 대변인실 도시브랜드담당관, 글로벌도시국 내 도시브랜드 담당부서, 문화체육관광국, 인천관광공사 등 관련 기관 간 협의체 구성을 통한 통합기획과 협의 과정이 필요함

인천의 기후변화 대응 글로벌 협력 방향과 과제: 기후기술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중심으로

■ 한준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1. 서론

- ‘2045 탄소중립 선언’을 한 인천광역시는 GCF(Green Climate Fund; 녹색기후기금)와 CTCN(Climate Technology Centre & Network; 기후기술센터 네트워크) 한국협력연락사무소를 유치한 바 있으며, 이들 국제기구는 UNFCCC 하에서 각각 재정 메커니즘과 기술 메커니즘의 주요 축으로 역할을 하고 있음.
- 아울러 인천광역시는 GCF Complex 조성 계획 수립 준비 등과 같이 기후변화 관련 국제기구 유치 도시로서의 위상에 맞는 역할을 모색하고 있음.
- 이런 가운데 인천시가 기후변화 관련 국제기구 유치 도시로서의 위상을 드높이고, 기후변화 대응 글로벌 협력에 일정 부문 기여하면서 시 차원에서 유익한 성과를 만들 수 있는 접점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 개도국 진출이 가능한 관내 기후기술 보유 중소기업에 대한 발굴과 육성, 해외진출 지원임.
- 이에 이 연구는 UNFCCC의 전반적인 체계와 프로세스, 주요 기구별 역할과 기능 등에 대한 검토 및 사례조사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대응 글로벌 협력 기반 조성 및 관내 기업 해외진출 지원 측면에서 관내 기후기술 보유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방향을 제시하고 시사점을 도출한 연구임.
 - 다만, 이 연구는 인천시의 기후변화 대응 글로벌 협력 참여 방향에 대한 모색과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일환으로 관내 기후기술 보유 중소기업의 개도국 진출 지원이라는 방향을 제시하는데 주 목적이 있으며, 기후기술 보유 기업 대상 개도국 진출 세부 지원방안을 제시하는 것 자체에 초점이 있는 것은 아님.
- 이 연구는 UNFCCC에 관한 문헌 연구와 사례 분석, 인천시 현황 분석, 자문회의 등의 방법론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음.

2. UNFCCC 체계를 통한 글로벌 협력

- 신기후체제에서 기술 메커니즘은 UNFCCC 당사국 간 기후기술의 개발 및 이전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원하는 것이고, 재정 메커니즘은 개도국의 기후변화 관련 완화, 적응, 역량 강화, 기술개발 이전에 관한 비용에 재원을 지원하는 것임.
- 기술 메커니즘에는 기술집행위원회(Technology Executive Committee; TEC)와 CTCN이 있는데, TEC는 기후기술 관련 정책 담당 기구로서 기술개발과 이전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 발굴을 중점업무로 하며, CTCN은 개도국으로의 기후기술 이전을 담당하는 소통 채널임.
- 재정 메커니즘에는 GCF와 GEF(Global environmental Facility; 지구환경기금)가 운영기관인데, GCF는 감축, 적응, 기술개발 및 이전, 능력 배양 및 국가보고서 작성에 관한 재정지원 담당하고 있음.
- GCF 사업 유형으로는 능력 배양 프로그램(Readiness and Preparatory Support Program; Readiness), 사업 준비 기금(Project Preparation Facility; PPF), 승인 절차 간소화 시범 프로그램(Simplified Approval Process Pilot Program; SAP) 등이 있음.
- GCF 지원은 크게 증여(Grant)와 비증여성(Non-Grant) 금융 수단이 있으며, 비증여성 금융 수단에는 양허성 차관(Concessional Loans), 지분투자(Equity), 보증(Guarantee) 등이 있고, 증여의 경우, 상환 계획(Repayment Contingency)이 있는 증여와 상환 계획이 없는 증여가 있으며, 비증여성 금융 수단 중 양허성 차관은 양허성 수준에 따라 금융 조건이 달라짐.
- 국내 기업 및 유관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GCF 사업 모델 유형으로는 EPC(Engineering·Procurement·Construction; 설계·조달·시공) 또는 O&M (Operation and Management; 운영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참여하는 유형, 사업개발자(Developer)로서 참여하는 유형, 재무적 투자자(Financial Investor)로 참여하는 유형이 있음.
- GCF 사업 절차는 사업 발굴, 사업 제안, 사업 검토 및 승인, 계약, 사업 이행 관련 공고 및 평가, 낙찰 순으로 진행.

3. 개도국의 기후기술 수요 및 인천의 공급 여건

-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할 수 있는 기후기술은 크게 45개 기술군으로 분류할 수 있음.
- 기술수요평가(Technology Needs Assessment: TNA)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용에 관한 개도국의 기술 우선순위를 파악하여 개도국에 대한 기술과 노하우 이전을 향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선진국이나 국제기구들은 이를 근거로 개도국의 수요를 파악하고 있음.
- 인천 지역 기업 중에서 개도국에 기후기술을 수출할 수 있는 기업 현황에 관한 통계는 일부 선행연구가 있긴 하지만 아직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아 전반적인 현황 파악이 쉽지 않은 상황이며, 국가녹색기술연구소에서 하는 방식 등을 바탕으로 향후 관련 통계 구축이 필요함.

4. 기후변화 관련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기업 해외진출 지원 대책 및 사업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경우, 환경산업의 육성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과 관련해 GCF 활용 개도국 지원사업 발굴, 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 환경기술 국제공동 현지 사업화 지원사업, 다자개발은행(MDB) 환경 협력사업 수주 지원, 환경분야 적정기술 보급 지원사업, 환경기업 해외진출 전문컨설팅 지원사업, 해외사무소 운영, 해외 바이어 초청 상담회, 해외 환경정보 제공, 환경기업 해외벤처 등록 지원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음.
- 서울시는 서울시 소재한 도시자원 순환, 녹색서비스, 그린IT, 신재생에너지, 그린카, 녹색건축, LED조명 등의 녹색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혁신창업부터 역량강화 및 사업화 연계, 국내외 성과창출 지원에 이르는 다양한 단계별 프로그램을 기획해 운영하고 있음.

5. 정책 제언

- 첫째, UNFCCC 체계의 '기술개발 및 이전'과 관련해 크게 기술 메커니즘과 재정 메커니즘의 두 개 축이 있고, 인천에 관련된 국제기구가 모두 소재한 상황에서 지자체로서의 인천이 UNFCCC 체계에 관여할 수 있는 접점으로는 기후기술을 개도국에 공급한다는 차원에서 관내 우수 기후기술 기업에 대한 개도국 진출 지원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둘째, 관내 기업들이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기후기술을 잘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우선 관내 기후기술을 보유한 기업 발굴을 비롯해 보유 기후기술 실태 현황에 대한 조사와 관련 데이터 구축이 중요함.
- 셋째, 관내 기후기술 보유 기업이 개도국 진출을 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및 판로개척 지원 차원에서 기업 단계와 역량에 따른 다양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진행해볼 수 있음.
- 넷째, 관내에서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에 활용될 수 있는 우수 기후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해외 트랙레코드도 일부 있는 기업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을 경우 CTCN TA 사업이나 GCF 재원을 활용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집중육성함으로써 대표적인 지원 사례로 삼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6.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 이 연구는 UNFCCC 체계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기후기술 공급 차원에서 기후기술 기업 지원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는데, 기후변화 국제기구를 유치한 지자체로서의 역할이 여기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예를 들어 도시 계획이나 특성화 차원에서 관련 연구를 수행할 수도 있을 것임.
- 이 연구는 수요 측면에서 TNA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기후기술에 대한 개도국 수요를 상세히 다룬 데 반해, 공급 측면에서는 관련 통계의 부재로 인해 관내 기후기술 보유 기업에 대한 일부 기존 선행 조사 결과를 다루는 데 그쳤는데, 향후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관내 기후기술 보유 기업의 현황에 조사가 필요함.

III

2023년도 연구결과 요약집

글로벌산업전략연구단

- 단행본

도시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략 연구

- 기획연구

인천시 Sea&Air 복합운송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대만 발전모델의 재편과 신성장 연구

인천시 전략산업의 인적자원 육성방안 연구

인천시의 글로벌 투자 유치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인천시 연구개발(R&D) 특성 및 역량강화 방안

인천시 디지털 신산업 현황과 미래전략

도시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략 연구

■ 글로벌산업전략연구단

1. 글로벌생산네트워크에서 도시의 발전

- 1990년대 말부터 세계화가 가속되면서 세계의 많은 지역들이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발전하는 경향을 보임.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는 기본적으로 국경을 초월한 산업 기능과 부가가치 창출 단계의 분업을 의미하며, 이에 결합한 각 지역은 초국경적 분업 체계에 맞는 특징적 역할을 담당하게 됨
- 글로벌생산네트워크 이론은 근본적으로 지역 연구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초기 단계에서 경제지리학자들에 의해서 가장 먼저 체계화된 도시에 대한 논의는 세계도시네트워크(world city networks) 접근방법.글로벌화된 모든 생산의 네트워크는 도시를 통해 운영되고, 모든 도시는 생산 네트워크에 결합되어 있다는 관점(Coe, et al., 2010)
- 각 도시에 자리 잡은 다국적기업들의 본부 또는 지점 간의 연결망이나 하나의 산업가치 사슬 내에서 각 도시에 분산된 기업들의 거래 관계 속에서 정보, 지식, 인재 등의 흐름이 발생하면서 전세계적인 도시 네트워크가 구축됨
- 글로벌생산네트워크 이론가들은 산업 내에서 초국경적으로 발생하는 지역간 부가가치 생산의 분업 관점에서 다국적기업의 전략과 지역의 자산이 결합하는 현상을 포착하여 전략적 결합(strategic coupling)으로 명명하였음. Coe와 Yeung(2015)은 다국적 기업들의 전략
- 과 각 지역의 고유한 자산이 결합하는 전략적 결합(strategic coupling) 유형을 제시
 - 글로벌 도시, 혁신중심지, 역외관할지역, 물류중심지, 상품원료지역, 제조업집적지
- 이러한 전략적 결합의 유형은 각 지역에서 중복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 또한 전략적 결합의 유형은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각 지역이 어떠한 산업을 육성하고 물리적 인프라를 구축하느냐에 따라서 지역의 산업적 자산이 변화함으로써 전략적 결합의 유형이 변화할 수 있음

[표 1-1] 전략적 결합의 7가지 지역 유형

구분	특징	사례
글로벌중심도시	글로벌생산네트워크를 관리(govern)하는 지역	뉴욕, 런던
혁신중심지	지식·정보의 축적과 혁신 창업의 거점 지역	실리콘벨리
역외관할지	고도의 자치권과 규제 완화에 기반한 무역·투자 거점	홍콩
제조플랫폼	제조업 군집으로 형성되고 발전하는 지역	가오슝
물류중심지	공항·항만을 갖추고 물류 거점으로 성장하는 지역	로테르담
상품원산지	원자재를 채굴·수확하고 1차 가공하는 지역	아부다비

자료(출처): Coe and Yeung (2015)에서 재구성

2. 글로벌게이트웨이 발전전략

- 글로벌생산네트워크는 다국적기업들과 지역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생산의 국제적 분업과 협력 체계를 기본 구조로 하고 있으며, 국제무역과 해외투자를 통한 세계지역 간의 상품, 서비스, 인재의 흐름을 물리적으로 연결하는 지리적 공간이 필요함
- 이러한 지리적 공간은 세계 경제와 배후지역을 연결하는 교점(connect zone)에 위치하고 물류와 교통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짐으로써 연결 지점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게이트웨이(gateway)'라고 명명함(Atienza, et al., 2020; Geyer, 2019). 세계경제와 연결된 지역으로서 게이트웨이는 기본적으로 관문도시(gateway city)와 경제회랑(economic corridor)으로 구성
- 관문도시(gateway city)로 불리는 이러한 유형의 도시는 지역 간의 연결 지대에 위치하여 진출입의 경로 역할을 하는 지역으로 정의되며, 2010년대 이후 관문도시 연구는 경제회랑(economic corridor) 개념과 함께 논의되고 있음. 경제회랑은 관문도시와 배후지를 연결하는 경제지리적 통로를 의미하며, 관문도시는 경제회랑을 통하여 배후지역과 산업적 분업을 이루고 배후지역으로부터 부가가치를 흡수하거나 배분하기도 함
- 글로벌 게이트웨이로 발전한 도시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일정한 단계를 거쳐 글로벌 게이트웨이의 지위를 획득한 경우와 처음부터 글로벌 게이트웨이로서 조성된 도시인 경우로 나눌 수 있음. 뉴욕, 암스테르담, 안트베르펜, 프랑크푸르트, 싱가포르, 페낭, 하이퐁 등은 점진적인 역사적 발전 단계를 거쳐 글로벌 게이트웨이로 발전하였거나 발전하고 있는 사례이며, 인천도 이에 해당

- 관문도시와 경제회랑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정리해보면, 글로벌 게이트웨이의 발전 전략은
 - ① 지역 간의 연결성 확보를 위한 선진적 물류 인프라 구축, ② 외국인 투자의 적극적 유치를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③ 수준 높은 생산자서비스의 공급하는 비즈니스 환경, ④ 이러한 기반 위에 조성된 산업생태계 내에서 기술혁신, 인재양성, 연구개발의 활성화 등을 주요 요소로 함

3. 글로벌게이트웨이 도시 발전의 사례

1)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1) 관문도시로서의 특성

- 암스테르담은 약 87만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네덜란드의 수도로서 17세기부터 해상무역의 중심지로 성장하여 “유럽의 관문(the gateway to Europe)”이라는 별칭으로 불릴 정도로 다른 지역과의 연결성을 통해 경제적 발전을 이룩함
 - 암스테르담항은 유럽에서 3번째로 환적물동량 규모가 큰 항구로서 전세계에서 가장 큰 초콜릿가공업과 유럽에서 가장 큰 석유화학 운송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스키폴공항은 유럽에서 세 번째로 큰 항공물류 허브공항
- 암스테르담은 금융산업 및 컨벤션 등을 비롯한 비즈니스 서비스업을 주력으로 하면서, 코코아, 차(茶), 화훼 등 고부가가치형 소비재의 가공·중계무역 거점으로 기능을 지속함. 또한 네덜란드 Bio-Delta로 지칭되는 바이오산업 클로스터도 암스테르담의 주요 산업 분야로 성장하였음
- 암스테르담은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만 복합물류 인프라를 기반으로 가공·중계무역과 고부가가치형 소비재 제조업 및 비즈니스 서비스업이 집중적으로 발전한 형태의 산업구조를 갖추. 이는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성숙 단계에 이른 관문도시의 전형이며, 지역간 연결성과 속도의 경제의 장점을 극대화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음

(2) 암스테르담 중심의 북해-지중해 경제회랑

- 서로 인접한 네덜란드의 3대 항(港) - 스키폴공항, 암스테르담항, 로테르담항 -을 유럽의 게이트웨이로 하여 철도·도로·수로 교통망을 통해서 네덜란드 전역과 유럽의 주요 도시들로 연결되는 구조를 갖추
- 유럽연합에서는 암스테르담·로테르담으로부터 3개의 회랑이 형성되어 있음
 - 라인-알프스 회랑: 암스테르담·로테르담 ~ 아인트호벤 ~ 독일 뒤셀도르프
 - 북해-지중해 회랑: 암스테르담·로테르담 ~ 벨기에 안트베르펜·부뤼셀

- 북해-발틱해 회랑: 암스테르담·로테르담 ~ 독일의 동북부

- 특히 주목해야 지역은 북해-지중해 경제회랑으로서 교통망으로 연결된 도시들 간의 산업적 분업의 전형을 관찰할 수 있음. 암스테르담은 항공물류를 중심으로 경소단박형 상품과 비즈니스 서비스를 공급하고, 로테르담은 항만물류를 중심으로 화학·기계 등의 중후장대 제조업이 입지함으로써 상호 보완적 구조를 형성

[그림 1-1] 암스테르담의 글로벌 게이트웨이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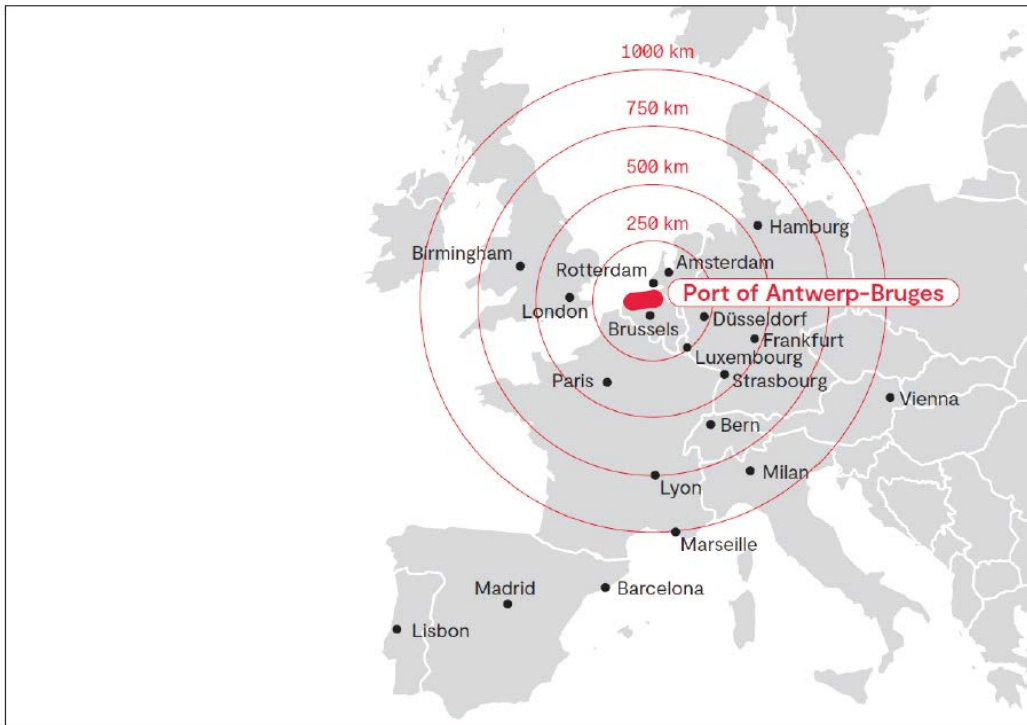
자료(출처): 윤석진 외(2019). 인천광역시 공항경제권 구상. 인천연구원

2) 벨기에 안트베르펜

(1) 관문도시로서의 특성

- 안트베르펜은 2022년 기준 약 54만이 거주하는 도시로서 벨기에의 산업수도로서 15세기부터 유럽의 무역항으로 성장하였고, 16세기에는 유럽의 경제중심지로서 부상하였음. 현재에도 '유럽의 관문' 지위를 두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로테르담과 경쟁하고 있는 글로벌 게이트웨이 지역임
- 안트베르펜 항구는 반경 1,000km 내에 서유럽의 모든 주요 산업 및 소비 중심지가 포함되고, 유럽 전체 구매력 중 60%가 500km 반경 내에 위치해 시장 접근성이 훌륭함
 - 2022년 앤트워프 항과 제브뤼헤 항이 합병하여 앤트워프-브뤼헤 항구가 설립되면서 유럽 최대의 수출항이자 화학클러스터로서 입지를 공고화
 - 7만4천 개의 일자리와 벨기에 GDP의 4.5%에 이르는 부가가치를 창출

[그림 1-2] 안트베르펜 항구의 시장 접근성



자료(출처): 2023 facts & Figures, Port of Antwerp Bruges

- 화학·에너지 산업 이외에 안트베르펜은 높은 구매력을 가진 국가와의 인접성과 유럽 내 이동이 수월한 전략적 위치를 활용하여 항구를 중심으로 물류산업이 발달
- 안트베르펜시 외곽에 있는 안트베르펜 사이언스 파크 대학에 ‘Log!Ville’이라는 유럽 최대 규모의 개방형 시연 및 체험 센터를 설립. 해당 센터에서는 크고 작은 기업들이 물류 관련 첨단기술을 발견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물류 생태계의 자동화, 디지털화 및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운영. 수소 트럭 및 드론을 통한 재고관리, 자율 이동 창고 로봇, 디지털 야드 솔루션 등
- 안트베르펜은 세계 다이아몬드 산업 중심지 중 하나로, 전 세계 다이아몬드 원석의 86%와 나석 다이아몬드 50%가 해당 지역을 통해서 거래됨
 - 매일 2억 2,000만 달러어치의 다이아몬드가 거래되고, 이는 10년 평균치로 봤을 때 연간 470억 달러에 달하는 수준임. 벨기에 전체 수출에서 다이아몬드가 4% 차지하며, EU 역외 수출에서는 15%를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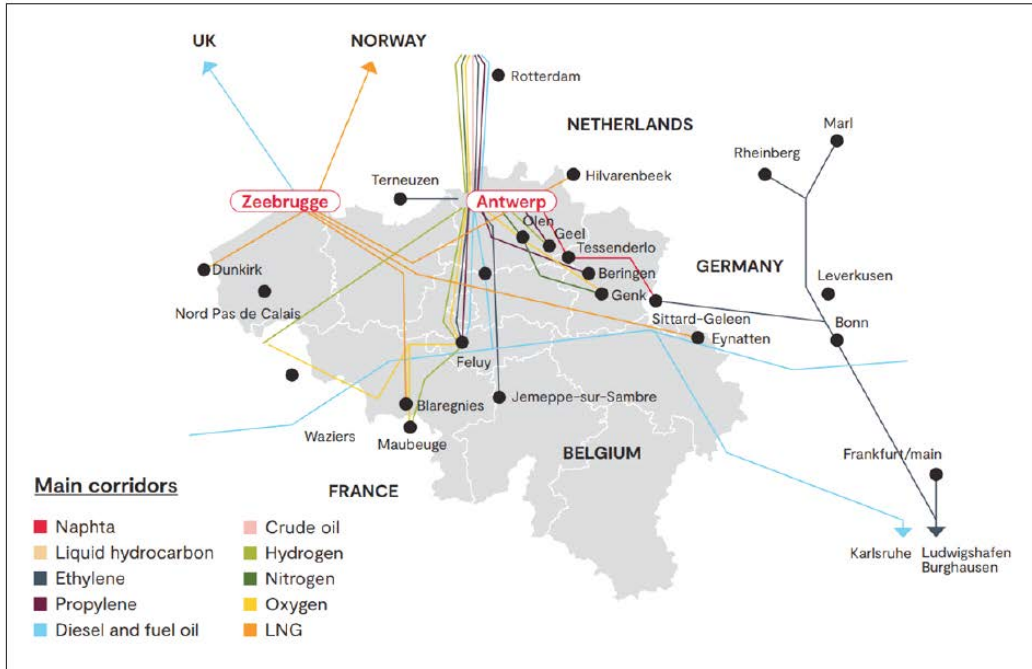
-
- 또한 안트베르펜은 바이오산업 분야에서도 도시가 보유한 물류·유통 산업의 장점을 활용하고 있음. 항구를 통해 의료 제약 수송에 특화된 냉장 수송망을 구축했으며, 유럽GDP(Good Distribution Practice)¹⁾ 규칙에 따라 전체 물류 체인을 운영하는 세계 최초의 해상항구

(2) 안트베르펜을 출발점으로 하는 서유럽 에너지 경제화랑

- 안트베르펜을 관문으로 하는 경제화랑은 에너지 이동의 통로 역할을 한다는 특징이 있음. 벨기에 대표 산업인 화학산업이 안트베르펜 항구 근처에 있는 유럽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발달. 전 세계 주요 석유화학 회사들이 안트베르펜에 유럽 본사를 두고 있음
 - 화학산업의 2021년 매출 규모는 610억 유로로 벨기에 전체 수출의 1/3, 민간 R&D투자의 2/3를 차지하는 주요 고부가가치 산업임. 직간접 고용인구는 32만여 명 규모이며, 전체 생산량의 80%가 수출. 주요 수출국은 독일로 수출량의 40% 차지
- 유럽이 러시아로부터 파이프라인으로 공급받던 천연가스의 대안으로 안트베르펜을 기점으로 하는 LNG 해상 수송 루트가 크게 각광을 받고 있음. 더불어 유럽에서 필요한 재생가능한 수소의 수입, 가공, 운송 중심지 역할을 함으로써 에너지 경제화랑 구축이 가속화
 - 미국의 수소생산업체인 플러그파워는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안트베르펜 항구에 녹색수소 플랜트를 건설 중

1) Good Distribution Practice: 도매 유통업체가 공급망 전체에서 의약품의 품질과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최소 기준을 명시

[그림 1-3] 안트베르펜 항구와 연결된 파이프라인



자료(출처): 2023 facts & Figures, Port of Antwerp Bruges

3) 말레이시아 페낭

(1) 관문도시로서의 특성

- 페낭은 말레이시아 반도의 북서부 해안에 위치한 인구 180만명의 지역이며, 2018년 기준 GRDP 성장률 5.1%로 말레이시아 GDP의 6.7%를 차지하는 동남아시아 지역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무역과 투자 허브로 발전
- 페낭의 제조업은 반도체후공정, 전자부품, 의료기기 등을 주력 분야로 하며, 서비스업은 관광²⁾, 의료, 항공MRO 등의 분야가 발전하였음
- 300여개 이상의 다국적 기업이 페낭에 입지하며, 주요 투자국은 미국, 싱가포르, 영국, 대만 등. 2019년 기준으로 말레이시아 전체 투자유치의 35%가 페낭에 투자
- 페낭의 발전은 지역 간의 연결에 유리한 지리적 위치, 공항과 항만 인프라, 경제특구·산업단지의 지속적 공급 등 전형적인 관문도시의 물리적 강점을 확보하고 있음. 더욱이

2) 항만 지역이자 구도심인 조지타운은 보존과 도시재생을 통하여 페낭 관광산업의 주요 자산이 되었으며 최근에는 문화창조산업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음

페낭은 ① 우수한 비즈니스 서비스 공급체제와 숙련된 인력풀(Invest Penang, 2019), ② 다국적 기업과 지역 기업 간의 연계를 고려한 정부의 인센티브 정책(Sen, 2014), ③ 미국·영국·싱가포르 및 중국·대만 공급망에 중첩된 경제안보적 지위 등 제도적 장점을 보유함

[그림 1-4] 페낭의 게이트웨이와 경제회랑 구조



자료: 페낭투자청(Invest Penang) 및 북부회랑경제지역청(NECR) 홈페이지

(2) 페낭 중심의 북부회랑경제지역

- 말레이시아는 2006년 ‘제9차 말레이시아 발전계획(Ninth Malaysia Plan 2006-2010)’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다섯 개 지역으로 구분된 경제회랑 발전전략을 발표
- 이 중 북부회랑경제지역은 펠리스, 케다, 페락, 팔라우피낭의 4개 주(州, state)를 포괄하며 페낭을 관문(gateway)로 하고 있음. 북부회랑경제지역은 서로 발전의 단계와 상이한 자원을 보유한 지역들을 연결함으로써 경제회랑 발전 정책에 가장 잘 부합하는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음 (Athukorala and Narayanan, 2018)
- 페낭을 중심으로 한 북부회랑경제지역은 서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연결하는 길목에 있을 뿐만 아니라 대륙부 동남아시아와 해양부 동남아시아의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음. 이러한 지정학적 이점은 아세안 경제권의 고도성장과 더불어 말레이시아 북부회랑경제지역의 산업적 중요성을 더욱 배가시킬 것으로 판단

- 북부회랑경제지역은 폐낭을 중심으로 한 잠재력을 바탕으로 공항도시 조성 및 북부회랑 고속도로 건설 등의 인프라 투자, 특화 산업 분야별 클러스터 조성, 농업과 관광 산업의 혁신, 혁신센터 조성 등의 기술적 지원 체계 구축 등이 추진되고 있음

4) 베트남 하이퐁

(1) 관문도시로서의 특성

- 하이퐁은 베트남 제3의 도시로, 타이빈(Thai Binh) 강 하류에 위치한 주요 항구도시. 하노이와 함께 베트남 북부지역 경제의 주축. 2022년 하이퐁시의 인구는 약 209만 명이며 이는 베트남 전체 인구 중 2.1%에 해당함. 높은 성장세를 보이며 2022년에는 홍강 삼각주 내에서 두 번째로 1인당 지역총생산이 높은 도시가 되었음
- 깃비 국제공항(Cat Bi International Airport)은 하이퐁시 도심에서 남동쪽으로 8km가량 떨어져 있으며, 2016년 5월부터 국제공항으로 격상. 연간 최대 400만 명까지 수용할 수 있으며 2025년까지 연간 800만 명의 승객과 25만 톤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공항으로 만들고자 함
- 하이퐁항(Haiphong Port)은 1888년 7월에 설립되었으며, 베트남 북부지역에서 화물처리량이 가장 많은 주요 항구임. 현대적인 장비와 여러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국제 운송 및 무역에 적합
- 하이퐁은 2020년 기준으로 12개 항만시설과 13개 산업단지를 보유함으로써 이러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수용. 외국인직접투자가 활발해지면서 전자제품·컴퓨터 및 부품 제조업, 무선통신기기 등의 제조·가공이 하이퐁시 경제에 크게 기여함
- 베트남의 높은 성장 잠재력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으며, 하이퐁은 지리적 입지로 인하여 동남아시아와 중국 시장에 동시에 진출하고자 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최적의 투자 대상지라고 할 수 있음.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다툼과 코로나19 이후 중요해진 공급망 안정성 등의 요인으로 하이퐁에 대한 투자를 선택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적극적인 China+1 전략을 활용하여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고 있음

(2) 메콩지역 북부경제회랑의 출발점으로서 발전 전략

- 베트남 북쪽 지역에서 철도와 도로, 항공, 내륙 수로 그리고 항만을 포함한 다섯 개의 교통수단을 모두 가진 도시는 하이퐁시가 유일. 이를 토대로 동남아시아 전역에 걸쳐 대규모 제조업, 산업단지, 경제구역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짐
 - 주요 공단까지 도로교통이 편리하고 락후옌 심해항과 인접함. 수도 하노이와는 약120km 떨어져 있으며, 중국 선전 공단까지 트럭으로 12시간 만에 운송할 수 있어 지리적으로 다양한 장점을 보유
- 하이퐁을 관문도시로 하는 경제회랑은 홍강 삼각주에서부터 중국의 쿤밍까지 지리적으로 연결되는 지역으로서, 아시아개발은행이 입안하여 추진하고 있는 메콩지역 경제회랑발전전략 중 쿤밍-하노이-하이퐁(NSCE-3) 경제회랑³⁾에 해당함
 - 이 지역에는 무역항의 역할을 하는 하이퐁, 정치적 수도 하노이, 제조업 집적지인 박닌과 타이응우옌 등 산업도시들이 연이어 자리하고 있음
- 경제회랑 지역 내에서 관문도시 하이퐁은 세 가지 전략적 이점을 취한다고 볼 수 있음. 첫째, 무역항으로서 세계경제 및 베트남 남부도시들과 연결성을 확보하고, 둘째, 배후지역인 중국을 소비시장으로 뒀고 동시에, 셋째, 경제회랑으로 연결된 베트남 도시들과의 산업적 분업관계를 형성
- 또한 하이퐁의 까빗국제공항이 확장 중이며 향후 락후옌현에 신규로 국제공항을 건설하는 방안이 검토하고 있음. 이는 선진적인 글로벌 게이트웨이 지역들과 마찬가지로 공항경제권을 개발함으로써 고부가가치형 서비스업과 경소단박형 제조업으로의 고도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해석

3) 동남아시아 경제회랑 발전전략은 메콩지역발전계획의 일환으로 도입되어 아시아개발은행(ADB)가 입안하고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의 GMS 5개국과 중국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동남아시아의 경제회랑 발전전략은 남북경제회랑(North-South Economic Corridor : NSEC), 동서경제회랑(East-West Economic Corridor : EWEC), 남부경제회랑(Southern Economic Corridor : SEC)의 3개 지역으로 구분

[그림 1-5] 하이퐁시 주요 기반 시설



자료(출처): DEEP C 산업단지 홈페이지, 입지 정보(검색일: 2023년 7월 20일)

4. 종합 및 제언

- 글로벌생산네트워크에서 도시는 지역의 고유한 자원과 다국적 기업들의 필요가 전략적으로 결합하여 특유의 발전 유형을 갖게 됨. 특히, 지역 간의 연결성을 갖는 지정학적 이점과 항만·공항 등 대규모 물류 인프라 및 우수한 제조업 역량을 갖춘 도시들은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의 중심도시로 부상할 잠재력을 갖추고 있음
- 이러한 잠재력을 갖춘 도시들 중에서 실제로 세계경제-관문도시-경제희망으로 구성된 글로벌 게이트웨이 지역으로 도약하는 사례는 많지 않음. 글로벌게이트웨이로서 세계의 중심 역할을 하는 대표적 발전 사례는 뉴욕이며, 발전의 성숙 단계에 이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과 벨기에 안트베르펜, 인천과 같이 도약 단계에 이른 말레이시아 페낭, 그리고 신흥 발전 단계에 있는 베트남 하이퐁 등이 유사한 경로에 따라 발전
- 인천은 1990년대까지 서울의 위성도시이자 생산거점으로서 역할을 해왔으나, 2000년대 초반 국제공항의 개항과 경제자유구역의 조성 시작 이래로 국내 수도권보다는 세계 경제와의 연결성이 강화. 즉, 인천은 공항만 물류 인프라와 산업지구를 통하여 세계 경제와 배후지역을 연결하여 무역과 투자의 중심으로 부상하는 전형적인 글로벌게이트웨이 발전 경로를 취하고 있음

-
- 인천은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확산으로 인하여 아시아에서 새롭게 부상한 관문도시 중 하나라고 판단됨. 따라서 세계경제-관문도시-경제회랑의 구조를 통하여 인천의 경제적 발전 경로를 해석하고 전망하는 논의를 수행함으로써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에서 도시 발전에 대한 이론과 정책에 기여할 수 있음
 - 그러나 공항, 항만, 산업단지, 경제특구 등의 물리적 특성을 갖추고 있다고 해서 모든 도시가 글로벌게이트웨이 발전 전략에 성공하는 것은 아님. 전술한 바와 같이, 물류시스템의 선진화, 외국인투자에 유리한 제도, 높은 수준의 생산자서비스 공급 등의 비즈니스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이러한 기반을 토대로 기술확산, 인재양성, 연구개발의 3요소가 어우러지는 산업생태계가 발전해야 함

인천시 Sea&Air 복합운송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강동준 교통물류연구부 연구위원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중국의 동북부지역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인천은 인천항과 인천국제공항이 동시에 입지함과 동시에 이를 연계한 Sea&Air 복합운송체계를 구축하여 해운과 항공기능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우리나라 Sea&Air 환적화물은 전체 화물의 약 99%가 중국에서 출발하여 인천항, 평택항, 군산항 등을 통해 인천공항에 반입된 후 제3국가로 수출되고 있음.
- 과거 10년간 중국발 Sea&Air 환적 물동량은 평균 7.8%씩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이후 그 물동량이 급증함에 따라 운송시간 단축 및 물류비용 절감 등 물류환경을 개선해 인천시 물동량 증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Sea&Air 복합운송 발전 전략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인천시 만이 확보하고 있는 국제물류 인프라인 공항만을 활용해 추가적인 물동량을 확보할 수 있는 Sea&Air 복합운송의 현황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고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음.

2. 인천지역 Sea&Air 복합운송의 현황 및 여건 분석

- Sea&Air 복합운송은 해상운송과 항공운송을 결합한 운송방식으로 각 운송의 단점을 줄이고 장점을 강화한 방식임.
- 통상적으로 해상운송은 저가의 대량수송이 가능하나 수송시간이 길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고, 항공운송은 신속하게 소량화물을 수송할 수 있으나 수송비용이 매우 높은 특성이 있음.
- 국내 Sea&Air 복합운송 처리물동량은 2004년 39,783톤에서 연평균 2.6%p 증가하여 2021년 기준 61,179톤을 기록함.

- 코로나19 발병 직후인 2020년의 경우 전년대비 24.5%의 높은 증가율을 보임.
- 국내 반입 후 이동경로를 살펴보면 인천항, 평택항, 군산항 등으로 주로 경유하여 모두 인천공항을 통해 미국, 유럽, 일본 등으로 운송된 것으로 나타남.
- Sea&Air 복합운송 시작된 2004년 이래 인천항은 가장 많은 Sea&Air 화물을 처리하고 있으며 2021년 기준 인천항은 국내 타항만 대비 점유율 41.2%로 높은 실적을 기록중이나 평택항(27.5%), 군산항(30.8%)의 성장률이 가파르게 상승중인 것으로 분석됨.
- 출발지 국가별로는 중국이 약 99%의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Sea&Air 복합운송에 있어 중국은 절대적인 위치에 있으며 러시아, 일본 등의 수요 역시 꾸준히 지속되고 있음.
- 중국의 항만별 Sea&Air 복합운송 물동량을 분석한 결과, 칭다오, 상하이, 웨이하이, 다롄, 옌타이, 단둥 등 북중국 항만이 주를 이루고 있음.
- 해공복합운송의 도착지는 2021년 기준 미국이 전체 국가 중 약 60.4%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항 Sea&Air 물동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코로나19 발병으로 2021년에는 중국에서 생산하는 방역용품, 전자담배 등이 항공편을 이용하여 미국으로 다량 운송됨에 따라 높아진 것으로 보임.
- 인천항과 인천국제공항을 경유하는 중국발 해공복합운송 화물은 공장출발-육상운송-통관-청도항 선적-해상운송-청도항 출항-해상운송-인천항하역-세관신고 및 검사-육상운송-인천공항터미널 도착-세관신고 및 검사-항공기 선적의 화물운송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4. Sea&Air 복합운송 여건 및 활성화 요인 조사

- 인천시 Sea&Air 복합운송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높은 인지 여부(응답률 77.6%)에 비해 화주와 운송업체의 경우 약 70% 내외로 이용 경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됨.
- 미이용 사유는 '해·공 복합운송 서비스 인지 부족'이 제일 많은 응답을 보였으며, 그 뒤 '해·공 복합운송 서비스의 복잡성', '비용적인 메리트 부족' 등의 순으로 나타나 Sea&Air 복합운송 서비스에 대한 홍보활동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Sea&Air 복합운송 서비스 이용 또는 제공하는 경우 발생하는 애로사항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운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뒤 통관과 신뢰성 요인이 높은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됨.

- Sea&Air 복합운송 활성화하기 위한 요인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중요도는 4.13점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만족도는 3.47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
- ‘인천공항발 항공운송 비용에 대한 수준’이 가장 높은 중요도 점수를 기록하였으며, 만족도는 ‘중국항과 인천항 간의 해상운송서비스의 정시성’ 요인으로 나타남.
- ‘중국항과 인천항 간의 해상운송서비스의 정시성’은 중요도 순위도 두 번째로 나타났는데, 이는 Sea&Air 복합운송이 주로 카페리를 이용하여 국내로 유입되고 있으며, 카페리선의 정시성이 높은 만족도를 주는 것으로 분석됨.
- 시간과 비용 관련 요인들은 높은 중요도와 만족도로 유지관리영역에 해당하며, 소프트웨어 인프라와 인센티브에 대한 요인의 경우 중요도와 만족도 모두 낮은 개선대상영역에 위치하는 것으로 분석됨.
- 중점개선영역에는 하드웨어 인프라 요인이 대부분 해당하였으며, ‘중국발 해공복합운송에 대한 화주 인식’ 요인이 높은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아 향후 화주들을 대상으로 Sea&Air 복합운송 관련 홍보 및 마케팅 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으나 만족도가 높은 과잉투자영역에는 소프트웨어 인프라에서 화물기와 선박의 증편 관련 내용과 CIQ 서비스의 요인들이 위치하고 있음. 이는 인천공항의 네트워크와 통관 등의 CIQ 서비스가 우수한 영향으로 보임.

5. 인천시 Sea&Air 복합운송 활성화 방안

- 글로벌 물류도시를 표방하는 인천시는 기존 해운 및 항공 물동량을 처리하는 것과 동시에 Sea&Air 복합운송을 통한 신규 물동량을 창출하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항만과 공항에서 처리하는 물동량 뿐 아니라 두 인프라를 활용해 환적화물 증대를 통한 신규 물동량 창출 및 그와 연관된 산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됨.
- 전문적인 Sea&Air 복합운송 물류 전반에 걸친 시간과 비용 그리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조건이 선결되어야 하기에 상기 조건에 대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개발 및 지원방안이 기본방향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음.
- 또한 Sea&Air 복합운송 체계를 이루는 주요 사업참여자는 화물을 공급하는 화주, 그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설계, 계획 및 수행을 담당하는 포워더, 실제 운송을 담당하는 운송업체와

더불어 항만과 공항에서 화물을 처리하는 콘솔사 및 공항만 당국이 있으며 이들의 의견반영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이 필요함.

- 화주의 경우 우리나라 Sea&Air 복합운송 물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발 화물을 유치할 수 있는 중국 유통업체의 국내 파트너사로 파악됨.
- 향후 인천지역의 Sea&Air 복합운송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상기 주요 주체들의 의견을 반영해 인프라 조성 및 구축, 인센티브 대상 다각화, 제도적 개선방안, 비용 측면의 개선방안, 홍보 및 마케팅 확대, 지원 체계 확립 등 다각도의 지원정책 개발 및 실행이 필요함.

[그림 1] 인천시 Sea&Air 복합운송 활성화 방안의 기본방향



대만 발전모델의 재편과 신성장 연구

■ 김수한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1. 연구개요

- 이 연구는 최근 새롭게 평가받고 있는 대만의 글로벌 경쟁력에 주목, 대만의 경제 성장을 가져온 내부적 요인 무엇인지를 탐구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음
- 구체적으로 전후 대만의 고도성장을 가져왔던 국가 주도의 발전양식이 어떻게 변화하고 지속되었는지, 특히 대만 발전양식의 유산이 최근 신산업 발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고찰하고 인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이를 위하여 ①대만 국가발전의 흐름 ②대만 경제·산업의 발전 양상 ③대만 반도체 산업의 발전 현황을 조사하고 그 특징을 살펴봄

2. 대만 발전모델의 변화와 지속

1) 발전양식의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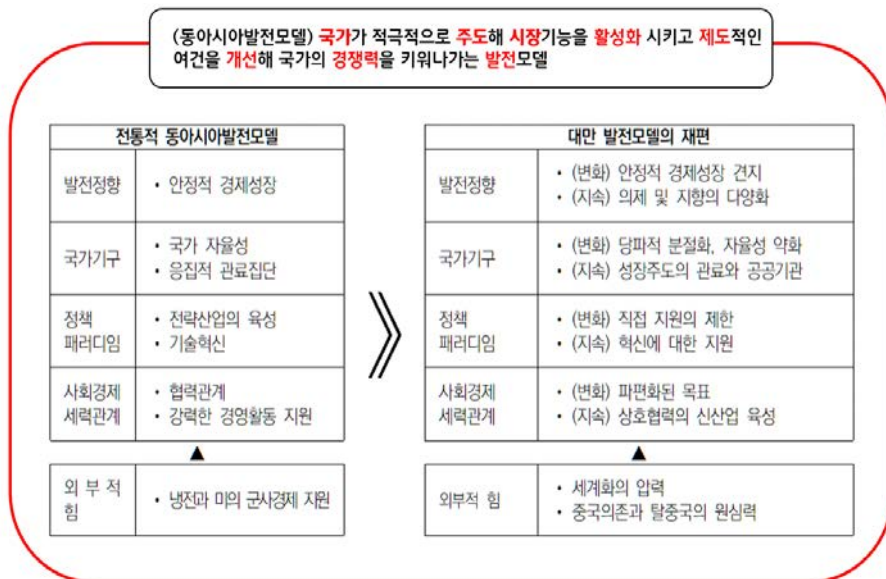
- 동아시아 발전국가 모델은 전후 일본, 한국, 대만 등 빠른 성장을 구가한 동아시아 지역의 경험을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론적 틀임
 - 동아시아 발전국가 모델은 발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가이념과 강한 국가, 국가의 경제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유능하고 사회로부터 자율성을 갖는 응집된 관료, 협력적인 국가-기업 관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 국공내전에서 패배한 국민당 정부는 대만으로 정부를 이전한 이후, 국민당 일당의 권위주의 통치를 실시함
 - 레닌주의적 당-국가 체제를 운용한 강력한 통치기제를 수립했으며, 대륙 수복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진 이후 경제 발전을 통해 권위주의 통치의 정당성을 유지하고자 했음

- 국민당 정부는 발전지향의 국정 이념을 표방하며 정부와 기관 등 선도기구를 통해 관련 국가 전략 및 산업정책을 입안하여 실시함. 또한 협력적인 국가-사회관계를 통해 기업과 사회의 협력·지지 그리고 순응을 이끌어 냄

2) 발전양식의 변화와 유산

- 1980년대 미중 국교 정상화와 중국의 개혁개방, 그리고 신자유주의적 국제 질서의 대두 등은 대만 발전국가에 큰 도전을 가함. 특히 밑으로부터의 민주화 요구는 대만 발전 양식의 근간을 이루고 있던 국가통치의 응집력을 크게 훼손함
-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고유의 역사와 맥락에서 만들어진 제도 및 제도의 배열은 안정성을 주요 특징으로 하며, 그 변화의 궤적은 기본적으로 경로의존적 특징을 보인다는 점임
- 전쟁·재해·질병 등의 충격은 강하게 맞물려 있는 제도적 배열을 일순간에 해체하고 새로운 발전양식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지만, 특정한 제도적 유산은 이후의 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주게됨
- 대만 발전국가의 지속과 유산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우선 탈냉전의 국제환경에도 불구하고 분단 체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대만은 끊임없이 중국으로부터 주권을 위협받고 있음. 이 같은 대만 특유의 안보환경 지속은 국민당 또는 민진당 등 집권한 모든 정치 세력으로 하여금 국가경쟁력 강화와 이를 뒷받침할 경제 발전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삼도록 하고 있음
 - 이 같은 발전 이념하에서 대만은 정부 선도기구 및 산업정책을 통한 글로벌경쟁력을 갖춘 산업의 육성이라는 발전전략 역시 지속하고 있음.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한 국가-사회 협력이라는 관행 역시도 큰 흐름이 유지되고 있음
- 동아시아 발전모델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주도해 시장기능을 활성화하고 제도적인 여건을 개선해 국가의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발전모델”이라고 정의했을 때, 대만 국가는 변화하는 여건에 적응하며 자신의 역할 및 개입의 방식을 조정하면서, 신산업 영역을 중심으로 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여전히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그림 1] 대만 발전모델 구성 요소의 변화와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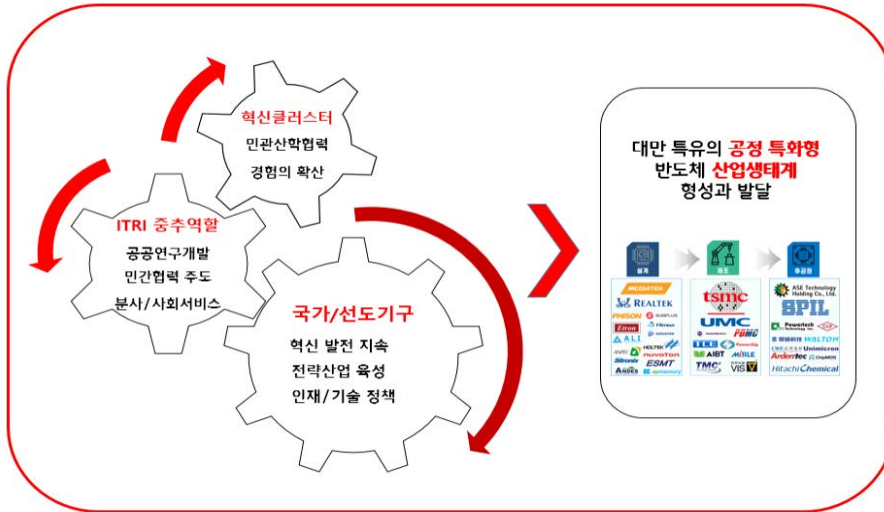


자료(출처): T.J. Pempel(2020:26) 및 임혜란·조한나(2022:49)의 틀 참고하여 저자 작성

3. 대만 반도체산업의 성장을 파악하는 이해의 틀

- 1970년대 말 변화하는 국제환경에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만 정치인과 관료들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선도하기 위해 ITRI를 설립하고 신주산업단지를 조성함
- 대만의 이중 기업구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민간 중소기업이 장기 비전과 막대한 재정투입이 필요한 신산업을 선도하는 것은 불가능함. 중소기업이 할 수 없는 대규모 연구개발 투자는 국가과학위원회의 지도하에 ITRI 등 국가 기관이 주도하면서 대만 기업에 보급함
- ITRI는 소위 분사 전략을 통해 기술의 상업화 및 역량 있는 신산업 기업 탄생의 요람 역할을 함. 대만 당국은 ITRI라는 선도적 연구기관을 통해 미국 화교 인재를 귀국시키는 등 해외동포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선진 기술 및 자본, 인재 유입에 성공함
- 귀환 화교인 모리스 창 TSMC 창업자는 공정별로 분화된 반도체 생산과정 및 대만 기업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반도체 제조 특화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냄. 이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공정별 특화 대만 반도체 기업 및 협력적 산업생태계 조성으로 이어짐
- 아울러 신주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ITRI와 대학 그리고 기업 간의 협력적 민관산학 연계망의 발달은 대만 반도체 성공을 논하는 데 있어 빠질 수 없는 요소임

[그림 2] 대만 발전모델과 반도체 산업의 성장



자료(출처): 저자 작성

- 이상과 같이 반도체를 대표적인 사례로 하는 대만 신산업 성장의 초기 단계에는 발전지향의 이념, 사회로부터 자율성을 갖는 관료, 배태된 협력적 국가-사회관계 등 동아시아 발전국가 모델에서 공통으로 발견되는 요인이 자리하고 있음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0년대 들어 민선에 의한 정권의 교체, 다양한 사회적 이해와 요구 반영에 따른 발전 방향의 파편화, 사회역량으로부터 자율성을 유지할 수 없는 정치권력과 관료집단 등 대만의 발전국가 양식은 더 이상 온전히 지속하기가 어려움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가 발전을 위한 신산업의 육성, ITRI의 선도 기능 및 역할의 지속, 민관산학 협력의 산업클러스터 확대 발전 등 대만 발전국가 양식이 일정 정도 지속되고 있으며 그 유산은 대만 반도체 발전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이해의 틀을 제공하고 있음

3. 정책 제언

- 대만 발전모델 재편과 반도체 산업 성장에 대한 본문의 분석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다음의 4가지 시사점을 도출하고, ①대만 및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다각적 모니터링 ②대만 신산업클러스터 육성 경험 공유 및 협력 ③인천-대만 신주시 도시외교 추진 ④세계 한인 과학기술인·경제인 네트워크 선제적 조성 등을 제안함

[그림 3] 대만 발전모델 재편·신산업 성장 관련 시사점 및 정책 제언



1) 대만 반도체 산업에 대한 다각적 모니터링

- 글로벌 최대 파운드리 업체 TSMC를 중심으로 한 대만의 반도체 공정별 특화 기업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었으며 글로벌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대만 반도체 산업 경쟁력과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 정부 능력으로 인해 대만이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마련했다는 긍정적 평가와 더불어 반도체는 단일 업종에 대한 고도 집중 그리고 탈중국을 위한 전략산업 육성이 대중국 반도체 교역 심화를 가져온 역설적 상황에 대한 우려 역시 동시에 존재함
- 특히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첨단 반도체 기술 및 생산에 집중되기 시작하면서, 국제 정치경제에 깊숙이 연계된 대만 반도체 산업 향방을 탐색하는 다양한 논의가 일고 있음
- 세계적인 반도체 클러스터로의 도약을 모색하는 인천의 관점에서 미중 경쟁 및 중국-대만의 경험 등에 대한 보다 종합적인 탐색이 필요함

- 이를 통해 정치·경제 측면에서 인천이 미국, 중국, 대만, 일본 등을 잇는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의 연결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어필하여 글로벌기업의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함
- 항공·해상 물류의 중심지이자 제조업 기반(인천에는 1,264개의 반도체 관련 기업 입지)을 갖춘 인천은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음. 특히 미국의 압박으로 인해 중국대륙 외에서 새로운 작업장을 모색하는 중국 또는 중국 투자 다국적기업에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음

2) 대만 산업클러스터 육성 경험 공유 및 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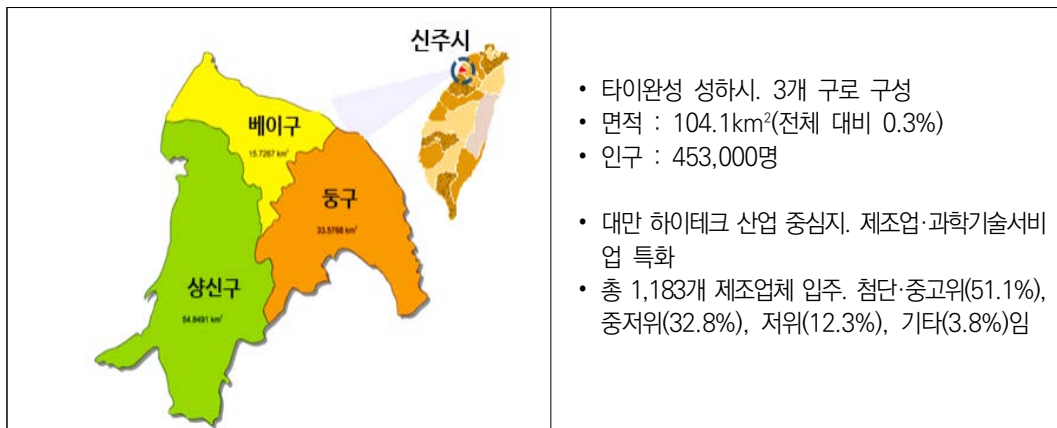
- 미국의 실리콘 밸리를 벤치마킹한 대만의 신주과학단지는 아시아 최대의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성장함. 공공 연구개발의 중추이자 사회서비스를 통한 성과의 확산, 민관산학 협력적 네트워크, 그리고 적극적 분사 전략을 통한 신산업생태계 조성 등 성과를 지속적으로 일궈내고 있음
- 이 같은 신주과학단지의 성과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바이오, 친환경 에너지, AI 등 미래 첨단분야로 이어지고 있음. 또한 남부 및 중부에 지역별 산업특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하여 성과의 지속적 확산에 주력하고 있음
- ITRI 및 신주과학단지 등을 중심으로 한 대만 신산업클러스터 육성 경험은 인천의 신성장 산업클러스터 정책에 참고 자료로서 의미가 있음
- 미국 등 서구가 아닌 우리와 제도·문화적 유사성이 상대적으로 많은 대만에서 시행된 선행 사례는 인천에 보다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임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및 대학, 연구기관과 매칭되는 대만 산업클러스터 기관을 탐색하여 인적·정보 교류를 실시하고 상호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포럼 등의 플랫폼 구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3) 인천-대만 신주 도시외교 추진

- 도시 간 자매·우호 결연은 교류의 체계화와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도시 외교의 중요한 기제임
- 대만 신산업의 요람인 신주시와의 선제적인 결연 추진을 통해 인천-대만 신산업 협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신주와의 도시외교를 통해 IFEZ 및 연구기관, 대학 등 간의 다채널 교류협력을 활성화하는 한편 인천상공회의소와 대만 신주의 공업회, 신주공상발전투자촉진회 등 민간단체 간의 협력 채널 조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그림 4] 대만 신주시 개요



자료(출처): 신주시 홈페이지 참고하여 작성

4) 세계 한인 과학기술인·경제인 네트워크 선제적 조성

- 반도체 산업 태동기에 대만 당국이 재미 화교 연구자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보의 취득, 그리고 글로벌 반도체 동향과 대만 경제 현황에 착목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한 귀환 화교인 모리스 창 TSMC 창립자의 사례는 재외동포청을 유치한 인천에 상당히 의미 있는 시사점을 줌
- 과거 전쟁·재난·빈곤 등으로 인한 전통적인 해외 이주의 경우 이산과 단절을 의미했지만, 세계화 시대의 이주는 연결과 순환을 가져올 수 있음
- 즉 해외 동포를 일종의 결절점으로 하여 모국과 거주국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한 사람·정보·자본의 유동이 가능함. 글로벌 도시를 지향하는 인천이 재외동포청을 유치한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음
- 현재 인천시는 해외동포 750만과 인천 시민 300만을 연결하는 글로벌 도시를 비전으로 하는 1,000만 도시 인천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음. 이 구상의 전략과제 가운데 하나로 한상 비즈니스 허브 육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세부 과제로는 한상 투자활동 지원, 주요 한인단체 본부 유치, 한인행사 인천 유치, 한상행사 참여 확대 등이 담겨 있음

-
- 대만 반도체 산업 태동기에 해외 화교 네트워크를 활용한 사례를 참고하여, “세계 한인 고급두뇌 네트워킹 프로젝트” 등 보다 실용적이며 지역 신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세계 각지의 한인 고급두뇌와 네트워킹하고 이들에게 인천의 산업경제 강점 및 기회 요인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한편 인천에서 이들이 자신들의 전문지식과 비즈니스 경험을 펼칠 수 있도록 창업자금·인큐베이팅 등 인천의 정책지원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세계 한인 고급두뇌를 네트워킹하는 첫걸음으로서 세계 과학기술인·경제인 대회를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창설 또는 유치를 제안함

인천시 전략산업의 인적자원 육성방안 연구

■ 민규량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1. 연구개요

1) 연구의 필요성

- 인천시의 미래 전략산업 성장을 위해 인적자본 확보는 가장 필수적인 과제이며 이러한 현황을 파악하고 육성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 그러나 2016년 기준 인천시의 역외 인재 유인지수는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10위이며 역내 인재 양성지수도 6위 수준으로¹⁾ 집계되어 인재 육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주요 전략산업의 인적자본 현황과 관련 정책은 아직 체계적인 분석 등이 이뤄진 적이 없다는 점에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됨.
- 본 연구는 인천시의 주요 3개 전략산업의 인적자본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적자원을 육성하는 방안을 제시함.

2)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인천시의 주요 전략산업 인적자원의 현황을 파악함. 구체적으로 바이오산업, 반도체 산업, 모빌리티 산업의 인적자본 현황을 파악하고,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인적자원의 현황을 제시함.
- 인천시의 인적자원 육성 관련 정책을 분석함으로써 현재의 성과와 한계를 파악함.
-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집하고 분석함으로써, 인천시의 인적자원 현황에 대한 실질적인 인식과 인적자원 육성 및 활용방안에 대한 의견을 도출함.
- 도출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인천시의 전략산업별 인적자원을 육성하고 활용하는 데 필요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함.

1) 인재확보역량의 지역분포와 정책적 시사점, 산업연구원(허문구, 2016).

2. 지역별 인적자원 육성 정책 현황

1) 인천시 정책 현황

- 바이오산업을 제외한 부분에서는 단기프로그램 위주의 교육에 그치며, 국가사업과의 연계가 부족한 상황임. 이러한 문제는 전략산업과 연계한 인적자원 양성프로그램을 총괄 및 기획할 부서가 부재하기 때문으로 보임.

[표 1] 인천시 정책 현황과 시사점

		정책현황	시사점
인 천 시	전략산업 인적자원 양성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이오산업 관련 인력양성은 NIBRT 프로그램을 운영 중 • 일부 바이오 반도체, 모빌리티 관련 교육은 인천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지역 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에서 진행 중이나 대상 규모나 교육 범위가 좁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이오를 제외한 전략산업 인력양성 프로그램은 단기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어 중장기적인 프로그램 구성이 필요 • 국가사업과의 연계가 부족함 • 전략산업과 연계한 인적자원 양성프로그램을 총괄 기획하는 부서가 부재
	기타 인적자원 양성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중심의 취업 연계프로그램 형식의 인재 양성 교육이 주를 이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수요계층을 포괄할 수 있는 실무 경험 중심의 직무능력 전문화 교육이 필요

2) 타 지자체 정책 현황

- 전국적으로 지자체들은 전략산업 분야의 인적자원 양성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교육 및 양성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이러한 타 지자체의 인적자원 정책들은 인천시의 인적자원 정책 수립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함.
 - 전략산업 관련 인적자원 양성을 위해서는 인천시 역시 중장기적인 인적자원 양성 계획의 수립이 필요함.
 - 인천시 역시 지자체-대학 간 협력 기반의 플랫폼 기반 전문인력 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해야 하며, 기업 중심 인력양성 지원 프로그램의 기획이 필요함.
 - 또한, 국가사업과 연계하여 대학-지자체가 연계되어 전략산업 관련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유치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함.
 - 중장기적으로 산업전환, ESG 등에 대비할 수 있는 인력양성 프로그램의 도입 및 준비도 필요하다는 것을 타 지자체의 경험을 통해 인지할 수 있음.

[표 2] 타 지자체 정책 현황과 인천시에 대한 시사점

		정책 현황	시사점
타 시 도	전략산업 인적자원 양성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시는 바이오허브, AI 컬리지, 바이오 혁신 인재 양성사업, G밸리 IoT 아카데미 등 전략산업 분야 전문가 양성프로그램을 국가사업과 연계하여 운영 경기도는 바이오, 반도체, 4차 산업,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중장기적 양성 계획을 수립하고 프로그램도 운영 부산시는 해양 바이오, 전력반도체, 화장품, 조선 자동차 등 특화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 운영 대구·경북은 지자체- 대학 협력 기반의 미래차융합전공을 신설하여 운영 대전시 및 세종시는 국가사업과 연계하여 충청권 산업 및 대학 연계 인재 양성프로그램 시행 제주는 기업과 연계하여 전략산업 관련 재직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 지원의 양방향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략산업 관련 인적자원 양성을 위해서는 중장기 인적자원 양성 계획 등의 수립이 필요 단기의 실무 중심 과정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전문가 양성과정이 병행되어 진행될 필요가 있음. 지자체-대학 간 협력 기반의 플랫폼 기반 전문인력 교육 프로그램 필요 기업 중심 인력양성 지원 프로그램 기획 필요 국가사업과 연계하여 대학-지자체가 연계되어 전략산업 관련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유치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
	기타 인적자원 양성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환경 관련 프로그램과 관련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지자체가 많아지는 추세 위기산업 이·전직을 위한 고용 전환 프로그램 및 인력양성 프로그램 확대 숙련 기능인력 양성 전문 교육 프로그램 과정 운영도 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장기적으로 산업전환, ESG 등에 대비할 수 있는 인력양성 프로그램의 도입 및 준비가 필요

3) 중앙정부 정책 현황

- 국가 주요 산업 분야에서 인적자원 양성 정책들을 살펴보면, 바이오, 반도체, 모빌리티, 그리고 첨단분야에 대한 다양한 인력양성 전략들이 현업과 연계되어 추진되고 있음.
- 중앙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 인재양성 추진방안과 함께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원하는 인력 양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반도체 인프라 활용 현장 인력 양성사업,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 산업혁신 인재성장지원(교육훈련)사업, 인공지능 반도체 융합인력양성사업 등 다양한 정책들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됨.
- 미래 자동차 인력양성사업을 통해 미래형 자동차 핵심기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미래형 자동차 사업재편 준비를 위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을 시행할 예정

[표 3] 중앙정부 정책 현황과 시사점

구분	정책 현황	시사점
중앙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이오헬스 산업 인재양성 추진방안 (2020.9, 2023.4) •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산업통상자원부 지원하는 인력양성사업 (진행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시에서도 현장 중심 교육과 전주기 인재양성, 그리고 4차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등을 구현 필요. 또한, 현장 수요에 맞는 맞춤형 인재양성 및 재직자의 역량 강화에 주목 • 바이오의약 및 건강기능식품 GMP 과정, 바이오의약 개발 과정, 화이트 바이오 개발 과정 등 바이오산업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도입, 고급인력 확충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도체 인프라 활용 현장 인력양성사업 (2022.3) •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 (2022.7) • 산업혁신 인재성장 지원(교육훈련)사업 (2023.1.19.) • 인공지능 반도체 융합인력양성사업 (202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시도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재직자 교육과 기업 채용 연계 인재양성에 집중해야 함. 기업과 대학 간 협력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필드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함. • 인천시는 중앙정부가 강조하는 규제혁신 및 관련 대학 정원의 확대에 주목해야 함. 이를 위해 지역 내 대학들과 협력하여 반도체 관련학과의 정원을 확대하고, 반도체 산업에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인천시는 산업 분야별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기업 수요를 반영한 산학 프로젝트 발굴 및 운영 등을 통해 인력양성을 추진해야 함. • 인천시는 인공지능 반도체 관련 특화커리큘럼을 개발하고, 학제 간 교류 활성화, 현장 중심 교육 강화를 목표로 하는 융합 인력양성에 집중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 자동차 인력양성사업 계획 발표 • 미래형 자동차 핵심기술 (자율주행, 커넥티드, SW) 전문인력 양성 • 미래형 자동차 사업 재편 준비를 위한 대응 역량 강화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 자동차 인력양성에 집중하고 특히 SW 융합인력 양성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현장 중심의 교육을 통해 실무능력이 탁월한 인재를 양성해야 함. • 인천시에서도 이러한 핵심기술에 대한 전문 인력양성에 집중하고, 기업들과 협력하여 산학협력 프로그램 구축이 필요 • 미래형 자동차산업으로 전환을 위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을 시행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 • 첨단분야 혁신융합 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 분야(항공·우주·미래 모빌리티, 바이오·헬스, 첨단부품·소재, 디지털, 환경·에너지) 인재 양성 전략 수립이 필요 • 첨단분야(인공지능, 빅데이터, 차세대반도체, 미래 자동차, 바이오헬스, 실감미디어, 지능형 로봇, 에너지신산업, 항공·드론, 반도체 소·부·장, 이차전지, 차세대통신, 에코업)를 고려하여 인천시 내의 대학과 협력이 필요함.

3. 전략산업별 인적자원 현황

- 인천시의 바이오산업은 전문분야(예) 자연계열 등)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직무별 인력양성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함.
- 반도체 산업의 경우, 조립 관련 직종에서는 고졸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고 기술자 및 연구원 등의 직종에서는 전문성을 요구하는 양극화 현상에 대응이 필요함.
- 모빌리티 산업의 경우, 조립 관련 직종에서는 고졸의 학력을 요구하고 기술자 및 연구원 등에서는 전문성을 요구하는 양극화에 대응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함.

[표 4] 산업별 인적자원 현황 및 시사점

산업구분	인력현황	부족인력	시사점
바이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에서 보유인력 수준은 많은 편(9.8%) • 세부 산업별 학력 및 전공 격차가 매우 큼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의 경우 대졸이상 및 석박사 비율이 매우 높고 공학전공자 비율도 높음 • 자연계 전공자는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졸이상 인력 부족 • 특히 생명과학 연구원, 화학공학 기술자 등 연구원 직종 인력에서 석사 이상의 고학력 인적자원 부족 현상 관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학력 보유 인력 확충 필요 • 전문분야 강화 필요(예)자연계열 등) • 직무별 인력양성 전략 수립 필요
반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에서 보유인력 수준이 낮은 편(4.8%) • 반도체 제조업의 고졸인력이 전국평균보다 매우 높음(71.9%) • 비이공계 비율이 전국평균보다 낮고 공학계 비율은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전자 부품 및 제품 조립원, 전자 부품 및 제품 제조 기계 조직원 직종 등에서 고졸이상의 학력 요구가 높음 • 전자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은 대졸 이상 학력을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립인력은 고졸 학력의 단순 노무 인력이 부족하고 기술자 및 연구원은 학사 이상의 인적자원이 부족한 양극화 현상이 발생 • 직종별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필요
모빌리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에서 보유인력 수준이 중하위 수준 • 자동차, 전자, 철강에 비해 소프트웨어, IT비즈니스의 집적도가 낮아 미래모빌리티 산업 인력이 없는 상황 • 모빌리티 분야에서 자율주행, 인포테인먼트 등에서 전국 대비 석박사 인력이 부족한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부품조립원과 금속 공작기계 조직원 직종의 경우 고졸 학력 수요가 큼 • 전자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로봇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기계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등은 학사이상 또는 석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립 관련 직종에서는 고졸의 학력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며 기술자 및 연구원 등의 직종에서는 전문성을 요구하는 등 양극화 현상이 발생 • 직종별 인력 양성을 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

4. 인적자원 관련 설문조사

1) 전문가 설문조사 요약

- 설문 문항은 크게 전략산업별 인적지원에 대한 인식, 인적자원 교육 및 훈련의 기대 효과,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의 세부사항, 향후 인천시 지원 방향, 적정 분담 비율 등으로 구성되며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표 5]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요약

설문 문항	주요 설문 결과		
전략산업별 인적지원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대비 인천시의 인적자원 수준은 매우 부족한 수준 • 전략산업별로 특히 반도체, 모빌리티 산업 분야의 인력 부족 		
전략산업 인적지원 교육 및 훈련의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 산업 분야의 발전 및 산업의 다변화, 지속가능한 성장 발전 동력 확보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중심의 학위프로그램 운영 필요성에 대한 공감도가 높음 • 실무 중심 훈련 프로그램은 전반적으로 필요하다는 인식 • 기업과 교육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의 중요성이 강조 		
인천시 정책 지원 방향	단기	중기	장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필요 인력수요 파악 • 학과 리뉴얼 지원 사업 • 산학연계를 통한 현장 실습 중심의 실무형 인재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전환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지역 대학의 중점 특성화 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 과정 개발 • 주력산업 분야의 학위 프로그램 운영 • 교육인프라 구축이 어려운 경우 실무기관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내 인적자원 양성 및 유지 관련 종합적 DB 구축 필요
지원 프로그램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산업 분야 기업 중심의 구직자 훈련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 		
적정분담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산업 인력양성에 대한 재정 부담은 대체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맡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 		
향후 인천시 정책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기관은 전략산업에 필요한 실질적인 인력을 맞춤형으로 육성하고, 고차원적이고 원리적인 교육을 통해 장기적인 고급인력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 • 인천시는 전략산업과 인력육성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바탕으로,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인력 육성전략을 구축하며, 다양한 계층의 교육 수요자를 지원하는 종합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 • 기업은 고급인력 유치를 위해 독자적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이 필요 		

2) 기업 현황 설문조사 요약

- 설문 문항은 크게 인적자원 부족 수준, 인적자원 부족 원인, 필요 지원 방안으로 구성되며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표 6] 일반 기업 현황 설문조사 결과 요약

	설문 문항	주요 설문결과 요약
기업 현 황	인적자원 부족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산업별로 필요 인력 분야가 다르며, 특히 기술·연구개발과 영업·마케팅 분야에서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
	인적자원 부족 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산업에서 필요한 전문인력을 유치하거나 양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기업의 입지에 대한 고려 요인 중 하나임
	필요 지원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인력 부족 문제 해결 및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특히 취업자 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 요구가 높음

5. 인적자원 육성방안 및 정책제언

1) 전략산업 분야별 인적자원 육성전략

- 바이오산업, 반도체산업, 모빌리티 산업별 인적자원 육성전략은 다음과 같이 제시함.

[표 7] 전략산업 분야별 인적자원 육성전략

산업	인적자원 육성전략
바이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학력 인력의 확충, 전문분야 강화, 직무별 인력양성 전략 수립, 기업과의 협력 강화 등의 전략이 필요 • 대졸 이상의 고학력 인력 확충이 필요 • 자연계열을 포함하는 전문분야 인적자원 유치를 위한 프로그램 강화 • 직무별로 인력양성 전략 수립 필요
반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기업 수요에 맞는 재직자 교육 및 인재 양성을 강화하며, 미래 산업 동향을 반영한 특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 • 인천시는 양극화 되어있는 인력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또는 제공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 • 고등학교 및 대학과 협력하여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재직자 교육 및 기업 채용 연계 인재양성 강화 • 인공지능 반도체 관련 특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모빌리티	<ul style="list-style-type: none"> □職種별 인력 요구를 충족시키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현장에서 요구하는 실질적인 능력을 갖춘 인력을 양성이 필요 • 인천시는 고졸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조립 관련 직종과, 전문성을 요구하는 연구원 및 기술자 직종 모두를 충족시키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제공할 필요가 있음. •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재직자 교육 및 기업 채용 연계 인재양성 강화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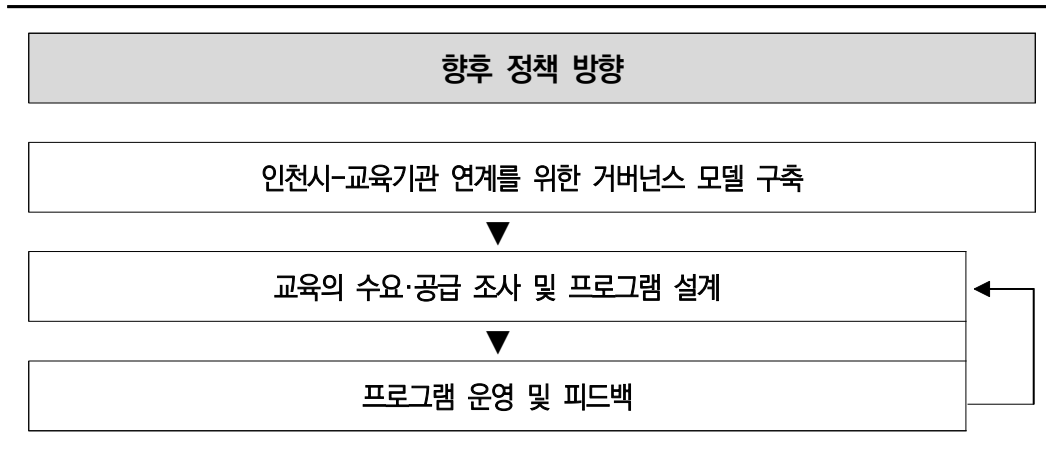
2) 인천시의 역할 및 과제

- 인적자원 육성 관리 조직을 구축하여 중장기 전략산업 인력 양성 계획 수립, 교육기관 및 기업과 협력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이 필요
 - 인적자원 육성 관리 조직 구축이 필요
 - 중장기 전략산업 인력양성 계획 수립 및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 국가사업과 연계한 지역 맞춤형 인재양성
 - 친환경 및 ESG 관련 인력 양성프로그램 도입
 - 위기산업 이·전직자를 위한 고용전환 프로그램 확대

3) 인적자원 육성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

- 1단계: 인적자원 육성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 2단계: 거버넌스 구조를 토대로 운영 가능한 인적자원 육성 프로그램 기획
- 3단계: 프로그램 운영 및 피드백

[표 8] 인적자원 육성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



인천시의 글로벌 투자 유치 현황 및 활성화 방안

■ 윤석진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1. 지역투자 이론과 투자유치정책 접근방법

- 글로벌투자 또는 외국인직접투자는 물리적인 국경을 넘어 자본·기술·인력이 해외 지역의 자원과 직접적으로 결합하는 형태의 투자. 지역의 관점에서 외국인투자의 유치는 국내 다른 지역과 직접적 경쟁을 회피하면서 안정적 자본 확보, 생산성 증대, 산업구조조정, 고용창출 등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에 매우 중요한 지역경제 발전 동력이라고 할 수 있음
-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한 지방정부의 정책은 두 가지 접근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음
 - 인센티브기반접근법(incentive-oriented approach): 조세 감면, 보조금·현금 지원, 인허가 규제 완화, 각종 행정 지원 등의 인센티브 제공하는 방식.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고, 지방정부의 재량권은 약하지만, 단기적·즉각적 효과를 발생
 - 지역자원기반접근법(regional asset-oriented approach): 지역이 보유한 시장 규모, 토지·노동, 지원제도, 혁신자원 등의 전략적 자원 요소들을 전반적으로 혹은 선택적으로 개선하는 방식. 지방정부의 재량적 노력으로 실현할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투자 촉진 효과를 발생

2. 외국인투자 지원제도

-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지원제도는 조세감면, 보조금 및 현금 지원, 입지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조세감면: 법인세와 소득세는 유해조세경쟁 문제로 인하여 감면 혜택이 사실상 폐지. 지방세의 경우, 경제자유구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

- 보조금·현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생산시설의 신설 및 증설과 연구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음. 인천광역시의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제13조의2에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현금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내기업의 투자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를 통하여 별도로 보조금과 특별지원금 인센티브 운영
- 입지지원: 입지지원의 대표적인 수단은 국·공유지에 대한 임대 및 임대료 감면이며,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경우에는 투자금액, 고용인원, 수출액, 국내에서의 원부자재 조달 등의 기준에 따라 임대료 감면 수준을 차등화
- 국내 타지역은 최근 2~3년간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도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투자유치 조직을 개편·신설하는 적극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¹⁾ 국내 지역들은 특히 현금지원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투자유치제도를 정비하고 있는데, 서울시와 부산시의 경우와 같이 지역의 전략산업 분야를 명시하고 현금지원의 가용 자원을 집중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3. 지역투자 여건 평가 설문조사

- 글로벌 투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센티브 뿐만 아니라 지역이 국내외 기업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투자 매력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함. 본 연구에서는 지역자원중심접근법의 관점에서 지역의 투자매력도를 시장여건, 사업환경, 혁신자원, 비용요인의 4가지로 범주화하고, 인천지역에 입지한 외국인투자기업들과 글로벌 투자가 집중되는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입지한 기업들이 체감하는 만족도를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함
-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인천지역의 시장여건과 사업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 이상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혁신자원과 비용요인에 대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낮게 평가되었음. 혁신자원 부문에서는 인천지역의 연구개발투자 수준과 산학협력 활성화 정도에 대한 불만족 비율이 높았음. 비용요인 부문에서는 산업용지 공급 이외에 인적자원, 조세감면, 정부지원금 항목이 모두 낮은 수준의 평가를 받음.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인천시는 기업들의 만족도가 낮은 혁신자원 부문과 비용요인 부문에 대한 개선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할 필요가 있음

1) 서울시와 경상남도는 인센티브 제도를 정비하고 투자청을 신설하였고, 부산시는 기업과 외국인 투자 촉진 조례를 대폭 개정하였으며, 경기도는 혁신투자유치2.0 계획 발표

4. 글로벌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 인천지역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인센티브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음. ① 외국기업과 국내기업 간의 차별 없는 경제자유구역 법인세·소득세 감면, ②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제한의 폐지, ③ 현금지원제도 운영에서 핵심전략산업에 대해서는 수도권에서도 비수도권과 동일하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담비율을 적용, ④ 인천시 조례에서 현금지원 프로그램의 구체화
- 지역의 전략적 자원을 확보하고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인천에 대한 투자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음. ①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비즈니스센터 기능 확대를 통한 입주기업 사후관리 강화, ② 혁신자원 확보 기반 구축을 위한 산학연관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③ 인천경제자유구역 거버넌스 및 운영 제도 개선

인천시 연구개발(R&D) 특성 및 역량강화 방안

■ 이정영 경제환경연구부 부연구위원

1.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인천은 바이오, 로봇, 항공, 물류 등 다양한 첨단산업이 발전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지역의 연구개발 투자가 필요
 - 첨단산업은 위험성이 높고 단기에 수익을 창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술혁신을 저하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공공투자가 중요
 - 특히 기초연구와 연구개발 인프라 조성과 같은 대규모 자금 투자가 필요한 사업에서, 지자체는 정부의 지원을 통해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인천시의 연구개발(R&D) 투자현황을 살펴보고, 지역의 연구개발 투자 활성화를 통해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인천은 공공부문보다는 산업부문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활동이 활발하므로, 지자체 차원에서 연구개발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데 투자를 확대해야 할 부분을 살펴보고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2) 연구의 방법

- 주요 지자체별 연구개발 현황 및 특성을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
 - 주요 특·광역시 7개 시도(세종 제외)를 대상으로 연구개발사업 투자현황 및 연구개발 역량을 살펴봄
- 기업혁신조사(KIS)를 활용하여 정부의 지원이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인천지역의 기업을 대상으로 지역 내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함
 - 정부의 자금지원이 기업의 혁신 활동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성향점수매칭으로 분석

2. 인천시 연구개발 현황 및 특성

1) 지역혁신성장과 연구개발 투자

- 혁신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이를 위해서는 연구개발 투자와 인재 양성을 기반으로 한 혁신성장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혁신성장 선순환 구조는 연구개발 투자와 인재 양성을 통해 지역 내 산업의 고도화와 다각화를 촉진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창업 활성화와 지역 내 신규 일자리를 통해 전문 인력이 유입되어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가 성장하는 것을 일컫음
- 과거에는 이러한 기반을 조성하는 데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였으나, 최근에는 지자체가 주도하도록 과학기술 정책이 변화하고 있음
- 이에 인천시도 5년마다 중장기 과학기술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지역의 과학기술 인프라 확충과 인력양성을 통해 혁신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그러나 공공부문의 투자 부족, 연구개발 인력 부족, 연구개발 수행 역량 부족 등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지자체의 대처는 미흡한 상황임

2) 연구개발 현황 및 특성

- 우리나라 총연구개발비는 지난 10년간('12년~'21년) 연평균 7.02% 증가하였으며, 총연구개발비 대비 지역별 비중에서 인천은 서울, 대전 다음으로 큼
 - 인천은 지난 10년간 3%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낮음
 - '21년 GRDP 대비 인천의 연구개발투자비율은 3.30%로 전체 평균(4.92%)보다 낮음
- 인천은 공공부문에서의 연구개발투자가 주요 특·광역시 중에서도 낮은 수준임
 -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비는 10년간 연평균 5.31% 증가하였으나, 인천의 연평균 증가율은 이보다 낮고 투자 규모는 주요 특·광역시 중 6위 수준('21년 기준)
 - 지자체 자체 연구개발비는 5년간('17년~'21년) 연평균 6.18% 증가하였으며, 인천도 14.82%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투자 규모는 매우 작음('21년 기준)
 - 자체 연구개발비 규모는 73억 원으로 주요 특·광역시 중 6위이며, 이는 부산의 1/4 수준임
- 그럼에도 인천은 주요 특·광역시 중에서 연구개발 수행조직 규모는 2위, 연구원 규모는 3위로, 산업계를 중심으로 연구개발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음

- 공공부문에서의 연구개발 지원기관 및 대학의 수는 44개로, 광주(38개), 대구(46개)와 비슷한 수준이며 서울(216개)의 1/5 수준임
- 그럼에도 기업체의 연구개발 조직의 수는 서울 다음으로 많고, 연구원 수는 대전과 비슷한 수준임

3. 인천시 연구개발 투자 확대의 필요성

1)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과 기업의 연구개발 확대

- 정부 지원을 받은 기업의 특성을 살펴보면, 연구개발 인프라를 보유하고 다른 혁신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기업이 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상장기업일수록, 벤처인증을 받은 기업일수록, 연구개발 전담인력을 보유할수록, 수출액이 클수록 정부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
 - 중고/중저기술 제조업보다는 고기술 제조업이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가능성이 높음
- 성향점수매칭 분석 결과에서는,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기업이 자체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연구개발에서의 공공지원사업이 중요함
 - 성향점수매칭 방법을 통해 수혜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혁신 활동 비용 및 연구개발 투자 비용을 비교한 결과, 정부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은 기업이 자체 혁신 활동 비용 및 연구개발 투자 비용도 확대하는 것으로 나타남

2) 기업의 연구개발 수요조사 결과

- 인천의 연구개발 현황 및 정책 수요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기업들은 자금조달과 인력확보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자체의 지원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음
 - 인천 내 연구개발 활동에서의 애로사항으로 '자금확보'와 '인력확보'라고 응답한 업체가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함
 - 이 외에 '원천 및 핵심기술 확보', '정부 과제 선정', '인프라 구축' 등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기업들은 연구개발 활동에서 '자금확보'와 '인력확보', '기술력 확보', '인프라 구축' 등을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으나, 인천 내 연구개발 활동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기업들은 연구개발 사업 지원 기간으로는 '1년~2년 사이', 지원 규모는 '1억 ~ 2억 원 이상'을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나, 현재 인천시는 지원 기간이 최대 1년이고 지원금액은 최대 1억 원이라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음
- 인천 내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는 '자체 기술개발 지원', '금융지원', '공동연구 지원' 순으로 선호가 높음
- 이 외에 '판로개척(마케팅) 지원', '사업화 프로그램' 등 연구개발 활용단계에서의 지원사업에 대한 수요도 높음

4. 정책제언

❖ 지자체의 연구개발 투자 규모 확대 필요

- 국가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정부에서는 비수도권 지역의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므로, 인천시는 자체적인 기금조성을 통해 연구개발 투자 규모를 늘릴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연구개발 지원사업에 대한 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인천의 연구개발 투자 규모는 부산의 1/4 수준
- 현재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해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은 경기와 대전으로, 기금구성 목적 및 운영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음
- 경기는 지역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센터를 조성하기 위해 지자체, 대학, 기업체 간 매칭펀드로 조성하였으며, 대전은 과학기술육성을 위해 국가, 지자체 등 출연금으로 조성됨
- 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금을 조성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향후 운영방안까지 고려해서 계획해야 함

❖ 지역 내 혁신기관 간의 협업을 촉진하기 위한 연구개발 사업 발굴

- 정부는 중소기업이 지역 혁신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개발을 추진하도록 독려하고 있으나, 기업들은 주로 독자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음
- 최근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지역 내 개방형 혁신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해졌으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 내 네트워크를 활용한 다양한 연구개발 사업이 필요함

- 부산은 '산학협력 혁신도시'를 시정 추진 전략으로 두고 산학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산학 엑스포를 개최하여 5년 이내 급성장이 예상되는 산업과 관련된 기업체와 산학연관금융 등 전문가들이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함(김동홍, 22/11/28)
-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 대상 기술교류 및 기술교육 프로그램이나, 중소기업에 필요한 기술을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과 연계하여 사업 기획단계부터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한 산학연의 연결을 강화해야 함
- 산업 간의 연계를 통한 연구개발 협력 활성화를 통해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지역 연구개발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전담 조직 마련

-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혁신기관 간 네트워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이 필요
 - 부산은 협력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전담 조직을 산업정책을 담당하는 조직과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음
- 이는 향후 지역 주도형 과학기술 정책을 수립하고 산업을 육성하는 데 중요함
 - 최근 발표된 정부의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에서는 지자체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과학기술 중장기 계획과 연구개발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정부 주도가 아닌 지역의 능동적인 대처를 요구함
 - 지역 내에서 바이오, 반도체, 미래 차 등 첨단산업이 성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 및 관련 기관들의 연구개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담 기관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

인천시 디지털 신산업 현황과 미래전략

■ 최태림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1. 연구개요

1) 연구 배경

- 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디지털 분야의 기술들은 미래 산업발전의 핵심 자산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해당 기술과 산업의 발전은 지역산업의 도약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주목받고 있음.
- 디지털 전환은 여러 산업과 결합하여 다면적인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으나, 지역 차원에서 해당 분야의 발전양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 및 이해는 부족한 실정임.
- 인천시는 AI Playground 조성, 디지털 인재양성 센터 유치, ICT 융합분야 기업유치 등 관련 산업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 유관 부서를 신설하여 디지털 전환의 기반이 되는 산업육성을 위한 정책적 의지를 보임.
- 최근 인천시의 정보통신 및 과학기술 서비스 분야의 성장이 나타나고 있으나, 기존 수도권 집적지에 비해서 여전히 입지 경쟁력이 열위인 상황.
- 디지털 신산업 분야의 혁신과 성장이 공간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인천시의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됨.

2) 연구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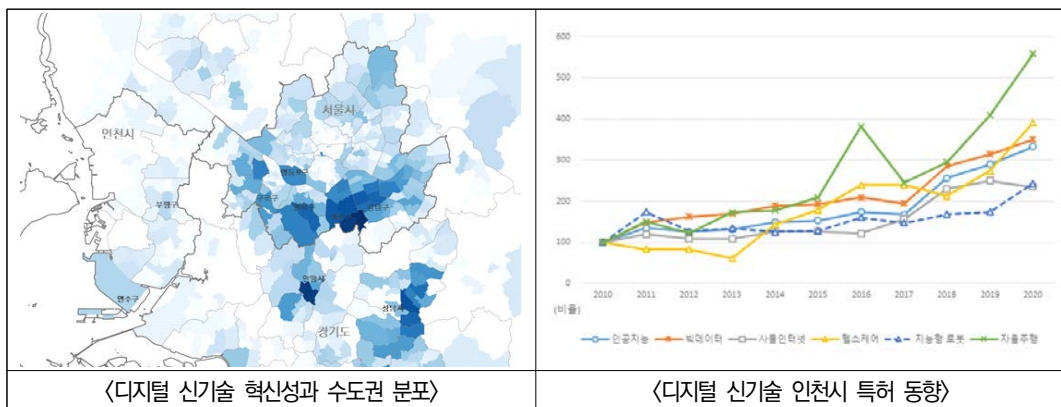
- 디지털 신산업의 최근 산업발전 동향을 검토하고 인천시 디지털 신산업의 실태와 여건을 평가하여 향후 인천시의 디지털 신산업 육성을 위한 발전전략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2. 연구 결과

1) 디지털 신산업 지역현황

- 디지털 신기술을 기반으로한 혁신적인 제품 및 서비스 창출을 위한 국내 기관 및 기업체의 투자활동과 이에 따른 성과는 지속하여 증가하는 추세임.
 - 혁신 활동의 성과물인 특허출원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인공지능(2010년 대비 2019년 약 1,200% 증가)과 자율주행(2010년 대비 2019년 약 650% 증가)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임.
- 디지털 신산업의 혁신 활동은 수도권 지역의 집중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며, 기존의 ICT 산업 집적지와 유사한 공간적인 분포를 나타내고 있음.
 - 디지털 신산업 분야의 특허출원에 참여한 발명가의 공간적인 분포를 살펴보면, 수도권의 비중이 약 85%로 다른 경제사회 지표들에 비해 수도권 비중이 매우 높음.
- 인천시의 디지털 신산업의 투자 및 혁신활동의 전국대비 비중은 수도권의 주요 집적지에 비해 낮은 상황이나, 최근 혁신 활동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대학, 대기업, 공공기관, 중소기업, 창업기업 등 다양한 형태의 주체들이 디지털 신산업의 영역으로 진출.
 -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그리고 지능형 로봇 분야 특허출원 비중이 높으며, 자율주행(2010년 대비 2020년 약 559% 증가)과 디지털 헬스케어(2010년 대비 2020년 약 391% 증가)분야의 성장 추세가 가파름.

[그림 1] 디지털 신기술 산업활동의 공간분포 및 인천시 특허 동향



2) 디지털 신산업 인천시 기업실태

- 디지털 신산업 분야의 인천시 기업체 현황을 살펴보면, 초기 성장단계 기업체들의 비중이 높고 디지털 신기술 분야의 매출 발생 비중이 높지 않은 경향을 보이므로, 전반적으로 시장이 형성되는 단계로 판단됨.
 - 하지만, 제조업체, 기존 정보통신 분야 업체, 그리고 디지털 신기술을 갖춘 창업 업체 등 다양한 분야의 인천시 기업체들이 전략적 중요성을 표하며 디지털 신산업으로 진입하고 있고, 컨셉트 개발, 실증, 실용화 단계의 다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제품 및 서비스 개발에 집중하고 있음.
- 사업 애로사항과 관련해서는 양질의 데이터 확보, 전문인력 구인, 실증기회 확보의 어려움이 제품개발 단계의 주된 애로사항이며, 사업단계에서는 수익 창출과 판로개척이 주된 애로사항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디지털 신산업이 아직 시장형성 단계에 머물러 있는 현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 데이터와 관련한 항목에 있어서는 기존 보유한 데이터의 낮은 품질, 가공의 어려움, 개인정보 법적 문제, 유효한 자료 소재 파악 등의 문제점이 제기됨.

[표 1] 디지털 신산업 사업 영위에서의 애로사항

구분		1순위	2순위	1순위+2순위 가중합
개발 단계	필요한 혹은 가치있는 데이터 확보 어려움	19.8%	2.2%	14.5%
	데이터 저작권 및 소유권 문제	8.8%	6.6%	8.1%
	데이터 및 인공지능 분야 전문인력 부족	15.4%	11.0%	14.1%
	신규 제품·서비스 개발 역량 확보 어려움	7.7%	13.2%	9.3%
	실증기회(POC) 확보 어려움	12.1%	12.1%	12.1%
	사업 협력 기관 발굴 및 협업 어려움	3.3%	8.8%	4.9%
사업 단계	수익모델 창출의 어려움	14.3%	12.1%	13.6%
	성공사례 및 레퍼런스 부족	1.1%	4.4%	2.1%
	제품·서비스 판로 개척 어려움	7.7%	15.4%	10.0%
	투자(자금조달) 확보 어려움	8.8%	12.1%	9.8%
	동종업계 내 경쟁 심화	1.1%	1.1%	1.1%
	해외 판로개척 어려움	0.0%	1.1%	0.3%

- 인천시의 입지 여건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지원, 지역의 상징성, 실증기회, 주거 및 생활환경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되었으며, 이에 비해 전문인력 구인, 출퇴근의 편의성, 고객사 및 협력사 접근성이 낮게 평가됨.
- 디지털 신산업 응답업체의 약 74%가 향후 2년 이내에 이전이나 확장을 위한 투자 의향을 보여 신산업 분야의 성장을 도모하는 적극적인 의지가 나타났으나, 투자 의향 기업체의 약 50%는 인천시 이외의 지역에 대한 투자를 선호.
- 공공부문의 수요창출, 개발중인 제품 및 서비스의 실증기회 제공, 그리고 저렴한 임대공간 제공에 대한 정책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2] 디지털 신산업 기업체의 인천시 입지 여건 평가 및 공공정책 수요



3. 정책 제언

1) 정책방향 논의

(1) 기업 부문

- 인천시 디지털 신산업 분야에서 전문기업 창업, 기존 ICT 기업의 사업 다각화, 그리고 제조업에서의 진출 등 다방면에서 산업활동이 관측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초기 성장단계의 기업체들이 많으며 실제 매출로 이어지는 부분은 제한적인 상황으로 디지털 신산업의 초기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단계로 판단됨.

- 디지털 신산업이 지역의 주요 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적용산업과 신산업간의 교류와 협력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초기 시장형성 단계를 넘어 성숙단계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구체화된 사업모델 성공사례의 확산이 요구됨.

(2) 혁신 부문

- 디지털 신산업의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해서는 양질의 데이터 확보·처리·활용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현재는 필요한 데이터 획득 및 소재 파악 어려움, 확보한 데이터의 낮은 품질, 안전한 데이터 활용 어려움 등의 문제점이 제기됨.
- 민간이 주체가 되어 필요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거래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민간중심의 데이터 구축과 활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

(3) 입지 부문

- 인천시 관내에서는 송도경제자유구역 등을 중심으로 활발한 창업과 개발 활동이 관측되고 있으나, 상당수의 기업체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고려하는 등 입지적인 한계가 확인되고 있음.
- 디지털 신산업에 대한 입지적 취약점은 단편적인 정책지원 사업으로 해소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인천시 디지털 신산업 부문의 입지 경쟁력을 강화하고 집적을 촉진하는 관점에서 패키지 형태의 종합적인 지원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의 인지도 상승을 위한 정책개발이 중요함.

(4) 정책 부문

- 디지털 신산업 분야는 다양한 기술군과 여러 적용 산업군으로 이루어져 있어 인천시의 정책지원이 하나로 통합되어 제공되고 있지는 않으나, 기존의 창업지원, 데이터 활용 지원 등 관련 정책이 제공되어 일정 수준의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음.
- 데이터를 구축·가공·활용하여 혁신적인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정책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성장하고 있는 지역 기업체의 여건에 맞춘 전략 마련이 요구됨.

[표 2] 디지털 신산업의 주요 현황과 정책 방향

영역	주요 현황	정책 방향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기업 분야에서 디지털 신산업 진출 활발: 창업기업, ICT 사업 다각화, 제조업 부문에서의 융합 • 컨셉 개발, 실증, 사업화를 위한 다양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제품 및 서비스의 초기 성장단계 비중이 높은 시장 형성 단계 • 창업기업들이 아직 개별 사업수주를 통해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례들이 많으며, 지속적인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자체 서비스 모델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제조업체는 디지털 신기술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디지털 신산업의 전문기업체는 적용분야의 지식이 부족한 미스매치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과 디지털 신산업 전문기업간의 교류 및 융합(AI+X) 활성화 • 제조업에서 디지털 신산업으로 진출하는 기업체에 대한 전문인력 개발 및 서비스 지원 • 디지털 신산업의 사업모델을 구체화하는 단계에 대한 지원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질의 데이터 확보가 혁신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인공지능 학습모델 개발은 오히려 오픈소스를 활용하여 처리 가능 • 광범위한 산업 및 공공 영역을 대상으로 제품 및 서비스 적용 모델이 개발되고 있음 • 데이터 확보 외에 데이터 가공 및 개인정보 등에 대한 법적 문제 등의 어려움 제기 • 서비스 모델이 실제 현장에서 운영이 가능한 것을 증명하는 것이 제품화에 가장 중요 • 대학 및 공공기관이 혁신의 주체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산업계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이 주체가 되어 데이터 개발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 • 실제 수요에 기반한 실증기회 제공 확대 • 안전하게 데이터를 가공 및 활용하는 여건 조성 • 대학 및 공공부문과의 협력체계 강화
입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신산업은 기존의 ICT산업이 활발한 곳을 중심으로 산업 집적이 강화되는 경향이 있으나, 인천시에도 송도지역 등을 중심으로 신규창업 및 혁신 활동이 증가 • 전문인력 구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으나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인력수급이 개선되었다는 의견도 존재 • 인천시의 입지적 취약점으로 시장정보 확보, 고객사 혹은 협력사의 발굴 및 협업의 어려움 등이 제기됨 • 인천시에 거주하지 않는 인력을 불가피하게 채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입인력의 정주를 지원하는 부분도 필요 • 디지털 신산업에 대한 지역의 인지도 향상을 위한 전반적인 노력이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시의 입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책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 • 디지털 신산업 분야의 인력유치 및 정착 지원 • 관내에 거주하는 전문인력과 기업 매칭 강화 • 디지털 신산업 활성화로 이어지는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전반적인 정책개발 요구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시는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우수하지만 성장단계의 기업체에 대한 부분은 상대적으로 취약 • 디지털 신산업 수요처의 약 33%가 공공부문이므로 스마트시티 등 공공 영역에서의 서비스 개발 및 실증기회 강화 요구 • 창업기업에는 가격과 외부인에게 보여지는 매력적인 임대공간도 중요한 요인이므로 이와 관련한 지원이 필요 • 향후 2년 이내 이전 혹은 투자 계획이 있는 기업체의 약 50%가 인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을 고려함 • 중장기적으로 국내시장을 넘어 글로벌 시장 진출이 요구되므로 관련 기회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장단계의 기업체를 지원하는 정책 강화 • 인천시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공공부문에서의 협업기회 확대 • 창업보육 이후 디지털 신산업 기업이 정착할 수 있도록 공간 제공 등 지원 • 글로벌 연계 사업의 다각화를 통한 수출 활성화

2) 전략과 과제

❖ 디지털 기반 제품의 고도화 및 시장성숙 유도

① 수요기반 실증개발 지원사업

- 지역 기업체를 대상으로 데이터 기반 사업수요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기업과 연계시켜, 전문기업이 제공하는 솔루션이 실제 기업 현장에서 어떠한 성능을 보이는지 검증하는 사업을 수행하여 전문기업의 사업실적을 축적하고 사업모델 구체화를 유도.

② 공공수요 연계 신사업 개발 다각화

- 인천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존 공공서비스를 데이터 기반사업으로 전환하거나, 신규로 제공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수요를 사전 조사하고 이를 구현할 수 있는 디지털 신산업 기업체의 제안을 받아 공공수요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사업모델 개발을 지원.

③ 해외시장 진출을 통한 성장지원과 수요 다변화

- 디지털 신산업의 제품 및 서비스 사업화를 촉진하는 단계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해외 시장의 진출을 지원하여 수요의 다변화를 추구하여 기업 성장단계의 고도화를 지원.

❖ 제조업 기반 디지털 융합(AI-X) 역량 강화

④ 제조업의 디지털 신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개발 지원

- 인천시의 주력 산업 부문에서 제조업의 디지털 융합을 희망하는 기업체의 현황과 필요 인력의 수요를 조사하고 공통된 인력 수요에 대한 인력개발 사업을 지역 대학과 연계하여 진행시켜 제조업체의 디지털 혁신 역량을 강화.

⑤ 중소·중견 제조업의 지능형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 인천시의 제조업체들은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디지털 전환을 위한 관련 인력을 자체적으로 보유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디지털 부분의 전문기업과 제조업의 협업을 통해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수행.

❖ 데이터 인프라 구축 및 활용 활성화

⑥ 민간주도의 데이터 구축 및 활용 지원

- 디지털 신산업 분야의 전문기업들이 구상하는 사업모델과 이에 필요한 데이터 구축에 대한 가능성 및 실효성을 평가하여, 우수사업에 대해 민간 기업체가 수행하는 데이터 구축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민간업체들이 양질의 데이터를 스스로 확보하는 것을 지원.

⑦ 안전한 데이터 활용 환경 구축 및 활성화

-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데이터의 안전하고 합법적인 활용을 위한 교육사업을 활성화하고, 향후 가명정보 결합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전략 개발.

❖ 인천시 데이터 신산업 입지 경쟁력 강화

⑧ 성장단계 창업기업의 지역 정착 지원

- 성장하는 전문기업체들 대상으로 시장가격에 비해 저렴하게 입주공간을 제공하여 다른 지역으로 이출되는 비율을 낮추고, 인천 지역에 유망기업체들이 유입·집적될 수 있도록 유도.

⑨ 디지털 신산업 전용공간인 (가칭)인천 AI-X 캠퍼스 구축

- 디지털 신산업 분야의 실증연구-사업협력-인력개발-데이터 인프라가 한공간에 집적되어 관련 산업활동의 핵심 기반이 될 수 있는 (가칭)인천 AI-X 캠퍼스를 구축하여 산업집적지로 인지도를 높이는 전략 개발.

⑩ 전문인력 유치와 지역 인력 활용을 위한 지원

- 기업체가 가장 어려워하는 전문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관내에 거주하는 전문인력이 인천시 기업체에 근무하는 경우 관련 비용을 지원하여 지역내 고용을 촉진하고, 인천으로 유입되는 인력에 대한 주거 및 정착을 위한 지원 강화.

IV

2023년도 연구결과 요약집

시민행복연구단

- 단행본

시민행복 증진을 위한 정책 방안

- 기획연구

인천시 포용적 평생교육 실태의 지표 분석과 정책과제
시민 관광향유 증진을 위한 정책 방향 및 과제
지역맞춤형 보건의료연계 통합돌봄서비스 활성화 연구
인천시민의 공공행복 수준 조사
인천광역시 재난복지 실현 방안

- 현안연구

소셜 빅데이터를 통해 본 인천시민의 행복

시민행복 증진을 위한 정책 방안

■ 시민행복연구원

- 「시민행복 정책의 의미와 방향」(이용갑·이정인)은 경제발전에 따라 사람들은 물질적 풍요와 윤택한 삶을 누리고 있지만, ‘행복(Happiness)’은 ‘경제적 생활 수준’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며, 사회마다 ‘행복’에 대한 기준도 다르다는 것을 재인식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행복’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복 개념과 행복정책을 살펴봄. 또한, 행복지표와 관련하여 통계청의 ‘국민 삶의 질 지표’, 국회미래연구원의 ‘국민행복지수’, 인천광역시의 ‘시민행복지표’ 등과 같은 국내 행복지표와 함께 OECD의 ‘더 나은 삶 지표’, 유엔(UN)의 ‘세계행복지표’, 부탄의 ‘국민총행복지표’ 등을 확인하고, 우리나라 지자체의 행복 관련 조례를 분석함. 이러한 논의를 거쳐 본 연구는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 도시, 인천’을 만들고자 하는 인천광역시가 시민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 행복정책의 방향을 제안함.
- 「인천시민의 삶과 공공행복」(이미애)은 공공행복의 관점에서 인천시민의 삶과 행복 수준을 조사, 분석하고 시민행복 증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함. 시민과 공동체 행복에 관한 문헌연구 및 측정지표 검토를 통해 인천시민의 공공행복 수준 조사를 위한 측정모형을 설정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이 느끼는 삶의 질 수준과 지역생활 여건, 감정과 정서, 자기 삶의 의미와 가치 인식 등 인천시민의 공공행복 수준을 살펴봄. 또한 IPA를 활용하여 영역별 삶의 질 수준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 분석을 통해 인천시 정책의 우선순위 등 정책방향을 모색함. 이를 토대로 인천시 정책운영의 전 과정에 공공행복 조사를 활용·연계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시민행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공공행복 조사의 활용 방안을 제안함.
- 「소셜빅데이터를 통해 본 인천시민의 행복」(서봉만)은 소셜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인천시민의 분야별 행복 요소를 살펴봄. 인천시의 시민행복지표 중 시정, 균형발전, 성장동력, 행복한 도시 등 4개 영역의 12개 지표를 대상으로 주제어를 선정하고, 선정된 주제어 사전을 중심으로

웹크롤링 방식으로 행복과 관련된 네이버 블로그 글을 수집함. 수집된 블로그 글을 대상으로 키워드 빈도, 연관어 분석 그리고 감성분석을 통해 분야별 행복 관련 키워드와 연관어를 파악함. 감성분석을 통해 긍정토픽과 부정토픽을 구분하고,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요인을 분야별로 판별함. 이를 토대로 인천시민이 분야별로 행복을 느끼는 요소를 제시하고 향후 정책적으로 대응할 분야를 구체적으로 제시함.

- 「시민행복 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연계 통합돌봄서비스」(이용갑)는 중앙정부가 2019년 하반기부터 전국 16개 기초지자체에서 수행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이와 연결된 2021~2022년 ‘보건의료 특화프로그램’, 그리고 2023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노인 의료·돌봄통합지원 시범사업’을 기반으로 시민행복 증진의 한 방안으로 보건의료 서비스와 연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방안을 찾고자 함. 이 과정에서 인천광역시의 2022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 및 2023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특화사업 발굴·지원공모 사업’을 분석한 후 10개 기초지자체별로 가능한 방문의료·방문간호·통합사례관리가 결합한 지역맞춤형 보건의료연계 통합돌봄 서비스의 제공 방향을 제시함.
- 「시민행복과 포용적 평생교육」(배은주)은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는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교육과 더불어 사회적 배제와 차별이 없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사회 전반의 포용성 증진 교육이 시민행복 구현에 필수적이라는 관점에서, 평생교육 영역의 포용성 수준을 다양한 지표로 통해 비교·분석함. 특·광역시 간 비교를 통해 인천의 포용적 평생교육 수준을 가늠하고, 관련 영역의 포용성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세부 과제를 제안함. 특히, 포용성 증진을 위한 기반 강화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제공 및참여 제고를 위하여 노력해야 함을 강조함.
- 「시민행복과 관광향유」(심진범)는 인천시민 행복의 관점에서 관광정책의 새로운 아젠다를 제시하고 시민 관광향유 증진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안한 연구임. 연구에서는 인천시의 시민 관광향유 정책을 ‘시민의 관광향유권 증진과 관광활동 활성화를 위한 관광정책 수립·시행을 통해 궁극적으로 시민행복과 삶의 질 제고를 도모하는 공공정책’으로 논의함. 그리고 시민 관광향유 증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①관광약자 관광향유 기회 확대 및 포용성 증진, ②시민 생활관광 활성화 정책 추진, ③시민 관광향유 정책 추진기반 정비 등 3가지 측면에서 제안함.

-
- 「시민 안전과 재난복지」(조성윤·정혜은)는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포용사회 구현을 위해 재난복지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함. 해외 재난취약계층 지원 사례조사와 재난안전 및 사회복지 분야 실무자 의견조사를 바탕으로 재난 불평등 해소를 위한 도시의 역할과 책임을 논의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인천광역시 재난복지 거버넌스 모델을 제시하고 지역사회기반 재난안전관리 실현을 위한 실질적 대안을 제안함.

 - 「시민행복을 위한 행복(行福) 교통카드 도입」(석종수)은 시민의 이동 행복권 차원에서 대중교통의 요금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함. 현재의 대중교통 요금구조는 여러 이유로 주요 교통수단이 대중교통일 수밖에 없는 계층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요금구조임. 이를 개선하려면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야 함. 이 연구에서는 외국에서 시행되는 대중교통 정액권 제도 또는 대중교통 요금 상한제를 인천의 실정에 맞게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정액권 요금제 도입과 기업 전용 대중교통 요금 상한제 도입을 제안함. 더불어 선물용 정액권, e음카드와 연계한 구독형 정액권 등을 함께 시행할 것을 제안함. 제안된 정액권 제도 도입으로 대중교통 정기이용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시내버스 경영 안정화, 대중교통 이용자 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 교통약자의 사회적 참여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기대할 수 있음.

인천시 포용적 평생교육 실태의 지표 분석과 정책과제

■ 배은주 도시사회연구부 선임연구위원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2015년 유엔에 의해 지속가능발전목표가 제시되면서 교육 분야의 목표로 '양질의 교육(Quality Education)'이 제시되었고, 이는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증진"(SDG4)으로 표현됨
- 교육 분야에서의 포용성은 포용사회를 이루어가기 위한 가장 중대한 요인 중 하나로 간주되고 있지만, 기존의 포용적 패러다임이 취약계층 학습자에 대한 교육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었다가, SDG4와 '교육2030'을 발표하면서 취약계층 학습자에 대한 정책뿐만 아니라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거시적 차원에서 사회적 포용 실현을 위한 시민역량 교육으로도 확대되어야 한다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강조되기 시작함
- 이러한 배경 속에서 교육 분야에서의 포용성을 증진하는 것은 단순히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적 정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배제를 감소시키고, 더 나아가 전체 시민의 세계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이루어, 시민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임
 - 인천시가 추구하는 '시민행복'은 특정 계층만의 행복이 아니며, 모든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는 여러 영역에서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는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정책도 필요하고, 사회적 배제와 차별 없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함. 따라서 사회적 배제와 차별이 적은 사회가 모든 시민들이 행복한 사회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사회 전반의 포용성을 높이는 것은 시민행복을 구현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교육 분야의 포용성 제고와 관련하여 '모두를 위한 교육'이라는 전환된 포용적 교육 패러다임에 기반하여 인천시가 사회적 배제를 줄이고 사회통합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평생교육 분야에서의 포용성 현황과 실태를 지표에 근거하여 가늠해 보고 이를 증진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해 보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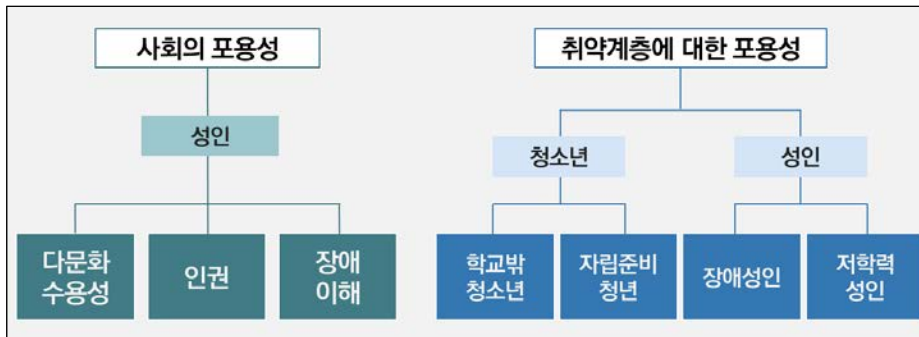
-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취약계층을 위한 학교 밖 교육 차원과 시민역량 강화 차원의 평생교육 부분의 포용성 증진에 초점을 두고 지자체 중심의 포용적 평생교육의 현황과 실태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가용한 지표를 활용, 비교 분석하여 인천시 평생교육 부분의 포용성 증진을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를 제안하는 데 연구목적이 있음

2. 인천시 포용적 평생교육 실태의 지표 분석

1) 포용적 평생교육 지표 선정 기준과 종류

- 포용적 평생교육 실태 분석을 위한 지표로 사회의 전반적인 포용성 측정을 위한 일반인 대상의 지표와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성 측정 지표의 두 가지로 구분함
 - 사회의 포용성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일반인들의 다문화수용성, 인권존중, 장애이해 부분을 선정하였고, 취약계층 대상의 포용성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취약계층의 범위로 지자체가 취약계층의 성장, 진학, 자립, 취업을 지원하는 학교밖청소년,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장애성인, 저학력성인을 선정하였음. 이주민을 포함하고자 하였으나, 관련 지표의 통계조사가 이루어져 있지 않아 제외하였음
- 지표의 종류는 포용교육 실현을 위한 기반과 포용교육의 참여 및 성취를 알 수 있는 포용교육실태로 구분하였고, 각각의 영역에서 시·도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조사되어 있는 통계지표를 조사하여 최종적으로 조사가능한 지표(안)을 작성하였음
 - 포용교육기반으로, 법적 근거, 재정, 관련 기관(시설), 가치 및 인식 등으로 범주화하여 가능한 지표를 선정함
 - 포용교육실태로, 교육의 투입-과정-산출로 드러나는 교육의 기회, 참여, 성취 등의 영역에서 가능한 지표를 선정함
- 본 연구에서의 포용적 평생교육 실태 분석을 위한 지표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음
 - 특·광역급 자치단체 간 비교가 가능한, 조사되어 있는 평생교육 분야 지표
 - 사회의 포용성 비교를 위한 일반인 대상의 지표
 - 취약계층의 임파워먼트를 위한 지자체가 지원가능한 지표
 - 되도록 지자체가 지원하는 평생교육 관련 지표를 중심으로 선정하였지만, 사회의 포용성 측정을 위한 지표는 조사되어 있는 것이 많지 않아 가용한 지표가 별로 없다는 한계가 있음

[그림 1] 포용적 평생교육 실태 분석을 위한 선정 지표의 종류와 대상



2) 포용적 평생교육 지표 비교 분석 결과

- 선정 지표를 포용교육기반과 포용교육실태로 범주를 구분하여 포용교육기반에는 가치인식, 법적 기반, 기관(시설), 재정, 포용교육실태에는 교육참여와 교육성취의 하위영역에서 가용한 지표를 비교, 분석하였음
- 분석 결과, 각 영역의 지표별로 지표들의 평균값으로부터 $\pm 1/2$ 표준편차에 해당하는 구간을 '양호'로, $1/2$ 표준편차 이상에 해당하는 구간을 '우수'로, $-1/2$ 표준편차 이하에 해당하는 구간을 '미흡'으로 구분하여 인천의 수준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표 1] 인천시의 사회의 포용성 지표 분석 결과(종합)

영역	범주	구분	전체*	인천시	순위	수준
다문화 수용성	가치인식	일반국민 다문화수용성 지수	52.3	56.8	1	우수
	법적 기반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정 현황	29.6	18.2	4	미흡
	교육성취	일반국민 다문화수용성 지수 향상도	-1	4.2	1	우수
인권 존중	가치인식	인권 존중에 대한 인식	94.3	94.9	4	양호
	법적 기반	성인(시민) 인권 관련 조례 제정 현황	75.3	54.5	7	미흡
	재정	성인 1인당 시민인권교육 자원 예산	29	9	5	미흡
장애 이해	가치인식	장애인 인권존중에 대한 인식	52.2	57.6	3	우수
	법적 기반	장애인식 개선 관련 조례 제정 현황	1.2	0.0	2	양호
	재정	성인 1인당 장애인식 개선 관련 예산	29	160	1	우수

주: 전체는 7개 특·광역시 지표 평균값

[표 2] 인천시의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성 지표 분석 결과(종합)

대상	범주	구분	전체*	인천시	순위	수준
학교밖 청소년	법적 기반	학교밖청소년 교육지원 관련 조례 제정 현황	91.4	72.7	6	미흡
	기관(시설)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설치 현황	92.6	81.8	6	양호
	재정	학교밖청소년 1인당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예산	140,528	111,006	6	미흡
	교육참여	학교밖청소년의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이용률	19.1	11.2	7	미흡
	교육성취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이용인원 대비 성과인원	42.5	48.2	2	우수
자립 준비 청년	법적 기반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지원 조례 제정 현황	24.7	9.1	7	미흡
	기관(시설)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 현황	14	0	2	양호
	재정	자립준비청년 1인당 자립준비청년 지원 예산	20,062,514	17,461,538	5	미흡
	교육참여	자립준비청년의 학업중단 현황	2.9	1	5	미흡
		자립준비청년의 대학진학 현황	28.1	36.5	2	우수
		자립준비청년의 4년제 대학 진학자 비율	50	52.6	3	양호
		자립준비청년의 취업자 비율	30.7	19.2	7	미흡
자립준비청년의 정규직 취업자 비율		57	65	2	우수	
장애 성인	법적 기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정 현황	23.5	45.5	2	우수
	기관(시설)	장애성인 1천명당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수	0.06	0.06	4	양호
		발달장애인 1천명당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수	0.34	0.07	4	미흡
		장애성인 1천명당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수	0.36	0.26	6	미흡
		장애성인 1천명당 장애인복지관 수	0.1	0.07	6	미흡
	재정	장애성인 1인당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예산	21,281	12,130	3	양호
	교육참여	장애성인의 평생교육시설 참여율	0.16	0.23	1	우수
		장애성인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률	0.94	0.66	6	미흡
		장애성인의 직업교육(전환교육) 참여율	0.12	0.01	5	미흡
		장애성인의 직업교육(직업적응 및 역량개발훈련) 참여율	1.92	0.46	6	미흡
교육성취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	-	4.2	4	양호	
	장애인공무원 고용률	-	3.6	7	미흡	
	15세 이상 장애인 고용률	33.7	31.7	5	미흡	
저학력 성인	법적 기반	성인문해교육 지원 조례 제정 현황	40.7	63.6	3	우수
	기관(시설)	문해교육 잠재수요자 1천명당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기관 수	0.16	0.09	6	미흡
		문해교육 잠재수요자 1천명당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수	0.02	0.01	4	양호
	재정	문해교육 잠재수요자 1인당 성인문해교육 지원 예산	1,925	933	7	미흡
	교육참여	문해교육 잠재수요자의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참여율	0.5	0.2	7	미흡
	교육성취	문해교육 잠재수요자 중 학력취득자 비율	0.8	0.1	7	미흡

주: 전체는 7개 특·광역시 지표 평균값

- 이상의 분석 결과, 인천시의 포용적 평생교육의 수준을 지표별로 간략히 정리하여 도식화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표 3] 인천시의 포용적 평생교육 지표 평가 수준(종합)

구분		포용교육기반				포용교육실태	
		규범가치	법적 기반	기관(시설)	재정	교육참여	교육성취
사회의 포용성 측정 지표	다문화 수용성	우수	미흡	-	-	-	우수
	인권존중	양호	미흡	-	미흡	-	-
	장애이해	우수	양호	-	우수	-	-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성 측정 지표	학교밖 청소년	-	미흡	양호	미흡	미흡	우수
	자립 준비 청년	-	미흡	양호	미흡	미흡	우수
							양호
							미흡
							우수
	장애 성인	-	우수	양호	양호	우수	양호
				미흡		미흡	
				미흡		미흡	
	저학력 성인	-	우수	미흡	미흡	미흡	미흡
				양호			

3. 인천시 포용적 평생교육 증진을 위한 정책과제와 제언

1) 인천시 포용적 평생교육 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 인천시 포용적 평생교육의 실태를 지표를 통해 비교 분석한 결과, 평생교육 분야의 포용성을 높이기 위한 기본 방향으로 '포용성 증진 기반 강화와 다양한 교육 제공 및 참여 제고를 제언하였으며, 이에 따른 정책과제를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한 우선순위별로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음
-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기반 강화와 참여독려를 최우선적으로 실행
 - 사회의 포용성 증진을 위한 기반강화와 인식개선 홍보 필요
 - 사회의 포용성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및 협력, 효과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 포용적 평생교육 관련 프로그램 제공 민간기관에 대한 지원 강화

[표 4] 인천시 포용적 평생교육 증진을 위한 우선순위별 추진과제

우선순위	세부 추진과제	추진 주체
1	학교밖청소년 및 자립준비청년의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강화	인천시, 기초지자체
	취약계층 대상별 지원 조례, 예산, 시설 등 기반 강화	인천시, 기초지자체
	성인 문해교육 학력인정기관 확대 및 참여 제고	인천시, 교육청
	취약계층의 포용성 기반 강화를 위한 교육청 및 기초지자체와의 연계·협력 강화	인천시, 교육청, 기초지자체
	취약계층 대상 참여 독려를 위한 홍보 강화 및 저해요인 제거	인천시, 기초지자체
2	세계시민교육 추진 조례, 예산, 시설 등 기반 강화	인천시, 기초지자체
	특정 집단 대상 혐오 및 차별 철폐 홍보 강화	인천시, 기초지자체
	미디어를 통한 포용성 증진 홍보 강화	인천시, 기초지자체
3	인천시 및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사회의 포용성 증진 프로그램 주도	인천시
	공공 영역(시설)에서 세계시민교육 주도적으로 제공	인천시, 기초지자체
	세계시민교육 강화를 위한 기초자치단체와의 연계 협력	인천시, 기초지자체
4	사회의 포용성 증진 교육 유형 및 방법의 다양화를 통한 효과 제고	인천시, 기초지자체
	사회의 포용성 교육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을 통한 효과 제고	인천시, 기초지자체
5	취약계층 대상 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원 강화	인천시, 기초지자체
	사회의 포용성 프로그램 운영 민간기관 공모사업 지원 강화	인천시

2) 연구의 한계 및 정책 제언

-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있는 평생교육 분야에 한정하여 포용교육의 실태를 통계조사된 지표를 활용, 비교·분석을 처음 시도한 탐색적 연구로, 일정 연구기간 내에서 연구범위를 제한하여 수행하였기에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짐
 - 포용적 평생교육의 모든 지표를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데, 통계조사되어 있는 특·광역시별 비교가 가능한 지표만으로 연구하였기에 더욱 그러함
 - 과거의 조사된 가용지표를 활용함으로써 최근 변화된 실태는 반영하지 못함
 - 연구범위 제한으로 모든 취약계층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음
- 정책 제언으로 다음 네 가지를 제안함
 - 포용교육 모니터링을 위한 지표 개발 및 가용데이터 확보
 - 지표의 정기적인 조사를 통하여 취약 부분 실태조사
 - 지표 활용의 확산을 통한 증거기반 정책 실행
 - 교육분야 포용성 증진을 위한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의 연계협력 필요

시민 관광향유 증진을 위한 정책 방향 및 과제

■ 심진범 도시사회연구부 선임연구위원

1. 연구 목적 및 방법

1) 문제 인식 및 연구 목적

-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인식으로부터 출발함. 첫째, 시민의 관광향유와 관련된 논의 및 정책 동향은 어떠한가? 둘째, 인천시의 관련 관광정책과 사업을 통해 본 주요 시사점은 무엇인가? 셋째, 시민 관광향유 증진을 위한 인천시의 관광정책은 어떠한 방향성을 지향해야 하며 중점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과제는 무엇인가?
-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 연구는 인천시민 행복의 관점에서 관광정책의 새로운 어젠다를 제시하고, 시민 관광향유 증진을 위한 정책 방향 및 과제 제안을 목적으로 수행함.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내용적 범위

- 시민 관광향유에 관한 논의 및 관련 정책 동향 검토
- 시민 관광향유 관련 인천시 관광정책 검토와 시사점 도출
- 시민 관광향유 증진을 위한 정책방안 제안

❖ 연구 방법

-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문헌 연구, 관계자 면담 및 전문가 의견수렴, 연구 협의회 등 다각적인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함.

2. 시민 관광향유에 관한 논의

1) 시민의 관광향유권 부각

- 관광정책의 발전 과정에서 시민의 관광향유에 관한 논의가 확대되면서 관광활동의 주체로서 시민에 대한 논의와 정책적 접근이 확대되는 양상이며, 시민들의 관광향유는 국가 및 지역 관광정책의 중요한 가치로 부각됨.
- 관광정책 대상으로서 시민에 관한 논의는 행복추구권으로서의 관광, 기본권으로서의 관광 등 관광향유 권리에 관한 논의로 발전되어 옴. 관광향유 권리에 관한 논의는 관광약자의 사회적 배제 완화와 관광복지 증진이라는 선별적 관점은 물론 모든 시민의 관광향유라는 보편적 관점에서의 논의가 진행됨.
- 국제사회와 관련 전문가들의 논의에서 관광약자의 사회적 배제 완화, 인간의 기본권과 행복추구권으로서 관광향유를 위한 정부와 사회의 역할이 강조되어 옴. 세계관광기구(UNWTO)는 세계관광윤리강령 등을 통해 관광향유권 보장과 증진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권고하기도 함.
- 2000년을 전후로 정부의 역할과 정책방안 차원에서 국민 생활관광 활성화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져 왔으며, 최근에는 정부 정책사업 확대와 함께 생활관광의 개념 정립에 대한 탐색적 논의가 진행됨.
- 생활관광에 대한 최근 논의는 일상에서도 관광욕구의 충족이나 탈일상의 경험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일상의 공간을 벗어남을 전제한 관광의 전통적 개념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 전통적인 개념에서 관광은 ‘거주지를 벗어난 이동’이라는 공간적 변화를 전제
 - 탈일상의 경험이 가능한 일상 공간의 기능적 변화,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 확대, 소확행이나 근거리 여행 증가와 같은 행태 변화 등 영향
- 선행 논의를 통해 본 시민 생활관광 개념의 핵심은 일상생활권내에서 이루어지는 시민의 관광활동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시민 관광향유 증진을 위한 개념적 토대로서 의미가 있음.

2) 시민 관광향유 증진의 정책적 당위 확대

- 시민의 관광향유 증진과 관련된 정책적 당위는 관련 법률과 계획을 통해 구체화되어 왔으며, 정부의 관련 정책 사업이 확대되는 양상임.
 - 국내 관광정책은 1970년대 관광기본법이 마련되면서 국제관광 중심에서 국민관광 진흥 정책으로 전환 계기 마련
 - 1980년대 국민관광활동이 확대되는 가운데 사회적 형평 실현을 위해 복지관광 정책이 도입되었으며, 관광이 보편적 인권으로 인식됨에 따라 정책 사업 확대
 - 2000년을 전후로 관광을 통한 국민행복 실현을 위해 국민 생활관광 정책이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며, 2010년대 이후부터 정책이 본격화되는 추세
- 정부는 관광기본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계획 등 관련 법률 및 법정 계획에 근거하여 관광취약계층 복지관광, 보편적 관점에서의 국민관광진흥 시책을 추진 중이며 최근 생활관광 활성화 정책 등으로 확대됨.
 - 관광취약계층 복지관광 차원에서 통합문화이용권 소외계층 관광분야 지원사업,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 무장애 관광도시 사업 등 추진
 - 국민관광진흥을 위한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생활관광 활성화 사업 등 추진

[표 1] 시민 관광향유 증진 관련 정부 정책 동향

구분	관련 사업	관련 법률 및 계획
관광취약계층 복지관광 정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 소외 계층 관광분야 지원사업 - 저소득 근로자 대상 여행바우처 사업이 2013년 문화누리카드 사업에 통합 •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 추진(2015~) - 관광지점으로 구성된 관광권역 •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 사업 추진(2022~) - 관광시설이 집약된 도시 및 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기본법 - 법 제1조 목적에 국민복지 향상 포함 • 관광진흥법 - 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 시책 강구 - 여행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 - 관광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보편적 관점에서 국민관광진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주간 캠페인 추진(2014~) - 여행주간으로 명칭 변경(2016) •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추진(2018~) - 시범 추진(2014~) • 생활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2019~) • 여행가는 달 캠페인 추진(2021~) - 여행주간 통합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차 관광진흥 5개년 계획(2013) 비전 '관광으로 행복한 국민, 육성하는 대한민국' - 관광을 통한 국민 행복 증진 •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2021) 비전 '관광으로 행복한 국민' - 관광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 관광환경 조성

3) 지역관광정책 차원의 제도적 근거 마련 및 사업 확대

- 시민의 관광향유 증진과 관련된 정책적 당위가 확대되어 온 가운데 지자체 차원에서도 관련 조례를 통한 제도적 근거 마련 및 관광향유 증진 관련 사업이 확대되는 추세임.
- 17개 광역시·도에서 관광취약계층 관광활동 지원 혹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의 열린관광지 조성사업 등과 연계하여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로 제·개정되는 추세임.
- 인천시, 서울시, 광주시 등 일부 지자체는 시민의 관광향유를 관광기본권 차원에서 법제화하고 시민 관광향유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
 - 2019년 서울시와 인천시를 시작으로 2020년 광주시가 시민의 관광기본권 규정
- 시민 관광향유와 관련된 정책적 당위 확대, 지역관광정책에서 시민 행복증진과 같은 사회적 가치 중시 등으로 최근 시민관광 향유 지원을 위한 지자체 사업은 확대되는 양상이며, 지역 여건에 따라 사업의 내용과 수준은 차이가 있음.

[표 2] 시민 관광향유 증진 관련 지역관광 정책 동향

구분	관련 조례	관련 사업
서울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 관광향유 권리(제3조) - 관광기본권 보장을 위한 시장 책무(제4조) - 시민의 관광복지 증진을 위한 필요한 사업 추진(제7조) • 서울특별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활동 지원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형 여행바우처 지원 • 서울 다누림센터 운영 • 유니버설 관광환경 조성 • 서울 다누림관광 서포터즈 운영 • 서울 시민관광아카데미 운영 • 서울 여행가는 달 캠페인 추진
부산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제4조) -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사업 추진(제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용관광상품 개발 및 판매 • 부산시티투어 시민할인(문화누리카드 장애인 할인) • 열린관광지 조성(해운대 해수욕장, 2018)
대구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린관광지 조성(근대역사골목, 2015, 비슬산 군립공원, 사문진주막촌 2021)
광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광역시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 관광향유 권리(제3조) - 관광기본권 보장을 위한 시장 책무(제4조) • 광주광역시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익사이팅 투어 광주사람, 광주여행 추진
울산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울산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린관광지 조성(십리대숲, 2017)

3. 인천시 관광정책 검토 및 시사

- 인천시민의 관광향유와 관련된 계획 및 조례, 관련 사업 및 조사통계를 통해 본 주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1) 시민 관광향유와 관련된 계획적 일관성과 지속성 보완

- 인천시는 관광정책 중기 기본계획을 통해 비교적 이른 시기에서부터 시민관광 진흥 및 시민관광 활성화 정책을 반영함.
 - 2006년 수립한 제4차 인천권 관광개발계획(2007~2011)에서 시민관광 진흥이 별도의 목표와 전략 체계로 반영
 - 이후 인천시 관광정책 관련 법정 계획이나 행정 계획에서 시민의 관광향유와 관련된 과제나 단위 사업 반영
- 그러나, 관련 계획의 성격에 따라 시민 관광향유에 접근하는 관점이나 계획 내 위계 구조에 차이가 크고, 제안된 과제의 지속성과 실행력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 따라서, 인천시 전체 관광정책 구조와 영역에서 시민 관광향유에 관한 정책적 가치가 일관성 있게 반영될 필요가 있고, 관련 법정 계획이나 행정 계획을 통해 주요 과제나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상황임.

2) 제도적 근거에 기반한 시민 관광향유 사업 확장 및 안정성 제고

- 인천시는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제정(2017년 9월 25일), 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개정(2019년 12월 30일)을 통해 시민의 관광향유와 관련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
 - 특히, 지자체에서는 서울시에 이어 두 번째로 모든 시민의 관광향유 권리를 시민의 관광기본권 차원에서 규정하는 등 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를 통해 제도적 근거 마련

- 인천시 관광진흥조례 제3조의2에 의해 모든 시민은 제약에 관계없이 관광을 향유할 권리를 가지며, 제3조의3에 의해 시민 관광활동 활성화를 위한 관광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 규정
- 그러나, 관련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민의 관광기본권 향유 지원에 관한 지원 사항(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제3조의4)이나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제4조)에 관한 실천 수단은 한계가 있고 일부는 선언적 의미에 그침.
- 따라서, 시민의 관광향유와 관련된 제도적 근거를 기반으로 관광약자 관광향유 지원, 보편적 측면에서의 시민 생활관광 활성화 사업의 확장과 안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상황임.

3) 관련 사업의 정비·보완을 통한 시민 관광향유 사업의 체계화

- 인천시는 관광약자 관광향유 지원 및 보편적 차원의 시민 관광향유 지원을 위한 일부 사업을 추진 중임.
 - 관광약자 관광향유 지원 측면에서 관광취약계층 관광활동 지원 사업,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 추진
 - 군·구 테마여행 상품개발 지원사업, 청년참여형 인천관광 활성화사업은 보편적 차원의 시민 관광향유 증진과 관계
- 관련 사업 검토 결과, 각 사업이 사업 특성과 관련된 시민의 관광활동 참여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확인됨. 그러나, 한편으로는 수혜 인원이나 관광향유 프로그램에 한계가 있고 일부 사업의 방향성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사업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실행기관의 경험 축적과 프로그램 개선 등의 긍정적 측면과 의의 확인
 - 관광약자 관광향유 지원사업은 최근 수혜자 유형 및 참여 인원이 확대되어 왔으나 관광약자 포용 수준은 미미한 상황

- 보편적 차원에서 시민 관광향유 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관련 사업은 지원 사업의 방향성 정비가 필요한 상황
- 따라서, 인천시는 시민 관광향유의 관점에서 추진 중인 관련 사업의 정책적 가치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관광약자 포용성 증진 및 시민 생활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비·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 추진 중인 관광취약계층 관광활동 지원 사업의 정비·고도화를 통한 정책의 체계성 제고와 인천시민 관광소의 완화를 위한 정책 대상 확대
- 시민의 일상 속 관광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인천시와 군·구 관광정책의 역할 확대와 시민 생활관광 활성화 정책 추진

4) 시민 관광향유 실태의 측정·관리 및 정책 환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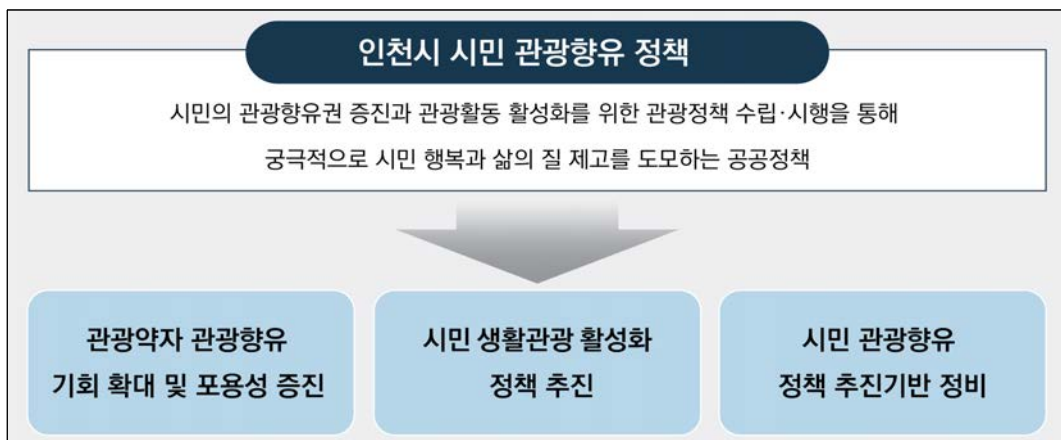
- 인천시민의 관광향유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관련 조사통계로는 인천관광 실태조사와 국민여행조사 등이 있음.
- 인천관광 실태조사는 인천시 관광정책 및 홍보마케팅 수립시 기초자료 마련을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방문 내국인 관광객의 관광실태, 잠재 내·외국인 관광객의 인식, 인천시민의 여가/관광 실태 3개 영역에 관하여 실시(2021년 조사 기준)
- 국민여행조사는 국민의 여행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국가 관광에 관한 정책수립과 연구·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이때 국내여행은 행정구역 상 현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역을 다녀온 모든 여행을 의미
- 인천관광 실태조사를 통해 시민의 인천 내 여가/관광 활동 관련 일부 내용을 참조할 수 있으나, 인천시민의 관광향유 실태에 관한 조사통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임.
- 국민여행조사는 인천시를 방문한 타지역 관광객 실태로 시민 관광향유 실태 파악 불가
- 따라서, 인천관광 실태조사 방식과 내용의 정비·보완을 통해 인천시민의 관광향유 실태를 주기적으로 측정·관리하고 시민 관광향유 관련 정책 및 사업에 환류할 필요가 있는 상황임.

4. 시민 관광향유 증진을 위한 정책 방향 및 과제

1) 시민 관광향유 증진을 위한 정책 방향

- 인천시의 시민 관광향유 정책은 '시민의 관광향유권 증진과 관광활동 활성화를 위한 관광정책 수립·시행을 통해 궁극적으로 시민 행복과 삶의 질 제고를 도모'하는 공공정책이라 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방향성을 지향할 필요가 있음.
 - 관광약자 대상의 선별적 지원 정책과 시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지원 정책의 균형을 통한 시민 관광향유 정책 대상의 확장 추구
- ① 관광약자 관광향유 기회 확대 및 포용성 증진
 -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관광활동에 제약이 있는 인천시민의 관광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대상 및 영역 확대
- ② 시민 생활관광 활성화 정책 추진
 - 시민의 일상 속 관광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시민 대상 생활관광 활성화 정책 추진
 - 시민 생활관광: 생활권 내에서 이루어지는 인천시민의 관광활동을 의미
- ③ 시민 관광향유 정책 추진기반 정비
 - 시민 관광향유 정책의 안정적·지속가능한 추진을 위한 제도와 실천 수단의 정합성 제고 및 조직 기능 강화

[그림 1] 시민 관광향유 증진을 위한 정책 방향



2) 정책과제

- 제안한 정책적 방향성을 고려할 때, 정책과제 도출을 위한 현실적인 문제 의식은 다음과 같음.
 - 관광약자의 사회적 배제를 어떻게 완화하고 관광향유 기회를 확대할 것인가?
 - 시민 생활관광 활성화 사업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확산해나갈 것인가?
 - 시민 관광향유 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기반을 어떻게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하게 만들 것인가?
-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토대로 시민 관광향유 증진 정책 개발·실행과 관련되는 인천시, 인천관광공사, 전문가, 연구진 등 정책 이해관계자 간 논의를 통해 정책과제를 구체화함.
 - 정책의 주요 쟁점과 문제 의식을 공유하고 정책과제 논의·검토
-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①관광약자 관광향유 기회 확대 및 포용성 증진, ②시민 생활관광 활성화 정책 추진, ③시민 관광향유 정책 추진기반 정비 등 정책방향에 따른 세부 과제를 제안함.

[그림 2] 시민 관광향유 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도출

방향	관광약자 관광향유 기회 확대 및 포용성 증진	시민 생활관광 활성화 정책 추진	시민 관광향유 정책 추진기반 정비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취약계층 관광활동 지원 사업 정비·고도화 - 관광취약계층 수혜자 확대, 프로그램 개선·고도화 • 관광약자 여행바우처 사업 추진 - 비정규 근로자, 소상공인 등 대상 여행바우처 지원 • 인천시 주도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사업 추진 - 실태조사, 개선계획, 사업시행, 모니터링·환류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구 협력 시민 생활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 - 군·구 테마여행 상품개발 지원 사업 정비·고도화 • 생애주기 연계 시민 생활관광 프로그램 육성 - '인천여행학교' 생활관광 프로그램 육성 • 인천시민 여행가는 달 사업 추진 - 관광향유 프로그램 및 이벤트 강화, 시민 특전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시 관광정책 목표 및 전략체계 정비 - 관광진흥시행계획 재구조화 • 인천시 관광계획 수립체계 정비 - 관광정책 중기 기본계획 반영 • 시민 관광향유 실태조사 정례화 및 정책 환류 - 1년 주기 조사체계 제도화 • 시민 관광향유 정책 전달체계 강화 - 행정·유관기관 전문성 강화

지역맞춤형 보건의료연계 통합돌봄서비스 활성화 연구

■ 이용갑 도시사회연구부 선임연구위원

1.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노인·장애인·아동 등이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는 데 필요한 주거지원 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요양돌봄서비스, 일상생활지원 사회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자 중앙정부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인천광역시는 2022년에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나, 중앙정부나 인천광역시 모두 2023년부터 사업의 형식과 내용을 변경하였음.
-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서비스와 건강관리·돌봄서비스를 연계하여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노후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공모를 통해 선정된 전국 12개 기초지자체에서 2023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약 2.5년 동안 실시할 예정임.
- 인천광역시는 돌봄의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맞춤형 통합돌봄사업’을 지역특화사업으로 발굴하여 시행하는 3개 기초지자체를 공모로 선정하여 지원하는 「2023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특화사업 발굴지원 공모사업」을 실시함.
- 중앙정부와 인천광역시의 2023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와 관련한 공모사업의 형식과 내용이 이 변화되었다고 할지라도 노인·장애인 등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기초지자체·의료서비스 제공자·건강보험공단 등과 관련되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요양서비스 및 일상생활지원 사회서비스와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은 다양한 형식과 내용으로 계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2019년부터 전국 16개 기초지자체에서 실시된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경우 2021년 3개 지자체(경기도 안산시, 경기도 부천시, 충청남도 청양군)에서, 2022년에는 추가로 프로그램별로 6개 지자체(광주광역시 서구,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 부천시, 충청북도

- 진천군, 부산광역시 북구, 충청북도 진천군)에서 방문의료·통합간호·방문진료 등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이 방문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의료 특화프로그램’을 실시하였음.
- 2022년 실시된 인천광역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에서는 참여한 3개 기초지자체(동구, 미추홀구, 부평구)가 동원할 수 있는 보건의료자원의 종류와 양에 따라 현금급여인 의료비지원(미추홀구), 현물급여인 간호사의 방문간호와 건강교실운영(동구, 미추홀구) 및 의사의 방문진료(부평구) 등을 제공하였음.
 -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의료기관이나, 생활시설에서 나와서 지역사회로 들어가 지역주민들과 함께 살아가는 데 필요한 주거지원·보건의료·요양돌봄 일상생활지원 사회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자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을 표제로 하는 다양한 시범사업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어떤 방식으로 연결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음.
 - 지자체마다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진료협력을 받거나, 해당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의 방문진료(방문의료), 또는 간호사의 방문간호뿐만 아니라, 보건소·읍면동사무소의 간호사의 방문간호 등 다양한 형태의 보건의료서비스 연계가 시도되고 있음.
 - 또한, 간호사의 방문간호와 건강교실운영은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사업’ 차원에서 기초지자체에 추가적으로 배정된 간호직 공무원들이 행정복지센터에서 수행하기도 하며, 의사의 방문진료(방문의료)는 기초지자체와 의사(집단)/의료기관간 협의·계약에 따라 진행되기도 함.
 - 이러한 의미에서 지난 2022년 보건복지부의 특화사업 및 인천광역시의 시범사업에서 진행되었던 보건의료서비스 연계 지역사회 통합돌봄 프로그램들을 정리하여 분석하고 비교하여 광역지자체인 인천광역시에 필요한 지역맞춤형 보건의료연계 통합돌봄서비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2) 연구목적

- 본 연구는 노인장애인 등 건강취약계층이 일상생활에서 시민행복을 실현하는 방안의 하나로 중앙정부 및 인천광역시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관련 다양한 사업에서 제공되는 보건의료 연계 서비스의 현황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찾아서 향후 인천광역시의 기초지자체에서도 실시할 수 있는 보건의료 연계 서비스의 활성화 방안을 찾고자 함

3) 연구의 내용

-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됨.
 - 첫째, 2021년~2022년 중앙정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차원에서 실시된 보건의료 특화프로그램 분석
 - 둘째, 2022년 인천광역시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에서 실시된 보건의료 관련 프로그램 분석
 - 셋째, 중앙정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차원에서 수행된 9개 보건의료 특화프로그램을 방문의료·방문간호·방문건강관리 서비스로 구분하여 분석
 - 넷째, 지역사회에서 방문의료를 제공하는 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현황 분석
 - 다섯째, 시민행복 실현을 위한 인천광역시 10개 군·구 지역맞춤형 보건의료연계 통합돌봄서비스 활성화 방안 모색.

2.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보건의료연계 서비스

1) 중앙정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1) 중앙정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 중앙정부의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은 대상자를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로 구분하여 전국 16개 기초지자체에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실시되었음.

[표 1] 2021년 노인 대상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대상자 범주

공통 유형 (보건복지부 제시)	자체 유형 (지자체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양병원 장기입원 후 지역사회 복귀 유형 · 단기 입원환자 지역사회 복귀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의료기관 단기 입원 후 지역사회 복귀자 : 고관절/뇌혈관질환 수술 후 지역사회 복귀자 · 시설 입소자 중 지역사회 복귀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양원, 노인생활시설 퇴소자 : 장애인/정신건강 생활시설 퇴소자 · 통합건강돌봄유형 실증사업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낙상관리 필요군 : 운동재활 필요군 : 만성질환자 중 과소치료군/미관리군/다제약제관리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 만성질환자/기능저하자 · 지자체 발굴 사각지대자 · 치매 어르신 · 통합돌봄 종결자 관리 · 농촌마을 돌봄 유형 · 돌봄위기가구 · 거점돌봄센터 유형 · 장기요양등급자 · 75세 이상 돌봄사각지대

자료: 정현진 외(2021)에서 편집

- 노인 대상 통합돌봄 선도사업에서 대상자의 범주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제시하는 공통 유형과 지자체의 자체 유형으로 구분되고 구체화 됨(정현진 외, 2021).

[표 2]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

	주거	신체건강/보건의료	일상생활지원	보호돌봄요양
연계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NH 공공형 안심주택/매입임대 공공 리모델링 ·새마을/도시재생 뉴딜 ·주거편의시설 이주비용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차의료 만성질환 시범사업 ·방문진료수가 시범사업 ·의료기관 퇴원지원 시범사업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사업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지역사회중심재활(CBR) ·재가정신질환자 사례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돌봄가족지원사업 ·장애인주간활동지원
선도 사업 예산 + 자체 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 편의주택 개보수 ·케어안심주택 ·고령자안심주택 ·중간집 운영 ·공동생활홈 ·안심생활(주거)지원 ·주거위생환경개선 ·장애인자립주택 전담코디네이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능회복훈련 ·한의주치의/방문한의 ·방문치과/구강관리 ·다제약물복용관리 ·허약노인운동관리 ·방문재활/물리치료 ·치매맞춤돌봄 ·건강관리교육패키지 ·검진비 지원 ·건강돌봄센터 구축 ·퇴원환자 안전확인 ·거점돌봄센터 축적의 ·낙상예방교육 ·지역호스피스 ·건강리더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바일안심케어 ·이동지원(돌봄택시 등/병원동행) ·영양 급식 ·퇴원자 복지/가재도구 지원 ·24시간돌봄/위기대응 ·복지용구 ·스마트홈/ICT ·돌봄패키지 ·자립지원코디네이터(장애인, 정신질환) ·틈새돌봄 ·예방형 마을돌봄 ·가시간병지원 ·안부확인/정서지원 ·방문이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문도우미/요양/가사 지원 ·긴급돌봄 ·거점시설 마을돌봄 ·통합인지지원/정서지지 ·노인정신건강프로그램 ·법률상담 ·1인가구 스마트안심지원 ·일자리사업 ·응급안전알림 ·케어팜(care farm)

자료: 정현진 외(2021)

○ 중앙정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에서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는 내용 및 제공주체에 따라 구분할 수 있음(정현진 외, 2022).

- 서비스 내용

- 주거 서비스 : 주거공간 제공
- 신체건강/보건의료 서비스(보건의료 서비스) : 방문의료, 방문진료, 방문간호 등
- 보호돌봄요양 서비스 :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맞춤형돌봄 등의 서비스
-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 집 청소, 식사 제공, 병의원공공기관 동행서비스 등

- 서비스제공 사업의 주체

- 타 기관이 운영하는 사업과 연계하는 사업
- 선도사업과 지자체 자체 사업으로 실시하는 사업

○ 중앙정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 중 다른 (공공)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하는 경우, 특히,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신체건강/보건의료 서비스(보건의료 서비스)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과의 연계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임.

-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에서 신체건강/보건의료 서비스(보건의료 서비스)와의 연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음(이용갑 외, 2022).

- 대상자 선정에서는 ‘일차의료 만성질환 시범사업’ 참여자가 연결되어야 하지만,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법 규정 때문에 기관간 정보연계가 어려운 참여자에 대한 정보제공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임.
- 대상자 선정에서는 ‘의료기관 퇴원지원 시범사업’ 및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사업’의 경우 퇴원 전부터 당사자의 동의 및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의료기관-지자체 간 퇴원환자 지원에 대한 교육과 지원 등에 대한 협력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임.
- 특히, 의료기관 퇴원환자들이 자기 집에서 거주하면서 의료기관에 재입원하지 않고 거주지에서 통상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방문진료수가 시범사업’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참여 부진으로 활성화되지 못하면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한 축인 국민건강보험에 의한 신체건강/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이 원활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노인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실시하는 지자체는 선도사업 예산과 지자체 예산을 사용하여 기존 공적 사회서비스가 부족한 틈새를 메우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들을 개발하고 확대하였음.
- 지자체마다 개별적으로 '퇴원환자 관리', '기능회복훈련', '방문진료방문간호방문치과방문약사방문한의사' 등과 같은 보건의료인의 방문서비스 제공, 구강관리 등의 신체건강/보건의료 서비스(보건의료 서비스) 이 개발되고 활성화되고 있음.

(2) 중앙정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과 보건의료 특화프로그램

- 노인들도 중앙정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에서 신체건강/보건의료 서비스(보건의료 서비스)와 건강보험과의 연계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음.
- 이에 따라, 2021년 보건복지부는 노인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서비스와 돌봄서비스의 연계 기반이 구축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역 3개 기초지자체에서 '방문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의료 특화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함.

[표 3] 2021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보건의료 특화프로그램

지역	사업명	대상	내용	협력기관
경기도 안산	거점형 케어안심 주택 통합돌봄 협력모델	관내 거주, 무주택세대, 병원 단/장기 입원환자 지역 복귀 등	케어안심주택에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등	안산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충남 청양군	찾아가는 의료원	통합돌봄 대상자 중 방문진료 필요자 등	진료실, 심전도검사기 등을 갖춘 찾아가는 진료버스	보건의료원
경기도 부천시	방문간호센터	거동 불편한 통합돌봄 대상자 등	통합방문간호 서비스 제공 (가정간호+방문건강관리사업+ 노인장기요양 방문간호)	보건소

자료: 보건복지부(2022.08.18.)

- 2022년 5월에 출범한 새로운 정부는 '커뮤니티 케어(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실현을 위한 지역 의료-돌봄 연계체계 구축'을 국정과제의 하나로 설정하고, 지역사회 거주 유지에 필수적이지만 그간 공급이 부족했던 보건의료서비스의 확충을 적극적으로 추진함.
- 이에 따라, 2022년 8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역에서 '보건의료 특화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은 6개 기초지자체를 추가로 선정하여, 2021년 시작한 기초지자체를 포함하여 모두 9개 기초지자체에서 자체 개발한 '보건의료 특화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함.

[표 4] 2022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보건의료 특화프로그램

지역	사업명	대상	내용	협력기관	비고
광주 서구	재택 의료센터	재택의료 필요 대상자	다학제 팀 통한 의료-요양-돌봄 통합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지역 의원	방문의료
경기도 안산	집으로 온 주치의 2.0			안산 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경기도 부천	재택 의료센터			부천 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충북 진천	생거진천 재택의료센터			지역 의원	
충북 진천	우리동네 돌봄스테이션	장기요양등급 내·외자, 퇴원환자 등	통합방문간호 서비스 제공 (방문간호를 중심으로 재활, 영양, 정신재활 등 통합사례관리)	지역 종합병원	통합간호
부산 북구	찾아가는 통합안내 창구	의료버스 이용자	부산광역시 의료버스(3대)와 통합안내창구 전담요원 연계	부산광역시	방문 건강관리

자료: 보건복지부(2022.08.18.)

2) 2022년 인천광역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

- 인천광역시는 2022년 공모로 선정된 3개 기초지자체(동구, 미추홀구, 부평구)에서 돌봄이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지역에서 필요한 통합돌봄 모델을 자체 개발하고, 실시하여 지역사회에서 통합돌봄 환경을 조성하고, 통합돌봄 서비스에 대한 지원 역량을 강화하고자 「2022년 인천광역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실시함.
- 인천광역시 동구, 미추홀구 및 부평구가 「2022년 인천광역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에서 실시한 다양한 세부 사업 중 2021~2022년 중앙정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보건의료 특화프로그램’과 유사하게 보건의료 연계 특성을 갖는 세부 사업은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음.
 - 동구의 ‘동구 건강 매니저 사업’, 미추홀구의 ‘건강서비스 운영지원 사업’은 간호사가 대상자의 자가를 방문하여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간호’에 해당함.
 - 부평구의 ‘팀기반 방문의료사업’은 의사가 수행하는 ‘방문의료’사업에 해당함.
 - 부평구의 ‘어르신 한방주치의사업’는 한의사가 수행하는 ‘방문한방의료’사업에 해당함.

[표 5] 2022년 인천광역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 중 보건의료 서비스

지역	사업명	대상	담당자/협력기관	비고
동구	동구 건강매니저*	의료기관 퇴원환자 및 방문관리가 필요한 취약계층 만성질환자	동(洞) 행정복지센터 근무 간호직 공무원	방문건강관리, 방문간호
	봄봄봄 건강교실	건강에 관심 있는 지역주민	동(洞) 행정복지센터 근무 간호직 공무원	건강교실 (예방·건강관리)
	건강검진사업	건강검진이 필요한 만65세 이상 노인	의료기관	건강검진비 지원
미추홀구	건강서비스 운영지원*	1인 가구 노인	재가노인복지센터의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보건소 간호사	방문건강관리, 방문간호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만성질환자, 치과 진료가 필요한 돌봄대상자	동(洞) 행정복지센터	의료비 지원 (1인 100만원; 치과 200만원)
부평구	어르신 한방주치의사업*	만성질환, 근골격계 질환 거동 불편 노인	부평구 한의사회	방문한방의료
	팀기반 방문의료사업*	의료지원 필요, 병의원의 진료를 받지 못하는 가구	인천평화 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방문의료
	100세 건강교실	중장년, 노인 만성질환자	동(洞) 행정복지센터 근무 간호직 공무원	건강교실 (예방·건강관리)

* 2021~2022년 중앙정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차원에서 실시된 '보건의료 특화프로그램'의 특성을 갖는 보건의료연계사업

3. 보건의료연계 통합돌봄서비스

1) 중앙정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보건의료 특화프로그램

(1) 보건의료 특화프로그램 현황

- 2019년 시작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보건의료연계 서비스의 개발과 제공이 어렵다는 평가(정현진 외, 2021)에 따라 2021년과 2022년에 재택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의료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함.
- ‘보건의료 특화프로그램’의 범주는 기본적으로 의사가 중심이 된 ‘방문의료(방문진료)’, 보건소 및 의료기관의 간호사가 수행하는 ‘방문간호’, 의사가 탑승한 의료버스(진료버스)를 이용하는 ‘방문건강관리’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표 6]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보건의료 특화프로그램 분류표

범주	지자체	보건의료 특화프로그램	협력기관
방문의료 (방문진료)	경기도 안산시	거점형 케어안심주택 통합돌봄 협력모델 (2021년)	안산 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집으로 온 주치의 2.0 (2022년)	
	광주광역시 서구	재택의료센터 (2022년)	지역 의원
	경기도 부천시	재택의료센터 (2022년)	부천 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충청북도 진천군	생거진천 재택의료센터 (2022년)	지역 의원
	충청남도 청양군	찾아가는 의료원 (2021년)	보건의료원
방문간호	경기도 부천시	방문간호센터(2021년)	보건소
	충청북도 진천군	우리동네 돌봄스테이션 (2021년)	지역 종합병원
방문건강관리	부산광역시 북구	찾아가는 통합안내창구 (2022년)	부산광역시 및 지역 종합병원

- 원칙적으로 의사와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이 수행하는 ‘보건의료 특화프로그램’의 협력기관은 지역 소재 보건소(보건의료원), 1차 의료기관, 종합병원 및 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등임.

- 이에 따라, 2021년과 2022년에 실시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보건의료 특화프로그램’은 [표 3-1]과 같이 크게 세 범주로 구분할 수 있음.
 - 첫째, 의사가 중심이 된 ‘방문의료(방문진료)’
 - 경기도 안산시의 ‘거점형 케어안심주택 통합돌봄 협력모델’(2021년) 및 ‘집으로 온 주치의 2.0’(2022년)
 - 광주광역시 서구의 ‘재택의료센터’(2022년)
 - 경기도 부천시의 ‘재택의료센터’(2022년)
 - 충청북도 진천군의 ‘생거진천 재택의료센터’(2022년)
 - 충청남도 청양군의 ‘찾아가는 의료원’(2021~2022년)
 - 둘째, 보건소 및 의료기관의 간호사가 수행하는 ‘방문간호’
 - 경기도 부천시의 ‘방문간호센터’(2021년)
 - 충청북도 진천군의 ‘우리동네 돌봄스테이션’(2021년)
 - 셋째, 의사가 탑승한 진료버스를 이용하는 ‘방문건강관리’
 - 부산광역시 북구의 ‘찾아가는 통합안내창구’(2022년)

(2) 보건의료 특화프로그램 유형

- 2022년 현재 중앙정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차원에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 등 건강취약계층에게 지역 소재 의원이나,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의 의사가 중심이 되어 방문의료(방문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의료 특화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4개 기초지자체는 경기도 안산시, 광주광역시 서구, 경기도 부천시, 충청북도 진천군임.
 - 방문의료 서비스 제공 4개 기초지자체 중 지역 소재 의원(1차 의료기관)이 방문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2개 기초지자체는 광주광역시 서구와 충청북도 진천군이며, 지역에서 활동하는 ‘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이 방문의료(방문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2개 기초지자체는 경기도 안산시와 부천시임.

- 2022년 현재 중앙정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차원에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 등 건강취약계층에게 보건소나 지역 소재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의료 특화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지자체는 경기도 부천시와 충청북도 진천군 총 2개소임.
- 이 중 지자체의 보건소가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초지자체는 경기도 부천시이며, 지역소재 민간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초지자체는 충청북도 진천군임.
- 이에 따라, 2개 기초지자체가 제공하는 방문간호 보건의료 특화프로그램 현황에 대한 일반적 분석이 필요함.

[표 7] 보건의료 특화프로그램 유형 1 : 방문의료(방문진료)

지자체	대상자	방문의료 서비스	전담팀 구성
광주광역시 서구	·거동이 불편하고 재택의료가 필요한 노인 247명	·방문의료 ·방문간호 ·방문재활	·지역 의원의 재택의료센터 ·의사간호사 2인 1조
충청북도 진천군	·장기요양등급자 1~4등급 80명 ·병원 퇴원자 20명	·방문의료 ·방문간호 ·방문재활	·지역 의원의 재택의료센터 ·의사 1명, 간호사 1명, 사회복지사 1명, 물리/재활치료사 1명
충청남도 청양군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자 중 방문의료 가 필요한 자 ·거동불편자 중 방문의료 가 필요한 자 ·그 외 방문진료 요청하는 자	·방문의료 ·방문간호 ·방문재활 ·방문건강상담	·의사 1명, 간호사 1명, 물리치료사 1명, 읍면사무소 근무 간호사 1명
경기도 부천시	·장기요양 1~4등급자 중 재택의료 필요자 40명 ·등급의 자 중 재택의료 필요자 10명	·방문의료 ·방문간호 ·방문재활 ·방문구강보건	·「부천 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부천 시민의원'의 재택의료센터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치위생사
경기도 안산시	·거동이 불편하고 정기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자(6가지 유형)	·방문의료 ·방문간호 ·방문재활 ·방문상담	·「안산 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새안산의원'의 재택의료센터 ·의사 2명, 간호사 2명, 사회복지사 1명, 작업치료사 1명, 물리치료사 1명

- 2022년 현재 중앙정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차원에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 등 건강취약계층에게 의료장비를 탑재한 '진료버스'를 이용하거나, 또는 보건의료원의

‘마을순회 이동진료’를 의사가 중심이 되어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의료 특화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지자체는 부산광역시 북구임.

[표 8] 보건의료 특화프로그램 유형 2 : 방문간호

지자체	대상자	담당 조직	인력구성*
경기도 부천시	65세 이상 노인 58명	부천시 보건소의 ‘통합방문간호센터’ 운영	의사 1명(보건소 근무 의사), 간호사 4명, 간호 직 공무원 1명
충청북도 진천군	65세 이상 노인 375명	민간 의료기관 통합간호센터 ‘우리 동네 돌봄스테이션’ 운영	센터장(진천중앙제일병원 가정의학과 의사), 팀장(간호사), 방문간호팀(간호사 4인), 민간협 력팀(영양사 1인, 물리치료사 1인, 정신건강전 문요원 1인, 사회복지사 2인)

*경기도 부천시 및 충청북도 진천군의 통합방문간호센터 인력구성에는 의사가 1명이 포함되어 있음.

- 부산광역시 북구의 경우 부산광역시가 민간의 후원을 받아 마련한 의료버스(진료버스)와 연계한 통합안내창구 중심으로 보건의료 특화프로그램을 운영 중임.

2) 인천광역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의 보건의료연계 서비스

- 「2022년 인천광역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모니터링한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은 인천광역시 동구, 미추홀구 및 부평구의 세부 사업 중 보건의료연계 사업의 진행과정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음(김지영 외, 2022).
 - 건강관리를 포함한 방문간호(간호사)
 - 동구의 ‘건강 매니저 사업’은 의료기관 퇴원환자 및 방문건강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 중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정방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동(洞) 행정복지센터 근무 간호직 공무원의 보건의료연계 통합돌봄서비스임.
 - 동구는 간호직 공무원이 의료서비스와 함께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대상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2022년 200만원)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자체 평가하고 있음.
 - 미추홀구의 ‘건강서비스 운영지원 사업’은 미추홀구의 구역별 4개 재가노인복지센터에 혈액계 18대씩을 제공하여 노인복지센터 이용자들이 스스로 혈압을 점검하여 건강위험을 발견할 경우 보건소 방문간호사와 연계하여 보건소의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의 자기건강관리와 결합한 보건소 간호사의 보건의료 연계 통합돌봄서비스임.
 - 2022년 4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건강서비스 운영지원 사업’ 차원에서 재가노인복지센터 이용자 중 1,053명이 18,781회 혈압을 체크하고, 건강위험을 발견하여 보건소 간호사와의 지원으로 병원으로 연계한 것은 35건이었음.

- 방문의료사업(의사)
 - 부평구의 ‘팀기반 방문의료사업’은 의료서비스 지원이 필요하지만,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을 수 없는 가구에 의사를 포함한 구성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팀이 월 1회 방문하여 진단과 처치 및 재활치료를 제공하고, 소모성 의료용품을 지원하는 보건의료연계 서비스임.
 - 부평구는 2022년 3,200만원(구비 100%)을 예산으로 ‘인천평화 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과 협력하여 28가구에 258회 팀기반의 방문의료서비스를 제공함.
- 방문한방의료(한의사)
 - 부평구의 ‘어르신 한방주치의사업’은 만성질환, 근골격계 질환이 있는 거동 불편 노인을 대상으로 한방진료 침부항 등 방문한방서비스, 통증 및 신체기능 관리, 관련 운동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보건의료연계 서비스임.
 - 부평구는 2022년 3,000만원(시비 30%, 구비 70%)을 예산으로 ‘부평구 한의사회’와 협력하여 19명에게 ‘방문한방의료’를 제공함.

4. 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과 보건의료연계 통합돌봄서비스

1) 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 자연인인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은 ‘의료법인’, 또는 ‘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임.
 - ‘의료법인’은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반면에, ‘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조합원들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임.
 -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은 원칙적으로 조합원만이 이용하도록 제한되어 있지만, 의료보전사업을 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즉 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은 50%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도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함.
 - 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의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하며, 또한 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이 의료보전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도 필요함.
 - 2013년 5월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 전국 최초로 인가를 받아 활동을 시작함.
 - 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지역은 초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었지만, 그 후 전국에서 설립됨에 따라 2022년 12월 말 현재 36개 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되어 활동 중임.
 - 36개 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 규모는 평균 1,642명, 자본금은 평균 5.1억원이며, 연간 매출액은 평균 39.4억원임(관계부처합동, 2023.3.3.).

- “건강할 권리, 협동하는 사람, 건강한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지역주민과 조합원, 의료인이 협동하여 의료기관 운영, 건강증진 활동 등을 통해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사회적협동조합인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1994년 4월 처음 창립된 ‘농민·의료인과 함께 하는 안성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서 시작함.
 - 2023년 12월 5개 생활협동조합이 ‘한국의료생활협동조합연대’를 창립한 후,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의료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이 ‘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되고, 연합체(‘한국의료생활협동조합연대’)는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전환됨.
 - 2022년 11월 현재 정부가 설립을 인가한 전국의 36개 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중 28개 조합이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음.
- 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은 크게 다섯 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음.
 - 첫째, 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은 의과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과 같은 지역사회 1차 의료기관 운영하면서 조합원과 지역주민에게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함.
 - 둘째, 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원과 지역주민의 건강관리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종류의 ‘자체 사업’을 하고 있음.
 - 셋째, 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민관협력 사업, 또는 공모사업’ 형식으로 지역사회에서 주민건강관리사업을 수행함.
 - 넷째, 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사회 거주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제공을 ‘공익사업’을 수행함.
 - 다섯째, 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원과 지역주민이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그리고 함께 관리하는 ‘건강관계망 형성’을 위한 사업도 수행함.

[표 9] 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 범주

범주	사업 내용
[범주 1] 양질의 의료서비스 적절하게 제공	·의과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등 지역사회 1차 의료기관 운영
[범주 2] 자체 사업	·건강검진센터, 재가장기요양센터, 요양원, 요양보호사 교육원, 가정간호 사업소, 운동센터 등 운영 ·급식사업소, 장애인활동보조사업, 노인일자리사업, 주거코치사업 등 실시
[범주 3] 공모사업으로 지역사회 건강관리사업	·인천 : 마을건강(건강달인)들” 사업 ·전주 : 내 건강 내가 지킴 사업 ·안산 :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서울 마포 : 더-이음 프로젝트 ·노티나무 : 통합돌봄 네트워크사업 중 의료지원사업 ·부천 :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역리더 양성 및 활동 ·화성 : 확대형 가사지원서비스지원자 파견사업 ·해바라기 : 용인형 돌봄서비스 같이가치
[범주 4] 공익사업	·가족주치의사업 ·방문의료사업
[범주 5] 건강관계망 형성 사업	·건강리더/건강반장 양성 및 활동 ·건강생활실천단(안산) ·지역사회 건강 캠페인

2) 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의 방문의료·방문간호 서비스

- 2022년 말 전국에 36개가 활동하고 있는 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중 중앙정부의 전국단위 시범사업이나, 지자체의 지역단위 시범사업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의사의 방문의료 서비스, 간호사의 방문간호 서비스, 물리치료사의 방문재활, 약사의 방문약료 등 보건의료연계 통합돌봄 서비스의 제공 양상을 분석하고자 함.
 - 부천 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차원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역리더 양성 및 활동」을, 2022년에는 보건의료 특화프로그램으로 ‘재택의료센터’ 사업을 수행함.
 - 2019년 2월에는 부천시와 부천형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0년 2월에는 부천시민 의원을 재개원하면서 ‘재택의료센터’를 개설하여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에 참여함.

- 안산 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은 2021년과 2022년까지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보건의료 특화프로그램으로 ‘거점형 케어안심주택 통합돌봄 협력모델’(2021년) 및 ‘집으로 온 주치의 2.0’(2022년)을 수행함.
- ‘인천평화 의료복지 사회적조합’은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우리 동네 어르신을 돌보는 건강마을 지킴이 만들기 “마을건강(건강달인)들”」 사업 및 2022년에는 인천광역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에 참여한 부평구로부터 「탐기반 방문의료」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광주 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은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에는 참여하지는 않지만, 지역사회에서 지역주민과 의료인이 협동으로 돌보는 건강자치공동체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5. 지역맞춤형 보건의료연계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방안

1) 지역맞춤형 보건의료연계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원칙

- 지역사회 통합돌봄 관련 사업에서 보건의료 서비스를 연계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
- 첫째, 중앙정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경우 신체건강/보건의료 서비스(보건의료 서비스)와 건강보험과의 연계가 쉽지 않다는 것이 계속 지적되는 문제임(정현진 외, 2021).
- 이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의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역에서 ‘방문의료’가 연계되지 못한다는 것이 하나의 문제였음(이용갑 외, 2020; 정현진 외, 2021; 유애정 외, 2022).
- 둘째,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한 『노인복지법』에 따른 3년 단위 법정 조사인 「2020년 노인실태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9.4%가 자기 집에서 계속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서비스를 ‘방문의료’라고 대답함으로써 지역사회 통합돌봄 관련 사업에서 보건의료 서비스 연계문제가 중요한 이슈임을 확인시켜주고 있음.

- 셋째, 2022년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이 「2022년 인천광역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공무원 및 민간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FGI 결과에서도 보건의료서비스의 확대가 의제로 제기됨(김지영 외, 2022).
 - FGI에서 공무원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에서 향후 필요한 ‘건강 관련 서비스’라고 표현함.
 - 민간기관 종사자들은 ‘건강검진, 병원 이동 차량 지원, 운동관리 지원과 같은 의료지원 및 건강 관련 서비스’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에서 서비스의 종류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대답함.
- 지역사회 통합돌봄에서 보건의료 서비스와의 연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가 2021년부터 시작됨.
 - 2021~2022년에 실시된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보건의료 특화프로그램」의 경우 참여한 기초지자체별로 방문의료, 방문간호 및 방문건강관리가 제공됨.
 - 방문의료(방문진료) 서비스 제공 지자체 : 경기도 안산시, 광주광역시 서구, 경기도 부천시, 충청북도 진천군, 충청남도 청양군
 - 방문간호 서비스 제공 지자체 : 경기도 부천시, 충청북도 진천군
 -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지자체 : 부산광역시 서구(부산광역시의 진료버스 연계)
 - 「2022년 인천광역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 경우 참여한 지자체별로 방문의료, 방문간호가 제공됨.
 - 방문의료(방문진료) 및 방문한방의료 서비스 제공 지자체 : 부평구
 - 방문간호 서비스 제공 지자체 : 동구, 미추홀구
-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 기초지자체가 보건의료연계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다음과 같은 원칙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보건의료연계 통합돌봄서비스의 제공대상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함.
 - 둘째, 어떤 범주/종류의 보건의료연계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함.
 - 셋째, 핵심적으로 제공하는 보건의료연계 통합돌봄서비스는 주로 어떤 기관이 제공하는가를 결정해야 함.
 - 넷째, 제공하는 보건의료연계 통합돌봄서비스는 어떤 사회보장제도와 연계해야 하는가를 결정함.

- 다섯째, 보건의료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공기관을 선택할 필요가 있음.
- 여섯째, 보건의료연계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광역지자체, 또는 인근 다른 기초지자체와의 협력을 결정해야 함.

[표 10] 보건의료연계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원칙

구분	내용
서비스 대상자	·노인 : 건강취약 일반 노인,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등급자 ·장애인 ·건강위험 일반 주민
서비스 종류 (주 제공자)	·방문의료/방문진료(의과 의사) ·방문한방진료(한의사) ·방문치과진료(치과의사) ·방문간호(간호사) ·방문약료(약사) ·방문재활(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재활치료사 등) ·방문건강관리(의과 의사, 간호사, 작업/물리/재활 치료사, 영양사) ·방문사례관리(사회복지사)
서비스 제공기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지역 소재 1차 의료기관(의과 의원, 치과 의원, 한의원) ·지방의료원/지역 소재 종합병원 ·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서비스 연계 사회보장제도	·건강보험/의료급여(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맞춤형돌봄사업(기초지자체) ·장애인활동지원사업(기초지자체)
서비스 제공 지역	·도시지역(보건소, 지역 1차 의료기관,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농어촌(보건소, 지역사회 의료기관)
타 지자체와 연계	·광역지자체와 연계 ·동일 중진료권 내 기초지자체와 연계

2) 지역맞춤형 보건의료연계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방안

- 지자체의 행정구역상 특성(시·군·구)를 기준으로 기초지자체가 제공할 수 있는 최소 범주의 '지역맞춤형' 보건의료연계 통합돌봄서비스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자치구(區)
 - 보건소·지역 1차의료기관·지방의료원·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동 행정복지센터의 [방문의료] + [방문간호] + [사례관리]
 - 보건소동 행정복지센터 [방문간호] + [사례관리]
 - 둘째, 자치군(郡)
 - 보건소·지역 소재 1차의료기관·종합병원·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방문의료] + [방문간호] + [사례관리]
 - ‘1심 1주치(主治) 병원’·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방문의료] + [방문간호] + [사례관리]
 - 보건소·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방문간호] + [사례관리]
- 부산광역시의 ‘의료버스’ 사례와 같은 인천광역시가 옹진군·강화군과 함께 하는 도서지역 민관협력 무료방문진료사업인 ‘1심 1주치(主治) 병원’ 사업으로 보건의료연계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경우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표 11] 인천광역시 기초지자체의 지역맞춤형 보건의료연계 통합돌봄서비스 개발

지자체	연결 의료기관		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제공 가능 최소 보건의료연계 통합돌봄 서비스
	지방 의료원	1심 1주치 병원		
중구	○	-	-	·[1안] 방문의료+방문간호+ 사례관리 ·[2안] 방문간호+사례관리
동구				
미추홀구				
옹진군	○	○	-	·[1안] 방문간호+사례관리간호+사례관리 ·[2안] 방문의료+방문간호+ 사례관리
연수구*	-	-	○ (인천평화)	·[1안] 방문의료+방문간호+ 사례관리 ·[2안] 방문간호+사례관리
남동구*				
계양구				
부평구				
서구				
강화군	○	○	-	·[1안] 방문간호+사례관리간호+사례관리 ·[2안] 방문의료+방문간호+ 사례관리

* 중진료권 인천남부권의 경우 인천직십자병원이 지역책임의료기관임.

- 인천광역시 10개 기초지자체가 행정구역 특성, 지방의료원 유무/도서지역 민관협력 무료방문진료사업, 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고려하여 제공할 수 있는 최소 범주의 ‘지역맞춤형’ 보건의료연계 통합돌봄서비스는 다음과 같이 개발할 수 있음.

- 중구

- [1안] (보건소·지역 1차의료기관·인천의료원) 방문의료 + (동 행정복지센터·보건소·지역 1차의료기관·인천의료원) 방문간호 + (동 행정복지센터·보건소) 사례관리
- [2안] (동 행정복지센터·보건소) 방문간호 + (동 행정복지센터·보건소) 사례관리

- 동구

- [1안] (보건소·지역 1차의료기관·인천의료원) 방문의료 + (동 행정복지센터·보건소·지역 1차의료기관·인천의료원) 방문간호 + (동 행정복지센터·보건소) 사례관리
- [2안] (동 행정복지센터·보건소) 방문간호 + (동 행정복지센터·보건소) 사례관리

- 미추홀구

- [1안] (보건소·지역 1차의료기관·인천의료원) 방문의료 + (동 행정복지센터·보건소·지역 1차의료기관·인천의료원) 방문간호 + (동 행정복지센터·보건소) 사례관리
- [2안] (동 행정복지센터·보건소) 방문간호 + (동 행정복지센터·보건소) 사례관리

- 연수구

- [1안] (보건소·지역 1차의료기관·인천직십자병원) 방문의료 + (동 행정복지센터·보건소·지역 1차의료기관·인천직십자병원) 방문간호 + (동 행정복지센터·보건소) 사례관리
- [2안] (동 행정복지센터·보건소) 방문간호 + (동 행정복지센터·보건소) 사례관리

- 남동구

- [1안] (보건소·지역 1차의료기관·인천직십자병원) 방문의료 + (동 행정복지센터·보건소·지역 1차의료기관·인천직십자병원) 방문간호 + (동 행정복지센터·보건소) 사례관리
- [2안] (동 행정복지센터·보건소) 방문간호 + (동 행정복지센터·보건소) 사례관리

- 계양구

- [1안] (보건소·지역 1차의료기관) 방문의료 + (동 행정복지센터·보건소·지역 1차의료기관) 방문간호 + (동 행정복지센터·보건소) 사례관리
- [2안] (동 행정복지센터·보건소) 방문간호 + (동 행정복지센터·보건소) 사례관리

- 부평구

- [1안] (보건소·지역 1차의료기관·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방문의료** + (동 행정복지센터·보건소·지역 1차의료기관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방문간호** + (동 행정복지센터·보건소·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사례관리**
- [2안] (동 행정복지센터·보건소·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방문간호** + (동 행정복지센터·보건소·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사례관리**

- 서구

- [1안] (보건소·지역 1차의료기관) **방문의료** + (동 행정복지센터·보건소·지역 1차의료기관) **방문간호** + (동 행정복지센터·보건소) **사례관리**
- [2안] (동 행정복지센터·보건소) **방문간호** + (동 행정복지센터·보건소) **사례관리**

- 강화군

- [1안] (읍면 행정복지센터·보건소) **방문간호** + (읍면 행정복지센터·보건소) **사례관리**
- [2안] (보건소·지역 1차의료기관·1심 1주치(主治) 병원) **방문의료** + (읍면 행정복지센터·보건소·지역 1차의료기관·1심 1주치(主治) 병원) **방문간호** + (읍면 행정복지센터·보건소) **사례관리**

- 용진군

- [1안] (읍면 행정복지센터·보건소) **방문간호** + (읍면 행정복지센터·보건소) **사례관리**
- [2안] (보건소·지역 1차의료기관·1심 1주치(主治) 병원) **방문의료** + (읍면 행정복지센터·보건소·지역 1차의료기관·1심 1주치(主治) 병원) **방문간호** + (읍면 행정복지센터·보건소) **사례관리**

- 행정구역 특성, 지방의료원 유무/도서지역 민관협력 무료방문진료사업, 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고려하여 인천광역시 10개 기초지자체가 원칙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최소 범주의 '지역맞춤형' 보건의료연계 통합돌봄서비스의 기획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타 지역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 도시지역 기초지자체가 방문의료 및 방문간호를 기획할 경우 다음과 같은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 방문의료

- ① 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과 함께 하는 경기도 부천시 사례(재택의료센터), 경기도 안산시 사례(집으로 온 주치의 2.0)
- ② 지역 1차 의료기관과 함께 하는 광주광역시 서구 사례(재택의료센터)

- 방문간호 : 보건소 간호사 및 의사가 참여하는 경기도 부천시 사례(방문간호센터)

- 농어촌지역 기초지자체가 방문의료 및 방문간호를 기획할 경우 다음과 같은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 방문의료 : 지방의료원의 보건의료인들이 지역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충청남도 청양군 사례(찾아가는 의료원)
- 방문간호 : 지역 소재 종합병원과 함께 하는 충청남도 진천군 사례(우리동네 돌봄스테이션)
- 지역 특성, 동원 가능한 보건의료자원, 다른 지역 사례 참고 등을 참고하여 지역사회에 적합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연계 통합돌봄서비스를 기획하고 제공하고자 하는 인천광역시 10개 기초자치체의 다양한 노력에서 반드시 참고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은 것임을 잊지 않는 것도 중요함.
 - 인천광역시의료원 등 지역책임의료기관의 참여
 - 용진군 및 강화군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1섬 1주치(主治) 병원’ 사업
 - 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과의 협력
- 또한, 지역사회에 적합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연계 통합돌봄서비스를 개발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인천광역시 10개 기초자치체의 다양한 노력에서 다음과 같은 보건의료연계 통합돌봄서비스 제공자와 지속적으로 협력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함.
 - 인천광역시의료원·인천적십자병원 등 지역책임의료기관의 참여
 - 용진군 및 강화군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1섬 1주치(主治) 병원’ 사업
 - 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과의 협력

인천시민의 공공행복 수준 조사

■ 이미애 도시사회연구부 연구위원

1.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공공행복의 관점에서 인천시민의 삶과 행복 수준을 조사 및 분석하고, 시민행복 증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안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 다의성을 지닌 행복 개념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행복을 이루는 제반 요소들을 포괄하기 위해서는 행복을 중심에 둔 측정모형과 지표 개발이 필요함
 - 2023년 현재 인천시민의 공공행복(public happiness) 수준을 조사·분석하고, 시민행복 증진을 위한 정책 방향 및 공공행복 조사의 활용 방안에 대해 제안함

2. 공공행복 수준 측정모형 설계

1) 시민과 공동체의 행복 측정

- 공공행복(public happiness)은 공동체를 구성하는 집합적 개인의 행복을 의미함
 - 일반적으로 행복은 공동체와 무관한 원자적 개인의 행복을 일컫는 경향이 있음
 - 이에 비해 공공행복은 어느 한 개인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향유하는 공적 차원의 행복을 의미함
- 공공행복의 측정은 개인과 공동체가 느끼는 행복 수준뿐만 아니라 그 행복을 이루는 데 영향을 미치는 사회조건들의 객관적·주관적 평가를 포함함
 - 삶의 조건(질)에 대한 평가는 총체적인 관점, 또는 정책영역별로 접근할 수 있음
 - 객관적 자료에 근거할 수도 있으나, 응답자의 주관적 평가에 기반한 측정도 가능함
 - 만족과 정서, 삶의 의미는 행복의 근원에 대한 두 가지의 철학적 관점과 대응됨
 - 만족과 정서는 쾌락주의(hedonism), 삶의 의미는 덕성주의(eudiamonism) 관점과 대응하며 응답자의 주관적 평가로서 측정함

2) 공공행복 수준 조사 설계

- 본 연구는 인천시민이 느끼는 삶의 질 수준과 정서 상태, 그리고 자기 삶의 의미와 가치 인식 등을 파악하여 인천시민의 공공행복 수준을 측정하고자 함
 - 삶의 질은 ① 전반적인 삶의 질, ② 영역별 삶의 질, ③ 지역생활 여건 평가로 구성됨
 - 전반적인 삶의 질은 인천시민이 느끼는 전반적인 행복 수준과 삶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기 위한 것임
 - 영역별 삶의 질은 인천광역시 4대 시정목표와 연계한 것으로써, 30개 항목에 대한 인천시민의 (i) 중요도, (ii) 지역수준, (iii) 만족도 인식을 수집하기 위한 것임
 - 지역생활 여건 평가는 전반적인 지역생활 만족도, 지속적인 거주의향, 지역소속감을 진단하기 위한 것임
 - 감정과 정서는 최근 일주일 동안 경험한 긍정적·부정적 감정의 빈도를 묻는 것임
 - 삶의 의미와 가치는 시민이 꿈꾸는 이상적인 삶의 실현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것임

[그림 1] 인천시민의 공공행복 수준 측정모형

삶의 조건(질)	삶의 조건(질)		정서		의미	
	상호주관적 평가	만족	긍정적	부정적	가치	역량
전반적 조건	전반적 조건 평가	전반적 만족도	• 좋음 • 기쁨 • 행복 • 즐거움 • 만족	• 나쁨 • 불쾌함 • 슬픔 • 불안 • 화남	• 가치 있는 삶 • 목적 있는 삶	• 능숙함 • 성장 • 낙천주의 • 긍정관계 • 자부심 • 자율성
영역별 조건	영역별 조건 평가	영역별 만족도				
• 인천시 시정목표 • 인천시 시민행복지표	모두가 잘사는 균형도시 • 주거 • 교통	모두가 잘사는 균형도시 • 주거 • 교통				
	꿈이 실현되는 세계도시 • 경제(개인) • 경제(노동) • 경제(도시) • 환경	꿈이 실현되는 세계도시 • 경제(개인) • 경제(노동) • 경제(도시) • 환경				
	진심과 배려의 소통도시 • 돌봄·교육·복지 • 건강 • 안전 • 공동체·참여·소통	진심과 배려의 소통도시 • 돌봄·교육·복지 • 건강 • 안전 • 공동체·참여·소통				
	미래가치 창조의 혁신도시 • 미래경쟁력 • 문화·여가	미래가치 창조의 혁신도시 • 미래경쟁력 • 문화·여가				
객관주의	주관주의					
	쾌락주의				덕성주의	

- 연구 목적의 달성을 위해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설계함
 - 조사대상은 인천광역시 10개 군·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주민임
 - 거주지역별, 성별, 연령별 인구수를 고려하여 표본 1,000명의 응답사례를 구축함

3. 인천시민의 삶과 행복 수준 분석

1) 삶의 질 평가

- 공공행복의 관점에서 인천시민의 절반 이상은 전반적으로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편임
 - 자신의 전반적인 삶의 질(조건)을 10점 만점에 7점 이상 높이 평가한 응답자는 전체의 53%가량로, 4점 이하로 낮게 평가한 응답자 13.5%보다 4배가량 많음
- 다만, 영역별 삶의 질(조건)에 대한 지역수준이나 만족도는 인천시민이 생각하는 중요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10개 영역, 30개 항목 모두 지역수준과 만족도 점수가 중요도 점수보다 낮음
 - 중요도와 지역수준 간의 편차는 최소 0.7점, 최대 1.6점으로 파악됨
 - 중요도와 만족도 간의 편차는 최소 0.5점, 최대 1.9점으로 집계됨
 - 중요도는 교통(7.35점), 안전(7.3점), 환경(7.24점), 건강(7.2점), 주거(7.15점), 돌봄·교육·복지(6.95점), 경제(6.93점), 미래경쟁력(6.7점), 공동체·참여·소통(6.63점), 문화·여가(6.35점)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지역수준은 교통(6.55점), 주거(6.45점), 환경(6.16점), 건강(6.15점), 안전(6.13점), 돌봄·교육·복지(6.08점), 경제(5.93점), 공동체·참여·소통(5.65점), 문화·여가(5.25점), 미래경쟁력(5.23점) 순으로 높은 평가를 받음
 - 만족도는 주거(6.6점), 교통(6.55점), 환경(6.08점), 건강(6.05점), 안전(6.03점), 돌봄·교육·복지(6점), 경제(5.77점), 공동체·참여·소통(5.48점), 문화·여가(5.15점), 미래경쟁력(5.1점) 순으로 점수가 높음

- 지역생활 여건에 대한 평가에는 응답자의 과반 이상이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음
 - 전반적인 지역생활 만족도, 계속적 거주의향, 지역의 소속감에 대하여 10점 만점에 7점 이상 높은 점수를 부여한 응답자는 각각 42.1%, 49.1%, 33.7% 수준임
- 거주지역에 따른 인식 수준을 살펴보면, 대체로 연수구 주민의 삶의 질이 높게 평가됨
 - 전반적인 삶의 질 평가와 지역생활 여건 평가는 용진군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나, 영역별 삶의 질 평가는 연수구를 1순위로 하는 항목이 더 많음
 - 용진군은 전반적인 삶의 질 평가와 지역생활 여건 평가에서 1순위 지역으로 도출된 것과 달리, 영역별 삶의 질 평가에서는 10순위로 선정된 항목이 가장 많은 지역임
 - 각 영역별 삶의 질(조건)을 따져 보았을 때에는 미흡한 측면이 많으나, 주민들이 인지하는 전반적인 만족도와 행복 수준은 높은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음
 - 다만, 용진군의 경우에는 지역별 인구분포를 감안한 설문대상 표집 과정에서 적은 인원(1,000명 중 4명)이 응답자로 선정돼 나타난 결과일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함
 - 동구와 미추홀구는 전반적인 삶의 질 평가와 지역생활 여건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지역에 해당하며, 영역별 삶의 질 평가에서는 용진군 다음으로 10순위에 선정된 빈도가 높은 지역이기도 함

2) 정서 및 감정

- 조사에 참여한 인천시민 대부분은 최근 일주일 동안 부정적인 감정보다는 긍정적인 감정을 더 자주 경험한 것으로 응답함
 - 5가지의 긍정적 감정에 대하여 10점 만점에 7점 이상 높은 빈도를 경험한 응답자는 전체의 41%가량으로, 4점 이하 빈도를 경험한 응답자 23.2%보다 1.8배가량 많음
 - 7가지 부정적 감정에 대하여 10점 만점에 7점 이상 높은 빈도를 경험한 응답자는 전체의 30.8%가량으로, 4점 이하 빈도를 경험한 응답자 42.1%보다 1.4배가량 적음
 - 긍정적 감정이 5~6점대로 집계되는 것과 비교하여 부정적 감정은 4~6점대로 파악됨
 - 긍정적 감정은 미소나 웃음(6.2점), 행복(6.1점), 평온함(6점), 즐거움(5.9점), 활력(5.3점)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부정적 감정은 피곤(6.2점), 걱정(5.9점), 스트레스(5.6점), 분노(4.5점), 그리고 슬픔, 우울감, 외로움(모두 4.3점) 순으로 조사됨
- 거주지역에 따른 인식 수준을 살펴보면, 긍정적인 감정은 상대적으로 연수구와 용진군 주민의 빈도가 높고, 부정적인 감정은 미추홀구 주민의 빈도가 높은 편임

- 긍정적 감정 1순위와 부정적 감정 10순위에 해당하는 최다지역은 옹진군과 연수구임
- 긍정적 감정 10순위와 부정적 감정 1순위에 해당하는 최다지역은 미추홀구, 계양구임

3) 삶의 의미와 가치

- 조사에 참여한 인천시민의 약 40%는 자신의 삶을 가치 있게 평가하고 있음
- 세부 항목별로 차이가 있긴 하나, 자신이 하는 일을 가치(의미) 있게 느끼고 있으며, 자신의 결정에 의해 이상적인 삶을 실현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표 1] 인천시민의 삶과 행복 수준 분석 종합

(단위: 점, %)

구분	중요도	지역수준		동역수준					
		평균	평균	평균	분포(%)		거주지역별 인식		
					낮음 (1~4점)	높음 (7~10점)	1순위	10순위	
1. 삶의 질 평가									
전반적인 삶의 질	전반적인 행복 수준	-	-	6.5	12.1	55.2	옹진군(7.5)	동구(5.8)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	-	-	6.4	14.9	50.8	옹진군(7.5)	동구(6.0)	
	평균	-	-	6.5	13.5	53.0	옹진군(7.5)	동구(5.9)	
영역별 삶의 질	주거	거주하는 주택의 수준	7.0	6.3	6.5	15.0	51.9	연수구(7.8)	동구(5.5)
		거주지 주거환경 수준	7.3	6.6	6.7	12.0	59.8	연수구(8.0)	옹진군(5.8)
		평균	7.2	6.5	6.6	13.5	55.9	연수구(7.9)	동구(5.7)
	교통	대중교통 이용	7.4	6.5	6.5	16.1	53.5	부평구(7.2)	옹진군(2.5)
		보행환경	7.3	6.6	6.6	13.5	54.4	연수구(7.9)	동구(5.3)
		평균	7.4	6.6	6.6	14.8	54.0	연수구(7.4)	옹진군(4.0)
	경제	지역경제 활성화	6.9	6.0	5.9	20.2	39.8	연수구(7.2)	옹진군(4.8)
		지역 생활물가	7.2	6.2	5.9	19.5	37.9	연수구(6.4)	중구(5.0)
		취업지원 및 근로여건	6.7	5.6	5.5	27.4	29.7	연수구(6.5)	동구(4.5)
	평균	6.9	5.9	5.8	22.4	35.8	연수구(6.7)	동구(4.9)	
	환경	대기환경	6.9	5.3	5.0	38.4	25.6	강화군(6.6)	옹진군(3.8)
		수질환경	7.2	6.1	6.1	19.7	43.7	연수구(7.1)	옹진군(4.5)
		녹지환경	7.4	6.6	6.6	18.4	54.3	연수구(8.0)	옹진군(4.5)
		소음·진동	7.3	6.2	6.1	21.3	45.1	연수구(7.4)	옹진군(4.5)
		자원순환	7.4	6.6	6.6	14.0	54.5	연수구(7.6)	강화군(5.7)
		평균	7.2	6.2	6.1	22.4	44.6	연수구(7.1)	옹진군(5.0)
	돌봄·교육·복지	영유아·아동 돌봄	6.9	6.0	6.0	17.6	39.9	연수구(6.9)	동구(5.0)
		노인·장애인 돌봄	6.9	6.0	5.9	17.7	37.8	연수구(6.8)	미추홀구(5.3)
초·중등 공교육		7.4	6.5	6.5	13.4	51.0	옹진군(8.0)	동구(5.1)	
평생교육		6.6	5.8	5.6	23.7	31.7	연수구(6.5)	미추홀구(5.0)	
평균	7.0	6.1	6.0	18.1	40.1	연수구·옹진군(6.9)	동구(5.2)		

구분		중요도	지역수준		동익수준				
			평균	평균	평균	분포(%)		거주지역별 인식	
						낮음 (1~4점)	높음 (7~10점)	1순위	10순위
건강	생활체육시설 이용	6.9	5.9	5.8	25.2	38.4	웅진군(8.0)	미추홀구(4.8)	
	의료·보건 서비스	7.5	6.4	6.3	19.0	49.7	연수구(7.0)	웅진군(4.0)	
	평균	7.2	6.2	6.1	22.1	44.1	연수구(7.0)	중구·동구(5.1)	
안전	재난·사고 예방 및 대비	7.2	6.0	5.9	20.2	38.6	연수구(7.0)	동구(4.9)	
	재난·사고 대응 및 복구	7.2	6.1	6.0	18.5	39.9	연수구(7.0)	미추홀구(5.1)	
	안전 및 치안	7.5	6.3	6.2	17.6	45.8	연수구(7.4)	동구(5.0)	
평균	7.3	6.1	6.0	18.8	41.4	연수구(7.1)	동구(5.0)		
공동체 · 참여 · 소통	지역사회 유대관계	6.5	5.7	5.5	25.2	29.6	웅진군(7.3)	동구(4.6)	
	정책문제에 대한 시민참여	6.5	5.4	5.2	29.3	25.4	웅진군(6.5)	강화군(4.2)	
	지역사회 포용성	6.6	5.6	5.4	26.9	28.5	웅진군(7.8)	강화군(4.8)	
	공무원 민원행정 서비스	6.9	5.9	5.8	21.2	38.8	웅진군(7.8)	미추홀구(5.2)	
평균	6.6	5.7	5.5	25.7	30.6	웅진군(7.4)	동구(4.8)		
미래 경쟁력	인천시 정책역량과 성과	6.7	5.2	5.1	34.6	24.6	연수구(5.8)	미추홀구(4.4)	
	인천시 도시브랜드	6.7	5.2	5.1	35.8	27.1	중구·웅진군(5.0)	강화군(4.7)	
	인천시 도시경쟁력	6.7	5.3	5.1	34.7	25.7	연수구(6.2)	미추홀구 계양구(4.5)	
	평균	6.7	5.2	5.1	35.0	25.8	연수구(6.0)	미추홀구(4.4)	
문화 · 여가	문화예술 관람·참여	6.5	5.3	5.2	34.7	26.7	연수구(5.7)	중구(4.4)	
	축제관광 및 마이스(MICE)	6.2	5.2	5.1	35.8	25.3	연수구(6.3)	웅진군(4.3)	
	평균	6.4	5.3	5.2	35.3	26.0	연수구(6.0)	미추홀구(4.6)	
지역생활 여건 평가	전반적인 지역생활 만족도	-	-	6.0	19.7	42.1	웅진군(7.3)	미추홀구(5.3)	
	계속적 지역거주 의향	-	-	6.2	18.5	49.1	웅진군(8.3)	미추홀구(5.5)	
	지역에 대한 소속감	-	-	5.5	28.0	33.7	웅진군(7.3)	동구(4.4)	
	평균	-	-	5.9	22.1	41.6	웅진군(7.6)	미추홀구(5.3)	

2. 정서 및 감정

긍정적 감정	평온함	-	-	6.0	22.8	43.0	웅진군(7.3)	미추홀구 계양구(5.7)
	미소나 웃음	-	-	6.2	19.6	47.0	연수구(6.9)	동구(5.6)
	즐거움	-	-	5.9	23.0	43.7	연수구(6.5)	미추홀구 강화군(5.6)
	활력	-	-	5.3	29.8	26.4	웅진군(6.5)	미추홀구 강화군(5.1)
	행복	-	-	6.1	20.6	45.0	연수구(6.8)	서구 강화군(5.7)
	평균	-	-	5.9	23.2	41.0	연수구·웅진군(6.5)	서구(5.6)
부정적 감정	걱정	-	-	5.9	25.9	42.7	부평구(6.2)	웅진군(4.8)
	슬픔	-	-	4.3	54.1	18.9	미추홀구 계양구(4.6)	중·동 연수·남동(4.1)
	우울감	-	-	4.3	53.2	22.2	미추홀구 계양구(4.5)	웅진군(3.8)
	분노	-	-	4.5	52.0	23.2	부평구(4.7)	웅진군(3.5)
	스트레스	-	-	5.6	32.9	38.8	부평구(6.0)	웅진군(4.9)
	피곤	-	-	6.2	22.7	49.3	계양구(6.4)	동구(5.1)
	외로움	-	-	4.3	53.7	20.5	동구(5.1)	웅진군(3.8)
	평균	-	-	5.0	42.1	30.8	미추홀·부평·계양(5.2)	웅진군(4.5)

3. 삶의 의미와 가치

내가 하는 일의 가치	-	-	6.4	17.1	54.0	웅진군(8.3)	미추홀구 계양구(6.1)
-------------	---	---	-----	------	------	----------	---------------

구분	중요도	지역수준	동의수준				
	평균	평균	평균	분포(%)		거주지역별 인식	
				낮음 (1~4점)	높음 (7~10점)	1순위	10순위
이상적인 삶의 일치성	-	-	5.4	31.3	31.7	웅진군(6.8)	계양구·서구(5.1)
내가 하는 일의 성취감	-	-	6.0	21.7	44.2	웅진군(8.0)	계양구(5.6)
내가 가진 조건들의 훌륭함	-	-	5.5	29.9	33.9	웅진군(7.0)	미추홀구·계양구(5.1)
내가 바라는 중요한 것들의 성취도	-	-	5.7	25.9	38.2	웅진군(6.8)	계양구(5.2)
다시 태어나도 현재의 삶을 선택	-	-	4.7	45.8	24.5	웅진군(5.8)	중구·서구(4.5)
인생의 자기결정성	-	-	6.3	16.8	51.5	웅진군(7.5)	동구(5.9)
평균	-	-	5.7	26.9	39.7	웅진군(7.2)	계양구(5.4)

주: 평균은 10점 만점이며, 분포는 점수구간별(1~4점: 낮음, 5~6점: 보통, 7~10점: 높음) 응답자 비중(%)을 나타낸 것임

4. 인천시민의 삶의 질 체감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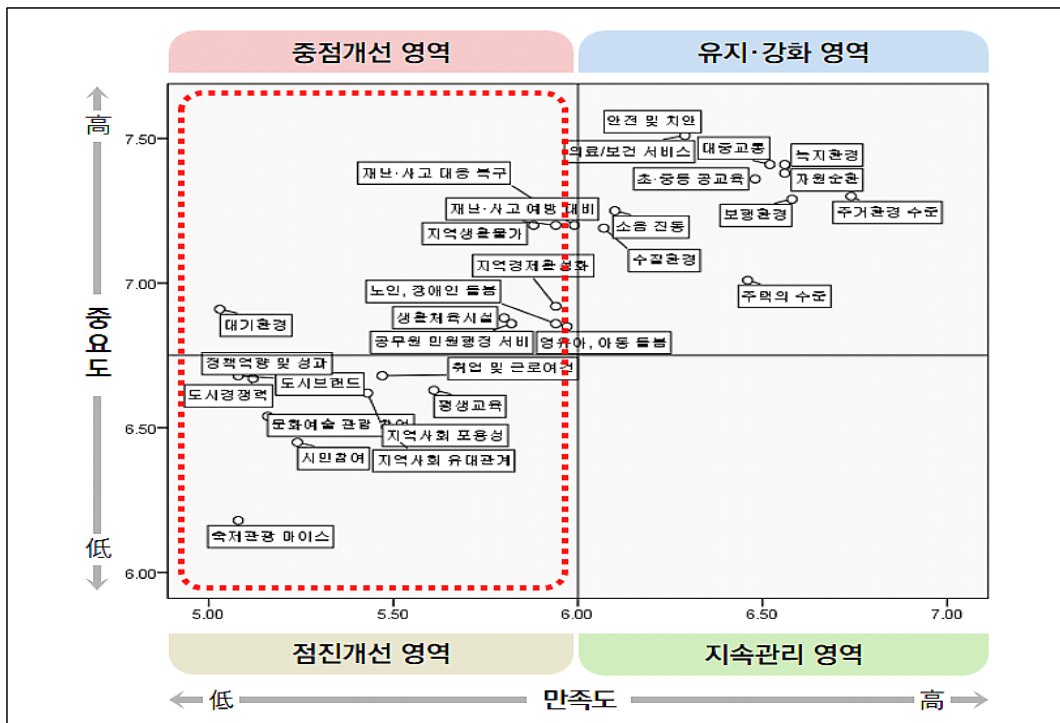
1) 체감도 분석 개요

- 본 연구는 공공행복의 관점에서 영역별 삶의 질 수준에 대한 인천시민의 체감도 분석을 위해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기법을 활용함
- 30개 영역별 삶의 질(조건)에 대한 인천시민의 중요도를 Y축, 만족도를 X축으로 하는 사분면에 측정 점수를 배치하여 인천시민의 삶의 질 체감도를 살펴봄
- IPA 분석결과는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정책관리적 시사점을 제공함
 - (1사분면: 유지·강화 영역)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높은 유형으로, 현재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지속유지(keep up the good work)' 전략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 (2사분면: 중점개선 영역) 중요도는 높으나 만족도가 낮아 '중점적 개선(concentrate here)' 전략이 필요한 유형으로,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을 필요가 있음
 - (3사분면: 점진개선 영역)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낮아 '점진적 개선(low priority)' 전략이 적절한 유형으로, 최우선이 아닌 '차순위 시정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4사분면: 지속관리 영역) 중요도는 낮으나 만족도가 높은 유형으로, '과잉노력 지양(possible overkill)' 전략을 취하며 일부 노력을 타 정책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음

2) 체감도 분석 결과

- 인천시민의 지역사회(거주지역) 내 삶의 질(여건) 수준에 대한 체감도 분석 결과를 민선8기 인천광역시의 4대 시정목표별로 종합하면 다음과 같음
- (모두가 잘 사는 균형도시) 주거와 교통 분야는 현재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강화(중요도↑ 만족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꿈이 실현되는 세계도시) 경제 분야는 중점개선(중요도↑ 만족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경 분야는 대기환경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 대해 현재 상태를 유지·강화(중요도↑ 만족도↑)하는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음
 - 대기환경은 지역별 중요도 인식에 차이가 있긴 하나, 대체로 만족도가 낮은 편임
- (진심과 배려의 소통도시) 돌봄·교육·복지, 건강, 안전, 공동체·참여·소통 분야는 대부분의 영역에서 중점개선(중요도↑ 만족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미래가치 창조의 혁신도시) 미래경쟁력, 문화·여가 분야는 모든 항목이 점진개선 영역(중요도↓ 만족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2] 영역별 삶의 질 체감도 분석: 인천시민 전체



[표 2] 인천시민의 삶의 질 체감도 분석 종합

구분		인천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옹진
주거	거주하는 주택의 수준	I	IV	I	IV	I	I	IV	I	I	I
	거주지 주거환경 수준	I	I	I	I	I	I	I	I	I	I
교통	대중교통 이용	I	III	I	I	II	I	I	I	I	III
	보행환경	I	I	I	I	I	I	I	I	I	IV
경제	지역경제 활성화	II	IV	III	I	IV	IV	III	IV	I	IV
	지역 생활물가	II	II	I	II	I	I	III	I	I	II
	취업지원 및 근로여건	III	III	III	III	III	III	III	III	III	II
환경	대기환경	II	II	II	II	III	III	III	III	II	I
	수질환경	I	I	II	I	I	I	II	I	II	I
	녹지환경	I	I	I	IV	II	I	I	I	I	I
	소음·진동	I	I	II	II	I	I	II	I	I	I
	자원순환	I	I	I	I	I	I	I	I	I	I
돌봄 교육 복지	영유아·아동 돌봄	II	IV	II	I	III	IV	III	IV	I	I
	노인·장애인 돌봄	II	IV	I	I	III	II	III	IV	IV	I
	초·중등 공교육	I	I	III	I	I	I	I	I	I	I
	평생교육	III	III	II	III	III	III	III	IV	III	IV
건강	생활체육시설 이용	II	IV	II	III	III	III	III	IV	II	I
	의료·보건 서비스	I	II	II	I	I	I	I	I	I	III
안전	재난·사고 예방 및 대비	II	I	II	II	II	I	II	I	I	I
	재난·사고 대응 및 복구	II	I	III	II	III	I	I	I	I	I
	안전 및 치안	I	I	II	I	I	I	I	I	I	I
공동체 참여 소통	지역사회 유대관계	III	III	III	III	III	III	III	III	III	I
	정책문제에 대한 시민참여	III	III	II	III	III	III	III	III	III	III
	지역사회 포용성	III	IV	II	III	III	III	III	III	III	II
	공무원 민원행정 서비스	II	I	I	III	III	II	III	III	IV	I
미래 경쟁력	인천시 정책역량과 성과	III	II	II	III	III	III	III	III	III	III
	인천시 도시브랜드	III	III	III	III	III	III	III	III	III	III
	인천시 도시경쟁력	III	III	III	III	III	III	III	III	III	III
문화 여가	문화예술 관람·참여	III	III	II	III	III	III	III	III	III	III
	축제관광 및 마이스(MICE)	III	III	III	III	III	III	III	III	III	I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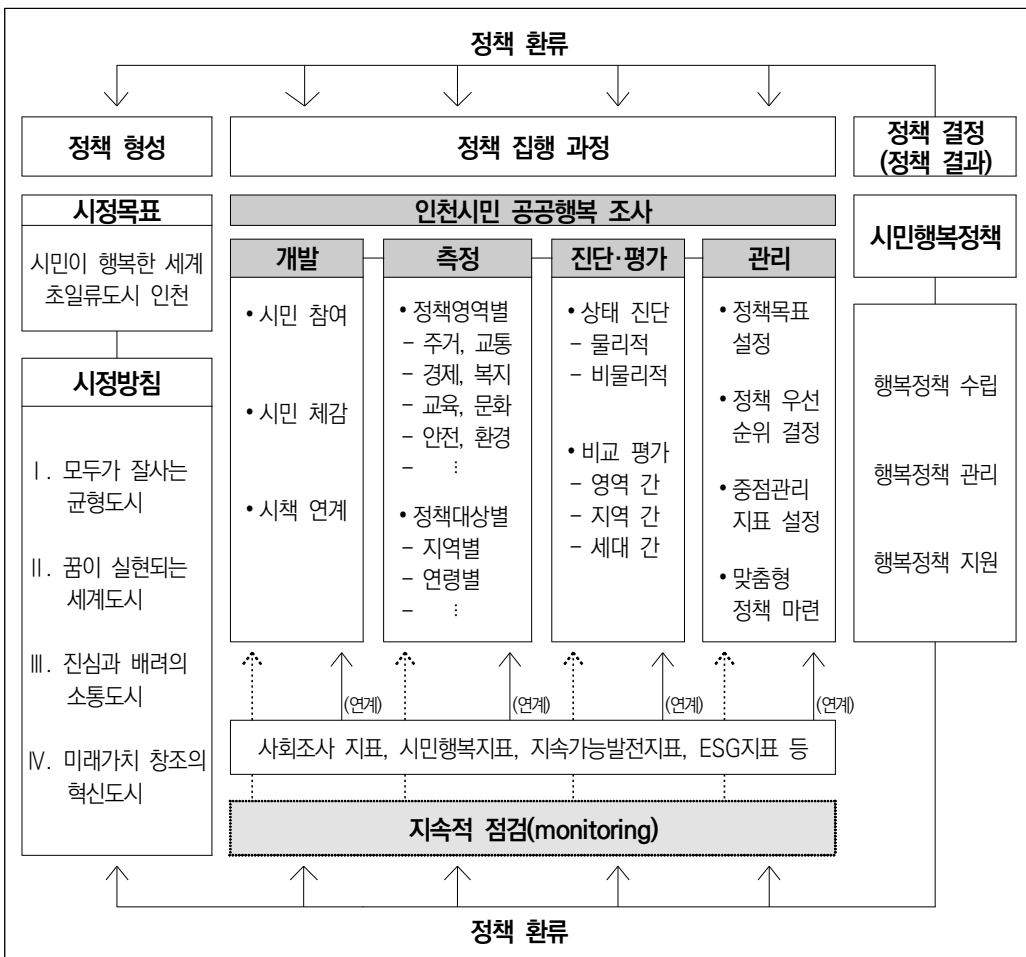
주: 1) IPA 분석결과에 따른 사분면 위치를 나타낸 것임([그림 5-1] 참고). I 사분면: 만족도 ↑ 중요도 ↑ (유지·강화),
 II 사분면: 만족도 ↓ 중요도 ↑ (중점개선), III 사분면: 만족도 ↓ 중요도 ↓ (점진개선), IV 사분면: 만족도 ↑ 중요도 ↓ (지속관리)
 2) 두 가지 사분면 경계에 위치한 경우에는 해당하는 사분면을 병렬하여 기재함(예: 동구의 지역 생활물가, 녹지환경 등)
 3) 거주지역별 인구 분포에 따라 강화군·옹진군 응답자 수가 절대적으로 적은 점을 고려하여([표 3-9], [표 3-11] 참고)
 강화·옹진군은 두 지역 주민의 응답내역을 통합하여 체감도 분석을 수행함

4. 인천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제언

1) 공공행복 조사 활용의 기본 방향

-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이 행복을 추구하도록 돕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정책목표 중 하나이므로(Duncan, 2013), 인천시도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정책의 형성, 집행, 평가, 결정 등 정책 운영의 전 과정에 인천시 공공행복 조사를 활용 및 연계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공공행복은 기존의 행복의 개념과 달리 공동체 구성원의 집합적 행복을 의미하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목표를 정립하고 정책을 입안하는데 활용될 수 있음

[그림 3] 인천시 공공행복 조사 활용의 기본 방향



2) 인천시 공공행복 조사 활용 방안

(1) 인천시 시정정책의 방향 모색

- 공공행복 조사를 통해 인천시민의 행복 요소를 파악하고, 지역사회 여건에 대한 측정·평가로 시정정책의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개발: 시정목표 및 방침과 연계한 인천시민의 공공행복 요소 측정지표를 개발함
 - 측정: 정책영역 또는 수혜대상별로 공공행복 수준을 측정함
 - 진단·평가: 지역사회 여건을 진단하고, 정책영역 또는 수혜대상별로 비교 평가함
 - 정책관리: 정책목표의 설정, 정책 우선순위의 결정, 중점관리 지표의 설정, 그리고 맞춤형 정책 마련 등에 공공행복 조사결과를 활용함

(2) 정책수요 파악 및 정책수립의 근거 마련

❖ 집합적 행복의 측정을 통한 자원배분 결정에의 함의

- 공공행복 조사가 기존의 행복조사와 구별되는 가장 큰 차이점은 개인 차원의 행복이 아닌 지역 수준의 행복을 측정한다는 데 있음
- 공동체 집합의 행복 수준을 측정하는 것이므로, 해당 결과는 지방정부(인천시) 단위의 정책 의사결정에 참고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음
- 중요도와 만족도 인식 비교(IPA)를 통한 자원배분의 우선순위를 결정뿐만 아니라, 지역 수준의 평균 점수를 통한 자원배분의 우선순위 결정에도 단초를 제공함
 - 지역별 또는 정책영역별 점수와 순위 비교가 가능하므로, 공공행복 조사 결과를 정책 개선이 필요한 지역현안의 해결과 대응 등에 활용할 수 있음

❖ 집합적 행복의 분포를 통한 불평등 개선 정책에의 함의

- 공공행복 조사가 일반적인 행복 조사와 구별되는 또 다른 차이점은 주된 관심이 행복주체의 '행복 수준'에만 국한되지 않고, '행복 수준의 분포'에도 있다는 것임

- 특정지역의 주민 만족도 평균 점수가 높다고 하여 해당지역 주민 모두가 높은 만족 수준을 갖는 것은 아님
- 공동체 집합의 행복 수준 분포도를 바탕으로 한 편차 추적을 통해 지방정부(인천시) 차원의 불평등 개선 정책을 모색해 볼 수 있음
- 인천시의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그보다 낮은 지역이나 영역에는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본 연구의 조사 결과는 집합적 행복의 분포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단순한 '수준' 차원을 넘어 '불평등' 차원에서도 접근이 가능하며, 분야별·지역별 세부 정책수립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이점을 지님
- 행복의 측정이 단순히 줄세우기 목적에서 활용되어서는 안 되며, 소외된 영역에 관심을 환기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될 필요가 있음

(3) 지역별·성별·연령별·정책현안별 등 심층 조사·연구 활용

- 범용적인 공공행복 조사는 다양한 사회현상을 포착할 수 있게 하므로, 지역별, 성별, 연령별 등 특정집단의 행복 관련 심층 조사·연구 수행에도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영유아기 자녀를 둔 엄마·아빠의 삶', '도서지역 노인의 삶', '중장년층의 평생교육 인식', '청년세대의 유입·유출 요인 발굴' 등 특정집단에 대한 심층 분석의 필요성을 발견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서울시와 국회미래연구원은 매년 수행하는 해당 기관의 주민/국민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층적인 분석·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음

(4) 인천시 도시정책지표 연계·활용

- 인천시 공공행복 조사 결과는 인천시 도시정책지표와 연계하여 활용될 수 있음
- 현재 인천시는 도시정책지표로서 시민행복지표, 지속가능발전지표, ESG지표 등을 운영하고 있음

-
- 이러한 지표들의 세부 항목 중에는 실측자료에 기반한 정량적 지표가 아닌 주민의 인식에 기반한 정성적 지표들도 존재하므로, 공공행복 조사 결과를 연계하여 공동지표로서 활용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음

(5) 인천시 행복지수(안) 도출

- 주민의 행복감은 (지방)정부의 다양한 정책집행을 통한 성과의 집합체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인천시의 행정통계와 공공행복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시계열 분석이 가능한 단일 수치의 (가칭)인천행복지수를 도출해 볼 수 있음
- 다만, 지방정부 차원에서 행복지수를 만드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수 있음
 - 주거, 교통, 경제, 환경 등 정책영역별 항목에 어느 수준의 가중치를 둘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며, 그에 따른 지역별(인천시 10개 군구별) 행복지수 순위 변동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
 - 지역별 행복 수준을 지수화하고 공개하는 것에 대해 '지역 간 출세우기'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음

(6) 향후 과제

- 향후 인천시민의 공공행복 조사는 부정적 감정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음
 - 긍정적 감정에 관한 조사·연구보다도 우울, 자살, 분노 등 부정적 감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연구가 더 중요할 수 있음
- 또한, 영역별 세부 지표(조사항목) 개발과 함께 지역별 적정 표본 확보를 바탕으로 시민행복 조사의 정기적 수행이 필요함

인천광역시 재난복지 실현 방안

■ 조성윤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 정혜은 도시사회연구부 연구위원

1. 서론

- 저출산, 고령화, 1인가구 증가와 같은 인구·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개인의 안전과 복지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된 계층을 중심으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많아짐.
- 재난피해가 개인적 불운이 아닌 사회적 부정의로 인해 심화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재난취약계층의 안전권 확보가 선택적 배려가 아닌 제도적 책임으로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음.
- 최근 재난취약계층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협력과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재난안전과 사회복지를 융합한 재난복지를 실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2. 재난복지의 이해

1) 관련 용어와 개념

① 재난취약계층

- 재난 취약성은 재난 영향의 예측, 대응, 저항, 복구를 저해하는 특성 또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크게 물리·환경적 취약성, 사회·경제적 취약성, 정책·제도적 취약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재난취약계층은 재난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제약요인으로 인해 재난정보획득 및 대피·대응이 어려운 개인 또는 집단으로 정의할 수 있음.

- 재난취약계층에게 재난은 일시적 생활 곤란이 아닌 장기적 궁핍화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해가 당사자를 넘어 가족과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재난취약계층, 재난약자, 재해약자, 안전약자, 재난취약자, 재난위험군 등 다양한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분류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 재난취약계층은 재난유형에 따라 대상 범위가 다를 수 있으며 동일 범위 내에서도 개인적인 여건과 환경에 따라 취약 정도가 상이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짐.
 - 또한, 대부분의 재난취약계층은 다양한 취약요인을 복합적으로 가지는 경우가 많으며 개인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구조적 요인에 의해 취약성이 가중될 수 있음.

② 재난복지

- 재난 불평등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심각한 사회문제로 도시의 구조적 한계와 모순을 극복하고 구성원의 공감력과 포용력을 강화하는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됨.
- 재난취약계층 지원 및 재난 불평등 해소는 사회적 시혜가 아닌 제도적 책임으로 인식될 필요가 있으며 시민의 안전과 행복 증진을 위한 도시의 핵심 목표로 중요하게 강조될 필요가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취약계층 안전권 확보를 위한 노력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며 사후조치 위주의 단편적이고 제한적인 정책이 추진되는 경향이 보임.
 - 재난안전관리의 영역에서 재난취약계층 지원은 일시적이고 소극적인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직접적인 정책보다는 단순 교육과 홍보 위주의 제한적인 사업이 반복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사회복지 영역에서는 아직 재난안전이 비중있게 고려되고 있지 않으며 재난유형별, 취약요인별 지원 방안이 미흡 또는 부재하여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효과적인 복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임.
- 재난복지는 재난안전관리와 사회복지 사이의 간극을 줄이기 위한 대안이자 시민 안전 공동체 구축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재난취약성 저감을 통한 환경정의 실현을 주 목표로 함.

2) 지원 법령 및 제도

① 재난안전 분야

- 국가 재난안전 최상위 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재난취약계층의 대상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대상이 포괄적이고 모호하여 재난취약계층의 다각적 취약요인을 고려한 정책개발 및 집행이 어려운 실정임.
- 그 밖에 「재해구호법», 「자연재난 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등 재난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다수의 법령의 경우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인천광역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가 노후 시설물의 점검이나 기초소방장치 설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지원내용이 다소 미흡하고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음.
- 현재 재난취약계층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고 재난유형별 관련기관 및 부서가 대응 업무를 분담하는 분산관리방식을 따르고 있어 지원 정책의 중복 또는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집중호우, 폭염, 한파와 같이 매년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자연재난 뿐만 아니라 화재, 미세먼지, 감염병과 같은 각종 사회재난 및 신종재난으로 인해 재난취약계층의 일상생활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지원사업을 다각화하는 것이 중요함.
- 재난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재해구호기금의 사용 범위와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소외 또는 배제되는 계층이 없도록 재난취약계층 대상별 지원사업 추진 현황을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노력이 요구됨.

② 사회복지 분야

- 지원 대상 유형이 보다 세분화되어 있는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독거노인의 고독사, 한부모가족의 기능 유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자립을 위한 법적 기반을 비교적 적극적이고 상세하게 마련하고 있음.
- 사회복지 대상 범위가 대부분의 재난취약계층을 포함하고 있으나 지원내용에 재난안전이 비중있게 고려되고 있지 않아 위기상황 발생 시 피해가 가중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함.

- 사회복지 분야가 보유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지역사회 공동체 및 사회서비스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재난상황별, 제약요인별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의 경우 위기상황에 처한 당사자가 직접 신청하고 처한 상황과 경제적 여건을 모두 증명해야 하는 수동적 지원 방식을 따르고 있어 재난취약계층의 조기 발굴 및 선제적 피해예방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짐.
- 또한, 긴급한 상황에 한하여 단기급여의 형태로 지원이 이루어져 장기적 지원이나 비금전적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재난상황에 활용하기 어려우며 다른 지원제도와 경계가 모호하여 대상이 중복 또는 누락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 기초지자체별로 지원가능한 예산의 규모가 상이하고 공적지원을 모두 합쳐도 복지사각지대를 포괄하기에 부족할 수 있으므로 민간지원 방안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역사회 기반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3. 재난복지 사례조사

- 해외 선진도시들은 재난불평등에 대한 본질적 접근을 통해 재난취약계층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물리·환경적, 사회·경제적, 정책·제도적 취약요인이 개선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미국과 일본의 경우 일련의 대형재난을 겪으며 재난취약계층 문제를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재난복지 실현을 위한 일관되고 통합적인 재난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음.
-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역할을 강화하고 재난안전 분야와 사회복지 분야의 연계 및 협력을 통해 보다 능동적이고 효과적인 재난취약계층 지원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
- 둘째, 재난복지가 도시의 안정성과 회복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필수요소임을 확인하고 정부, 기업, 민간조직, 일반시민의 광범위한 관심과 참여를 기반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포용적인 안전, 건강, 복지 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유도함.
- 셋째,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고 간호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과 같은 전문가의 역량을 강화하여 재난복지 정책의 실효성과 연속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함.

- 우리나라의 경우 재난안전과 사회복지의 이원화 구조를 개선하고 재난취약계층 지원 정책 추진을 위한 정보공유 및 업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재난복지 실현을 위한 구조적 기반을 마련해야 함.
- 또한, 사회복지 전문인력, 마을공동체 리더, 자율방재조직, 자원봉사자 등을 중심으로 하는 재난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관련 분야 실무자, 전문가, 지역주민 협의체를 강화하여 재난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공동체 연대의식 강화 및 실질적인 지원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4. 재난복지 여건 진단

- 태풍, 집중호우, 폭염, 한파 등의 발생 빈도 및 강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대유행이 현실화되면서 건강관리 및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 생활고 및 질병을 비관한 자살사고, 방과 후 돌봄의 부재로 인한 아동 화재사망사고, 위협의 외주화에 따른 노동자 사망사고 등을 통해 드러난 바와 같이 위험요소는 사회의 구조적 요인에 의해 불평등하게 배분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도시 차원의 세심한 관심과 지원이 요구됨.
- 인천광역시의 경우 고령자 및 독거노인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장애인과 외국인을 중심으로 재난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들의 안전성 및 건강성 증진을 위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재난피해 저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재난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은 부족한 실정임.
-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재난복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재난안전과 사회복지를 행정적으로 구분하고 있어 두 분야의 협력을 요하는 재난복지가 구조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움.
- 취약계층을 고려하지 않는 재난안전관리, 재난안전을 고려하지 않는 복지지원이 추진되는 경우 위기상황 발생 시 특정 계층의 피해가 가중되거나 반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 재난복지의 필요성을 공감하나 인력 및 예산이 부족하고 부서 간 협력이 어렵다는 지적과 관련하여 조직체계를 개선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공동체 단위의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재난복지 거버넌스 구축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지역사회와의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민관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다각적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5. 결론

1) 인천 재난복지 거버넌스

- 재난복지의 경우 의사결정권자의 의지와 담당 실무자의 역량에 따라 지원의 편차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총괄조직이나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하여 정책의 합리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대표성과 전문성을 가진 공동체 리더를 중심으로 재난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파악하고 공동체 연대의식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재난복지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함.

① 사회복지 주도 일상관리형 재난복지

- 재난유형별, 복지대상별로 구분된 현재의 업무 구조를 보완하기 위해 재난복지 총괄조직을 신설하고 소통 창구를 일원화함.
 - 첫째, 평상시 재난복지 총괄조직은 부서별로 흩어져 있는 재난안전 및 사회복지 취약계층 정보를 취합하고 관련 자원을 관리하며 재난복지 관련 문의, 민원, 건의 및 제안사항 등을 일괄 접수하고 전담부서와 논의하여 대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함.
 - 둘째, 기초자치단체 재난안전 및 사회복지 담당 부서와 연계하여 지역 현안을 발굴하고 지역사회 재난취약계층의 안부확인, 복지서비스 정보 제공, 일상생활 속 재난안전 위험요인 및 취약지역 파악 및 개선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함.
 - 셋째,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도와 분야 전문성을 가진 공동체 리더를 중심으로 재난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자율방재조직 및 자원봉사조직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함.
- 재난복지 총괄조직의 경우 중장기적으로 별도의 정원을 두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우선적으로 시민안전본부, 여성가족국, 보건복지국 간 협력업무를 수행하기에 효과적인 직책을 선정하여 겸직을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

② 사회복지 주도 일상관리형 재난복지

- 각종 재난안전사고 발생 시 재난복지 총괄조직을 지역사회 위기관리조직으로 전화하여 신속한 체계적인 대응 및 복구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함.
- 재난안전대책본부와 피해 현장을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담당하여 실제 피해 상황을 즉각 전달하고 적절한 의료 및 구호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함.
 - 피해의 범위와 규모가 큰 경우 현장에 상주하면서 일반시민과 취약계층의 요구를 파악하여 컨트롤타워에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함.
 - 피해의 범위와 규모가 크지 않거나 현장 파견이 어려운 경우 시청 홈페이지와 SNS를 활용해 지역상황을 공유하고 동원 가능한 인적, 물적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함.
-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초기 대응 단계에서는 공동체 리더를 중심으로 소방 및 경찰 인력의 현장 업무를 지원하고 다수의 참여가 요구되는 복구·회복 단계에서는 자율방재조직 및 자원봉사조직을 관리하고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함.

2) 정책제언

① 재난복지 실현을 위한 법·제도 기반 강화

- 인천광역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모든 시민의 안전권 보장 및 재난 불평등 해소를 위한 인천광역시의 역할과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재난유형별, 제약요인별 맞춤형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재난복지 추진을 위한 전담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고 범부서 차원의 정보공유 및 업무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또한, 재난안전정책과 주택정책, 복지정책, 보건의료정책 등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안전도시 종합계획 수립 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단계별 사업 발굴 및 성과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② 재난취약계층 지원 전문성 향상

- 지역사회 취약계층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건강상태, 주거환경, 경제여건, 긴급대피 가능 여부, 재난교육 및 훈련 실시 여부, 복지서비스 적용 대상 여부, 돌봄서비스 신청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재난복지 전담 인력을 확충하고 부서 간 재난취약계층 지원사업 현황을 공유하여 유사정책의 반복을 막고 지역별로 상이한 기준에 의해 재난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지역사회 통합돌봄 내 재난안전 부문을 강화하고 기관 및 시설 중심의 분절적 지원체계를 개선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에 기반한 통합적 재난복지가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재난안전과 사회복지의 경험 및 노하우가 연계될 수 있도록 협의와 협업 기회를 마련하고 민관협의체를 활성화하여 현장의 요구가 실질적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회복지사, 간호사, 마을공동체 리더 등을 지역사회 재난복지 활성화의 핵심 주체로 육성하고 재난취약계층의 다양한 입장과 요구를 옹호, 대변, 중재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해야 함.

③ 맞춤형 재난복지정책 마련

- 재난취약계층의 여건과 환경에 맞는 적절한 재난정보 전달 및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재난유형별 행동 대응 요령, 긴급도움 연락망, 대피소 위치 등을 사전에 숙지시킬 필요가 있음.
- 저지대 주거밀집지역, 소규모 영세공장, 쪽방촌, 냉난방시설 열악 주거 등 재난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환경정비 및 생활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피해의 반복적 발생 및 확산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함.
- 주요 복지시설, 요양시설, 보건의료시설 등의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스프링클러 설치, 불연재 사용, 수직·수평 피난계획 수립 등이 엄격히 준수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함.
- 재난유형, 생애주기, 제약요인 등을 고려한 현실적이고 실용성 있는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일상생활 속 재난복지 실천 아이디어 공모 및 우수사례 홍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음.

④ 지역단위 재난복지 네트워크 구축

- 주민자치회, 자율방범조직, 자원봉사조직, 마을공동체, 비영리단체 등을 중심으로 지역사회기반 재난복지 네트워크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지역단위 전문가, 실무자, 지역주민 협의체를 강화하고 현장의견 수렴을 위한 소통창구를 마련하여 재난취약계층의 건강성 및 안전성 확보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재난복지 정책의 발굴 및 개선 과정에서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한편 안전문화운동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지역공동체의 자율성과 결속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지역사회 민간지원조직을 활성화하여 계절별, 시기별 주요 재난안전사고에 대응하는 생활밀착형 지원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소셜 빅데이터를 통해 본 인천시민의 행복

■ 서봉만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 본 연구는 기존의 설문조사가 가지는 물리적 한계를 벗어나 소셜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인천시민이 느끼는 행복 요인에 대해 분석을 진행함
- 소셜빅데이터 분석은 기존의 설문조사 연구와 상호보완적인 분석방법으로 통시적 관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 시정(시민참여), 균형발전(주거, 교통, 원도심), 성장동력(개인경제, 일자리), 행복한 도시(사회복지, 교육, 건강, 문화·여가), 안전, 환경) 4개 영역 12개 항목에 대하여 키워드 분석을 진행함
- 건강(0.584), 문화·여가(0.545) 분야의 긍정점수가 높았으며 건강은 개인의 체력 증진 활동과 관계된 취미생활, 문화·여가는 코로나 이후 대면 모임과 관련된 토픽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음. 그 외 10개 영역은 부정점수가 긍정점수보다 높게 나타남
- 전체 평균보다 긍정적으로 평가된 영역은 교육으로 50세 이상의 평생교육과 직장인의 자격증 공부와 관련된 토픽으로 나타남. 그 외의 영역은 부정점수가 긍정점수를 웃도는 수준으로 나타남
- 지역 언론 5개사의 뉴스기사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 ‘일자리 창출’과 ‘가족’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언급되었으며 2022년은 선거가 있던 해로 신년사, 국제회의, 마이스산업, 민선 8기 공약, 교육감 선거, 초일류도시, 글로벌 시티 등 주요 정책 및 공약과 관련된 키워드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 이미에·안지선(2023)의 인천시민의 「공공행복 수준 탐색 및 조사」의 설문조사 결과 데이터와 비교·분석하여 다음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함
- 아동 돌봄 서비스의 확충 및 신청 편의성 개선이 필요함
- 설문조사 결과 돌봄·교육·복지 분야의 중요도는 높고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셜 빅데이터 분석 결과 아동 돌봄의 공백과 대기, 신청방법에 대한 부정점수가 높게 나타남.

이에 따라 아동 돌봄 지원을 확대하고 온라인 신청의 편의성 증진 등 서비스의 개선이 필요함

- 성인 대상 평생교육의 확대 및 직장인 교육 지원 다각화가 필요함
- 평생교육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5.8점으로 평가 점수가 낮게 나타남. 소셜빅데이터 분석 결과 평생교육에서 긍정적 경험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50대 이상에서 평생교육에 대한 경험이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므로 50대 이상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확대 및 다양화 필요. 30대, 40대 직장인들도 이직, 노후 준비, 자기 계발 등 다양한 이유로 직장과 병행하여 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따른 수요에 맞는 교육 지원 정책이 필요함
- 생활권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의 확충 필요함
- 설문조사 결과 건강 생활체육시설의 수준에 대한 중요성 인식은 높으나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셜 빅데이터 분석 결과 주로 거주지와 근접한 생활체육시설과 공원, 둘레길 등 주변 녹지시설에서 건강관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에 생활권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및 공원·녹지 공간의 지역별 편차를 고려하여 이를 확충할 필요가 있음

2023년도 연구결과 요약집

도시사회연구부

2023년도 연구결과 요약집

I

행·재정·남북관계 분야

- **기획연구**

행복도시 인천 구현을 위한 인천시 남북 이산가족 정책방향과 과제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의 확대 추진방향과 과제

- **시정밀착형 기획연구**

9-15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 중장기 발전방안

- **정책연구**

인천시 시비보조사업의 보조율 개선 방안

- **군구협약 정책연구**

인천 중구 공항 소음대책(인근)지역 주민지원사업 활성화 방안

- **현안연구**

인천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례 제도 연구
인천시 서해5도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대안 탐색 연구
인천시 시정혁신과제 평가지표 관리방안 연구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 사전 검토 연구

- **이슈브리프**

수요 기반 인천고등법원 설립 필요성 검토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의 추진방향과 과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에 따른 인천시 대응과제
인천시민의 삶과 공공행복

행복도시 인천 구현을 위한 인천시 남북 이산가족 정책방향과 과제

■ 남근우 도시사회연구부 연구위원

1. 연구개요

1) 연구의 배경

- 남북 이산가족 정책은 국가 고유의 사무로서 정부 주도의 인도주의적 '상봉'에 초점이 맞춰져 왔음. 그러나 남북 이산가족 1세의 고령화에 따른 사망자 증가와 이산가족 상봉이 남북관계와 연동된다는 측면에서 더는 상봉만이 최고의 방법은 아님. 고령화와 남북관계로 인해 이산가족의 문제가 국가적·사회적 관심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제는 정부의 남북 이산가족 상봉정책과 별개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산가족에 특화된 맞춤형 이산가족 정책과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따뜻한 동행, 행복한 인천 구현'에 부합하는 방향에서 인천시의 남북 이산가족 정책방향과 추진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2) 연구의 목적

- 첫째, 중앙정부의 남북 이산가족 상봉 지원은 필요하므로 인천의 접경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정부의 상봉정책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제시함.
- 둘째, 인천시 거주 남북 이산가족을 대상으로 인천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발굴·제시함.
- 셋째, 시민과 젊은 세대의 평화·통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이산가족의 문제를 세대를 잇는 인천시 평화·통일문화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

2. 남북 이산가족의 개념과 현황 요약

1) 특징

❖ 남북 이산가족의 고령화 심화 및 사망자의 빠른 증가

- 남북 이산가족의 가장 특징적인 점은 고령화 심화와 그로 인한 사망자의 증가임. 2023년 3월 31일 기준의 생존자 41,650명 중 67.4%가 80세 이상 고령자이며, 매해 사망자의 비중이 생존자의 비중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 이에 따라 2025년 생존자 비율은 30%를 밑돌 것으로 예상되며, 80대 이상 비율은 68%대로 예상됨(통일부 2023b, 18-19).
- 이렇듯 정책 수혜자의 감소 및 고령화 심화에 따른 구체적인 대응 마련이 시급한 상황으로, 가장 시급한 사업부터 우선순위를 정하여 정책순위별 세부 추진방안의 신속한 마련·시행이 필요함.

❖ 남북 이산가족 생존자의 가족관계 특성 변화

- 분단이 장기화됨에 따라, 남북 이산가족 내의 관계 특성도 변화하고 있음. 현재 ‘부부/부모/자녀’ 그룹의 비중은 전체 인원의 39.9%(16,597명)로 최근 3년간의 데이터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이며, 이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 2020년에는 40.5%, 2021년에는 40.2%, 2022년에는 39.9%의 비율을 보였으며, 2023년 3월 현재에도 39.9%의 수준을 유지
- 반면 ‘3촌 이상’ 그룹의 비중은 전체 인원의 18.8%(7,837명)로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 2020년에는 17.1%, 2021년에는 17.8%, 2022년에는 18.6%의 비율을 보였으며, 2023년 3월 현재에는 18.8%를 기록
- 2025년에는 남북 이산가족 내 3촌 이상 관계의 비율이 20%대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속해서 이산가족 간 관계가 점차 멀어질 것으로 예상됨(통일부 2023b, 20).
- 이는 남북 이산가족의 연령과 함께 인구특성의 변화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남북 이산가족이라는 정책 수혜자의 특성상 ‘가족관계’의 변화는 정책의 효과성을 좌우할 수 있는 요인인 만큼 이를 대비한 다차원적 정책 구상과 보완이 필요함.

- 남북 이산가족 커뮤니티의 유대관계 및 동력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 지원, 다양한 범주의 수혜자를 포괄하는 정책 및 구성원별 수요에 따른 맞춤형 정책 마련 등

❖ 높은 서북권 거주 인구 분포

- 남북 이산가족의 국내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서북권 분포율이 높음. 동쪽 지역보다는 서쪽 지역에, 휴전선에서 먼 남쪽 지역보다는 가까운 북쪽 지역에 분포율이 높았음.
- 특히 남북 이산가족 인구 순위 상위 세 지역은 수도권 지역으로, 최근 3년간의 지역 분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변함없이 64%대의 분포율을 보였으며, 2025년에도 수도권 거주자 비율이 과반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통일부 2023b, 23).
- 또한 황해도 출신의 이산가족이 가장 많은 것을 고려했을 때, 남북 이산가족 관련 정책 및 사업 운영은 이산가족의 인구 비중이 크고, 황해도와 가까운 서북권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2) 시사점

❖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한 중앙정부 정책 협력 및 지원 확대

- 남북 이산가족의 고령화 및 생존자 감소로 인한 사안의 시급성은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바,¹⁾ 전면적 생사확인 및 각종 교류 방법 모색에 있어 이를 추진하는 정부 지원을 위해 인천시 내 자원, 기관, 시설 등을 활용할 수 있음.
 - 특히 인천시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했을 때, 남북 이산가족 상봉·교류와 남북 이산가족 관련 교육의 거점 역할 가능
- 또한 상봉·교류 사업 진행 시 정부와 협력하여 인천시 남북 이산가족에 대한 편의 제공 등의 지원이 가능함. 나아가 인천 내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상봉·교류 방식의 다각화를 지원할 수 있으며, 민간단체 자체의 역량 강화 사업도 지원할 수 있음.
- 남북 이산가족 문제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인권의 문제이자, 남북한만이 아닌 전 세계에 이산가족이 흩어져 있는 만큼 국제적 차원의 접근도 필요한 문제임. 현행 이산가족법은 남북 이산가족의 공간적 범위를 군사분계선 이남지역과 이북지역으로 한정하고

1) 2018년 인권이사회 결의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Noting the urgency and importance of the issue of separated families and the requests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confirmation of the fate of family members, ...” UN Doc. A/HRC/37/L.29. (2018). 3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해외 이산가족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범위 확대가 필요함. 이를 위해 인천시는 인천에 연고가 있는 해외 이산가족을 발굴하고, 그들과의 네트워크를 마련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

- 또한 인천시와 도시 간 협력 관계에 있는 해외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수 있는 도시 외교 추진 및 강화 가능

❖ 인천시 자체 사업의 구상 및 마련 필요

- 인천시는 남북 이산가족이 세 번째로 많은 지자체이자 남북 이산가족의 가장 많은 출신지역인 황해도와 한강 및 서해로 접하고 있는 접경 지자체임.
- 남북 이산가족의 문제는 인천시의 문제이자, 인천의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임. 그러므로 중앙정부의 이산가족 정책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인천시의 남북 이산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자체 정책과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지역 내 이산가족에 대한 이해와 우리나라 남북 이산가족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인천시민의 공감대 및 지지 기반을 구축해야 함. 나아가 지속가능한 남북 이산가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천시 차원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무엇보다 정부의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상봉·교류 정책을 지원함과 동시에 이산가족 생존자의 고령화, 감소에 대비해 인천시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정책과 사업 발굴과 추진이 시급함.

3. 남북 이산가족 관련 정책 동향 요약

1) 인천시의 남북 이산가족 정책추진을 위한 여건 미비

-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교류지원은 국가의 책무인 만큼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를 위한 법률이 마련되어 있고, 이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 남북 이산가족 1세의 고령화 및 생존자 감소와 2세 이하의 이산가족 정체성 약화를 고려할 때 인천 거주 남북 이산가족을 대상으로 정부의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인천시만의 정책 마련이 필요함.
- 그러나 인천시 남북 이산가족 정책은 물론, 정책 마련·추진을 위한 법적 여건은 미비한 실정임. 지자체 차원에서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해 남북 이산가족 관련 계획을 수립한 서울시의

경우와 같이 인천시도 법제 정비를 비롯한 정책 방향의 기획, 이를 구체화한 사업단위 편성 등 담당 조직을 중심으로 한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함.

- 2023년 5월 현재 인천시는 남북교류·평화협력을 담당하는 조직과 남북 이산가족을 담당하는 조직, 이북5도민을 담당하는 조직이 각각 다르게 편성되어 있음. 그러나 남북 이산가족은 범위가 넓고 종류가 다양한 만큼 세 조직 업무 영역에 모두 속하는 대상으로 효율적인 업무 기획·추진을 위해 업무 담당 체계 및 절차에 대한 고민도 필요
- 한편 인천시의 남북 이산가족 정책 여건이 미비하고 대상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배경에는 이산가족 관련 사무를 국가의 책무로 규정해둔 법제도의 한계도 있음. 남북 이산가족 문제의 복잡성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지역 단위에서도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의 정책을 지원·협력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의무와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산가족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이산가족법에 근거한 남북 이산가족 정책은 상봉과 생사 확인에 초점을 두고 있음. 그러나 상봉과 생사 확인뿐만 아니라 등록되지 않은 이산가족 현황 파악, 고령 이산가족 대상의 기억 아카이브 구축, 이산 2, 3세대를 통한 혈맥 잇기 등 지역에서 더욱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관심도 필요
- 남북 이산가족 관련 정책에 있어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을 확대할 경우, 국가와 지자체 간 정책 협의 채널도 함께 제도화 필요

2) 지자체 차원의 남북 이산가족 정책 마련 필요

- 남북 이산가족 문제의 어려움 중 하나는 같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상대인 북한과의 협력이 어렵고 불확실하다는 점임. 그러므로 협력이 원활한 시기와 원활하지 않은 시기 모두를 대비하여 남북관계의 부침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 마련 및 다양한 주체를 통한 다차원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함.
- 또한 이산가족 1세의 고령화와 사망률 증가에 따라 이산가족의 인구구성이 변하고 2세 이하의 이산가족 정체성도 변화하고 있음. 그러므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는 단계에서부터 현재 시점에서 효과성이 큰 사업과 장기적으로 유효한 사업을 모두 아우르는 고민이 필요함. 특히 지역 단위에서는 중앙정부보다 세밀하게 정책 수요 파악이 가능하고,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하므로 현재 인천시가 빠르게 진행할 수 있고 인천시만이 할 수 있는 사업의 발굴·추진이 필요함.

- 인천시는 황해도와 서해 및 한강하구를 통해 접하고 있어 남북 이산가족 상봉 및 교류에 있어 남북한 양쪽의 접근성이 좋은 지정학적 특성을 가진 접경지자체임. 또한, 강화군·옹진군을 중심으로 다양한 평화통일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활용·연계한 다양한 사업 추진이 가능함. 따라서 인천시의 지역 특성과 인프라를 활용한 정책이 시행된다면 인천지역 차원에서만이 아닌 정부 차원의 남북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3) 초일류 국제도시 및 행복도시 인천의 정체성 강화

- 서울시는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한 목적에 대해 남북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동시에 이를 통해 평화와 인권을 중시하는 세계적 도시로서의 서울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음.
- 남북 이산가족의 문제는 인류 보편의 가치인 인권의 문제로서 인천시의 남북 이산가족 문제 해결 노력은 국제사회에서의 인천의 역할과 위상을 제고하고, 초일류 국제도시로 도약하는 인천의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음.
- 이러한 측면에서 대내적으로는 인천시민을 포함한 일반국민 대상으로, 대외적으로는 도시 간 협력 관계에 있는 해외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남북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공감대 확산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초일류 국제도시 인천 도약에 부합함.
- 또한 민선 8기 인천시는 시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 도시 인천’ 구현을 목표로 삼고 있음. 이에 따라, 시민행복정책자문단 운영, 시민행복 교통대책 수립, 공직자 대상 시민이 행복한 시정혁신 교육과정 운영 등 시정 각 분야별로 시민 행복에 초점을 맞춘 사업과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특히, 인천시는 「인천광역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권정책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 중에 있으며, 2023년 시행계획의 비전은 ‘사람다운 삶을 보장하는 인권도시 조성’임.
- 남북 이산가족에 특화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이러한 민선 8기 시정목표 실현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시민행복도시로서의 인천시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것임.

4. 인천시의 남북 이산가족 정책추진 방향과 과제

1) 고향을 바라볼 수 있는 장소에 망향대 조성

- 인천시 거주 남북 이산가족 1세의 가장 큰 숙원은 고향 방문임. 그러나 고령화와 남북관계 경색국면으로 고향 방문은 사실상 어려운 것이 현실임. 따라서 거동이 불편한 이산가족 1세와 그 후손들에 대한 인천시의 세심한 배려정책의 일환으로 고향을 기억하고 선조에 제사를 지낼 수 있는 망향단을 건립할 필요가 있음.
- 망향단을 조성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은 인천시 거주 남북 이산가족의 고향이 황해남도가 많다는 측면에서 북한 고향 조망권과 이동 편의성임. 이런 점에서 현재 강화도와 교동도, 연평도에 조성된 망향단과 같은 기억 보존 및 전수 공간으로서 망향단을 추가 설치할 필요가 있음. 이산가족 출신이 많은 황해도, 평안남북도와 지리적 인접한 백령도 그리고 연백군(현 연안군과 벽성군)을 조망할 수 있는 교동도 인사리, 고구리, 지석리, 무학리 중 한 곳에 망향단을 설치할 것을 제안함.
- 북한 고향 조망이 가능하고 이동 편의도 용이한 지역에 망향단을 조성한다면 망향단이 설립된 장소를 중심으로 인천시 이북도민 문화축제 행사와 지역 차원의 문화축제를 연계해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

2) 인천시 이산실록 프로젝트 추진: 기억과 혈맥 잇기 아카이브 구축

- 인천시 거주 남북 이산가족 현황 파악과 이산가족 관련 자료의 수집, 기록, 보관, 전시 등 인천시 '이산실록 프로젝트'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인천시 이산실록 프로젝트는 남북 이산가족에 대한 세심한 배려라는 점에서 민선 8기 인천시의 '행복도시 인천' 정책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나아가 향후 인천시의 평화·통일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인천시 남북 이산가족 현황 전수조사 실시

- 남북 이산가족 인원에 대한 현황은 2005년 통계청에서 실시한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조사된 이후 추가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 2005년 당시 조사 역시 미응답자가 많았다는 측면에서 정확한 조사라고 보기는 어려움.
- 2005년 당시 조사에서 북한에 가족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715,968명임. 이 중 인천시 거주자는 경기도와 서울시 다음으로 많은 65,910명으로 9.2%를 차지하였고, 이는 당시

인천시 인구 2,517,680명의 2.6%로 적지 않은 인원임. 그러나 인천시 이북도민연합회는 인천시 거주 남북 이산가족 인원을 약 70여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어 인천시 거주 남북 이산가족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인천시 거주 남북 이산가족에 대한 현황 파악은 이산가족의 남북한 고향찾기의 기록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6·25전쟁에 대한 피난사 기록으로도 활용할 수 있음.

- 인천시 거주 남북 이산가족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이산가족 등록제로 시행해 등록된 이산가족에 대해서는 인천시 박물관, 기념관, 국공립시설 및 서해5도 여객선 이용료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남북 이산가족 1세와 그 후손들에게 남북 이산가족으로 인정하고 대우받는다는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인천시의 세심한 배려, 따뜻한 동행을 통한 행복도시 인천을 구현하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인천 이산가족 아카이브 구축 추진

- 인천시 거주 남북 이산가족 현황 파악을 토대로 이산가족에 대한 기록과 사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모아 인천시 이산가족 실록으로 후세에 남겨야 함.
- 첫째, (북한 고향지도 제작). 남북 이산가족 1세가 기억하는 고향지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북한 고향지도를 제작함. 북한 고향지도는 남북 이산가족 고향방문이 성사될 경우 이산가족 1세 및 후손들이 북한 고향의 정확한 위치를 찾는 데 활용할 수 있으며, 과거 북한의 행정체계 변화에 대한 기록으로도 활용할 수 있음.
- 둘째, (6·25전쟁 피난사 정리) 남북 이산가족 1, 2세가 고령화가 더 진전되기 전에 이북 고향에 대한 기억, 피난사유, 인천 정착 및 과정, 살아온 과정, 애로사항, 희망사항 등을 구술사로 정리해 인천시의 역사기록 자산으로 보존·활용함.
- 셋째, (사진·영상·기증자료 수집 및 보관) 인천시 이산가족 현황을 토대로 이산가족의 흩어진 기억을 복원·보존하기 위해 사진, 영상, 기증 자료를 수집해 스토리텔링 자료를 발굴하고 이를 DB/콘텐츠로 제작함. 이산가족 1세가 80대 이상 고령인 점을 감안해 이산가족 1세의 기억을 하루빨리 보존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해야 함.
- 넷째, (DNA 채취를 통한 남북한 이산가족 혈맥 잇기 준비) 남북한 거주 이산가족 1세의 경우 고령화로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2세 이하의 경우 고향방문과 대면상봉이 이뤄지지 못해 친인척에 대한 기억이 감소함. 이산가족 중 희망자를 선정하여 DNA를 채취·보관해 향후 남북한 이산가족 혈맥 잇기에 활용함.

❖ 실향민기록관(박물관) 건립

- 인천시에서 남북 이산가족의 역사와 밀접한 강화군 교동도에 실향민기록관(박물관)을 건립해 접경지역으로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염원, 교동대교를 통한 접근성과 함께 이산가족의 역사성을 활용함.
- 강화군 교동도는 ▶한국전쟁 시기 황해도 피난민이 교동 원주민의 배려 속에 정착해 살면서 대룡시장을 중심으로 실향민 정서와 황해도 문화가 남아 있는 지역 ▶황해도 연백지역과의 거리가 3km에 불과해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을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지역 ▶한강하구 중립수역이라 서해5도를 포함한 접경지역에서 유일하게 상대를 향한 공격무기가 배치되지 않은 지역 ▶한국전쟁 이후 남북한 간 교전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 ▶남북당국 간 합의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을 위한 평화수역, 공동어로구역의 연결지역 ▶2014년 개통된 교동대교를 통해 시민과 학생의 자유로운 방문이 가능한 지역임. 이러한 교동도의 특성을 활용해 실향민기록관(박물관)을 건립해 이를 새로운 평화·통일자원으로 활용함.
- 인천시 이산실록 프로젝트는 인천시 거주 이산가족 현황 파악, 이산의 기억을 DB와 다양한 콘텐츠로 제작하고 이를 기록관(박물관)에 보존·전시·활용하는 프로젝트로서 이는 민선 8기 인천시가 추진하는 '행복도시 인천'의 정책 일환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인천시가 지자체 차원에서의 남북 이산가족 정책의 바로미터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5. 정책제언

1) 중앙정부 차원: 이산가족법 개정과 국회 공청회 개최

- 남북 이산가족 상봉 및 생사 확인 관련 정책은 「이산가족법」상 국가 고유의 사무로 되어 있음. 그러나 이산가족의 고령화와 2세 이하의 이산가족으로서의 정체성 약화 그리고 남북관계의 악화로 상봉과 북한 내 친인척 생사 확인은 사실상 어려움.
- 국내 거주 이산가족의 기억과 혈맥 잇기 차원의 아카이브 구축 및 통일부 남북이산가족찾기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지역별 이산가족 현황 파악을 비롯해 중앙정부의 남북 이산가족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역할이 중요하게 대두함.
- 따라서 남북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이산가족법」에 중앙정부의 남북 이산가족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지자체의 역할과 책무를 명시하는 방향에서 일부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관련 기관에서 국회 청원 및 법률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함.

2) 인천시 차원

❖ 「인천광역시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 제정과 인천시의회 공청회 개최

- 현재 지방자치단체 중 이산가족 관련 조례가 제정된 곳은 서울시가 유일함. 인천시는 경기도와 서울시 다음으로 많은 남북 이산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로서 접경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수성을 고려할 때 향후 남북관계 변화에 따라 남북 이산가족 상봉뿐만 아니라 다양한 협력사업 추진이 가능한 지역임.
- 현재 인천시에는 「인천광역시 이북5도민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만 제정되어 있음. 그러나 동 조례는 인천시의 이산가족 지원 및 인도적 교류의 역할보다는 이북5도민 관련 단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성격의 조례로서 한계가 있음.
- 향후 본 연구가 제시한 인천시의 남북 이산가족 정책방향과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률적 뒷받침이 필요함. 이에 서울시의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를 참고해 인천시의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해 인천시의 관련 정책이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인천시의회 공청회 개최를 제안함.

❖ 실향민박물관 건립 추진위원회(추진단) 구성

- 남북 이산가족의 63.9%가 경기, 서울, 인천에 거주하고 있고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에 고향을 둔 남북 이산가족이 많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인천은 남북 접경지역으로서 강화도와 교동에서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최적지임.
- 또한, 강화군 교동도는 6·25 전쟁 당시 황해도에서 피난 온 실향민과 그 후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 대룡시장을 중심으로 실향민 정서와 황해도 문화가 남아 있는 곳임. 황해남도 연안군과의 거리가 3km에 불과해 북한 주민의 일상을 직접 관찰할 수 있어 ‘남북통일문화의 상상력’을 실험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기도 함.
- 향후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까지 염두에 두는 장기적 비전하에 강화 교동에 ‘실향민박물관(민속촌 또는 문화촌)’ 건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함. 추진위원회에서 본 연구가 제안한 ‘인천시 이산실록 프로젝트’를 논의해 그 완성품으로 실향민박물관을 시민과 학생들의 통일체험의 공간으로 활용함.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의 확대 추진방향과 과제

■ 남근우 도시사회연구부 연구위원

1. 연구개요

- 인천시는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세계적인 평화·안보 행사로 발전시킬 계획을 밝힘. 특히,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을 노르망디상륙작전 기념행사에 버금가는 행사로 추진하기 위해 상륙작전 75주년이 되는 2025년부터 국제행사로 격상할 계획임. 이에 본 연구는 인천상륙작전의 의미를 재조명하고 미래가치를 발굴해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정책방향과 추진과제를 제시함.
- 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임. 첫째, 특정 정파의 냉전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와 중요성을 재조명함으로써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인천상륙작전의 미래지향적 가치를 발굴함. 둘째, 인천상륙작전을 인천의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한민국과 인천의 유무형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방향과 과제를 제안함.

2. 인천상륙작전의 개요와 기념사업 추진의 법률적 환경

1) 연구방법론

[표 1] 제2장 연구방법론

번호	방법	일시	주요 내용
1	국내외 문헌 연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상륙작전에 대한 국내 문헌 분석 • 인천상륙작전에 대한 북한과 중국의 언론매체 분석
2	현지답사	2023.1.26	• 인천상륙작전기념관
		2023.2.24	• 월미도, 팔미도, 영흥도 등 인천상륙작전 관련 시설
3	관계기관 면담	2023.1.26	• 인천상륙작전기념관 관계자 면담
		2023.2.1	• 한국자유총연맹인천지부 관계자 면담
		2023.2.9	• 특수임무유공자해군첩보부대에비역중앙회 관계자 면담
		2023.2.16	•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관계자 면담
		2023.2.22	• 한국유격군전우회총연합회 관계자 면담

2) 주요 내용

- 첫째, 인천상륙작전을 ‘전통적 시각’, ‘국가보훈사적 시각’, ‘이면사적 시각’ 등 크게 세 가지의 시각으로 구분하고, 문헌조사와 관계자(기관) 면담을 통해 정리·분석함.
 - ① ‘전통적 시각’은 군사전략적 측면에서 미군 중심의 연합군과 맥아더 장군의 전략적 리더십을 강조하는 시각으로서 인천상륙작전을 보는 주류사적 시각
 - ② ‘국가보훈사적 시각’은 연합군의 작전 성공과 맥아더 장군의 전략적 리더십이 발휘될 수 있었던 주요 배경으로 인천상륙작전에 앞서 수행된 대한민국 해군, 해군철보부대, 비정규군 켈로부대(KLO)의 인천 서해 도서 탈환전투를 강조하는 시각이며, 나아가 조국을 지키기 위해 참전한 재일학도의용군의 역할을 강조하는 시각
 - ③ ‘이면사적 시각’은 인천상륙작전이 감행되기 전 미군의 공중폭격으로 발생한 월미도 민간인 피해를 부각하는 시각으로서 인천상륙작전은 ‘기념’해야 할 행사가 아닌 피해자에 대해 ‘기억’해야 할 역사라는 점을 강조하는 시각
- 둘째,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의 확대 추진·추진을 위한 법률적 환경을 검토함.
 - 인천상륙작전은 유엔군과 한국군이 참전했다는 측면에서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과 우리나라 「국가보훈 기본법」을 비롯한 관련 국가보훈 법률 검토
 - 특히, 국가보훈이념의 3대 핵심가치가 어떻게 변화하고 확대되었는지 검토하고 국가보훈 관련 법률을 통해 국가보훈이념의 핵심가치 중 하나인 ‘국가수호’에 해당하는 유공자와 인천상륙작전 관련 유공자의 범위를 파악함. 아울러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국내외 보훈·선양사업 추진을 위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의 의무를 파악
- 셋째,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의 주요쟁점을 대내외적 관점에서 네 가지로 제시함.
 - ① 인천상륙작전에 대한 상반된 기억에 기초한 ‘승전신화 기념 vs 민간인 피해 추모’
 - ② 평화를 보는 보수와 진보의 상반된 시각에 기초한 ‘안보=평화 vs 평화=안보’
 - ③ 북한 변수로 본 ‘남북협력 vs 안보·자유민주주의의 가치’의 장소성 충돌
 - ④ 중국 변수로 본 ‘한중관계 고려 vs 주권국 행사’

3) 시사점

- 첫째, 양안적 사관(兩眼的 史觀)에 기초해 인천상륙작전을 바라볼 필요가 있음. 인천상륙작전에 대한 세 가지 시각은 서로 연결되어 포괄적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분절적이며, 심지어 대립하는 시각으로 작용해 갈등을 빚기도 함. 대한민국과 인천의 유무형 자산인 인천상륙작전을 인천시가 평화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시각을 별개의 분절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시각에서 상호연결시켜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양안적 사관이 필요함.
- 둘째,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에서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인천상륙작전은 국가보훈이념의 핵심가치 중 국가수호에 해당함. 국가수호의 가치는 보수와 진보에 관계없이 국가보훈이념의 핵심가치로 강조되어 왔음. 따라서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은 국내외 보훈선양사업의 일환으로 포괄적이고 양안적 사관에 기초해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인천상륙작전 참전 유엔군을 대상으로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2020년 제정된 「유엔참전용사법」은 국가보훈처를 주관기관으로 6·25전쟁에 참전한 22개국의 참전군인과 참전국을 대상으로 명예 선양과 협력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함. 동 법에 의거해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의 확대·추진에 필요한 계획 수립이 필요함.
- 넷째,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의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의 확대·추진 시 예상해볼 수 있는 대내외 주요쟁점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대비방안을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의 확대·추진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시 선제적으로 반영해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노르망디상륙작전과 인천상륙작전의 비교·분석

1) 개요

- 제3장에서는 인천상륙작전과 노르망디상륙작전의 역사적 성격과 의의 및 이를 토대로 진행되어온 기념행사 추진현황을 비교·분석함. 이를 바탕으로 노르망디상륙작전 기념행사를 벤치마킹해 인천시가 확대·추진하고자 하는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의 방향성과 과제를 발굴하는 데 시사점을 모색함.

[표 2] 제3장 연구방법론

번호	방법	일시	주요 내용
1	국내외 문헌 연구	-	• 6·25전쟁, 제2차 세계대전, 인천상륙작전, 노르망디상륙작전에 대한 국내외 문헌 비교·분석
2	현장답사	2023.2.24	• 월미도, 팔미도, 영흥도 등 인천상륙작전 지역 답사
3	황해평화포럼 제26차 정책세미나	2023.3.22	•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추진 시 주요쟁점, 추진방향 및 노르망디상륙작전과 비교역사적 측면에서 논의
4	전문가 간담회	2023.4.13	•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의 추진방향 논의

2) 비교·분석 결과 요약

- 첫째, 비교역사적 관점에서 인천상륙작전과 노르망디상륙작전을 분석한 결과 크게 5가지의 결과가 도출됨.

[표 3] 비교역사적 관점에서 인천상륙작전과 노르망디상륙작전의 비교·분석 결과

순번	비교·분석의 측면	분석결과
1	전쟁의 성격과 평가	• 반(反)나치 연합전쟁 vs 민족상잔과 냉전의 시작
2	상륙작전의 전개과정 ①	• 연합군 계획·주도의 작전 vs 전쟁 당사국의 역할
3	상륙작전의 전개과정 ②	• 치열한 공방 vs 압도적 승리
4	상륙작전의 결과	• 승전과 해방의 계기 vs 전세 역전과 국제전의 계기
5	상륙작전의 기억(memorial)	• 풍부한 기념시설 vs 열악한 기념시설

- 둘째, 노르망디상륙작전과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를 비교·검토한 결과 ▲주관 및 주최기관 ▲공식 명칭과 개최 목적 ▲개최 시기와 장소 ▲행사의 형식과 내용 등 4가지 측면에서 비교할 수 있음.

[표 4] 노르망디상륙작전 기념행사와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의 비교·분석 결과

순번	비교·분석의 측면	분석결과
1	주최 및 주관기관	• 프랑스 및 노르망디주 정부 vs 국방부·해군본부 및 인천시
2	공식명칭과 개최목적	• 디데이 페스티벌 노르망디(D-Day Festival Normandy) vs 인천상륙작전 전승 기념행사 • 자유수호의 역사기억, 참전용사에 대한 경의, 역사체험 관광 vs 전승기념, 참전용사에 대한 경의, 호국·안보 교육 및 체험
3	개최시기와 장소	• 5~6월(약 3주), 노르망디 랜딩비치 전역 vs 9월 15일 전후, 인천상륙작전기념관
4	행사의 형식과 내용	• 기념식, 추모식, 재연행사, 문화 이벤트 등 100여 개 프로그램 vs 팔미도 등대 점등행사, 충훈탑 참배, 기념식, 안보체험 및 문화행사 등 20여 프로그램

3) 시사점

❖ 상륙작전의 상이한 역사적 사실로부터 교훈 반추(反芻)

- 첫째, 승전과 전세 역전의 계기: 안보를 넘어 평화자산으로 활용해야 함.
 -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를 확대·추진하기 위해서는 프랑스가 노르망디상륙작전 기념행사를 1944년 6월 6일의 역사를 넘어 유럽에서의 화합과 미래 지향적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는 소재로 만든 것처럼 인천시 역시 1950년 9월 15일의 역사를 기억하고 이를 인천,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시아 평화의 소재로 활용할 필요
- 둘째, 글로벌 도시의 미래성 확보: 평화외교 무대의 장(場)으로 활용해야 함.
 - 프랑스는 노르망디상륙작전 기념행사를 관광과 축제를 넘어 각국 정상들이 참석해 평화의 메시지를 발신하는 외교무대의 장으로도 활용하고 있음. 노르망디상륙작전 기념행사가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의 확대·추진에 주는 시사점은 단순히 안보 중심의 승전 기념을 넘어 한반도 평화 나아가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한 외교의 무대의 장으로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

❖ 역사를 기억하는 형식과 내용에 대한 벤치마킹

- 첫째, 인천상륙작전을 기념·기억할 수 있는 공간과 시설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이전도 고려함.
 -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를 국제적 규모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행사를 치를 수 있는 장소 마련과 관련 시설들의 통합적 운영이 필요함. 이를 위해 노르망디 랜딩비치를 벤치마킹해 필요한 시설 및 공간을 구축하고 장소성에 근거해 시설의 이전을 고려
- 둘째, 국민과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기념행사의 내용을 마련함.
 - 노르망디상륙작전 기념행사는 프랑스 정부와 노르망디 지자체가 주관하면서 기념식, 기념축제, 노르망디포럼 등의 컨셉으로 진행됨. 반면,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는 해군본부가 모든 행사를 대부분 주관하고 있어 안보 중심의 전승행사로만 치러지고 있음.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를 인천의 대표적인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천시와 상륙작전이 전개된 지자체를 비롯해 국가보훈부가 참여하는 '재연과 기억', '평화를 위한 행사'의 컨셉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

4.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의 확대·추진을 위한 방향과 추진과제

1) 여건분석(SWOT 분석)

[표 5]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 확대·추진을 위한 여건 분석과 추진방향

S 강점 (Strength)	W 약점 (Weak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시의 강력한 정책추진 의지와 역량 보유 • 자유와 평화의 가치 보유 • 법률로 뒷받침된 보훈·선양사업의 추진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 행사를 치를 수 있는 공간과 시설 부족 • 시설과 연계한 평화·안보 프로그램 부족 • 남남갈등 재현 가능성
O 기회 (Opportunity)	T 위기 (Thre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정부의 국가보훈 강화 방침 • 2020년 「유엔참전용사법」 제정 • 정부·지자체·국민의 보훈 선양사업 추진 의무를 관련 법률 내 강행규정으로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협력과 안보 중심도시로서의 장소성 충돌 •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 • 중국정부의 비판적 평가

외부환경 내부역량	기회(O)	위기(T)
강점 (S)	[SO 전략] 역량 확대 기념행사 확대·추진을 위해 인천이 보유한 강점과 외부기회 요인을 극대화하는 방안 마련	[ST 전략] 강점 활용 정책 기념행사 확대·추진의 제약조건을 보완해 인천이 보유한 강점을 활용·극대화하는 방안 마련
약점 (W)	[WO 전략] 기회 포착 기념행사 확대·추진의 약점을 강점으로 전환하기 위해 외부기회 요인을 활용하는 방안 마련	[WT 전략] 위기 대응 내부 약점을 보완하면서 외부환경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추진

전략방향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추진방향과 과제
내부역량과 외부환경의 최적조건 설정 (점진적·단계별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상륙작전의 미래지향적 비전 설정을 통한 국제평화 브랜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평화추체(PFI) 및 인천세계평화포럼(IWPF) 정례화 - 참전국 정상 초청 인천평화정상회의(PSI)개최 • 자유·평화·화해에 기반한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에 이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합군·한국군의 희생 및 공헌에 대한 보훈적 가치 발굴 - 한반도 평화정착 사업 추진 - 민간인 피해의 역사기억 - 유엔 참전국과의 교류협력사업 추진 • 월미도의 근현대 역사와 연계한 단계적 도시재생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의 월미도 이전·건립 - 월미도 상륙지점 표지석 주변 공원화 및 시설 보완·구축 - 영흥도 한국군 작전지역 전적시설 보완·구축 •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상륙작전 역사문화 테마마크 조성(월미도·영흥도·팔미도)

2)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 확대·추진을 위한 실천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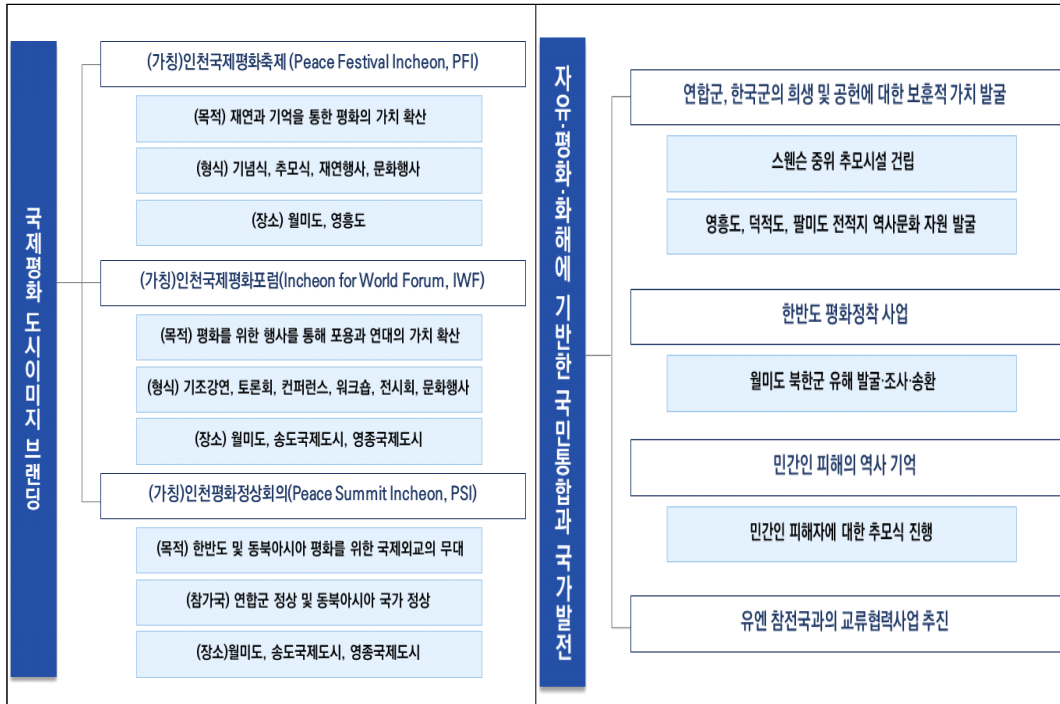
(1) 국제평화 도시이미지 브랜딩

-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는 노르망디와 부산의 사례를 참고해 인천을 국제평화도시로 브랜딩하기 위해 인천상륙작전주간(Incheon Week)을 설정하고, 이 기간에 ‘기념축제’와 ‘국제포럼’ ‘평화정상회의’의 형식으로 정례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음.

(2) 자유·평화·화해에 기반한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

- 첫째,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을 통해 연합군과 한국군의 희생 및 공헌에 대한 보훈적 가치를 새롭게 발굴해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워 국민통합의 정책적 기능으로 활용함.
- 둘째,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을 통해 월미공원 내 동굴 속에 매장된 북한군 유해를 발굴·조사하고 필요시 북한으로 송환하는 사업도 추진함.
- 셋째, 민간인 피해 역시 있는 그대로의 역사로 기억하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함.
- 넷째, 참전국과의 다양한 교류협력사업을 통해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행사로 추진함.

[그림 1]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 추진 형식안



(3) 인천의 근현대 역사와 연계한 기억과 추모의 공간 구축

❖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이전·건립

-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의 이전은 인천상륙작전의 상징성을 고려해 월미도로 이전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임. 그러나 기존 월미도 기념식장은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이 2024년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에 새로운 공간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의 이전부지를 5가지 안으로 제시함.

[그림 2]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이전·건립 후보지(안)



❖ 월미도 랜딩비치 표지석 시설 보완·건립

- 인천상륙작전 당시 월미도 랜딩비치인 녹색해안(그린비치), 적색해안(레드비치), 청색해안(블루비치)에 설치된 표지석의 가장 큰 단점은 '나 홀로 시설'로서 접근성이 취약해 활용도가 매우 낮다는 점임. 또한, 기념비나 추모비의 성격보다는 상륙작전 지점을 표시한 표지석에 불과하고, 그나마 녹색해안 표지석은 잘못된 위치에 설치되어 있어 인천상륙작전 관련 역사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음.
- 첫째, 월미도 선착장에 조성된 '녹색해안 표지석'의 활용방안은 2가지로 제시함.

- ①안> 녹색해안 표지석은 인천상륙작전이 감행된 원래의 녹색해안이 아닌 전쟁 이후 매립된 월미도 선착장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의 녹색해안에 이전·설치하고 ‘인천상륙작전녹색해안공원’으로 조성함. 녹색해안의 정확한 위치는 월미문화관 서쪽 미군 제7보병사단상륙10주년기념비와 해경순시선이 전시되어 있는 곳
- ②안> 녹색해안 표지석을 보완·활용하기 위해 표지석 인근 주차장을 ‘인천상륙작전녹색해안공원’으로 조성해 인천상륙작전기념비와 함께 9월 13일 전사한 미군 ‘스웬슨 중위 조형물’을 설치할 것을 제안함. 또한, 설명문에 삽입되어 있는 로페즈 중위를 선두로 미군 해병대가 사다리를 이용해 방벽을 넘는 사진은 녹색해안이 아닌 적색해안 상륙모습이기 때문에 설명문의 오류 시정 필요

[그림 3] ‘인천상륙작전녹색해안(그린비치)공원’ 조성지역(안)



- 둘째, 적색해안은 미군 제1해병사단과 한국 제1해병연대가 맥아더 장군과 함께 상륙한 역사적인 상륙장소임. 그러나 적색해안 표지석 주변의 공원이 협소하고 주차시설도 없이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어 접근성이 취약함. 이에 공원 뒤편의 갯벌 일부를 매립하고 ‘인천상륙작전적색해안공원’을 조성해 로페즈 중위를 선두로 방벽을 넘는 모습을 형상화한 조형물과 한국해병대 상륙 조형물 설치를 제안함.

[그림 4] '인천상륙작전적색해안(레드비치)공원' 조성지역(안)



- 셋째, 청색해안 표지석은 해안도로(아암대로) 입구에 있어 인천상륙작전 표지석 중 가장 접근성이 떨어짐. 청색해안 표지석 보완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제시함.
 - ①안) 표지석 뒤편의 용현갯골수로 일부를 복개하여 '인천상륙작전청색해안공원'으로 조성하고 인천상륙작전기념비(청색해안)와 관련 조형물 설치
 - ②안) 용현지구 공유수면매립지의 일부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표지석 이전과 관련 조형물을 설치함. 2021년 12월 6일 용현지구 공유수면 매립 실시계획이 변경 승인되어 해당부지가 완충녹지로 결정 공시됨에 따라 공원화 가능

[그림 5] '인천상륙작전청색해안(블루비치)공원' 조성지역(안)



❖ 영흥도 인천상륙작전 시설 보완·건립

- 인천상륙작전은 연합군이 기획하고 주도한 작전이었지만, 한국 해군의 선견작전인 ‘이 작전(Lee Operation)’과 ‘엑스레이 작전(X-Ray)’이 있었기에 성공할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 한국군의 역할은 재조명되어야 함. 그러기 위해서는 선견작전의 핵심지역인 영흥도의 인천상륙작전 역사유적지에 대한 발굴과 공간 및 시설 구축은 필요함.

[그림 6] (가칭)영흥평화통일기념관 및 평화·통일 역사문화테마 관광 공간도(안)



5. 정책제언

- 첫째, 인천상륙작전지역 관할 기초자치단체와 협력 거버넌스 구축 필요함.
- 둘째, 인천상륙작전 관련 시설 보완과 재구축을 위한 부지 확보 필요함.
- 셋째, 국가보훈부와 공동개최를 통해 ‘보훈’과 ‘평화’ 강조 행사 추진
- 넷째, 노르망디상륙작전 기념행사를 벤치마킹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필요함.

9.15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 중장기 발전방안

■ 남근우 도시사회연구부 연구위원

1. 연구개요

- 인천시는 인천상륙작전 제73주년을 맞이한 2023년부터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을 노르망디상륙작전 기념행사에 버금가는 사업으로 발전시킬 계획임. 특히, 인천상륙작전 75주년이 되는 2025년부터 국제행사로 격상할 방침을 정하고 2023년부터 기념주년을 정해 중·장기계획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임.
- 이에 본 연구는 참전용사와 유가족을 초청하는 기존의 소규모·일회성 행사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일상에서 인천상륙작전의 의미와 가치를 기억하고 나아가 국제행사로서의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중·장기적 관점에서 단계별 사업화 방안을 검토해 인천시의 관련 실행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2.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전개과정과 역사문화자원 현황

- 제2장에서는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통해 당시 상황을 기억·재연할 수 있는 공간과 시설을 발굴해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 이를 위해 미국 해병대, 한국 국방부와 해군본부의 사료와 인천시에서 출간한 자료를 비교·분석하고, 답사를 통해 구체적인 장소와 시설을 확인함.
- 제2장의 내용을 종합하고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1) ‘기념주간(Incheon Week)’ 설정: 8월 12일(D-34) ~ 9월 18일(D+3)

- 인천상륙작전 계획이 미 합동참모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은 날은 1950년 9월 8일(D-7)임. 그러나 이날을 기준으로 인천상륙작전 기념주년을 설정하면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을 위해 앞서 실행된 한국해군에 의한 선전작전은 제외될 수밖에 없음. 인천상륙작전이 한국해군의

선견작전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부각하고 이를 통해 보훈사적 의미와 서해도서의 평화적 가치를 발굴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인천상륙작전 기념주간은 미 극동군사령관 작전계획으로 확정된 8월 12일(D-34)부터 시작해 인천이 수복된 9월 18일(D+3)까지 설정해야 서해도서 탈환작전 등 우리 군의 역할을 부각할 수 있음.

2) 역사문화자원 발굴을 통한 자유와 평화의 ‘기억복원 프로젝트’ 추진

- 6·25전쟁 이후 개발과 도시화로 인천지역에는 상륙작전 당시의 모습을 온전하게 기억할 수 있는 시설이 매우 적음. 그러나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고증한 결과 당시의 상황을 기억·재연할 수 있는 공간과 시설 82곳을 발굴함.
- 따라서 이러한 공간과 시설을 자유·평화의 가치를 확산하고, 미래지향적 자유·평화 교육자원 및 전쟁 이후 대한민국과 인천의 발전상을 보여줄 수 있는 도시 브랜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억복원 프로젝트’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3) 인천상륙작전 역사문화자원의 발굴·복원에 기초한 프로그램 구성

- 첫째, 인천상륙작전 4개 권역별 스토리텔링 프로그램을 구성함.
 - 본 연구는 역사적 고증을 통해 인천상륙작전의 작전권역을 서해도서권역(덕적도·영흥도·팔미도), 월미도상륙권역(월미도 일대), 인천상륙권역(중구·동구·미추홀구 일대), 인천내륙권역(중구·동구·미추홀구·연수구·부평구·서구·남동구) 등 4개로 구분함. 따라서 서해도서 탈환작전이 포함될 수 있도록 인천상륙작전의 주요일정에 맞춰 인천상륙작전 기념주간을 설정하고, 4개의 작전권역별로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기억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프로그램 구성
 - 프로그램은 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 및 민간인 희생을 기려 자유·평화·화합의 가치를 확산함으로써 국난의 위기에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가 지켜질 수 있었던 역사를 기억해 미래지향적 자유와 평화 그리고 화합의 가치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구성
- 둘째, 4개 작전권역별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보완·정비와 시설을 추가 조성함.
 - 기존 시설과 고증을 통해 발굴한 공간, 시설 등 총 82곳의 역사문화자원을 스토리텔링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설명문과 추가 조형물 설치 및 공원화를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인천상륙작전기념관 활용을 위한 대책 마련도 필요

4) 인천상륙작전 역사문화자원 아카이브 구축

-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을 장기적인 측면에서 추진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1차적으로 발굴한 유·무형의 자원을 대상으로 실증적인 고증을 진행해 자원과 자원별 스토리텔링의 추가 발굴 및 관련 국내외 이미지(사진·화보 등), 영상, 증언 자료를 확보해 이를 아카이브로 구축하는 작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

5)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 추진을 위한 ‘2050 로드맵’ 계획수립

- 본 연구는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을 국제규모로 격상하는 2025년까지를 단기로, 인천상륙작전 제80주년이 되는 2030년을 중기로, 인천상륙작전 제100주년이 되는 2050년을 장기로 설정함.

3. 노르망디상륙작전과 인천상륙작전의 비교·분석

- 제3장에서는 노르망디상륙작전과 인천상륙작전을 비교하여 살펴봄. 먼저 두 가지 상륙작전 자체에 대해 분석한 후에 상륙작전별 기념행사의 역사와 특징을 분석함. 이를 통해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를 국제행사화하는데 필요한 과제를 도출함.
- 제3의 내용을 종합하고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1) 노르망디상륙작전과 인천상륙작전의 기념사업 비교

❖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의 추진 및 지속가능성 확보 필요

- 노르망디상륙작전과 인천상륙작전을 비교·분석한 결과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의 국제화를 위해서는 사업 추진의 현실 가능성을 극대화하고 지속가능성까지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함.
 - 첫째, 사업추진 가능성 제고
 - 둘째, 노르망디상륙작전과 비교를 통해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을 차별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 셋째,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 추진의 예측가능성 보완 등

❖ 국가보훈부·기초자치단체·인천시교육청·인천관광공사 공동추진

-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를 인천의 대표적인 역사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천시와 상륙작전이 전개된 지자체를 비롯해 국가보훈부, 인천시교육청, 인천관광공사,

민간 유관단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해 자유·평화·화합의 기억 재연, 희생과 헌신에 대한 보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예우문화 확산

- 노르망디상륙작전 기념사업이 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예우문화의 성격을 지닌 것처럼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 역시 전승과 보여주기식 퍼포먼스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이들에 대한 예우를 강조하는 행사가 되어야 국민과 시민의 호응과 관심을 유도할 수 있음.

2) 인천상륙작전 역사문화자원의 활용

❖ 역사문화 유산을 보존해 자유·평화·화합을 위한 역사문화자원으로 활용

-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의 국제화를 위해 노르망디상륙작전 기념사업이 주는 가장 큰 시사점은 인천상륙작전의 역사를 기억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발굴·복원 그리고 기존 시설 관리의 중요성임.
- 인천시가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을 국제규모로 격상해 확대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역사적 고증에 기반한 기억의 장소를 복원해야 함. 그래야 시민과 미래세대의 자유와 평화를 위한 교육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의 리뉴얼을 통한 아카이브센터 기능 확보

-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을 노르망디의 기념관들처럼 인천상륙작전 아카이브센터로서의 기능을 추가하고 기성세대와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미래 지향적 자유와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는 아카이브 기반의 스토리텔링 콘텐츠와 학술,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리뉴얼 단행이 필요함.

4. 인천상륙작전에 대한 국민 및 인천시민 인식조사

- 제4장에서는 인천상륙작전과 기념사업 확대 추진에 대한 국민과 인천시민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 18세 이상 남녀 1,300명을 대상으로 2023년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함. 결과는 <요약 표 1>과 같음.

[표 1] 조사 결과 종합

영역		내용		
1 인천상륙작전 및 기념행사 인지도	①	인천상륙작전 인지도	국민 (인지) 98.1%	
			인천시민 (인지) 98.9%	
	②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인지도	국민 (인지) 54.8%	
			인천시민 (인지) 64.6%	
2 인천상륙작전 평가	③	인천상륙작전의 의미	국민 (의미 있는 사건) 98.1%	
			인천시민 (의미 있는 사건) 99.6%	
	④	인천상륙작전의 6·25 전쟁 영향	국민 (중요한 영향) 97.7%	
			인천시민 (중요한 영향) 98.5%	
	⑤	인천상륙작전의 군사적 작전 측면 평가	국민 (훌륭함) 96.5%	
		인천시민 (훌륭함) 97.5%		
3 인천상륙작전의 인천 대표적 사건 인식 및 역사적 의미에 대한 인식	⑥	인천상륙작전의 인천 대표성 인식	국민 (대표적 사건이란 의견에 동의) 92.2%	
			인천시민 (대표적 사건이란 의견에 동의) 94.2%	
	⑦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에 대한 국민 의식	국민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 68.7%	
			인천시민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 67.9%	
4 인천상륙작전에 대한 의견 공감도 및 한국군 역할 평가	⑧	인천상륙작전에 대한 의견 공감도	국민 인천상륙작전이 6·25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하는데 기여한 사건이란 의견에 공감 87.9%	
			인천시민 89.3%	
	⑨	한국군 역할에 대한 평가	국민 (한국군 역할의 중요성 공감) 89.2%	
			인천시민 (한국군 역할의 중요성 공감) 89.0%	
5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관련	⑩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필요성	국민 (필요함) 80.4%	
			인천시민 (필요함) 83.3%	
	⑪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의 국제행사 격상 평가	국민 (긍정적으로 평가) 80.0%	
			인천시민 (긍정적으로 평가) 83.8%	
	⑫	기념행사 선호 프로그램/이벤트 (1+2순위)	국민 (1) 작전 중 희생된 민간인 피해자 유족 위로 48.5%	(2) 작전에 참여한 국내외 전직 군인 참여 42.1%
			인천시민 (1) 작전 중 희생된 민간인 피해자 유족 위로 46.8%	(2) 시민참여를 위한 문화 공연 행사 43.2%
	⑬	국제행사 격상 시 인천시의 도시경쟁력 제고 여부	국민 (긍정적인 영향) 82.9%	
			인천시민 (긍정적인 영향) 84.4%	
	⑭	인천상륙작전의 기념행사 교육적 효과	국민 (긍정적 효과) 91.7%	
			인천시민 (긍정적 효과) 94.1%	
⑮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의 한반도평화 효과	국민 (긍정적 효과) 80.8%		
		인천시민 (긍정적 효과) 79.3%		

5.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 추진방안

- 제5장에서는 연구의 전제가 되는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전개과정, 역사문화자원 현황, 노르망디상륙작전 및 기념사업과의 비교·분석, 국민 인식조사 등의 내용에 기초해 2024년부터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을 확대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계·제시함.
- 첫째,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 확대 추진의 대내외 여건을 파악하기 위해 SWOT 분석을 진행함. 주관기관 인천시와 행사지역 인천이 지닌 강점요인과 약점요인 그리고 행사 추진에 영향을 미칠 외부요인으로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을 분석·평가함.
 - 인천시와 인천지역의 내부역량으로서 강점(Strength)과 약점(Weakness)요인 그리고 외부환경으로서 기회(Opportunity)와 위협(Threat)요인을 각각 4개씩 제시·평가
- 둘째, SWOT 분석을 통해 도출된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 확대 추진을 위한 인천시와 인천지역의 내부역량과 외부환경의 요인을 종합해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 중·장기 발전방안(PCRC)을 설계·제시함.
 - 본 연구에서는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의 비전, 4대 전략, 12대 추진방향, 3대 추진과제와 9대 세부과제 및 추진주체와 중·장기 계획기간 등 제시
- 본 연구가 제시한 다양한 추진과제와 세부과제들은 현장답사를 통한 인천상륙작전의 역사문화자원 현황 파악 등 인천의 지역적 여건을 고려해 설계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구체적인 의견을 수렴해 설계함. 특히, 본 연구가 제시한 추진과제들은 예산 수반과 국민 및 시민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향후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 추진 시 이에 대한 실행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 추진을 위한 중·장기 추진방안을 <요약 표 2>와 같이 설계·제시함.

[표 2]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 중·장기 추진방안(PCRC)

비전	세계평화도시 인천			
4대전략	① SO전략 평화(Peace)	② ST전략 화합(Cohesion)	③ WO전략 기억(Remembrance)	④ WT전략 연결(Connection)
12대 추진 방향	① Proliferation - 자유와 평화의 미래가치 확산 ② Pioneer - 초일류도시 인천 대표 브랜드 선도사업 ③ Prosperity - 원도심 재생과 연계한 역사문화도시 인천 번영의 기회 창출	① Contribution - 국가보훈의 기본이념인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 ② Compatibility - 안보와 평화에 대한 균형적 시각 제공 ③ Comprehension - 한반도 갈등과 통일문제에 대한 이해 제공	① Restoration - 역사문화자원의 복원과 아카이빙 ② Renewal - 기존 시설 및 인천상륙작전기념관 리뉴얼과 스토리텔링 ③ Respect - 희생과 헌신에 대한 예우문화 조성 토대 마련	① Condolence - 참전국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기억과 보존 ② Communication - 국내외 학술행사를 통한 시민과 미래세대의 참여와 소통 ③ Cooperation - 한반도·동북아·세계평화를 위한 다자외교 무대의 장(場) 마련
기념주 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상륙작전 기념주간(Incheon Week): 8월 12일(D-34) ~ 9월 18일(D+3) - 8월 12일: 미 극동군사령관 작전계획으로 인천상륙작전 확정 및 리작전과 엑스레이작전 시작일 - 9월 18일: 인천수복 			
추진주 체	시점	주최	주관	
	2023년	국방부	해군본부·인천시	
	2024년 이후	인천시·국가보훈부 기념사업 전담기구	국방부·해군본부·인천시 기초자치단체· 인천시교육청·인천관광공사·민간 유관단체 (가칭)인천상륙작전기념사업추진단(위원회)	
3대추 진과제 / 9대 세부과 제	① 인천상륙작전 역사문화자원 인프라 조성 (역사기억 복원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상륙작전 4개 권역별 역사문화자산 복원 ② 기존 인천상륙작전 시설의 고증과 보완 ③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의 아카이브센터 구축 및 메모리얼 파크(Memorial Park) 조성 ② 인천상륙작전 역사문화자원 아카이빙 (역사기억 아카이빙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인천상륙작전 역사문화자원 아카이브 구축 ② 역사문화자원 스토리텔링 프로그램 기획·운영 ③ 스토리텔링에 기반한 역사기억추모관광 상품 개발 ③ 세계평화도시 이미지 브랜딩 (세계평화도시 도약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다자외교 무대의 장(場) 마련 ② 국내외 학술행사(인천국제평화포럼, IWPF) 정례화 ③ 자유·평화·화합의 인천국제평화축제(Peace Festival Incheon, PFI) 정례화 			
계획기 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 2023 ~ 2025(국제행사 원년) / 중기: 2026 ~ 2030(인천상륙작전 제80주년) • 장기: 2031 ~ 2050(인천상륙작전 제100주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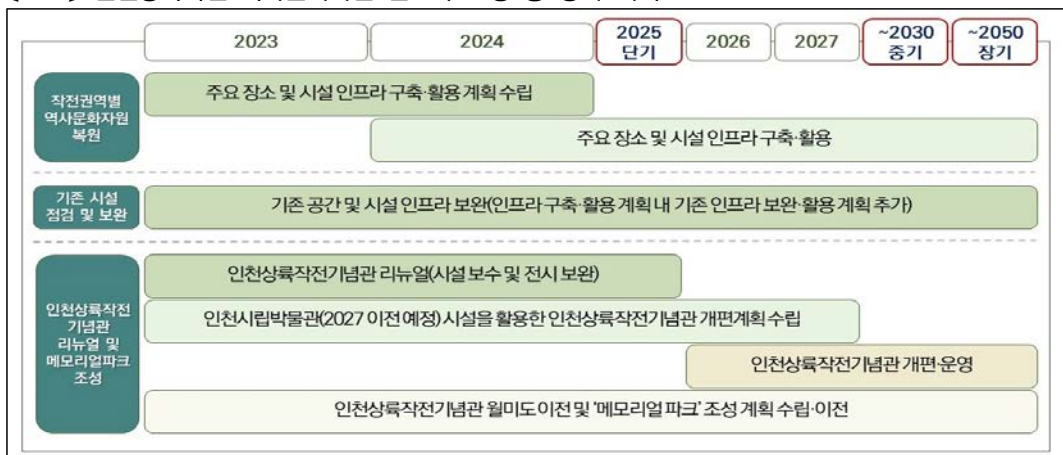
1) 추진과제①: 인천상륙작전 역사문화자원 인프라 조성

- 사료 분석을 통해 인천상륙작전 4개 권역별로 82곳의 역사문화자원을 발굴함에 따라 고증작업을 거쳐 관련 인프라를 조성함. 현존시설의 경우 시설 보완, 리뉴얼 단행 및 필요할 경우 시설 이전까지 포함해 역사성과 활용도를 제고함.
- 첫째, 4개 작전권역별 상륙작전 관련 장소와 시설 인프라 구축계획 수립
- 둘째, 기존 시설의 경우 상륙작전 공간·시설 인프라 구축계획에 보완계획 마련
- 셋째,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월미도로 이전하되, 이전 전까지는 전시구성, 전시연출, 전시기법의 리뉴얼과 오브제(유물) 보완을 단계적으로 추진

[표 3] 인천상륙작전 역사문화자원 인프라 조성(역사기억 복원 프로젝트) 추진방안

과제	인천상륙작전 인프라 조성 (역사기억 복원 프로젝트)
기본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프라 복원·보완 계획수립 및 우선순위 선정 ◆ 희생과 헌신에 대한 기억과 추모 및 자유·평화·화합의 미래가치 부각 ◆ 국민통합·국가발전·참전국과의 교류협력 이미지
세부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상륙작전 4개 권역별 역사문화자원 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해도서관역·월미도상륙권역·인천상륙권역·인천내륙권역 ✔ 인천상륙작전 기존 시설의 보완 ✔ 인천상륙작전기념관 리뉴얼 및 메모리얼 파크(Memorial Park) 조성

[표 4] 인천상륙작전 역사문화자원 인프라 조성 중·장기 계획



2) 추진과제②: 인천상륙작전 역사문화자원 아카이빙

-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을 확대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설 및 공간 인프라 조성과 함께 상륙작전이 전개된 공간의 역사적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아카이빙이 필요함.
- 첫째, 인천상륙작전 역사문화자원 아카이브 구축계획을 수립하고 구술채록과 영상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함. 또한, 인천상륙작전 관련 국내외 사료를 수집하고 이를 디지털 아카이브로 구축하는 작업 병행
- 둘째, 아카이브에 기초한 스토리텔링 프로그램 기획·운영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추진
- 셋째, 역사기억추모관광 상품개발은 스토리텔링 프로그램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추진

[표 5] 인천상륙작전 역사문화자원 아카이빙(역사기억 아카이빙 프로젝트) 추진방안

과제	인천상륙작전 역사문화자원 아카이빙 (역사기억 아카이빙 프로젝트)
기본방향	◆ 인천상륙작전 역사문화자원 아카이브 및 스토리텔링 구축 기본계획 수립
항	◆ 상륙작전 권역별 지역축제와 연계한 역사기억추모관광 상품 개발
세부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상륙작전 역사문화자원 아카이브 구축 ✔ 역사문화자원 스토리텔링 프로그램 기획·운영 ✔ 스토리텔링에 기반한 역사기억추모관광 상품 개발

[표 6] 인천상륙작전 역사문화자원 아카이빙 중·장기 계획



2) 추진과제③: 세계평화도시 이미지 브랜딩

-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을 세계평화도시로 도약하는 인천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만들기 위해서는 노르망디상륙작전 기념사업을 벤치마킹해 다자외교 무대의 장(場)을 마련해 기념식과 인천평화정상회의 정례화, 국내외 학술행사 정례화, 인천국제평화축제 등을 개최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인천상륙작전에 담긴 자유·평화·화합의 의미와 가치를 국제사회와 공유해 인천을 세계평화도시로 브랜딩함.

[표 7] 세계평화도시 이미지 브랜딩(세계평화도시 도약 프로젝트) 추진방안

과제	자유·평화·화합의 가치 확산을 통한 세계평화도시 이미지 브랜딩 (세계평화도시 도약 프로젝트)
기본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합군 및 참전국과의 교류협력 증진 ◆ 정례적(5년 혹은 10년 단위)으로 국가 정상급 인사가 참석하는 다자외교 무대의 장(場) 마련 ◆ 국내외 학술행사의 정례화
세부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자외교 무대의 장(場)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9월 15일(D-Day) '평화기념식(Peace Memorial Ceremony)' 개최 - 5년(혹은 10년) 주기 '인천평화정상회의(Peace Summit Incheon, PSI)'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평화를 위한 인천 선언문(Incheon Manifesto for World Peace)' 채택 ✓ 국내외 학술행사 정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국내학술행사 연계 개최 - 인천국제평화포럼(Incheon for World Peace Forum, IWPF) 개최 ✓ 자유·평화·화합을 주제로 인천국제평화축제(Peace Festival Incheon, PFI) 개최

[표 8] 세계평화도시 이미지 브랜딩 중·장기 계획

	2023	2024	2025 단기	2026	2027	~2030 중기	~2050 장기
다자외교 무대의 장(場) 마련			9월 15일(D-Day) 평화기념식(Peace Memorial Ceremony) 개최			5년/10년 주기 인천평화정상회의 (Peace Summit Incheon) 개최	
국내외 학술행사 연계 및 정례화		국내외 학술행사연계 개최 및 기존 학술행사와의 연계 개최				인천국제평화포럼(Incheon for World Peace Forum)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인천국제평화 축제(PFI) 개최			4개 작전권역별 스토리텔링 프로그램 및 역사기억추모관광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인천상륙작전특집 대표 문화행사 개최	

6. 결론 및 정책제언

1)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 추진방안의 실행계획 수립

-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 중·장기 발전방안으로 제시한 4대 전략, 12대 추진방향, 3대 추진과제 및 9대 세부과제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2024년부터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를 착수할 것을 제안함.
- 실행계획은 본 연구에서 제시한 단기계획(2025년), 중기계획(2030년), 장기계획(2050년) 등 단계별 프로그램과 사업을 중심으로 수립하고, 예산과 국내외 정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 국제행사 원년인 2025년 제75주년 기념행사를 목표로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사업을 선별해 시범적으로 추진함.

2) 기억을 미래세대에 전수하기 위한 아카이브 구축

- 인천상륙작전의 역사를 집단기억으로 미래세대에 전수하기 위해서는 공간, 시설 등 장소의 복원도 필요하지만, 상륙작전의 역사와 장소를 기억하는 세대의 기억을 보존하고 이를 물리적 자원으로 만드는 아카이빙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
- 국내외 참전용사와 전쟁을 기억하는 세대의 고령화로 생존자 구술채록과 시청각 자료수집에 기반한 아카이빙은 인천상륙작전의 역사를 기억하고 자유·평화의 가치를 미래세대의 교육자원으로 전수하기 위해 무엇보다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사업임.

3) 기념사업 개최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추진주체 확대

-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은 2023년 제73주년 기념행사까지 국방부가 주최하고 해군본부와 인천시가 주관하는 형식으로 진행됨. 그러나 대부분 예산과 군 재연행사를 해군본부에서 진행하는 관계로 기념행사가 군 중심의 ‘승전’ 위주로 진행되어 왔음. 그러나 군이 중심이 되는 행사는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대내외적 제약이 따름.
- 향후 기념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보훈부, 인천시교육청, 인천시 기초자치단체, 인천관광공사 및 유관기관 등 추진주체의 확대를 통해 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예우문화 조성 및 미래지향적 평화와 화합을 주제로 역사교육과 추모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4) 인천상륙작전에 대한 균형 있는 교육 실시

-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체제의 특성상 다양한 시각으로 인천상륙작전을 바라보고 있음. 그러다 보니 인천상륙작전의 미래지향적 가치 발굴보다는 전쟁에 초점을 맞춘 ‘끝나지 않은 현재진행형의 과거’로 인천상륙작전을 바라보고 있음.
- 인천상륙작전에 대해 현 7차 개정 중학교 「역사②」 교과서에는 “인천상륙작전으로 전세가 역전되다.”라고 한 줄로 서술되어 있으며(정재정 외 2021, 87),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역시 “인천상륙작전을 감행하여 서울을 수복하고, 38도선을 돌파해 압록강까지 진격하였다”라고 짧게 서술(한철호 외 2022, 247)하고 있어 인천상륙작전의 핵심가치인 대한민국의 자유, 평화, 번영은 서술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젊은 세대가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던 역사와 이를 통해 국가에 대해 자긍심을 고취하고 나아가 자유·평화·화합의 미래지향적 가치를 생각할 수 있도록 교과서에 관련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인천시에서 관련 교육내용의 보완을 정부에 요청할 것을 제안함.

5) (가칭)인천상륙작전기념사업추진단(위원회) 구성

-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을 매년 인천시 관련 부서에서 전담하기보다는 ‘(가칭)인천상륙작전기념사업추진단(위원회)’을 구성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임. 기념사업을 종전과 같이 기념식 위주로 진행된다면 인천시 관련 부서에서 충분히 전담할 수 있으나, 규모가 커지고 많은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담부서가 맡아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임.
- 특히, 기념사업의 추진주체가 확대되면 관련 기관과의 업무협의를 비롯해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게 되므로 기념사업 전담부서가 기념사업 프로그램 기획, 추진주체 간 및 대내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소통, 역사문화자원의 활용계획 수립을 비롯해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의 대내외 창구기능을 전담하는 것이 바람직함.

인천시 시비보조사업의 보조율 개선 방안

■ 이미애 도시사회연구부 연구위원

1. 연구배경 및 목적

- 보조금 제도의 도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상 사업의 특성과 외부효과의 범위 및 크기, 수혜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배분 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며, 특히 보조율 설정이 중요함
 - 보조율의 적용 기준과 방식 등에 따라 보조사업의 증장기적 효과가 다르게 나타남
- 인천시의 시비보조금 보조율은 2017년 10월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며 관련 사항을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어 기준의 현실화 및 신규사업 반영 등이 필요한 실정임
 - 2021년 7월 「지방재정법」에서 보조금 관련 조문이 분리되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광역-기초 간의 기준보조율 정비가 더 필요해짐
- 이에 본 연구는 인천시 시비보조사업의 운영 실태와 타 시·도 보조율 기준 등을 검토하여 인천시 시비보조사업 보조율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 인천시 재정여건과 분야별·군구별 시비보조사업 실태를 분석하고, 타 시·도 보조사업 현황을 검토함으로써, 인천시 시비보조율 설정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함

2. 인천시 시비보조사업의 운영 실태 분석

❖ 분야별 시비보조사업의 보조율 및 규모

- 인천시 시비보조사업의 운영 실태를 종합하면, 첫째, 인천시 8개 자치구는 사회복지 분야, 2개 군은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8개 자치구는 사회복지 분야가 전체 시비보조금의 63~88%가량 차지하고 있으며, 2개 군은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전체 시비보조금의 29~38%가량을 이루고 있음
- 8개 자치구는 사회복지 분야가 전체 구비의 45~85% 수준에 해당하며, 2개 군은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전체 군비의 약 38~49%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됨
- 8개 자치구는 사회복지 제외한 다른 분야의 시비보조금 규모가 크지 않은 편이나, 2개 군은 농림해양수산을 제외한 다른 분야(사회복지, 국토 및 지역개발, 교통 및 물류)에서도 시비보조금의 상당 부분(10~20% 비중)을 확인할 수 있음
- 8개 자치구는 사회복지 분야 이외에도 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시비보조를 확인할 수 있으나, 그 비중이 3.3~8% 내외임
- 2개 군은 농림해양수산 분야 이외에도 사회복지(27.7%, 11.7%), 국토 및 지역개발(28.2%) 분야의 시비보조를 확인할 수 있음
- 둘째, 사회복지 분야 시비보조금의 평균 보조율은 8개 자치구 모두 70% 수준이나, 전체 시비보조사업에서 사회복지 사업이 차지하는 규모는 지역별로 큰 차이가 있음
- 부평구와 미추홀구는 사회복지 분야의 보조사업 수행을 위해 시비보조금이 각각 88.1%, 85.3%이며, 구비는 85.2%, 84.5%로, 시비와 구비의 부담 비중이 전체 시비보조사업 부담 비중과 유사함
- 즉, 부평구와 미추홀구는 시비보조사업의 상당 부분(80%) 이상이 사회복지 분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반면, 서구는 사회복지 분야의 보조사업 수행을 위한 시비보조금이 63.4%이며, 구비는 73.6%로, 전체 시비보조사업 부담 비중에 비하여 구비 비중이 높은 편임
- 그 외, 연구수와 계양구는 사회복지 분야의 시비보조금이 각각 79.5%, 70.7%이며, 구비는 47.4%, 45.6%로, 전체 시비보조사업의 시비 부담 대비 구비의 부담 비중은 낮은 편이라고 볼 수 있음
- 2개 군은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전체 시비보조금 규모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차순위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음
- 강화군은 농림해양수산(38.6%) 다음으로 사회복지(27.7%) 분야의 비중이 높음
- 옹진군은 농림해양수산(29.3%) 다음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28.2%) 분야의 비중이 높으며, 뒤이어 사회복지(11.7%) 분야임

[표 1] 인천시 시비보조사업 종합(2022년도 기준)

(단위: 개, 백만 원, %)

구분	시비보조사업				사업당 시비보조사업			
	사업수	보조사업 총액	시비보조금	군구비	사업당 보조금 계	사업당 평균 시비보조금	사업당 평균 군구비	평균 보조율
계	712	774,969	531,485	243,484	1,088	746	342	68.6
중구	339	47,013	31,676	15,337	139	93	45	67.4
사회복지	244	32,796	23,918 (75.5)	8,878 (57.9)	134	98	36	72.9
교통 및 물류	11	4,740	2,519 (8.0)	2,221 (14.5)	431	229	202	53.1
동구	298	27,082	18,480	8,603	91	62	29	68.2
사회복지	228	19,072	13,747 (74.4)	5,326 (61.9)	84	60	23	72.1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4	2,101	1,057 (5.7)	1,045 (12.1)	525	264	261	50.3
미추홀구	373	88,211	67,279	20,931	236	180	56	76.3
사회복지	289	75,076	57,389 (85.3)	17,687 (84.5)	260	199	61	76.4
국토 및 지역개발	9	5,761	5,101 (7.6)	660 (3.2)	640	567	73	88.5
연수구	345	84,404	49,655	34,749	245	144	101	58.8
사회복지	273	55,916	39,451 (79.5)	16,466 (47.4)	205	145	60	70.6
문화 및 관광	15	13,006	3,789 (7.6)	9,218 (26.5)	867	253	615	29.1
남동구	371	96,408	66,224	30,184	260	179	81	68.7
사회복지	285	73,735	54,641 (82.5)	19,095 (63.3)	259	192	67	74.1
교통 및 물류	11	5,842	2,979 (4.5)	2,863 (9.5)	531	271	260	51.0
부평구	366	91,380	67,177	24,202	250	184	66	73.5
사회복지	289	79,782	59,158 (88.1)	20,624 (85.2)	276	205	71	74.1
교통 및 물류	15	3,058	2,249 (3.3)	809 (3.3)	204	150	54	73.5
계양구	376	84,118	51,640	32,478	224	137	86	61.4
사회복지	272	51,306	36,485 (70.7)	14,821 (45.6)	189	134	54	71.1
교통 및 물류	20	16,444	8,838 (17.1)	7,606 (23.4)	822	442	380	53.7
서구	375	119,765	90,954	28,811	319	243	77	75.9
사회복지	256	78,912	57,697 (63.4)	21,215 (73.6)	308	225	83	73.1
문화 및 관광	16	14,699	11,869 (13.0)	2,831 (9.8)	919	742	177	80.7
강화군	355	77,527	48,007	29,520	218	135	83	61.9
농림해양수산	86	33,121	18,542 (38.6)	14,579 (49.4)	385	216	170	56.0
사회복지	207	18,989	13,304 (27.7)	5,686 (19.3)	92	64	27	70.1
옹진군	257	46,974	29,752	17,222	183	116	67	63.3
농림해양수산	62	15,406	8,705 (29.3)	6,701 (38.9)	248	140	108	56.5
국토 및 지역개발	14	11,339	8,378 (28.2)	2,961 (17.2)	810	598	212	73.9
사회복지	137	4,731	3,483 (11.7)	1,248 (7.2)	35	25	9	73.6

주: 분야별 시비보조사업의 비중 1순위와 2순위를 나타낸 것이며, 옹진군은 사회복지 내역을 보여주기 위해 3순위까지 표기함

- 셋째, 지역별 시비보조사업 1개당 시비보조금 규모에도 큰 편차가 존재함
 - 7개 지역(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은 사업당 평균 보조금이 2~3억원 수준임
 - 반면에 동구는 9천만원, 중구는 1억 4천만원, 옹진군은 1억 8천만원 수준임
- 넷째, 대부분의 지역은 시비보조사업의 평균 보조율이 사회복지 분야(약 70%)를 제외하면 각 분야별 50% 수준에 해당하나, 서구는 모든 분야에서 평균 보조율이 60~90% 수준으로 높은 편임

❖ 지역별 재정수준과 보조금 분담비율

- 본문에서 살펴본 인천시 재정여건(제3장 제1절)과 시비보조사업 실태(제3장 제2절)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지역별 재정수준과 시비보조사업의 보조율 수준이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음
- 동구와 강화군, 옹진군을 제외한 7개 자치구는 자체수입 비중이 높을수록 보조금 비중과 정책사업 대비 보조사업 비중, 시비보조사업의 평균 보조율이 낮은 경향성을 엿볼 수 있음
 - 자체수입 비중이 자치구 평균(22.6%)보다 높은 중구(38.9%), 연수구(30.5%) 등은 보조금 비중과 보조사업 비중, 시비보조사업의 평균 보조율이 각각의 평균보다 낮음
 - 반면에 자체수입 비중이 자치구 평균(22.6%)보다 낮은 미추홀구(14.1%), 부평구(17.1%), 남동구(20.8%) 등은 보조금 비중과 보조사업 비중, 그리고 시비보조사업의 평균 보조율이 각각의 평균보다 높음
- 다만, 계양구와 서구는 재정수준과 보조율의 관계가 상이한 경향을 보이고 있음
 - 계양구는 자체수입 비중(16.5%)이 자치구 평균(22.6%)보다 낮으나, 보조금 비중(57.8%)과 보조사업 비중(81.2%)은 자치구 평균(각각 57.8%, 80%) 수준이며, 시비보조사업의 평균 보조율(61.4%)은 자치구 평균(68.8%)보다 낮음
 - 반면, 서구는 자체수입 비중(30.8%)이 자치구 평균(22.6%)보다 높으나, 보조금 비중(58.4%)과 보조사업 비중(79%)은 자치구 평균(각각 57.8%, 80%) 수준이며, 시비보조사업의 평균 보조율(75.9%)은 자치구 평균(68.8%)보다 높음

[표 2] 지역별 재정수준과 지방보조사업 보조율(2022년도 기준)

(단위: %)

구분	지역별 재정수준				보조율	
	자체수입	이전수입		정책사업 중 보조사업	평균 기준보조율	평균 보조율
		이전수입	보조금			
합계	20.3	74.8	52.7	77.8	66.7	68.6
자치구 계	22.6	72.5	57.8	80.0		68.8
중구	38.9	54.2	45.9	70.6		67.4
동구	11.6	81.5	43.4	69.6		68.2
미추홀구	14.1	80.8	62.8	83.6		76.3
연수구	30.5	62.5	52.3	74.6		58.8
남동구	20.8	74.5	62.1	83.6		68.7
부평구	17.1	78.8	62.0	84.0		73.5
계양구	16.5	79.3	57.8	81.2		61.4
서구	30.8	65.9	58.4	79.0		75.9
군 계	11.6	85.2	41.4	64.7		64.1
강화군	12.6	85.7	41.5	62.2		61.9
옹진군	10.0	84.3	41.2	67.1		63.3

주: 당초예산 총계기준

자료(출처): 행정안전부(2022),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

3. 타 시·도 지방보조사업의 운영 실태 분석

1) 조사 개요

- 인천시 현행 보조율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기준보조율과 차등보조율 설정 등에 시사점을 얻기 위하여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지방보조사업 운영근거를 비교·검토함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관련 관리 조례를 검토 결과, 조례에 따른 자치단체별 지방보조금의 보조율 관련 운영 기준은 다음과 같이 구분됨

[표 3] 광역자치단체별 지방보조사업 운영 근거

구분	명문화		구분	명문화		
	기준보조율	차등보조율		기준보조율	차등보조율	
특별·광역시	서울	분야·사업별	도	경기	분야별	○
	부산	분야별		강원	분야·사업별	×
	대구	분야별		충북	분야·사업별	○
	인천	분야·사업별		충남	원칙만	×
	광주	분야·사업별		전북	원칙만	×
	대전	분야별		전남	원칙만	×
	울산	분야별		경북	원칙만	×
	세종	×		경남	분야별	×
				제주	×	×

2) 타 시도 지방보조사업 운영 실태 분석 결과

-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의 지방보조사업 비용분담 비율(보조율)에 대한 명문화하는 수준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음
- 기준보조율은 자치법규 상에 구체적인 기준을 두지 않는 경우부터 최소한의 원칙만 제시한 경우, 분야별로 설정한 경우, 세부사업 단위까지 명시한 경우 등이 존재함
 - 비(非)명문화: (2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 원칙만 제시: (4개) 충청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 분야별 제시: (6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경상남도
 - 분야별·사업별 제시: (5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강원도, 충청북도
- 기준보조율의 명문화는 보조사업의 추진·운영 과정에 예측가능성과 공정성, 투명성 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다만, 정책환경과 행정수요 변화 등에 따른 유연한 대응 및 신속적인 제도 운영의 측면에서는 포괄성을 지닌 보조율 형태가 유리할 수 있음
 - 세부사업 단위로 세세하게 명시한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사업 현안이 발생한 경우, 조례와 시행규칙의 개정이 필요하므로, 적기의 사업 추진이 어려울 수 있음
 - 또한, 자치법규의 잦은 개정은 행정력 소요 등의 비용을 유발할 수 있음

- 대체로 30% 기준보조율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도 지역보다는 특별·광역시의 보조율 상한이 관대한 편임
 - 특별·광역시는 기준보조율 상한을 100%까지 열어두고 있는 경우가 다수 존재함
 - 특별·광역시 자치구는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받지 않는 점을 고려한 영향으로 보임
 - 단체장이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정액 또는 정률보조 할 수 있는 지역들도 존재함
- 차등보조율은 수도권 3개 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과 충청북도에서만 명문화하여 운영 중이며, 기준재정수요 충족도(재정력)를 주로 활용하고 있음
 - 관할구역의 특정 지역과 다른 지역의 기준보조율을 차등하는 형태도 존재함

[표 4] 타 시·도 지방보조사업 운영 실태: 기준보조율·차등보조율 종합

(단위: %)

구분	특별·광역시								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유형	非제시							○									○
	원칙만											○	○	○	○		
	분야별		○	○			○	○	○							○	
	분야사업별 (세부사업)	○ (99개)			○ (34개)	○ (428개)					○ (129개)	○ (91개)					
기준보조율	일반공공행정	30-50	30-50	30-50	30-50	30-100	30-100	-	30-50	20-50	30-100						20-50
	공공질서 및 안전	30-50	30-50	30-50	30-50	30-100	50-100	-	30-50	-	30-100						30-50
	교육	-	30-50	-	-	20-50	-	-	-	-	-						-
	문화 및 관광	30-100	30-100	30-70	30-70	30-100	50-100	40-70	30-50	정액	30-40						20-50
	환경	30-100	30-100	30-50	30-50	20-100	30-100	30-70	30-50	-	30						30-50
	사회복지	30-100	30-100	30-70	30-70	20-100	50-100	30-70	30-70	0-20	30-40						20-50
	보건	-	30-100	30-70	30-70	30-100	50-100	30-70	30-70	-	30-40		30	30	30	30	20-50
	농림해양수산	-	30-50	-	-	20-100	-	30-70	-	-	30-40						-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30-70	30-50	30-50	30-50	30-100	30-100	-	30-50	20-50	30						30-50
	교통 및 물류	30-50	30-70	30-50	30-50	30-100	50-100	50-70	30-70	-	30						30-50
	국토 및 지역개발	30-50	30-50	30-50	30-50	30-100	30-100	30-70	30-50	20-50	-						30-50
	기타	-	-	정액	잔액 정액	정액	정액	-	정액	정률 정액	정액						정률 정액
	차등보조율	○	-	-	○	-	-	-	-	○	-	○	-	-	-	-	-

주: 1) 지방재정의 기능별 세출 항목에 맞추어 각 자치단체의 분야별 기준보조율 범위(수치)를 나타낸 것임
 2) 해당 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기준보조율 분류 명칭과 구체적인 사항은 [표 4-3], [표 4-4] 참고
 3) 충청북도는 청주시를 제외한 기타 시·군의 내용을 기준보조율로 파악하여 정리한 것임
 자료(출처): 2023년 3월 3일 기준 운영근거([표 4-1] 참고) 바탕으로 연구자가 작성함

4. 인천시 시비보조사업의 보조율 개선 방안

❖ 인천시 지방보조사업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 정비

- 인천시는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6조에 제시하며, 조례와 시행규칙을 별도의 체계로 운영하고 있음
- 인천시는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지방보조금에 관한 별도 조례와 시행규칙을 통해 시비보조금 대상 사업과 보조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었음
- 2017년 재정운영에 관한 인천시 통합 조례를 제정하면서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시행규칙」에서 관련 사항을 규율하게 되었음
- 2021년 7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며 그 위임 사항을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되자, 인천시는 2023년 2월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도 조례로서 다시금 제정함
-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마련되었으나, 그 세부사항은 여전히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장에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인천시 지방보조금 운영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을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으로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음

❖ 시비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 범위 설정

- 인천시는 시비보조금의 기준보조율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2023.02.20)를 제정하기 전에는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 경비의 종목 및 지방보조금의 금액은 예산으로 정한다”고만 언급하고 있었을 뿐 기준보조율에 대한 범위는 규정하고 있지 않았음
- 그러나, 군·구 보조사업의 예산편성 시 보조율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 설정이 필요하며, 세출예산 기능별 보조율 범위(상한, 하한)의 명시가 필요함
- 현행 시비보조사업의 보조율 현황, 국고보조사업 부담 비율, 타 시·도 기준보조율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설정할 필요가 있음
- (하한 설정 검토) 2021년 및 2022년 시비보조사업(각각 512건, 712건)을 검토한 결과, 보조율이 30% 미만인 사업은 2% 내외(각각 13건, 12건)에 불과하므로, 기준보조율의 하한을 30%로 통일하되, 사업성격 등을 고려한 예외 조항의 적용을 제안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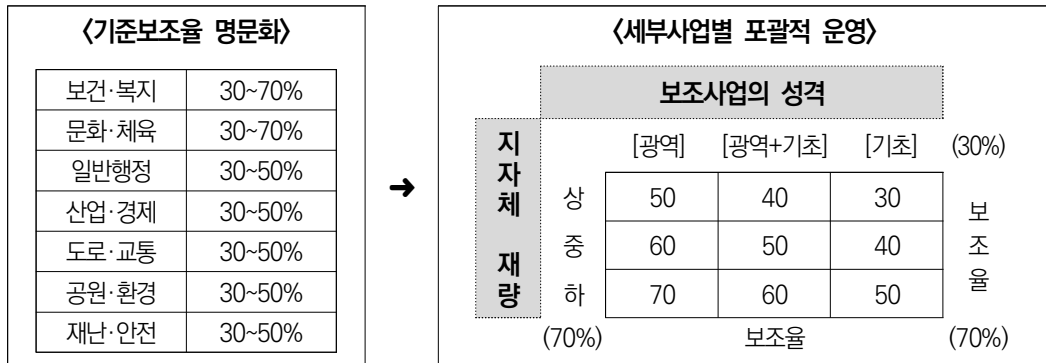
- 예를 들어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양곡 가공 및 물류비 지원 사업은 시비, 군구비, 민간자부담이 포함되는 사업으로 예외 가능
- (상한 설정 검토) 100% 보조사업을 제외하고, 세출예산 기능별로 50%, 70%의 상한 설정을 제안함
 - 50% 상한: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환경,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 상기 8개 분야는 100% 보조사업을 제외하고 2021년, 2022년 모두 보조율이 50%를 초과하는 사업이 없으며, 타 시·도 보조율 범위를 고려할 때 50% 상한 설정을 제안함
 - 상한 70%: 문화 및 관광, 사회복지, 보건 분야
 - 문화 및 관광, 사회복지, 보건 분야는 100% 보조사업을 제외하고 70% 이내 보조율이 적용되는 사업이 존재하므로 70% 상한 설정을 제안함
- (예외) 100% 보조사업(2021년 194개, 2022년 338개) 및 정액 보조사업(2021년 7개, 2022년 6개)은 현재 예외조항에 해당되나, 향후 여건에 따라 기준보조율 범위 내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시 사무 수행을 위해 군·구로 보조하는 사업: 갯골유수지 친수공간 관리비, 공유경제 기반조성, 공예품 육성 개발 등
 - 주요 시책 추진 사업: 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 시할린동포 입소시설 복지점수, 독립유공자 지원 등
- 다만, 지방보조사업별로 기준보조율의 하한과 상한 범위를 정해두더라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준보조율을 달리하거나 정액보조 또는 전액보조 할 수 있음

❖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시비보조율 설정

- 현재 인천시는 개별 시비보조사업의 보조율을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분야별 기준보조율 범위 내에서 시행규칙으로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기준보조율의 명문화는 보조사업의 추진·운영 과정에서 예측가능성과 공정성, 투명성 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나, 정책환경과 행정수요 변화 등에 따른 유연한 대응 및 신속적인 제도 운영 측면에서는 포괄성을 지닌 형태가 유리할 수 있음
 - 세부사업 단위로 세세하게 명시한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사업 현안이 발생할 경우, 조례와 시행규칙의 개정이 필요하므로, 적기의 사업 추진이 어려울 수 있음

- 또한, 자치법규의 잦은 개정은 행정력 소요 등의 비용을 유발할 수 있음
- 따라서 기준보조율은 세출 기능별로 상한과 하한의 범위를 두고, 세부 사업별로는 보조사업의 성격과 자치단체 재량 여부 등을 고려한 포괄적인 형태로 정률, 정액, 또는 차등보조를 적용할 필요가 있음

[그림 1] 세부사업별 기준보조율의 포괄적 운영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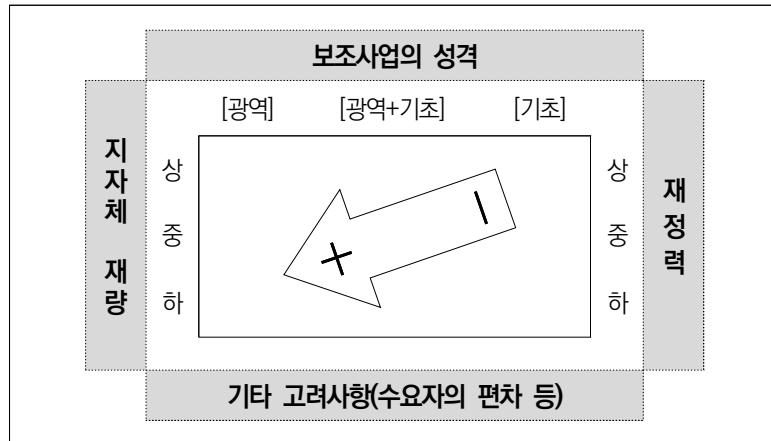


❖ 기준보조 및 차등보조 대상사업의 선정기준 마련

- 현재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인천시 재정운영 조례 시행규칙」에는 기준보조율 또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해야 하는 사업에 대한 기준이 없음
 - 최근(2023년 2월) 별도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차등보조 관련 조항을 담지 않음
 - 시행규칙은 군·구의 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으로서 재정력(기준재정수요 충족도)을 고려한다는 원칙만 제시하고 있을 뿐 적용사업에 대한 기준은 제시하고 있지 않음
- 차등보조율을 적용 중인 타 시·도에서도 “지방자치단체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기초의 재정사정 등을 고려하여 차등보조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차등보조율을 적용해야 하는 사업 기준을 두고 있지 않음
 - 다만, 서울시는 6종 시설(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청소년문화의 집, 다목적 체육센터, 구립 도서관, 문화예술회관)의 경우 차등보조율(재정력) 이외에도 사회복지 비중을 병합하여 차등보조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충청북도는 기준보조율을 적용함에 있어 각 사업별로 청주시와 기타 시·군을 구분하여 보조율을 다르게 설정하고 있음

-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모든 사업에 대해 기준보조율을 적용하되, 사업의 수행근거와 성격, 군·구별 부담 능력(재정력), 수요자의 편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등보조 대상사업을 선정할 필요가 있음

[그림 2] 차등보조율 대상사업 선정 기준



❖ 지방보조사업 관련 광역·기초간 협의체 구성

- 현행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각 자치단체가 개별 조례를 통해 지방보조사업 체계를 자율적으로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의 입장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보조사업의 추진 및 분담비율(보조율) 설정 등에서 크고 작은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지방보조사업의 선정 과정에 타당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의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함
 - 지방보조사업은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게 특성사업의 시행을 권장하기 위한 제도이나, 실제로는 그것의 자원부담이나 구체적인 운영에 대해 사전 협의없이 의무 부담만 명시한 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이상범, 2019)
- 따라서 지방보조사업의 운영 과정에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의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고, 의사소통기구로서 광역·기초 간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
 - 경기도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관내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재정관리협의회를 운영한 사례가 있음

인천 중구 공항 소음대책(인근)지역 주민지원사업 활성화 방안

■ 이정철 도시사회연구부 연구위원

1. 연구 목적 및 연구의 흐름

- 본 연구는 인천 중구 공항 소음대책(인근)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주민지원사업을 발굴하고 이에 필요한 제도적 개선 사항들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 상기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인천 중구 공항 소음대책(인근)지역의 피해 실태 및 주민지원사업의 운영 현황 분석, 이와 관련된 타 사례 분석과 법령 분석 등을 통해 정책적 대안을 현실화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관리적 과제들을 제시하고자 함
-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은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을 다룸

구분	세부 내용	연구 방법
서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의 배경과 목적 □ 연구의 범위와 방법 	
관련 정책 동향 및 인천시 현황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 소음 등에 대한 논의 □ 소음대책지역 대상 지원 제도, 정책 동향 □ 인천시 및 인천 중구의 주민 지원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 분석 - 정책자료, 선행연구 등
관련 사례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사례 분석 □ 사례분석의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 분석(사례 분석) □ 관계자 인터뷰, 자문
주민 대상 설문/면접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음대책(인근)지역 주민 대상 설문조사 □ 주민 대상 심층면접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문조사 □ 심층면접조사
결론과 정책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결과의 종합 □ 정책 실효성 및 체감도 제고를 위한 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 자문 □ 논의의 종합

2. 관련 제도 현황 및 정책 동향

1) 소음 평가 현황

- 소음 평가도 기준으로는 웨클(WECPNL)과 엘다이엔(Lden) 방식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2023년부터 기존의 웨클 단위에서 엘다이엔 방식으로 소음 측정 평가 단위를 변경함
 - 우리나라의 경우 61 Lden 이상을 방음설치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본, 미국, 독일 등의 유럽 사례 등을 비교하였을 때 외국의 경우 주택가, 주거지 등의 소음 피해에 있어서 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음

2) 주민지원 사업 등 관련 제도 현황

- 우리나라는 현재 국토교통부를 주관으로 하여 '제3차(2021~2025)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 등을 근거로 공항소음 저감대책, 주민지원대책 등에 대한 전략이 수립, 추진되고 있으며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법적 근거로 하여 소음대책지역 및 소음대책인근지역에 주민지원사업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인천시를 비롯하여 중구 또한 지자체 차원에서 주민지원사업을 제공하고 있으며 마을안길 포장공사 등의 도로공사나 도로조명공사, CCTV 설치 사업 등 공동이용시설 설치 사업, 지역환경 개선 사업이 주로 이에 해당함

3) 중구 소음대책지역 및 소음대책인근 지역 지원상의 쟁점

- 소음대책사업, 주민지원사업 예산 집행 현황 측면에서 지난 5년(2013-2017)간 계획 대비 집행된 예산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지원 예산의 집행이 미진한 상황이 발생함
- 중기계획 마련, 소음저감 정책 추진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천공항 주변 지역 항공기소음 측정 결과 2013년 대비 2018년 항공기 소음은 크게 개선된 사실이 나타나지 않음
 - 특히 중구 내 소음대책지역 및 소음대책인근지역인 덕교동, 남북동의 경우 2013년과 비교해 2018년 결과에서는 소음 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인천공항은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공항이자 국내 유일의 24시간 운영 공항으로 운항 횟수가 상당하며 심야시간대에도 운항 사례가 다수 존재함에 따라 이로 인한 피해 지원에 대한 강화 필요성이 강조됨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주민지원사업이 제공되는데 있어서 공항공사가 75%를 부담하고 인천시와 중구가 각각 나머지의 절반씩을 부담하는 것으로 운영됨에 따라 지자체 차원에 느끼는 재정적 부담이 존재함. 또한 법률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계로 인하여 지자체 차원에서 발굴, 추진할 수 있는 지원사업의 영역에 있어서도 제한적인 측면이 존재함
- 인천시 소음 측정 및 추계 결과에 따르면 중구는 인천국제공항이 직접 위치한 지역으로 향후에도 공항 소음으로 인한 소음노출인구, 소음노출면적 모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 심각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음

3. 유사 사례 분석

- 주민지원사업 등이 규정되어 있는 타 유사 법령 사례를 검토함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을 검토하였으며, 타 유사 법령의 경우 기업유치지원사업을 명문화하여 피해 지역의 고용 창출과 수익 사업 등 지역사회 발전을 지원하는 특징을 지님. 또한 주민지원사업에 대하여도 별도의 항목으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사업 예들을 제시하고 있어 공항소음 피해지원에 있어서도 주민지원사업 범위의 확대 노력이 요구됨
- 미국 등 해외 공항소음으로 인한 주민지원사업의 특징을 분석함
 - 미국 등의 경우 소음평가에 있어서 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특징과 함께,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전략 수립 차원에서 방향성을 제시한다면 지자체 차원에서 실질적인 권한의 행사와 구체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특징을 지님
- 서울, 제주, 경기 등 공항소음피해가 발생하는 유사 지자체 내의 대응 사례를 분석함
 - 서울시의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센터, 제주시의 공항소음 민원센터 등 공항소음대책 마련을 위한 지원센터의 사례들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지원기관이 설립되어 있을 경우 공항소음사업에 대한 안내와 인식 제고, 소음피해에 대한 민원 및 상담, 소음피해에 대한 연구 조사 활동 등 소음피해 및 지원을 위한 활동들이 다각적으로 전개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음

- 이러한 측면에서 경기 또한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센터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으며, 그 밖에 양천구의 경우 타 지자체와 차별적으로 주민지원사업 분과위원회 운영, 재산세 감면 혜택 부여 등의 특징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남

4. 지역 주민 대상 실태 조사 결과

- 중구 소음대책지역 및 소음대책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이를 바탕으로 한 심층 인터뷰 조사를 수행함
- 설문조사에는 83명이 참여하였으며,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가운데 6명이 심층면접에 참여하여 지역에서 느끼는 소음 피해의 정도와 인식, 주민지원사업 현황에 대한 인식과 한계점 진단, 주민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대안 등을 논의함

5. 결론 및 제언

- 주민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으로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 방향성을 제시함
 - 주민지원사업의 다양화, 네트워크 강화, 관련 조직의 강화
-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인천시 및 중구 내에서 추진가능한 관리과제와 공항공사를 비롯한 중앙정부에 요청 또는 개진이 필요한 관리과제를 제시함
 - 인천시 내 관리과제
 - 소음지역 주민지원센터 건설 등 검토, 소음 측정 및 공항소음 조사·연구 등 지원, 항공기 소음에 관한 민원 및 피해 상담
 - 공항공사 등 향후 개진이 요구되는 관리과제
 - 소음 저감 정책 측면: 심야 수면권 확보를 위한 노력 및 대책 강구 필요, 소음등고선 작성 및 고시 지역 경계 설정 개선
 - 예산 및 재정적 지원 측면: 냉방시설 노후화 시 교체 지원에 대한 고려, 주민지원사업 관련 지자체의 재정 부담 완화 필요성
 - 지역개발 지원 측면: 공항경제권 구상 및 개발 계획 반영 등

인천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례 제도 연구

■ 채은경 도시사회연구부 선임연구위원

- 인천광역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권역 규제와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 증가로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고 있음.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법·제도 내 특례제도와 특별법 상 특례 및 규제를 통하여 인천시에의 시사점을 찾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함
- 일반법상 특례제도로는 「지방자치법」과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들 수 있으며, 특별법상 특례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이 있음
- 지역특성화를 위한 특례제도를 포함하고 있는 법률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접경지역지원특별법」 등이 있으며,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가 대표적임
- 우리나라 특례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동형화된 ‘지역’ 대상 규제 및 특례가 만연하다는 것으로, 결국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시키지 못하는 ‘특별하지 않은’ 특별법 제정이 계속되고 있음
- 또한 일반법상 ‘수도권 규제’로 인해 수도권 지역에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천편일률적인 규제가 적용되며 다양한 수도권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함
- 따라서 이러한 이슈 속에서 인천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과 지방분권 맥락에서의 사무이양을 통한 다양한 접근방안이라는 측면에서의 ‘새로운 법안’ 제정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음
- 새로운 법안은 첫째, 강원도나 경기 북부와 같이 특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한 특별법과 둘째, 인천 지역의 지정학적 특성을 강조한 ‘공항경제권 관련 특별법’,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법에서 제안하고 있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를 통한 법안 제정이 제안됨

인천시 서해5도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대안 탐색 연구

■ 이정철 도시사회연구부 연구위원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서해5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개선을 위하여 서해5도 지역에 대한 지원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지원 개선에 필요한 정책적 대안을 인천시 차원의 관리과제와 중앙정부 차원으로서의 건의가 필요한 관리과제로 구분하여 논의함

❖ 서해5도에 대한 제도적·정책적 지원 현황

- 서해5도 지역의 인구, 연안여객 항로 및 이용객 등 주요 현황을 정리하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및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서해5도 지원 특별법 및 종합발전계획’, ‘인천시 섬 발전 기본계획’, 백령공항 건설 추진 사업 등 중앙정부와 인천시 차원의 서해5도 관련 지원 정책 동향을 분석함

❖ 서해5도 지원 관련 쟁점 및 현안 진단

- 서해5도 지역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되는 필요성과 현안 측면에서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한 대피시설의 지원, 노인인구 등 취약계층 지원 필요성 등을 비롯하여 서해5도 지원 특별법 개정 및 행정적·조직적 지원 확대 등의 필요성을 논의함

❖ 서해5도 지원 확대를 위한 정책 제언

- 서해5도 지역 지원 확대를 위한 전략 및 방향성을 제시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서해5도 지원 특별법 개정’ 등을 통한 지원 강화방안을 제시함
- 또한 그리스·이탈리아·일본 등의 섬 지역 지원정책 사례를 바탕으로 이러한 지원 정책을 관장하는 전담 조직의 마련 필요성과 추진체계안을 제시함

인천시 시정혁신과제 평가지표 관리방안 연구

■ 이정철 도시사회연구부 연구위원

- 본 연구는 인천시 시정혁신과제(36건)의 성공적 추진과 지속적 관리를 위하여 각 과제별 성과지표와 평가방식 등 평가체계 전반의 관리·개선 방안을 모색함
- 각 사업별 지표의 정의와 성격, 세부 평가내용 및 산출공식, 가중치, 목표설정의 근거, 월별 이행과제 등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대표적인 문제점을 진단함

문제점	제안사항
궁극적인 목표 달성 확인이 어려운 투입·과정지표 중심 사례	투입·과정지표보다는 결과지향적 성과지표 지향 불가피한 경우, 투입·과정지표는 가중치를 하향
자의적인 점수 설정 등으로 변별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례	공정율·진행율 구간 설정의 타당한 근거가 필요 총괄부서 차원에서 단위구간별 배점 방식 표준화
시정혁신과제가 아닌 업무담당자 주요 업무에 초점을 맞춘 사례	해당 시정혁신과제와 성과지표를 대표할 수 있는 소수의 결과지향적 지표들로 간결·명확하게 재설계

- 현행 지표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평가방식의 보완을 제안함

제안사항	주요 내용
달성도 및 과제성격 평가의 비중 조정	현행 체계는 100% 달성, 100점 만점 과제가 다수 예상 달성도 평가 비중을 하향하고 과제성격 평가 비중을 상향
과제성격 평가방법의 고도화	현행 평가항목을 7개(과제의 중요도, 목표의 대표성, 목표의 도전성·적극성, 목표의 객관성, 목표의 타당성, 목표의 결과지향성, 실행의 난이도) 항목으로 변경하여 추진
총괄부서 차원의 배점 관리	현행 평가배점 설계는 부서마다 차등화 수준에 편차가 존재 총괄부서 차원에서 구간별 배점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표준화
목표치 설정의 근거자료 제시	현재 각 부서가 설정한 목표치는 설정 근거가 불명확 지표 정의서에 목표치 설정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란을 마련
성과지표당 하위 산식의 설계 제한	현재 각 부서의 성과지표는 수행·관리 중인 업무를 모두 반영 지표당 2~3개 이내로 제한하여 대표성 있는 지표 설정을 유도
계획-집행-성과 관점의 평가체계로 전환	결과지향적 성과지표만을 고려하기 어렵고 과정지표 사용이 불가피하다면, 평가체계 자체를 계획-집행-성과 관점으로 설계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 사전 검토 연구

■ 이정철 도시사회연구부 연구위원

1. 서론

- 인천시는 지난 8월 31일, 현행 10개 군·구 행정체제를 11개로 개편하는 안을 발표함
 - 행정체제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1) 중구 내륙지역과 동구를 통합한 제물포구의 신설, (2) 중구 영종지역의 영종구 분구, (3) 서구 지역의 서구와 검단구 분구임
-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대두됨
 - 첫째는 시민의 생활권역을 고려한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임
 - 인천시 중구는 바다를 경계로 하여 영종지역과 내륙지역으로 구분되며, 두 지역 간의 생활권역이 달라 행정편의와 능률성 저하 문제 등이 대두됨
 - 서구는 방대한 행정구역 면적으로 인해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공이 제한적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음
 - 둘째는 인천시의 미래도시 전략 추진을 위한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임
 - 행정체제 개편안의 제물포구(중구 내륙지역 + 동구)는 인천시 1호 공약인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중심지로서 중요성을 지님
 - 행정체제 개편안의 영종구(중구 내륙지역)는 항공·해양·레저 산업을 포함한 '뉴홍콩시티 프로젝트'와 연계됨
 - 서구의 분구(서구와 검단구) 추진은 아라뱃길 수변을 기점으로 각각 차별화된 산업 중심지를 조성하려는 인천시의 '북부권 종합발전계획'과 연계됨
- 본 연구는 2023년부터 본격 추진을 앞두고 있는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을 사전적으로 검토하고, 예상되는 기대효과를 행정적·사회적 측면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함
 - 특히 개편 대상 지역(중구, 동구, 서구 등)을 중심으로 여건과 발전방향 등을 검토함

2. 행정체제 개편 논의와 법·제도 및 사례 분석

1) 행정체제 개편 논의의 필요성

-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행정체제는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사회 요구와 행정수요, 환경 등에 대응하거나 부응하는 데 미흡한 측면이 있어 개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외부 효과를 줄이며, 편익의 수혜자와 비용의 부담자를 일치시키는 재정적 등가성의 확보를 위해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2) 관련 법·제도 및 고려사항

-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규율되고 있음
- 행정안전부는 특별법에 근거하여 「행정구역 실무편람」을 마련하고, 행정체제 개편 과정에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것을 제시하고 있음
 - ① 주민편익(생활권 일치 여부 등), ② 지역개발(개발권역과의 합치성, 개발 전망, 타 지역에 대한 영향 등), ③ 지리적 여건(지역, 지세, 교통 등), ④ 역사적 전통성(문화, 풍속, 생업, 지역주민 화합 등), ⑤ 행·재정효과(규모의 적정성, 재정력 등)
- 상기 사항들과 선행연구 논의를 종합하여 행정체제 개편 시, 다음을 검토해야 함
 - ① 행정능률성(행정서비스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 행정처리 용이성 등), ② 공동생활권(지리적 영역, 유대감, 상호작용 등), ③ 재정적 자주성(자주재원 조달 가능성 등)

3) 관련 사례 분석 및 시사점

- 행정체제 개편의 주요 사례로서 통합 창원시와 청주시 사례를 분석하고 함의를 도출함

[표 1] 행정체제 개편 주요 사례 함의

구분	통합 창원시 사례	통합 청주시 사례
긍정적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한 도시 경쟁력 제고 - 산업 확장 및 지역 간 인프라 활용을 통한 상호보완성 → 주민소득 및 고용확대 기여 • 공공시설 중복투자 문제 해소, 행정비용 절감 • 주민동질성 회복을 통한 공동체 의식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권과 행정권 일치를 통한 행정편의성 및 예산 효율성 제고 • 광역 단위 도시계획에 근거한 지역별 특성화 → 균형적·체계적 도시개발 추진 • 역사·문화 동질성 제고를 통한 지역역시 회복
성공적 개편을 위한 관리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주도의 통합 노력, 또는 주민들에 의한 사전 합의와 갈등 관리 노력 필요 • 주민의 필요(needs)에 상응하는 보상책의 제공 및 정확한 정책 홍보 노력 필요 •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소통창구 확보 노력 필요 	

3.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 검토 및 진단

1) 외부 환경 변화

- (산업구조 측면) 인천시는 전통적인 제조업 기반의 산업도시로 성장해 왔으나, 4차산업 시대에 걸맞은 신산업 발굴 및 발전을 위한 거점지역의 개발이 필요한 상황임
 - 이를 위해 송도, 영종, 계양 등의 신도시를 중심으로 거점 마련의 노력을 전개 중임
- (인구사회 측면) 인천시는 전국적 현상인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원도심 지역의 경기 침체 문제와 맞물려 심각한 사회 현안을 안고 있음
 - 인천시의 인구 위기는 강화군과 옹진군 같은 섬 지역뿐만 아니라 동구와 중구 내륙지역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어 도시계획 및 도시재생의 변화가 필요한 실정임

2) 내부 환경 변화

- (행정체제 측면) 인천시의 성장과 발전에 관한 주요 연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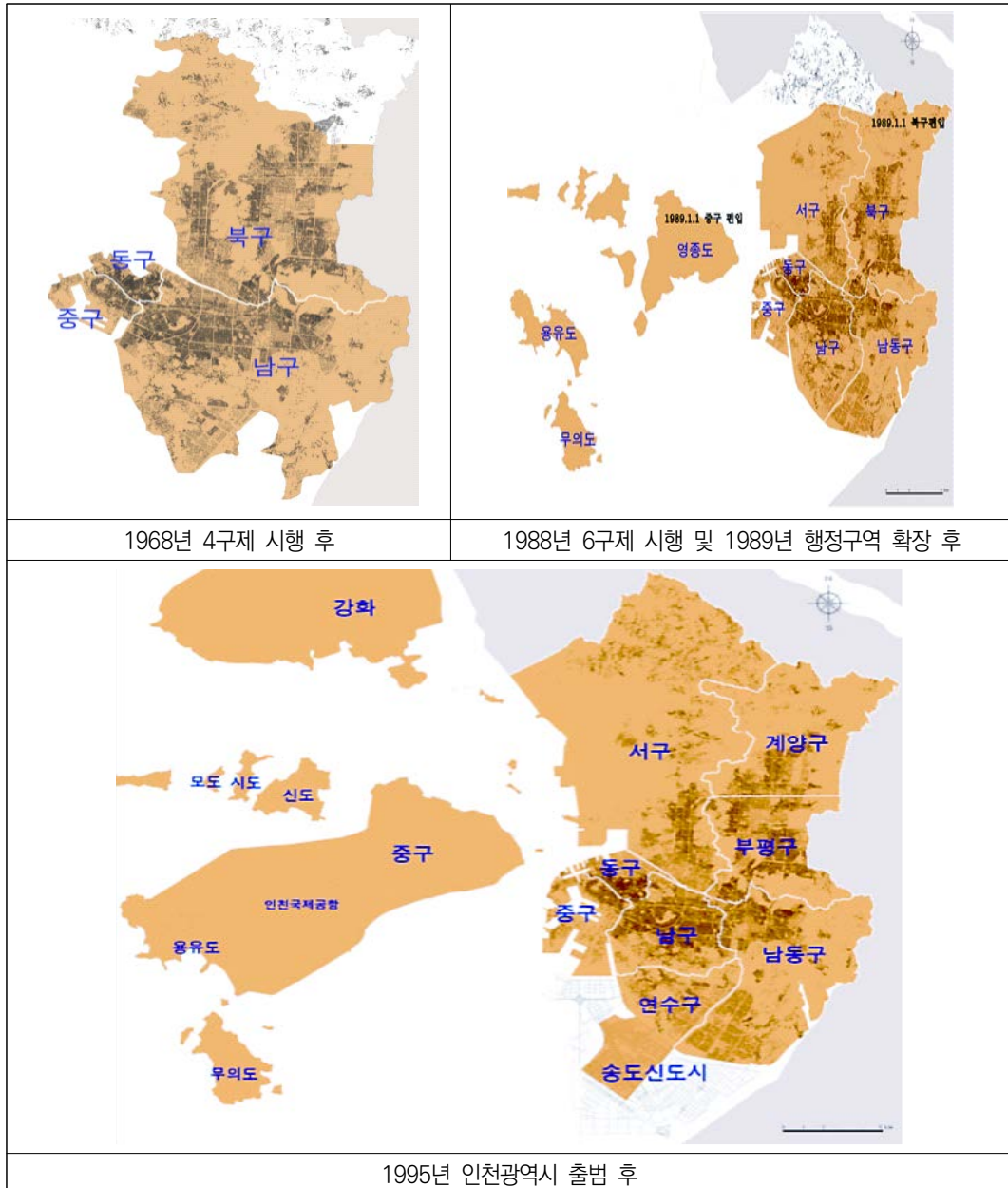
[표 2] 인천시 행정체제 주요 변화

구분	주요 연혁
1980년대 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49년) 경기도 인천부(仁川府)에서 경기도 인천시(仁川市)로 개칭 • (1968년) 구(區)제가 시행됨에 따라 인천시에 4개구(중구, 동구, 남구, 북구)가 설치 • (1979년) 인구수 100만 명 돌파
198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1년) 경기도 인천시에서 분리되어 인천직할시(仁川直轄市)로 승격 • (1987년) 인구수 150만 명 돌파 • (1988년) 6구제로 행정체제 개편 : 남구 → 남구 및 남동구, 북구 → 북구 및 서구 • (1989년) 경기도 옹진군 영종·용유면, 김포군 계양면이 각각 인천시 중구, 북구에 편입
199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2년) 인구수 200만 명 돌파 • (1995년) 인천직할시에서 인천광역시(仁川廣域市)로 개칭 및 2군 8구 체제로 확대 개편 : 남구 → 남구 및 연수구, 북구 → 부평구 및 계양구 : 경기도 강화군·옹진군, 김포군 검단면이 각각 인천시 2군 및 서구에 편입 • (1999년) 인구수 250만 명 돌파
2000년대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3년) 중구(영종지역), 연수구(송도지역), 서구(청라지역) 일대에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 • (2016년) 인구수 300만 명 돌파 • (2018년) 남구가 미추홀구로 명칭 변경 • (2021년) 1읍 19면 135동 체제

- (인구 분포 측면) 인천시는 항만과 공업단지 등의 영향으로 2000년대 이전까지는 현재의 중구 내륙지역과 동구, 부평구, 남동구 일대를 중심으로 인구 유입에 따른 도시 성장을 이루어 옴

- 2000년대 이후에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조성정책과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등의 영향으로 신도시가 위치한 서구, 연수구, 중구 영종지역 등에 인구 유입이 크게 늘어남
- 중구(내륙지역)와 동구의 인구 규모는 1970년 인천시 전체 인구의 40% 이상을 차지하였으나, 2020년에는 4%에 불과함(중구 내륙지역 2%, 동구 2%)

[그림 1] 인천시 행정체제 주요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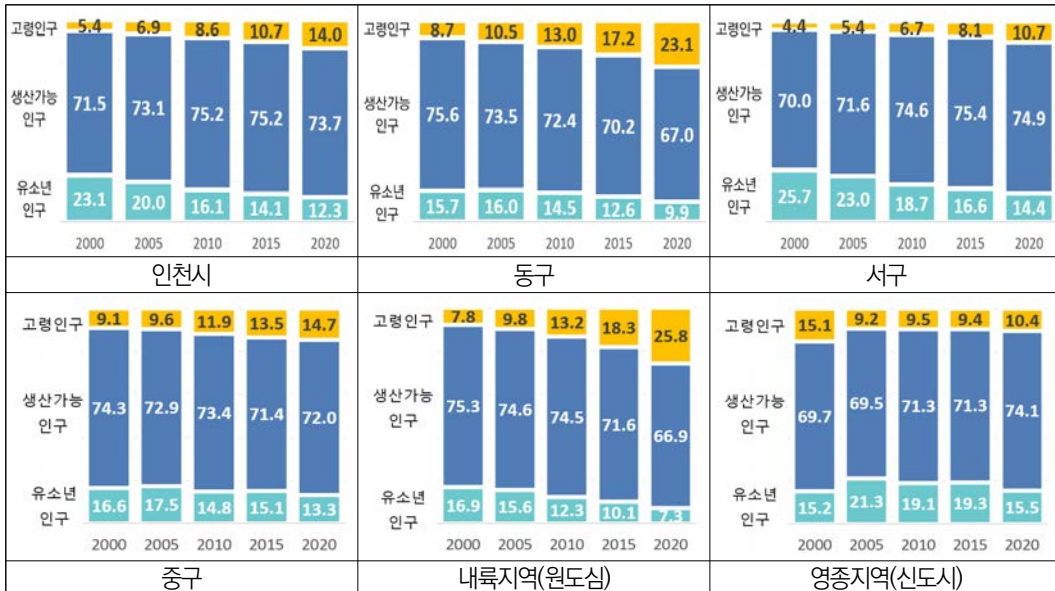
출처: 인천시(2017)

[그림 2] 인천시 행정구역별 인구수 변화(1970년 대비 2020년)

1970년			2020년		
구분	인구수(명)	전체 대비 비율(%)	구분	인구수(명)	전체 대비 비율(%)
인천시	634,046	100	인천시	2,945,454	100
중구 (내륙)	88,377	14	중구	138,586	5
동구	173,286	27	내륙	46,520	2
남구	224,790	35	영종	92,066	3
북구	147,593	23	동구	61,285	2
			미추홀구	405,886	14
			연수구	390,260	13
			남동구	528,927	18
			부평구	500,812	17
			계양구	292,852	10
			서구	541,534	18
			강화군	66,020	2
			옹진군	19,292	1

주: 행정구역별 인구수 변화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본 보고서 [표 3-1] 참고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총조사 - [행정구역별 인구 및 가구] 재구성

[표 3] 중구·동구·서구의 지역별 인구구조 변화(2000~2020년)



주: 유형별 인구(유소년인구, 생산가능인구, 고령인구) 변화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본 보고서 [표 3-4]부터 [표 3-9]까지 참고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행정구역(읍면동)별/5세별 주민등록인구] 재구성

- 중구의 전체적인 인구수는 2000년대 이후 크게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륙지역과 영종지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경우, 두 지역 간의 상이한 양상을 확인할 수 있음
 - 2003년 인천경제자유구역 대상지 중 하나로서 중구 영종지역 일대가 지정됨에 따라 영종지역의 신도시 개발로 인구 유입이 크게 늘며 중구의 전체 인구수를 견인함
 - 내륙지역(원도십) 인구는 2000년 약 5.6만 명에서 2020년 약 4.7만 명으로 감소함
 - 영종지역(신도시) 인구는 2000년 약 1만 명에서 2020년 약 9.2만 명으로 증대함
 - 인구구조 변화를 살펴보면, 내륙지역(원도십)은 생산가능인구와 유소년인구 비중은 감소한 반면, 고령인구 비중은 크게 증가하며 인구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음
 - 내륙지역(원도십)의 생산가능인구와 유소년인구 비중은 2000년 대비 2020년 각각 10%p가량 감소한 반면, 고령인구 비중은 약 20%p 증가함
 - 이와 비교하여 영종지역(신도시)은 생산가능인구와 유소년인구 비중이 상당량을 차지하고 있어, 고령인구 비중은 현재까지도 10%가량을 유지 중임
- 동구는 1970년 인천시 인구수의 27%가량을 차지하는 지역이었으나,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인해 2020년에는 인천시 인구수의 2% 수준으로 하락함
 - 동구의 인구구조 변화는 중구 내륙지역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데, 생산가능인구와 유소년인구 비중은 감소, 고령인구 비중은 확대되며 인구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음
 - 동구의 생산가능인구와 유소년인구 비중은 2000년 대비 2020년 각각 10%p, 5%p가량 감소한 반면, 고령인구 비중은 약 15%p 증가함
 - 재원역량 측면에서 동구는 자체재원(지방세수입, 세외수입)보다 이전재원(지방교부세, 보조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사회복지 분야 지출 규모가 상당한 특징을 지님
 - 현재 재정자료는 행정체제(광역 및 시·군·구) 단위로만 공표되어 중구 내륙지역만의 세입·세출 구조를 확인하긴 어려우나, 동구와 유사한 양상일 것으로 추정됨
- 서구는 여러 가지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인구 유입이 크게 늘며 인구수가 2000년 약 34만 명에서 2020년 약 54만 명으로 불어남(인천시 인구수의 14% → 18%)
 - 서구는 경제자유구역 조성지역 중 하나인 청라지역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제2기 신도시(검단지역)와 공공주택재생사업(가정지역) 등의 영향으로 인구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현재는 인천시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임

- 인천시(2022)가 최근 발표한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현재의 서구와 중구 영종지역은 2040년 각각 10만 명가량의 인구 성장세가 기대되는 반면, 동구와 중구 내륙지역은 답보 상태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해당 자료는 자연적 증감 인구과 사회적 증감 인구의 추산 결과를 종합한 것임
 - 서구는 2020년 약 54만 명에서 2040년 약 64만 명이 거주하는 대규모 생활권으로의 성장이 예상됨
 - 중구 영종지역은 2020년 약 9만 명에서 2040년 약 17만 명으로 확대가 예상됨
 - 동구와 중구 내륙지역, 그리고 미추홀구를 포함하는 중부권 생활권은 2020년 약 52만 명에서 2040년 약 55만 명으로 3만 명가량이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됨
-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에서 중구 내륙지역과 영종지역을 서로 다른 생활권역에 편성한 것처럼 두 지역은 상이한 지역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도시계획 및 개발 방식 등이 요구됨
 - 인천시가 영종권(중구 영종지역)과 중부권(중구 내륙지역, 동구, 미추홀구)으로 생활권역을 분리한 것처럼 두 지역 간에는 통행 양태와 도시 기능 등에 차이가 있음
- 또한, 서구는 넓은 행정구역 면적과 급증하는 인구 증가세를 감당하고, 아라뱃길 상·하부지역 간에 가속화될 생활권역 차이 등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필요성이 제기됨
 - 특히 아라뱃길 위쪽에 해당하는 지역(검단구로 분구하는 것을 추진 중인 지역)에만 2040년 약 30만 명 이상이 거주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표 4] 인천시 생활권별 계획 인구 추산 결과(2040년 전망)

(단위: 만 명)

생활권	2020년 현재	계획인구				증감
		2025년	2030년	2035년	2040년	
인천시	295	302	327	330	330	+35
중부권	52	52	54	55	55	+3
(중구 내륙+동구)	13					
(미추홀구)	39					
영종권 (중구 영종)	9	12	16	17	17	+8
서북권 (서구)	54	54	63	64	64	+10

주: 그밖에 서남권, 동북권, 동남권, 강화권, 옹진권 등의 인구 추산 결과는 본 보고서 [표 3-19] 참고

출처: 인천시(2022a)

3) 지역사회별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 검토 결과

(1) 중구·동구의 원도심 생활권

- (인구·주택 측면) 중구·동구의 원도심 생활권 인구수는 전반적으로 우하향하는 추세인 가운데 고령인구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노후주택과 빈집 등이 늘어나고 있어 원도심 공동화 및 상권 이탈 등에 따른 주거 여건 악화가 심화되고 있음
- (교육·복지 측면) 유소년인구 감소 및 학생인구 유출 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오랜 역사를 지닌 원도심 지역의 학교들이 신도시로 이전하거나 이전 계획을 갖고 있으며, 고령인구 증가세 대비 복지시설의 확충이 더디어 부족 문제가 가중되고 있음
- (교통·물류 측면) 인천시 외부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한 광역교통망뿐만 아니라 인천시 내 다른 생활권으로 이동할 수 있는 연계교통망이 취약하고, 내항 기능 축소에 따른 배후지역 쇠퇴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음
- (문화·관광 측면) 중구·동구 원도심은 근대문물의 접견지이자 근대산업의 중심지로서 역사·문화자원 측면에서 경쟁력을 지니고 있으나, 활용 실적이 일부 사례에 편중되어 있어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인천시의 정체성 확립과 특색 있는 콘텐츠 발굴이 요구됨
- 따라서 중구·동구의 원도심 생활권은 신성장산업 유치,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 등 도시재생의 측면에서 활성화 전략과 개발 방향을 모색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음

(2) 중구 내 영종 생활권

- (산업·행정 측면) 중구 영종지역에 인천국제공항이 설치되고 경제자유구역이 조성되면서 공항경제권 조성 전략이 추진되고 있으나, 각종 행정서비스 추진을 위한 기관들이 내륙지역에 위치해 있어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 영종지역에 중구 제2청사가 운영 중이긴 하나, 일부만 배분한 것이어서 일자리·경제, 노인·장애인 복지 등의 업무 처리를 위해서는 내륙의 제1청사까지 방문해야 함
 - 2040년 영종지역 인구수가 현재의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견되는 만큼, 지금과 같은 제2청사 운영으로는 불어나는 행정수요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울 것임

- (도로교통 측면) 지리적 특성 및 도로체계상 영종지역은 인천대교와 영종대교를 이용해야만
진·출입이 가능하며, 중구 내륙지역과는 직접적인 연결로가 없는 상태임
 - 중구 영종지역에서 인천대교는 연수구, 영종대교는 서구와 맞닿아 있음
 - 영종1동 행정복지센터와 중구청 간의 차량 이동 소요시간은 편도 기준으로 최소 40분가량임(인천
대교 이용 시 편도 30km, 영종대교 이용 시 편도 28km 거리)
- (대중교통 측면) 영종지역에서 서울·경기를 직접 연결하는 광역버스가 전무하고, 공항철도
환승 할인은 분기별로 인증 절차 등을 거쳐야만 가능하며, 시내교통 역시 미흡하여 배차
간격과 운행 횟수, 노선의 충분성 등에 대한 민원이 지속되고 있음
- (보건·의료 측면) 중구의 보건소는 내륙지역에만 위치해 있고 영종지역에는 그보다 제공
사업과 기능이 협소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가 존재하며,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24시간
의료지원시설이나 응급실 등의 접근성이 국가최저기준에 미달함
- (복지·여가 측면) 영종지역은 인천 내 다른 경제자유구역(연수구 송도지역, 서구 청라지역)과
비교하여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관, 장애인·노인 관련 복지시설 등)이나 여가활동시설
(공연장, 체육시설, 도서관 등)이 부족한 것으로 진단됨
- 이처럼 중구 영종지역의 신도시 개발이 지속화·성숙화되면서 내륙지역(원도심)과 영종지역
간의 생활권 분리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 통행 분포상 중구 내륙지역의 자족 기능은 감소한 반면 영종지역은 향상되고 있으며, 타 지역으로
의 이동 양상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따라서 중구 내 영종 생활권은 지리환경적 특성을 활용한 항공 및 복합물류, 관광·레저·MICE
등의 특화산업을 강화하는 한편, 영종지역 내 교통·의료·복지·문화시설 등의 확충으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음

(3) 서구의 검단구 분구

- (인구·지리 측면) 현재 서구는 인천에서 가장 많은 인구수와 내륙지역 내 가장 넓은 행정구역을
보유하고 있으며, 산발적인 택지개발과 주요 교통시설 등의 영향으로 도시가 연속성을 갖지
못한 채 단절되어 가는 양상을 띠고 있음

- 청라, 검단 등 신규택지의 점적인 개발로 인해 원도심(서구청 인근)과 신도시 간 생활권 분리 문제 등이 대두되고 있으며, 공항철도와 고속도로, 아라뱃길 등의 교통시설은 서구 주민의 생활권을 남·북으로 분리하는 데 영향을 주고 있음
- (행정서비스 측면) 많은 인구수와 방대한 행정구역 면적으로 인하여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공이 제한적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음
 - 서구(118.5km²)는 계양구(45.5km²)와 부평구(32km²), 미추홀구(24.8km²) 등을 합친 것보다 넓은 지역에 행정서비스를 제공 중임
 - 서구청이 위치한 곳은 연희동(행정동 기준)으로, 아라뱃길 복단에 위치한 오류왕길 및 검단지역 주민에게는 지리적 접근성과 교통 편의성 측면 등에서 불편함이 존재함
 - 검단지역 부근에 출장소를 설치하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공간이 협소하고 일부 기능만을 지원하고 있어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음
 - 향후 검단지역에만 10만 명 이상이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고, 아라뱃길 남단에 위치한 청라·가정동 일대에도 신도시 개발이 진행 중이므로, 현재와 같은 행정체제가 유지된다면 서구청의 행정 기능이 포화상태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됨
- (보건·보육 측면) 서구청뿐만 아니라 보건소의 경우에도 연희동(행정동 기준)에 자리하고 있어 보건서비스 접근성에 편차가 존재하며,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들은 보육서비스 수요 등에 선제적인 대비와 시설 확충이 필요해 보임
 - 검단지역에 2개의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긴 하나, 보건 업무를 총괄·지원하는 보건소보다는 업무와 기능이 협소하므로, 이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필요함
- (사회·문화 측면) 검단지역은 경기도 김포군에 속해 있다가 1995년 인천시에 편입된 곳으로, 인천의 주요 도심(동인천, 구월, 부평)보다는 김포지역과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으며, 지역정서나 주민의식 등이 서구 내 다른 주민들과 상이한 면이 있음
- 따라서 서구는 아라뱃길 윗쪽의 검단지역을 분구하여 향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구수와 행정수요에 대비한 교통·행정·복지·문화 등 제반시설의 준비와 발전 전략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4. 성공적인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제언

1) 제물포구 신설과 연계한 원도심 활성화 방안

- 중구 내륙지역과 동구를 제물포구로 통합하는 행정체제 개편안은 인천시 민선8기 행정부의 중점사업 중 하나인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와 연계되어 다음과 같은 발전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인천내항 재개발을 통한 해양복합단지 개발, 개항근대문화 관광 연계, 청년창업 및 벤처창업 지원센터 조성, 원도심 연계 공공리츠 개발방식 적용, 다양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통한 원도심 환경 개선 등
- 중구 내륙지역과 동구를 하나의 자치구로 통합할 경우, 각 자치구가 개별적으로 제공하고 있던 정책들을 상위 호환의 형태로 결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일례로, 중구와 동구가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지역사회보장계획 등의 특화사업을 총체적·종합적인 관점에서 검토하여 지역수요에 부응하는 형태로 지원해야 함
 - 현재 중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내륙지역과 영종지역 간의 상이한 특성 등으로 인하여 제공하는 사업수나 예산 규모가 동구보다 크게 부족한 실정임
 - 가용한 예산 범위 내에서, 정책 수혜자에게 지급하던 혜택은 가급적 유지하는 형태로 사업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중구 내륙지역과 동구의 통합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과 사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됨
- 인천시는 중구·동구 원도심 생활권 주민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정책을 유지 또는 보완해야 할 것이며, 민선8기 행정부의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 등과 연계한다면 정책의 수혜 대상과 지원 예산 등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2) 영종구 및 검단구 신설을 통한 지역 활성화 방안

- 중구 영종지역과 서구 검단지역을 각각 영종구와 검단구로 분구하는 행정체제 개편안은 인천시 민선8기 행정부의 중점사업 중 하나인 ‘뉴글로벌시티 프로젝트’와 연계되어 다음과 같은 발전 전략을 기대해 볼 수 있음
 - 해당 프로젝트는 총 3단계로 계획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1단계는 ‘인천 글로벌 서클’로서 현재의 경제자유구역 조성지역(중구 영종지역, 연수구 송도지역, 서구 청라지역)을 포함하여 강화도 남단과 인천 내항 등을 경제자유구역으로 함께 지정하여 하나의 사업권으로 묶는 구상임

- 2단계는 서구 검단신도시 등을 ‘인천 글로벌 서클’에 포함하여 인천시 전역으로 확대하는 것이며, 3단계는 이를 인접도시로까지 확산하는 계획임
- 중구 영종지역은 분구를 통해 ‘뉴글로벌시티 프로젝트’의 중심축을 담당하며 인천시의 성장과 발전에 거점 역할(growth pole)을 할 것으로 기대됨
 - 영종지역이 ‘인천 글로벌 서클’의 중심으로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분구 추진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 등의 행정적 지원 노력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음
- 서구 검단지역은 분구를 통해 ‘뉴글로벌시티 프로젝트’의 2단계 도약을 위한 거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며, 인천시의 ‘북부권 종합발전계획’과도 연계하여 지역의 성장 및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 검단지역이 ‘인천 글로벌 서클’의 인접지역 확장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통망 확충 등이 이루어져야 함
 - 인천시가 발표한 ‘북부권 종합발전계획’과 연계하여 검단지역은 북부 생활권 중심의 교통순환망 구축, 첨단산업 환경도시로의 전환, 도심항공교통(UAM) 등 모빌리티·첨단산업 중심지 조성 등에 따른 발전 가능성이 기대됨

수요 기반 인천고등법원 설립 필요성 검토

■ 채은경 도시사회연구부 선임연구위원

1. 배경과 목적

- 인천 지역 도시 성장에 따른 급격한 인구 및 사업체 증가로 사법서비스 수요 증가
- 광역시 중·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인천과 울산임
- 인천의 특성을 반영한 객관적, 합리적 논거를 보강하여 고등법원 설립 타당성 확보
- 고등법원 관련 법·제도 뿐만 아니라 인천 지역의 사법서비스를 둘러싼 여건, 항소심 건수 추정, 시민 및 전문가들의 수요 조사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인천고등법원 설립 필요성 제기를 목적으로 함

2. 정책제안

- 법·제도 검토, 인천 지역의 인구 규모, 소송사건 수 등의 여건 분석 결과 서울고등법원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과포화되어 있는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음
- 특히, 인천시는 섬 지역이 존재하여 사법서비스 제공에 제한적인 지역이 존재하며, 도시철도를 통하여 대중교통으로 서울고등법원 접근이 가능하기는 하나, 상당한 시간이 걸림을 확인할 수 있음. 특히,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사법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져야 함
- 본 연구를 통하여 인천고등법원이 설립될 경우 최소 항소심 건수를 추정한 결과 고등법원 설립에 충분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인천 시민 및 전문가 집단에 대한 수요 조사 결과에서도 고등법원 설립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법률 개정을 통하여 인천고등법원 설립이 필요함을 주장하는 바이며, 인천 지역 여건은 인천고등법원 설립을 위한 충분한 여건이 조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음.
- 인천고등법원 설립은 계량적 편익 이외에도 비계량적 지역사회 파급효과가 존재하므로 향후 인천 고등법원 설립을 위해서는 발생가능한 갈등요소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인천 고등법원 설립이 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협력과 공동된 의지를 확인하고 주장하기 위한 계기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의 추진방향과 과제

■ 남근우 도시사회연구부 연구위원

1. 배경과 목적

- 인천시는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노르망디상륙작전 기념행사에 버금가는 세계적인 평화·안보 행사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임
- 이를 위해 인천상륙작전 제75주년이 되는 2025년부터 국제행사로 격상할 방침을 정하고 2023년부터 기념주년을 정해 중·장기계획으로 확대·추진할 계획임
- 인천상륙작전은 대한민국과 인천의 자유와 평화를 상징하는 유·무형의 자산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는 기념행사가 국민과 시민의 공감대를 얻어 지속가능한 행사로 추진되기 위한 정책방향과 추진과제를 제안함

2. 정책제안

-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가 지속가능한 행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상륙작전이 전개된 기초자치단체 및 관련 유관기관과 협력적 거버넌스체계 구축이 필요함
- 인천지역에는 인천상륙작전 관련 시설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접근성도 떨어져 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역사적 고증을 통한 시설보완과 부지확보 및 관련 역사문화 자원 발굴이 필요함
-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를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방향에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군(軍) 중심 행사에서 벗어나 인천시, 기초자치단체, 국가보훈부, 관련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개최할 필요가 있음
-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가 인천을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행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상륙작전의 역사적 가치, 시설활용, 고증에 기반한 역사문화 자원 발굴 및 스토리텔링을 통한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에 따른 인천시 대응과제

■ 이미애 도시사회연구부 연구위원

1. 배경과 목적

- 현 정부는 2023년 2월 10일,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중앙정부의 주요 권한 6대 분야 57개 과제를 지방이양하기로 결정함
-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은 지방자치가 부활된 시점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지방이양 추진기구가 법률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기 시작한 2000년부터 2022년까지 총 3,261개가 지방이양 사무로 확정됨
- 현재까지 이루어진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추진 실태와 정부의 지방이양 추진계획에 따른 인천시 영향 사무 등을 살펴보고, 정부의 권한이양에 따른 인천시의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2. 정책제안

-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은 해당 사무의 근거 법률 제·개정, 시행령이나 규칙 또는 지침 개정, 제도 개선 등의 절차를 통해 지방으로 이양되므로, 지방이양이 계획된 사무별로 향후 절차에 따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
-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에 따른 행·재정적 자원 확보를 위해 대외적으로는 지방이양 사무 수행을 위한 예산과 기구, 인력 등을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대내적으로는 이양사무 수행을 위한 자체적인 인력·예산 소요 추정과 확보, 조례 제·개정 등 제반사항의 준비가 필요함
- 부문별로 전문화된 기능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과 달리 지방자치단체는 종합행정 기능을 담당해야 하므로, 지방이양 사무 수행을 위한 현행 행정기구의 진단·점검을 통한 조직 재설계가 필요함
- 중앙권한을 이양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 비견할 만한 역량 함양이 중요하므로, 추진계획의 수립·집행을 위한 전문성 강화와 수행 의지 독려 등이 필요함
- 이양 사무의 방향과 수행 형태 등에 따른 광역-기초자치단체 간의 관계 재설정 및 협력 방안 마련이 필요함

인천시민의 삶과 공공행복

■ 이미애 도시사회연구부 연구위원

1. 배경과 목적

- 민선8기 인천시는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을 시정목표로 천명하고, 도시의 질적 성장과 시민행복 증진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개인의 행복을 넘어 공동체 행복에 대한 지역적, 국가적, 범국가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공공행복 (public happiness)이라는 집합적 개인의 행복 논의가 확대되고 있음
- 공공행복의 측정은 개인과 공동체가 느끼는 행복 수준뿐만 아니라 그 행복을 이루는 데 영향을 미치는 사회조건들의 객관적·주관적 평가를 포함함
- 2023년 현재 인천시민이 느끼는 삶의 질 수준과 지역생활 여건, 감정과 정서, 자기 삶의 의미와 가치 인식 등을 파악하여 인천시민의 공공행복 수준을 살펴보고, 시민행복 증진을 위한 정책 방향 등을 제안하고자 함

2. 정책제안

- **【인천시 시정정책의 방향 모색】** 공공행복 조사를 통해 인천시민의 행복 요소를 파악하고, 지역사회 여건을 측정·평가하여 시정정책의 방향 모색 필요
- **【정책수요 파악 및 정책수립의 근거 마련】** 집합적 행복의 측정을 통한 자원배분 결정, 분포도 분석을 통한 불평등 개선 정책 수립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
- **【정책현안별·수혜대상별 심층 조사·연구 활용】** 범용적인 공공행복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심층적인 분석 또는 기획연구 등의 추진
- **【인천시 도시정책지표 연계·활용】** 공공행복 조사 결과를 인천시 도시정책지표 (인천시민행복지표, 지속가능발전지표, ESG지표 등)와 연계하여 활용
- **【인천시 행복지수(안) 도출】** 신중한 접근을 전제로, (가칭)시민행복지수의 도출과 시계열 분석을 고려

2023년도 연구결과 요약집

II

교육·복지 분야

- **기획연구**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 성과분석 및 지속가능성 방향 연구

- **정책연구**

'건강도시 인천' 조성 방안 연구

인천시 가족센터 설치 필요성 및 운영 방안 검토

아동양육시설 경계선지능 및 ADHD 아동 지원 강화 방안

- **현안연구**

중·동구 원도심 지역 일반고등학교 활성화 방안

인천형 생애주기별 맞춤형 저출산 정책방안

- **이슈브리프**

인천은 여성에게 안전한 도시인가?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 성과분석 및 지속가능성 방향 연구

■ 이용갑 도시사회연구부 선임연구위원

1.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는 인천광역시의 민간위탁사업으로 2009년부터 기업의 후원금과 전문 자원봉사자의 재능나눔으로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으로 저소득·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의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을 지탱해주는 한 축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또는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차원에서 지역사회와의 관계 형성을 위한 지역사회에 대한 민간기업의 기부금 후원이며, 또 하나의 축은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주거 관련 기업의 전문인력에 의한 재능나눔 및 집수리를 위해 필요한 전문기술을 보유한 개인이나 단체의 재능나눔임.
-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의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모색해야 하는 것은 이 사업을 둘러싼 환경이 다음과 같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음.
 - 첫째, 사업의 주요 재원이라고 할 수 있는 민간기업·단체의 기부금 후원이 2015년부터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며, 2020년부터는 전혀 없는 상황이 되면서 2020년부터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의 재원이 인천광역시의 민간위탁사업 보조금으로만 충당되고 있음.
 - 둘째, 자원봉사 인력에 대한 지원 문제와 함께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겪으면서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에 참여하는 전문인력 확보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음.
 - 셋째, 2021년 1월 인천도시공사(iH)가 인천광역시로부터 광역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사업자로 지정받으면서 ‘인천광역시광역주거복지센터’가 설립되고, 이 센터가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의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인천광역시의 민간위탁사업자로서 실시하게 됨.

- 이에 따라, ‘저소득·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에 집중하는 광역지자체 차원의 민관협력 사회복지사업이면서 동시에, 민간기업·단체의 후원금과 전문인력의 재능나눔을 결합한 시민주도적·전문적·창의적 자원봉사활동’인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임.

2)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의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의 성과를 데이터에 기반하여 분석하고, 대상자 가구의 만족도 분석, 기부금을 후원하는 민간기업·단체 관계자 및 전문기술의 재능나눔을 실시하는 단체의 의견수렴, 센터 관계자와의 논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의 방향을 찾고자 함.

3) 연구의 방법 및 내용

- 문헌분석
 - 자원봉사의 패러다임 전환, 전문인력의 재능나눔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ESG 등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
 -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 2009~2022년 사업 결과, 민간기업 후원금 기부 현황 및 전문 자원봉사자의 재능 나눔 현황 분석
- 사업대상자의 만족도 조사 결과 분석
 - 2009~2022년 부분·전부수리 완료가구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분석
- 후원금 기부 민간기업·단체 및 재능나눔 전문인력단체 대상 서면 설문조사
 - 기부금 후원 민간기업 관계자 대상 CSR/ESG 차원에서 기업의 지역사회와의 관계 형성 정도 및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의 향후 발전 방향 확인
 - 재능나눔을 한 전문인력 단체 대상 지역사회와의 관계 형성 정도 및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의 향후 발전 방향 확인
-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의 환경변화 분석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 논의

2. 자원봉사 패러다임의 변화와 ESG

1) 자원봉사 패러다임의 변화

-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의 저소득·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일종의 집수리 사업인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을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원봉사 패러다임의 변화, 전문인력의 재능기부에 의한 자원봉사 및 기업의 ESG 경영과 관련한 지역사회 관계 형성을 위한 기부금 후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 2010년대 후반부터 몇몇 연구자들은 자원봉사의 패러다임이 지자체가 기획하고 동원하는 소위, '동원성·일회성 자원봉사'에서 '시민주도적·전문적·창의적 자원봉사'로 전환하고 있다는 분석을 제시하고 있음.
 - 최상미 외(2017)는 세대·환경의 변화 때문에 전통적 방식의 자원봉사는 감소하는 반면에, 정기적인 봉사와 전문재능을 가진 봉사자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자원봉사에서 시민참여의 총량이 증가한다고 분석함.
 - 유사한 맥락에서 이명신(2018)도 생활양식, 문화, 사회, 제도 등의 변화에 따라 시민들의 욕구가 다양해지고, 자원봉사자를 필요로 하는 사회문제와 욕구 또한 변화하면서 자원봉사도 시대에 따라 함께 변화하고 있다고 진단함.
 - 자원봉사 패러다임의 변화와 관련한 실증분석을 한 최준규 외(2022)는 2010년대 이후 경기도에서 자원봉사 등록률은 증가하였으나, 자원봉사 참여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20년 이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활동이 어려워진 자원봉사를 둘러싼 환경변화 때문에 자원봉사정책은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함.
- 자원봉사의 패러다임이 시민주도적·전문적·창의적 자원봉사로 전환됨에 따라 전문인력의 재능나눔이라고 할 수 있는 재능기부 자원봉사, 또는 전문자원봉사는 지자체 및 전국에 산재한 광역·기초지자체 자원봉사센터가 기획하고 운영하는 자원봉사활동에서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인이 되었음.
 - 최준규 외(2022)는 전문봉사활동은 자원봉사 패러다임의 전환에 필요한 요소 중 하나인 자원봉사자의 역량강화가 필수적이며, 전문봉사활동을 ①'재능'에 기초한 자원봉사활동, ②'전문가(직업분류 및 전문지식·기술 활용)'에 의한 자원봉사활동, ③'경력'에 기초한 자원봉사활동, ④'선경험자의 재능기부', ⑤'전문단체에 의한 자원봉사활동'의 범주로 구분함.

- 최상명 외(2012)는 우리나라 자원봉사자 중 전문봉사활동을 수행한 비율은 16%에 불과하고, '전문인력의 재능나눔'을 '전문가 개인'과 '전문단체'에 의한 자원봉사활동으로 구분하여 논의함.
- 이금룡 외(2018)는 인구고령화시대에 필요할 수 있는 노인 전문인력을 활용한 재능기부 자원봉사인 '보건복지부 노인 재능나눔 사업'을 분석하여 전문인력의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을 찾고자 함.

2) 기업의 ESG 경영과 지역사회 공헌

-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의 두 축 중 하나인 민간기업·단체의 기부금 후원은 지역사회와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사회적 역할을 하고자 하는 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한 민간기업의 적극적 동참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음.
 - 민간기업의 사회적 역할 수행과 관련한 외부 환경의 변화는 ①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의 관점에서 논의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②투자자의 관점에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업의 ESG 경영'으로 이해할 수 있음.
- '기업의 ESG 경영'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개념과 비교하면 그 의미를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음.
 - 첫째, 관점의 경우,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은 기업의 책임이 주주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활동과 관련되는 이해관계자까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부합하는 자발적인 기업활동, 예를 들면 사회적 공헌 활동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러나 '기업의 ESG 경영'은 기업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장기적인 투자위험 관리 차원에서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라는 비재무적 요소를 관리하는 것임.
 - 둘째,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 차원의 경우,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서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은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사회적 공헌 활동임. 그러나 '기업의 ESG 경영'에서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은 3가지 비(非)재무적 요소 중 하나인 사회(S), 즉 지역사회와 관계 형성을 통한 지역사회라는 위험요소에 대한 관리라고 이해할 수 있음.
- 공공기관의 ESG 활동과 관련된 사회적 가치실현의 의무화를 규정하는 입법 안(案)과 함께, 주식거래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경우 자산규모에 따라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ESG 활동에 대한 공시를 의무화하는 금융위원회의 계획은 기업의 사회공헌활동(CSR)이나 ESG 경영이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의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에 대한 기업의 기부금 후원 및 재능나눔과

연계되는 법적, 행정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논의는 다음과 같음.

- 고경환 외(2022)는 지난 2020년 초 시작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사회복지 분야에서 기부금의 전체 규모가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감소의 90% 이상이 기업(법인)의 기부금 감소가 그 원인이라고 분석함. 또한, ESG 경영전략의 등장에 따라 기업의 지속가능한 생존을 위해서는 사회공헌을 통해 기업의 본래 미션인 이익창출·수익확대와 사회적 기대를 연계한 새로운 전략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논의를 전개하고 있음.

3.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성과 분석

1)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성과 분석

[표 1] 2009~2022년 세부 사업별 완료가구

(단위: 가구)

연도	계	전부 수리	부분 수리	소규모 생활수선	클린 방역	시원한 여름나기	따뜻한 겨울나기	물품지원 (가전제품)	단열 지원	골목길 (벽화) (단위 지역)
2009	150		148					2		
2010	521		425					96		
2011	780		637					143		
2012	646		518					128		
2013	611		427					184		
2014	1,250	11	454	509				276		
2015	1,297	31	500	540				216		10
2016	890	15	505	260					97	13
2017	1,125	13	508	502					90	12
2018	1,024	8	506	505						5
2019	733	12	407	302						12
2020	1,512	15	285	302	797	103				10
2021	1,750	12	301	302	1,035	100				
2022	2,909	10	303	317	2,204	50	25			
총계	15,198	127	5,924	3,539	4,036	253	25	1,045	187	62

자료(출처):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 내부자료를 연구자가 재가공

-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의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 연도별 사업의 완료가구 규모는 2009년 150가구에서 2015년 1,297가구로 증가한 후, 2019년 733가구로 감소하였으며, 그 이후 2020년부터 완료가구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22년에는 총 2,909가구임.

- 2009~2022년 사업결과를 세부 사업별로 구분하면, 사업 완료가구가 가장 많은 세부 사업은 ‘부분수리’(5,924가구)이며, 그다음으로 ‘클린방역’(4,036가구), ‘소규모 생활수선’(3,539가구), ‘물품지원’(1,045가구) 등임.
-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거나, 노후주거문제의 근원적 해결이 어려운 저소득·취약계층 가구의 주택 리모델링과 내부 전문 수리 등을 수행하는 주택 ‘전부 수리’ 완료 규모는 127가구임.
- 홀몸 노인·장애인·한부모가정·기초생활수급자·저소득계층 등의 주거환경에 대하여 거주주택을 부분적으로 수리하는 ‘부분 수리’ 사업의 완료 규모는 5,924가구임.
- 홀몸 노인·장애인·한부모가정·기초생활수급자·저소득계층 등이 거주하는 주거지의 형광등·콘센트·스위치·각종 수전 교체 등 통해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는 ‘소규모 생활수선’ 완료 규모는 3,539가구임.
- 위생관리가 필요한 가구에 대하여 월 1회 정기적 소독과 방역을 실시하여 각종 질병을 예방하고자 하는 ‘클린방역’ 완료 규모는 4,036가구임.
- 여름철을 시원하게 지낼 수 있도록 현관에 방충망을 제작·설치해주는 ‘현관 방충망 설치’ 완료 규모는 253가구임.
- 소외계층 및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온수매트를 지원하여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물품을 지원하는 ‘따뜻한 겨울나기’ 완료 규모는 25가구임.
- 냉장고, 세탁기, TV 등 생활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가전제품이 낡은 가구에 가전제품 무상 교체를 지원하는 ‘물품지원’ 완료 규모는 1,045가구임.
- 저소득 및 소외계층 가구를 만능수리공이 방문하여 동절기 대비 단열필름 또는 비닐 등의 바람막이를 설치하는 ‘단열지원’ 완료 규모는 187가구임.
- 노후되거나 위험한 거리, 지역을 대상으로 벽화그리기, 화단조성 등을 실시함으로써 안전하고 예쁜 골목길을 조성하는 ‘골목길(벽화) 사업’은 62개 지역을 대상지로 선정하여 시공을 완료함.
-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 전체의 완료가구를 기초지자체별로 구분할 경우, 완료가구가 가장 많은 기초지자체는 전체 완료가구의 17.6%인 2,676가구가 대상이 된 서구임.
- 그다음으로는 15.0%인 2,278가구가 대상인 된 계양구, 11.3%인 1,719가구의 남동구, 부평구(1,663가구), 동구(1,659가구) 순으로 완료가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강화군은 전체의 3.7%인 558가구, 옹진군은 전체의 3.4%인 524가구가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의 완료 가구였음.

[표 2] 군·구별 완료가구

(단위: 가구)

연도	계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2009	150	18	38	6	3	12	1	1	38	3	30
2010	521	104	88	51	51	58	41	43	69	7	9
2011	780	80	73	129	173	79	66	63	93	20	4
2012	646	53	56	75	83	52	43	43	37	13	191
2013	611	77	69	82	77	112	49	78	63	4	
2014	1,250	116	56	157	162	165	189	224	177	4	
2015	1,297	105	132	162	119	196	198	182	180	18	5
2016	890	117	96	115	98	81	126	139	102	10	6
2017	1,125	107	125	227	112	143	114	146	145		6
2018	1,024	84	101	104	131	162	83	163	177	19	
2019	733	70	56	101	71	79	88	157	96	15	
2020	1,512	73	205	93	124	220	172	259	165	81	120
2021	1,750	114	335	83	104	163	238	351	196	132	34
2022	2,909	88	229	143	79	197	255	429	1,138	232	119
총계	15,198	1,206	1,659	1,528	1,387	1,719	1,663	2,278	2,676	558	524

자료(출처):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 내부자료를 연구자가 재가공

-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의 완료가구의 대상을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음.
- ‘클린방역’ 및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의 대상가구를 제외한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의 완료가구 11,137가구 중 37.1%인 4,129가구인 독거노인(1인 가구 노인, 홀몸 노인)이 가장 많은 유형이며, 그다음으로는 25.9%인 기초생활수급자 2,884가구, 12.3%인 장애인 1,735가구, 12.1%인 차상위·저소득 1,348가구 등임.

[표 3] 대상유형별 완료가구

(단위: 가구)

연도	계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저소득	골목길(벽화) (단위: 지역)	기타
2009	150	121	9		9	11		
2010	521	122	82	42	185	90		
2011	780	199	146	102	253	80		
2012	646	178	100	42	253	73		
2013	611	215	140	81	139	36		
2014	1,250	401	228	146	374	101		
2015	1,297	378	118	153	490	148	10	
2016	890	394	158	50	198	77	13	
2017	1,125	406	239	83	294	91	12	
2018	1,024	406	200	76	241	96	5	
2019	733	309	96	37	173	106	12	
2020	715	336	68	47	103	143	10	8
2021	715	357	75	43	75	157		8
2022	680	307	76	55	97	139	0	6
총계	11,137	4,129	1,735	957	2,884	1,348	62	22

자료(출처):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 내부자료를 연구자가 재가공

2)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 재정 현황

-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의 재원은 2013년 수입에 포함된 ‘2012 국정과제 평가 우수 특별교부세’ 1억 원을 제외하면 ①첫째, 인천광역시의 예산으로 지원되는 ‘민간위탁사업 보조금’(보조금), ②둘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금 형식으로 제공되는 ‘민간기업·단체의 후원금(기탁금)’, ③셋째,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배분하는 ‘복권기금’임.
- 전체 수입은 2009년 2,950만 원에서 민간기업·단체의 기부금 및 복권기금의 증가로 2015년 10.9억 원까지 증가하였으나, 그 후 이 두 종류 재원의 규모가 감소하고, 지원이 종료됨. 2018년 이후에 인천광역시의 민간위탁사업 보조금이 주요 재원이 되면서 수입이 계속 감소하였으며, 2022년에는 약 3.9억 원 수준임.
-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의 예산집행률은 2011년 37.3%, 2019년 83.8%를 제외하고 모든 연도에서 90% 이상이었음.

[표 4] 연도별 수입 및 지출 현황

(단위: 원, %)

연도	수입	지출	예산집행률	비고
2009	29,500,000	29,092,890	98.6	시예산: 2천9백5십만 원
2010	160,000,000	160,000,000	100.0	기탁금: 1억6천만 원
2011	545,000,000	203,472,000	37.3	기탁금: 5억4천5백만 원
2012	456,000,000	450,604,420	98.8	기탁금: 4억5천6백만 원
2013	360,000,000	359,435,320	99.8	기탁금: 2억6천만 원 (2012국정평가우수특별교부세: 1억 원)
2014	549,000,000	548,461,090	99.9	복권기금: 5억3천만 원; 기탁금: 1천9백만 원
2015	1,090,000,000	1,082,543,060	99.3	복권기금: 10억 원; 기탁금: 9천만 원
2016	730,000,000	671,256,960	91.9	복권기금: 5억3천만 원; 기탁금: 2억 원
2017	600,000,000	599,921,890	99.9	복권기금: 5억3천만 원; 기탁금: 7천만 원
2018	600,000,000	593,728,600	98.9	시예산: 5억3천만 원; 기탁금: 7천만 원
2019	640,000,000	536,745,010	83.8	시예산: 5억3천만 원; 기탁금: 1억1천만 원
2020	435,000,000	434,232,890	99.8	시예산: 3억8천만 원; 기탁금: 5천5백만 원
2021	393,000,000	390,169,160	99.3	시예산: 3억8천만 원; 기탁금: 1천3백만 원
2022	393,000,000	392,176,000	99.8	시예산: 3억8천만 원; 기탁금: 1천3백만 원

자료(출처):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 내부자료를 연구자가 재가공

-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의 지출현황은 세부 사업별로 구분하여 분석할 수 있음.

-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의 누적 지출은 같은 기간 수입 총액인 69억 8,050만 원의 92.4%인 약 64억 5,183만 원임.
- 지출 규모를 세부 사업별로 구분하면 '전부수리'에는 총지출액의 8.2%인 약 5.3억 원, '부분수리'에는 70.3%인 약 45억 3,498만 원, '소규모 생활수선'에 4.9%인 약 3.2억 원, '물품지원'에 6.4%인 약 4.2억 원, '시원한 여름나기'와 '따뜻한 겨울나기'와 같은 하절기·동절기 지원에는 0.4%인 약 2,897만 원, 2020~2022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필요하였던 '클린방역'에는 0.6%인 약 4,000만 원이 지출됨.
- 이에 따라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은 '전부수리'와 '부분수리'에 각각 총지출액의 8.2%와 70.3%인 총 50억 6,467만 원(78.5%)을 지출함으로써 원래 목적인 '저소득·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에 집중하는 광역지자체 차원의 민관협력 사회복지사업이면서 동시에, 민간기업·단체의 후원금과 전문인력의 재능나눔을 결합한 시민주도적·전문적·창의적 자원봉사활동'이라고 할 수 있음.

4.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의 민간기업·단체 후원 및 전문인력 재능나눔 분석

1) 민간기업·단체의 후원

-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된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의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정기탁금형식으로 후원한 민간기업 및 단체는 41개임.
 - GS건설(주), 대림산업 등과 같은 민간기업뿐 아니라, 인천불교총연합회, (사회복지법인)주안복지재단, 부평감리교회 등과 같은 다양한 단체들도 후원에 동참함.
- 2009년부터 실제 기부금이 후원된 2019년까지 민간기업 및 단체의 지정기탁금 총액은 약 17억 5,609만 원임.
 - 지정기탁금 후원이 가장 많았던 연도는 2011년으로 12개 기업이 약 5억 4,500만 원을 후원함.
 - 2017년부터는 2개 기업의 지정기탁금 후원만 이루어졌으며, 2020년부터는 이 2개 기업의 후원도 중단된 상황임.
-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지정기탁금을 후원한 41개 기업 및 단체 중 가장 많은 횟수의 후원을 한 기업은 (주)선광으로, 총 9회에 걸쳐 2억 2,000만 원의 지정기탁금을 후원함.
 - (주)스카이72는 6회, (주)이건산업(창호) 및 (주)휠라선은 4회에 걸쳐 지정기탁금을 후원하였으며, (주)유승종합건설, 대한제당(주), 인천도시공사(인천도시개발공사), 한국가스공사(인천지역본부)는 3회에 걸쳐 후원함.

- 반면에, 기부금을 후원한 민간기업과 단체의 절반 이상인 25개 민간기업 및 단체는 1회만 기부금을 후원하였음.

2) 전문인력의 재능나눔

-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의 세부 사업별 완료가구 수와 전문인력 재능나눔 자원봉사자의 실인원이 아닌, 연인원(사업 참여자)을 기준으로, 복수로 산정된 경우가 있음을 고려하여 재능나눔 봉사자 수를 추정하면 약 3.1만 명이 참여했을 것으로 추정됨.
-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된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의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에는 89개 기업 및 단체가 전문인력의 재능나눔 봉사에 참여하였으며, 이 중 기업은 56개, 봉사단체는 14개, 기타 단체는 11개, 비영리단체는 7개, 종교단체는 1개임.
 - 기업/단체별 재능나눔 봉사 횟수는 기업인 ‘오성인테리어’가 16회로 가장 많았음.
 - 그 외에 봉사단체 ‘나눔회’가 15회, 기업인 ‘진주인테리어’가 14회, 비영리단체인 ‘한국희망집짓기운동본부’가 12회, 기타인 ‘가좌3동 새마을협의회’가 11회임.
- 기업 및 단체가 재능나눔 봉사에 참여한 연도 및 참여사업의 경우 벨전자, 보호관찰소, 서구자원봉사센터, 종합철물, 한국폴리텍대학 인천캠퍼스의 교수와 학생 등을 제외하고, 재능나눔 봉사에 참여한 대부분의 기업과 단체는 ‘전부수리’, ‘부분수리’ 사업에 참여하였음.
 - 가좌3동새마을협의회, 경동나비엔, 나눔회, 소망키움봉사단, 오성인테리어, 웨슬리봉사단, 진주인테리어, 참사랑나눔봉사단, 한국희망집짓기운동본부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전문인력 재능나눔 봉사에 참여하고 있음.
 - 이와는 달리, 49개 기업 및 단체의 재능나눔은 일회성이었다고 할 수 있음.
-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의 전문인력의 재능나눔에는 기업 및 단체뿐만 아니라, 개인도 참여하였으며, 이들은 ‘소규모 생활수선’ 사업에서 만능수리공으로 활동하거나, ‘골목길(벽화) 사업’에 참여해 벽화그리기 등에 동참하거나, ‘클린방역’ 사업에 참여해 소독 및 방역 봉사를 함.
 - 연인원 기준으로 ‘소규모 생활수선’ 사업에 참여한 개인 재능나눔 봉사자는 445명, ‘골목길(벽화) 사업’에 참여한 개인 재능나눔 봉사자는 1,419명, ‘클린방역’ 사업에 참여한 개인 재능나눔 봉사자는 4,581명으로 총 6,445명의 개인 전문인력이 재능나눔 봉사에 참여함.

5.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 만족도 및 발전 방향 설문조사 분석

1)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 만족도 및 발전 방향 설문조사 개요

-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와 협의하여 '자원봉사자 재능나눔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의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대상자, 기부금 후원 민간기업·단체, 재능나눔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성과 만족도, 제시하는 향후 발전 방향 등을 확인하고자 하였음.^{1), 2)}
- 첫째,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는 2011년부터 2022년까지, 2012년 한 해를 제외하고 수리 완료가구에 대하여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본 연구는 대상자의 사업 만족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조사 결과를 분석·활용하고자 함.
- 둘째, 본 연구는 2023년 5월 10일부터 5월 17일까지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에 기부금을 후원하는 민간기업 중 인천에 소재한 지역 기업 4개소를 대상으로 기부금 후원의 동기와 만족도, 기부금 후원과 기업의 ESG 활동, 사업의 향후 발전 방향에 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함.
- 셋째, 본 연구는 2023년 5월 10일부터 5월 17일까지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에 재능나눔 봉사단체로서 참여 경험이 있는 민간기업체·단체 중 인천 지역 단체 8개를 대상으로 재능나눔 자원봉사의 동기와 만족도, 재능나눔 참여의 지속을 위한 필요 자원 향후 발전 방향에 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함.

2)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 완료가구의 만족도 분석

- 2011년부터 실시된 완료가구 대상 '만족도 조사'의 연도별 결과는 2011년부터 2022년까지의 모든 연도별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 '만족'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1) 수리 완료가구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사업시행 연도가 경과한 것뿐만 아니라, 수리완료가구 가구주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등의 다양한 문제 때문에 본 연구과정에서 연구자가 직접 수행하지 않고,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가 사업 시행 각 연도에 실시한 '만족도 조사'를 연결하여 분석함.

2) 41개 기부금 후원 민간기업·단체 및 89개 전문인력 재능나눔 단체 중 설문조사 대상자는 최근까지 여러 차례 기부금·재능나눔에 참여하였으며,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있고,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등의 상황을 고려하였음. 이에 따라, 기부금 후원 민간기업·단체 및 전문인력 재능나눔 단체 대상 서면 설문조사는 일반적인 설문조사라기보다는 답변이 가능한 대상자에게 서면조사 방식으로 당사자의 의견을 문익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응답내용이 대표성이나, 통계적 유의미성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고자 함.

- '매우 만족'과 '만족'을 합친 결과는 2011년 86%, 2013년 95%, 2014년 98%, 2015년 94%, 2016년 97%, 2017년 98%, 2018년 70%, 2019년 93%, 2020년 92%, 2021년 93%, 2022년 93%임.
- 즉, 2011년과 2018년을 제외한 모든 연도에서 '매우 만족'과 '만족'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에 대한 완료가구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됨.
- '매우 만족'과 '만족'을 합친 결과는 2011년 86%, 2013년 95%, 2014년 98%, 2015년 94%, 2016년 97%, 2017년 98%, 2018년 70%, 2019년 93%, 2020년 92%, 2021년 93%, 2022년 93%임.
- 즉, 2011년과 2018년을 제외한 모든 연도에서 '매우 만족'과 '만족'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에 대한 완료가구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됨.

[표 5] 연도별 만족도 조사 결과

(단위: %)

연도	만족도 조사 결과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2011	39	47	10	4	0
2013	29	66	5	0	0
2014	0	98	1	1	0
2015	28	66	5	0	0
2016	37	60	3	0	0
2017	28	70	0	2	0
2018	13	57	25	4	1
2019	5	88	4	2	1
2020	16	76	6	1	1
2021	15	78	4	3	0
2022	15	78	4	3	0

자료(출처):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 내부자료를 연구자가 재가공

3)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 기부금 후원기업 대상 설문조사

-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자 재능나눔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에 기부금을 후원한 기업으로서 참여 경험이 있는 민간기업체 중, 인천 지역 기업 4개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함.

- 문항은 크게 ①후원 참여 현황, ②후원 동기, ③후원에 대한 만족도, ④후원과 기업의 ESG 활동, ⑤후원 계속 여부, ⑥‘자원봉사자 재능나눔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의 향후 발전 방향에 관한 문항 총 17개로 구성됨.
- 조사에 참여한 응답 기업은 4개소는 모두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며, 각 기업의 기부금 후원 현황은 A 기업 9회, B 기업 4회, C 기업 3회, D 기업 2회임.
-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을 알게 된 계기는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의 참여 권유’가 2개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참여 권유’ 및 ‘사업 홍보물(팸플릿 등)을 통해’가 각각 1개 기업임.
- 기부금 후원사업으로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을 선택하게 된 이유에 대한 1순위와 2순위 응답을 종합하면, ‘지역사회 거주 저소득·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효과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4개 기업)가 가장 중요한 이유인 것으로 나타남.
-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에서 후원을 시작하게 된 이유에 대한 1순위와 2순위 응답을 종합하면, ‘지역사회 거주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지원’(4개 기업)이 후원 시작의 가장 주된 이유로 나타남.
-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에 대한 후원 만족도는 9점 만점에 7.75점으로 높은 수준임.
 - 후원에 만족하는 이유에 대한 1순위와 2순위 응답을 종합하면, ‘지역사회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서(기업의 사회적 공헌·ESG 등)’와 ‘지역사회 거주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져서’가 주된 이유임을 알 수 있음.
-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에서의 후원이 기업의 ESG 활동에 기여하는 정도를 조사한 결과, 기여도가 9점 만점에 7.50점으로 대체로 기여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남.
 - ESG 활동 기여도가 높은 이유에 대한 1순위와 2순위 응답을 종합하면, ‘지역사회 거주 저소득·취약계층 지원에 기여’(3개 기업)가 가장 주된 요인이며, 그다음으로 ‘지역사회 관계 형성에 기여’(2개 기업), ‘기후변화 대응·탄소배출억제에 기여’(1개 기업) 순임.
- 후원을 계속하는 이유에 대한 1순위와 2순위 응답을 종합하면, ‘지역사회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서(기업의 사회적 공헌·ESG 등)’(3개 기업), ‘지역사회 거주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져서’(3개 기업)가 주된 이유임을 알 수 있음.
-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1순위와 2순위 응답을 종합하면, ‘기업의 재능나눔이 지역사회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사회적 인식의 확산을 위한 (사)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의 역할 강화(기업의 사회적 공헌·ESG 등)’와 ‘지역사회발전 지원 차원에서 재능나눔 기업과 인천광역시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사)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의 적극적 역할 강화’가 각각 2개 기업으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표 6] '자원봉사자 재능나눔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의 향후 발전 방향 - 1+2순위

(n=4, 단위: 개, %, 다중응답)

구분	사례	비율
기업의 재능나눔이 지역사회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사회적 인식의 확산을 위한 (사)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의 역할 강화(기업의 사회적 공헌·ESG 등)	2	50.0
지역사회발전 지원 차원에서 재능나눔 기업과 인천광역시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사)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의 적극적 역할 강화	2	50.0
(사)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 주관으로 재능나눔 기업과 사업 대상 지역사회 거주 저소득·취약계층과의 만남 활성화 및 제도화	1	25.0
공공기관 사업발주에서 기업의 재능나눔 실적 인정을 위한 (사)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의 역할 강화	1	25.0
(사)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의 재능나눔 기업 임직원의 지역사회사랑 실천기회 제공 제도화	1	25.0

4)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 재능나눔 단체 대상 설문조사

-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의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에 재능나눔 봉사단체로서 참여 경험이 있는 민간기업체·단체 중, 인천 지역에 소재한 8개 단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함.
 - 문항은 크게 ①재능나눔활동 참여 현황, ②후원 동기, ③후원에 대한 만족도, ④후원과 기업의 ESG 활동, ⑤후원 계속 여부, ⑥'자원봉사자 재능나눔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의 향후 발전 방향, ⑦애로사항(어려움), ⑧개선 필요 사항, ⑨사업 필요 자원, ⑩지역사회 저소득·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기여를 위한 필요 지원에 관한 문항 총 21개로 구성됨.
- 설문조사에 참여한 재능나눔 봉사단체는 8개 단체이며, 가장 참여 횟수가 많은 단체가 16회, 가장 적게 참여한 단체는 8회 참여하였음.
-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을 알게 된 요인으로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의 참여 권유'와 '주변 기업/지인의 소개'가 각각 4개 단체임.
-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을 선택한 1순위와 2순위 이유를 종합하면, '지역사회 거주 저소득·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효과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가 6개 단체이며, 그다음으로 '인천광역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하는 공식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4개 단체), '기업의 사업과 업무적으로 관련이 있어서'(3개 단체), '기업의 사회적 공헌/ESG 차원에서 지역사회와 관계 형성이 가능하여'(1개 단체) 순임.

-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에서 재능나눔활동을 시작하게 된 1순위와 2순위 이유를 종합하면, ‘지역사회 거주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지원’(6개 단체)이 가장 주된 이유로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지역사회발전에 적극적 참여할 수 있어서(기업의 사회적 공헌·ESG 등)’(4개 단체), ‘기업의 기부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동참’(3개 단체) 등의 순임.
-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에서의 재능나눔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8개 단체 평균 9점 만점에 7.75점으로 대체로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재능나눔활동에 만족하는 이유에 대한 1순위와 2순위 응답을 종합하면, ‘지역사회 거주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져서’와 ‘재능나눔으로 기업의 기부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동참할 수 있어서’가 각각 4개 단체로 가장 주된 이유로 밝혀짐. 그다음으로는 ‘지역사회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서(기업의 사회적 공헌·ESG 등)’가 3개 단체, ‘재능나눔으로 인한 기업의 이미지 개선 및 홍보에 효과적이어서’가 2개 단체 순임.
-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 재능나눔 활동이 단체의 ESG 활동에 기여하는 정도는 8개 단체 평균 9점 만점에 7.38점으로 대체로 높은 편으로 조사됨
 - 재능나눔이 기업 및 단체 ESG 활동에 기여하는 1순위와 2순위 응답을 종합하면, ‘지역사회 거주 저소득·취약계층 지원에 기여’(7개 단체)가 가장 주된 이유였으며, 그다음으로 ‘지역사회 관계 형성에 기여’가 4개 단체, ‘기후변화 대응·탄소배출억제에 기여’가 2개 단체, ‘인권·양성평 등·다양성 보장에 기여’가 1개 단체 순임.
- ‘사랑의 집 가꾸기’ 재능나눔활동 지속 여부에 대해서는 8개 단체 모두 ‘계속할 예정’(100.0%) 이라고 답함.
- 재능나눔활동을 계속하는 이유에 대한 1순위와 2순위 응답을 종합하면, ‘지역사회 거주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져서’가 6개 단체로 가장 중요한 이유로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지역사회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서(기업의 사회적 공헌·ESG 등)’와 ‘재능나눔으로 인한 기업의 이미지 개선 및 홍보에 효과적이어서’, ‘재능나눔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어서’가 각각 3개 단체, ‘임직원의 지역사회사랑 실천이 가능해져서’가 1개 단체로 나타남.
-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향후 발전 방향 1순위와 2순위 응답을 종합하면, ‘기업의 재능나눔이 지역사회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사회적 인식의 확산을 위한 (사)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의 역할 강화(기업의 사회적 공헌·ESG 등)’가 75.0%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조사됨.

[표 7] '자원봉사자 재능나눔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의 향후 발전 방향 - 1+2순위

(n=7, 단위: 개, %, 다중응답)

구분	사례	비율
기업의 재능나눔이 지역사회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사회적 인식의 확산을 위한 (사)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의 역할 강화(기업의 사회적 공헌·ESG 등)	6	75.0
재능나눔활동이 기업의 이미지 개선에 효과적이라는 (사)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의 기업 대상 교육·홍보 활성화 및 제도화	2	25.0
(사)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 주관으로 재능나눔 기업과 사업 대상 지역사회 거주 저소득·취약계층과의 만남 활성화 및 제도화	2	25.0
공공기관 사업발주에서 기업의 재능나눔 실적 인정을 위한 (사)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의 역할 강화	2	25.0
지역사회발전 지원 차원에서 재능나눔 기업과 인천광역시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사)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의 적극적 역할 강화	2	25.0
(사)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의 재능나눔 기업 임직원의 지역사회사랑 실천기회 제공 제도화	1	12.5

-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에 참여한 재능나눔 봉사단체는 사업수행과정에서 경험한 주된 애로사항(어려움)으로 ①사업대상자 및 가족·임대인 등의 낮은 사업 이해도로 인한 갈등 문제, ②불필요한 작업으로 인한 비효율 문제, ③수혜자 선정의 적합성·적절성 문제, ④사업수행을 위한 차량의 주차 문제, ⑤높은 자재비로 인한 비용의 어려움, ⑥전문인력 자원봉사자 모집 어려움, ⑦사업대상자와 일정 조정 어려움, ⑧비용적 부담으로 인해 충분한 지원이 어려움 등이 있다고 응답함.
- 재능나눔 봉사단체는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에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사업수행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①식대, 주차요금 등 재능나눔에 참여하는 전문인력의 활동 경비에 대한 실비보상 차원에서의 지원, ②무상봉사로 일하는 전문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사회적 인정·현정 관련 지원 확대, ③최근 물가 상승에 맞춘 재료비 현실화, ④전문인력 자원봉사자 모집·충원을 위한 홍보 지원, ⑤전문인력 자원봉사자 모집·충원을 위한 홍보 지원, ⑥사업대상자 확대를 위한 행정적 절차 개선 등을 제시함.
- 재능나눔 봉사단체는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수행을 위하여 가장 필요한 자원은 ①전문인력 자원봉사자의 식비, 주차요금 등 필요 활동 경비에 대한 실비보상 차원에서의 지원 필요, ②사업대상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위한 맞춤형 지원, ③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 강화, ④재료비 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유동적 예산 운용 필요, ⑤수리 비용 충당을 위한 예산확보와 기업 후원의 확대, ⑥사업대상자 확대, ⑦인천광역시 차원의 적극적 홍보 및 지원, ⑧전문인력 자원봉사자의 적극적 참여 등을 제시함.

6. 결론: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

1)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의 환경변화와 적응전략

-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의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과 관련한 주요 환경이 지난 몇 년 동안 변화하고 있음.
- 첫째, 사업의 주요 재원이라고 할 수 있는 민간기업의 기부금 후원이 2015년부터 급격하게 감소한 후 2020년부터는 전혀 없는 상황임.

[표 8]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의 환경변화

환경 변화	내용
[1] 재원의 변화	• 민간기업단체의 기부금 후원 → 인천광역시 보조금
[2] 취약계층 주거개선 사업의 새로운 행위자 등장	•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행정안전 분야)/인천지역자활센터(사회복지 분야) → 인천광역시광역시광역주거복지센터(주택 분야)
[3] 전문인력 재능나눔 자원봉사자 확보의 어려움	• 사업수행과정에서 실비 미지원 문제 및 코로나19 팬데믹 지속 → 전문인력 자원봉사자 확보의 어려움
[4] 기초지자체 자원봉사센터와의 협력 필요성 등장	•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클린 방역’ 사업 수행 → 기초지자체 자원봉사센터와의 협력 필요
[5] 사업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 필요성 증가	• 일회성 ‘전체수리/부분수리’ 중심에서 주기적 ‘소규모 생활수선’ 확대 → 대상자에 대한 지속적체계적 모니터링 및 사례관리 필요

- 둘째, 인천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인천광역시가 인천도시공사(이H)에 운영을 위탁한 ‘인천광역시광역시광역주거복지센터’가 2021년 2월 개소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차원에서 저소득·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주거복지 향상이라는 사업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의 역할이 주변화되고 있음.
- 셋째, 자원봉사 인력에 대한 실비 미지원 문제와 함께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겪으면서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에 참여하는 전문인력 확보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음.
- 넷째, 2020~2022년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 차원에서 거의 모든 기초지자체에서 ‘클린방역’을 실시함에 따라 기초지자체 자원봉사센터와 협력하게 됨에 따라 사업대상자에 대한 인적관리가 필요한 세부 사업 ‘소규모 생활수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세부 사업의 효과적이고 체계적 수행을 위해서는 기초지자체 자원봉사센터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음.

- 다섯째, 인천도시공사(iH)가 운영하는 인천광역시광역시주거복지센터가 보다 풍부한 자원을 동원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향상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작함. 이러한 상황에서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의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은 핵심 세부 사업을 일회성인 ‘전체수리/부분수리’사업 중심에서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소규모 생활수선’사업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사업대상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 및 사례관리가 필요함.

2)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

- 2009년 인천광역시의 민간위탁사업으로 시작한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의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은 민간기업과 단체의 기부금 후원 및 전문인력의 재능나눔 자원봉사로 구성된 저소득·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주거복지 실현 사업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지난 몇 년 동안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을 둘러싼 환경이 변화하면서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는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다양한 분석과 논의를 통해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의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함.
 - 첫째,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취약계층/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의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의 역할 정립이 필요함.
 - 인천광역시 주택 관련 부서 및 인천도시공사(iH)와 협력하는 인천광역시광역시주거복지센터가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 중 전부수리·부분수리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인 ‘희망의 집수리 사업’ 및 ‘iH형 고령친화 맞춤형 집수리 사업’을 통해 많은 자원을 안정적으로 투입하고,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시작한 상황임을 고려한다면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의 핵심 사업도 동일한 대상자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소규모 생활개선’ 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표 9] 지속가능한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의 발전 방향

발전 방향	내용
[발전 방향 1] 저소득·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역할 정립	• 동일한 대상자에 대한 주기적 '소규모 생활개선' 사업 중심으로 전환
[발전 방향 2] 기초지자체 자원봉사센터와 협력체계 구축	•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의 전달체계를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기초지자체 자원봉사센터-재능나눔 단체-대상자'로 확립
[발전 방향 3] 사업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 실시	• 주기적 '소규모 생활개선'을 위한 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체계 구축
[발전 방향 4]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 후원 민간기업·단체에 대한 사회적 인정 체계화	• 기부금 후원 민간기업·단체에 대한 인천광역시 차원의 사회적 인정체계 도입
[발전 방향 5] 재능나눔에 참여하는 전문인력에 대한 사회적 인정 체계화 및 지원 확대	• 재능나눔에 참여하는 전문인력에 대한 인천광역시 차원의 사회적 인정체계 도입 • 재능나눔에 참여하는 전문인력에 대한 실비보상 차원의 지원

- 둘째,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과 관련해서는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기초지자체 자원봉사센터-재능나눔 단체'로의 전달체계 확립임.
- 지난 3년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세부 사업 '클린방역'의 실시 경험 및 향후 동일한 대상자에 대하여 주기적 실시할 수 있는 '소규모 생활개선' 사업의 확대는 사업대상자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며, 이는 기초지자체 자원봉사센터와의 협력을 필요로 함.
- 셋째, 사업대상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포함한 사례관리의 확립임.
-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의 중심을 동일한 대상자에 대하여 주기적 실시할 수 있는 '소규모 생활개선' 사업으로 전환할 경우 동일인에 대한 관리와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며, 이는 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는 또한 대상자가 거주하는 기초지자체 자원봉사센터와의 협력이 체계화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함.
- 넷째,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 후원 민간기업·단체에 대한 인천광역시 차원에서 사회적 인정의 체계화임.
- 민간기업·단체가 후원하는 기부금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최근 몇 년 동안에는 전혀 없는 상황임을 고려한다면,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에 기부금을 후원하는 민간기업·단체에 대한 동기부여, 사회적 인정 등이 확립될 필요가 있음.

- 다섯째, 재능나눔에 참여하는 전문인력에 대한 인천광역시 차원에서 사회적 인정의 체계화 및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의 실비보상 차원의 지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임.
- 재능나눔으로 참여하는 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재능나눔 자원봉사는 '지역사회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라는 사회적 가치와 연결된다고 한 응답을 고려한다면, 재능나눔에 참여하는 전문인력에 대한 인천광역시 차원의 사회적 인정을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설문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요구사항임.

‘건강도시 인천’ 조성 방안 연구

■ 이용갑 도시사회연구부 선임연구위원

1.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최근 발표된 중앙정부의 중장기 건강정책이나, 국가기관이 매년 실시하는 건강 관련 조사의 결과분석, 또는 공공기관의 의료서비스 이용자료 분석결과 등에서 인천시민의 건강수준은 괜찮은 수준이라고 평가하기엔 어려운 상황임.
- 2021년 초에 발표된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 2030)」에 의하면 2018년 전국 250개 시·군·구 중 연수구 주민의 건강수명은 72.40세(19위)이며, 강화군·서구·부평구는 70~100위 이내이며, 용진군·계양구·남동구·중구·미추홀구는 100~200위 이내이며, 동구는 68.01세로 216위임.
-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가 발간한 「2021 경기인천 건강지표」에 의하면 만성질환·심뇌혈관질환·노인성질환·중증정신질환 등 때문에 발생하는 의료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기초 지자체별 인천시민의 건강상태는 좋다고 할 수 없는 상황임.
- 질병관리청이 매년 실시하는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도 인천시민의 금연, 절주, 영양, 신체활동(걷기운동), 구강건강 등 건강행태도 괜찮다고 할 수는 없는 수준임.
- 2021년 1월 발표된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계기로 지자체의 건강도시 사업 수행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으며, 그 결과 2021년 12월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으로 ‘제6조의5(건강도시의 조성 등)’가 신설됨.
-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5에 따라, 2023년 12월부터 전국의 모든 지자체는 건강도시 조성과 관련한 행정적 업무를 해야 함.

- 2022년 7월 1일에 출범한 인천광역시 민선8기 집행부는 도시의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건강도시 인천’의 조성으로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 실현 방안을 찾아야 할 필요성이 인식하고 있음.
- 이에 따라, 2023년 12월부터 인천광역시가 건강도시와 관련한 행정업무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건강도시사업의 비전·목표·전략에 대한 구상뿐만 아니라, 조례·담당부서·전담인력·관련 위원회 등 거버넌스 구축, 사업 개발, 민관협력과 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간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의사결정이 필요한 상황임.

2) 연구목적

- 본 연구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2023년 12월부터 인천광역시가 건강도시사업을 실시해야 하는 보건의료정책적 환경변화에서 2022년 7월 시작된 인천광역시 민선8기 집행부가 시정목표로 제시한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을 도시건강 분야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건강도시사업의 비전·목표·전략에 대한 구상뿐만 아니라, 조례·담당부서·전담인력·관련 위원회 등 거버넌스 구축, 사업 개발, 민관협력과 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의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괜찮지 않은 인천시민의 건강 상태를 다양한 지표로 통해 확인하고, 이를 향상·관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3) 연구의 내용

- 본 연구는 ‘건강도시 인천 조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됨.
- 첫째, 건강도시사업을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건강증진 프로젝트로서 개념적으로 이해하고자 함.
- 둘째, 건강도시사업 실시의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기초지자체 주민의 건강상태를 건강수명, 의료이용, 건강행태를 중심으로 비교하고자 함.
- 셋째, 건강도시사업 실시의 필요성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및 인천광역시 민선 8기 집행부의 시정목표인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을 보건의료 분야에서 실현하는 방안으로 이해하고자 함.
- 넷째, 조례, 담당 부서·전담 인력, 민관협력위원회, 광역-기초지자체 협의회 등 건강도시사업 수행을 위한 거버넌스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다섯째,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KHCP)에 가입된 타 지자체 사례를 범주화하여 분석하고,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는 등 인천광역시 기초지자체와 함께 실시할 수 있는 건강도시사업을 제안하고자 함.
- 여섯째, 인천광역시 민선8기의 건강도시사업 추진을 국내외적으로 적극 알리고 협력을 모색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KHCP)와 서태평양건강도시연맹(AFHC) 가입 등 국내 외활동의 중기 로드맵을 제안하고자 함.

2. 건강도시와 건강도시사업

- 거주공간 그 자체로서 도시(都市; City)는 인구유입에 따라 팽창과 성장을 계속하면서 주거, 교통, 일자리, 교육, 건강, 사회서비스, 환경 등 거주민의 일상적 삶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을 직면하게 되며, 시민의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주목하는 도시거주민의 건강증진·관리와 관련한 ‘도시건강(urban health)’의 관점에서도 이해할 수 있음.
- 이러한 의미에서 ‘도시건강(urban health)’은 일반적으로는 ‘도시거주민의 건강상태를 다양한 변수로 분석하고, 건강상태를 관리하고 증진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임(이용갑 외, 2022).
- ‘도시건강’을 실현하는 다양한 실행방안 중 하나는 「모든 사람에게 건강을(Health for All)」이라는 표어 아래 2000년까지 일차보건의료를 이용하여 인류의 건강증진을 목표로 제시한 1977년 카자흐스탄 ‘알마 아타’에서 개최된 WHO의 ‘알마 아타 선언(Alma Ata Declaration)’에서 시작한 ‘건강도시사업’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의미에서 ‘건강도시사업(Healthy City Project)’은 도시거주민의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며, 증진시키고자 하는 지자체의 건강증진사업으로 해석할 수 있음.

[표 1] 도시건강 및 건강도시사업의 원론적·개념적 구분

개념	기본 개념	비고
도시건강	• 도시거주민의 건강상태를 다양한 변수로 분석하고, 건강상태를 관리하고 증진하고자 지속적인 노력	• 건강 관련 도시의 일반적·포괄적 정책개념
건강도시사업	• 도시건강을 실현하고자 도시거주민의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며, 증진시키고자 하는 지자체의 건강증진사업	• 도시건강 실현을 위한 하나의 구체적 방안 • WHO의 도시차원에서의 건강증진 프로젝트

- ‘건강도시사업(Healthy City Project)’의 구체적 전략은 1986년 ‘오타와 헌장’을 거쳐 구체화되었음.
- 세계보건기구는 건강도시(Healthy City)를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적 여건을 창의적이고,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아가는 가운데, 개인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지역사회의 참여주체들이 상호협력하여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WHO, 2004)라고 정의함.

[표 2] 세계보건기구(WHO)의 건강도시 및 건강도시사업 구분

개념	개념 정의
건강도시*	•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적 여건을 창의적이고,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아가는 가운데, 개인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지역사회의 참여주체들이 상호협력하여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
건강도시사업**	• 도시의 건강과 환경을 개선하여 도시 거주민의 건강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건강증진 프로젝트

*WHO(2004); **WHO(2010)

- 이에 따라, 세계보건기구(WHO)의 건강도시 개념에서 도출하는 ‘건강도시 사업(Healthy City Project)’의 개념은 “도시의 건강과 환경을 개선하여 도시 거주민의 건강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건강증진 프로젝트”로 정의할 수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는 건강도시와 건강도시사업의 개념적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음(WHO, 2010).
- 첫째, 건강都市는 결과물이 아닌 과정임.
- 둘째, 건강都市는 어떤 특별한 건강상태에 도달했다는 것이 아님.
- 셋째, 건강都市는 건강에 대해 인식하고 있고, 그것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것임.
- 넷째, 어느 도시든지 현재의 건강수준 상태와 관계없이 “건강한” 도시가 될 수 있음.
- 다섯째, 건강도시사업은 지금까지 하고 있던 건강 관련 사업과는 다른 별도의 사업이 아니며, 직·간접적으로 건강과 관련된 기존 사업, 또는 도시개발계획에 보다 강한 강조점을 두으로써 다양한 사업이나 계획을 건강을 목표로 하는 통합계획으로 발전시키는 것임.
- 여섯째, 건강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에 대한 전념이고, 그것을 달성하려는 과정과 조직임.

- 일곱째, 광의의 건강도시 개념은 도시 전체가 건강을 최고의 목표로 설정한다고 합의한 도시를 가리키며, 구체적으로는 이를 위한 조직과 전략을 개발하고 체계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도시를 의미함.
- 여덟째, 어느 도시나 건강도시가 될 수 있지만,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건강한 공공정책을 수립하고 건강을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활동을 위해 정치적 의지와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공적 조직이 확립되고, 각 부문 간 원활한 협력관계가 구축되는 도시가 진정한 건강도시라고 할 수 있음.

3. 인천시민의 건강상태

1) 인천시민의 건강상태

- 인천광역시가 건강도시 조성사업을 실시해야 하는 필요성은 법적·제도적 차원뿐만 아니라, 다음 세 가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천광역시 주민의 현재 건강상태가 전국적으로 그다지 좋은 상태라고 단언할 수는 없는 상태이기 때문임.
- 전 국민의 건강수명을 2018년 70.4세에서 2030년까지 2.9세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2021년 1월에 발표된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30, 2021~2030)」에 의하면 2018년 현재 전국 시·군·구 주민의 건강수명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가 75.30세로 1위인 반면에, 부산광역시 영도구는 62.17세로 최하위인 250위임.
- 인천광역시 기초지자체 주민의 건강수명은 연수구가 72.4세(19위)로 상당히 높은 수준인 반면에, 강화군 주민은 70.58세(71위), 서구 주민은 70.40세(86위), 부평구 주민은 70.23세(97위), 옹진군 주민은 69.91세(116위), 계양구 주민은 69.90세(120위), 남동구 주민은 69.49세(140위), 중구 주민은 69.26세(152위)이지만, 남구(미추홀구) 주민은 68.82세(180위), 동구 주민은 68.01세(216위)에 불과함.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1 경기인천 건강지표」를 이용한 인천광역시 기초지자체 주민의 만성질환, 심뇌혈관질환, 노인성질환, 중증정신질환 등 만성질환으로 인한 의료이용 수준을 비교분석하면, 뇌경색을 제외한 주요 만성질환 및 심뇌혈관질환·주요 노인성 질환·중증정신질환에서 인천시민의 의료이용률은 전국 평균과 유사하거나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음.

- 동구 주민의 경우 고혈압, 2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심근경색, 뇌경색에서 의료이용률이 인천광역시 10개 기초지자체 중 1위로 가장 높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전국 평균보다도 높은 수준임.
- 미추홀구 주민의 경우 협심증, 심부전, 뇌출혈에서 의료이용률이 인천광역시 10개 기초지자체 중 1위로 가장 높은 수준이며, 전국 평균보다도 높은 수준임.
- 용진군 주민의 경우 협심증에서 의료이용률이 인천광역시 10개 기초지자체 중 1위로 가장 높은 수준이고, 전국 평균보다도 높은 수준임.
- 연수구 주민의 경우 만성질환인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의료이용률은 전국 및 인천광역시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
- 부평구와 계양구 주민의 경우는 증증정신질환 의료이용률에서 전국 평균보다도 높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인천광역시 10개 기초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임.
- 질병관리청이 매년 전국의 모든 기초지자체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지역사회건강조사」 중 가장 최신 자료인 2021년 조사결과를 분석하면 인천광역시 기초지자체 구 주민의 흡연, 음주, 건강생활실천, 비만, 스트레스, 우울증 등 ‘건강행태’를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음.
 - 흡연 중 ‘현재 흡연율’의 경우 미추홀구 주민은 27.6%로 전국 시·군·구 주민 중앙값이 19.1%이나, 인천시민 전체 평균값 19.6%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임.
 - 음주 중 ‘연간 음주자 고위험 음주율’은 용진군 주민은 27.5%로 전국 시·군·구 주민 중앙값 15.4% 및 인천시민 전체 평균값 16.5%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임.
 - 신체활동과 관련한 ‘증증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의 경우 동구 주민은 11.9%, ‘걷기 실천율’의 경우 연수구 주민은 35.7%, ‘건강생활 실천율’의 경우는 용진군 주민은 24.3%임.
 - 비만과 관련하여 ‘(자가보고)비만율’의 경우 용진군 주민은 38.3%로 전국 시·군·구 중앙값 (32.2%)이나, 인천광역시 평균값(34.5%)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임.
 -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계양구 주민의 ‘스트레스 인지율’ 32.6%, ‘우울증상 유병률’ 7.2%는 전국 시·군·구 주민의 중앙값 각각 26.2%, 3.1%나, 인천시민 전체 평균값 각각 29.5%, 3.8%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임.
 - 본인의 건강상태에 대한 자체평가라고 할 수 있는 ‘주관적 건강인지율’의 경우 동구 주민의 40.9%는 전국 시·군·구 주민 중앙값 47.6%나, 인천시민 전체 평균값 45.6%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임.

2) 인천시민의 건강상태와 건강도시 조성사업의 방향

-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1 경기인천 건강지표」, 질병관리청의 2021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로 인천광역시 10개 기초지자체 주민의 건강상태를 비교분석한 결과 향후 인천광역시가 실시하여야 하는 건강도시 조성사업의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음.
 - 첫째,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2030)」 분석 결과를 고려한다면, 동구와 미추홀구 주민의 기대수명을 연장할 수 있고, 인천광역시 10개 기초지자체 주민 간 건강수명의 지역적 격차를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강력하고도 획기적인 건강도시 조성사업을 지속적 실시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둘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1 경기인천 건강지표」 분석 결과를 고려한다면, 만성질환 등으로 인한 의료이용률을 기준으로 인천광역시 10개 기초지자체 주민의 건강관리와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동구·미추홀구·옹진군은 만성질환과 심뇌혈관질환 감소, 연수구·강화군·서구는 노인성 질환 감소, 계양구·부평구는 중증정신질환 감소 등 기초지자체 주민의 건강상태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건강도시 조성사업이 필요하고, 이를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조정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음.

표 3] 인천광역시 기초지자체 건강도시 조성사업의 방향 제안

범주	건강도시 조성사업 방향
기대수명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구와 미추홀구 : 기대수명 연장 • 인천광역시 전체 : 기초지자체 간 기대수명 격차 감소
만성질환 등 의료이용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구·미추홀구·옹진군 : 만성질환관리, 심뇌혈관질환 예방과 관리 • 연수구·강화군·서구 : 노인성 질환 감소 및 예방 • 계양구·부평구 : 중증정신질환 감소
건강행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추홀구 : 금연 • 옹진군 : 절주·금주, 비만 예방·감소, 걷기 등 건강생활실천 • 동구 : 만성질환관리, 중증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 • 계양구·부평구 : 스트레스와 우울 감소 등 정신질환 예방과 관리

- 셋째, 질병관리청 2021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분석 결과를 고려한다면, 건강행태를 기준으로 인천광역시 10개 기초지자체 주민의 건강관리와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미추홀구는 흡연, 옹진군은 음주와 비만 및 건강생활 실천, 동구는 중증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과 주관적 건강인지,

계양구와 부평구는 스트레스와 우울 등 정신건강관리 차원에서 다양한 건강도시 조성사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4. 건강도시사업을 둘러싼 법적·제도적 환경변화

1) 제5차 국민건강증진계획(HP 2030)

- 지자체의 건강도시사업 법제화가 명시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의 출발점인 2021년 1월의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30, 2021~2030)」은 2006년 9월에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수립)에 따라 중앙정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서 국민건강증진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및 주요 추진과제와 추진 방법을 제시하고 있음.
- 2021년 1월에 발표된 2021년부터 2030년까지 건강증진을 위한 정부의 법정 계획인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30, 2021~2030)」은 우리나라 국민 전체의 건강수명을 2018년 70.4세에서 2030년까지 73.3세로 연장하는 ‘건강수명 연장’ 및 2018년 소득수준 상위 20%의 건강수명과 소득수준 하위 20%의 건강수명 격차를 2018년 8.1세에서 2030년에는 7.6세 이하로 낮추는 ‘건강형평성 제고’라는 두 개의 최종 목표를 달성하고자 6개의 정책목표와 28개 중점과제, 400개의 성과지표를 제시하고 있음.
- 국민건강증진과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정부의 건강증진정책에 건강도시의 개념과 목적을 인용하고, 주요 정책목표에 건강친화적 환경조성을 포함하고 있는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30)」이 설정한 여섯 가지 정책목표는 ①건강생활 실천, ②정신건강 관리, ③비감염성 질환 예방관리, ④감염 및 기후변화성 질환 예방관리, ⑤인구집단별 건강관리, ⑥건강친화적 환경 구축임.
- 이 중 여섯 번째 정책목표인 ‘건강친화적 환경 구축’은 ‘모든 정책에 건강을 고려’하기 위하여 ①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거버넌스와 법·제도 개선(중점과제 24 ‘건강친화적 법·제도 개선’), ②지역/계층 간 국민들의 건강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건강정보 이해력 제고(중점과제 25 ‘건강정보 이해력 제고’), ③혁신적 정보기술 활용(중점과제 26 ‘혁신적 정보기술의 적용’), ④건강증진을 위한 기금의 조성·운용 및 예산 사용 제시(중점과제 27 ‘재원 마련 및 운용’), ⑤지역사회에서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자원의 동원과 거버넌스의 구축(중점과제 28 ‘지역사회 자원 확충 및 거버넌스 구축’) 등 다섯 가지 중점과제를 실시하고자 함.

2) 건강도시사업을 위한 별도의 법률 제정 노력

- 2021년 1월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30)」의 발표 이후, 2021년 5월 개최된 「건강도시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현재 지자체들이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건강도시사업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독자적인 관련 법률의 제정과 함께 건강영향평가의 법제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음.
- 2021년 5월 개최된 「건강도시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강은정은 「국민건강증진법」은 국민의 건강행태 개선에 집중하기 때문에 ‘건강친화기업인증’이라는 건강친화환경을 조성을 위한 지자체 및 중앙정부의 부문 간 협력이나, 형평성, 시민참여를 위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건강친화적 환경 조성을 지원하는 별도의 독립적인 법률, 가칭 ‘건강도시법’의 제정을 주장함(강은정, 2021).
- 같은 정책토론회에서 홍윤철은 강은정(2021)과 마찬가지로 「국민건강증진법」과 별도의 독립적인 건강도시사업 관련 법률, 가칭 ‘건강도시법’의 제정 필요성을 주장하였으며, 그 기본적인 내용으로 가칭 ‘건강도시법’은 (행정안전부 산하) 건강도시발전위원회 설치, 건강도시발전위원회 기능, 건강도시협의회 설치 및 기능, 건강도시에 관한 기본계획, 건강도시에 관한 시행계획, 건강도시평가, 건강도시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제안함(홍윤철, 2021).
- 2021년 1월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30)」의 발표를 시작으로, 2021년 8월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해식 의원은 「건강도시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2021. 5.)」의 논의를 바탕으로 WHO의 건강도시 개념을 법제화하고, 건강도시조성을 지원하는 가칭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법률안」을 의원입법으로 대표 발의함.
- 가칭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법률안」은 지자체의 건강도시사업을 중앙정부 차원(행정안전부)에서 체계적 지원하고, 지역 간 주민의 건강수준 차이를 줄이는 법적 지원이 필요하며,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수립 시 ‘건강영향평가’ 실시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제안됨(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112182]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법률안(이해식 의원 등 43인)).

3) 건강도시사업의 법제화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 2021년 1월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발표, 2021년 5월 「건강도시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가칭 ‘건강도시법’ 제정 요구, 2021년 8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법률안」의 의원입법안으로 발의됨에 따라, 건강도시사업에 대한 법적 지원,

건강영향평가실시의 법제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관련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이 2021년 하반기에 국회에서 진행됨.

- 그 결과, 가칭 '건강도시법' 등과 같은 독립적인 법률의 제정보다는 기존 법률인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면서, 건강도시사업의 법제화와 이에 대한 지원을 위한 지난 몇 년 동안의 노력은 2021년 12월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으로 일단락됨.
 -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에 제6조의5(건강도시의 조성 등)를 추가한 법률안이 2021년 12월 21일에 통과되었고, 이 조항은 2년 후인 2023년 12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신설된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5는 국가와 지자체의 건강도시 조성 노력, 보건복지부장관의 건강도시지표 작성·보급 및 지자체의 건강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 202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지자체의 건강도시사업 지원을 위한 건강도시사업을 행정안전부 관할 업무로 지정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사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실시의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독자적인 가칭 '건강도시법'의 제정은 이루어지지 못하였지만, 건강도시사업이 법제화되고, 중앙정부의 건강도시지표가 작성·보급됨에 따라 지자체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건강을 실현하도록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도시의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하며, 개선하는 건강도시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할 필요성이 제기됨.

4)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2023~2026)」 수립

- 2023년은 전국 모든 광역·기초지자체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역보건법」 제7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에 따라 4년 단위의 '지역보건의료계획', 즉,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2023~2026)」을 수립하여 공개해야 하는 연도임.
 - 지자체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5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방법 등)에 따라 해당 지자체의 보건의료실태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인식·행동양상 등을 조사하고 자료를 수집해야 함.
 -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조사와 분석은 일반적으로 「지역보건법」 제4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에 근거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고, 전국의 모든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 매년 조사하는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내용을 활용함.

-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작성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는 다양한 보건의료 관련 자료를 수집·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광의의 보건의료정책 전반에 관한 목표, 전략, 추진과제 등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이 과정에서 인천광역시는 흡연, 음주 등 건강 관련 생활습관이나 활동의 제한 및 삶의 질에 관한 사항 등과 같이 건강증진과 관련한 사항을 조사하고 정리하며, 건강도시사업과 연관된 취약계층의 건강관리 및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 격차 해소를 위한 추진 계획이나 사업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5) 인천광역시 민선8기 보건의료정책의 방향

-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를 거쳐, 같은 해 7월 1일 출범한 인천광역시 민선8기 집행부는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인류도시 인천”을 시정목표로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자 하며, 인천광역시 민선8기 집행부가 2022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향후 4년 동안 추진하고자 하는 보건의료정책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자료로 확인할 수 있음.
 - 첫째,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선거공약(2022년 6월 이전)
 - 둘째, 지방선거 직후 인천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의 선거공약 관련 인천광역시청 담당부서와 관련기관의 업무보고(2022년 6월)
 - 셋째, 민선8기 집행부 출범 직후 어느 정도 공개된 첫 번째 인천광역시청 확대간부회의(2022년 8월)
 - 넷째, 민선8기 인천광역시장 선거공약 실천계획 발표(2023년 1월)
- 인천광역시 건강보건국의 2023년 업무보고에서 ‘시민 건강수준 향상 및 건강형평성 제고’와 ‘지역사회 내 건강증진 욕구 충족 및 취약계층 서비스 강화’를 위한 ‘행복한 삶의 시작, 안전한 건강도시 구현’의 4가지 사업 중 그 첫 번째 사업으로 ‘개인별 신체활동 관리 역량강화 및 건강위험요인 감소를 위한 예방 및 관리 정책 수립’을 다음과 같은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임.
 - 지역기반 건강증진 플랫폼 등록관리
 - 만성질환 위험군(비질환자)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 보건소 금연구역 지정·관리

5. 지자체 건강도시 관련 조례 및 조직

1) 타 지자체 건강도시 관련 조례 및 조직 현황

- 「건강도시 (조성) 기본 조례」, 또는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명칭으로 건강도시사업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2023년 2월 초 기준, 6개 광역지자체 및 100개 기초지자체임 (국가법령정보센터, 2023.2.2. 검색)
 - 건강도시 관련 조례를 제정한 광역지자체는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충청남도 및 경상북도 등 6개 지자체임.
 - 건강도시 관련 조례를 제정한 기초지자체는 서울특별시의 24개 자치구, 부산광역시의 3개 자치구, 대구광역시의 1개 자치구, 광주광역시의 5개 자치구, 대전광역시의 4개 자치구, 경기도의 16개 시·군, 강원도의 3개 시·군, 충청북도의 3개 시·군, 전라북도의 6개 시·군, 전라남도의 8개 시·군, 경상북도의 6개 시·군, 경상남도의 9개 시·군 등 전국 100개 지자체임.
- 기초지자체의 건강도시사업 담당부서는 일반적으로는 ‘보건소 건강증진과’이지만, 일부의 경우 예외적으로 타 부서에 있거나, 전담부서가 있기도 함. 실제로 2020년 9월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KHCP) 96개 회원도시를 대상으로 기초지자체의 건강도시사업 담당 부서를 조사한 결과, 건강도시사업 담당자의 90%는 보건소 소속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타 부서 근무자는 전체의 10%, 건강도시담당 독립부서(팀, 과)는 14%에 불과하였음(강은정, 2021).
 - 기초지자체 중 보건소가 아닌 시·군·구 본청의 타 부서가 건강도시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는 기획예산 부서, 체육 부서, 도시개발 부서, 보건의료정책 부서, 바이오산업 부서, 지속개발가능 부서 등임(강은정, 2021)
 - 일반적으로 시·군·구 본청 및 보건소에 건강도시사업을 전담하는 독립부서(과, 팀)가 구성된 기초지자체가 다수임.

2) 광역지자체 건강도시 관련 조례 및 조직

- 건강도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건강도시 관련 조례를 제정한 6개 광역지자체는 다음과 같음.
 - 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제정(2013.7.10.)
 - 광주광역시 : 「광주광역시 건강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 제정(2012.4.1.)

- 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2019.6.28.)
- 울산광역시 : 「울산광역시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2015.6.30.)
- 충청남도 : 「충청남도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제정(2020.4.1.)
- 경상북도 : 「경상북도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제정(2010.4.29.)
- 건강도시 관련 조례를 제정한 6개 광역지자체 및 관련 조례가 없는 서울특별시는 본청에 전담부서를 구성하여 건강도시사업을 수행 중임.
 - 부산광역시는 팀장 1명 포함 총 6명으로 구성된 '시민건강국 건강정책과 건강도시팀'이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 중임.
 - 광주광역시는 팀장 1명과 사업담당자 1명을 포함하여 총 6명으로 구성된 '복지건강국 건강정책과 건강증진팀'이 건강도시사업을 수행 중임.
 - 대전광역시는 팀장 1명과 사업담당자 1명을 포함한 총 4명으로 구성된 '시민체육건강국 건강보전과 건강정책팀'이 건강도시사업을 수행 중임.
 - 울산광역시는 팀장 1명과 사업담당자 1명을 포함한 총 7명으로 구성된 '시민건강국 시민건강과 공공보건팀'이 건강도시사업을 수행 중임.
 - 충청남도의 건강도시사업 담당 부서는 복지보건국 건강증진식품과이지만, 2020년 조례를 제정한 후, 건강도시 관련 사업이나 위원회 조직 등의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지 않고 있어서 2023년 2월 초를 기준으로 별도의 조직이나 인력 배정이 없는 상황임.
 - 경상북도의 건강도시사업 담당 부서는 복지건강국 보건정책과 건강증진팀이지만, 명시적이고 공식적인 경상북도의 자체 건강도시사업이 아닌, '건강마을'이라는 명칭으로 중앙정부의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따라서 2023년 2월 초 기준, 건강도시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사업, 전담조직과 인력은 부재하다고 할 수 있음.
 - 서울특별시는 건강도시 관련 조례는 없지만, 팀장 1명과 사업담당자 1명을 포함한 총 7명으로 구성된 '시민건강국 스마트건강과 스마트건강정책팀'이 건강도시사업을 수행 중임.
- 6개 광역지자체가 제정한 건강도시 관련 조례는 다음과 같이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
 - 첫째, '총칙' 부분은 법의 목적, 건강도시 등에 대한 정의, 건강도시사업 수행과 관련한 지자체장의 의무, 건강도시사업 수행의 기본 원칙 등을 포함함.

- 둘째, '건강도시사업' 부분은 건강도시사업 계획수립, 건강도시사업 내용과 수행 과정, 건강도시사업의 예산과 재정 지원, 건강도시사업 수행의 위탁 등을 포함함.
- 셋째, '건강도시사업 관련 위원회' 부분은 건강도시사업 관련 위원회의 존재와 명칭,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운영, 위원회 위원의 임명·제척·기피·회피·해촉, 위원장의 직무,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 위원회 운영세칙, 위원회 운영 관련 지자체부서와 공공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등을 포함함.

3) 광역지자체 건강도시사업 현황

- 광역지자체 차원의 대표적인 건강도시사업은 관련 조례가 제정된 6개 광역지자체 중 2023년 2월 기준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건강도시사업을 활발하게 수행 중인 3개 광역지자체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2005년 6월 제정된 조례를 2011년 10월 폐지하였지만,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의 사례를 분석할 수 있음.
- 서울특별시 건강도시사업의 특성은 광역지자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건강도시사업을 추진하는 기초지자체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이용갑 외, 2022).
 - 이러한 의미에서 서울특별시의 대표적인 건강도시사업은 25개 기초지자체 지원사업으로 2005년부터 서울특별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기초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추진한 '건강한 생활터 만들기 사업', 2015년부터 서울특별시가 예산을 전액 지원하는 '건강생태계 기반조성' 사업임(이용갑 외, 2022).
 - 또한, 서울특별시의 경우 '서울시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을 설치하고 이를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이 있는 대학교에 2년 단위로 민간위탁하여 운영함. '서울시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은 통합건강증진사업과 관련한 교육·자문·연구 사업을 담당하고 있음.
- 부산광역시 건강도시사업은 건강도시사업을 추진하는 기초지자체뿐만 아니라, 공식적으로 건강도시사업이라는 명칭은 아니지만 건강증진·건강관리사업을 실질적으로 실시하는 기초지자체를 지원하는 특성을 가짐.
 - 이러한 의미에서 부산광역시의 대표적인 건강도시사업은 부산광역시 전체에서 건강도시사업의 기반구축과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2010년부터 매년 계속하는 '마을건강센터사업'임.
 - 또한, 부산광역시는 서울특별시가 통합건강증진사업과 관련한 교육·자문·연구를 '서울시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게 '부산광역시의료원'이 민간위탁 형태로 '부산광역시 건강도시사업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음.

- 대전광역시 건강도시사업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와는 달리 2019년부터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하나의 특정 사업을 직접 수행한다는 특성을 가지며, 대전광역시의 2023년 '자살예방 보호체계 구축 「생명존중도시 대전 만들기」' 사업은 다음과 같이 대전광역시 전 지역에서 자살예방사업을 실시하고, 기초지자체의 자살예방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있음(대전광역시 홈페이지, 2023.2.3. 검색).
- 울산광역시의 건강도시사업은 건강도시 관련 광역지자체 차원의 기반구축과 기초지자체 지원이라는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 사례와는 차이가 있으며, 대전광역시와는 유사하게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하나의 특정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특성을 가짐. 2017~2020년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건강계단 조성' 사업은 울산광역시 전 지역에서 계단 걷기를 통한 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고, 이와 관련한 기초지자체의 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사업임(울산광역시 홈페이지, 2023.2.3. 검색).
- 제주특별자치도의 건강도시사업은 행정조직상 하나의 광역지자체인 제주도가 직접 사업을 직접 수행한다는 특성 이외에 건강도시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는 않았지만, 건강도시와 관련된 다양한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한다는 특성이 있음.

4) 기초지자체 건강도시사업 현황

- 건강도시 관련 조례가 제정된 76개 기초지자체의 대표적인 건강도시사업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법으로 조사하여 확인할 수 있음.
 - 첫째, 2023년 2월 기준,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KHCP)에 건강도시사업을 게재한 기초지자체의 신청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업의 명칭, 사업기간, 예산 등을 확인하는 것임.
 - 이 방법은 시기, 목적, 종류 등과 관계없이 홈페이지에 게재된 지자체의 건강도시사업을 개별적으로 서술하는 것임.
 - 둘째,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KHCP) 회원도시의 2020년 대표적 건강도시사업을 주제별로 구분하여 범주화한 분석을 확인하는 것임(강은정, 2021; 이용갑 외, 2022).
 - 이 방법은 특정 연도를 기준으로 지자체의 건강도시사업을 종류별로 범주화함으로써 지자체의 건강도시사업에 대한 상호비교가 가능하게 함.
 - 범주화를 통한 비교분석에 의하면 기초지자체 차원의 건강도시사업은 건강도시 자체 사업도 있고, 건강증진·건강관리 관련 다른 국책사업이나, 기초지자체의 다른 사업과 연결된 건강관리·건강증진사업이 건강도시사업으로 실시되는 경우도 있음(이용갑 외, 2022).

- ①금연, 비만, 영양, 식품위생, 대사증후군, 건강 돌봄, 건강 지킴, (통합)건강관리, 건강한 학교·놀이터·아파트·시장·직장·마을, 건강도시 학교, 건강지도, 걷기, 신체활동 등과 관련한 건강도시사업은 지자체의 건강도시 자체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음.
 - ②치매예방, 아토피, 자살예방, 공동생활, 심폐소생술, 미세먼지 등과 관련한 사업은 건강증진·건강관리 관련 다른 국책사업과 연관된 건강도시사업이라고 할 수 있음.
 - ③반면에, 바이오헬스나 해상안전 등과 관련한 사업은 건강도시사업을 해당 지자체가 추진 중인 지역사회개발사업과 연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셋째, 2016년부터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KHCP)가 수여하는 ‘건강도시상’을 수상한 지자체의 건강도시사업을 확인하는 것임.
- 이 방법은 지자체의 건강도시사업이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무엇을 강조하는가를 확인할 수 있음.
 -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KHCP)의 ‘건강도시상’의 ‘공동정책’ 범주는 시기적으로 두 개의 하위 범주로 구분됨.
- ①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KHCP)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우선적으로 추진한 제1차 공동정책은 ‘활동적 생활환경 조성’이며, 그 목표는 다음과 같음:
 -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신체활동의 활동적 생산을 할 수 있는 환경조성
 - ㉡활동적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도시디자인 환경의 변화
 - ㉢도시의 사회, 경제, 보건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개발
 - ②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KHCP)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하는 제2차 공동정책은 ‘기후변화 대응’이며, 그 실현 전략은 다음과 같음:
 - ㉠[전략 1]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녹색형 도시·건축 환경 조성, 기후변화 대응형 녹색교통 인프라 구축, 지속가능한 생태보전 및 생태계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는 ‘기후변화 대응 도시환경 구축’
 - ㉡[전략 2] 보건인력의 기후변화 역량 강화, 기후회복력 있는 도시보건전략 개발, 기후변화 관련 보건사업 추진, 기후 정의 실현을 통한 건강형평성 제고, 기후회복력 있는 도시보건전략 개발, 기후변화 관련 보건사업 추진, 기후 정의 실현을 통한 건강형평성 제고를 추진하는 ‘기후회복력 있는 도시보건체계 강화’
 - ㉢[전략 3] 참여적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지역사회의 기후변화 인식 강화를 추진하는 ‘참여와 협력’

6. 건강도시 인천 조성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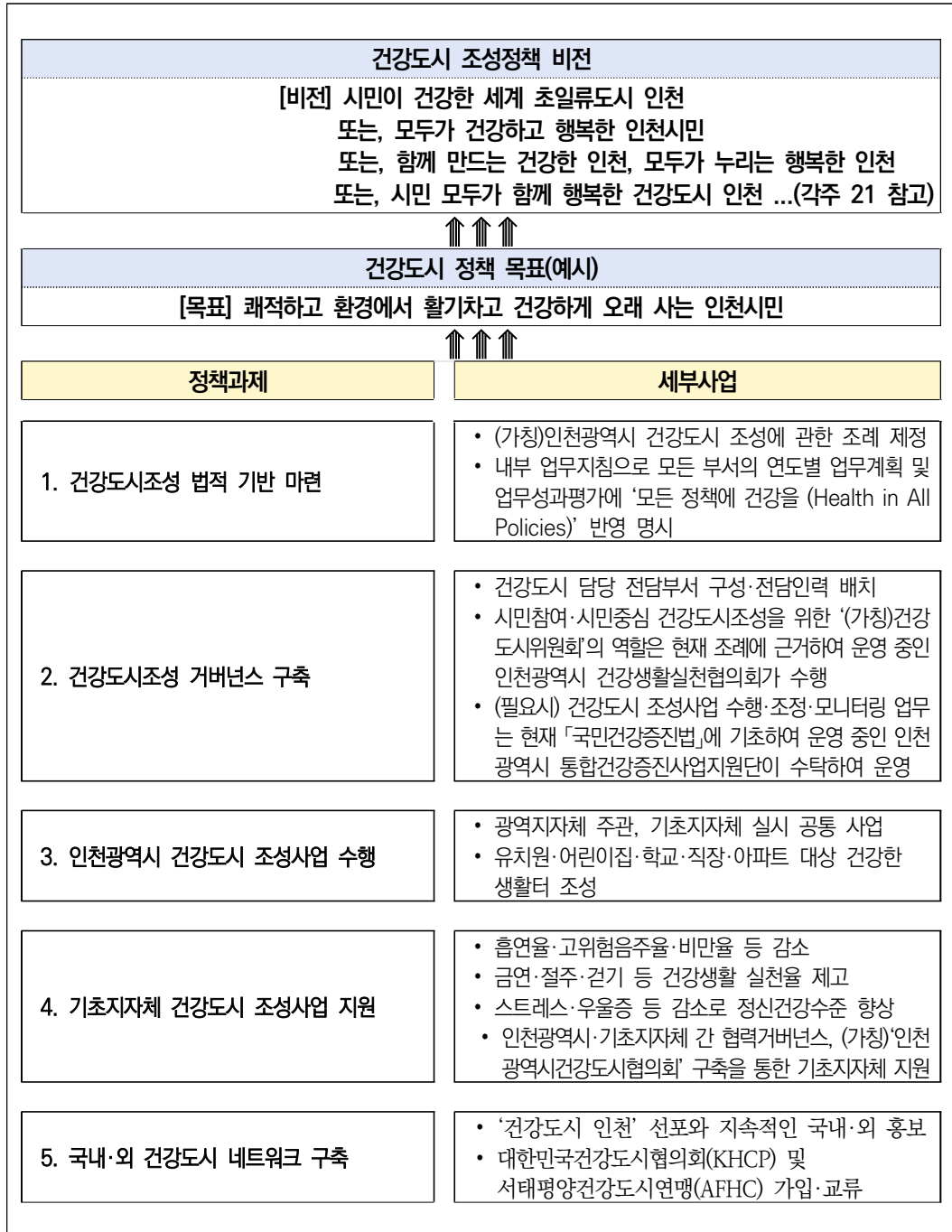
1) 건강도시 인천 조성의 필요성

- 인천광역시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건강증진과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건강도시를 조성해야 할 법적, 정책적 필요성은 명확함.
 - 법적 필요성 : 2021년 12월 21일 개정되고, 2023년 12월 22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5(건강도시의 조성 등) 조항에 근거함.
 -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5는 국가와 지자체가 건강도시 조성에 노력해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도시지표를 작성하여 지자체에 보급하고, 지자체의 건강도시 조성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 정책적 필요성 : 중앙정부차원의 정책적 필요성은 지자체의 건강증진사업에 「제5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2021~2025(Health Plan 2030)」을 반영하는 것과 「지역보건법」 제7조(지역보건의료 계획의 수립 등)에 따른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2023~2026)」을 수립하는 것이며, 인천광역시 차원에서는 민선8기 시정목표인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건강도시사업의 효과적 수행임.
 - 국민건강증진과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정부의 건강정책에 건강도시의 개념과 목적을 인용한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1~2025(Health Plan 2030)」은 6개 정책목표 중 하나로 ‘모든 정책에 건강(Health in All Policies)을 고려’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거버넌스와 법·제도를 개선’하고, 지역 간/계층 간 국민의 건강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인 ‘건강친화적 환경 구축’을 제시하고 있음.
 - 2023년은 전국 모든 광역·기초 지자체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역보건법」 제7조(지역보건의료 계획의 수립 등)에 따라 4년 단위의 ‘지역보건의료계획’, 즉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2023~2026)」을 수립하여 공개해야 하는 연도이며,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는 흡연, 음주 등 건강 관련 생활습관이나 활동의 제한 및 삶의 질에 관한 사항 등과 같이 건강증진과 관련한 사항을 조사·분석하고, 건강도시사업과 연관된 취약계층의 건강관리 및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 격차 해소를 위한 추진 계획·사업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2023년 인천광역시 건강보건국은 ‘시민 건강수준 향상 및 건강형평성 제고’와 ‘지역사회 내 건강증진 욕구 충족 및 취약계층 서비스 강화’를 위한 전략의 하나로 ‘행복한 삶의 시작, 안전한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4가지 사업을 수행함. 그중 첫 번째 사업으로 ‘개인별 신체활동 관리 역량강화 및 건강위험요인 감소를 위한 예방 및 관리 정책 수립’을 세 가지 사업(지역기반 건강증진 플랫폼 등록관리, 만성질환 위험군(비질환자)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보건소 금연구역 지정·관리)으로 추진할 계획이지만, ‘시민이 다 함께 행복한 건강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한 인천광역시 민선8기의 보건의료 분야 시정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도시건강정책을 실현하는 구체적 사업의 하나로서 ‘건강도시사업’라는 명확한 표제어로 범주화하여 건강증진·건강관리 사업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음.

2) 건강도시 인천 조성 방안

- 건강도시 인천을 조성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건강도시 조성사업의 목적, 내용, 지자체의 업무, 예산 지원, 담당 부서 구성, 광역·기초지자체 협의회, 민관협력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는 조례의 제정임.
 - 건강도시 조성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담당 조직(예: 인천광역시 보건복지국 건강증진과 건강도시팀), 시민참여·시민중심 건강도시조성을 위한 민관협력 자문·심의기구 및 필요한 경우 건강도시 조성사업 수행·조정·모니터링 업무를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가 민간위탁방식으로 수행하는 조직 등으로 구성된 거버넌스체계의 구축이 필요함.
- 건강도시 인천을 조성하는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두 번째 작업은 시민참여·시민중심 건강도시조성을 위한 광역지자체 ‘건강도시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인데, 이는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인천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에 근거한 인천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건강도시 인천을 조성하는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세 번째 작업은 건강도시 조성사업 수행을 위한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간 협력과 지원을 조정하는 광역·기초지자체 건강도시조성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임.
- 건강도시 인천을 조성하는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네 번째 작업은 광역·기초지자체의 건강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포괄적 지원업무를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하는 것이며,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의2(시·도 건강증진사업지원단 설치 및 운영 등)와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시·도 건강증진사업지원단의 운영 등) 근거하여 현재 운영 중인 인천광역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이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

[그림 1] (예시) 건강도시 인천 조성의 비전, 목표, 정책과제, 세부사업



3) 인천광역시 건강도시 조성사업 수행

- 인천광역시의 건강도시 조성사업의 수행은 [그림 1]에서 예시로 제시한 정책목표인 '쾌적하고 환경에서 활기차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인천시민'을 실현하는 구호로서 '살기 좋은 인천, 건강한 인천'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광역지자체 차원의 건강도시 조성사업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표 4] 인천광역시의 건강도시 조성사업(안)

범주	근거	사례
① 광역지자체 차원 건강도시 조성 사업 수행	조례에 따른 건강도시기본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정책]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이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안전한 거리-배리어 프리 웨이 • [공동정책 - 활동적인 생활환경 조성] 걷기 Go! 건강 Up! (공공시설 건강계단, 인천둘레길 등) • [공동정책 - 기후변화 대응] 맑고 푸른 인천 하늘! - 미세먼지 제로 인천
② 기초지자체 건강도시조성 지원	건강도시기본계획 (가칭)인천광역시 건강도시조성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생활터조성·건강생태계조성 지원사업 • 주민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건강증진 차원의 건강도시 조성사업 지원

-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 건강도시 조성사업은 인천광역시가 ①광역지자체 차원에서 실시하는 고유의 건강도시 조성사업, ②기초지자체의 건강도시조성 지원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인천광역시의 기초지자체들이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있는 건강도시 조성사업의 주제는 다음과 같이 제안할 수 있음.
 - 인천광역시와 기초지자체 협력사업
 - ①건강수명 연장 및 건강수명 격차 해소를 위한 2024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주제별 건강수명 관련 사업과 캠페인 공동 수행
 - ②10개 기초지자체와 함께 조성하고 연결하는 주민 걷기운동
 - 동구
 - ①금연·절주·걷기 등 건강생활 실천과 같은 주민 스스로의 건강증진활동을 지원하는 사업
 - ②고혈압·2형 당뇨병·이상지질혈증 등 만성질환 관리 및 심근경색·심부전·뇌출혈·뇌경색 등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등을 위한 보건소·지역 1차 의료기관과 함께 하는 보건의료연계 건강도시 조성사업
 - 미추홀구
 - ①이상지질혈증·만성폐쇄성폐질환 등 만성질환 관리, 심부전·뇌출혈·뇌경색 등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등을 위한 보건소·지역 1차 의료기관과 함께 하는 보건의료연계 건강도시 조성사업

- ②금연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보건소·지역 1차 의료기관과 함께 하는 보건의료연계 건강도시 조성사업
- ③금연·절주·걷기 등 건강생활 실천과 같은 주민 스스로의 건강증진활동을 지원하는 사업
- 중구
 - ①원도시지역 거주민 중심으로 심근경색 등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등을 위한 보건소·지역 1차 의료기관과 함께 하는 보건의료연계 건강도시 조성사업
 - ②금연·절주·걷기 등 건강생활 실천과 같은 주민 스스로의 건강증진활동을 지원하는 사업
- 연수구·강화군·서구
 - ①노인성 질환 감소 및 예방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보건소·지역 1차 의료기관과 함께 하는 보건의료연계 건강도시 조성사업
 - ②금연·절주·걷기 등 건강생활 실천과 같은 주민 스스로의 건강증진활동을 지원하는 사업
- 부평구·계양구
 - ①스트레스와 우울 감소 등 정신질환 예방·관리 및 중증정신질환 감소를 위한 정신건강복지센터·보건소·지역 1차 의료기관과 함께 하는 보건의료연계 건강도시 조성사업
 - ②금연·절주·걷기 등 건강생활 실천과 같은 주민 스스로의 건강증진활동을 지원하는 사업
- 용진군
 - ①절주·금주, 비만 예방·감소를 위한 보건소·지역 1차 의료기관과 함께 하는 보건의료연계 건강도시 조성사업
 - ②걷기 등 건강생활 실천과 같은 주민 스스로의 건강증진활동을 지원하는 사업

4) 인천광역시 건강도시조성 시민홍보 및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 인천광역시의 건강도시조성은 조례 제정, 거버넌스체계 구축, 사업수행뿐만 아니라, 인천광역시의 건강도시 조성사업을 시민에게 지속적으로 알리는 ‘홍보’와 지자체·관계 중앙행정기관·국제기구 등과 상시적인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함.

[표 5] 건강도시 인천 조성 시민홍보 및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안)

범위	활동
시민홍보	• 건강도시 선포식
	• 건강도시주간 운영·건강도시조성 성과보고대회 개최
	• 건강도시조성에 기여한 개인·단체에 대한 포상
네트워크 구축	•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KHCP) 가입 및 교류
	• 서태평양건강도시연맹(AFHC) 가입 및 교류

5) '건강도시 인천' 조성을 위한 '모든 정책에 건강을(Health in All Policy)' 전략

- 인천광역시가 '건강도시'로 조성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하며, 그 첫 단계는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건강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인천광역시의 비전과 목표 및 전략(정책과제)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건강도시 인천'의 비전과 목표는 건강도시·건강증진과 관련한 정책방향이나 국정과제를 고려할 필요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지자체의 건강도시조성 노력이 의무화되는 2023년 말을 시점으로 인천광역시 민선8기의 시정 방향인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
 - 이러한 의미에서 2023년 12월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건강도시 인천 조성사업'의 비전은 예를 들면, "시민이 건강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 정책목표는 예를 들면, '쾌적하고 환경에서 활기차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인천시민'으로 제시할 수 있음(그림 1).
- '건강도시 인천의 조성'을 위한 전략은 결국 정책과제의 실현이며, 그 첫 번째 정책과제인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법적 기반의 마련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세부사업으로 구성될 수 있음.
 - '(가칭)인천광역시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
 - 인천광역시의 내부 업무지침으로 모든 부서의 연도별 업무계획 및 업무성과평가에 '모든 정책에 건강을(Health in All Policies)'을 반영할 것을 명시함.
 - 시정의 모든 분야에 '모든 정책에 건강을(Health in All Policies)'을 반영하는 것은 원칙의 확립과 적용, 분야별 고려사항 제시로 구분할 필요가 있음.
 - 시정의 모든 분야에 '모든 정책에 건강을(Health in All Policies)'을 반영하는 원칙은 다음과 같이 확립할 수 있음
 - ① [단기] 시정 모든 분야 사업의 기획·예산·수행·성과 평가에서 '시민건강증진' 항목 추가
 - ② [중장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노원형 건강영향평가' 사례와 같이, 정책이나 사업이 주민들의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여 건강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정책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건강도시 평가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보건의료차원에서 인천광역시 자체 「건강영향평가(HIA)」 도입

- 시정의 모든 분야에 '모든 정책에 건강을(Health in All Policies)'을 반영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이 고려할 수 있음.

- ① 도시계획 분야 : 도시계획에서 녹지공원 유무·규모·시민접근성 확보 등 시민의 건강한 행동을 지원하는 공간 조성
- ② 환경 분야 : 「환경보건법」 제13조(건강영향 항목의 추가·평가 등)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건강영향평가 결과 상시 공개·(해설 포함한)정보제공 의무화, 더 좋은 대기환경 보장을 위하여 오염 배출 감소가 가능한 수소, 전기, 풍력 등 청정에너지·재생에너지 사용
- ③ 교통 분야 :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걷기 편한 도로 구축·연결', '이면도로의 통행 안전성 강화' 등 '도로 건설에 시민건강증진 요인 연계' 의무화
- ④ 산업 분야 : 산업시설 신설·증설·개축에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건강영향평가 결과 상시 공개·(해설 포함한)정보제공, 재생에너지 사용 기반 구축
- ⑤ 일자리·고용 분야 : 노인·장애인 등 건강취약계층 대상 공공부문 일자리사업에서 산업안전 및 건강관리·건강증진 요인을 반영한 작업과정과 근로환경 조성
- ⑥ 문화·관광 분야 : 걷기 축제, 다양한 문화공연체험 지원을 통한 시민의 신체적·정신적·정서적 건강증진 가능성 실현
- ⑦ 사회복지 분야 : 의료급여 대상자, 긴급돌봄 대상자, 차상위계층 등 행복e음 전산망에 등록된 저소득계층에 대한 생애주기별 건강관리·건강증진체계 구축
- ⑧ 식품영양 분야 : 당분·염분·단백질·탄수화물·지방 및 칼로리 등 영양분 함량의 그림 표기, 식품의 건강위험도를 산출하여 색깔로 고·중·저·무위험으로 표기하는 방안을 개발하여 시민의 음식물 섭취에서 건강관리·건강증진 정보제공체계 구축

6) '건강도시 인천' 조성 단계적 추진방안

- 2023년 말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인천광역시의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노력의 시작 시기는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음.
 - 건강도시조성 법적 기반 마련 : 2023년 하반기

- 조례 제정 및 2024년 건강도시조성 예산 편성을 검토함.
- 건강도시조성 거버넌스 구축 : 2023년 하반기~2024년 상반기
 - 제정된 조례를 기반으로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건강도시 담당 전담부서 구성·전담인력을 배치하여 거버넌스체계 구축, 사업 개발, 예산 편성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시민참여·시민중심 건강도시조성을 위하여 현재 운영 중인 인천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 건강도시 조성 관련 심의기능을 부여하여 2024년 상반기에 ‘인천광역시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심의할 수 있게 함.
 - 광역·기초지자체의 건강도시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현재 운영 중인 인천광역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에 건강도시 조성사업 지원을 기능에 추가함.
- 인천광역시 건강도시 조성사업 수행 : 2023년 하반기 준비 및 2024년 상반기 시행
 - 제시한 세 가지 범주 중 1개 이상 범주의 인천광역시 건강도시 조성사업을 2023년 하반기에 개발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인천광역시의회 심의·의결을 받아서 2024년 1/4분기부터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함.
 - 나머지 범주의 건강도시조성 사업은 2024년 상반기에 개발하여, 2024년 하반기, 또는 2025년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함.
- 기초지자체 건강도시 조성사업 지원 : 2024년 상반기부터
 - 기초지자체 건강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은 현재 건강도시조례를 제정하여 개별적으로 건강도시사업을 실시 중인 연구구와 미추홀구를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부터 지원함.
 - 광역·기초지자체가 함께 하는 건강도시조성 사업의 경우, 제정될 조례에 기초하여 2024년 상반기에 수립한다고 할 수 있는 ‘인천광역시 건강도시 기본계획’의 내용을 기반으로 인천광역시·기초지자체가 협력하는 건강도시 조성사업을 개발하여 ‘(가칭)인천광역시건강도시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기초지자체를 지원함.
- 국내·외 건강도시 네트워크 구축 : 2023년 하반기부터
 - 2023년 5월 25일에 개최되었던 ‘건강도시 인천’ 선포식 시기를 기준으로 매년 ‘건강도시주간’을 운영하여 ‘건강도시 인천’에 대한 시민홍보를 지속하고 강화함.
 - 2023년 하반기에 건강도시조성 관련 조례가 제정되는 것을 계기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KHCP)와 서태평양건강도시연맹(AFHC)에 가입하여 국내외 건강도시 조성사업 실시 도시들과의 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 활동을 시작함.

인천시 가족센터 설치 필요성 및 운영 방안 검토

■ 정혜은 도시사회연구부 연구위원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여성가족부는 2021년에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센터가 이원화되어 운영되는 것을 막고 지역 내 모든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존에 시범적으로 운영하였던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형을 ‘가족센터’로 개정함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경우, 거점센터가 지정·운영되어 센터 간 연계 및 종사자 교육 등 광역단위의 역할을 하고 있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대상으로 하는 거점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중장기적으로는 광역 가족센터의 운영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인천시 여건 분석 및 종사자 의견 수렴을 통하여 인천시 가족센터 설립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운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연구 결과

1) 인천시 가족정책 환경

(1) 가족 정책 추진체계

- 가족센터-한국건강가정진흥원-여성가족부로 연계되는 추진체계와 군·구·시·도-여성가족부로 연결되는 이원화된 추진체계를 가지고 있음
- 또한, ‘가족센터’로 통합되어 운영되고는 있지만 건강가정사업과 다문화가족사업은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인천시에서도 두 개의 팀에서 담당하고 있음

(2) 인천시 가족 특성

- 인천시는 전국과 비교했을 때, 부부+미혼자녀, 한부모+미혼자녀, 다문화가구의 비중이 높았고 이혼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군·구별로 살펴보면, 가구 구성, 1인가구 및 다문화가구 비율에서 차이가 나타남

(3) 인천시 가족센터 현황

- 인천시 군·구 센터는 총 10개소로 통합형센터(가족센터)는 8개소(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계양구, 강화군, 서구)로 운영되고 있으며, 부평구는 독립형이므로 부평구건강가정지원센터, 부평구다문화가정지원센터로 각각 운영 중임
 - 계양구 센터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거점 기능을 미추홀구 센터는 아이돌보미사업 거점 기능을 담당함
- 가족센터의 주요 사업은 통합사업(4개 영역), 가족상담, 취약위기가족 역량강화 지원 사업, 지역특화형 다문화가족지원사업과 별도의 예산으로 추진되는 사업(1인가구 시범사업 등)이 있음

2) 타 시·도 광역센터 사례

- 광역단위의 가족센터 및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치된 4곳(서울시, 부산시, 경상북도, 경상남도)의 운영 사례를 살펴봄
- 서울시 가족센터는 광역업무에 집중하여 5개팀 19명의 직원이 배치되어 있으며, 부산시 및 경상남도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광역업무와 함께 개별사업(한부모 및 아이돌봄)을 별도의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었음

3) 인천시 가족센터 종사자 설문조사

- 인천시 군·구 가족센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천시의 광역단위 가족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 설립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여 필요성 검토 및 운영 방향성을 구체화하고자 하였음
- 194명의 응답결과를 분석한 결과, 응답자의 83.5%가 광역단위 가족센터 설립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 가족센터 설립으로 인한 기대효과로 ‘대주민 가족센터 사업홍보 강화’ 영역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여 인천시 광역센터에서 인천시민 대상 가족센터 사업에 대한 홍보로 군·구 가족센터 및 가족사업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가족센터의 주요 기능으로는 관리자급은 ‘중앙부처-인천시 군·구 가족센터간 연계’를, 팀원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에 대한 응답률이 높았음

3. 정책 제언

1) 인천시 가족센터 설치 필요성 검토

- 건강가정사업과 다문화가족사업을 통합하여 수행하는 인천시 가족센터는 「인천광역시 건강가정지원 조례」와 「인천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라 설치의 근거가 확보됨
- 현재 인천시에 다문화가족센터 거점만 운영되고 있으므로 건강가정지원사업에 대한 중간체계 마련이 필요하며, 가족정책 추진체계 이원화가 되어있으므로 인천시 가족사업 전반에 대한 중심적 역할을 인천시 가족센터가 담당할 필요가 있음
- 인천시는 전국과 비교했을 때 한부모가구 및 다문화가구 비율이 높고, 군·구별 인구 및 가구 구성에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 인천형 사업의 발굴과 지역별 특화 사업 개발을 담당할 수 있는 인천시 가족센터의 설치가 필요함
- 종사자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4%가 광역단위의 가족센터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므로 종사자의 욕구를 반영한 인천시 광역단위의 가족센터 설치가 필요함

2) 운영 방안 검토

- 인천시 조례, 정책 환경, 인천시 가족특성 및 종사자 의견 수렴 결과를 통해서 인천시 가족센터의 주요 역할로 인천시 가족정책을 추진하는 전달체계와 군·구 가족센터 지원으로 제시함
- 이를 위한 인천시 가족센터의 세부 사업으로 1) 인천시 가족사업 개발 및 보급, 2) 군·구센터 지원, 3) 가족사업 홍보, 4) 네트워크를 제안함
- 4가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3개팀(사업기획팀, 센터지원팀, 운영지원팀) 총 10명의 인력을 제안함
 - 타 시도 광역센터 4곳의 광역업무 담당자 평균과 유사한 수준으로 적정함

- 운영 주체는 인천시 직영, 공공위탁, 민간위탁 방식으로 나누어볼 수 있으며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함(표 1) 참조. 타 시도 사례 분석 및 종사자 의견 수렴 결과, 가족사업에 대해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민간위탁 방식이 적절할 것임
- 또한, 인천시 가족센터의 주요 업무가 군·구센터 지원인만큼 종사자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공간 및 회의공간에 대한 안정적인 확보가 중요할 것이며, 시유지 유휴공간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임

[표 1] 인천시 가족센터 운영주체별 장·단점 비교

대안		장점	단점
인천시 직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성 확보 • 종사자의 안정적 고용 • 예산 관리·감독이 쉬움 • 인천시 시정에 부합하는 사업 추진 용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적 운영이 어려움 • 전문성, 지속성, 업무 역량의 축적의 어려움 • 민간 군·구센터와의 소통 한계
위탁	공공위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의 연속성 및 업무 축적이 가능함 • 종사자의 안정적 고용 • 인천시와의 소통 용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적 운영 한계 • 외부환경 변화 대응 등의 문제 발생 • 전문성 부족
	민간위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성, 효율성 보유 • 독립적, 탄력적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기관 변경 시 업무 연속성 저하 • 운영 통제의 어려움 • 종사자의 고용 불안정 우려

3) 향후 추진 과제

- 인천시 가족센터의 설치와 함께 추진되어야 할 점은 중앙정부 차원의 가족센터 설치 근거를 위한 일원화된 법률 마련이 필요하며, 인천시에서는 가족센터를 담당하는 조직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현재 계양구 센터에서 운영하는 다문화거점 인력을 인천시 가족센터 설치 시에 고용 승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아동양육시설 경계선지능 및 ADHD 아동 지원 강화 방안

정혜은 도시사회연구부 연구위원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아동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아동학대 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보호대상아동 발생 원인도 2015년부터 ‘학대’로 인한 보호대상아동의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함(임성은, 2020)
- 인천시에 보호대상아동을 보호하는 아동복지시설은 아동양육시설을 포함하여 총 10개의 시설이 있으며, 최근에는 아동복지시설의 경계선지능 및 ADHD의 특징을 보이는 아동의 입소가 증가함
- 이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의 종사자들의 해당 아동에 대한 양육 부담이 커지고 효과적인 개입이 어려운 실정임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복지시설 중 이용 아동 수가 가장 많은 아동양육시설을 대상으로 경계선지능 및 ADHD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와 종사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서 아동 지원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2. 주요 연구 결과

1) 보호대상아동 현황 및 정책

- 학대로 인한 보호대상아동 발생 원인 비중이 지난 10년간 전국과 인천시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함
 - 전국은 16.2%(2012년) → 49.7%(2021년), 인천시는 20.5%(2012년)→57.0%(2021년)로 증가함
- 정부는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를 통해 혁신적 포용국가를 실현”하고자 2019년 5월에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하여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를 위해서 지자체가

“아동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원가정 보호가 어려운 아동은 가정위탁 혹은 입양의 형태로 최대한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요보호아동 심리지원 정책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사업, 아동복지종합센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바우처사업), 교육부의 학생정서·행동특성 검사, 위(Wee) 프로젝트,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상담사업 등이 해당되며 인천시에서는 시설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경계선지능·발달지연 아동 심리치료 지원사업과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역량 강화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2) 인천시 아동양육시설 경계선지능 및 ADHD 아동 현황

- 인천시 8개 양육시설 47명의 종사자가 경계선지능 및 ADHD 아동에 대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현황을 파악한 결과 현원 403명 중에 경계선지능 아동은 102명으로 25.3%를 차지하였으며 ADHD 아동은 73명으로 18.1% 비중을 차지함
- 중복을 고려하면 경계선지능 및 ADHD 아동은 151명으로 현원의 37.5%를 차지하며, 기관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3) 종사자의 경계선지능 및 ADHD 아동에 대한 인식

- 종사자의 설문조사 결과 경계선지능 및 ADHD 아동이 증가했다고 인식한 비율이 높아 해당 아동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와 개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양육시설의 경계선지능 아동이 ‘증가했다’는 응답이 68%, ADHD 아동이 ‘증가했다’는 응답은 77%였음
- 양육시설에서 수행 중인 심리지원 및 사례관리 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경계선지능 아동에게는 ‘경계선지능 아동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와 ‘경계선지능·발달지연 아동 심리치료 지원사업’이 도움이 된다는 각각의 응답률이 58%, 63%로 높은 반면 ADHD 아동에게는 도움이 된다는 응답률이 29%, 40%로 낮았음
- 경계선지능 및 ADHD 아동 모두에게 필요한 사항은 ‘충분한 인력 규모’ ‘전문기관과의 연계’에 대한 응답률이 높았음

4)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 아동양육시설 입소 전부터 PTSD를 앓고 있는 아동들이 많으므로 치료적인 접근이 필요함. 특히, 학대로 인한 입소 아동이 늘고 있어 과거보다 치료가 필요한 아동의 비율이 증가하여 종사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음
- 또한,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한 아동의 경우 시설 내 전문가가 상주하고 있지 않아 종사자의 병원 방문 등 업무가 과다함. 따라서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상담지도원을 양육시설에 배치할 필요가 있으며 종사자 소진 예방을 위한 교육이 필요함

3. 정책 제언

1) 기본 방향

- 설문조사 및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해 기본 방향을 양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지원 강화와 외부기관 연계를 통한 아동 대상 전문적인 서비스 강화로 제안함

2) 세부과제 및 제언

- 종사자 지원을 위해서 인력(상담지도원) 추가 배치,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 종사자 심리지원을 세부적으로 제시하였고, 아동 대상 전문 서비스 강화를 위해 외부기관 연계를 통한 치료비 지원을 제시함
- 또한, 경계선지능 아동 지원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근거 마련 필요, 다양한 주체 의견 수렴, 지역사회 내 자원 연계 강화, 아동양육시설의 다기능화를 제안함

중·동구 원도심 지역 일반고등학교 활성화 방안

■ 배은주 도시사회연구부 선임연구위원

- 중·동구 원도심 지역 일반고등학교가 겪고 있는 문제점은 노후화된 시설 및 기자재, 교지 및 교사(校舍) 관리 인력 및 비용 부족, 부족한 접근성, 행정업무 과다, 낮은 학교 선호도, 낙후된 지역사회 및 가정환경 등을 들 수 있음
- 원도심 지역 일반고교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책은 다음과 같음

구분	지원 내용
인적 자원	교장공모제, 초빙교사제, 행정인력 지원, 배정방식 개선
물적 자원	노후시설 및 기자재 개선, 급식 질 제고, 기숙사 건립 및 운영, 통학환경 개선, 청소년복합문화센터 건립
교육과정	특색 교육과정 운영, 방과후과정(학습코칭, 진로설계, 진로상담 등) 지원

- 활성화 방안 1: 현 지역에서 필요한 지원책을 동시에 투입하는 방안

구분	장점	비고
1. 특수목적고등학교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 전역에서 선지원 가능 ▪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 ▪ 기숙사 운영 	글로벌 국제고등학교로 전환, 지정
2. 특색 교육과정 운영 혁신학교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교학점제 실현, 미래역량 함양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특색 교육과정 운영 ▪ 의욕적 교장, 교사 배치 ▪ 학생, 교원, 학부모, 지역사회 간 소통 강화 	교육거버넌스 구성
3. 지역사회 연계 교육특구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화 교육과정 운영 ▪ 기숙사 운영 ▪ 제물포르네상스사업 연계 	관련 조례 제·개정 및 특별회계 활용 필요

- 활성화 방안 2: 신규 부지로 신축·이전하는 방안
 - 노후건물의 리모델링보다 신축·이전이 교육적·경제적으로 더 유리한 경우 가장 열악한 환경의 학교를 신규 부지로 신축 이전함
- 인천시는 교육환경 개선 부문에 관련 조례 제·개정, 교육비특별회계나 원도심특별회계를 활용하여 지원 가능

인천형 생애주기별 맞춤형 저출산 정책방안

- 정혜은 도시사회연구부 연구위원
- 채은경 도시사회연구부 선임연구위원
- 민규량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 배은주 도시사회연구부 선임연구위원

- 인천시 출산율은 0.78로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며,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제1차~4차)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이 축적되었음에도 향후 합계출산율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영·유아기에 초점을 맞춘 정책보다는 생애주기에 요구되는 과업에 맞는 정책이 필요함
- 본 연구는 생애주기별 저출산 정책 현황과 자녀 양육 실태 분석을 바탕으로 생애주기별 정책 및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자녀양육비용을 자녀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중·고등학생(1인당 월평균 90만 원), 초등학생(1인당 월평균 71만 원) 순으로 높아 사교육과 연관됨을 알 수 있음. 특히, 초등학생 저학년의 경우 돌봄의 목적으로 사교육을 이용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따라서 지역사회 내에서의 돌봄 체계 구축을 통해서 돌봄 수요에 대응하고, 사교육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음
- 청년기는 경제적 및 사회적 자립을 추구하는 시기로 이 시기의 경제적 안정은 결혼과 출산에 큰 영향을 미침. 인천시에서도 청년을 대상으로 한 주거 및 일자리 영역에서의 사업을 마련하고 있지만 대상과 범위가 한정적인 한계가 있음. 따라서 기존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주요 사업에 대한 점진적인 확대가 필요할 것임
- 또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일과 가정을 모두 선택하고자 하는 미래 코호트에 대비하여 유연한 일자리와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하는 사회 전체적인 변화가 필요함

인천은 여성에게 안전한 도시인가?

정혜은 도시사회연구부 연구위원

1. 배경과 목적

- 최근 들어 가정폭력 및 불법촬영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관련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여성 안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필요함. 강력범죄(흉악) 피해 건수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약 7배로 다수를 차지하며, 가정폭력 피해자는 여성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여성 대상 스토킹 범죄의 증가와 디지털 성범죄 위험에도 여성이 취약하게 나타남
-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안전의식을 살펴본 결과, 여성이 남성에 비해 정보보안, 범죄위험에 불안함을 느끼는 정도가 높게 나타남. 이에 인천시는 '여성을 위한 안전한 도시' 인지 통계를 통해 살펴보고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검토하여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2. 정책제안

-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성친화도시 사업의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비의 안정적인 확보와 담당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업무의 연속성과 노하우 축적을 유도할 수 있음
- 인천시 성인 여성의 성희롱 및 성폭력 경험은 직장 내 비중이 가장 높아 직장 내 여성의 안전을 위한 정책 강화가 필요함. 특히, 민간 기업의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문제 또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전담기구 마련이 필요함
-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초등학생 대상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부모 대상 교육이 필요함. 또한, 디지털 성범죄의 인식 강화와 처벌 강화를 통해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여성 안전을 위한 범부서적인 차원에서의 노력으로 인천시의 성평등한 문화 정착과 더불어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로 한 단계 발전할 수 있음

2023년도 연구결과 요약집

Ⅲ

문화·관광 분야

- 정책연구

인천시 생태관광마을 육성방안 연구

- 현안연구

서해~한강 연결사업과 연계한 섬 관광 활성화 방향

인천시 생태관광마을 육성방안 연구

■ 심진범 도시사회연구부 선임연구위원

1. 연구 목적 및 방법

1) 문제 인식 및 연구 목적

-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 인식으로부터 출발함. 첫째, 생태관광은 무엇을 의미하며 최근 정책 동향은 어떠한가? 둘째, 인천시 생태관광마을 사업 현황을 통해 본 정책의 주요 쟁점은 무엇인가? 셋째, 인천시 생태관광마을 육성 정책은 어떠한 방향성을 지향해야 하며 정책적 과제는 무엇인가?
-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 연구는 인천시 생태관광마을 육성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정책 방향 및 추진 과제 제안을 목적으로 수행함.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내용적 범위

- 생태관광 개념 및 원칙 검토
- 생태관광 관련 정부 및 지자체 정책 동향 검토
- 인천시 생태관광마을 선정·육성 사업 현황 분석 및 쟁점 파악
- 인천시 생태관광마을 육성 방향 및 과제 제안

❖ 연구 방법

-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문헌 연구, 관계자 면담 및 전문가 의견수렴, 간담회 등 다각적인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함.

2. 생태관광 이해 및 정책 동향

1) 지속가능한 관광의 실천 대안으로 등장한 생태관광

- 생태관광은 관광목적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대안적 관광 형태로 등장하였으며, UN과 UNWTO 등의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생태관광 촉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와 실천 노력이 확대되어옴.
 - UN은 2002년을 ‘세계생태관광의 해(International Year of Ecotourism)’로 선포
 - 최근에는 글로벌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의식 고조, 코로나19 이후 지구의 재발견 등 환경적 문제의식이 확대되면서 생태관광의 중요성 부각
- 생태관광(ecotourism)이라는 용어는 1983년 Ceballos-Lascurain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으며, 이후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세계생태관광협회(TIES),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국내외의 다양한 기관과 연구자들에 의해 생태관광의 개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됨.
- 생태관광의 정의에 대한 선행 논의를 통해 본 생태관광은 지속가능한 관광의 실천유형으로서 자연지역 및 관련 문화, 환경 해설과 교육, 지역사회 편익, 책임있는 관광행동을 개념적 주요 속성으로 하는 관광이라 할 수 있음.
- 생태관광은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이용과 발전을 목표로 함. 이러한 측면에서 생태관광은 생태관광자원의 보전관리, 지역사회 참여, 생태관광 개발 및 운영 등 대중관광이나 자연관광 등과 비교되는 생태관광의 원칙에 대한 다수의 논의가 진행되어옴.
 - 국제적으로는 생태관광에 관한 퀘벡선언, 세계생태관광협회(TIES)의 제안이 대표적
 - 국내에서는 환경부와 한국관광공사를 중심으로 생태관광원칙 제안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안적 관광 유형으로 개념화된 생태관광은 환경적·사회문화적·경제적 지속가능성의 실천 원칙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원칙은 생태관광 정책 및 사업의 실천 과제 발굴에 있어 개념적 토대가 된다고 할 수 있음.

2) 생태관광의 정책적 당위 확대

- 생태관광 육성의 정책적 당위는 자연환경보전법, 관광진흥법 등 관련 법률과 계획을 통해 구체화되어 왔으며,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등 부처별 특성에 맞는 정책 사업들이 추진되어 옴.

- 생태관광 정책 및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진흥법」, 환경부의 「자연환경보전법」, 해양수산부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환경부·해양수산부의 「습지보전법」 등에 의한 법률적 근거가 있음.
- 생태관광과 관련된 법정계획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진흥기본계획’과 ‘관광개발기본계획’, 환경부의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해양수산부의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기본계획’과 ‘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 환경부·해양수산부의 ‘습지보전기본계획’ 등이 수립되고 있음.
- 이와 같은 법률과 계획을 근거로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등의 정부 부처는 생태녹색관광활성화 사업, 생태관광지역 지정 사업 등 추진

[표 1] 정부 생태관광 관련 정책 동향

구분	관련 법률	관련 계획	관련 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진흥법 - 관광홍보 및 관광 자원 개발 - 지속가능한 관광 활성화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6차 관광진흥기본계획 ('23~'27) •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 ('2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형 생태관광 모델사업 • 생태녹색관광 활성화 사업
환경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환경보전법 - 생태관광의 육성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차 자연환경보전 기본계획 ('16~'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관광지역 지정 제도 •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보급 사업 등
해양수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해양보호구역의 지정·관리 - 해양생태관광의 육성 등 •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 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 갯벌생태관광의 진흥 - 갯벌생태관광·생태마을의 인증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차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기본계획('19~'28) • 제1차 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 ('21~'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갯벌생태관광 인증 • 갯벌생태마을 지정 • 갯벌생태해설사 양성 • 어촌체험휴양마을 지정 등
환경부· 해양수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습지보전법 - 습지지역의 지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차 습지보전 기본계획 ('23~'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습지보호지역 지정 제도 • 습지보전·이용시설 확충 사업 • 주민역량강화 사업 등

3) 광역지자체 단위 지역 생태관광 사업 추진

- 생태관광의 정책적 당위가 확대되어 온 가운데 경기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등 광역지자체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지역 생태관광 육성 사업을 추진 중임(〈표 2-19〉 참조).
 - 광역지자체별로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법률적 근거 하에 생태관광 육성 사업 추진
- 광역지자체 단위의 생태관광 육성 사업은 지역 대표 생태관광지 육성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정책의 지향점과 지역별 여건에 따라 육성 정책의 구조와 지원 내용은 차이가 있음.

[표 2] 광역지자체 생태관광 관련 정책 동향

구분	경기도 권역별 생태관광 거점 조성사업	전라북도 생태관광지 육성사업	경상남도 도 대표 생태관광지 지정·육성사업
사업명	• 경기 서해안-DMZ-동부 권역별 생태관광 거점 조성	• 전라북도 생태관광지 육성	• 도 대표 생태관광지 지정·육성
추진근거	• 경기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2021.7.14. 제정)	• 전라북도 생태관광 육성지원 조례(2015.10.30. 제정)	• 경상남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2017.12.28. 제정)
추진주체	• 경기도(관광산업과), 경기관광공사, 시·군	• 전라남도(자연생태과), 시·군	• 경상남도 환경정책과, 시·군
사업 대상	• 시·군별 주민단체(협약체)	• 시·군별 생태관광지	• 생태관광자원 보유 지역
사업 기간	• 2019년 ~ (2개년)	• 2015년 ~ 2024년(10개년)	• 2018년~ (3개년)
사업추진 현황	• 9개 생태관광 거점 조성	• 12개 생태관광지 조성	• 5개 생태관광지 조성
추진 방식	• 공모사업	• 시·군 추천, 전라북도 선정	• 공모사업
사업비	• 개소당 3.5억 원/2년 - 도비 50%, 시·군비 50%	• 12개소 1,022억 원/10년 - 국비 504억 원 도비 266억 원 시·군비 252억 원	• 개소당 3억 원/3년 - 도비 50%, 시·군비 50%
주요 사업 내용	• 지역환경 개선 및 기존 생태관광 시설 보완 • 콘텐츠 개발,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인력 양성 • 컨설팅, 홍보·마케팅 등	• 생태관광 기반시설 조성 • 생태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 에코메니저 등 인력 육성 • 홍보·마케팅 등	• 지역협약체 구성 •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운영 • 관광환경 개선 • 전문가 컨설팅 및 모니터링 • 홍보 등
비고	• 평가·모니터링을 통한 사업 추가 지원	• 환경부 정책 연계 추진 • 평가·모니터링 및 컨설팅	• 환경부 정책 연계 추진

3. 인천시 생태관광마을 육성 정책의 주요 쟁점

1) 정책 대상 선정

❖ 생태관광마을 육성 정책의 방향성 정립

- 관광자원의 생태적 가치가 우수하고 마을공동체 중심의 관리·운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관광을 실천한다는 정책의 방향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어촌체험, 갯벌체험 등 다른 마을 단위 관광사업과의 차별성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 방향 설정 필요

❖ 대표 생태자원을 활용한 집중 육성 구조

- 인천시의 생태관광마을 육성 정책은 인천시의 대표 생태자원과 연계하여 생태관광마을 발굴 및 집중 육성 구조가 필요함.
- 해양보호구역·습지보호지역·천연기념물 등 법정 보호지역, 람사르습지, 인천시의 갯대종 등 인천시의 대표적인 생태자원과 연계하여 생태관광마을 육성 정책 필요

❖ 지역사회 참여와 추진 주체

- 지역사회의 주도적 참여를 원칙으로 하는 생태관광 특성 상 정책 대상 선정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추진 조직과 역량은 육성 대상 선정 시 우선적인 고려 사항임.
- 현 시점의 역량은 물론 생태관광마을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역량 평가 필요

2) 지원 사업의 성격 및 구조

❖ 지원 사업의 성격과 내용

- 지역주민 역량 강화, 생태관광 콘텐츠 개발, 관련 시설 정비, 생태관광 홍보·마케팅, 네트워크 등 생태관광의 특성을 고려한 패키지형 지원 사업이 필요함.
- 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경상보조사업과 자본보조사업의 패키지형 지원 사업 구조 필요

❖ 지원 사업의 구조와 기간

- 중장기적 호흡으로 접근이 필요한 생태관광마을 육성 정책 특성 상 다년 지원형 사업으로의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사업 선정 시 4년 내외의 로드맵 및 사업계획을 검토·선정하고, 2년 지원 후 중간 모니터링을 전제로 후속 지원 추진

3) 정책 추진체계

❖ 기초지자체를 포함한 정책전달체계 설계

- 인천시 생태관광마을 육성을 위해서는 기초지자체를 포함하여 인천시, 군·구, 인천관광공사, 지역주민 조직으로 연결되는 정책전달체계의 재 설계가 필요한 상황임.
- 2022년 시범사업은 인천시, 인천관광공사, 지역주민 조직으로 연결되는 전달체계 하에서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역할 문제 부각

❖ 마을공동체 주도 사업 성격 상 중간지원 시스템 구축

- 중장기적 호흡 하에 마을공동체가 주도하는 육성 사업 성격 상 지역사회의 현실적 한계를 보완하는 중간지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지역사회 역량 강화, 현장 밀착형 컨설팅, 관련 자원 중개 및 네트워킹, 협의체 운영 등을 위한 중간지원 시스템 필요

❖ 사업 추진의 제도적 근거와 타 사업과의 연계

- 사업 추진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필요한 인천시 생태관광마을 육성 정책 특성 상 사업 추진의 제도적 근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생태관광 육성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당위가 확대되어온 가운데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에서 추진 중인 생태관광 육성 관련 사업과 연계하여 사업 추진이 필요함.

4. 인천시 생태관광마을 육성 방향 및 과제

1) 기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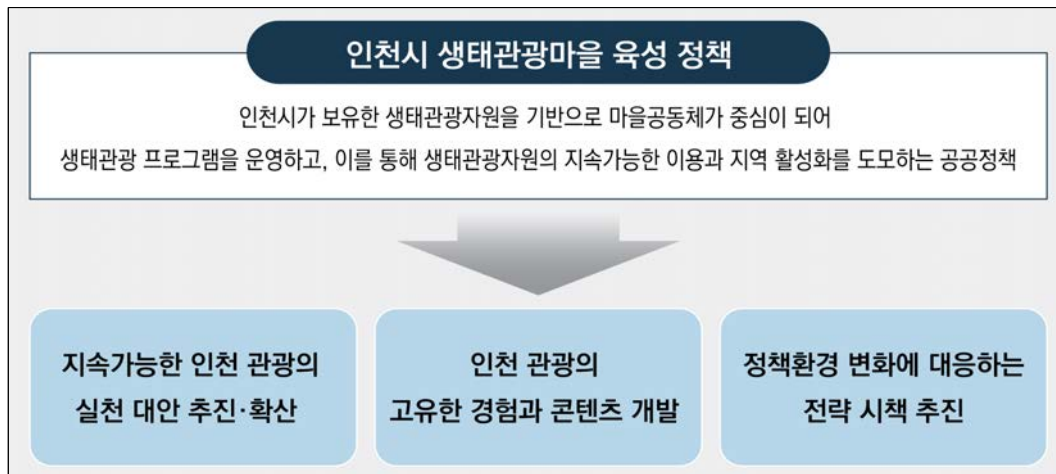
❖ 생태관광마을 육성 정책의 개념

- 인천시의 생태관광마을 육성 정책은 ‘인천시가 보유한 생태관광자원을 기반으로 마을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를 통해 생태관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공공정책’으로 개념화할 수 있음.
- 단순 자연관광, 어촌체험, 마을관광 등과는 구분되는 관광자원의 생태적 가치, 환경해설 및 교육, 지역사회 참여 등의 원칙을 토대로 정책의 방향성 정립 필요

❖ 생태관광마을 육성 정책의 의의

- 생태관광의 개념적 특성, 정책적 당위, 환경 변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인천시 생태관광마을 육성 사업의 정책적인 주요 의의는 다음과 같음.
- 지속가능한 인천 관광의 실천 대안 추진·확산
- 인천 관광의 고유한 경험과 콘텐츠 개발
-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 시책 추진

[그림 1] 인천시 생태관광마을 육성 정책의 개념 및 의의



2) 정책과제

- 제안한 정책의 개념 및 의의를 고려할 때, 정책과제 도출을 위한 현실적인 문제 의식은 다음과 같음.
 - 인천시 생태관광마을 육성 정책의 체계성과 합리성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가?
 - 생태관광마을 정책의 성과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창출하고 확산해나갈 것인가?
 - 장기적인 호흡으로 추진이 필요한 생태관광 육성 정책 특성 상 어떻게 지속가능한 정책의 구조를 만들 것인가?
-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토대로 인천시 생태관광마을 육성 정책 실행과 관련되는 인천시, 인천관광공사, 전문가, 연구진 등 정책 이해관계자 간 논의를 통해 정책과제를 도출함.
 - 정책의 주요 쟁점과 문제 의식을 공유하고 정책 과제 논의·검토
-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①인천시 생태관광마을 선정·육성 사업 보완·개편, ②사업 지원 및 성과 관리 체계 구축, ③정책 추진 기반 정비 등 3개의 중점 과제를 도출하고, 과제별 추진방안을 제안함.

[그림 2] 정책 과제 제안

인천시 생태관광마을 선정·육성 사업 보완·개편	사업 지원 및 성과 관리 체계 구축	정책 추진 기반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기본 구조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 대상 및 자격요건, 선정 절차, 지원사업 기간 ● 선정 기준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마을, 재 선정 마을 ● 지원 사업 내용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상보조 및 자본보조 패키지형 사업 추진 ● 정책전달체계 및 주체별 역할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자치단체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간지원 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관광마을 역량 강화, 사업 추진 지원 및 밀착 컨설팅, 네트워킹 및 중개 등 ● 생태관광마을 사업 추진 가이드라인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관광마을 육성 사업 추진 및 관리·운영 상세 가이드라인 개발 ● 생태관광마을 사업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이행 및 사업 효과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의 제도적 근거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검토 ● 생태관광 육성 협력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관광 육성 협의체 구성, 민관 협력체계 구축 ● 정부 정책 사업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지원 정책 사업 연계

서해~한강 연결사업과 연계한 섬 관광 활성화 방향

■ 심진범 도시사회연구부 선임연구위원

- 인천시 민선8기 공약과 연계한 서해~한강 연결에 따라 적극적으로 유입되는 관광객 증가에 대비한 관광객 소비 증대 방안의 필요성이 부각됨. 이에 서해와 한강 연결사업 추진에 따른 섬 관광 정책 이슈를 파악하고 섬 지역 유입되는 관광객 증가에 대비한 관광활성화 과제를 제안함
- 덕적도~한강 연결에 따라 덕적도에 유입되는 관광객 증가에 대응한 섬 관광 활성화 정책 과제와 관련하여 3가지 정책 이슈를 검토함
 - ① 입도객 증가에 대응한 기초 수용태세를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
 - ② 덕적도 특화자원을 활용한 고부가 관광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 ③ 증가한 입도객으로부터 어떻게 지역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할 것인가?
- 상기와 같은 정책 이슈에 기반하여 덕적도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기초 수용태세 정비, 고부가 치유관광 특화 육성, 섬 관광사업체 육성 부문으로 도출함



2023년도 연구결과 요약집

경제환경연구부
인천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
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

2023년도 연구결과 요약집

I

경제·국제 분야

● 기획연구

부동산 세제 발전 방향
클라우드펀딩과 고향사랑기부제 연계 방안
인천시 성과확산을 위한 기술사업화 활성화 방안

● 정책연구

소상공인 정책현안 진단 및 대응방향 마련
인천 향토음식 자원 발굴 및 육성방안
인천광역시 항공금융 정책 방향 연구

● 현안연구

인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본 방향과 과제
재외한인과 연계한 경험의 방향과 한상비즈니스센터의 역할 검토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글로벌 혁신산업도시 조성을 위한 전략산업 창업 활성화 방안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을 통한 기업 유치 인센티브 개선 방향 검토
글로벌네트워크 중심도시 발전모형 연구
인천지역 생산자서비스업의 특성 분석 및 활성화 방안

● 이슈브리프

재외한인과 함께하는 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 정비 방향 제언
인천지역 반도체산업 현황과 지원정책 수요 검토
글로벌 게이트웨이 발전 전략과 뉴홍콩 프로젝트에 대한 시사점
인천지역 반도체산업 현황과 지원정책 수요 검토

부동산 세제 발전 방향

■ 허동훈 경제환경연구부 선임연구위원

1. 연구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 세제는 대다수 OECD 국가와 차이가 크고 교과서적인 이론 및 권고사항과 거리가 났. 우리나라는 재정분권, 그중에서도 세입분권이 비교적 취약함.
- 부동산 관련 조세의 누진 세율 구조로 인해 고가 부동산 밀집 지역에 높은 세율이 적용. 이는 지역 간 재정력 격차를 확대하여 재정분권 및 지방재정의 책임성을 훼손함.
- 이러한 문제의식을 전제로 지방재정 제도 및 부동산 세제를 검토하기로 함.

2. 지방재정제도 현황과 문제

-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이전재원 비율이 높고 지방세 비중은 작음. 갈수록 이전재원 비율이 증가하여 2022년 71.2%에 달함. 재정자립도는 꾸준히 하락하고 있음.
- OECD 국가와 비교하면 세입분권 수준이 낮음. 즉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일에 비해서 자체세입 비중이 작음, 이전재원이 많지만 갈수록 증가하는 국고보조금 대응 지출로 인해 실질적인 재정자주도에는 한계가 있음.
- 취약한 재정분권의 핵심적인 문제는 과도하게 높은 이전재원 비율로 인해 지방재정의 책임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임. 즉 연성예산제약이 큰 문제임.
- 재정조정제도가 복잡하고 과도함. 이로 인해 경제 규모가 작은 지방자치단체일수록 이전재원 비율이 급등하고 지방재정 지출도 급증하는 양상을 보임.
- 지방세 특히 보유세는 지방공공재에 대한 가격기능을 수행해야 하지만 과도한 누진세율 체계로 인해 편익과세의 특징을 상실한 상태임.

3. 재정분권의 난관

- 재정분권 논의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지역 간 재정력 격차 문제임.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규모 격차는 크지 않음. 그렇지만 누진세율 구조로 인해 고가 부동산이 많은 수도권 지방세 비중이 높음.
- 2022년 기준 특광역시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군의 2.27배임. 군 주민 1인당 지방세 세율은 특광역시 주민의 2.37배임.
- 과도한 지역 간 세율 차이는 중앙정부가 재정조정제도를 통해 재분배가 쉬운 이전재원 위주로 지방재정제도를 운영하게 하는 토대가 되고 있음.

4. 부동산 세제 개선 방향

- 부동산은 조세회피를 위한 지역 간 이동에 한계가 있으므로 부동산 보유세 역시 자원배분 왜곡 가능성이 작고 부작용이 적은 세금이라고 할 수 있음.
-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약 0.16~0.17%로 OECD 주요 국가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함.
- 재정분권을 위해 증세를 한다면 재산세 확충이 가장 바람직함. 종합부동산세 폐지와 취득세 비중 축소를 전제로 하면 이로 인한 세수 손실을 상쇄하고 남은 정도로 재산세율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보유세는 대부분 국가처럼 단일비례세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함. 첫 번째 이유는 가격기능 회복을 위해서 즉 편익세로서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임.
- 지역 간 재정력 격차 완화를 위해서도 재산세의 비례세 전환이 필요함. 지역 간 재정력 격차는 지역 간 경제 규모와 부동산 자산 규모에 따라 발생하지만, 보유세의 누진세율 체계 때문에 더 커짐.
- 취득세는 거래를 억제해 부동산이라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막는 부작용이 있음. 소득과 자산이 높거나 많지 않아도 거래 빈도가 높으면 담세 능력에 비해 많은 세금을 부담할 수도 있음.

- 수도권에 고가 부동산이 많고 거래도 활발해 취득세는 지역 간 재정력 격차를 확대하는 가장 큰 요인임. 취득세는 세율을 낮추는 한편 비례세로 전환하거나 누진구조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로 적합한 보유세인데 명목상이지만 국세로 운영하는 것은 비정상적임. 지나친 누진구조로 인해 시장경제 원리에 반하는 징벌적 성격도 있음.
- 종합부동산세는 최근에 세수 규모가 커져서 논란이 되고 있음. 소득재분배와 부동산 보유 격차가 문제라면 현행 중부세보다는 부유세의 도입이 더 나은 대안임.
- 종합부동산세는 일시에 폐지하는 대신 재산세의 비례세 전환 및 실효세율 인상과 연계해서 장기적으로 통합하는 방식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5. 재산세 인상의 쟁점

- 재산세 인상에는 두 가지 반론이 있음. 그중 하나는 우리나라 부동산 세수가 너무 크다는 것임.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우리나라는 재산세율이 아니라 취득세율이 높아서 부동산 관련 세수가 크다는 점과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경제 규모에 비해 너무 높아서 발생하는 현상이라는 점을 외면하고 있음.
- 또 다른 반론은 재산세 인상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돼서 서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주장임. 이러한 견해의 타당성을 재정학의 Old View와 New View 논쟁을 통해 살펴봄.
- 한국에서는 재산세가 누진적이며 세입자에 조세전가 가능성은 작다고 보아야 함. 그 이유는 우선 한국에선 누진성에 의심의 여지가 없는 토지분 재산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임. 둘째로 전국적으로 동일한 재산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임.
- 대다수 재정학자는 소득재분배 기능은 지방세가 아니라 국세에서 추구해야 한다고 보지만, 소득재분배를 중시하여 재산세의 비례세율 전환을 반대하는, 즉 누진세율 체계를 옹호하는 견해도 있음.
- 그러나 부동산 소유의 편중 현상 때문에 재산세를 비례세로 전환해도 실효세율을 인상하면 소득재분배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이론적으로 한국의 재산세가 누진세율은 말할 것도 없고 비례세율을 택하더라도 누진적인데 한국의 재산세는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미하거나 역진적이라는 실증연구 결과가 있음.

- 그러나 협의의 소득이 아니라 순자산과 소득을 같이 고려하면 재산세의 재분배 효과가 없거나 약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OECD 역시 재산과세의 강화를 권고하고 있음.
- 재산세 인상을 비롯한 증세의 재분배 효과는 협의의 소득재분배가 아니라 자산으로 인한 귀속소득까지 고려한 포괄소득의 재분배를 고려해야 함. 더 나아가 세금의 지출까지 고려해야 재분배 기능을 파악할 수 있음
- 비례세라고 하더라도 재정지출이 계층별로 고르게 혜택을 입도록 이루어진다면 재분배 효과가 있음. 더구나 갈수록 사회복지 지출이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를 고려하면 저소득층에 재정지출의 혜택이 더 가므로 재분배 효과를 의심할 수 없음.
- 정치권이 증세에 대해 소극적이고 국민도 부가증세에 찬성할 뿐 당사자에 대한 증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상황이지만 증세는 피할 수 없음. 복지 지출 사업 구조를 개편하거나 확대하지 않더라도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복지 지출은 늘어나게 되어있음.
- 증세의 방안으로 소득세와 법인세 인상을 강조하는 한편 역진적인 간접세라는 이유로 소비세 인상에 부정적인 견해가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 소득세는 이미 충분히 누진적이어서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을 통해 증세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우리나라 소득세 문제는 비정상적인 누진구조로 세금을 안 내거나 적게 내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데 있음. 따라서 증세를 하려면 빈곤층을 제외한 중하위 소득계층에 대한 증세가 필요함.
- 한국의 법인세도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다수 기업의 세율이 낮게 적용되는 누진구조의 문제가 있음. 역진적이라는 이유로 소비세인 부가가치세 인상에 부정적인 지적이 많지만 소비세도 재분배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음.
- 증세가 불가피하지만, 증세만을 통해서 재원을 충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유독 정부지출,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율이 낮음. 달리 표현하면 한국은 그만큼 비사회복지 부문에서 큰 정부를 유지하는 나라로서 정부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많이 하는 나라임. 증세와 함께 정부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해야 증부담-증복지 국가로 이행할 수 있음.

크라우드펀딩과 고향사랑기부제 연계 방안

■ 조승현 경제환경연구부 선임연구위원

1. 배경과 목표

- 고향사랑기부제의 사회적 관심과 참여를 끌기 위하여 답례품과 세액공제라는 물적인센티브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현재의 추진 및 홍보전략은 나름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지만, 제도의 안착과 지속성 구현을 위한 방안이 필요
- 이를 위하여 지역발전에 필요한 재정의 한계를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민간부문에서 조달하고 사업의 기획, 진행 단계에 민간이 참여하는 고향사랑기부제도와 크라우드펀딩을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

2. 시민참여 고향사랑기부제 크라우드펀딩 유형

- [사업주체기준 유형] 지자체 단독, 지자체 중심 시민참여, 지자체 시민 공동
- [사업단계] 크라우드펀딩 적용하는 고향사랑기부제 사업발굴, 사업공고 및 모금, 사업 진행, 성과 관리 및 홍보

[표 1] 시민참여 고향사랑기부제 크라우드펀딩 유형

사업주체 유형	사업 진행 단계								적용 적합 사업
	사업 발굴		공고, 모금		사업 진행		성과관리, 홍보		
	주체	추진형태	주체	추진형태	주체	추진형태	주체	추진형태	
I. 지자체 단독	G (지자체)	직접 발굴	G	직접 관리	G	직접 관리	G	직접 관리	신뢰, 지속성
II. 지자체 중심 시민참여	G	공동 사업발굴	G	공고, 모금	G	시민위탁,	G	성과 관리	
	C (시민)				C	자문, 협의, 공동운영위	C	홍보	
III. 지자체 시민 공동	G	공동 사업발굴	G	공고, 모금	G	합의	G	성과 관리	창의성, 홍보 중요
	C		C	공고	C		C	홍보	

3. 결론 및 향후 과제

- 현행 제도에서 전면적으로 크라우드펀딩 구조를 고향사랑기부제에 접목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법 관점에서 크라우드펀딩을 적용할 때의 법적 문제와, 크라우드펀딩 관련 법 관점에서 고향사랑기부제를 적용할 때의 법적 문제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검토가 선행되어, 필요할 경우 해당 법의 수정, 보완이 필요할 것임
 - 이런 상황에서 법적 충돌을 최소화하면서 시행이 가능한 구체적 방안으로 '펀딩답례품'을 제안했으며, 현행법의 개정이 없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 부문에 크라우드펀딩 방식을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반영하는 시범적이고 단계적인 적용방식을 정책대안으로 제시
- 민간이 참여하는 고향사랑기부제 크라우드펀딩은 민간부문의 참여 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되, 사업의 특성에 따라 민간참여의 수준과 내용을 상호 부합하는 것이 필요
- 향후과제로 다음을 제시
 - 고향사랑기부제의 지역경제효과를 실증분석하여 정량화하여 답례품의 원산지, 지역특산물 생산 가능성, 지역특산물 발굴 관련 세부 지침 마련
 -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한 관계인구 생성 가능성을 모색하여 인구소멸 위기를 실감하고 있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 가능성 검토
 - 민간이 참여하는 고향사랑기부제와 크라우드펀딩을 연계하는 시범사업의 성과를 일반 공공서비스로 확대하여, 민간이 주도하여 공공재를 공급하는 크라우드펀딩 추진 가능성 검토

인천시 성과확산을 위한 기술사업화 활성화 방안

■ 이정영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1. 서론

- 기술사업화는 기술을 활용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보유 기술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일련의 과정임
 - 이는 연구개발 투자성과를 활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단계로, 혁신 주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임
 - 기업이 연구개발 투자로 수익실현을 할 수 있다면, 지속적인 재투자를 통해 연구개발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는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식자원을 활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기술이전 전담조직을 통해 공공부문의 연구개발 성과확산을 위한 사업 추진하였으며, 기술거래 촉진네트워크 사업을 통해 기술기업의 성장을 지원함
- 지자체별로도 연구개발 투자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조직과 사업을 활용하고 있음
 - 서울은 서울경제진흥원과 서울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투자 성과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형 R&D 지원사업’을 통해 연구개발 투자를 통합적으로 지원·관리하고 있으며 지자체 중에서 유일하게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2015년에 제정
 - 경기도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경기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지역의 과학기술의 혁신성과 확산과 지역의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음
 - 특히 강소특구로 지정된 사례를 살펴보면, 산학연의 협력을 통해 기업이 높은 매출액을 창출하고 고용을 증가시킴으로써 지역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혁신기관 간 협력 강화에 관심이 많음

- 본 연구는 인천시 연구개발 성과확산을 위해 기술사업화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연구개발 투자에서의 기술사업화 및 기술이전에 대한 의미와 필요성을 검토함
 - 주요 7개 특·광역시로 대상으로 연구개발 성과지표를 살펴보고 인천시의 현황을 살펴봄
 - 인천시 기업 대상 설문조사, 전문가 면담을 통해 지역의 기술사업화 활성화 방안을 모색

2. 연구개발 투자성과

- 연구개발사업의 투자성과를 과학적 성과, 기술적 성과, 경제적 성과로 구분
 - 과학적 성과는 SCIE 논문 수, 기술적 성과는 출원·등록 특허 수, 경제적 성과는 기술료와 사업화 건수로 추정하며,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검토함
- (과학적 성과) 2021년 게재된 논문 수는 47,187건으로 최근 10년간('12년~'21년) 연평균 5.85% 증가하였으며, 인천은 전체 대비 2.67% 수준
- (기술적 성과) 출원 특허 수는 28,634건으로 연평균 2.80% 증가하였으며, 인천은 2.53%로 주요 특·광역시 중 6위를 기록함
- (경제적 성과) 사업화 건수는 총 21,519건으로 연평균 4.83% 증가하였으며, 인천은 전체 대비 2.79%이며 연평균 성장률은 2.82%로 낮음
- 정부에서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투자성과 확산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 공공연구기관(대학·연구소)의 기술이전 건수는 15,383건으로 연평균 9.72% 증가하였으며 기술 이전율은 40.92%임
 - 유형별 비중을 살펴보면, 전체 대비 공공연구소의 기술이전 비중은 63.59%('12년)에서 53.85%('21년) 감소한 반면 대학은 36.41%('12년)에서 46.15%('21년)로 증가함에 따라 대학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음
 - 기술이전 수입을 기준으로 대학교 순위를 살펴보면, 인하대학교는 20~30위권을 유지하고 있고 인천대학교는 70위권에서 50위권으로 상승함
 - 이전기술 도입자별 공공연구기관 이전된 기술 건수 비중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이 전체의 약 80% 차지하고 있음에 따라, 공공기술이전이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에 영향을 미침

3. 성과확산을 위한 방안

- 인천 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기술사업화를 경험한 적이 있는 기업이 전체의 53.91%이며 대체로 자사 기술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남
 - 기술이전을 경험한 기업은 전체의 1/3 수준으로, 자사 기술을 활용한 기술사업화에 비해 이전 기술의 적합성, 비용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음
 - 기술사업화 또는 기술이전을 하지 않는 이유로는 '별도의 필요를 느끼지 못함', '아는 바가 없음' 순으로 응답률이 높음
- 기술사업화 또는 기술이전을 하면서 겪은 어려움에 대한 항목별 응답 점수가 평균 2점대를 기록하였으며, 인천 내 기업들이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얻은 성과를 활용하는 과정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특히 '인력확보(2.08점)', '민간 투자자 연결(2.14점)', '자금조달(2.16점)' 순으로 점수가 낮음
- 연구개발 투자성과 확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지역 내 관련 기관 및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 면담을 실시함
 - 면담 대상은 대학(산학협력단, 2곳), 사업지원기관(1곳), 기업(5개 사)임
- 주요 내용으로는 ①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공유 기회 제공, ② 지자체의 지원사업 확대 필요에 대한 수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대학) 공공부문에서 대학이 연구개발 투자성과 확산의 구심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현재 타 지자체와의 기술이전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나 인천 내 수요기업 정보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사업지원기관) 자사 기술을 활용한 사업화에서는 지원사업 참여도가 높으나 기술이전에서는 기업들이 참여가 저조하며, 성과확산을 위해서는 지자체 지원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기업) 기술이전보다는 자사 기술을 활용한 기술사업화에는 관심이 높고, 현재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술사업화와 관련된 사업이 부족하며 산학연 협력할 기회가 적음
 - 기술이전 후 사업화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시간과 연구개발비가 필요하지만 이와 관련된 사업은 부족하여 자사 기술을 통한 기술사업화를 주로 함

4. 정책제언

1) 연구개발 사업과제 통합관리

- 연구개발사업을 산업별로 관리하기보다는 하나의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인천은 테크노파크에서 연구개발 사업과제가 진행되고 있으나, 산업에 따라 센터별로 공시 및 관리가 따로 이뤄지고 있어 성과관리 및 운영도 각자 진행하고 있음
 - 산업별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개발 단계별로 구분하여 통합 공고·관리가 이뤄질 경우에는 사업자는 정보를 확보하기가 용이하고 전담부서에서 관리하는 경우에는 중복지원을 줄이고 지원기관 관리가 수월할 수 있음
- 기관 간에도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원 성격이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 사업내용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연구개발 투자, 기술사업화와 같은 과학기술 기반 조성 및 성과확산 단계에 필요한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연구개발 정책지원 성과관리

- 연구개발 관련 사업이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운영·관리됨에 따라 성과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임
 - 현재 국가연구개발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관리는 이뤄지고 있으나, 자체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공시자료는 확인하기 어려움
-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투입된 예산에 대한 적절한 성과조사가 이뤄져야 하며, 이를 통해 성과가 높은 기업에 대한 후속 관리도 필요
 - 지자체 연구개발 예산 코드가 불명확하여 예산 규모를 추정하기 어려우나, 지역별 연구개발지원단이 협의를 통해 표준화된 매뉴얼을 구축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연구개발 투자 규모 및 성과추정이 가능하므로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연구개발 투자지원이 종료된 사업일지라도 우수한 성과를 도출한 기업의 경우에는, 다년도 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장기적으로는 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지자체의 투자 규모를 확대할 필요는 있음

3) 대학 공동연구실 지원

- 개발된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이 실증연구를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역의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과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대학 공동연구실 지원사업 운영
 - 기술이전 이후에 사업화까지 최소 2년 이상이 소요됨에 따라, 연구인력 및 비용 등에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나 이와 관련된 사업은 부족한 상황임
 - 실제 연구소 랩에 입주한 기업에 따르면, 이전받은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인력의 컨설팅, 장비 사용 등에 대한 지원이 이전받은 기술에 대한 기술사업화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함
- 인천은 주요 대학이 주로 연수구, 남동구에 위치하며 주요 산업단지와의 인접해 있으므로 공동연구실 운영을 통해 연구개발 투자의 높은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음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소 수도권통합센터가 송도에 입주할 예정이므로, 계획단계에서부터 인천의 기술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공동연구실을 조성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4) 산학연 연계형 기술사업화 프로그램

- 지역의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방형 혁신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 사항으로, 지역 내 혁신 네트워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협업사업이 필요함
 - 대학은 기술을 이전할 만한 기업을 찾기 어렵고, 기업은 이전받을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정보를 취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지자체 내 기술거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이미 기업은 자체 기술을 통한 기술사업화는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영세한 기업은 연구개발 투자가 어렵기 때문에 공공부문의 기술이전을 통해 혁신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함
 - 현재 산학연이 공동으로 연구해야 하는 사업이 부족하고, 이전받은 기술에 대한 사업화 프로그램은 제한적인 상황이므로 혁신기관 간 협업할 유인이 적은 상황임
 - 인천의 전략산업은 대체로 고기술을 기반으로 한 산업이므로 기업이 주도하고 대학 또는 연구소가 참여하는 컨소시엄형 연구개발 사업을 통한 성과확산이 필요함

소상공인 정책현안 진단 및 대응방향 마련

■ 민규량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1. 연구개요

- 본 연구는 인천시의 소상공인 현황 파악 및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연구로써 문헌조사, FGI,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한 통계분석 등의 방법을 활용함.
- 연구는 소상공인의 현황분석, 인천시 소상공인의 정책 현황, 소상공인 단체 시책 만족도 및 정책수요 조사, 정책적 시사점 제시로 구성됨.
 - 소상공인 경영 현황 및 창업 현황분석
 -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정책 현황 연구
 - 소상공인 단체 시책 만족도 및 정책수요 조사
 - 소상공인 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도출
- 본 연구는 향후 인천시의 소상공인 지원정책 개선, 소상공인들의 경영환경 개선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2. 소상공인 현황분석 및 시사점

- 20대 소상공인의 비율이 코로나 이후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창업 교육 및 지원 확대가 필요함을 시사
- 제조업 창업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소공인에 대한 지원 정책은 미미함.
 - 소상공인 중심의 정책에서 소공인을 포함한 정책으로의 확대 필요성을 시사
- 저소득 소상공인(특히 1~3분위)들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두드러지게 감소하였으며 인천시에서는 그 비중이 더욱 큰 것으로 조사됨.

- 이는 인력지원, 사회보험 지원 등의 정책 수요가 높은 것에서도 볼 수 있음. 따라서 상권 활성화, 영업판로 다양화 등을 위한 정책 시행 필요성을 시사
- 정보화 지원정책에 대한 수요가 코로나 전후에 꾸준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인천시에서 다른 지역보다 수요가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사업의 정보화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이 많음을 의미하므로 이들을 위한 정책 대안 마련이 필요
- 창업 교육이나 사업계획서 작성 교육 등의 수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행하거나 수행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음.
 - 이러한 창업 교육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마련이 필요

3.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정책 현황

- 인천시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육성 및 적응정책을 주로 시행하고 있음.
 - 그러나 여전히 창업, 폐업 등의 단계에 대한 정책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이러한 분야의 지원을 향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공정거래 분야의 경우 최초에는 소상공인정책과에서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2022년에 조직이 개편되면서 업무가 이관되고 이후 지하도상가 업무가 추가된 바 있음.
 - 공정거래 업무의 경우 여전히 소상공인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향후에도 대형 유통자본 확대 시 소상공인정책과와 밀접한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직개편이 적정하였는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으로는 인천e음, 전통시장 지원, 정책금융 지원이 있으며 이러한 정책들은 코로나 이후 소상공인 지원에 효과가 있었음.
 - 이러한 정책의 경우 재원이 크게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어 지속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확대는 어려움이 있음. 향후 지원 대상이 되었던 소상공인들의 영업을 정상화될 수 있도록 서서히 연착륙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함.
- 군·구별 사업은 획일화되어 있고 지역의 특색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향후 이러한 특색을 연구하고 이를 반영한 정책 마련이 필요해 보임.

4. 소상공인 단체 시책 만족도 및 정책수요 조사

- 본 연구는 인천시의 소상공인 시책 만족도 및 정책수요 조사를 목적으로 소상공인 단체 대표들의 의견을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개선 및 발전에 참고하고자 FGI(Focus Group Interview, 이하 FGI) 연구 방법을 활용함.
- 면담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표 1] FGI 면담 결과 개요

구분		소상인	소공인	시장상인
현장의 어려움	코로나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기적인 영업 손실로 인한 영업 수익 저조 코로나로 인해 그동안 누적된 피해를 견디기 힘든 상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달에 익숙해진 소비자들의 외부 활동 감소로 매출 저하 식당 입장 인원, 시간 규제 등의 어려움이 컸음 고물가 등 외부요인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코로나 시기에 지원했던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부분이 부담
	경제 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3년간 누적된 영업 손실과 대출금 만기 도래의 이중고 고금리 등 영업 외적 요인으로 더 힘들어진 경제 소비환경 소비자들의 소비 위축 과거보다 늘어난 소상공인 수에 비해 줄어든 영업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올 7월 이자 보증 종료 시 이자율 부담 상당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금리 등으로 인한 소비 위축이 큰 어려움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비자의 편익만 고려한 무분별한 대형자본 유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업 유지하면서 지원 없이 상인회 활동하다 보니 어려움 있음 코스트코, 스타필드 등 대형자본 입점으로 큰 타격
정책 인지	금융정책	○	△	○
	기타정책	○	△	○
정책 만족도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 목소리에 대한 소극적 대응과 의견수렴 부족 소상공인 지원 조직(재단) 설립 추진은 굉장히 긍정적 현장을 잘 모르는 사람들 중심으로 한 지원 조직 구성은 문제라고 지적 특성에 따른 분류 없이 획일적인 지원으로 효율성 저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과의 소통 필요 인천시 소상공인 실태조사 동반된 정책 수립 필요 소공인 정책이 최근 확대 중이나 여전히 다른 지역 대비 부족 관내 소공인 관련 전문성을 가진 팀(인력)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에서 건의한 의견이 정책에 잘 반영되지 않음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위원회 구성이 필요 소상공인 지원정책이 많은 도움 되지만 자부담 비율(10%)이 너무 높아 부담됨

구분		소상공인	소공인	시장상인
	지원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로나 기간 중 소상공인정책과의 대응은 적절했다고 생각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대책은 사실상 대출분 인천사랑상품권이 단기간에 지역사랑상품권 역할을 한 점은 시의 상당한 노력 덕분 소비자 환경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혜택플러스 정책이 소상공인에게 희생 강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익모델 없는 인천사랑상품권 정책에는 부정적 스마트공방 사업 자부담금 지원은 긍정적 측면 소공인 대상 지원예산 부족 기술 인력양성 필요 실효성 있는 기술 교육기관 없고, 기존 교육기관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는 대규모 교육만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장 매니저 지원사업은 다른 지역에 비해 잘 지원됨 현재 지원사업은 안전 우선이라 새로운 걸 하기 어려움 매력 으뜸사업 평가 시 선정되지 않은 곳을 우선순위로 하다 보니 신청 상점가로 지원 쏠림 발생
필요 정책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구성 및 정책 반영 필요 간담회 등 현장 전문가와 공무원이 하심의회 논의할 수 있는 자리 필요 인천 내 소상공인 발전을 위한 TF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천 소상공인 실태조사 수행 후 그에 따른 정책 마련이 필요함 소상공인과 소공인 분리된 정책 필요 소상공인 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및 정례적인 회의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센터 추가 유치 필요(서구, 남동구) 정책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현장에 와서 얘기 듣는 자리가 필요함 전문성 기반으로 가려운 부분 굽어주는 정확한 정책
	지원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형 상가 유치는 신중 필요 직종 세분화한 맞춤형 직업 적성교육 시행 핀셋 지원과 더불어 상권 활성화 정책 필요 소상공인 보호, 육성정책 필요 사업주나 종사자, 무직자에 대한 직무교육이 필요 교육 점수 등의 형태로 교육수강 시 혜택 부여하는 제도 마련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첨단산업 투자 시 기존 산업과 균형을 맞추고 체계적인 투자 시행이 필요 현실적인 기술교육 필요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교육 지원 제도 필요 업종에 적합한, 찾아가는 핀셋 교육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인력 파견하여 시장 업무 도와주는 정책 확대 열심히 노력하는 상인조직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필요 아케이드 교체 사업 시 안전 시설로 접근해 자부담 면제 시장에 새로운 시설이나 편의 시설 만들 수 있는 지원 시장 자체적으로 수익사업 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 이러한 면담 결과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소상공인과 시장상인에 대한 정책과 달리 소공인에 대한 정책인지 및 참여 수준은 미흡
- 코로나에 따른 금융정책 만기와 고금리 문제로 소상공인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
- 대기업의 영향력 확대와 대형 유통자본의 진입으로 소상공인의 영업력이 약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맞춤형 교육과 보호정책이 필요
- 소상공인 교육에 대한 접근성 개선과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며, 매니저 사업의 확대를 고려해야 함.
- 전통시장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현대화 및 안전성 지원에 대한 투자 확대가 필요

- 소상공인 정책의 총괄 시스템이 부재하고, 이를 위해 소상공인진흥재단 설립이 제안되며, 이에 현장 전문가의 의견 반영이 중요함.

5. 정책적 시사점

○ 이상에서 분석한 소상공인의 현황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표 2] 소상공인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구분	소상공인 현황	정책적 시사점
소상공인 현황분석	• 20대 소상공인 비중 증가	→ • 20대 소상공인 창업 교육·지원 확대 필요
	• 제조업 창업자 증가 • 소공인 정책지원부서의 부족	→ • 소공인을 위한 정책지원부서 개편 필요
	• 평균 영업시간이 9~12시간에서 8시간으로 감소한 비율이 높음	→ • 상권 활성화 및 다양화 정책이 필요 (정보화, 디지털화, 골목상권 지원화 등)
	• 매출, 영업이익, 비용 등 양극화 심화	→ • 저소득분위 소상공인 집중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
정책 현황	• 사업계획서 작성 등의 준비사항이 부족해졌지만, 이에 대한 수요는 증가함	→ • 컨설팅 사업 확대 필요
	• 사회보험 부담경감을 위한 정책니즈 높음	→ • 영세사업자를 중심으로 사회보험 부담경감을 위한 정책 수립 필요
	• 소상공인 성장 및 육성정책에 조직 및 예산이 집중되어 있음	→ • 창업 및 폐업지원 정책에 대한 확대 필요
	• 코로나 이후 정책금융 지원, e음카드 지원 등의 급감으로 인한 어려움 가중	→ • 연락처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 필요
	• 창업 과정에서 경영 방법 및 인력 확보 어려움 가중	→ • 인력 교육 및 매칭 프로그램 필요
	• 인천사랑상품권, 전통시장지원, 정책금융 지원의 정책효과가 두드러지게 큼	→ • 정책의 다양화 필요
	•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창구가 부족	→ • (가칭)소상공인정책위원회 조직
	• 군·구별 획일화된 정책 시행	→ • 군·구별 특색을 연구하여 맞춤형 정책 시행 필요
단체 만족도 조사	• 소상공인·시장 상인의 정책이해도는 높으나 소공인은 매우 낮음	→ • 소공인 대상 정책홍보 확대 필요
	• 금융정책 만기 도래에 대한 우려가 큼	→ •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 필요
	• 코스트코, 스타필드 등 대형자본의 유입에 대한 우려 있음	→ • 공정거래 및 주변 상권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교육 수요는 있으나 생계로 인해 참여 어려움	→ • 찾아가는 교육 등 실효성 있는 정책안 마련 • 교육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
	• 전통시장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지원 요구	→ •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의 경우 자부담 비율 등을 없애는 것이 필요
	• 소상공인 정책 총괄 시스템의 부재	→ • (가칭)소상공인진흥재단 설립 필요 • 관 주도가 아닌 민간 협력체제의 재단 설립이 필요함

인천 향토음식 자원 발굴 및 육성방안

■ 서봉만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1. 연구 개요

1) 연구 목적

- 본 과제는 향토음식의 발굴과 재해석을 촉진하고 이 과정을 선도할 수 있는 인재의 육성, 효율적인 사업화를 지원하는 체계적인 제도와 인프라를 조성하는 전체적인 체계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의미를 지님
- 본 과제의 목적은 첫째, 인천시 정책사업의 대상으로서 향토음식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인천시 향토음식의 지역성을 검토함. 둘째, 인천시와 군·구에서 추진하는 향토음식 관련 조직, 정책사업 그리고 인프라 조성 현황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 셋째, 최근 향토음식 자원 발굴과 육성 모범사례 연구를 통해 인천시 향토음식 활성화 관련 시사점을 도출함. 마지막으로, 인천시 향토음식 관련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과 관련 정책과제를 제안함

2) 연구 방법

- 문헌조사와 사례연구
 - 문헌조사 : 인천시 향토음식의 종류, 발전 배경 그리고 특징을 분석함
 - 사례조사 : 타 지자체의 모범 사례조사를 통해 향토음식 관련 자원 발굴과 육성 사업 추진과정을 파악함
 - 자문회의 :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향토음식 관련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를 제시함

2. 연구 결과

1) 인천시 향토음식의 특징

- 향토음식의 확장적 정의를 통해 인천시 권역에서 전개되고 있는 다양한 향토음식 관련 활동들을 대상으로 정책사업을 발굴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함
- 인천시 향토음식에 관한 자료를 검토하여 종합한 것이 [표 1]인데,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 보편적으로 인천시 향토음식으로 인정되는 음식들은 개항 이후 전개된 문화·역사적 배경에서 탄생한 고유한 조리법과 관련이 있음
 - 냉면, 쫄면, 짜장면, 칼국수, 분식류, 해장국, 닭알탕, 추탕 등
 - 다음으로 서해안의 해산물을 활용한 독특한 조리법을 이용한 향토음식이 존재함
 - 물텀병이탕, 민어, 삼치, 밴댕이회, 별버리묵 등
 - 마지막으로 인천시가 전국적으로 유명한 산지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향토음식으로 자리 잡은 음식들이 있음
 - 꽃게, 새우젓, 강화순무, 강화사자발약썩, 섬포도, 강화인삼, 강화쌀, 강화속노랑고구마 등
 - 새롭게 인천시의 지역성을 나타내는 향토음식으로 부상하는 사례도 존재함
 - 최근에 인기를 끌고 있는 닭강정과 밴댕이회는 인천시민이 향토음식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김윤식(2021)과 인천광역시(2020)에서는 주요한 음식으로 다루지 않음

2) 인천시 향토음식 자원화 관련 정책 현황

❖ 향토음식 육성이 명시적인 정책과제로 미설정

- 향토음식 관련 조례는 없고 지역 농식품 그리고 전통음식과 문화 관련 조례를 통해 향토음식 자원화가 시도되는 상황이며, 주로 조리법 개발과 홍보·마케팅 관련 사업임

❖ 향토음식 관련 정책사업 부서가 이원화

- 농축산과는 지역 특산물 가공, 인증 판매 및 향토음식 자원 발굴 관련 정책사업을 주로 추진하며, 위생정책과는 주된 업무인 음식점 위생 점검과 함께 음식문화박람회와 지역 특색음식 발굴 사업을 부수적으로 진행함

- 향토음식을 포함하는 식품산업 육성을 주도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과 체계적인 육성방안 마련이 필요함

[표 1] 문헌에 기록된 인천시 향토음식과 지역 특산물

구분	음식명	김윤식 (2021)	인천광역시 (2020)	최영화 외 (2016)
밀가루 면·빵류	냉면	●	●	●
	쫄면	●	●	●
	짜장면	●	●	●
	칼국수		●	●
	호떡, 만두, 공갈빵	●		●
탕반류	해장국	●		●
	닭알탕		●	●
	물텀벙이(탕/짬)	●		●
	추탕	●		●
	설령탕			●
해산물	민어	●	●	●
	삼치	●	●	
	꽃게		●	
	새우젓		●	
	장어		●	
	조기			
	밴댕이회			●
	벌버리묵		●	
기타	닭강정			●
농산물	강화순무		●	
	강화사자발약쑥		●	
	(영흥)섬포도		●	
	강화인삼(막걸리)			●
	강화쌀			
	배		●	
	강화속노랑고구마			

주. 진하게 표시된 음식은 인천시 홈페이지(강화군, 옹진군 포함)에서 특산물로 홍보하는 것임. '조기'는 최영화 외(2016)에서 지역 특산물로 포함

자료: 김윤식(2021); 인천광역시(2020); 최영화·민경선(2016)

❖ 군·구별 향토음식 자원화 사업 추진 상황은 차별적

- 중구, 강화·옹진군은 적극적으로 향토음식 자원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향후 인천시 정책사업 발굴과 추진과정에서 해당 군·구와의 전략적인 연계가 중요함

❖ 지역성과 연계한 향토음식 자원화 사업 추진의 효과적인 활용 필요

- 중구를 중심으로 전개된 누들을 테마로 한 향토음식의 자원화, 강화·옹진군의 특산물을 기반의 자원화와 연계하는 효과적인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함

3) 인천시 향토음식 자원 발굴 및 육성 정책 방향과 과제

(1) 정책 대상으로서 인천시 향토음식 개념의 재정립 필요

- 식품위생 중심의 행정에서 산업 자원으로서 향토음식 활용으로 전환 필요
- 향토음식 개념의 재정립 과정에서 개방성과 유연성 확보 중요
- ① 정책과제 1 : 인천시 향토음식 자원 발굴 및 육성 조례 제정
 - 향토음식 육성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 ② 정책과제 2 : 인천시 향토음식육성위원회 구성
 - 향토음식 육성 정책 추진에 필요한 총괄 기획 조직 필요
- ③ 정책과제 3 : 인천시 향토음식 콘텐츠 플랫폼 구축
 - 시민 대상 향토음식 관련 인식과 이해도 제고를 위한 콘텐츠 기반 마련

(2) 인천시 향토음식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략 방향 설정 필요

- 인천시 향토음식 자원 발굴과 육성 정책은 공간적으로 차별화가 중요
- 인천시 향토음식 관련 인재 발굴과 육성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
- ① 정책과제 1 : 향토음식 육성 선도지구 운영
 - 향토음식 기반을 갖춘 강화군, 옹진군, 중구를 중심으로 정책사업 추진
- ② 정책과제 2 : 향토음식 테마거리 활성화 사업
 - 향토음식 테마거리 활성화를 위한 만족도 진단과 정책사업 추진
- ③ 정책과제 3 : 향토음식 자원 발굴 분야별 정책사업 추진
 - 자원화 사업별로 정책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

(3) 인천시 향토음식 육성과 연계한 새로운 산업 발굴과 육성

- 향토음식 관련 관광산업과 콘텐츠산업의 발굴과 육성
 - ① 정책과제 1 : 향토음식 관광 프로그램 발굴
 - 향토음식 노포 맛집 기행 등 음식 관광 프로그램 발굴과 홍보
 - ② 정책과제 2 : 공항과 연계한 지역 특산물 메뉴 상품화 지원
 -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기내식 및 선물용 간식 개발 지원

인천광역시 항공금융 정책 방향 연구

■ 윤석진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항공금융은 항공운송사들이 항공기를 도입하는데 투입되는 금융조달을 의미. 2017년부터 국토교통부가 항공금융 지원제도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인천시의 공항경제권 개념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인천을 중심으로 항공금융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되었음
- 또한 신항공모빌리티라고 불리는 드론, UAM, MRO 등의 산업 분야가 인천에서 성장하고 있는데, 신항공모빌리티 분야의 벤처·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지역 내에서 금융 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함
- 따라서 본 연구는 항공산업과 관련된 금융적 지원제도의 현황과 신항공모빌리티와 같은 지역유망산업에 대한 금융적 지원정책 사례를 살펴보고, 인천의 산업적·지역적 특성에 부합하는 금융산업으로서 항공금융의 특화 가능성을 검토하여 인천형 항공금융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항공금융의 이해

- 항공산업의 수요 증가는 항공금융의 성장을 수반할 수밖에 없음. 항공운송업자들은 항공기의 구매보다는 항공금융을 활용한 임대·리스로 유연한 사업 운영을 선호. 항공기 금융은 매우 국제적인 형태의 투자 방식으로 대규모 자금의 레버리지를 이용한 금융 시스템이기 때문에, 지역 차원에서 항공기 금융의 발전은 사실상 항공금융 관련 기관 유치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음
-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항공금융 관련 법제도가 완전히 정비되지 못함. 2018년을 전후로 중앙정부가 항공금융 육성을 검토하였으나, 코로나팬데믹으로 사실상 무산되고 대신

항공산업발전조합을 설립하여 항공금융 기구로서의 역할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정부 정책이 추진

- 때문에 인천시가 지역 차원에서 항공금융 육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항공산업발전조합의 설립 경과를 모니터링하면서 항공산업발전조합을 인천지역으로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해야 함. 나아가 항공사업법의 개정 추진이나 인천시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국내외 항공금융 전문기관이 인천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과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검토해야 함
- 국내에서 항공기 및 항공기부품 제조업은 주로 경남지역에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항공기 제작 금융은 사실상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될 수 밖에 없음. 따라서 인천시는 중앙정부의 전통적 항공기 제작 지원에 관심을 기울이기 보다는 드론, UAM, MRO 등 신항공모빌리티와 관련 서비스 분야에서 지역적으로 필요한 금융 투자 수단을 발굴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합리적임

3. 지역특화금융 정책 논의와 추진 사례

- 최근 서울 중심의 산업투자금융으로부터 지역이 소외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해결책으로 서울 중심의 금융산업을 지역으로 분산하는 접근방법과 지역이 자체적으로 정책펀드를 조성하여 운영하는 접근방법이 시도되고 있음. 전자의 경우에는 부산과 전북이 추진하고 있는 금융중심지 조성 정책이 대표적이며, 후자의 경우에는 인천시의 빅웨이브모펀드 운용과 대전시의 대전투자금융주식회사 설립 추진이 대표적임
- 부산시의 금융중심지 조성은 지역산업특화금융으로서 선박산업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부산은 선박금융(해양금융)을 지역 내에서 발전시키기 위하여 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산업은행의 선박금융 부문을 지역으로 유치하고 해양금융종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고, 선박도입금융의 보증 등에 특화된 전문기구로서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설립을 건의하고 지역으로 유치하였음
- 대전시가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대전투자금융주식회사는 지방정부가 100% 출자하여 투자금융을 제도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할 사례라고 할 수 있음. 특히, 지역의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금융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직접투자까지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존의 LP 방식 간접투자 정책펀드가 지방정부의 정책목표 달성에 미흡하였던 부분을 해결하는 과감한 시도라고 평가할 수 있음

4. 인천지역 항공금융 기반 조성을 위한 제언

❖ 항공산업발전조합의 기본 재산 형성에 기여를 통한 인천지역 유치

- 인천시는 재정적 지원을 통해 항공산업발전조합의 출범을 지원할 수 있음. 중앙정부는 현재 항공산업발전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참여하여 출자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정부의 자금을 우회 출자하기 위한 수단임. 인천시는 조례상 필요시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출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천공항공사의 출자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항공산업발전조합에 대한 기여가 가능함. 인천시의 재정적 기여는 건물 및 토지를 제공하는 방식일 가능성이 큰데, 이는 인천시의 정무적 역량에 따라서 항공산업발전조합을 인천지역으로 유치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

❖ 인천시가 항공산업발전조합의 사업 활동에 대한 자금 지원

- 항공산업발전조합은 조합의 사업과 관련된 업무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업무를 사업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위탁한 업무 또는 항공산업발전조합이 수행하는 비수익적 사업에 대해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용자할 수 있음. 따라서 인천시는 항공운송업체와의 협력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항공산업발전조합에 위탁하고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음. 위탁사업을 위하여 항공산업발전조합에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인천시는 지역의 항공산업을 육성·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정책수단을 확보하게 됨

❖ 항공보증기구의 별도 설립을 중앙정부에 제안

- 인천시는 항공산업 집적지로서 항공산업이 직면하는 금융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중앙정부에 항공보증기구의 별도 설립을 제안하는 것이 합리적임. 한국의 높은 대외신용도에 비례하여 한국의 항공산업도 높은 신용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적 신용보증기구가 필요함. 항공산업은 공익적 필수사업에 속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경영 악화가 발생하여도 사업을 포기하기 쉽지 않음. 따라서 민간부문에 맡겨두기보다는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별도의 보증기구 설립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인천시는 항공산업계와 함께 공적보증기구 설립 논의를 주도함으로써 항공금융 중심도시로서의 입지를 마련할 수 있음

❖ 인천 신항공모빌리티 정책펀드 조성·운영 및 테스트베드 지원

- 인천지역 신항공모빌리티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정책펀드를 운영. 모펀드는 인천시가 출자하여 정책펀드 활용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자펀드 운용사는 펀드 결성 총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인천지역 기업에 투자하는 약정으로 관내기업이나 관내로 이전하는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직접투자를 병행할 수 있도록 정책펀드 운용의 유연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인천공항, 로봇랜드, UAM실증노선 등의 인프라는 인천지역에서만 누릴 수 있는 장점이기 때문에, 금융적 투자와 병행하여 테스트베드 활용 기회가 제공된다면 타지역 벤처기업들이 인천으로 이전하는 확률이 높아질 수 있음

❖ 항공금융 관련 조례의 개정

- 「인천광역시 항공산업 지원·육성 조례」 상에 항공금융을 적시함으로써 인천시가 항공금융에 대한 유치 및 지원 의지가 있다는 것을 표명하는 것이 바람직함. 항공금융을 지역특화산업으로 하겠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으며, 향후 중앙정부가 항공금융 관련 법제도를 정비할 때 상향적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함
- 인천지역에는 금융산업 일반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한 것은 없으며, 인천경제자유구역에 금융중심지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의 「인천경제자유구역 금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만이 시행되고 있음. 항공금융의 관점에서 보면, 영종·청라·송도는 항공사들의 금융적 투자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지역과 상당히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인천시는 인천경제자유구역만을 금융산업 육성의 대상지로 하는 조례를 재검토하여 금융산업, 특히 항공금융의 입지 선택의 폭을 넓히는 제도적 개선을 고려해야 함

❖ 금융기관, 항공산업계, 전문가그룹 네트워크로 항공금융 정책포럼 운영

- 인천시가 항공산업계와 협력하여 항공금융 정책포럼을 구성·운영할 것을 제안함. 항공금융 활성화의 필요성이 민간부문에서만 부분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인천시가 항공금융 정책포럼을 조직하고 운영함으로써 향후 항공금융의 지역 유치와 중앙정부의 정책 논의를 선도해야 함. 이를 통해 인천을 중심으로 항공금융 이해관계자 네트워크를 결집하여 항공금융 관련 정책 의제를 대표하는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고 항공금융이 인천의 지역특화금융으로 인식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

인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본 방향과 과제

■ 김수한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 (연구 목적) 인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핵심 기제인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을 위한 방향과 과제를 제시
- (연구 구성) ①글로벌 도시 및 도시경쟁력 개념 ②글로벌 도시경쟁력 비교 ③해외도시외교 사례 및 시사점 ④인천 도시외교 및 네트워크 현황 파악 ⑤SWOT 분석을 통한 방향 과제 제시

1. 인천의 도시경쟁력 진단

○ 동아시아 주요 도시- 인천 지속가능경쟁력 세부항목 순위(2021-2022)

도시	국가/지역	지속가능 경쟁력						
		순위	변동	경제활력	환경복원력	사회포용성	혁신기술	글로벌 연결
도쿄	일본	1	=	73	157	1	1	5
싱가포르	싱가포르	2	=	8	1	31	19	2
홍콩	중국	5	▼1	30	3	98	18	6
오사카	일본	7	▲3	83	266	6	10	27
선전	중국	9	=	22	13	49	14	8
서울	한국	13	=	115	298	2	5	28
타이베이	대만	14	▲10	78	313	12	63	81
상하이	중국	30	▲3	47	284	9	11	1
베이징	중국	35	▲12	28	492	13	2	7
히로시마	일본	38	▲1	224	252	10	154	342
광저우	중국	49	▲20	64	265	30	26	11
후쿠오카	일본	53	▼2	110	201	4	167	174
인천	한국	58	▼4	146	70	36	114	278

자료: 「Global Urban Competitiveness Report(2021-2022)」 자료 활용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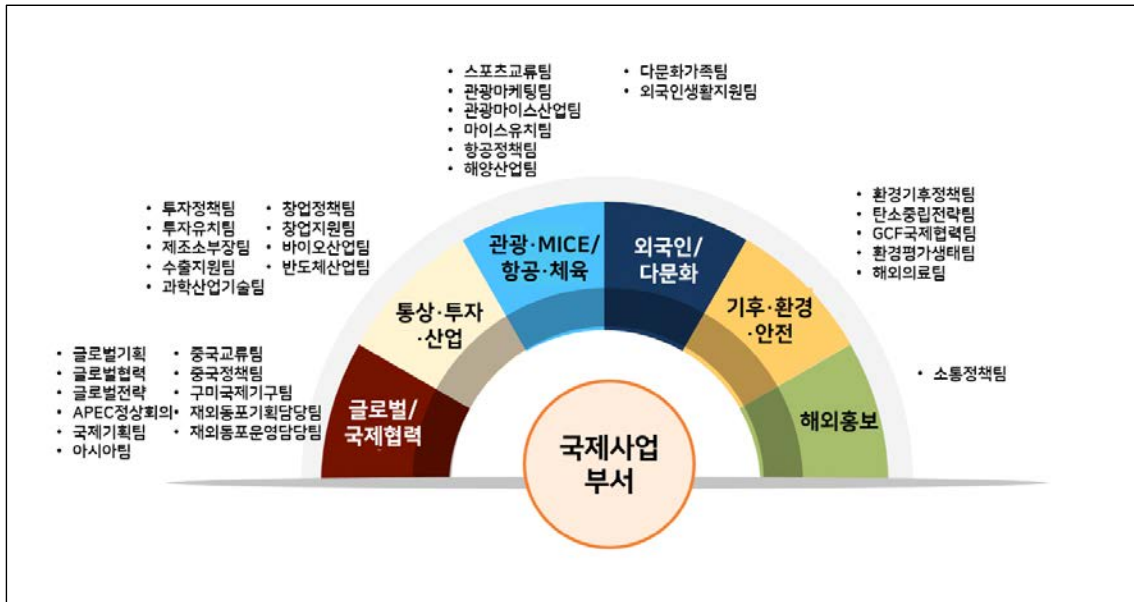
2. 해외 도시외교 사례 및 인천의 특징

○ 해외 도시외교 유형 및 사례

유형	국가별 사례
글로벌 이슈 주도 및 거버넌스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런던은 C40 이니셔티브를 통해 글로벌 환경 도시의 역할을 강조 • 뉴욕은 연방 정책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의제, 특히 기후변화와 지속 가능성에 적극적으로 참여 • 파리는 문화, 개발 및 환경 이니셔티브를 통해 국가 외교를 보완하는 보다 자율적인 접근 방식 • 브뤼셀은 가치 중심의 개발 협력과 부처 간 효율적인 조정에 중점을 두고 유럽연합의 수도의 지위를 활용하여 유럽연합 차원의 외교 관여 • 제네바는 세계 평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행위자와 조직을 연결하고 도시 외교에 독특한 접근 방식을 제공하는 평화 플랫폼 구축
소프트 파워와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마는 특히 관광 부문에서 국제적 영향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풍부한 문화유산과 역사를 통해 소프트파워를 활용하는 데 중점 • 베를린은 국제적 가시성을 높이기 위해 고유한 정체성과 매력을 활용하여 공공외교와 도시 브랜드화를 강조
경제적 발전 지향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쿄는 경제적 어려움 이후 국제적 지위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상하이 는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에 맞춰 경제 협력을 강조

자료: 제주평화연구원 도시외교 시리즈 (2020) 내용 정리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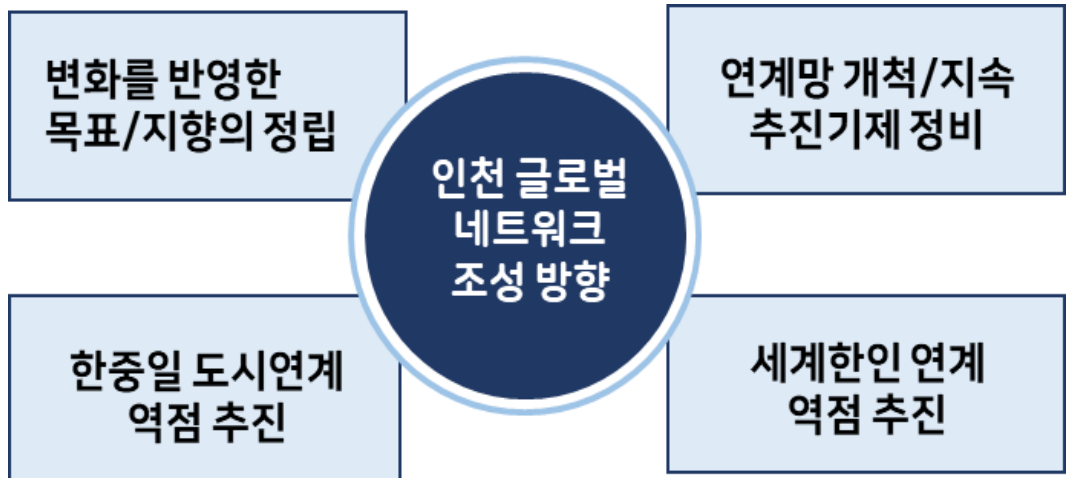
○ 인천시 국제부서 업무 특성별 분류 (6대 분야)



○ 인천 글로벌 네트워크 조성 및 강화를 위한 SWOT 분석

외부환경 내부역량		기회(O)	위협(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전통안보 이슈의 대두 • 지방외교 논의의 확대 • 재외동포 중시의 국정기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복합위기 • 미중갈등과 진영화 • 동아시아 역내 안보 불안
강점 (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화 지향의 시정 • 풍부한 사업 경험 • 다양한 국제교류 기반 	SO전략	ST전략
		도시외교 이니셔티브 강화 세계한인 협력네트워크 조성	한중일 도시네트워크 선도 다양한 도시외교 전개
약점 (W)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연결성 취약 • 권역/분야의 한정 • 누적적 사업 조직 	WO전략	WT전략
		비전통안보 반영한 지향 정립 재외동포+국제 조직 체계화	국제화 전략 정비 한시기구의 한계 극복

○ 인천 글로벌 네트워크 조성 방향과 과제



재외한인과 연계한 경험의 방향과 한상비즈니스센터의 역할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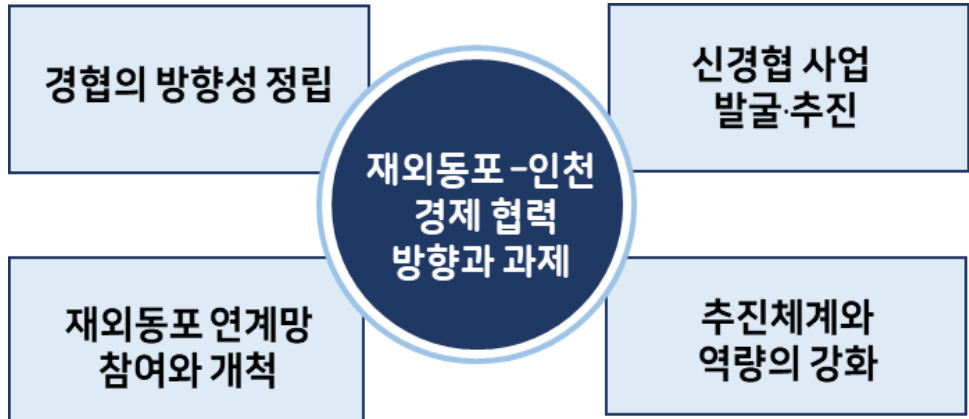
■ 김수한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 (연구 목적) △인천 산업 특징 및 미래 발전 비전에 부합하는 재외한인과 연계한 경제 협력의 방향을 제시 △경협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전문기구인 한상비즈니스센터의 역할을 초보적으로 검토
- 재외한인과 연계한 경험 추진을 위한 SWOT 분석

외부 환경 내부역량		기회(O)	위협(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포 중시의 정부 기조 • 변화양상의 한인단체 활동 • 이민정책의 움직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포·단체의 분화 • 동포 정부기구의 분산 • 비경제 위주의 정부사업
강점 (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iz 우수 여건 • 디아스포라 자산 • 동포친화의 정책 환경 	SO전략	ST전략
		호혜적 신산업 경험 전개 차세대 Biz·교육의 융합 추진 동포 이민정책 시범사업 선도	연계망의 다각화·체계화 광역연계망 조성·중추 담당 문화·교육·Biz 연계 PG 추진
약점 (W)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험·연계망 미비 • 지역 고유 사업 미비 • 단기성과 중시 경향 	WO전략	WT전략
		동포 네트워크·플랫폼 참여 지역맞춤 사업 기획·추진 중기전략수립·단계별 관리	역점사업 실시·성과 단계적 확산 전문추진기구의 역할 정립 지역의 추진역량 강화

○ 재외한인과의 경제 협력을 위한 방향과 과제

방향	주요 과제
재외한인 경험의 방향성 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재외한인 모두에게 호혜적인 지속가능한 경험 전개 • 인천 지역발전에 부합하는 맞춤형 사업을 통한 내실화 • 역점사업의 시행을 통한 재외한인 경험의 선도
창의적 新 경험사업의 발굴과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세대 Biz·교육의 융합 추진 • 문화·교육·Biz 연계 PG 추진 • 동포 이민정책 시범사업 선도
재외동포 네트워크 참여와 개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계망의 다각화·체계화 개척 • 세계한인경제인 네트워크·플랫폼 참여
추진체계와 역량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서비스)-인천(본청)-시흥(교육) 연계망 조성·중추 담당 • 재외동포웰컴센터·한상비즈니스센터 등 전문기구의 역할 정립 • 인천의 민관산학 협력을 통한 추진역량 강화 • 재외동포협력 5개년 계획의 수립 및 연도별 성과 관리



○ (가칭) 인천 한상비즈니스센터 주요 기능 및 사업(안)

분야	내용
정보조사·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지역별 재외동포 경제·비즈니스 정보 조사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인천 비즈니스 정보 제공 세계한인 경제인을 대상으로 국가·지역별 투자유치 IR
상담·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지역별 재외동포 투자유치 종합 상담
파트너 연결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계한인경제인 조직·행사 등 플랫폼 연계한 수출·투자·채용 사업 재외동포 기업인 방한 출장 지원
프로젝트 참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발프로젝트 등에 대한 재외동포 기업 참여 지원 재외한인 유턴기업 지원
역량강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세대동포 창업·유학 지원 차세대동포 및 인재의 취업·이민 지원 방한 재외동포 기업·단체 공간/디지털 지원 교육·연구개발 등 협력

○ (가칭) 인천 한상비즈니스센터 운영방식의 장단점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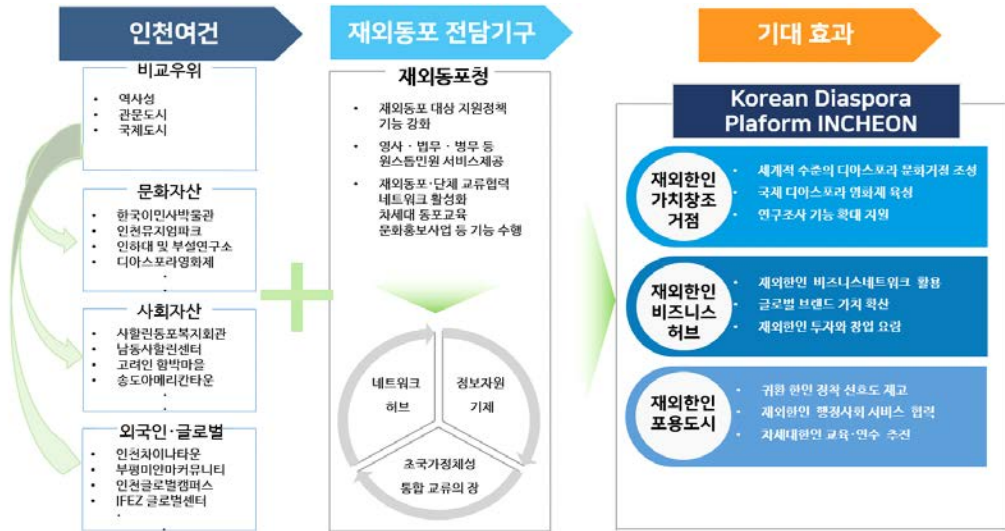
	운영방식	장점	단점
1안	시/IFEZ 조직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조직 활용으로 행·재정적 수월 성과 운영의 안정성 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외동포 특화 신사업 발굴 및 추진 한계
2안	재외동포웰컴센터 기능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타 기능과의 연계 효과 기대 '24. 하반기 센터 출범과 함께 통합 운영 추진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즈니스 특화 업무 및 연계망 추진 한계
3안	인천상공회의소 등 외부 위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경제산업 여건에 부합하는 사업 발굴 기대 상회의 해외사업과의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리·감독의 제도적 비용 조직 신설 등에 따른 시간 소요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 김수한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 박찬열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 **연구 목적** : 인천에 재외동포청을 유치할 경우 기대되는 사회·경제적 효과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인천 시정에 필요한 기초정보 제공
- **‘재외동포청’의 역할 및 기능** : ① 글로벌 한인네트워크의 허브 ② 정보·자원의 접근 및 협력의 기제 ③ 초국가적 정체성 통합·교류의 장
-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의 기대효과**
 - 인천의 디아스포라 장소성·지역자산 + 재외동포청을 통해, 인천의 미래발전상으로 재외한인 플랫폼도시 (Korean Diaspora Platform City) 제시



- ✓ ① **재외한인 가치 창조 거점의 조성** : 최초 이민 출발지라는 역사성 및 관련 사회문화 자산을 활용하여 재외한인 가치창조의 거점 조성. 재외동포청과 인천은 재외한인의 역할과 의미를 되새기고 새로운 미래 가치를 창출, 이를 대내외에 확산시키는 역할 수행
- ✓ ② **재외한인 비즈니스 허브 역할 수행** : 국제도시로서 인천이 갖는 비교우위와 재외동포청의 네트워크 기능이 결합할 경우 재외한인 비즈니스 허브 조성 기대. 재외동포청의 유치를 통해 인천이 재외한인 비즈니스 허브로 거듭날 경우, 인천은 재외한인의 경제활동을 돕는 한편 재외동포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활용한 선순환적 지역 경제발전 구조의 확립 기대
- ✓ ③ **재외한인 포용도시로 자리매김** : 인천은 지구촌 한인의 행정·사회 서비스 종합기관인 재외동포청 유치를 통해 귀환 한인이 선호하는 정착지이자 그들의 가족이 정체성을 회복하고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요람으로서의 역할 수행. 재외동포 차세대 집단의 정체성 회복 증진을 위한 다양한 교육·연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재외한인들이 선호하고 매력을 느끼는 도시로서 자리매김

ChatGPT 활용한 문답을 토대로 저자 정리하여 작성

○ 재외동포청 유치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정량분석

- 현 재외동포재단의 사업 내역을 기반으로 회계가치로 추정이 용이한 정량적 효과 분석 [☞] ▲공공사업 투자 ▲MICE 개최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국한하여 산업연관분석

[표 1] 재외동포청 유치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구분	전지역	지역내(인천)	타지역(인천외)
생산유발효과 (백만원)	132,802	96,799	36,003
부가가치유발효과 (백만원)	73,937	58,684	15,252
취업유발효과 (명)	1,372	1,109	263

자료: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지역표(2015)를 활용한 연구진 분석 결과

주: 현 재외동포재단의 사업내용과 MICE 행사 실적 등 기초하여 개략 추정된 수치임. 실제 규모와는 오차가 있을 수 있음

- 인천시 글로벌 브랜드 가치 제고, 디아스포라 문화 자산 활용도 및 가치 증대 효과는 비시장가치(non-market value)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 필요

글로벌 혁신산업도시 조성을 위한 전략산업 창업 활성화 방안

■ 서봉만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 본 연구는 인천시를 글로벌 혁신 허브로 성장시키기 위한 전략산업 분야 창업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주요 목적
- 국내외 창업생태계는 전반적으로 정체를 경험하고 있으나, 딥테크 분야를 중심으로 한 성장세는 유지
- 인천시 전략산업에 속하는 바이오, 로봇, 디지털산업은 향후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산업별 동향과 창업생태계의 발전 수준은 상이
- 전략산업별로 차별화된 창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
- 전략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한 인천시 거버넌스 정비를 통해 미래산업국 산업별 담당부서에 창업지원 인력을 배치하고, 창업벤처과와 긴밀한 협력체계 확립하는 것이 중요
- 인천테크노파크와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그리고 인천시 간의 협업 체계를 확립하고 기관별 특성화 유도 필요
- 바이오산업은 K-바이오 랩허브와 연계한 창업생태계 활성화 방안 도출과 인천형 오픈이노베이션 창업생태계 조성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
- 로봇산업은 지역 수요와 연계한 창업생태계 육성이 전략적으로 중요
- 소프트웨어산업은 KT와 연계한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한 창업기업의 육성과 소프트웨어 창업가 성장을 지원하는 개발자 커뮤니티 활성화가 필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을 통한 기업 유치 인센티브 개선 방향 검토

■ 윤석진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 경제자유구역에서 법인세·소득세 감면 혜택이 사실상 폐지된 이후 보조금을 포함한 현금지원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외국인투자 유치 인센티브 제도가 개편되고 있음. 그러나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수도권 경제자유구역으로서 현금지원 인센티브 확보에도 일정한 제약이 있음. 따라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을 포함한 관련 외국인투자촉진 관련 법률들에 대한 개정 논의가 필요함
-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법인세·소득세의 감면을 일정한 조건에 따라 제한적으로 부활시키는 법 개정을 제안함. 유해조세 논란이 없도록 경제자유구역에서는 국내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 모두에게 동일하게 낮은 법인세·소득세를 적용하여 경제특구의 본래적 기능을 확보하도록 함. 또한 경제자유구역이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 산업위기지역, 고용위기지역 등에 해당할 경우 한시적으로 조세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법 개정도 추진할 수 있음
- 보조금 및 현금 등의 자금 지원에 관하여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에 제한을 두는 경제자유구역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은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삭제되는 것이 바람직함. 더불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의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에서 수도권에 대한 재정 부담 비율이 조정되어야 함. 최소한 경제자유구역법 상의 핵심전략산업에 대해서는 수도권도 비수도권과 동일한 수준의 국가 지원을 확보하도록 운영요령이 개정되어야 함
- 인천시의 투자유치 관련 조례에 대한 개정도 요구됨. 특히, 현금지원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기준, 대상, 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되어야 하며, 인천시의 전략산업을 명시하고 전략산업에 대한 특례적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인센티브 제공의 기준과 대상을 명확히 할 수 있음

글로벌네트워크 중심도시 발전모형 연구

■ 윤석진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 글로벌생산네트워크는 세계지역 간의 상품, 서비스, 인재의 흐름을 연결하는 물리적 공간이 필요함. 이러한 지역은 세계 경제와 배후지역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위치와 우수한 물류·교통 인프라를 기반으로 국제무역과 해외투자의 거점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글로벌 게이트웨이(Global Gateway)라고 명명
- 세계경제-관문도시-경제회랑을 기본구조로 하는 글로벌 게이트웨이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미국 뉴욕이며, 발전의 성숙 단계에 이른 도시로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과 벨기에 안트베르펜, 인천과 같이 도약 단계로 진입한 도시는 말레이시아 페낭, 새롭게 부상하는 도시로는 베트남 하이퐁 등이 있음
- 이러한 글로벌 게이트웨이 지역들의 발전전략은 물류·교통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속도의 경제를 확보, 산업적 분업 관계에 있는 지역들 간의 연결성 확보, 수준 높은 생산자서비스의 공급하는 비즈니스 환경 조성,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고부가가치산업 육성 등을 특징으로 함
- 인천이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글로벌 게이트웨이 발전전략 활용 방안은 다음과 같음. ① 공항과 항만을 연계하는 복합 물류 체계에 대한 투자, ② 도시의 경제를 넘어서 국내외적으로 지역 간의 협력관계 구축, ③ 지역자산에 적합한 전략산업의 선정과 전략산업의 질적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인재양성 투자 확대, ④ 외국인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책 강구, ⑤ 인천지역의 산업 구조에 적합한 생산자서비스의 선별적 특화 육성

인천지역 생산자서비스업의 특성 분석 및 활성화 방안

■ 박지은 부산대학교 강사

■ 윤석진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 생산자서비스업은 제조업 및 다른 서비스업을 지원하는 중간재 역할을 담당하면서 생산과정의 다양한 단계에서 가치를 증대시키는 활동으로 정의됨. 인천지역에서 생산자서비스업 활성화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실제로 인천지역 생산자서비스업의 발전 정도와 분포 특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음
- 인천지역은 7대 광역시 중 울산을 제외하고 지역총생산에서 차지하는 생산자서비스업의 비중이 가장 낮음. 2020년 종사자 수 기준 수도권 3개 지역에서 생산자서비스업의 입지계수는 인천 0.73, 서울 1.89, 경기 0.91로 분석됨. 즉, 인천은 전반적으로 생산자서비스업의 미발달되어 있으며, 생산자서비스의 공급을 서울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음
- 인천지역 생산자서비스업의 긍정적인 발전 특성도 확인됨. 인천지역 생산자서비스업은 고용 규모, 매출액, 부가가치 측면에서 양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사업서비스업과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눈에 띄는 성장을 보였음. 또한 송도동과 청라동을 중심으로 생산자서비스업의 집적 경향도 확인할 수 있음
- 인천의 역내 생산자서비스 공급의 활성화를 위해서 다음의 네 가지 방안을 제시함. ① 인천시는 지역에서 공급 여건이 양호해지고 있는 사업서비스업과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업종을 특화. ② 지역 내에서 집적도는 낮지만 전국 평균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생산자서비스 업종을 유망산업군으로 지정하여 관리. ③ 생산자서비스의 집적도가 높아지고 있는 청라동과 송도동 지역에 비즈니스서비스 클러스터 조성. ④ 생산자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이 지역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정주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

재외한인과 함께하는 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 정비 방향 제언

■ 김수한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1. 배경과 목적

-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도시’를 시정 목표로 하는 인천시는 재외한인 글로벌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재외동포청 유치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 왔음
- 일종의 재외한인 앵커기관인 재외동포청과 인천의 지역자산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보다 큰 사회·경제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 차원의 선제적 준비가 긴요함
- 본 보고서는 재외동포청 유치를 통해, 인천시가 재외한인과 함께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지를 살펴보고자 함

2. 시사점 및 제언

- 재외동포 지원 업무와 인천의 글로벌 시정기조가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제도 정비가 필요함
 - ① 비전·목표를 반영한 국제 기본조례의 정비, 향후 정부 재외동포 기본법 제정에 보조를 맞춰 조례 제정
 - ② 인천 글로벌 도시 조성을 위한 위원회 정비, 총괄부서 중심성 강화, 전문기관 신설 등의 추진체계 마련
 - ③ 인천시 국제화 5개년 기본계획 정비 및 내실화
 - ④ ‘재외한인 지원 및 글로벌도시 기금’ 조성 및 운용
- 2023년 3월 기준, 인천 본청에서 국제사무를 다루고 있는 부서는 9개 실·본부·국의 18개 과, 최소 30개 팀에 달하면 이를 총괄 조정할 수 있는 제도 등이 충분치 않은 상태임. 재외동포청 유치에 따른 제도 정비를 그동안 누적적으로 확대된 인천 국제사무 정비의 기회로 활용하고 글로벌 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발판으로 삼아야 함

인천지역 반도체산업 현황과 지원정책 수요 검토

■ 윤석진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1. 배경과 목적

- 반도체산업은 인천지역 수출 1위 품목으로 성장하였음. 특히 후공정 패키징 분야에 특화되어 있으며 비메모리반도체 분야와 반도체 제조용 기계 분야에서 전국 3위 수준의 인력 분포를 나타냄
- 인천반도체포럼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조사 결과, 산업용지의 공급과 연구개발인력 양성에 대한 지원정책 수요가 높음. 또한 혁신자원과 지원제도의 지역내 발전 정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부정적 평가가 우세
- 연구개발 활성화의 고리가 될 수 있는 반도체설계전문회사의 유치·육성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반도체 산업정책의 지역 거버넌스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특징적으로 제시되었음

2. 정책제안

- 반도체산업 지원체계 및 거버넌스 개선: 인천테크노파크 반도체융합산업센터가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전담지원기관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을 추가로 배정하고, 인천반도체포럼은 산학연관 협력 네트워크로서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
- 팹리스 유치·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정책펀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팹리스 벤처기업들에게 필요한 투자금을 지원하고, 팹리스 기업들의 양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 파운더리를 구축
- 후공정 패키징 분야 연구개발 활성화: 반도체 첨단패키징 관련 대규모 연구개발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지역의 산학연관이 공동으로 준비하며, 중앙정부에 첨단패키징연구기관 설립 필요성을 건의

글로벌 게이트웨이 발전 전략과 뉴홍콩 프로젝트에 대한 시사점

■ 윤석진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1. 배경과 목적

- 민선 8기 인천광역시 정부는 인천이 초일류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으로 '뉴홍콩시티 프로젝트'를 추진. 뉴홍콩시티 프로젝트는 물류 인프라와 산업단지경제특구를 갖춘 도시가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에서 국제무역과 해외투자의 거점으로 발전하는 '글로벌 게이트웨이' 발전 이론으로 뒷받침될 수 있음
- 본 보고서는 글로벌 게이트웨이의 발전에 대한 논의를 검토하여 뉴홍콩시티 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와 역사적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현재 마스터플랜 수립 단계를 시작한 뉴홍콩시티 프로젝트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2. 정책제안

- 글로벌 게이트웨이 발전 전략에서 활용되는 관문(gateway)과 회랑(corridor)의 개념을 뉴홍콩시티 프로젝트에 적용하여 다중심지 개발 계획보다는 지리적 연계성에 초점을 맞춘 공간적 산업배치계획을 구상
- 초격차의 경쟁력을 가진 글로벌 게이트웨이 지역은 혁신생태계 조성과 수준 높은 비즈니스 서비스 공급에 강점을 가짐, 인천의 뉴홍콩시티 프로젝트에서도 연구개발-인재양성-생산자서비스의 소프트 인프라 확장 계획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 인근 지역과 공동으로 산업적 분업·협업 정책을 협의하고, 산업적 연관성이 높은 지역과의 연계 교통망을 정비하고, 글로벌 게이트웨이 지역들과의 무역·투자 파트너십 및 교류 활성화하는 방안을 보완
-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인센티브 대상 확대, 법인세·소득세 감면 인센티브의 제한적 부활, 현금 지원 제도의 확대 등의 요소들을 고려하여 제도적 개선 또는 특별법 제정 추진

인천지역 반도체산업 현황과 지원정책 수요 검토

■ 윤석진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1. 배경과 목적

- 반도체산업은 인천지역 수출 1위 품목으로 성장하였음. 특히 후공정 패키징 분야에 특화되어 있으며 비메모리반도체 분야와 반도체 제조용 기계 분야에서 전국 3위 수준의 인력 분포를 나타냄
- 인천반도체포럼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조사 결과, 산업용지의 공급과 연구개발인력 양성에 대한 지원정책 수요가 높음. 또한 혁신자원과 지원제도의 지역내 발전 정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부정적 평가가 우세
- 연구개발 활성화의 고리가 될 수 있는 반도체설계전문회사의 유치·육성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반도체 산업정책의 지역 거버넌스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특징적으로 제시되었음

2. 정책제안

- 반도체산업 지원체계 및 거버넌스 개선: 인천테크노파크 반도체융합산업센터가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전담지원기관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을 추가로 배정하고, 인천반도체포럼은 산학연관 협력 네트워크로서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
- 팹리스 유치·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정책펀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팹리스 벤처기업들에게 필요한 투자금을 지원하고, 팹리스 기업들의 양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 파운더리를 구축
- 후공정 패키징 분야 연구개발 활성화: 반도체 첨단패키징 관련 대규모 연구개발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지역의 산학연관이 공동으로 준비하며, 중앙정부에 첨단패키징연구기관 설립 필요성을 건의

II

2023년도 연구결과 요약집

환경·안전 분야

- 기초연구

인천 연안 미세플라스틱 특성 연구

- 기획연구

한강하구 탄소흡수력 현황 및 관리방안

인천광역시 화학물질 취급·배출 특성 연구

인천광역시 온실가스 배출의 탈동조화 및 요인분해 연구

- 센터기획연구

지역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연구

인천광역시 탄소중립을 위한 시민참여형 행동계획 및 이행평가 연구

인천광역시 도로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공간 할당을 위한 방법론 연구

인천 안전도시 이미지 강화 정책 방안:

인천광역시 안전문화 확산 및 정착 방안

인천광역시 지역안전지수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인천광역시 도시침수 위험성 분석 및 피해 저감방안 연구

- 정책연구

인천광역시 중대시민재해 주요 이슈 및 대응 방안

인천광역시 환경교육센터 발전방향 연구

- 현안연구

소래습지국가도시공원 추진을 위한 연결성 강화방안

인천광역시 주민안전협의체 구축 방향

인천광역시 주소정보시설을 활용한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발전 방안

- 현안연구

개발제한구역내 자연환경복원 후보지 도출

인천광역시 지진 대응 이슈 및 정책 방향

RE100의 주요 동향 및 시사점

인천 연안 미세플라스틱 특성 연구

■ 최여울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1.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연안의 미세플라스틱은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는 오염원으로, 인천 연안에 분포하는 미세플라스틱의 영향은 간과할 수 없음. 하지만 인천 연안을 대상으로 한 미세플라스틱 연구는 현재까지 미비한 실정임.
- 인천시는 2020년부터 연안의 미세플라스틱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지만, 데이터의 부족 및 자료의 활용도가 낮아 수생태계 영향에 관한 연구가 미흡함.
- 인천 연안의 경우, 다양한 배출원으로부터 미세플라스틱이 유입되기 때문에 지역 특성을 반영한 미세플라스틱 연구가 필요함.
- 한강, 인천항 등 배출원으로부터 인천 연안으로 미세플라스틱이 유입될 수 있음.
-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시민의 건강과 연안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연안에 분포하는 미세플라스틱의 특성을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함.

2)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수생태계 관점에서 미세플라스틱 연구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인천 연안에 분포하는 미세플라스틱의 관리 전략을 파악하고자 함. 이를 위해 인천 연안의 미세플라스틱 특성을 분석하여 수생태계 보호를 위한 미세플라스틱 저감 방안을 제언함.

3) 연구 범위 및 방법

- 인천 연안의 미세플라스틱을 규명하기 위해 다음의 연구 흐름을 반영함.
 - 정의 : 미세플라스틱 개념

- 현상 : 인천 연안의 미세플라스틱 분포
- 기원 : 인천 연안의 미세플라스틱 유입원
- 예측 : 인천 연안의 미세플라스틱 위해성
- 전략 : 인천 연안의 미세플라스틱 저감 방안

2. 미세플라스틱 특성

1) 미세플라스틱 정의 및 종류

- 플라스틱은 폴리머와 첨가제가 혼합되어 원하는 모양으로 가공할 수 있는 합성수지로, 입자의 크기가 5mm 이하인 플라스틱을 미세플라스틱(microplastic)으로 분류함.
- 미세플라스틱은 생성 유형에 따라 1차 미세플라스틱과 2차 미세플라스틱으로 구분함.
 - 1차 미세플라스틱은 인위적으로 작은 크기의 입자를 제조하여 제품(세정제, 화장품, 치약, 연마제, 페인트 등)에 함유됨.
 - 2차 미세플라스틱은 플라스틱 제품이 분해 과정을 거쳐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한 형태를 의미함.
- 미세플라스틱은 산소, 질소, 황 원자 등이 부착된 탄소 원자 사슬이 반복적으로 연결된 구조이며, 대표적인 성분은 polypropylene(PP), polyethylene(PE), polystyrene(PS) 등이 있음.

2) 미세플라스틱 연구 동향

- 기존 연구에 따르면 하천 상류보다는 하류에서, 본류보다는 지류에서 미세플라스틱의 농도가 높게 나타남.
 - 하천 하류에는 비교적 작은 크기의 미세플라스틱이 분포하였고, 주로 2차 미세플라스틱임을 확인함.
-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된 미세플라스틱은 공정을 거쳐 제거되지만, 일부 미세플라스틱은 제거되지 않은 상태로 방류수로 배출됨.
 - 크기가 작은 미세플라스틱은 상대적으로 하수처리 공정을 통해 제거가 어려움.
- 국내외해역 주변의 산업활동, 주거 형태, 육지로부터의 거리 등의 특성에 따라 미세플라스틱의 분포 및 성분이 달라짐.
- 미세플라스틱은 대기, 수계, 토양, 생물체 등에 잔류하여 인체 및 생태계에 독성 영향을 일으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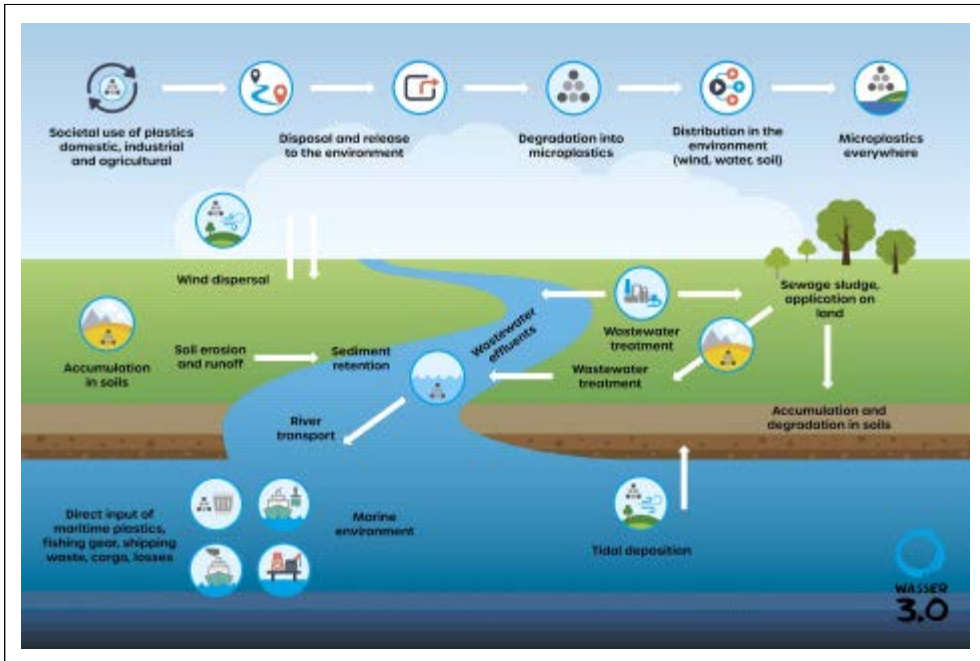
3. 인천 연안 미세플라스틱 분포

- 한강 및 인천 연안을 중심으로 수행한 기존 연구 10종을 인용하여 미세플라스틱의 분포를 파악함.
 - 지표수를 중심으로 동일 지점의 미세플라스틱 농도는 평균값을 산출하였고, 시료 내 미세플라스틱 크기는 100~300 μ m 이상으로 설정함.
 - 연구 대상 지점은 다음과 같음: 한강 상류, 한강 중·하류, 임진강, 김포-강화도-불음도 인근 연안, 영종도-인천 북항 인근 연안, 덕적도 인근 연안
- 조사 결과 임진강의 미세플라스틱 농도가 가장 낮았고, 강화도 인근 연안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미세플라스틱은 한강 상류 3.48, 한강중·하류 3.4, 임진강 1.71, 강화도 인근 6.59, 영종도 인근 4.06, 덕적도 인근 3.01개/ m^3 로 분포함.
 - 한강 상류는 미세플라스틱 공급원으로 작용하는 팔당댐의 영향, 한강 중·하류는 주거 및 산업 지역을 관통하여 배출되는 미세플라스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함.
 - 임진강은 인근에 오염원이 많지 않아 다른 지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세플라스틱의 농도가 낮음.
 - 육상 활동으로 발생한 미세플라스틱이 한강에 유입되어 하구에 축적된 결과, 강화도 인근 연안의 미세플라스틱 농도가 높게 관찰된 것으로 추정함.
 - 영종도 인근 연안은 하수처리장 및 육상 기인 미세플라스틱의 영향을 받으며, 덕적도 인근 연안은 육상에서 비교적 먼 거리에 위치하므로 미세플라스틱의 농도가 낮음.

4. 인천 연안 미세플라스틱 유입원

- 연안에 잔류하는 미세플라스틱의 유입원은 육상 기인과 해상 기인으로 구분함.
 - 육상 기인은 하수처리장 및 육상 배출 폐기물이며, 해상 기인은 어업 활동 및 선박운송으로 분류함.
- 인천의 하수처리장은 총 14곳이며 이 중 해양으로 방류하는 하수처리장은 8곳임.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해당 하수처리장으로부터 인천 연안으로 유입되는 미세플라스틱의 양을 추정한 결과, 연간 약 3조 개, 18톤의 미세플라스틱이 연안으로 방류되는 것으로 나타남. 성분 및 형태 분석을 통해 하수처리장에서 방류되는 미세플라스틱은 주로 산업 및 가정 활동을 통해 생성된 것임을 확인함.

[그림 1] 미세플라스틱의 해양 유입경로



자료(출처): WASSER 3.0

- 한강은 하수 및 폐수 방류, 도시, 산업, 주변 하천 등을 통해 유입된 미세플라스틱이 해양으로 이동하는 경로임. 시나리오에 따라 한강에서 인천 연안으로 유입되는 미세플라스틱은 연간 약 30조 개, 80톤으로 추정함.
- 인천 연안에 잔류하는 쓰레기의 76.5%는 플라스틱이며, 어업 활동과 관련이 있는 스티로폼 제품(부표, 용기 등)과 어업용 밧줄의 비중이 높음.
 - 스티로폼 부표에서 발생하는 미세플라스틱은 발포폴리스티렌(Expanded Polystyrene, EPS)으로 나타남.
- 본 연구에서 조사한 한강 상류, 한강 중·하류, 임진강, 강화도 인근, 영종도 인근, 덕적도 인근의 미세플라스틱 성분은 주로 PE(polyethylene), PP(polypropylene), PS(polystyrene)가 검출됨.

- 해당 성분은 플라스틱 제품 제조 시 가장 흔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환경에 잔류할 가능성이 높음. 또한 물보다 밀도가 작거나 비슷한 저밀도 입자이므로, 표층을 수집하는 모니터링 분석 시 많이 검출될 수 있음.
- 인천 연안(강화도, 영종도, 덕적도 인근)에서 유의미하게 검출된 미세플라스틱 성분은 dye (페인트), EVA(ethylene vinyl acetate), PS 입자로 나타남.
 - 선박 코팅제로 사용하는 페인트 입자는 인천항 및 선박의 이동 경로를 따라 영종도와 덕적도 인근에서 검출됨.
 - 방수용 플라스틱, 발포 고무 등 제품에 사용하는 EVA 입자는 육상 배출 폐기물로부터 풍화작용을 거쳐 연안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함.
 - 스티로폼 부표 성분인 PS는 어업 활동을 통해 발생하며, 덕적도 인근 지점에서 높은 비율로 분포함.

5. 인천 연안 미세플라스틱 위해성

- 위해성은 환경으로 배출되는 화학물질이 생태계에 유해한 영향을 줄 가능성을 의미하며,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노출량에 의해 결정함. 본 연구에서는 인천 연안에 분포하는 미세플라스틱이 수생생물에 미치는 영향(위해성)을 예측함.
- 미세플라스틱의 독성자료를 토대로 수생생물에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을 농도 (예측무영향농도)와 조사지점의 미세플라스틱 분포를 비교한 결과, 지표수 내 100~300 μ m 이상의 미세플라스틱 입자가 수생생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지 않음을 확인함. (단, 해당 결과는 인천 연안 중 일부 지점의 지표수를 대상으로 일정 크기 이상 미세플라스틱만을 고려하였기 때문에 실제보다 과소평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플라스틱 배출 시나리오로 볼 때, 장기적으로 미세플라스틱이 수생생물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추정함. 또한 전체 연안을 대상으로 모든 미세플라스틱 입자를 고려하면 수생생물의 영향을 좀 더 명확하게 예측할 것으로 기대함.

6. 정책제언

- 육상에서부터 인천 연안으로 유입되는 육상 기인 미세플라스틱을 저감하기 위해 하수처리시설 효율 개선 및 플라스틱 포집 장치 설치를 제안함.
 - 하수처리시설 효율 개선: 현재 처리 공정으로는 미세플라스틱 제거효율이 높지 않고, 특히 작은 크기의 입자는 여과가 어려움. 하여, 하수처리 전처리 및 후처리 기술을 도입하여 연안으로 배출되는 미세플라스틱을 줄이는 방안을 제안함.
 - 플라스틱 포집 장치 설치: 인천은 한강하구 및 연안을 포함하는 지역적 특징이 있으므로 하구에 플라스틱 포집 장치를 설치하여 해상으로 유입되는 플라스틱의 선제적인 제거가 필요함.
- 해상 기인 미세플라스틱을 저감하기 위해 해양 쓰레기 수거, 친환경 해양 시설물 설치, 선박운송 관리를 제안함.
 - 해양 쓰레기 수거: 인천시는 매년 해상에 잔류하는 수천 톤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스마트 해양 환경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임. 해당 정책의 장기적 성과를 위해서는 지자체와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
 - 친환경 해양 시설물 설치: 스티로폼 부표로 인해 생성되는 플라스틱 파편을 저감하기 위해 인천 해안에 표류하는 스티로폼 부표를 전면 철거하고 친환경(생분해성) 소재로의 교체를 제안함.
 - 선박운송 관리: 선박으로부터 발생하는 미세플라스틱을 최소화하기 위해 친환경 페인트 사용 인증 제도를 도입하거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전략이 필요함.
- 연안 내 미세플라스틱을 저감하기 위해 지역 및 국가 간 협력이 필요함.
 - 인천 연안에 분포하는 미세플라스틱은 육상 및 해상 등 다양한 유입원의 영향을 받으므로, 인접 지역 및 국가 간의 발생 원인과 영향을 이해해야 함.
 - 정보 공유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하천 및 해양을 공유하는 지역과 국가는 미세플라스틱 발생, 분포, 관리 등의 정보를 주기적으로 공유해야 함.
 - 해양 관리 정책 마련: 미세플라스틱 관리 협의체 구성, 지원금 확보 등을 통해 지역 및 국가의 공동 목표를 설정하고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야 함.

한강하구 탄소흡수력 현황 및 관리방안

■ 김성우 경제환경연구부 선임연구위원

1. 연구 개요

- 최근 기후위기 적응 및 탄소중립을 위하여 갯벌·바다숲 등의 탄소흡수원(블루카본) 보전 및 확대에 대한 중요성이 국제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국내 갯벌·습지의 탄소흡수원으로서의 기능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음
- 인천광역시 연안습지 면적이 728.3km²로 전국 특광역시도 중에서 2번째로 넓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고, 인천 강화도 지역이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한강하구 일대에는 여러 내륙 및 연안습지가 포함되어 있음
- 이에 탄소중립의 주요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기수역 습지가 잘 보존된 한강하구 일대의 탄소흡수력 현황을 파악하고, 한강하구 탄소흡수력 제고를 위한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공간적 범위 : 한강하구 일대 기수역 습지(한강하구 기수역은 인천 강화도·교동도 일대, 김포반도 일대, 김포·파주·고양·서울 인근 한강하류, 한강 지류인 임진강·굴포천·아라천 하류 등을 포함하며, 북한 예성강 하류 등도 포함되나 본 연구의 범위에서는 제외함)
- 시간적 범위 : 2022년 말 기준
- 내용적 범위 : ※ 본 연구에서는 한정된 연구 여건을 고려하여 전문가·실무자 설문조사에 기반한 우선관리방안 도출 및 정책제언에 집중
- 본 연구에서 한강하구 ‘탄소흡수력’은 한강하구 일대 갯벌 및 습지보호지역의 ‘연간 유기탄소 침적량’과 동일한 표현으로 기술하였으며, 현재 한강하구 일대의 ‘유기탄소 저장량’ 이외에 연간 추가로 침적되는 탄소흡수량을 의미함

2. 습지 탄소흡수원의 중요성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에서 블루카본을 “관리할 수 있는 해양시스템의 모든 생물학적으로 구동되는 탄소의 흐름 및 저장”으로 정의함
- 현재 블루카본에는 맹그로브 숲, 염습지, 해초대 세곳으로 대표되며, 해당 생태계는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목표에 기여하는 자연적 기후대응 솔루션으로 IPCC에 의해 감축원으로 국제적 인정을 받고 있음(이상엽 외, 2022)
-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중심으로 결성된 블루카본 이니셔티브(Blue Carbon Initiative)에서 발간된 보고서에 따르면 블루카본이 열대우림보다 탄소고정량이 4배 높으며, 온실가스 흡수 속도는 약 50배나 빠른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생태계서비스 제공 공간뿐만이 아니라 탄소흡수원으로서도 매우 중요함(이상엽 외, 2022)

3. 한강하구 탄소흡수원 면적 및 탄소흡수력 추정 결과

[표 1] 본 연구 한강하구 탄소흡수원 면적

해역	지역	면적(km ²)
인천연안 갯벌	한강하구 관리범위	281.1
한강하구 습지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	60.668

자료: 해양수산부 연안정보도 및 환경부 습지보호지역 현황을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 그 결과, 한강하구 관리범위에 포함되는 인천연안 갯벌에서는 탄소흡수력이 47,815tCO₂/yr, 한강하구 일대 습지보호지역에서는 최소 4,449tCO₂/yr에서 최대 12,012tCO₂/yr 정도로 추정되어, 한강하구 탄소흡수력은 최소 52,264tCO₂/yr에서 최대 59,827tCO₂/yr 정도일 것으로 추정됨

[표 2] 한강하구 탄소흡수력 추정 결과

(단위: tCO₂/yr)

해역	지역	탄소흡수력
인천연안 갯벌	한강하구 관리범위	47,815
한강하구 습지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	4,449~12,012

- 이는 국내 비식생 갯벌의 흡수 잠재량인 484,506tCO₂/yr 대비하여 최대 12.3%에 해당하는 탄소흡수력으로 추정됨

4. 관리방안 우선순위 도출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 블루카본 유력 후보군인 갯벌의 면적이 전국대비 2번째로 넓은 인천광역시의(2018년 기준 728.3km², 전국대비 29.3%) 탄소흡수력 관리 방안 및 정책 추진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설문 결과, 매우 필요하다 66.7%(14명)와 필요하다 28.6%(6명)가 대다수(95.3%)로 인천시가 블루카본 유력 후보군인 갯벌 면적을 넓게 가지고 있는 지자체로서 관련 사업 및 정책 수립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나타남
-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한강하구 일대 습지의 탄소흡수력 우선순위는 갯벌 복원 및 해양생태계 관리, 블루카본 연구 및 정책 개발, 보호지역·오염원 관리 강화가 각각 1,2,3 순위의 중요도를 갖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관리역량 강화,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이 각각 4, 5순위로 파악되었음

5. 한강하구 탄소흡수력 제고를 위한 단계적 관리방안

- 본 연구 결과, 한강하구 일대의 탄소흡수력 제고를 위해서는 오염·훼손된 갯벌 복원 및 해양생태계 관리와 블루카본 연구 및 정책 개발, 사전 예방 차원의 보호지역 지정·관리, 오염원 관리 강화를 통하여 실질적인 탄소흡수원으로서의 역할과 가능성에 대한 연구 및 사업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한강하구 일대 인천연안 갯벌 및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탄소흡수원으로서의 역할과 가능성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연구 및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결론적으로, 한강하구 탄소흡수력 제고를 위하여, 블루카본 연구 및 정책 개발, 갯벌 복원 및 해양생태계 관리, 보호지역·오염원 관리 강화, 관리 역량 강화, 교육 및 홍보 등의 5가지 추진전략과 2030년을 목표로 하는 복원·조성·연구 사업 중심의 1단계 관리방안, 2050년을 목표로 하는 보호지역·역량 강화 중심의 2단계 관리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언함

[표 3] 한강하구 탄소흡수력 관리방안 추진전략

항목	세부내용
블루카본 연구 및 정책 개발	- 지자체 차원에서 탄소흡수원으로서 가능성 모니터링 등: 중앙정부가 추진 중인 비식생 갯벌의 국제적 인증을 위한 지역자료로 활용 등 - 추후 한강하구의 탄소흡수원 기여도 인정 정책 수립 등
갯벌 복원 및 해양생태계 관리	- 오염·훼손된 갯벌 복원사업 확대 등: 염습지 확대는 갯끈풀 관련 생태변화연구 필요 - 잘피 등 해초류 이식 및 바다숲 조성: 인천연안의 해초류 서식환경 적합성 연구 필요
보호지역·오염원 관리 강화	- 해양보호구역·습지보호지역·연관 보호구역 등 신규 지정 및 보전·관리 - 배출 오염원 저감 관리 - 미세플라스틱 등 육상·해상 기인 오염원 관리
관리 역량 강화	- 국내·외 블루카본 협력 네트워크 확대 - 지역 중심 블루카본 관리체계 구축: ESG, CF100 등 기업활동과 연계
교육 및 홍보 등	- 블루카본 교육, 갯벌 체험 등 시민인식 제고

[표 4] 한강하구 탄소흡수력 제고를 위한 단계적 관리방안

구분	기본방향	주요 내용	비고
1단계 (2030)	복원·조성·연구 사업 중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염·훼손된 갯벌의 복원사업 확대 ▶ 잘피 등 해초류 이식 등 사업시행 ▶ 중앙정부 정책에 발맞춰 지자체차원의 블루카본 관련 연구 및 정책 개발 	교육 및 홍보 병행
2단계 (2050)	보호지역·역량 강화 중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강상류에서부터 유입되는 오염원 관리 ▶ 보호구역 등 신규 지정과 기존 보호구역 관리 ▶ 협력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사전 예방적 관리 	교육 및 홍보 병행

- 1단계(목표년도 2030년)는 오염·훼손된 갯벌의 복원사업 확대와 잘피 등 해초류 이식 등 갯벌의 직접적인 사업시행과 현재 중앙정부 정책에 발맞춰 지자체차원의 블루카본 관련 연구 및 정책 개발을 함께 추진할 것을 제안함
- 2단계(목표년도 2050년)에서는 한강상류에서부터 유입되는 오염원 관리 및 보호구역 등 신규 지정과 기존 보호구역 관리 및 협력 네트워크 확대를 통하여 한강하류에서 인천연안까지 이어지는 한강하구 일대와 인천연안 갯벌까지의 사전 예방적 관리 추진할 것을 제안함

인천광역시 화학물질 취급·배출 특성 연구

■ 최여울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1.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국내 화학물질 취급 업체의 유통량은 점차 증가하는 가운데, 인천광역시는 대규모의 산업단지를 보유하고 있고 화학물질 취급량이 많은 지역임.
- 2018년 대비 2020년 국내 화학물질 취급 업체의 유통량은 7.6% 증가함. 인천광역시의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수 및 취급량은 전국 5위, 산업단지 입주업체·가동업체 순위는 전국 2위임.
- 화학물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를 충족하는 정보의 제공은 부족한 실정임.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여 인천광역시의 화학물질 취급 및 배출 특성을 분석함.

2) 연구범위 및 방법

- 국내외 화학물질 관리 법·제도와 인천광역시의 화학물질 동향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 계획을 조사함.
- 인천광역시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을 중심으로 지표별 화학물질 취급·배출 특성을 분석하고 해당 내용을 토대로 인천의 화학물질 관리 방안을 제안함.
- 연도, 업종, 산업단지, 유해화학물질을 지표로 활용하여 인천광역시의 화학물질 특성을 파악함.
- 본 연구에서는 화학물질 취급량 산정을 위해 입고량(제조·수입·구매 항목)과 출고량(사용·판매·수출 항목)을 조사함. 배출량은 대기, 수계, 토양으로 배출된 화학물질의 양을 대상으로 함.

2. 국내외 화학물질 관리 법·제도

1) 국내 화학물질 관리 법·제도

- 국내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은 환경부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소방청 「위험물안전관리법」, 산업통상자원부 「고압가스안전관리법」로 관리함.
 - 화학물질관리법에서 분류하는 유해화학물질은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임.

[표 1] 국내 화학물질 관련 법령

법령	구분	목적	부서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유해화학물질	인체 보건 및 환경 보호	환경부
산업안전보건법	유해인자	근로자 보건	고용노동부
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	화재 예방	소방청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	산업통상부

2) 국외 화학물질 관리 법·제도

- 국외 화학물질 관리 규정은 EU의 REACH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미국의 TSCA (The Toxic Substances Control Act), 일본의 화심법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도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중국의 신규화학물질 환경관리제도가 있음.

3) 인천광역시 화학물질 관리 법·제도

- 「인천광역시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는 인천광역시 관할구역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목적임. 인천광역시장은 화학물질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환경 위해를 예방할 수 있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함. 조례의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음.
 -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환경 중 화학물질 현황 조사,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 지역화학안전협의회 구성, 재정 지원

- 인천광역시 자치구별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는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에서 제정하여 시행함.
-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시민의 건강 및 환경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물질 사고의 안전관리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인천광역시는 4대 추진과제를 구성함.
 - 사고대비 체계 구축, 참여행정 및 역량강화, 사고예방 교육·훈련, 화학물질 정보 제공·관리

3. 인천광역시 화학물질 취급 특성

❖ 인천광역시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 인천광역시에서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수는 점차 증가하여 2020년 기준 2,013개이고, 이 중 서구가 40%, 남동구가 39%를 차지함.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대부분 제조업이며,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과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 비중이 높음.
-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한 사업장의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도이며, 인천은 14%로 전국 2위임.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사업장의 대부분은 제조업체로, 종업원 수가 50인 이하의 중소기업 사업장임.

❖ 화학물질 취급 특성 분석

- 인천광역시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연간 화학물질과 유해화학물질의 입고·출고량은 [표 2]로 작성함. 화학물질의 연간 입고량과 출고량은 2016년 대비 2018년에 약 4배 증가한 후, 2020년에 감소함. 반면 유해화학물질의 취급량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됨.
 - 유해화학물질은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 중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로 분류된 물질을 지칭함.

[표 2] 인천광역시 사업장의 연간 화학물질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연도	화학물질		유해화학물질	
	입고량 (천톤)	출고량 (천톤)	입고량 (천톤)	출고량 (천톤)
2016	8,256	8,971	3,000	3,007
2018	34,883	39,098	3,542	3,545
2020	26,498	31,187	5,441	5,479

-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인천광역시 사업장의 화학물질 입고 및 출고량을 조사하여 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업종에 따라 평균값을 산출함. 해당 수치를 바탕으로 연간 화학물질 취급량을 조사한 결과, 70% 이상이 제조업임을 확인함[표 3].
- 인천광역시 일반산업단지의 연간 화학물질 평균 입고량은 1,124천톤, 출고량은 1,207천톤이며, 일반산업단지 중 취급량이 가장 많은 곳은 인천지방산업단지(입고량 538천톤, 출고량 535천톤)임. 국가산업단지의 연간 화학물질 입고량은 1,819천톤, 출고량은 1,863천톤이며, 남동산업단지(입고량 1,724천톤, 출고량 1,828천톤)의 취급량이 대부분임.

[표 3] 인천광역시 사업장의 업종별 화학물질 취급량

업종	입고량 (천톤, %)	출고량 (천톤, %)
제조업	16,815 (72%)	20,082 (76%)
운수 및 창고업	4,102 (18%)	4,046 (15%)
도매 및 소매업	1,272 (5%)	1,275 (5%)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824 (4%)	804 (3%)

4. 인천광역시 화학물질 배출 특성

❖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정보 및 관련 법령

- 환경부 장관은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매년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량 조사를 시행함.
 - 배출량 조사 정보는 대상 화학물질, 취급시설, 대상 업종, 지역 정보 등을 포함함.
 - 배출량 조사 대상 화학물질은 유해화학물질, 대기오염물질, 휘발성유기화합물, 수질오염물질, 국제기구에서 지정한 발암성, 생식독성, 유전독성 등의 화학물질임.

❖ 화학물질 배출 특성 분석

-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인천광역시 사업장의 화학물질, 유독물질, 발암물질 배출량을 [표 4]로 요약함.
 - 유독물질은 환경부에서 고시한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에 해당함.
 - 발암물질은 유독물질 중 암을 유발하거나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의미함.

[표 4] 인천광역시 사업장의 연간 화학물질·유독물질·발암물질 배출량

연도	화학물질 (톤)	유독물질 (톤)	발암물질 (톤)
2016	1,186	1,005	62
2017	1,714	1,508	61
2018	1,659	1,477	119
2019	1,273	1,082	79
2020	1,277	1,078	90

주: 화학물질 배출량은 사업장에서 연간 1톤 이상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배출량을 합산함.

- 인천광역시에서 유독물질 배출량이 많은 지역은 남동구, 부평구, 서구이고, 발암물질 배출량이 많은 지역은 남동구와 서구로 조사됨.
 - 남동구, 부평구, 서구의 유독물질 배출량은 연간 100~1,000톤이고, 남동구와 서구의 발암물질 배출량은 연간 10~100톤임.
 - 남동구와 서구에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이 집중되어 있으므로 다른 행정구역에 비해 배출하는 유독물질 및 발암물질의 양이 많은 것으로 보임.
- 유독물질 중 배출량 상위 10종은 메틸알코올, 톨루엔, 아세트산 에틸, 자일렌, 아연 및 그 화합물, 암모니아, 염화수소, 메틸에틸케톤, 2-푸란 메탄올, 질산염. 해당 유독물질은 화학물질 원료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며, 노출되면 급성·만성 독성, 피부자극성 등을 유발할 수 있음.
- 1군 발암물질은 사람에게 암을 유발하는 물질로, 인천 사업장에서 포름알데히드, 벤젠, 트리클로로에틸렌, 크롬 및 그 화합물, 산화 에틸렌, 카드뮴 및 그 화합물, 3,3'-디클로로-4,4'-디아미노디페닐 메탄이 배출됨.

5. 정책 제언

- 인천광역시의 화학물질 취급량과 배출량은 2018년 대비 2020년에 대부분 감소함. 이는 2017년 말부터 시행한 「인천광역시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와 2018년부터 시행한 「유독물질의 지정고시」의 영향으로 보임. 따라서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전략은 화학물질 법령의 시행임.
- 인천은 고독성 물질 배출 사업장 1km 이내에 거주하는 위험인구가 가장 많은 지방자치단체이므로, 현행 지역화학안전협의회 운영 요건의 변경이 필요함. 유독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사업장

주변으로 거주인구가 일정 수를 초과하는 지역에 화학안전협의회를 운영하여 시민의 건강을 관리해야 함.

- 현행 「인천광역시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는 화학사고 비상대응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역화학안전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음.
-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유독물질에 장기간 반복 노출되면 신경·행동 이상, 생식·발달의 영향이 나타날 수 있고, 발암물질의 경우 폐암, 백혈병, 방광암 등의 위험이 있음. 따라서 유독물질에 고농도·고빈도로 노출되는 작업자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건강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주변에 거주하는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인천시는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건강 영향을 조사해야 함.
- 인천광역시에서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한 사업장 대부분은 종업원 수가 50인 이하의 중소규모 사업장으로, 50%는 정기 검사 미이행으로 적발됨. 지자체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설 정기 점검, 화학물질 관리 지침서 배포,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해야 함.
- 인천의 전체 화학물질 취급량·배출량은 감소 추세이지만 유해화학물질 취급량과 발암물질 배출량은 2019년보다 2020년에 증가함. 또한 행정구역에 따라 유독물질과 발암물질의 배출량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효율적인 화학물질 관리를 위해 총량 중심의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유해화학물질의 특성에 따른 관리 방안이 필요함. 인천광역시는 유독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시설을 주기적으로 조사·감독하고, 사업장은 유해물질이 누출되지 않도록 정기적인 유지보수가 필요함.

인천광역시 온실가스 배출의 탈동조화 및 요인분해 연구

■ 한준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1. 연구 배경 및 목적

- 경제성장 저해를 최소한으로 하면서 탄소중립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한 가운데 온실가스 배출과 경제성장의 탈동조화(decoupling), 즉 경제성장이 진행되더라도 온실가스 배출 감소가 심화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
- EU 선진국들은 1990년대부터 적극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추진하면서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배출 간 탈동조화가 심화되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그 정도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는 2013년을 기점으로 온실가스 총배출이 감소하고 지역내총생산은 증가추세에 있으며 부문별, 혹은 제조업 업종별로 조금씩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이런 맥락에서 인천광역시의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배출 간 탈동조화 정도를 살펴봄으로써 탄소중립을 향해 가는 경로 상에서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감축 관련 인천의 그동안의 경로와 현재 상태를 평가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음.
- 아울러 인천광역시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에 어떤 요인이 얼마만큼 영향을 주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관련 직접적인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 이에 이 연구는 인천광역시의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배출 간의 탈동조화를 주요 부문(농업·임업·어업, 제조업, 상업·공공, 건설업)에 대해 분석하고, 요인분해분석을 통해 주요 요인들이 인천광역시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에 미친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인천시의 실효성 있는 온실가스 감축 정책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2. 탈동조화 개념 및 계량화

- 탈동조화(decoupling)는 동조화(coupling)의 반대 개념으로 한 방향으로 움직일 것 같은 두 변수나 현상이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거나 오히려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의미함.
- 전통적으로 경제가 성장하면 반드시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한다는 인식이 있었으나,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배출량 간에 탈동조화, 즉 둘 간에 상관관계가 약화되는 현상(Handrich et al., 2015)이 두드러지면서 온실가스 배출과 경제성장의 탈동조화에 대한 관심이 커졌음(이상준, 2017).
-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배출의 탈동조화 정도를 계량화하려는 시도들이 여러 연구에서 있었는데, Tapio(2005)는 GDP 변화율 백분율 대비 CO₂ 변화율 백분율의 비율을 CO₂에 대한 GDP 탄력성으로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조화와 탈동조화 정도를 구분하였고, UNEP(2011)는 실질 GDP 변화율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율의 비율을 탈동조화 지수(Decoupling Index; DI)로 정의하고 이를 통해 동조화, 탈동조화 정도를 나타내었으며, Wang(2011)은 특정 기간의 경제 규모 변화율 대비 에너지 소비 변화율 비율을 탈동조화지수(DI)로 정의하고, 이 값의 범위에 따라 탈동조화 정도를 구분하였음.
- 한편 Tapio(2005), Wang(2011), UNEP(2011) 방법론은 연도별 단기적인 변화를 파악하기는 좋으나 분석 기간 전체에 걸친 탈동조화 정도 파악에는 한계가 있어서(고재경·예민지, 2022), 단순회귀분석에서의 탄력성 개념을 통해 분석 기간 전체에 대한 탈동조화 정도를 추정하고 통계적 유의성을 파악해 볼 수 있음(Cohen et al., 2018).

3. 방법론

- 이 연구는 탈동조화 계량화를 할 수 있는 여러 방법론을 활용하여 인천광역시 주요 부문 대상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탈동조화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UNEP(2011) 방법론을 활용하여 연도별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탈동조화 정도를 분석하였고, 분석 기간 전체에 대한 탈동조화 경향 파악에서 Cohen et al.(2018) 방법론을 활용하고 통계적 유의성도 파악하였으며, Wang(2011) 방법론을 활용하여 탈동조화지수, GDP 연쇄지수, 온실가스 배출량 연쇄지수 값에 따른 탈동조화, 재동조화 단계를 세부적으로 구분하였음.

- 지역내총생산 값과 온실가스 배출량 값을 로그(log) 변환 후 단순회귀분석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율과 GDP 변화율 간 탄력성을 추정.
- 탈동조화분석 대상 기간은 1990~2019년 기간 전체를 비롯해 1990~2000년, 2000~2010년, 2010~2019년 3개 구간에 대해 수행하였음.
- 또한 온실가스 탈동조화 분석 이외에 로그 평균 디비지아 분해 분석(Log Mean Divisia Index; LMDI)을 통해 인천광역시 주요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에 대해 요인별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인천광역시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를 다각적으로 분석함.
- LMDI 분해분석에서는 지역내총생산 효과, 에너지원단위 효과, 배출계수 효과를 요인으로 고려하였고, 제조업 업종별 분석의 경우, 제조업 지역내총생산 중에서 해당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구조효과도 추가적으로 고려하였음.
- 에너지원단위 효과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소비량 단위가 필요한데, 인천의 농업/임업/어업, 상업, 건설업에 대한 에너지소비량 데이터가 부재해 LMDI는 이를 제외하고 제조업 전체 및 세부 업종에 대해서만 수행하였음.
- 인천광역시 온실가스 배출과 경제성장 간 탈동조화 분석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자료와 지역내총생산(GRDP) 자료가 필요한데, 온실가스 배출량 자료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온실가스 인벤토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직접 배출량(에너지연소배출+공정배출)과 간접배출량 자료를 포함하였고, 지역내총생산(실질) 자료는 국가통계포털에 나와 있는 통계청 「지역소득」 자료를 활용하였음.

4. 분석 결과

- 인천광역시 주요 부문 대상 온실가스 배출의 탈동조화 분석 결과, 1990~2019년 기간 농업·임업·어업만 동조화 경향($p < 0.001$)을 보였고, 나머지 건설업($p < 0.05$), 제조업($p < 0.001$), 상업및서비스업($p < 0.001$)은 모두 상대적 탈동조화 경향을 보였음.
- 제조업 세부 업종별로는 1990~2019년 기간 기계·운송장비·기타제조업($p < 0.001$)은 동조화 경향을 보였고, 섬유·가죽업, 화학및석유화학업($p < 0.01$), 철강·비철금속·비금속업($p < 0.01$)

은 상대적 탈동조화 경향을 보였으며, 음식·담배업, 종이·펄프·인쇄·나무및목재업($p < 0.001$)은 절대적 탈동조화 경향을 보였음.

- Wang(2011) 방법론을 활용하여 1990~2019년 기간 인천 주요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탈동조화 상태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모든 부문에서 상대적 혹은 절대적 탈동조화 경향을 보였고, 제조업의 경우, 섬유및가죽 업종이 침체적 탈동조화, 기계운송장비기타제조 업종이 확장적 재동조화 경향을 보였으며, 나머지 업종은 절대적 혹은 상대적 탈동조화 경향을 보였고, 시기적으로 후반부로 올수록 탈동조화 경향이 강해지는 것을 확인하였음.
- 2004~2019년 기간 제조업 대상 LMDI 분해분석 결과, 온실가스 배출량은 568 천톤CO_{2eq} 증가했으며, 여기서 에너지원단위 효과는 3,799 천톤CO_{2eq}이었고, 지역내총생산 효과는 1,179 천톤CO_{2eq}이었으며, 배출계수 효과는 4,410 천톤CO_{2eq}이었음.

5. 정책 제언

- 첫째, 1990-2019년 기간 인천광역시 주요 부문에 대한 탈동조화 분석 결과 대체로 상대적 혹은 절대적 탈동조화를 보였고, 시기별로 후반부로 올수록 절대적 탈동조화 경향이 점차 강해지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음을 확인하였는데, 이를 통해 인천의 탈동조화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진행되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고 배출량 감소 추세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앞으로 온실가스 감축 관련 많은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 둘째, 탈동조화의 원인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자세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겠지만, 인천광역시 제조업 대상 LMDI 분해분석에서 배출계수 효과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음을 확인한 것과 같이, 재생에너지 확대 등의 에너지 전환이나 에너지 효율 개선 등을 통해 탈동조화를 심화시켜가는 노력이 중요함.
- 셋째, EU,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온실가스 배출의 탈동조화 단계에 도달했고(국회예산정책처, 2020),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제조업 비중이 상당히 높은 가운데서도 고부가가치 산업을 통해 탈동조화를 달성했다는 점에서 제조업 비중이 큰 한국이나 인천의 경우에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면서도 경제성장을 이어갈 필요가 있음을 보여줌.
- 넷째, 온실가스 배출 관련 탈동조화 이슈를 다룸에 있어서 온실가스 배출과 경제성장 간 관계적 측면에서 탈동조화를 해석하고, 그 의미와 한계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탈동조화만이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 자체 측면에서의 평가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함.

지역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연구

■ 조경두 인천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 센터장

■ 윤수향 인천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 초빙연구위원

1. 서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2002. 7. 15 제정, 2014. 5. 26. 일부개정)」에 따른 대상 사업의 종류·규모 및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2014년 이후로 해당 조례는 개정된 이력이 없어 일부 개정이 시급함.
- 또한 제도 이행을 위한 조례상 세부 지침이 미흡하고 규모 및 대상 사업 설정 등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중복되는 문제가 있음.
- 이로 인하여 인천광역시에서는 해당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관내 개발사업에 대한 관리와 평가도 미흡한 상황으로 관련 제도의 정착·시행을 위한 지역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미비점 보완과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가 시급함.

2) 연구 목적

- 조례의 개정을 위해서는 관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통계분석과 제도 운영에 필요한 기초자료 축적, 현황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며, 지역 환경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제도 운영·관리 및 정보공개 등을 위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인천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정보화전략계획(ISP)에 대한 방향성이 마련되어야 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 환경영향평가의 조례, 시행규칙, 운영현황 등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하여 인천광역시 특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방안 제안하고자 함.

3) 연구 내용 및 방법

-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 지역 여건 및 현황, 인천광역시 환경영향평가 관련 연구 분석
 - 인천광역시의 용도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의 시공간적 변화,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구조적 비교, 공간기초 자료 및 통계연보 등 환경영향평가 관련 기초자료 분석
 -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 등 대내외 환경여건 분석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현황 검토 및 분석
 - 지역 환경영향평가 관련 법령 제·개정 현황 및 구성, 대상사업 등 비교·분석
 - 인천광역시 관내 환경영향평가 유사 심의·평가제도 검토
 - 지역특성을 반영한 대상사업 추가 검토
- 인천광역시 지역 환경영향평가 개선방안 검토
 - 인천연구원 위탁을 통한 환경영향평가센터 설치·운영, 현안 유지, 별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가칭) 설립·운영 등 복수(안) 검토 후 행정절차 개선방안 제시
 - 환경부, 지역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ISP) 현황분석을 통한 인천형 지역 환경영향평가 ISP 구축 방향 제시
- 인천광역시 지역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안) 제안
 - 준용유형의 현안 유지 및 지역 특성을 반영한 대상사업 확대, 타법 개정에 따른 현행화를 반영한 일부개정안 초안 제시

2.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1) 지역 여건 및 현황

- 인천광역시는 지리적으로 수도권과 인접하고, 국제공항, 항만, 발전소 등 대규모 배출시설과 국제업무지구 및 제조 업종 관련 산업단지, 물류단지가 집중되어 있으며, 제물포 르네상스 등 대규모 신규 개발사업이 지속 추진되고 있어 기존 인프라가 대폭 변화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광역 대도시 중 인구밀도가 높은 유형으로 2040년까지의 장래 인구 추계 분석 결과에서도 2034년까지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개발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인천광역시는 람사르 습지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생태자원 보호를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2050 해양플라스틱 제로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정부의 열분해시설 장려 정책에 맞춰 지자체 공공 열분해시설도 구축 예정임.

2) 기초자료

- 행정구역도, 용도지역지구정보(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개발제한구역 등), 인천통계연보, 인천광역시 환경영향 유사 심의제도, 타 지자체 관련 자료분석을 통한 인천광역시 용도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의 시공간적 변화와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여건 등을 검토함.
- 환경공간 기초자료와 통계연보에 의한 인천광역시의 환경영향 분석 결과, 상당 부분 도시화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감소하고 도시-주거 및 도시-상업지역 면적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어 관내 도시개발사업(건축물)에 대한 환경영향 검토의 필요성을 확인함.
- 최근 12년간(2012~2023. 7) 인천광역시의 관내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현황 분석 결과, 연간 35건 이상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건수 증가가 예상됨(단, 지역 환경영향평가와의 중복성 검토 필요).
 - (환경영향평가) 항만건설, 특정지역의 개발, 도시의 개발·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도로의 건설 순으로 높은 비중 차지
 - (전략환경영향평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변경,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농업 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 하천기본계획 순으로 높은 비중 차지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기타, 도로, 기반시설, 주택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2020년까지 증가세를 보이다가 최근 감소

3) 대내외 환경여건

- 정부에서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시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가 우선 적용될 전망이며, 이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다수 발의된 상황임.
- 2023년도를 기준으로 올해 9건의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이며,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 관련 시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우선 적용 발의안(2023. 6. 5)은 현재 소관위에 회부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차년도에는 관련 법안이 개정될 여지가 있어 지역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이를 반영해야 할 것으로 예상됨.

3.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현황 검토 및 분석

1) 타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조례 현황

- 지역 환경영향평가 관련 법령 분석 결과, 환경기본조례는 17개 광역지자체 모두 해당, 환경영향평가 조례는 10개 광역지자체(대구, 울산, 세종, 충북, 충남, 전남, 경북 제외),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의 경우 3개 광역지자체(서울, 강원, 경남)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해 6개 광역지자체(서울, 부산, 대전, 울산, 경기, 제주)에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개 광역지자체(서울, 부산)에서는 건축물 관련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및 심의기준을 개정고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환경영향평가 조례는 준용(기본절차는 「환경영향평가법」 준용), 세부 규정(기본절차를 자체 조례로 별도 규정), 혼합(준용+세부규정)의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며, 인천광역시의 경우 준용 형태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됨.

2) 인천광역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검토

-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평가대상에 17개 대상사업이 명시되어 있으나, 지역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지자체 특성에 따른 대상사업을 별도 규정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의 경우 12개 대상사업(항만, 수자원, 철도, 공항, 국방·군사 제외)을 지역 조례에 명시하여 관리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경기도,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지역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건축물 연면적 합계(서울, 경기 10만㎡ 이상, 부산 10만㎡ 이상)이면서 층수가 50층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 제주 1만㎡ 이상’ 등을 포함시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3) 관내 환경영향평가 유사 심의·평가제도

- 인천광역시의 건축위원회에서는 최근 5년간(2019~2023. 8) 303건의 심의 안건 검토가 추진되었고,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인 건축물 대상 심의 건수는 총 170건(이 중 40층 이상 41건, 40층 이상이면서 높이 150m 이상 11건)으로 집계됨.
- 건축위원회 심의 안건 분석 결과에 의하면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 건축물’을 지역 환경영향평가에 포함시킬 경우 연간 약 35.5건, 위의 조건을 충족하면서 ‘40층 이상이면서 높이 150m 이상인 건축물’ 포함 시 연간 약 2.3~8.3건 내외의 심의 건수 증가가 예상됨.

- 인천광역시에서는 최근 5년간(2019~2023. 7) 1,132건의 건축허가와 1,511건의 착공신고가 진행되었으며, 2021년 이후 건축 및 착공 건수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지역별로는 서구, 연면적 합계는 중구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또한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허가 건수는 47건, 착공신고 건수는 58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신축 및 증축과 산업 등의 시설군과 주거업무시설군에 대한 건축 및 착공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됨.

4) 지역 특성을 반영한 대상사업 추가 검토

- 동물장묘시설
 -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인구수 증가로 반려동물 수요 및 사후 장례 등에 관한 관심도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 2022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에 의하면, 누적 총 3,025,859마리 (전년 대비 9.4% 증가)의 반려견이 등록된 것으로 집계
 - 지자체별 반려견의 신규등록 건수는 경기(30.0%), 서울(14.5), 인천(6.8%), 누계 순, 등록의 경우 경기(29.7%), 서울(17.8%), 인천(6.7%) 순으로 높은 비중 차지
 - 반려견에 대한 수요와 함께 사체 처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짐에 따라 관내 불법매립으로 인한 환경오염 사전 예방과 성숙한 반려동물 장례문화 확산을 위해 인천광역시의 지역 환경영향평가 조례 대상사업에 동물장묘시설을 포함시키는 방안 검토
 - 이와 관련하여 「동물보호법」, 지자체별 동물보호 및 반려동물, 동물장묘시설 등에 관한 조례·규칙 등을 검토, 최근 전북 임실군(2021년 건립)을 시작으로 제주 등 공설동물장묘시설 건립 등 확산 추이
 - 현재 인천광역시에서는 반려동물 테마파크 겸 동물장묘시설(3,300㎡)을 건립 중,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22.2.24) 제·개정이 추진된 상황이나 해당 조례상에는 동물장묘시설 관련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조례 개정(안)에 개발사업(묘지공원) 또는 산지의 개발(묘지·봉안시설), 도시의 개발사업(건축물) 등에 동물장묘시설을 소각용량 기준으로 포함하는 방안 제안
- 열분해시설
 - 한편, 플라스틱 감축 및 재활용 확대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환경부를 중심으로 정부의 열분해시설 장려 정책 활성화, 인천광역시에서도 폐기물 관련 현안 해결을 위해 열분해시설 확대 방안 검토 중

- 이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지자체 열분해시설 및 폐기물 중간처리업체 현황 등을 검토, 관련 자료를 토대로 조례 개정(안)에 열분해시설을 소각시설 용량을 기준으로 폐기물 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 시설의 설치(재활용시설 중 화학적 재활용시설)에 포함하는 방안 제안

4. 인천광역시 지역 환경영향평가 개선방안 검토

1) 행정절차 개선 방향

- 인천광역시 관내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등 행정절차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1안) 환경영향평가센터 설치·운영을 인천연구원에 위탁, (2안) 현안 유지, (3안) 별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칭) 설립·운영의 복수(안)을 검토함.
- 이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등 검토 시 '전문적인 검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문기구(전문성과 객관성을 담보한 전문가로 구성)를 필요에 따라 둘 수 있다'를 명시하는 등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통합형(1안+3안)으로 대안을 마련.
- 또한 서울연구원(이하 서울특별시), 경기연구원(이하 경기도) 등과 같이 인천연구원(외부자문)에서 전문적인 검토·자문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함.

2) 인천형 지역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ISP) 구축 방향

-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개요·기능·효과 등에 대한 홍보 및 장기적인 데이터 축적, 환경영향평가 사업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로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구축이 필요함.
- 현재 환경부와 4개 광역지자체(서울, 부산, 경기, 제주)에서 자체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ISP)을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
- 이에 인천광역시 지역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ISP) 구축을 위한 (1안) 인천광역시청 누리집과 연계, (2안) 별도 웹페이지 구축, (3안) 조례 개정 후 지역 환경영향평가 시스템 구축방안 정립의 복수(안)을 검토함.
- 현 단계에서는 인천광역시청 누리집 연계형(게시판) 시스템 구축(1안) 방안 마련을 우선 고려하여 시스템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시민 의견수렴과 단계적 계획 수립을 병행할 계획으로 시스템 구축, 유지·관리의 주체(자료의 지속적인 업데이트, 시스템 오류 개선 등)는 인천광역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임.

- 향후 지속적인 수요처 확보 및 심의 건수 증가 시 환경부(EIASS) 수준의 별도 웹페이지 (시스템의 목적, 시스템을 통해 제공하고자 하는 콘텐츠의 종류와 해당 콘텐츠의 주요 수요자, 신규 콘텐츠 개발 방향성 등 명확화) 구축방안을 재검토할 계획임.

3) 인천광역시 지역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안) 제안

- 「인천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는 2014. 5. 26. 이후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개정이 시급한 상황으로 대내외 환경여건(「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현황,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 등)을 반영하여 현 수준에서의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고 중앙권한 지방이양 이후 조례 개정 시 고려사항을 검토함.
 - (중앙권한 지방이양 전) 준용유형의 현안 유지, 대상사업(건축물, 동물장묘시설, 열분해시설) 확대와 타법 개정에 따른 현행화를 반영한 조례 개정(안) 제안
 - (중앙권한 지방이양 후) 준용유형의 현안 유지로 기본절차 등에 대한 개정 불필요, 다만, 기후변화 영향평가, 주민의견수렴 등 행정절차 간소화 방안, 대상사업 및 평가 항목 등에 대한 재검토와 후속 연구 필요

5. 결론 및 제언

- 인천광역시는 「인천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정 이후 한차례의 개정만 이루어져 상위 법률과의 부합·정합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조례 개정(안) 마련과 지역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제안을 위하여 평가 대상사업 확대, 체계적인 행정절차 기반 강화,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관점에서 관련 자료 분석과 검토를 수행함.
- 대상사업 확대를 위하여 ① 건축물, ② 동물장묘시설, ③ 열분해시설을 조례 개정(안)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함.
 - (건축물)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이며, 40층 이상이면서 높이는 150m 이상인 건축물을 대상사업에 포함하는 방안을 제안
 - (동물장묘시설) 「동물보호법」 제71조에 따른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설치사업으로서 소각시설 처리능력이 1일 50톤 이상 100톤 미만인 것을 대상사업에 포함하는 방안 제안
 - (열분해시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로 재활용시설 중 화학적 재활용시설로서 처리능력이 1일 50톤 이상 100톤 미만인 것을 대상사업에 포함하는 방안 제안

-
- 체계적인 행정절차 기반 강화를 위하여 복수(안)을 검토하였으며, 1안(환경영향평가센터 설치·운영을 인천연구원에 위탁)과 3안(별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칭) 설립·운영)을 통합하여 전문 검토·자문기구와 인천연구원(인천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 등)의 검토·자문을 통해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함.
 - 시스템은 구축의 경우 인천광역시청 누리집 연계형(게시판)을 우선 고려하였고 지속적인 수요와 심의 건수 증가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임.
 - 마지막으로 대내외 환경여건 변화로 인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의 중복 구간에 대한 명확한 정립이 완료된 이후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사업 확대 등을 추가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와 관련한 후속연구도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인천광역시 탄소중립을 위한 시민참여형 행동계획 및 이행평가 연구

■ 조경두 인천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장

■ 최중석 인천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 책임연구원

1. 개요

- 지구 평균온도의 상승을 막고자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2050 탄소중립의 실행이 더욱 중요해짐
- 인천광역시도 「인천광역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 및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운영 등 인천지역의 체계적 협력거버넌스 구축, 탄소중립 장기전략 및 실천계획 수립 중임
- 2050 인천광역시 탄소중립 추진전략에서 제시한 전략 및 정책 수단 중 시민사회와의 네트워크 확대 방안 및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참여할 방안 제시
- 인천광역시 탄소중립을 위한 시민참여형 행동계획 제안 및 이행과정의 평가방안 제시로, 시민참여형 행동계획의 지속적인 교정과 실질적 성과를 유인하고자 함

2. 시민참여 유형 및 유형별 시민역할 분석

- 시민참여의 개념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지만 사전적으로는 ‘대중이 경제, 정치, 경영 또는 다른 사회적 결정에 대해 의견을 표출하고 영향을 끼치는 메커니즘을 의미함
- 이번 연구에서는 이론적 논의를 통해 시민참여의 개념을 정의하고 검토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와 국민 참여 등의 개념을 종합하여 정리하되, 현황분석과 정책 제안에서는 참여자의 범위를 지방자치단체 거주 주민으로 전제함. 민간기업 역시 일반시민의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탄소중립 정책에 있어 별도의 규제관리 혹은 지원 대상이기 때문에 대상에서 배제하였음

- 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려면 도시계획 상에서 실질적인 도시 주인인 시민들의 자발적이며,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며, 탄소중립 패러다임의 전환에서는 기존의 도시재생, 개발, 재건축과는 달리 시민의 참여와 협업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음
- 정책 시점에 따라 계획수립과정 및 이행과정으로 구분하고, 참여 수준의 경우 UNSCWA(2021)의 3단계 분류를 참고하였는데, 일반적으로 ‘참여’는 시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며, 단순한 정보의 제공이나 교육을 통한 시민의식 함양을 통해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음. ‘협업’과 ‘몰입’은 시민참여의 단계에서는 차이가 있음
- 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려면 도시계획 상에서 실질적인 도시 주인인 시민들의 자발적이며,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며, 탄소중립 패러다임의 전환에서는 기존의 도시재생, 개발, 재건축과는 달리 시민의 참여와 협업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음

3. 국내·외 지방정부 시민참여형 유형별 정책사례 분석

- 도시 수준의 정책 계획과정에서 시민참여의 과정을 살펴보고 국내·외 지방정부의 계획수립 단계부터 이행단계까지의 과정에서 시민참여 수준이 높은 사례들을 유형화하여 분석하였음. 크게 계획수립단계에서의 시민참여, 정보제공 및 교육, 시민실천 및 능동적 참여로 구분하여 각 유형별로 시사점을 도출함
- 계획수립단계에서의 시민참여에서는 국내·외 지방정부의 계획수립과 관련한 시민참여 방식은 점차 단순한 참여 형태를 벗어나, 시민이 직접 정책을 설계하고 수립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변하고 있음. 참여 대상은 사례별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성별, 나이, 신분 등에 대한 차별없이 공모하여 진행하고 있음
- 정보제공에 있어서는 단순한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뿐 아니라 계획수립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함께 공공과 연계하여 다양한 교육을 통해 계획 전반에 걸친 이해도를 높이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음. 또한, 대부분 기존 웹사이트를 통한 정보제공보다 공동된 플랫폼을 활용하여 시민 생활 관련 정책 제안이나 토론이 활성화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음. 교육 또한 단순 정보제공 및 개괄적 교육보다 대상과 참여 범위에 따른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남
- 시민실천 및 능동적 참여방식의 시민참여는 공청회, 토론회, 공론조사 등 정보전달과 의견의 단순 교류방식에서 벗어나,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변하고 있음

4. 인천광역시 탄소중립 관련 시민참여 정책추진 및 이행평가 현황 분석

- 인천광역시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관련 시민참여형 정책의 성과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했는데, 시민참여의 형태를 계획수립과정에서의 시민참여와 수립 이후 이행단계에서의 시민참여로 구분하여 인천광역시 현황을 분석하였음
- 계획수립과정에서 시민참여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체계의 전환이 필요할 것임
 - 탄소중립 비전 포럼은 정책 수립 완료까지 운영되지 못한 채, 사업에 대한 최종 협의나 숙의 과정을 통해 계획을 확정하는데 기여하지 못한 한계가 있음
 - 계획수립 단계에서 공청회, 시민 설문조사, 포럼 외에 다양한 부문에서 시민참여 수단이 필요함
- 이행단계에서는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시민참여 기반을 조성하고 이행단계에서의 사업들이 좀 더 발전적인 단계로의 전환이 필요함
 - 시민들의 참여 형태는 수동적 참여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시민참여형 정책의 단계가 심화되기 위해서 시민들이 주도하며 지방정부가 의견을 수렴하여 최소한의 결정권을 가지는 방식의 사업들과 연계되어야 함. 이 과정에서 시민과학이나 리빙랩과 같은 시민주도형 사업들을 통해 시민참여의 질적, 양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임
- 인천광역시의 시민참여형 기반을 활용하여 탄소중립과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음
 - 인천광역시에서는 시민참여를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들이 활용되고 있으나, 기존 정책 검토과정에서 이러한 수단들과 긴밀하게 연계된 탄소중립 추진은 제한적임. 따라서, 시민참여 영역과 연계·확대한 탄소중립사업의 발굴이 중요함
- 인천광역시의 탄소중립 목표와 부합하는 사업계획 및 이행평가의 마련이 필요함
 - 교육이나 홍보의 경우 대부분 교육 건수, 교육 인원수, 개최 건수 등 사업의 양적인 부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시민과학 형태로 데이터 수집이 가능한 사업이나 사업의 이행과정에서 환경 리터러시를 높일 수 있는 형태로 사업계획 수립과 평가체계 설계가 요구됨

5. 시민참여형 탄소중립 행동계획 및 이행평가 방안

- 인천광역시 시민참여형 탄소중립 행동계획을 ①시민참여 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②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한 시민참여 계획수립 및 이행기반 확충, ③전문가-학교 연계형 교육사업 및 콘텐츠 개발, ④주민참여 인프라 활용 및 정비 등으로 구분하여 제안했음
 - 시민참여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서는 일반 시민 모두가 참여대상이 될 수 있는 시민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시민협의체의 계획 관련 권한 강화와 탄소중립에 대한 이해증진을 기반한 시민위원의 역량 강화를 제안함
 - 과학적 근거마련을 위한 시민참여 계획수립 및 이행기반 확충에서는 탄소중립 계획 수립 시 시민과학 활용을 위한 근거 마련과, 탄소중립 목표와 연계한 시민과학 프로그램 개발, 탄소중립 포털을 활용하여 시민과학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제안함
 - 전문가 및 학교와 연계한 교육사업 및 콘텐츠 개발에서는 인천기후환경네트워크과 인천탄소중립 연구지원센터와 연계한 탄소중립 관련 중간지원조직 활용방안과 미래세대의 리더리시를 고양할 학교 환경교육과의 연계를 제안함
 - 인천광역시에서 진행 중인 기존 주민참여 제도들을 활용하여, 시민참여 내 탄소중립의 비전 연계와 데이터 활용 및 의사결정과의 연계 방안을 제시함
- 시민참여형 탄소중립 행동계획 이행평가 및 환류와 관련, 시민과학과 리빙랩 사업의 확대 고려와 시민참여형 정책이행평가를 위한 가이드라인의 개발 필요성을 제안함
 - 인천의 시민참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구조로 시민협의체의 역할을 반영한 환류체계를 제안하였고, 시민참여를 통해 추진되는 정책 성과를 일궈내는데 얼마나 유리한 여건을 형성하고 있는지에 관한 정성적 평가방식을 제시함
- 이번 연구는 인천광역시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관련 시민참여형 정책을 검토하여 향후 인천광역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시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이행평가의 방향을 제시하였음
 - 정책 성과평가에 있어 대표지표 외에 부문별 지표에 대한 종합 검토와 시민과학 및 리빙랩을 통한 체계적 시민과학 데이터 수집 및 활용에 관한 후속 연구를 제안함

인천광역시 도로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공간 할당을 위한 방법론 연구

■ 이태휴 인천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 기후정책연구팀 책임연구원

■ 한준 인천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 기후정책연구팀 팀장

1.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 탄소중립기본법 제36조에 따라 국가 및 지역 간 온실가스 배출량 간의 정합성 확보 차원에서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GIR)에서는 국가-지역단위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공표하고 있으며, 최근 공표된 지역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6년~2020년까지 5개년 기간의 배출량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중 도로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94.8%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인천지역은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공항·항만 등 국내 및 국제 물동량 증가에 따라 도로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역시 증가추세에 있음
- 도로 수송부문의 경우 세부적인 배출현황 파악을 위해서 도로 구간별로 온실가스 배출량 자료가 필요하며, 접근성 측면에서 사용자가 이해하기 쉽게 구간별 배출량을 지도로 표현하여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국가 산정자료가 아닌 자체 산정방법론을 마련하여 도로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산정된 배출량을 구간별 통행량 및 차종별 속도 등을 고려하여 할당한 후 기존 군·구 단위의 온실가스 배출정보 보다 세부적인 배출현황을 파악하고자 함

2) 연구 범위 및 방법

- 공간적 범위
 - (도로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전체
 - (온실가스 배출량 구간별 할당) 한국교통연구원 도로 수송 정보 수집이 가능한 간선 및 지선도로

- 시간적 범위
 - (도로 수송부문 주요 현황) 2005년~2021년(통계자료 특성에 따른 분석)
 -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2013년~2021년(한국교통연구원 변경된 방법론에 따른 차종별 주행거리 수집 가능 기간)
 - (도로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공간 할당) 2017년~2021년(한국교통연구원 주요도로망 및 상세도로망 자료 기준)
- 내용적 범위
 - 인천광역시 도로 수송부문 주요 현황분석
 - 도로 수송부문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및 배출량 산정
 - 구간별 온실가스 배출량 할당을 위한 통계자료 분석 및 할당 기준 마련
 - 도로 수송부문 구간별 온실가스 배출량 지도화 표출
- 본 연구는 도로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공간 할당을 위한 방법론을 마련하는 것으로, 인천광역시 도로 수송부문 주요 현황분석, 도로 수송부문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및 배출량 산정, 구간별 온실가스 배출량 할당을 위한 통계자료 분석 및 할당 기준 마련, 도로 수송부문 구간별 온실가스 배출량 지도화 표출의 순으로 연구를 수행함

2. 인천광역시 도로 수송부문 주요 현황

1) 도로 수송부문 에너지 소비 현황

- 인천광역시 수송부문 에너지 소비는 2021년 기준 3,065천toe 수준으로, 2005년 대비 29.6% 감소함
 - 전국대비 인천지역의 수송부문 비중은 7.6% 수준이며, 2005년 이후 연평균 1.4%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음
- 인천지역 운송 수단별 석유제품 소비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기준 도로 수송에 해당하는 육상에서 가장 많은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56.5%를 차지하고 있음
 - 2019년까지는 항공에서 60% 이상 차지하는 구조를 보였으나, 2020년 이후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항공기 운항이 줄어 석유제품 사용량이 감소함
 - 육상부문의 경우 '05년 대비 4.9% 증가하였으며, 석유제품 소비량이 전국대비 5.0% 수준임

2) 자동차 등록 대수 및 주행거리 현황

- 인천광역시 자동차 등록 대수는 2021년 기준 1,675,405대로 2005년 대비 109.4% 증가하였으며, 전년 대비 0.1% 감소함
- 총 자동차 등록 대수 중 승용차가 85.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화물차는 11.6%, 승합차 2.7%, 특수차 0.5% 수준임
 - 승용차는 '05년 대비 147.1% 증가하였고, 승합차는 31.4% 감소, 화물차는 27.6%, 특수차는 105.3% 증가함
 - 1인당 자동차 등록 대수를 살펴보면, 2021년 기준 0.56대로 '05년 대비 8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자동차 주행거리 통계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국내에 등록되어 도로를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용도별·차종별·연료별 주행거리를 조사하고 있으며, 지정된 자동차 검사소에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검사받은 자동차 중 유효표본 대상으로 통계를 산출하고 있음
 - 인천지역의 경우 총 자동차 주행거리는 2021년 기준 25,389,466천km 수준이며, 연료별로 보면 경유가 45.7%를 차지하고 있으며, 휘발유가 38.9%, LPG 9.9%, 기타 5.6% 순임
 - '05년 대비해서는 LPG를 제외하고 휘발유, 경유, 기타연료 모두 증가함

3) 도로 수송부문 정책 추진현황

- 인천지역 친환경차 보급 대수는 2021년 기준 100,887대로 전년대비(64,444대) 56.5% 증가하였으며, 하이브리드차가 86.3%, 전기차 12.7%, 수소차 1.0% 순으로 차지하고 있음
 - 전기차는 2018년에, 수소차는 2019년에 전년 대비 자동차 등록 대수가 크게 증가함 (전기차 742대 증가, 수소차 219대 증가)
 - 현재는 친환경차 보급정책에서 하이브리드차가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전기차 및 수소차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등록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공유 자동차는 차량을 소유하지 않고 필요할 때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공유형 이용 서비스로 인천지역은 민간 공유 자동차(카셰어링) 업체와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주차 공간을 마련하여 운영중에 있음
 - 인천 공유 자동차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기준 1,440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2017년 854대 대비 68.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승용차 요일제란 참여자가 일주일 중 특정 요일의 오전 7시~오후 8시까지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는 시민 실천 운동으로, 개인차량 운행 횟수가 줄어 에너지 절약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을 확대하는 장점이 있음
 - 인천 승용차 요일제는 2021년 기준 62,608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2016년 52,398대 대비 1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인천지역 자전거 도로는 2021년 기준 1,112개 노선과 총연장 1,055km가 구축되어 있음
 - 자전거 노선은 2013년 대비 124.2% 증가하였고, 자전거 도로 연장은 25.7% 증가함
- 인천지역 대중교통수단 분담률은 2021년 기준 총통행량 중 31.2% 수준으로, 2012년 40.6%에서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음
 - 승용차 통행량은 2012년 대비 17.0% 증가하였으며,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철도 통행량은 증가추세를 보이다 2020년 감소하였고, 버스 통행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3. 인천광역시 도로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1) 도로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론

- 국내 도로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CO₂ 배출량 산정시 IPCC(2006)에서 제시하고 있는 연료소비량을 활용하는 Tier 1 방법을 적용하고 있음
- Tier 1 방법은 에너지 부문의 배출량 산정 방법과 동일하며, 기초자료의 확보가 어려울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음

$$Emission = \sum_a Fuel_a \times EF_a$$

- Emission(tGHG) : 배출량(CO₂, CH₄, N₂O)
- Fuel : 연료소비량(TJ)
- EF : 배출계수(Kg/TJ)
- a : 연료 종류(가솔린, 디젤, 천연가스, LPG 등)
- Tier 2 방법은 차종별 연비를 고려하여 연료소비량을 산정하고, 산정된 연료소비량을 바탕으로 Tier 1 방법과 동일하게 배출계수를 적용하여 산정하는 방법임

- Tier1 및 Tier 2 방법은 실제 도로상에서 운행되고 있는 차종별로 에너지 소비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된 배출량이 아니므로 온실가스 배출량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도로 수송부문 세부 저감 대책을 수립하는데 한계가 있음
- Tier 3 산정 방법은 차량의 주행거리를 활동자료로 하고, 차종별, 연료별, 배출제어 기술별 고유 배출계수를 개발·적용하여 산정하는 방법임

$$Emission = Distance_{i,k,l,m} \times EF_{i,j,k,l,m} \times 10^{-6}$$

- Emission(tGHG) : 배출량(CO₂, CH₄, N₂O)
- Distance_{i,j,k,l,m} : 주행거리(km)
- EF_{i,j,k,l,m} : 배출계수(g/km)
- i : 연료 종류(예, 휘발유, 경유, LPG 등)
- j : 온실가스 종류(CH₄, N₂O)
- k : 차량 종류
- l : 제어기술 종류(또는 차량 제작 연도)
- m : 운전조건(이동시 평균 차속)
- Tier 3 산정 방법에서는 국내 차종별 배출계수를 사용하며,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GIR)에서 공표한 값을 적용함

2) 도로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 인천광역시 도로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Tier 3 방법론에 따라 산정하였으며, 활동자료에 해당하는 차종별 주행거리 자료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매년 발간하는 ‘자동차 주행거리 통계’의 차종별 유형별 자동차 주행거리를 활용하였음
- 인천지역 도로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1년 기준 6,687,723tCO₂eq 이며, ‘12년 대비 52.3% 증가하였고, 전년 대비 6.7% 증가함
- 승용차가 64.8%를 차지하고 있으며, 화물차 26.1%, 승합차 6.9%, 특수차 2.3% 수준임
- 도로 수송부문 승용차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1년 기준 4,332,462tCO₂eq 이며, ‘12년 대비 102.5% 증가하였고, 전년 대비 11.3% 증가함

- 승합차 온실가스 배출량은 458,414tCO₂eq 이며, '12년 대비 27.5% 감소하였고, 전년 대비 17.1% 감소함
- 화물차 온실가스 배출량은 1,742,485tCO₂eq 이며, '12년 대비 18.8% 증가하였고, 전년 대비 3.9% 증가함
- 특수차 온실가스 배출량은 154,361tCO₂eq 이며, '12년 대비 2.0% 증가하였고, 전년 대비 9.9% 증가함

4. 도로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공간 할당

1) 도로 수송부문 공간 할당을 위한 기초자료

- 인천광역시에서는 매년 도시교통 기초조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여 도로 구간 및 지점별 교통량 및 속도 변동추이를 파악하고 있으며, 교통 관련 법정계획의 기초자료 및 교통 운영체제 등 관련 정책 마련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음
- 교통량과 속도자료는 인천광역시 및 도로교통공단 자료를 활용하여 조사하고 있음
 - 교통량 조사 시점은 2021년 기준 고속도로 23개소, 도로구간 77개소, 교차로 72개소로 유형을 구분하여 24시간 10개 차종 교통량 조사를 수행함
- 한국교통연구원에서는 관측교통량 데이터와 내비게이션 데이터를 활용하여 교통량이 수집되지 않는 도로를 추정교통량으로 산정하여 구축하고 있음
 - 추정교통량은 연평균 일 내비게이션 프로브 대수, 연평균 시간대별 프로브 대수 등 내비게이션 데이터와 연 평균 일 교통량, 상세도로망 Level6 네트워크, 연 단위로 병합한 속도 프로파일, 시간대별 교통량 등 관측교통량 데이터의 관계를 활용하여 산출함
 - 링크 단위 프로브 대수 관측교통량 경로 및 관측교통량 관계 데이터 등 복합적인 구조를 통해 추정교통량을 산정하고 전국교통량을 추정 후 속도 프로파일 및 추정교통량을 이용하여 차량 통행지표 DB를 구축함

2) 공간 할당 기준 설정 및 방법론

- '인천 도시교통 기초조사'의 경우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첨단교통관리시스템의 자료가 2021년 기준 측정지점이 72개로 파악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전체 도로의 교통량과 속도 정보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인천연구원(2020)에서는 도로 수송부문 배출량을 할당하기 위해서 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 제공한 격자 배출량 자료와 ‘인천 도시교통 기초조사’의 교통량 및 속도자료 등을 활용하여 배분하였으나 일부 자료에서 한계점이 도출됨
 - 도로 수송부문의 배출량을 구간별로 배분하기 위해서 조사 지점도를 도로망에 활용하였으며, 적용되지 않는 지점은 동일 계수로 적용함
- 한국교통연구원에서는 내비게이션 데이터를 기반으로 도로 구간 정보를 주요도로망과 상세도로망에 연결하여 교통량 및 속도 정보를 지도화하여 구축하고 있음
 - 한국교통연구원 주요 도로망과 상세도로망은 각각 2021년 기준 3,914개, 20,106개가 구축되어 있으며, 행정구역 단위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등 활용목적에 따라 데이터를 집계함
- 본 연구에서는 인천광역시 도로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공간 할당을 위해서 한국교통연구원의 주요도로망(Level 5.5)과 상세도로망(Level 6) 자료를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도로별 교통량과 속도자료를 활용하여 배분 기준으로 설정한 후 공간 할당을 수행함

5. 도로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지도화

1) 주요도로망 기준 온실가스 배출지도

- 한국교통연구원 주요도로망(Level 5.5) 기준으로 5개년(2017년~2021년) 기간의 지역별 도로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분석함
- 2021년 도로 수송부문 배출량은 총 6,533,362톤으로, 배출 비중이 서구 20.4%, 중구 16.6%, 남동구 16.5%, 부평구 11.2%, 계양구 10.5% 순으로 나타남
 - 연수구 10.4%, 미추홀구 9.9%, 동구 3.0%, 강화군 1.5%, 용진군 0.01%
- 2017년 대비 2021년에 중구, 동구, 연수구, 서구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였고, 강화군,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등은 감소함
 - 증가 : 중구(129.6%), 동구(31.1%), 연수구(17.8%), 서구(14.5%)
 - 감소 : 강화군(-14.1%), 남동구(-5.8%), 부평구(-5.6%), 계양구(-1.6%)
 - 용진군의 경우 교통량 정보의 구축 시점인 2020년부터 배출량을 할당하여 적용
- 도로 등급별로 고속도로, 일반국도, 특별광역시도, 국가지원지방도, 시군도, 연결도로 구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분석함

- 도로 등급별 비율은 특별광역시도 76.4%, 일반국도 9.9%, 고속도로 7.6%, 연결로 4.1%로 순으로 차지함
- 2017년 대비 2021년에 특별광역시도, 일반국도는 증가하였고, 국가지원지방도, 연결로, 지방도, 시군도, 고속도로는 감소함
 - 증가 : 특별광역시도(23.8%), 일반국도(17.6%),
 - 감소 : 국가지원지방도(-86.6%), 연결로(-20.6%), 시군도(-17.1%), 고속도로(-9.5%)
- 주요도로망 기준 2021년 구간별 온실가스 배출량은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공항동로296번길, 봉수대로, 경원대로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상위 20개 구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 배출량의 45.21% 수준인 것으로 분석됨
 - km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살펴보면 구간별 온실가스 배출량과 다르게 주로 특별광역시도에서 배출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해대로 293번길, 공하동로 296번길, 자유무역로 107번길, 일신로 40번길 등의 순임

2) 상세도로망 기준 온실가스 배출지도

- 한국교통연구원 상세도로망(Level 6) 기준으로 3개년(2019년~2021년) 기간의 지역별 도로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분석함
- 2021년 도로 수송부문 배출량은 총 6,533,362톤으로, 배출 비중이 서구 21.6%, 중구 17.6%, 남동구 16.3%, 연수구 14.2%, 부평구 9.4%, 미추홀구 8.9%, 계양구 7.8%, 동구 2.5%, 강화군 1.5%, 옹진군 0.2% 순으로 나타남
- 2019년 대비 2021년에 중구, 동구, 연수구, 서구, 계양구, 미추홀구, 남동구, 부평구 순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였고, 강화군과 옹진군은 감소함
- 도로 등급별로 고속도로, 일반국도, 특별광역시도, 국가지원지방도, 시군도, 연결도로 구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분석함
 - 2021년 기준 도로 등급별 비율은 특별광역시도 84.8%, 일반국도 6.9%, 고속도로 4.6%, 연결로 1.7%, 시군도 1.1% 차지함
- 2019년 대비 2021년에 특별광역시도, 도시고속도로, 연결로, 고속도로, 일반국도는 증가하였고, 시군도, 지방도, 국가지원지방도는 감소함
 - 증가 : 특별광역시도(8.4%), 도시고속도로(7.8%), 연결로(1.8%), 고속도로(1.5%)
 - 감소 : 시군도(-8.3%), 지방도(-1.1%), 국가지원지방도(-0.7%)

- 상세도로망 기준 2021년 구간별 온실가스 배출량은 아암대로, 봉오대로, 경인로, 공항동로295번길, 봉수대로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상위 20개 구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 배출량의 32.4% 수준인 것으로 분석됨
- km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살펴보면 구간별 온실가스 배출량과 다르게 주로 특별광역시도에서 배출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앙시장8길, 일신로40번길, 경원대로1090번길, 일신로39번길, 새별로79번길 등의 순인 것으로 분석됨

6. 결론 및 정책제언

- 본 연구는 인천지역 도로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간으로 할당하기 위해 구간별 통행량 및 속도자료 등을 활용하여 산정 및 배분함
- 기존에는 국가에서 지역별로 산정 후 공표하고 있으나, 본 연구를 통해서 공간적으로 할당하여 온실가스 배출현황 파악 및 정책추진에 따른 효과를 파악하고자 연구를 수행함
- 다만, 차종별 주행거리 및 구간별 통행량 등의 자료는 실측자료와 추정치가 포함된 통계자료로 정확한 산정과 할당이 어렵고, 국가통계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인천지역에서 측정하는 도로 구간 정보를 측정지점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주행거리 역시 보다 세부적으로 확보한 후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해야 함
- 인천지역에는 차량 렌터카 업체의 소재에 따른 등록 대수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실제 지역에서 운행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량을 산정할 필요가 있음
- 한국교통연구원에서 구축중인 상세도로망 정보는 최근 3개년(2019~2021년) 자료이므로 향후 자료가 축적되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재산정할 필요가 있음
- 온실가스 공간 할당에 있어서 교통량 및 속도자료를 기반으로 적용하였는데, 향후에는 교통량과 속도 이외에 구간별 온실가스 배출량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공간 할당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인천 안전도시 이미지 강화 정책 방안: 범죄 분야를 중심으로

■ 안승현 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 초빙연구위원

■ 조성윤 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장

1. 서론

- 최근 들어 빈번하게 들려오고 있는 ‘묻지마 범죄’와 ‘마약 범죄’ 소식은 국민으로 하여금 잠재적 범죄피해의 공포를 더욱 크게 느끼게 하고 있음.
-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죄’의 경우 사회적 파급력으로 인해 미디어에 쉽게 노출되는 경향이 있고, 피해자나 피해장소가 특정되지 않는다는 특성으로 인하여 나와 내 주변의 사람들이 언제라도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심리적 불안감을 증대시키고 있음.
-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하여 안전한 사회,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계기가 마련되면서 안전과 안심에 관한 관심, 그리고 더 나아가 심리적 안정감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인천시는 2022년 발표된 지역안전지수에서 생활안전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 교통사고, 화재, 자살 분야에서 2등급을 받으며 다른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도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안전 관련 통계상의 지표와 시민들이 실제 체감하는 안전도 사이의 간극으로 인하여 방법과 치안 수준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만연하여 도시이미지가 실추되고 심리적 불안감이 확산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
- 따라서 반복되는 재난안전 사고 소식에 의해 쉽사리 오명이 씌워지는 도시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안전도시라는 도시의 이미지가 상징적인 이미지로만 그쳐서는 안 되며 기능적 이미지로 함께 작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인천시의 안전도시 이미지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하여 도시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인천시의 도시이미지 및 안전 현황을 분석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실효성 높고 적용가능성 있는 도시이미지 개선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임.

2. 이론적 고찰

1) 도시와 도시경쟁력

- 모든 도시가 동일한 과정과 형태로 탄생·발전해온 것은 아니므로 도시를 보는 관점이나 분야에 따라 도시의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으며 연구자의 기준에 따라 다양한 정의를 사용하고 있음(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14; 임재현, 2023).
-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대표적 기준은 인구적, 정치·행정적, 사회·문화적, 기능적, 그리고 시설·환경적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인데,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도시는 시대가 요구하는 인구 규모, 기능 등의 정태적인 기준을 충족하면서 이질적인 개체들 모여 개체 간 그리고 개체들과 환경이 상호작용하는 동태적인 기준을 충족하는 공간이라고 정의할 수 있음(임재현, 2023).
- 도시는 상호 관련성을 가진 다양한 요소들이 조합되어 운영되는 유기체라고 할 수 있는데, 따라서 도시가 하나의 조직체로서 성립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구성요소의 결합이 필요하며(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14),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사회·문화적 요소인 시민(citizen)과 활동(activity), 물리적 요소인 토지(land) 및 시설(facility)이 중요한 구성요소임(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14).
- 사회변화는 공간 개념의 변화를 통한 도시 역할의 확대, 초국적 교류 차원에서 도시정부의 위상 변화로 인한 국가 역할의 축소, 심리적 공간 압축 현상으로 인한 국가 간 경계 붕괴에 따른 세계도시의 중요성 강조, 정보와 지식의 입지 자유성으로 인한 도시 간 경쟁의 심화를 초래하였고(임재현, 2023), 도시의 위상 변화는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는데 과거 도시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의 일부분이라고 인식되었던 시기를 지나 국가의 경쟁력과 관계없이 다른 여러 국가의 지역과 직접적으로 경쟁을 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하면서 도시경쟁력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음(김정호, 2013).
- 도시가 세계 경쟁력의 핵심적인 주체로 부상하기 시작한 것은 OECD의 도시경쟁력 평가보고서가 계기가 되었고(변미리, 2014), 초기의 도시경쟁력 개념은 주로 시장의 효율성·생산성 측면에서 다루어졌으나, 이후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면서 학자마다 다양한 개념을 제시하게 되었음(변미리 외, 2021).
- 도시경쟁력에 대한 다양한 개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도시경쟁력이란 어떤 한 도시가 가지고 있는 생산과 삶의 질에 관계된 총체적인 역량으로 여타 도시에 대한 상대적 우위 정도라고 볼 수 있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했을 때 특히 삶의 질이라는 관점에서 정치적,

사회·문화적 차원의 다양한 가치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김원배, 1997; 김정호, 2013).

- 도시경쟁력에 대한 주요 이슈는 도시의 자율성 및 역할, 지방과 중앙 간 관계로서의 거버넌스, 시민참여와 민주주의 영역으로 확장되었고, 최근에는 도시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도시경쟁력 제고, 도시 내 불평등, 고령화, 안전 문제 등에 대한 대응과 같은 도시 역량 강화를 포함하는 보다 복합적인 차원의 도시경쟁력 이슈가 논의되고 있음(변미리 외, 2021).

2) 도시이미지와 도시마케팅

- 일반적으로 도시이미지에 관한 연구는 1950년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Boulding (1956)은 도시이미지를 “지역에 대한 사람들의 주관적 마음의 세계, 경험의 종합적 결과”라고 정의하였음(Boulding, 1956).
- 이후 Lynch(1960), Allport(1979), Kotler(1986) 등의 연구가 이어졌고(김훈·송윤환, 2007; 권재경·최원수, 2012), 다수의 선행연구를 종합했을 때 도시이미지란 사회, 경제, 자연, 문화, 관광 등 지역을 구성하고 있는 환경적 요소가 투영되어 있는 지역사회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특정 지역에 대한 경험, 지식, 그리고 신념의 총체적인 지각 및 심리적으로 인식된 주관적 마음의 세계라고 할 수 있음(김훈·송윤환, 2007; 문경원, 2013).
- 도시이미지를 형성하는 요인은 크게 자연적 요소와 물리적 요소, 그리고 비물리적 요소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자연적 요소에는 자연환경, 물리적 요소에는 건축물과 도시 외관, 상징물 등의 인공물, 끝으로 비물리적 요소에는 시민의 가치관과 도시의 역사성, 문화 등이 있음(이수범 외, 2004).
- 도시이미지를 도시민들이 도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경험, 기대, 그리고 인상과 같은 총체적 요소들에 의한 상호작용의 결과로 형성된 인지적 반응의 복합체라고 본다면, 이수범 외(2004)는 “도시의 경제, 사회, 역사, 문화, 지역 정체성, 공동체 관계 등 비물리적 요소가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총체적 이미지를 형성하는 요인으로서 도시이미지를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하였음(이수범 외, 2004).
- 도시마케팅이라는 용어는 지역마케팅, 장소마케팅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이를 엄밀히 구분하면 광의의 지역마케팅이라는 개념에 협의의 도시마케팅이나 장소마케팅이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연구자들의 편의에 따라 혼용되고 있는 경향이 있으므로 사용 측면에서 동일한 개념으로 보고 본 연구에서 활용하고자 함(임재현, 2023).

- 도시마케팅은 국외의 경우에는 1980년대부터, 국내의 경우에는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는데(서용모 외, 2010), 선행연구를 종합했을 때 도시마케팅은 도시 자체가 하나의 상품이라는 인식하에 도시 구성원들의 협력을 바탕으로 도시의 이미지, 제도, 시설 등에 대한 개발·개선을 통해 도시의 전체적인 자산가치를 높이는 모든 활동이라고 할 수 있으며, 도시민들의 통합과 소속감 향상을 통한 자긍심의 고취, 도시 인지도 및 선호도 향상을 통한 관광객의 확보, 도시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과 투자의 유치 등을 그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임재현, 2023).
- 도시마케팅 전략은 도시의 비전, 기본방향, 기본목표의 설정과 이에 대한 전략 및 구체적인 수단을 강구하는 하나의 전략적인 계획과정으로(서용모 외, 2010), 장소, 마케팅, 전략계획 개념이 결합된 도시경쟁력 향상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음(이무용, 2006).

3. 안전도시와 주요 지표의 이해

1) 안전도시

- 안전을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고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개념으로 인식한 것은 1989년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열린 제1차 사고와 손상사고 학술대회(World Conference on Accident and Injury Prevention)였음(양문승·김자은, 2010; 강창현·문순영, 2017; 안승현, 2020).
- “모든 사람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라는 선언을 통해 안전이 기본권임을 천명하고 궁극적인 목표를 손상 및 사고 발생을 감소시켜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지역사회 내의 안전증진(safety community promotion)으로 규명하면서 ‘안전’이 사용되었고, “지역사회 내 안전의 개념을 이해하고 어떤 수단들이 행해져야 하는지를 인식하는 것”을 안전증진(safety promotion)이라는 개념으로 정의하였음(양문승·김자은, 2010; 강창현·문순영, 2017; 안승현, 2020).
- 지역사회 내 안전 증진을 하나의 개념으로 간주하면서 안전도시라는 용어가 등장하였는데, 이 시기 이전까지 안전도시는 정확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용어가 아니라 단순히 안전과 도시라는 단어의 결합으로 사용되었지만 이후 안전도시는 하나의 용어로 개념화되어 이해되고 있으며 안전도시(safe community)라는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음(양문승·김자은, 2010; 강창현·문순영, 2017; 안승현, 2020).

- 지역 차원의 안전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다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러한 노력은 주로 안전도시 사업 또는 안전도시 인증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
- 국제적으로 다양한 안전도시 인증 프로그램이 존재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다양한 안전도시 사업이 수행되어 왔음.
- 국제적으로는 WHO의 International Safe Community Certifying Centre, Rockefeller 재단의 100 Resilient Cities, UNDRR의 MCR 캠페인 등이 있고, 국내에서는 2009년 안전도시 사업을 시작으로 안심마을 사업, 방재활동 우수마을 사업, 안전마을 사업,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이 시행되었음.

2) 주요 지표

- 지역안전지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0(안전지수의 공표)에 따라 매년 지역안전지수 안전등급을 공표하고 있는 제도로, 자치단체의 안전관리 책임성을 강화하고 취약 분야에 대한 자율적 개선을 통하여 주민은 더 안전해지고, 안전사고 및 안전사고 사망자는 체계적으로 감축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함(행정안전부 홈페이지1).
- 안전 관련 각종 통계를 활용하여 자치단체별 6개 분야(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안전역량을 5개 등급으로 객관적으로 계량화한 정보이며, 안전에 대한 자치단체의 관심유도와 주민의 안전을 위해 2010년부터 지역안전지수 제도 필요성 검토를 시작하여 2015년 첫 공표 이후 지속적으로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행정안전부 홈페이지2).
- 체감안전도에 대한 개념은 아직까지 학술적으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경찰에서는 체감안전도를 체감치안이나 치안체감도 등 이론상 범죄두려움을 역으로 치환한 형태에 가까운 용어를 사용하기도 했고, 내부만족도나 치안고객만족도 등 경영학이나 행정학의 고객만족도에 가까운 용어를 함께 사용하기도 하였음(정철우, 2015; 이병도, 2022).
- 이병도(2022)는 체감안전도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을 통하여 “국민이 인식하는 안전에 대한 다양한 요인과 거주지역의 경찰활동에 대한 국민의 평가에 대한 복합적 지표”를 학술적 의미의 체감안전도라고 정의하였음(이병도, 2022).
- 치안만족도 조사는 경찰과 접촉한 시민들과 접촉하지 않은 시민들을 구분하여 실시한 경찰청 주관 전국 단위 설문조사로 1999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이후 2011년부터 경찰과 접촉한

1) <https://www.mois.go.kr/frt/sub/a06/b10/safetyIndex/screen.do>. 검색일: 2023. 12. 22.

2) <https://www.mois.go.kr/frt/sub/a06/b10/safetyIndex/screen.do>. 검색일: 2023. 12. 22.

고객을 대상으로 한 치안만족도 조사와 비접촉고객만을 대상으로 한 체감안전도 조사로 나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이병도, 2022).

- 범죄두려움의 개념과 측정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양한 논의와 연구가 지속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진행되었던 관련 연구를 종합해보면 “범죄로부터 발생하는 정서적 반응 또는 범죄와 연관시키는 상징”(Ferraro & LaGrange, 1987)과 “정서적, 행동적, 인지적인 범죄에 대한 반응”(Ferraro & LaGrange, 1987; Ferraro, 1995; Pleysier, 2009)이라는 두 가지 정의로 나눌 수 있음(안재경·최이문, 2023).
- 인지적 차원으로서의 범죄두려움은 피해가능성과 피해 결과에 대한 인식을 포함하기 때문에 범죄 발생을 예방하거나, 범죄상황 발생 시 특정 방향으로 행위하려는 반응과 감정을 포함하는 정서적 차원의 범죄두려움과는 질적으로 다른 개념이며(Warr, 1987; Ferraro, 1995; Jackson, 2011), 범죄두려움의 개념과 측정에 대해 논의함에 있어서 반드시 이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함(안재경·최이문, 2023).
- 국내에서 범죄두려움에 대한 조사는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두려움을 크게 일반적 두려움과 구체적 두려움으로 구분하여 측정하고 있음.
- 범죄두려움의 측정에 있어서 개념의 모호성, 감정 정도 측정의 어려움, 일관성 있는 기준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아직까지도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과 범죄두려움이 실제 발생하는 범죄현상과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는다는 점에 주의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음(노성호·신소라, 2020; 안재경·최이문, 2023).

4. 인천시 안전 현황

1) 기본 현황

- 2021년 기준 인구는 2012년 대비 약 4.27% 증가하여 3,014,739명으로 집계되었으며 2019년 고점 기록 후 소폭 감소하였고, 세대당 인구는 2012년 2.63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2021년 기준 2.32명으로 향후 일정 기간 감소 추세가 예상됨.
- 2021년 기준 인구구조는 2017년에 비해 아동인구(14세 이하) 및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 용도지역 총면적은 2021년 12월 기준 약 1,094.27km²이며, 이 중 도시지역이 47.30%, 비도시지역(관리지역)이 28.86%, 농림지역이 23.83%를 차지함.

- 2021년 기준 전국 지역총생산액은 2,083조 7,949억 원이며, 인천시는 98조 6,705억 원으로 전국 지역총생산액의 4.74%를 차지하고 있음.
- 사업체 수는 3차 산업의 비율이 80.60%로 가장 높으며, 세부 업종을 살펴보면 3차 산업의 도매 및 소매업이 25.4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종사자 수 또한 3차 산업의 비율이 71.28%로 가장 높으나, 세부 업종을 살펴보면 2차 산업의 제조업이 20.4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2) 안전 현황

- 2022년 기준 인천시의 범죄 분야 지역안전지수는 2등급으로 과거 4년 대비 한 단계 상승하여 상대적으로 안전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연수구의 경우 최근 5년간 계속 1등급을 기록하여 인천시내 군·구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가장 안전한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미추홀구와 부평구는 최근 5년간 계속 4등급을 기록하며 상대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역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강화군 또한 최근 5년 중 4년간 4등급을 기록하고 있어 지역의 범죄 분야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음.
- 그러나 미추홀구와 부평구에 대한 접근방식과 강화군에 대한 접근방식은 도시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가 기반이 되어야 함.
- 최근 10년간 인천시의 범죄 통계를 5대 주요범죄 기준으로 살펴보면, 강도, 절도, 폭력의 경우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살인의 경우에는 유지, 강간·강제추행의 경우에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관할서별로는 모든 범죄 유형이 미추홀서에서 가장 많이 집계되고 있음.
- 최근 10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중요범죄 건수를 살펴보면, 전체 및 인천시 모두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체 범죄에서 인천시가 차지하는 비중을 분석해봤을 때 오히려 인천시는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인천시의 체감안전도 종합점수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지자체의 점수 또한 상승하는 추세여서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여전히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음.
- 특히, 인천시 내의 10개 관할서 중 미추홀서의 경우, 다른 관할서가 절뎀값에 있어서 우상향의 모습을 보이는 데 반하여 최근 10년간 60점대 중후반에서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 점과 2023년 결괏값이 최하위이면서 가장 높은 지역과는 15.7점 차이, 평균값과도 8.4점 차이가 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5. 결론 및 정책제언

1) 진단

- 객관적 지표로 확인할 수 있는 인천시의 전반적인 안전 현황은 안전도가 낮다고 평가할 정도의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음.
- 다른 지역 대비 상대적인 안전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지역안전지수가 보여주는 것처럼 생활안전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의 등급이 2등급을 기록하고 있고,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범죄 분야도 2021년까지 지난 4년간 3등급을 유지해 오다가 2022년 2등급으로 상향되었음.
- 그러나 범죄와 관련한 주요 지표를 살펴본 결과,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안전지수 등급과 달리 개별 지표들을 통해서는 범죄 분야의 취약성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인천시 내 군·구별로 안전 현황에 있어서 매우 큰 격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실제 안전 관련 지표의 격차보다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체감하는 안전에 대한 인식의 격차가 훨씬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검토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두 가지는, 첫째, 인천시는 안전한 도시지만 잘못 형성된 도시이미지로 인해 오명을 쓰고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것, 둘째, 지나친 ‘스포트라이트 효과(spotlight effect)’를 극복하고 인천시만의 도시경쟁력 제고 전략에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2) 제언

- 도시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전략은 도시를 어떻게 브랜딩하고 마케팅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이 과정에서 도시의 정체성을 분석하는 작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는 단순히 안전 분야에만 국한하여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님.
- 안전한 도시라는 것을 입증받기 위해 안전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요소 중 하나로 안전을 관리하는 접근방식이 필요함.
- 안전 측면에서의 도시이미지를 어떻게 제고할 것인지에 단편적으로 집중할 것이 아니라 도시경쟁력 제고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전략계획 수립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음.
- 지역안전지수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등급이 낮은 생활안전 분야에 대한 개선 노력으로부터 출발할 필요가 있는데,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도는 범죄 분야보다 실제 시민들의 삶 주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작은 불안 요소에 의해 영향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기초질서의 확립 노력 및 유관기관의 안전 개선 노력의 시각적 노출에 의한 효과성을 검토하여 강화하여야 함.

-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제시함.
 - ① 범죄 예방과 관련한 중앙부처 지원사업 참여 및 광역자치단체 자체사업의 추진
 - ② 도시재생 연계 테마형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의 추진 및 브랜드화
 - ③ 도시경쟁력 평가체계 내 안전 관련 지표 개선 노력

인천광역시 안전문화 확산 및 정착 방안

■ 안승현 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 초빙연구위원

■ 조성윤 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장

1. 서론

-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계기로 안전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관련 법·제도를 정비, 안전문화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나, 2014년 세월호 참사, 2022년 이태원 참사를 비롯한 각종 대형 재난안전 사고의 반복은 여전히 낮은 우리 사회의 안전문화 수준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음.
- 인천광역시는 안전문화운동 추진 인천광역시협의회를 구성하여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협의체 차원의 활동보다는 소속 단체들의 개별 활동 중심으로 안전문화활동이 전개되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 또한, 안전문화활동이 홍보·캠페인 중심으로 시민을 객체화하고 있어서 지역사회 안전 제고의 한 축을 담당하는 시민의 주체적 활동 기회가 제한되고 있음.
- 재난안전 환경의 변화 속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안전문화활동 전개를 통해 지역사회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시민이 재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주관적 위험 요소를 발굴하고 지역의 안전 문제 해결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안전의식의 고양에 대한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안전문화 정착 및 확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하여 인천광역시의 안전문화활동 추진 현황과 한계 및 쟁점을 파악하고, 인천광역시의 도시 특성 및 재난안전 환경을 분석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안전문화활동 전략 마련을 위한 요인을 도출하여, 장·단기적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실효성 높고 적용가능성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임.

2. 안전문화의 이해

1) 안전문화의 등장배경 및 개념

- 1986년 발생한 체르노빌 원전사고를 계기로 안전 분야에 있어서 안전문화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안전문화의 개념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안전문화의 구성 요소에 관한 연구들이 수행되었음(최호진·오윤경, 2015: 19).
 - Cooper(2000)는 구성 요소로 ‘주관적인 개인의 심리’, ‘관측 가능한 안전행태’, ‘외적인 상황 및 안전관리시스템’을 제시, Shein(2004)은 ‘인위적 산물’, ‘가치’, ‘암묵적 가정과 규칙’을 제시(오영민, 2014: 56; 최호진·오윤경, 2015: 19).
 - 김근영 외(2012)는 ‘가치’, ‘규범’, ‘행동’, ‘시스템’을 구성 요소로 제시하고, 안전문화를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안전에 관한 가치, 규범, 행동, 시스템 모두가 준수되는 것”이라고 재정의하였음(서재호 외, 2014: 314; 최호진·오윤경, 2015: 20).
- 현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새로운 안전문화 개념으로 “안전을 실천하는 의식, 안전을 유도하는 제도, 안전을 가능하게 하는 인프라가 결합해 만들어 내는 사회적 문화적 산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음(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 안전의식: 안전제일의 가치관이 개인의 생활이나 조직의 활동 속에 체질화된 상태
 - 안전제도: 안전한 활동을 이끌어내고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법, 제도 등
 - 인프라: 불안정한 상태를 제거한 시설물 및 안전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시스템

2) 관련 법률 검토

- 안전문화 관련 법률 검토를 토대로 안전문화활동의 법적 근거, 안전문화 소관 조직, 안전문화활동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① 안전문화활동의 법적 근거
 - 안전문화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안전교육의 경우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이하안전교육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특히, 재난안전법에서 안전문화활동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으로써 정부 차원에서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정책활동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안전교육법을 통하여 안전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에 있어 안전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 활동을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 인천광역시 또한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를 통하여 안전문화와 안전교육에 대한 지자체 차원 활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② 안전문화 소관 조직

-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 총괄부처로서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역할 수행을 위하여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하는 사무를 관장함.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재난안전관리본부 내의 안전정책실이 안전문화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고, 동 시행령 시행규칙에서는 안전정책실 내에 안전문화교육과를 설치하여 안전문화 및 안전교육 관련 사무를 분장하도록 함.
- 인천광역시의 경우,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시민안전본부 내 안전예방과가 안전문화 및 안전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③ 안전문화활동의 추진

- 재난안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문화활동과 그 밖에 안전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5는 안전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로 구성된 중앙·지방협의체 구성·운영을 규정하고 있음.
- 안전문화운동 추진 중앙협의회는 「안전문화운동 추진 중앙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라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 운영 및 참여,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캠페인 및 홍보,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을 위한 활동 등 다양한 안전문화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 안문협 또한 지자체 내에서 다양한 안전문화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운영되고 있음.

3) 주요 정책 검토

- 산업화, 도시화, 정보화 등 급속한 재난환경의 변화 속에서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1977년 방재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국가적 차원의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였음(중앙안전관리위원회·국민안전처, 2014: 205).
- 2004년 재난안전법의 입법 및 소방방재청 출범에 따라 방재계획과 재난관리계획을 안전관리계획으로 통합하였음.
- 현행 제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20-2024)에서는 3대 목표 중 하나로 ‘스스로 안전을 지키는 국민’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전략 중 ‘1. 포용적 안전관리’와 ‘2.

예방적 생활안전' 등에서 안전문화, 안전교육 관련 중점 추진과제를 설정함 (중앙안전관리위원회, 2019: 40).

- 이태원 참사 이후 인파밀집 사고 재발방지 대책과 국가안전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편을 위해 범정부 종합대책을 수립하였고, '온국민이 실천하고 행동하는 안전문화 확산'이라는 「『행동(실천)』 대전환」을 기본방향 중 하나로 설정하고, 안전교육및 안전문화 관련 추진전략으로 '5. 민간 참여와 협업 중심 안전관리 활성화'를 제시함(관계부처 합동, 2003b: 1).

3. 사례 분석

1) 안전문화대상 안전문화 우수사례

- 국민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문화운동 참여 확산을 위해 기관·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현장 우수사례의 발굴 및 보급을 목적으로 안전문화 우수사례를 공모·선정하여 발표하고 이를 사례집으로 구성하여 발간하고 있음.
- 심사는 안전문화 기반, 안전문화 활동, 안전문화 성과의 세 가지 항목으로 구분하고, 정부정책의 참여도를 가점으로 부여하여 종합점으로 평가함.
 - 2019년 안전문화 우수사례집에 수록된 사례는 총 40건으로, 각 사례를 안전문화활동 주요 수단(점검, 교육, 캠페인), 협업, 그리고 공간(영역) 기준으로 분류하여 총 다섯 개 범주로 나누고, 각 범주에 해당하는 광역·기초지자체,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민간기업의 선정 사례를 소개하고 있음.
 - 2022년 안전문화 우수사례집에 수록된 사례는 총 19건이며, 각 사례를 안전문화활동단체(지자체, 민간기관) 구분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크게 두 개의 범주로 나누고, 각 범주에 해당하는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의 선정 사례를 소개하고 있음.

2) 주민참여형 안전문화 활동 사례

- 2016~2018년 진행된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에서는 주민공동체가 직접 참여하고 실천하는 안전문화활동을 추진하였음.
- 기존의 안전문화운동이 일방적이거나 이벤트성 활동, 불특정 다수에 대한 홍보성 활동이 주를 이루었던 반면, 해당 사업에서는 주민공동체가 의견을 제시하고 활동에 참여하는 안전문화활동을 추진하였기에 시민참여형 안전문화활동 기반 조성을 위한 전략 마련에 참고·활용할 가치가 있음.

4. 인천광역시 안전문화 현황

1) 재난안전 환경

(1) 국내·외 여건

- 재난안전 환경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STEEP 분석 결과를 정리함.

[표 1] 재난안전 환경 분석(STEEP)

항목	내용
사회적 측면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노인, 장애인, 비정규직 및 외국인 등 다양한 재난취약계층 증가
기술적 측면	기술의 초고도화 및 사회기반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복합재난의 위험성 증가
경제적 측면	전 세계적으로 경제성장동력의 저하 및 빈부격차 확대, 이로 인한 사회갈등 확대로 사회적 소요 우려 증가
생태·환경적 측면	기후변화 심화에 따라 자연재난의 대형화, 새로운 유형의 재난 발생 가능성 증가
정치·정책적 측면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 국경을 넘나드는 재난의 확산으로 국제적 협력 필요성 증대 및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의 교훈을 바탕으로 재난안전관리체계의 현장 작동성 강화 및 새로운 위협을 상시 발굴·예측하는 대비체계 구축 필요성 증대

- 국제사회의 재난안전 분야 동향은 ‘재난관리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회복력 및 책임 공유를 강조’하는 추세로 가고 있음.

(2) 지역 여건

- 재난에 취약한 고령인구 및 여성, 1인 세대 등의 증가로 인하여 취약계층의 안전복지 수요가 증대되고, 재난약자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사회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신종·복합 재난의 발생 가능성 증가, 초고층 복합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등의 증가로 대형재난 발생가능성이 높아지고 이에 따른 위험성도 증가함.
-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 현상으로 향후 대규모 자연재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2017년→2100년)되며, 해수면 상승, 폭우 등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됨.
- 재해취약성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1등급에서 3등급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폭우의 경우 10개 군·구 중 5개 구가 4등급의 취약지역으로 분석되어, 전국에서 상대적으로 홍수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지역안전지수는 교통, 화재, 범죄, 자살 분야 2등급, 감염병 분야 3등급, 생활안전 분야 5등급으로 나타났는데, 대부분의 분야에서 등급이 개선 또는 유지되었으나 생활안전 분야의 등급이 4등급에서 5등급으로 하락하여 대책 마련이 요구됨.

3) 인천광역시 안전문화 현황 분석 및 전략 도출

- 인천광역시 안전문화 현황에 대한 SWOT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 2] SWOT 분석을 통한 요인 도출

항목	내용
Strengths	1. 안전예방과의 적극적 행정과 안전도시연구센터의 운영 2. 안문협 활동 및 교류의 정례화 3. 안전문화운동 활동단체의 자발적 활동 의지 및 잠재력
Weaknesses	1. 안전문화운동의 시민참여 미흡 및 대상화 2. 안문협 활동의 기획·조정 기능 및 중간지원조직의 부재 3. 안전문화운동 활동단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미흡
Opportunities	1.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에 따른 안전문화 정책적 지원 2. UNDRR 롤모델도시 인증에 따른 책무사항 이행 노력 지속 3. 안문협 운영에 대한 높은 기대감과 참여 의지
Threats	1.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부정 사용 이슈로 인한 지원 분위기 냉각 2. 도시 특성에 따른 재해취약성의 증가 3. 홍보·캠페인 중심의 안전문화운동으로 인한 시민들의 안전의식 임계점 도달 지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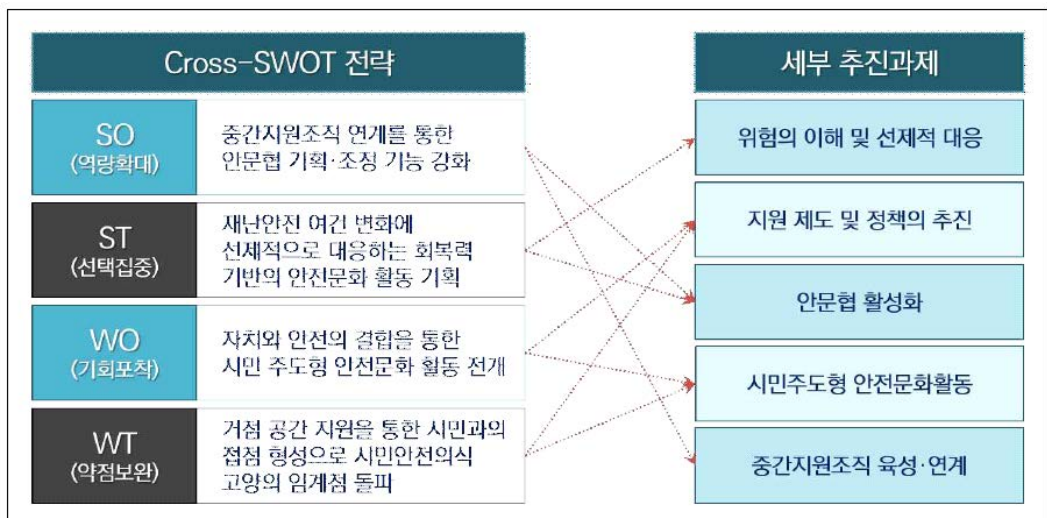
5. 결론

1) 연구종합

- 안전문화에 대한 개념을 “안전을 실천하는 의식, 안전을 유도하는 제도, 안전을 가능하게 하는 인프라가 만들어 내는 사회적·문화적 산물”이라고 정의하였을 때, 안전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인프라’, ‘제도(규제)’, 그리고 ‘의식’의 3요소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안전문화 진흥 및 안전문화활동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법률의 규정, 그리고 국가적 차원의 기본계획 수립을 통하여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실효성 있는 정책의 추진과 함께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게 할 것인가의 고민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결국 중요한 것은 ‘인프라’와 ‘제도’가 아무리 잘 갖추어져 있어도 개인의 ‘의식’이 필요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안전사고의 위험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따라서 안전문화의 정착 및 확산 방안을 고민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사안 중 하나는 안전의식 고양의 임계점을 넘어서기 위한 전략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있음.
- 인천광역시는 그 지역적 특성으로 재난안전 관리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안전문화 진흥을 통한 지역 안전의 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하고 있음.
- 안전문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의 적극적인 행정과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연구기관의 설립·운영, 그리고 인천시 안문협의 정례적 교류, 안전문화활동 수행 단체들의 높은 자발적 활동 의지와 잠재력이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또한 국가적 차원의 안전문화 관련 정책적 지원 분위기, UNDRR 롤모델도시라는 인천광역시의 위상과 책무사항 이행 노력 등이 인천광역시의 안전문화를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음.
- 다만, 안전문화활동의 내용, 추진체계, 추진방식에 있어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안전문화활동의 효율성 및 효과성, 그리고 지속가능성 및 확장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반드시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보임.
- 따라서 인천광역시의 안전문화 수준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안전문화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현실성 있는 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고, 이 과정에서 앞서 언급한 인천광역시의 강점 요인, 약점 요인, 위기 요인, 기회 요인을 잘 고려하여 전략 수립에 활용하여야 함.

[그림 1] Cross-SWOT 분석을 통한 전략 도출



2) 정책제언

- 본 연구에서는 인천광역시 안전문화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을 바탕으로 몇 가지 정책적 개선방안을 검토하였고, 이를 토대로 인천광역시 안전문화 정착 및 확산을 위한 정책제언을 제시하였음.
- 다양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 아래에서 안전문화 관련 활동을 가장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직은 안문협이며, 따라서 새로운 조직을 구성하지 않는 한 안문협의 활성화를 통해 안전문화활동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함.
- 현존하는 위험 및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위험 요소를 발굴함에 있어서 지표, 통계 등을 기반으로 한 객관적 위험 분석도 중요하지만, 해당 자료로는 확인할 수 없는 주관적 위험 요소에 대해서도 수집·분석이 쉽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홍보하여 시민들의 생활 속에 안착시킬 필요가 있음.
- 자치 분야와 달리 안전 분야에 있어서 시민참여형 또는 시민주도형 사업은 진행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특히 지자체 안전 부서의 경우 이를 전담할 인력의 부족, 지원할 제도와 재원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진행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지만, 결국 안전문화가 생활 속에 자리 잡기 위해서는 시민이 객체가 아닌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의 전환과 과거 시행착오를 거치며 축적된 경험과 지식의 학습을 통해 적극적·선도적으로 추진하여야 함.
- 끝으로, 지역 안전도 제고를 위한 안전문화 정착과 확산 노력도 중요하지만, 안전문화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안전사고의 책임을 개인(시민)에게 전가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으므로, 정책 개발 과정에서 안전문화의 구성 요소인 인프라, 제도, 의식이 조화롭게 결합할 수 있도록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인천광역시 지역안전지수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염재원** 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 초빙연구위원

■ **조성윤** 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장

1. 서론

- 지역안전지수의 경우 핵심지표 선정 및 가중치 산정, 지역 여건 및 특성 반영, 상대비교 평가방식 등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등급 결과가 지역의 실질적 안전수준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지역안전지수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지역의 위해지표 경감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고 지자체 재난안전정책과 정합성과 연계성을 유지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인천시 지역안전지수 분야별 위해지표, 경감지표, 취약지표, 의식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지역안전지수 등급 향상 및 지역 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전략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둠.

2. 지역안전지수의 이해

1) 지역안전지수 개념과 의미

- 지역안전지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0에 근거하여 지역의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분야 통계지표를 활용하여 등급화함.
- 지역안전지수는 재난안전관리 실무자의 주관적 판단 개입의 여지가 적고 통계자료에 기반한 객관적 분석을 통해 합리적이고 실효성 높은 정책 수립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2) 지역안전지수 핵심지표 및 산출방법

- 2022년 이전의 지역안전지수 핵심지표는 위해, 취약, 경감지표로 구성되었으며 2022년 이후에는 의식지표가 새롭게 추가됨.
- 광역 시·도, 기초 시·군·구 그룹 간 지역안전지수 산출값을 비교 분석하여 그룹별로 1등급 10%, 2등급 25%, 3등급 30%, 4등급 25%, 5등급 10% 비율로 산정함.

3) 지역안전지수 정책 동향

- 지역안전지수는 2010년부터 지수 개발, 지자체 의견수렴, 맞춤형 컨설팅, All-care, 협업체계 운영, 의식측정 개발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고 있음.
- 최근에는 지역연구원과 협력체계를 확대 운영하여 지역 주도형 컨설팅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3년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핵심과제로 지방연구원과의 협업 강화를 선정함으로써 컨설팅 사업의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임.
- 지역안전지수 컨설팅 사업이 시행된 이후에도 지표 간 가중치, 산출방법, 지역특성 반영과 관련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안전지수 제도는 재난안전 문제점을 발굴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 가치가 있고 지역의 안전수준을 향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3. 인천광역시 지역안전지수 분석

1) 지역안전지수 지표별 유형화 및 특성 분석

- K-평균 군집분석을 활용하여 38개 지표를 4개의 군집으로 구분하였으며 군집 4에 6개 분야의 위해지표가 모두 군집되어 인천시 지역안전지수 등급 개선을 위해 위해지표의 집중적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4개 군집 유형 간 통계적으로 평균 차이가 발생하는지 분석을 통해 군집4 유형의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도출함.
 - 지역별로 ANOVA 분석 결과 미추홀구, 연수구, 계양구를 제외한 모든 기초지자체에서 군집 유형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남.

2) 지역안전지수 지역별 유형화 및 특성 분석

- K-평균 군집분석을 활용하여 기초지자체를 유형화한 결과 군집 1은 동구와 중구를 제외한 모든 구가 묶이고 군집 2와 3은 원도심과 도서지역이 혼재함.
- 지표별 ANOVA 분석 결과 인천시 위해지표는 지역유형 간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도출되어 인천시 지역안전지수 등급 향상을 위해 위해지표를 중점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4. 인천광역시 지역안전지수의 개선 방향

1) 인천광역시 실무자 의견조사

- 설문조사는 2023년 11월 2일부터 11월 17일까지 16일간 진행되었으며 지역안전지수의 이해, 실효성, 문제점 및 개선방안의 3개 영역, 총 21개 문항으로 구성됨.
- 실무자 의견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지역안전지수 제도 개선을 위한 방향과 인천시 지역안전지수 개선방안을 제시함.
 - 지역안전지수 제도 차원에서는 지역연구원에서 꾸준히 제기해 온 지역 특성을 고려한 평가, 지표 간 가중치 조정의 문제를 해결하여 지역안전지수 제도의 실효성을 증진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지역안전지수 제도, 컨설팅 사업은 인천시 실무자의 이해도 증진에 도움이 되며 다양한 재난안전 사업 추진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사업규모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치고 있음.
 - 그러나 지역안전지수 제도가 인천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지역안전지수 담당인력 확충과 함께 지역안전지수로 인한 가중 업무를 완화시켜줄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인천시 지역안전지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기존 인천시 정책과 연계한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지역안전지수 분야별 인천시 관련 정책 및 계획을 검토하고 지역안전지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지역안전지수 분야별 인천광역시 추진시책

- 인천시는 교통안전 시행계획, 화재예방정책 시행계획, 구조·구급 집행계획, 자살예방시행계획, 감염병예방 및 관리 시행계획을 통해 지역안전지수 분야별 위해지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수행하고 있음.

5. 결론

1) 인천형 지역안전지수 제도 개선방안

- 지역 특성을 반영한 가중치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유형화한 이후 유형별로 가중치를 다르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안전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도시·도농복합·농촌별로 다른 지표 및 가중치를 활용한 연구 결과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지표를 검토한 이후 이론적 검토 및 전문가 의견조사 과정을 거쳐 대체지표를 발굴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음.
- 교통사고 분야에서는 교통문화지수, 교통안전지수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화재 분야에서는 초고층 건축물, 전통시장 관련 취약지표와 소방력 관련 경감지표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범죄 분야에서는 시민 체감안전도를 의식지표로 고려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함.
- 생활안전 분야는 낙상, 상해 등 발생빈도가 높은 인천시 사고 지표를 고려해야 함.
- 자살 분야에서는 연령, 경제적 문제와 관련된 취약지표와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관련된 경감지표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
- 감염병 분야에서는 박탈지수를 인천시 취약지표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인천광역시 지역안전지수 분야별 등급 개선방안

- 지역안전지수 분야별 인천시 시책 및 계획을 검토하고 관련 계획과의 정합성과 연계성을 고려하여 인천시 지역안전지수 개선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최근 고령운전자의 급발진 사고, 도로 장애물 충돌 등 차량 단독사고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만큼 사고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함.
- 주상복합 등 고층건축물 안전관리, 산업단지 소방안전대책, 재난취약시설 화재안전관리 강화, 위험물제조소 등 안전관리 강화 등을 통해 화재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119생활안전대, 구조·구급 집행계획 내 세부 추진과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시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생활안전 분야 지역안전지수 등급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특히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추진시책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생명사랑택시, 생명사랑학원, 생명사랑약국, 생명사랑병원, 생명사랑간호사, 생명사랑활동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고령층 자살을 예방하면서 지역의 대응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종합계획수립,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개정, 방역물품 확보 및 관리, 신종감염병 대비 격리입원치료 병상 운영의 추진과제를 통해 인천시 감염병 위기 대비 체계를 고도해야 함.
- 또한 2022년 재난안전 분야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수립한 「인천광역시 안전도시 기본계획」과의 정합성 및 연계성을 고려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 교통신호 시설 설치 및 보수,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교통운영개선사업,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 조성사업 등 기존 안전대책과 신규 및 제안대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시책 종합시책 추진,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설치, 화재취약지역 비상소화장치 설치, 전통시장 화재예방대책 추진, 산업단지 대형화재 예방대책 추진, 주상복합 등 고층건축물 소방안전대책 추진 등 기존 안전대책과 신규 및 제안대책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정책, 학교폭력 예방사업 등 기존 안전관리 대책과 범죄취약지역 분석 및 공간기반 범죄 예방사업 실시 등의 제안 안전관리 대책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감염병 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 감염병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생물테러 및 신종재출현 감염병 대응훈련 실시, 의료 관련 감염병 및 주요감염병 표본감시 등 기존 시책과 신규 및 제안 안전관리 대책을 활용하여 지역안전지수 등급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인천광역시 도시침수 위험성 분석 및 피해 저감방안 연구

■ **염재원** 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 초빙연구위원

■ **조성윤** 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장

1. 서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 현상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여름철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
- 2023년 2월 국토교통부는 재해예방형 도시계획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취약지역 또는 취약주택의 정비와 해소를 대폭 지원하기 위해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이하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을 발표함.
 -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의 주요 목적은 도시 재해취약성 분석의 분석단위, 분석지표 등 분석방법을 정비하여 결과의 신뢰도와 활용도를 개선하는 것임.
- 인천시의 경우 도시의 과밀화 및 노후화로 인해 침수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큰 만큼 고도화된 재해취약성분석을 선제적으로 적용하고 격자 단위의 분석을 통해 위험지역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 함.

2)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인천시의 물리적, 사회경제적, 제도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세한 공간적 범위에서 도시침수 위험성을 진단하고 신뢰도와 활용도를 개선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실효성 높은 피해 저감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음.

3) 연구방법

- 2장에서는 도시침수 위험성 분석과 관련된 이론적 고찰을 수행함.

- 3장에서는 도시 재해취약성 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자료를 격자 단위로 구축하고 공간자료를 중첩하여 인천시 도시침수 위험성 분석을 수행함.
- 4장에서는 3장의 도시침수 위험성 분석 결과와 토지피복지도, 하수도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중첩하여 분석하고 사례지역을 선정하여 현장 조사를 수행함.
- 5장에서는 도시침수 위험성 분석 결과와 사례지역 현장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목표 기간별, 토지이용용도별 인천시 도시침수 피해 저감방안을 제시함.

2. 도시침수의 이해

1) 도시침수 정의와 의미

- 「재해지도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지침」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하천의 수위가 상승해 범람하거나 집중호우, 하수관거 용량 부족 등의 원인으로 우수가 유출되어 도시지역 내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 정의함.

2) 도시침수 위험성 분석 연구 동향

- 수문 모형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유역 수문분석을 수행하는 연구와 국토부의 도시 재해취약성 분석 방법과 같은 취약성 지표를 활용한 연구가 수행되어 옴.
- 본 연구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재해취약성분석 방법에 따라 도시침수 위험성 분석을 수행하되 재해취약성분석과는 차별성을 가진 분석을 수행하고자 함.
 - (공간적 범위) 인천시 8구를 100m*100m 격자 단위로 분석함.
 - (분석지표) 재해취약성분석에서 활용하지 않는 지표를 추가하고 분석 결과와 토지이용형태, 하수도 자료, 배수분구 자료를 중첩한 분석을 추가로 수행함.
 - (지표 표준화 방법) 재해취약성분석과는 달리 최소최대법(Min-Max)으로 정규화함.
 - (가중치 적용 방법) 지표 개수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활용함.

3. 인천광역시 도시침수 위험성 분석

1) 인천광역시 도시침수 위험성 분석 방법

- 인천시 8구를 100m*100m 격자 49,277개로 변환하여 자료를 구축함.

-
- 기상청 자료, 인천시 내부 자료, 공공데이터포털, 국토정보플랫폼 국토정보맵, 건축데이터 민간개방 시스템, 환경부 환경공간정보서비스 자료를 활용하여 구축함.

2) 인천광역시 도시침수 위험성 분석 결과

- **(현재 도시침수 위험성)** 49,277개 격자 중 6,422개가 1등급, 14,422개가 2등급으로 나타났으며 인천시의 약 42.3% 격자가 극한 강우 현상에 노출이 많거나 취약 인구 및 기반 시설이 많아 침수 피해에 취약한 지역으로 분석됨.
- **(미래 도시침수 위험성)** 49,277개 격자 중 290개가 1등급, 3,433개가 2등급으로 나타났으며 인천시의 약 7.6% 격자가 미래에 극한 강우 현상에 노출이 많거나 인구와 불투수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미래 침수 피해에 취약해질 것으로 나타남.
- **(종합 도시침수 위험성)** 49,277개 격자 중 6,422개가 1등급, 14,989가 2등급으로 나타났으며 인천시의 약 43.5% 격자가 침수 피해에 위험한 지역으로 도출됨.
- 중구의 58%가 침수 피해에 상대적으로 위험하나 위험지역 대부분이 공항으로 나타난 만큼 도시침수 위험성 분석 결과와 토지피복도 중첩 분석이 추가로 필요함.

4. 인천광역시 도시침수 위험성 분석 활용

1) 유역특성을 고려한 도시침수 위험성 진단

- 위험지역의 비율이 높은 배수분구는 인천시의 남서쪽에 대부분 있고 해안가와 접한 연안 지역이거나 하수관망이 집중적으로 있는 지역인 것으로 나타남.
- 유역특성을 고려한 분석 결과가 행정구역 기준의 분석 결과에 비해 지역 간 위험지역 편차가 큰 것으로 도출됨. 즉 배수분구 기준의 위험성 분석 결과 해석이 행정구역 기준에 비해 더 적합할 수 있음을 시사함.

2) 토지이용특성을 고려한 도시침수 위험성 진단

- 토지이용형태별로 분류하여 지역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8구의 도시침수 위험지역의 대부분이 주거, 상업, 공업, 교통, 공공시설지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됨.

- 하수관망 공간자료를 토지이용형태별 도시침수 위험성 분석 결과와 중첩한 결과 인천시 위험지역은 대부분 불투수지역에 해당하면서 하수관거 밀도가 높은 지역이거나 하수관망 끝점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도출됨.
- 본 연구에서는 위험지역의 불투수층 비율이 높고 상습 침수지구가 많으면서 2022년 집중호우로 인한 물난리를 겪었던 부평구를 사례지역으로 선정함. 2023년 7월 11일에도 시간당 68mm 호우로 인해 삼산동 서부 간선수로 부근 도로가 침수되기도 함.
- 부평구 현장 조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본 연구의 도시침수 위험성 분석 결과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도시침수로 인한 피해는 불투수층으로 인한 우수 유출 또는 하수관거 용량 부족으로 인한 역류 등이 발생하면서 저지대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큼.

5. 결론

1) 단계별 도시침수 피해 저감방안

- 인천시 도시침수 위험성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도시침수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방재지구 설정, 위험지역 내 개발사업 제한 등의 장기 대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수문 모형 프로그램을 활용한 연구 결과와 종합한 연구가 추가로 필요함.

2) 토지이용특성을 고려한 도시침수 피해 저감전략

- 인천시 도시침수 피해 저감을 위해서 자연적 물순환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토지이용용도별로 다른 LID 기술요소를 적용해야 함.

3) 지역사회특성을 고려한 도시침수 피해 저감전략

- 사회경제적·물리환경적 취약성이 모두 높은 지역은 방재지구 활성화, 도시재생 및 정비사업, 공공매입 등을 통해 도시침수 위험성을 근본적으로 저감할 필요가 있음.
- 사회경제적 취약성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물리환경적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개폐식 방범창, 차수판 등 설치 사업, 하수도 정비사업 등을 적용할 수 있음.
- 사회경제적 취약성은 높지만 물리환경적 취약성이 낮은 지역은 인천시에서 시행하는 취약계층 1:1 담당자 매칭 사업,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 등을 적용해야 함.

인천광역시 중대시민재해 주요 이슈 및 대응 방안

■ 조성윤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1. 서론

- 안전보건관리 의무 소홀에 따른 각종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안전관리 주체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인간의 기본권인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한 강력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됨.
- 2021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확보 이행에 관한 최종적 의사결정권을 가진 자를 안전보건 책임 주체로 명시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의무사항과 의무 소홀 및 위반에 대한 처벌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인천광역시는 중대시민재해의 사전 예방과 지역사회 안전보건 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중대시민재해 개요

1) 배경과 의미

- 대다수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경우 최저기준 준수를 요구하고 있어 안전보건 환경 개선 및 사고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책임자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노력을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됨.
- 2021년 1월 27일, 정부는 기업 또는 기관을 경영하면서 인력과 예산 등 핵심 요소를 배치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사람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여 시행함.

-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에 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어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반시민의 안전보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였다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음.
- 책임자 처벌을 안전보건사고 예방의 핵심 수단으로 삼고 있으며 도급·용역·위탁 등의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원청 사업주가 하도급 관계에 있는 모든 수급인과 그 수급인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의무를 가지도록 한다는 점에서 기존 관계 법령과 차이가 있음.

2) 핵심내용

-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4호에서는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인 공중이용시설을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 의한 시설로 규정하고 있음.
- 동법 제2조 5호에서는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인 공중교통수단을 「도시철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동력차·객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 「해운법」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여객선, 「항공사업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로 규정하고 있음.
-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을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서는 유해·위험요인의 주기적인 점검, 재해발생 보고 및 신고, 원인조사에 따른 개선조치 대상 원료 또는 제조물을 명시하고 있음.
-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도,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을 위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발 방지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법령에 따른 개선 및 시정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업무를 수행해야 함.
- 동법 시행령 제10조에서는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로 ① 안전보건관리 필요인력 확보, ② 안전보건관리 필요예산 편성 및 집행, ③ 안전점검계획 수립 및 이행, ④ 안전계획 수립 및 이행, ⑤ 재해예방 업무처리절차 마련 및 이행, ⑥ 도급·용역·위탁 기준과 절차 마련 및 이행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 동법 시행령 제11조에서는 ‘공중이용시설 및 대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로 ①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점검, ② 안전보건 관리자 및 종사자 교육 이수 점검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 동법 시행령 제8조에서는 ‘원료·제조물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로 ① 안전보건관리 필요인력 확보, ② 안전보건관리 필요예산 편성 및 집행, ③ 유해·위험요인의 점검, 신고, 개선, ④ 안전보건관리 업무처리절차 마련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 동법 시행령 제9조에서는 ‘원료·제조물 관련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로 ①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점검, ② 의무교육 실시 점검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제16조에서는 ① 중대재해 종합 예방대책 수립·시행 및 발생원인 분석, ②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③ 중대재해 예방 기술 지원 및 지도, ④ 교육 및 홍보 시행을 정부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3) 시사점

-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이 안전보건사고 피해 저감이 아닌 엄벌주의에 따른 책임자 처벌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과잉입법이라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음.
-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의무 규정이 모호하여 법령을 해석하고 이행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또한, 성격이 다른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동일한 법에서 규정하여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다양하여 집행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적극적인 행정서비스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됨.

3. 사례 및 현황분석

1) 주요 안전보건사고 판례

- 일반적으로 중대시민재해가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광범위한 유형의 안전보건사고를 내포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실제 법령의 대상범위가 제한적이며 인적피해 기준의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여 공감대를 확보하기 어려움.

- 또한, 안전보건사고가 민간이 소유한 시설에서 발생하기 쉬우며 지방자치단체의 관리하에 있더라도 민간 위탁을 통해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중대시민재해를 적용하기 모호하며 설계, 제조, 설치상의 결함의 경우 그 인과관계를 소명하기 쉽지 않음.
- 중대시민재해를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의 문제로 접근하는 경우 행정기관의 판단, 시민과 언론의 판단, 법률상의 판단이 상이할 수 있으며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가'의 문제로 접근하는 경우 당시의 상황이나 피해자 행동, 사고를 발생시킨 매개체 등과 관련된 직접적인 원인(Immediate reason), 사고에 영향을 미친 구조적 결함 또는 운영상 문제 등과 관련된 근원적 원인(Underlying reason)이 복합적으로 얽혀있을 수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음.

2) 안전보건사고 발생 현황

- 최근 5년(2017-2021)간 인천광역시에서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자 또는 부상자가 매년 발생하고 있으며 주로 태풍과 호우에 의해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됨.
- 불가항력적인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에 대해서도 재난안전관리 책임 소홀에 따른 중대시민재해 적용이 가능함.
 - 토지이용이나 기반시설과 같은 인위적인 조건과 행정기관의 재난안전관리 태세와 맞물려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인적 요인이 작용한다고 보아야 함.
- 최근 5년(2017-2021)간 인천광역시에서는 도로교통사고와 화재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가 상당히 큰 것으로 조사됨.
- 2020년 질병관리청 국가손상정보포털 손상통계자료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손상환자 수는 총 124,835명으로 전국 손상환자 수의 6.59%이며 손상 사망자 수는 총 1,452명으로 전체인구의 0.05%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됨.
-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의 경우 자연재난에 비해 중대시민재해 적용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고 예방 및 피해 저감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요구됨.
 - 도로교통사고에 인한 사망자 수가 두드러지게 많으며 화재, 익사, 추락, 등산과 관련된 사망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

3) 시사점

- 지방자치단체는 시민들이 인식하고 공감하는 수준으로 안전보건관리 책임 영역을 확대하고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가 아닌 지역사회의 실질적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함.

- 인천광역시는 안전보건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해당 책임을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의무사항에 국한시키지 말고 자체 점검 및 진단을 통한 위험·위해요인 발굴과 안전보건관리의 전문성 및 실효성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노력을 추진해나가야 함.
- 안전보건사고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중점재난 유형을 파악하여 우선적으로 대응하되 ‘기타’ 또는 ‘미상’과 같은 사고 분류상의 한계로 사실이 왜곡될 수 있으며 발생빈도 및 피해규모를 통해 사고의 본질적 원인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각별하게 유의할 필요가 있음.

4. 여건 및 실태조사

1) 중대시민재해 관리 현황

- 2023년 4월 기준, 인천광역시가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해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총 280개소임.
- 인천광역시는 2022년 중대시민재해 적용시설 전수조사 실시를 시작으로 중대시민재해예방팀 조직,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대응 기본계획 수립, 의무사항 이행 자체진단 실시 등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음.
- 2023년 4월 17일, 「인천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중대시민재해 적용시설 점검 및 컨설팅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
- 또한, 상·하반기 중대시민재해 적용시설 안전보건관리 점검 보고회와 직원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찾아가는 행정컨설팅’을 추진하는 등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2) 중대시민재해 실무자 설문조사

-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인식 수준을 파악하고 의무사항 이행에 관한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안전보건관리 실무자 및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설문조사 결과 인천광역시 중대시민재해 적용시설 담당자 대부분이 중대시민재해를 비교적 잘 이해하고 있으며 법령의 효과를 비교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또한, 인천광역시 시민안전본부 실무자의 경우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법령의 효과를 비교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안전보건관리 업무절차 마련 및 이행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3) 시사점

- 「중대재해처벌법」이 시민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기본적이고 제한적인 조치라는 측면에서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국한되지 않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전략을 추진해나가는 것이 중요함.
- 시민의 관점에서 중대시민재해의 의미와 범위를 새롭게 고찰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이 불필요한 형식적 업무로 인식되지 않도록 절차의 합리성과 결과의 효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법령 시행 초기에 안전보건관리 실무자 및 담당자가 느끼는 혼란과 어려움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맞춤형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안전보건관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전문인력 및 예산 확보를 지원하고 중대시민재해 의무사항 이행기준을 구체화하는 노력이 요구됨.
- 또한,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견고하고 유기적인 인천광역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담당 부서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5. 결론

1) 중대시민재해 대응 방안

- ① 중대시민재해 의무사항 세부지침 마련
- 법령이 강제하고 있는 중대시민재해 의무사항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현장에서 혼란과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세부지침을 수립하여 원활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것이 급선무임.
- 중대시민재해 의무사항이 행정적 관리나 감독을 위한 단순 문서작업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개별업무의 목적과 필요성을 명료하게 설명하고 구체적인 내용과 체계를 제시하여 업무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안전계획 수립 지침, 비상 대피계획 수립 지침, 유해·위험요인 점검 및 위해성 평가 지침, 중대시민재해 보고 및 대응절차 수립 지침, 도급·용역·위탁 안전보건관리 능력 평가 지침, 중대시민재해 의무사항 이행평가 지침 등을 마련하여 주요 항목이 누락되거나 소홀하게 관리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② 중대시민재해 담당 부서 권한 및 역할 강화

-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대응 담당 부서의 인력 및 예산을 확충하고 적용시설에 대한 관리 및 감독 권한을 확대하여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안전보건관리의 영역이 광범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우며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대응 업무의 경우 사실상 적용시설의 자발적인 협조와 참여에 의존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담당 부서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정립하고 그에 상응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일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 근로자 안전보건환경 개선, 안전보건관리 전문성 강화, 안전보건 기술 개발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지역사회의 건강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음.

③ 중대시민재해 교육 및 토론 기회 확대

-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인식 제고를 위해 안전보건관리 실무자와 담당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인천광역시 안전보건관리 정책 안내 및 홍보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할 필요가 있음.
-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한 데 반해 의무사항 규정이 모호하여 과잉처벌의 우려가 있다는 논란이 있는 만큼 전문가 자문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인천광역시 중대시민재해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발전적 방안이 모색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일반시민이 생각하는 중대시민재해와 「중대재해처벌법」 상의 정의 간 간극이 존재하므로 시민참여 토론회를 개최하여 법적 대상범위 및 인적피해 범위 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법령의 한계와 가능성을 다각적으로 진단하는 기회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④ 안전보건 취약성 진단 및 사고원인 조사체계 마련

- 현장 중심의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안전보건 취약성 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사고 발생 시 구체적인 원인을 조사하여 유사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 사고원인 조사는 사고를 발생시킨 매개체와 관련된 직접적인 원인과 사고에 영향을 미친 구조적 결함 또는 운영상 문제 등과 관련된 근원적인 원인을 구분하여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임시적인 처방이 아닌 근본적 원인을 제거 및 통제하기 위해 필요함.

- 안전보건 취약성 진단 및 사고원인 조사는 책임자, 담당자, 실무자, 전문가가 모두 참여하여 시설, 장비 등 물적 위험요인과 업무절차, 작업자 행동 등 인적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안전보건 환경의 전반적인 개선을 위해 발전적 의견을 공유하는 중요한 절차임.
- ⑤ 안전보건체계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 경미한 사고, 심각한 재해, 잠재적 사건 발생 징후나 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등록 및 조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중대시민재해의 발생 동향 및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안전보건정책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주요 근거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안전보건사고의 원인과 특성을 파악하고 잠재적 중대시민재해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환경조건, 피해유형, 인명피해 정보, 재산피해 정보, 사고발생 경위 및 매개체, 사고발생 당시 피해자 행동, 사고발생 당시 책임자 및 담당자 행동, 기타 사고에 영향을 미칠만한 특이사항 등의 정보가 수집되어야 함.
 - 안전보건사고 데이터베이스를 인천광역시 내부시스템과 연계하여 안전보건진단 이력, 안전보건 취약성 진단 결과, 안전교육 및 훈련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위해·위험요인 신고, 제도 개선 의견수렴, 컨설팅 지원 등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⑥ 지역사회 안전보건 수준 및 역량 강화
 - 담당 부서의 노력만으로 안전보건사고 방지 및 피해 저감이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민간단체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안전보건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지역사회기반 안전보건관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관계 분야 전문가, 실무자, 시민 네트워크에 기반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공기관 및 시설물 관리, 주요 행사 및 활동 안전수준 점검, 안전보건 환경 개선 및 서비스 강화를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시민이 안전보건사고 발생 위험을 발견 또는 인지한 경우 담당 부서, 관할 경찰서 및 소방서에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핫라인을 개설하고 안전보건 전문가가 신고 시설을 신속하게 점검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2) 법·제도 개선 방안

- 「중대재해처벌법」 상의 적용 범위 및 처벌기준에 대한 합리성을 제고하고 의무 규정을 구체화하여 실질적인 현장 중심의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의제처리 조항을 확대하여 불필요한 행정업무의 기증을 막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외에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적 노력을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인 관심과 노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함.
-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안전보건사고 원인 개선 및 지역사회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안전보건관리 실무자 및 담당자 전문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인천광역시 환경교육센터 발전방향 연구

■ 한준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1. 연구 배경 및 목적

- 인천광역시는 20여 개 전문 환경교육단체들과의 긴밀한 협조 관계 하에 다양한 환경교육 활동을 적극 수행해왔으며, 2022년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되면서 관내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발판을 어느 정도 마련하였음.
- 이런 가운데 인천광역시가 2018년부터 지정해 운영해온 인천 환경교육센터는 광역환경교육센터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환경교육도시 위상에 걸맞는 단계로 한 발짝 도약해야 하는 필요성이 커졌고, 이를 위해 인천 환경교육센터의 발전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이 연구는 중앙정부와 인천광역시의 환경교육 관련 주요 계획과 제도를 검토하고, 기존에 환경교육도시로 선정된 지역의 광역환경교육센터 운영 사례를 검토하며, 관련 전문가 대상 인터뷰 등을 통해 환경교육도시로서 인천광역시에 걸맞는 인천 환경교육센터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중앙정부와 인천광역시의 계획 및 조례, 정부 지침 등에 대한 문헌 검토와 함께 타 광역지자체 운영 사례 분석, 관계자/공무원 인터뷰를 통해 연구를 수행하였음.

2. 중앙정부와 인천광역시의 환경정책

- 2021년 9월 24일 개정된 교육기본법에서는 제22조 2항(기후변화환경교육)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태전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였음.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7조(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에서도 다음과 같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교육, 홍보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기존의 「환경교육진흥법」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환경교육법)로 개정(2022.1.5.)되면서 환경교육도시 지정,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 등의 내용을 담았음.
- 2014년 수원시가 처음으로 환경교육시범도시 선언을 한 이후, 2016년에 성남시가 환경교육도시 선언, 2017년에 서울시가 환경학습도시 선언, 2019년에 충남, 부산, 안산시가 환경교육도시 선언을 하였음.
- 아울러 환경부는 2020년에 충청남도과 부산광역시, 수원시와 성남시, 2022년에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도봉구, 안산시, 용인시, 서산시를 환경교육도시로 선정함.
-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운영지침에서는 광역환경교육센터가 환경교육 단일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지역환경교육 기반 구축 및 지원, 국가·기초환경교육센터 운영 교량 역할을 하고, 기초환경교육센터는 관할지역 내 지역주민 대상 환경교육 주체로서 환경교육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환경교육 추진하는 것을 역할로 규정하였음.
- 2023년 10월 기준 전국에 광역환경교육센터가 18개 지정되어 있고, 기초환경교육센터는 63개 지정되어 있음.
- 인천광역시는 「제3차 국가환경교육종합계획」과 맥을 같이 하여 2020년 말 「제3차 인천환경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기후위기시대, 지속가능한 삶을 가꾸어가는 생태도시 인천”이라는 비전하에 ‘환경교육추진기반 구축’,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사회환경교육 확대’, ‘인천형환경교육 강화’의 4대 정책분야와 하부 실행과제를 제시함.
- ‘환경교육 추진기반 구축’ 분야 중 ‘민관협력 기반 활성화’ 정책과제와 관련해 6개 실행과제를 제시하였고, 여기에 ‘인천환경교육센터 전문성 강화’, ‘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 및 운영’이 포함.
- 2012년 제정된 ‘인천광역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는 2020년과 2022년 개정을 거쳐 2023년 ‘인천광역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되었고, 환경교육센터의 지정(제13조), 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제14조), 재정지원(제15조) 관련 내용이 포함됨.
- 인천광역시에는 공공기관 직영 13개소, 위탁 6개소, 민간 27개소, 총 46개소의 환경교육시설이 소재함.
- 인천 공공과 민간의 환경교육기관 46개소에서 진행하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은 210개(유아 대상 23개, 초등학생 대상 55개, 청소년 대상 53개, 성인 대상 16개, 전 연령 대상 55개, 기타 8개)임.

3. 타 지자체 환경교육센터 운영 현황

- 인천광역시보다 앞서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된 광역지자체는 충청남도과 부산광역시이며 이 두 지자체의 광역환경교육센터 사례를 살펴보았음.
- 충청남도는 2013년에 전국 최초로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지정받고, 2020년에 공무원 환경교육 의무화를 하였으며, 2021년에 모든 기초지자체에 환경교육조례를 제정하여 2023년 모든 기초지자체에 총 16개 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을 완료하였음.
- 모든 시·군에 환경교육 조례를 제정하여 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과 지원, 기초지자체 환경교육 예산 지원, 환경교육 지원단 구성과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음.
- 이렇게 충남이 적극적일 수 있었던 것은 전임 지자체장의 적극적인 의지가 기반이 되어 광역환경교육센터 설립을 위한 부지 기부와 건물 건립에 대한 도비 지원, 그리고 전반적인 프로그램 세팅 관련 전문가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환경교육도시 선언, 공무원 환경교육 의무화, 모든 시군 예산 지원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음.
- 기초환경교육센터에 대한 국비 예산지원이 없기 때문에 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는데, 충남의 경우 도 차원에서 기초지자체에 대해 예산지원을 했음.
- 부산광역시는 2017년 광역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하였고, 2020년에 환경부로부터 환경교육도시 지정을 받았으며, 2021년 4개의 기초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하였음.
- 부산광역시 중에서 3개 구에서 환경교육 조례를 제정하였고, 이 중에서 연제구와 북구의 경우 기초환경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재정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음.

4. 인천 환경교육센터 운영 현황

- 인천 환경교육센터는 2018년에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가 최초 지정을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에 재지정되어 2023년 말까지 운영 예정임.
- 현재 비상근 센터장 이외에 정규직 3명, 비정규직 1명이 근무하고 있음.
- 인천 환경교육센터는 ‘환경교육의 생활화, 주류화를 통한 「생태환경도시」 인천 이행 전문기관’을 비전으로 하여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지원)’, ‘학교 환경교육 프로그램(콘텐츠) 지원비율 확대’, ‘환경교육 종사자 연수참여율 확대’, ‘유관기관 연계협력 환경교육 사업 강화’, ‘환경교육 신규일자리 창출’을 경영목표로 삼고 있음.
- 그동안 연간 국비 1.5억원과 시비 1.5억원이 지원되었고, 그 외 사업비 보조를 일부 받았음.
- 아울러 인천에는 계양구와 부평구에 기초환경교육센터 2곳이 지정되어 있음.

5. 제언

- 첫째, 먼저 구조적인 측면에서 예산 지원 확대, 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 확대, 기초지자체 환경교육 관련 조례 제정 확대, 센터장 상근직 전환 및 구성원 전문성 강화, 안정적이고 독립적인 자체 공간 마련이 필요함.
- 둘째, 기능적인 측면에서 환경교육단체들과의 네트워킹 및 총괄 기능 강화, 인천광역시 및 국가환경교육센터와의 소통 및 연계, 협력 강화, 다양한 이해관계자, 기존 교육기관과의 네트워킹 및 협력 강화가 필요함.
- 셋째, 내용적인 측면에서 탄소중립 구현에 이바지하는 문제해결 중심의 실효성 있는 환경교육, 공무원 환경교육 의무화, 군부대 환경교육 지원, 인천 특화 환경교육, ESG 등 환경경영 강화를 위한 기업 대상 환경교육, 마을 단위 특화 환경교육이 강화되어야 함.

소래습지국가도시공원 추진을 위한 연결성 강화방안

■ 권전오 경제환경연구부 선임연구위원

- 인천광역시는 소래 염전의 가치, 근대 역사문화 상징성, 갯벌 및 하구 생태계 보전,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전, 시민의 자연체험, 도시환경개선 등의 필요성에 따라 소래습지생태공원 일원을 광역 해양생태 문화거점을 지향하는 국가도시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함.
- 인천시의 소래국가도시공원 구상안은 6개 주제공원으로 구성됨. 6개의 주제공원 간의 연결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의 정책을 제안함.
 - 주제(자연생태, 역사문화)를 통한 연결
 - 송도 조류대체서식지와 소래 A공원의 상호보완을 통한 연결
 - 보행육교를 통한 물리적인 연결
 - 이동수단, 이미지 사업, 시각적 연결
 - 제도를 통한 연결(하나의 도시계획시설 지정, 하나의 조직 운영)
 - 공원 이용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통한 연결
 - 시민들의 정서적 연결과 브랜드 파워 확산
- 시민 참여방안
 - 단위 프로젝트에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보다는 장기사업인 몽골 인천 희망의 숲에서 진행하였던 시민협의회 방식이 소래국가도시공원 사업추진에 더 적합할 것으로 판단함.
 - 시민협의회 방식은 시민이 주도하여 행사 참여, 홍보, 교육, 시민모금, 문화교류 등을 진행하고 공공에서 지원하는 민관 협력 모델임.

인천광역시 주민안전협의체 구축 방향

■ 안승현 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 초빙연구위원

■ 조성윤 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장

- 이태원 참사 이후 마련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통하여 재난 현장과 가까운 자치단체의 재난관리 역량 제고를 전략적 과제로 선정하고, 읍면동 최일선 기관의 안전관리 기능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복지센터 개편 및 읍면동 안전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자체 조치·협조과제로 제시하였음.
- 지역 단위에서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전 거버넌스의 구축·운영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협의체의 구성·운영 문제는 주민자치의 영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안전 분야와 자치 분야의 논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성공적인 정책 수행을 위한 주요 쟁점 사안들을 검토하여야 함.
- 안전협의체 구성·운영과 관련한 주요 쟁점으로는 첫째, 안전 분야 주민협의체 구성·운영의 현장적용성 문제, 둘째, ‘좋은(good)’ 지역안전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구성요소 문제, 셋째, 공동체 개념의 모호성에 따른 공간 단위의 문제, 넷째, 비구조적(안전활동 중심) 사업의 효과성 문제가 있음.
- 향후 안전협의체 구축·운영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인천시만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 모델 개발·적용을 위한 대비 차원에서 수행한 탐색적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제언을 제시함.
- 첫째, 읍면동이라는 공간적 속성보다 공동체라는 심리적 속성을 중심으로 안전협의체를 구성·운영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일회성 사업이 아닌 지속가능한 사업의 토대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끝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사업에 대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음.

인천광역시 주소정보시설을 활용한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발전 방안

■ 안승현 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 초빙연구위원

■ 조성윤 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장

- 연구목적 : 인천시 주소정보시설 및 CPTED 활용 현황을 살펴보고 국내외 선진사례를 파악하여 안전한 인천을 만들기 위한 주소정보시설 활용 CPTED 적용 방향을 제시함.
- 인천시 주소정보시설 활용 동향 : 인천시의 경우 2023년 11월 기준 약 242,000개 주소정보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1,781개의 주소정보시설을 활용한 CPTED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주소정보시설 및 CPTED 정책 동향 : 「제1차 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 「제1차 범죄예방 환경개선 기본계획」을 통해 주소정보시설을 활용한 CPTED 사업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LED, 비상벨 설치 등 직관적인 물리·환경적 요인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음.
- 주소정보시설을 활용한 CPTED 사업 효율성 증진 방안 : 지역 범죄 위험성을 효율적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범죄취약지역에 대한 분석이 우선시되어야 함. 또한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범죄예방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주소정보시설을 범죄취약지역 분석의 공간정보 플랫폼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인천시 주소정보시설을 활용한 CPTED 적용 방향 : 인천시 범죄취약지역을 도출하기 위한 지표를 도출한 이후 경찰, 지역사회, 연구기관 간 데이터 공유 및 커뮤니티 매핑 과정을 통해 주소정보시설에 관련 속성값을 입력하고 범죄취약지역 도출 과정에 활용할 수 있음.

개발제한구역내 자연환경복원 후보지 도출

■ 권전오 경제환경연구부 선임연구위원

- 본 연구에서는 인천광역시 관내의 개발제한구역과 한남정맥 능선 기준 300m이내의 도시생태현황(비오톱현황)을 분석하여 훼손지 복구 사업대상지를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인천광역시 개발제한구역내 한남정맥 훼손지 복구사업 대상지 선정 기준 및 요건(안)
 - 정맥 능선 기준 좌우 300m 이내 지역(전체를 훼손지로 판정)
 - 복구 사업대상지는 훼손지가 30~50% 포함되어야 함. 즉, 능선 300m 밖으로 일부 나올 수 있음
 - 개소당 면적은 1만 제곱미터 이상
 - 생태민감지역, 환경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 시민의 여가활동을 위한 휴식공간 가능지역
 - 비오톱 등급이 낮은 유형에서 높은 유형으로 개선하는 것을 훼손지 복구 개념으로 정의함
- 훼손지 복구 사업대상지 5개소 제안
 - (계양구) 독실동 농경지 및 초지
 - (계양구) 아라뱃길 아라마루 인근 농경지
 - (남동구) 만수동 만부경로당 인근 경작지(초지)
 - (서구) 백석초등학교(유아교육진흥원) 인근 농경지 및 초지
 - (서구) 여우재 인근 경작지

인천광역시 지진 대응 이슈 및 정책 방향

■ 조성윤 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장

1. 배경과 목적

- 세계 곳곳에서 대규모 지진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2016년과 2017년 경주와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함.
- 인천시의 경우 지난 10년(2014~2023)간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총 37건 발생하였으며 조수간만의 차가 크고 해안을 매립해 조성된 신도시가 많아 해저지진 및 지진해일에 대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재계획 수립이 요구됨.
- 해외 선진국의 경우 과학적인 지진 및 단층 조사연구를 기반으로 지진 피해 및 손실 규모를 추정하고 도시의 구조적 안전성 강화 및 지역단위 지진 방재역량 강화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추진하고 있음.

2. 정책제언

- 지진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 도시 내 취약요인을 발굴하고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을 마련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체계적인 대응과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주요 건축물 및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 진단 및 단계별 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소방, 의료, 경찰 인력 및 자원 동원 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의 구조적, 비구조적 안전성이 종합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공공기관 및 핵심기반시설의 기능연속성 확보 대책을 수립하고 초광역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도시기능 마비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과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함.
- 지진방재 전문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인천시 지진피해 발생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진단하고 피해저감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지역사회기반 지진방재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진안전 교육 및 홍보를 확대하여 자율적이고 효과적인 지진 대응 및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RE100의 주요 동향 및 시사점

■ 한준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1. 배경과 목적

-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이 주요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소비전력의 100%를 최대 2050년까지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한다는 RE100 이니셔티브가 각광을 받고 있고, 2023년 8월 현재 가입기업 수가 415개임(국내 32개사 포함)
- 국내에서도 한국형 RE100(K-RE100)을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지역 차원에서는 산업단지 RE100을 통해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시도해볼 수 있는데, 경기도, 당진 등에서 이미 관련 계획을 발표하였음
- 이에 본고는 RE100 이니셔티브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를 비롯해 한국형 RE100 제도와 주요 지자체 재생에너지 비중 현황, 산업단지를 활용한 RE100 가능성을 살펴보고 관련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함

2. 정책제안

- 현 정부에서 재생에너지 정책이 다소 후퇴한 측면이 있으나, 세계 각국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중요한 잣대가 되었다는 점에서 재생에너지 지원 정책은 계속 강화되어야 하며, 국내 기업의 RE100 가입 확대를 대비해 재생에너지 공급 능력을 충분히 갖추도록 해야 함. (현재 RE100 기준에 맞는 재생에너지 비중은 전국 8.0%, 인천 2.1% 수준임)
- 산업단지는 전력 다소비 지역이면서 공장 지붕 등 유휴부지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민원이 적을 수 있고 계통 연계 측면에서 용이하므로 산업단지 RE100 추진을 검토해 볼 수 있으며, 인천의 경우 남동산단이 기존에 스마트그린 산단으로 지정된 바 있고 최근 '스마트에너지자급인프라 구축 및 운영사업'에도 선정되었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큼
- 일반 기업 대상으로 탄소중립 관련 글로벌 시장 동향 및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가 늘어날 수 있도록 정보제공과 교육이 중요하며, 특히 국내에서 RE100을 선언한 대기업의 협력사인 경우 향후 관련 영향을 받게 될 것이므로 이들 기업에 대한 우선적인 현황조사를 비롯해 정보제공, 교육이 중요함

2023년도 연구결과 요약집

교통물류연구부

I

2023년도 연구결과 요약집

교통·물류 분야

- **기획연구**

C-ITS사업 고도화를 위한 빅데이터 적용 방안 연구

- **정책연구**

해양산업클러스터 핵심산업(군) 선정 및 기본구상

글로벌 물류허브 육성을 위한 인천형 물류 체계 연구

송도 트램계획을 고려한 인천타워대로~첨단대로 자전거 전용도로 구축 방안 검토

영종국제도시 신교통수단 도입 기본구상 연구

특별교통수단 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

- **현안연구**

인천시 중앙버스전용차로 추진 연구

시내버스 준공영제 효율화 방안(안)

- **이슈브리프**

해사전문법원 인천 설립 당위성

C-ITS사업 고도화를 위한 빅데이터 적용 방안 연구

■ 김종형 교통물류연구부 선임연구위원

1. 연구 배경 및 목적

- 도시에서 발생하는 교통혼잡은 대부분 교차로에서 발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ITS 사업은 DSRC를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음 그러나, DSRC 특성상 짧은 송수신거리, 비싼 비용, 느린 속도 등으로 인해 면밀한 신호제어가 어려움
- 딥러닝과 스마트 교차로를 적용한 C-ITS 사업은 시간대별, 차로별, 방향별 교통량뿐만 아니라 차종, 사고, 번호판 등을 검지하여 실시간으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음
- 이러한 기술의 진일보를 통해 C-ITS 사업을 통해 기존 ITS 사업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실시간 자료 기반의 교통정책지원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음 다만, 구축하기 위한 비용이 상당하고 유지관리의 어려움으로 보완되어야 할 점이 있음
- 이 연구의 목적은 C-ITS 사업의 효율성과 비용 절감 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2. 기존문헌 고찰 및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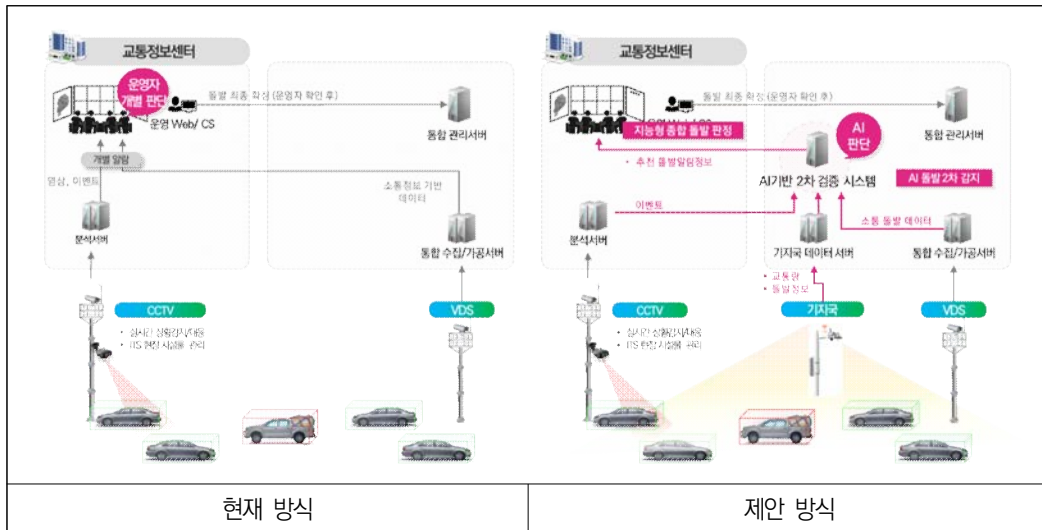
- C-ITS(Cooperative-Intelligent Transport System)는 차량과 차량, 차량과 도로 및 인프라, 차량과 사람 간 양방향 통신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통해 상황에 사전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임
- 우리나라는 2014년 시범사업을 구상하고 이후 인천시를 포함한 광역시에서 2020년을 전후로 C-ITS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특히, 도시 내 교차로의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이와 연계된 사업이 주축을 이루고 있음
- 교차로의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신호제어를 통해 원활하게 교통처리를 수행해야 함 그러나 기존 ITS 사업들은 주고받는 정보처리 속도가 느리고 정확하지 않아 한계가 있었음

- C-ITS 사업은 주행 중 주변(차량, 도로 인프라 등)과 통신하면서 교통상황을 공유하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처리하여 신호제어 속도 또한 빠르고 정확함 하지만, C-ITS 상용화는 아직까지 어려운 단계이며 장래 변화하는 환경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스마트 교차로에 설치되는 카메라와 설비들의 비용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초기 비용과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인천시에서도 청라, 송도, 영종, 검단 등의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이 진행됨에 따라 교통 네트워크가 복잡해지고 교차로 또한 증가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인천시 C-ITS 사업을 포함하여 고가의 장비 또는 설비 중심의 C-ITS 사업을 검토하고 이에 따른 장·단점과 보완 방안 제시가 필요함

3. 인천시 C-ITS 사업과 시사점

- 인천시는 2021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C-ITS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기존 ITS 사업의 감응신호 시스템, 긴급차 우선신호 시스템 등을 포함한 기초 IT 기술과 스마트 교차로가 중심이었음
 - 인천시는 사고와 지체시간 감소효과를 확인하고, 사고와 혼잡이 잦은 교차로의 스마트 교차로로 전환하는 사업에 집중하였음 사업 이후에도 스마트 교차로를 확대하고 고도화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음
- 스마트 교차로는 교차로의 안전성 및 이동성 확보하는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도시에서 교통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임 따라서, C-ITS 사업의 스마트 교차로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를 연구하고 고도화하는 것은 타당함
 - 특히, 스마트 교차로에서 수집된 실시간 자료는 교통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음
 - 그러나, 교차로당 평균적으로 5.5천만원 이상이 필요하고 유지관리비용은 설치비용의 10-13%인 것을 고려할 때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함
- 비용 절감 방안으로 초정밀 통신자료를 활용하여 위치, 이동경로, 통행량 등을 추정할 수 있음 즉, 전국의 유동인구를 정교하게 분석할 수 있고, 도로와 교통 분야에서도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음
 - 초정밀 통신자료(LID: Location Intelligence Data)란 기지국과 모바일기기 간 오차를 개선하여 GPS 수준의 위치정보로 변환된 자료를 말함
- LID와 공공자료를 분석하여 도출된 결과를 활용하여 인천시 C-ITS 사업의 고도화를 달성할 수 있음

[그림 1] 초정밀 통신자료를 활용한 C-ITS 고도화 방안



4. 스마트교차로 자료 및 초정밀통신 자료 융합 사례연구

- 스마트 교차로를 통해 생성된 교통량 자료(참값)와 스마트 교차로 자료와 초정밀통신 자료를 융합하여 추정된 교통량을 분석자료로 활용하여 스마트 교차로 고도화 방안을 제안하였음
 - 결과적으로 분석결과의 정확도가 95% 이상으로 도출되었고, 스마트 교차로 음영지역의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활용될 수 있음
 - 또한, 기존 ITS와 C-ITS 자료를 활용하여 다양한 정보를 생성하여 혼잡을 완화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
- 스마트 교차로가 다양한 교통지표를 제공하고 정밀도가 높지만 모든 교차로를 스마트 교차로로 투자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설치하고 초정밀 통신자료를 통해 보완하는 방안이 효율적임
- 초정밀 통신자료 자체로는 차로 및 차종 구분이 불가능하다는 한계점이 있으므로 다른 자료와 융합하여 신뢰성을 확보하고 상호 보완하는 역할로 활용해야 함
- 지자체의 한정된 예산으로 C-ITS의 스마트 교차로 사업에 투입되는 비용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용 대비 효율성을 고려한 지속가능성에 대해 고민해야 함

5. 결론 및 정책제언

- C-ITS의 최종 목표는 교통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고, 도시 내 도로의 사고 위험성과 혼잡도를 개선하여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시키는 것임
 - 스마트 교차로를 모든 교차로에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초정밀 통신자료와 같은 자료들과 융합하여 도시 내 전체 교차로의 교통량을 정확히 추정할 수 있음
 - 따라서, C-ITS 사업과 초정밀 통신자료는 다양한 자료를 융합하여 그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인천시의 교통여건과 시민의 이동편의를 한 단계 증진시킬 것임
- C-ITS를 통해 생성된 자료와 이용자들의 통행행태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융합하여 데이터 고도화 방안이 필요함
 - 이를 통해 ITS 환경 및 시설물을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 장래 MaaS, 자율주행자동차 등과 같이 장래 교통의 변화를 대비하기 위한 통합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C-ITS 운영·관제 컨트롤 센터와 같이 다양한 빅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함
-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스마트 교차로, DSRC-RSE는 외부 문제로 인해 자료 수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 이에 따라 복수의 AI 기반의 2차 검증 시스템 구축을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 검증 및 유지관리 플랫폼 구축이 필요함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의무설치 예외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정동재 교통물류연구부 연구위원

1. 연구요약

- 이 연구는 기축 아파트 단지 내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의무설치 제도의 의무설치 예외기준을 형평성, 객관성 측면에서 보완하기 위한 예외시설 요건에 관해 논의하고 주차 여건에 의한 기준이 가장 적합한 요건임을 제안함
- 이를 위해 우선 친환경자동차법을 검토하여 의무설치 예외기준이 형평성, 객관성 관점에서 보완이 필요한 이유에 관해 두 가지 쟁점사항을 도출함
 - 첫째, 건축연한 등을 고려하면 근시일내 정비사업 및 철거가 추진될 수 있는 시설임에도 충전시설 의무설치 기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은 이유로 의무설치 예외시설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불필요한 시설 투자가 집행되거나 또는 시정명령 및 관리에 따른 행정력 낭비가 발생할 수 있음
 - 둘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것을 판별하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없는 실정임
- 또한 의무설치 예외시설 요건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시설 노후도, 주차 여건, 충전 여건 등 아파트 여건 요소에 관한 법령을 검토하고 현행 의무설치 예외기준의 보완 요소와 보완 방향을 개념적으로 설정함
 - 현행 의무설치 예외기준은 기축 아파트의 시설 노후도, 주차 여건, 충전 여건, 세 요소의 관련법령 제개정 시기 및 내용을 고려해 보완되어야 함
- 이어서 기축 아파트의 시설 노후도, 주차 여건, 충전 여건에 대한 실제 데이터를 관련법령과 연계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의무설치 예외기준의 보완 방향을 구체화함

- 시설 노후도는 주차 및 충전 여건을 완벽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충전 여건은 변동(개선)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예외기준으로서 부적합함
-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현행 의무설치 예외기준의 보완 요건으로 주차 여건을 제안함. 그 구체적인 근거로 주차 여건이 시설 노후도, 충전 여건에 비해 크게 세 가지 측면, 즉 연관성, 대표성, 수용성 측면에서 예외기준으로서 형평성, 객관성을 확보하기에 가장 적합하다는 점을 들
- 다시 말하면, 주차 여건은 친환경자동차법에서 규정하는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의무설치 예외기준에 가장 연관성이 높은 요건이고, 충전 여건과 같은 다른 여건을 가장 포괄적으로 고려(반영)할 수 있는 여건일 뿐만 아니라, 시민 수용성에 가장 크고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요소이기 때문임
- 주차 여건에 의한 예외기준(세대당 주차면수가 0.7면 이하인 아파트 단지)에 의해서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의무설치 예외시설로 지정될 수 있는 대상의 규모는 총 의무설치 대상 주차면수의 6.6%로 산출됨. 이 기준에 의하면 친환경자동차법에 의한 의무설치 목표치보다 불과 6.6%만큼 적게 설치되는 것이고, 이조차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정비사업 등을 통해 신축 시설로 대체되면서 그 비율이 줄어들 것이므로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확대 보급하려는 친환경자동차법의 취지에 크게 상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의무설치 예외기준의 보완 방안에 관해 논의한 선도적인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이 연구를 비롯하여 예외기준에 관한 축적된 논의를 바탕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법적 이행력을 갖춰야 할 것임
- 이를 통해 기축 아파트 단지 내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의무설치 제도에 대한 정책저항이 확대, 확산되는 것을 예방하고 궁극적으로 친환경자동차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정책효과를 달성해야 할 것임
- 한편, 주차 여건에 의한 예외기준을 아파트 단지의 수직적(단지규모 등의 특성), 수평적(지역 특성) 특성으로 계층화하여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제기될 수 있음. 그러나 설치기준이 계층을 구분해 차등 적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예외기준을 차등화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고, 계층화를 통한 차등 적용이 갖는 장점을 살리는 것보다 그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불이익을 줄이는 것이 법의 이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표 1] 주요 연구결과

의무설치 예외기준 관련 쟁점사항 (2장 참조)	
형평성 측면 건축연한 등을 고려하면 근시일내 정비사업 및 철거가 추진될 수 있는 시설임에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지 않으면 의무설치 예외시설로 인정되지 않음	객관성 측면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것을 판단하기 위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없음



의무설치 예외기준 보안을 위해 고려할 관련요소 및 시설 (2장 참조)			
관련요소	1. 시설 노후도	2. 주차 여건	3. 충전 여건
관련시설	노후건축물 (건축연한 20년 혹은 30년 이상된 아파트)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건축물 또는 설치기준 개정 전 건축물 (임대아파트 등 또는 1995년 이전에 사용승인된 아파트)	전기시설 용량 설치기준 제정 및 개정 전 건축물 (1991년 혹은 1998년 이전에 사용승인된 아파트)
관련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주택건설기준규정 제27조	주택건설기준규정 제40조



아파트 여건 (3장 참조)			
여건	1. 시설 노후도	2. 주차 여건	3. 충전 여건
검토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행 의무설치 예외기준을 적용하면 의무설치 기간에 사업 시행인가를 받지 않은 이유로 불필요한 시설 투자가 집행되거나 또는 사정명령 및 관리에 따른 행정력 낭비가 발생할 소지가 높은 여건임 현행 노후 건축물 정의를 준용해 의무설치 예외기준을 설정할 경우 예외시설로 지정되는 대상시설 규모가 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차장 설치기준이 개정된 1995년 이전에 사용승인된 아파트는 평균적으로 주차 여건이 열악함 주차 여건은 사용승인 시기(시설 노후도)와 관련 있으나 이외 주택유형 등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으므로 사용승인 시기만으로 주차 여건을 단정하기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기시설 설치기준이 제개정된 1991년, 1998년 이전에 사용승인된 아파트는 평균적으로 충전 여건이 열악함 충전 여건은 사용승인 시기와 관련 있으나 이외 주택유형, 변압기 교체유무 등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으므로 사용승인 시기만으로 충전 여건을 단정하기 어려움 충전 여건은 변압기 교체 등으로 개선될 수 있어서 예외기준으로서 다소 부적합함
시사점 (보완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행 의무설치 예외기준을 형평성 측면에서 보완하기 위해 정비사업(철거) 요건인 시설 노후도(건축연한) 기준을 포함할 경우 친환경자동차법 취지를 고려하여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현행 의무설치 예외기준과 차별성이 적어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됨 현행 의무설치 예외기준을 객관성 측면에서 보완하기 위해 아파트의 시설 노후도, 주차 여건, 충전 여건을 후보 기준으로서 고려할 수 있으나, 이 중에서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곤란 여부를 더 직접적, 대표적,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예외시설 요건에 관한 검토가 필요함 		



예외기준 설정 및 대상시설 규모 (4장 참조)	
예외기준	세대당 주차면수가 N 면 이하로서 주차 여건이 열악한 아파트 단지 (N 은 정책목표와 대상시설 규모를 고려해 설정 가능함. 이 연구는 관련법령과 연계하여 $N=0.7$ 로 논의함)
예외기준 설정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관성: 주차 여건은 친환경자동차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설치 예외기준과 연관성이 가장 높음 대표성: 주차 여건은 변동 가능성이 낮고 다른 여건도 고려(반영)할 수 있어서 예외기준으로서 대표성이 있음 수용성: 주차 여건은 의무설치에 대한 시민 수용성에 가장 크고 유의한 영향을 끼침
대상시설 규모	인천시 100세대 이상 기축 아파트 단지의 15.8% 또는 총 주차면수의 6.6% ($N=0.7$ 인 경우)



정책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 여건에 의한 예외기준을 현행 예외기준에 포함하여 예외기준의 형평성과 객관성 확보 ✓ 조례에 의무설치 예외기준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이행력 확보
------	--

2. 정책제언

- 친환경자동차법 조례에 동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현행 의무설치 예외기준 관련 조항을 [표 2]와 같이 명시하고, 여기에 주차 여건에 의한 예외기준도 포함함으로써 예외시설 지정을 위한 법적 이행력을 확보해야 함
- 조례 개정은 의무설치 기한인 2025년을 앞두고 긴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불필요한 시설투자 집행을 방지하고, 설치의무 미준수에 대한 시정명령 및 관리에 드는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임

[표 2] 친환경자동차법 조례 개정안 예시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의무설치 예외기준 명시)

현행	개정안(예시)
<p>제8조의2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전용주차구역의 수는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로 한다. 다만,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이하 "기축시설"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자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시설(이하 "공공기축시설"이라 한다)이 아닌 경우에는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를 전용주차구역으로 설치하여야 한다.</p> <p>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2. 시행령 제18조의9제1항 각 호의 자</p>	<p>제8조의2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전용주차구역의 수는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로 한다. 다만,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이하 "기축시설"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자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시설(이하 "공공기축시설"이라 한다)이 아닌 경우에는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를 전용주차구역으로 설치하여야 한다.</p> <p>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2. 시행령 제18조의9제1항 각 호의 자</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p> <p>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로서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시설의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세대당 주차면수가 N면* 이하로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공동주택의 경우</p>
<p><신 설></p>	
<p>제10조(충전시설 설치수량) ① 제8조제1항 각 호의 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로 하고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로 한다.</p> <p>②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은 설치해야 하는 충전시설 수의 100분의 5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축시설은 제외한다.</p> <p>③ 제8조제1항제3호의 기축시설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설치해야 하는 충전시설 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하여야 하며, 총주차대수가 100개 이상인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급속충전시설 1기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4.21.]</p> <p>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1항 각 호의 시설 중 총주차대수 50개 이상인 기축 외의 시설은 급속충전시설 1기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2.4.21.></p>	<p>제10조(충전시설 설치수량) ① 제8조제1항 각 호의 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로 하고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로 한다.</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신 설></p>	<p>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p>

주: * N 은 정책목표와 대상시설 규모를 고려해 설정 가능함. 이 연구는 관련법령과 연계성을 고려하여 $N = 0.7$ 를 제안함.

해양산업클러스터 핵심산업(군) 선정 및 기본구상

■ 김운수 교통물류연구부 선임연구위원

1. 연구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는 항만을 중심으로 연관된 해양·항만산업, 연구·산업기능 등을 클러스터화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新해양산업 육성기반을 만들기 위해 정부 및 지자체에서 관련 계획을 수립 후 다양한 방안으로 추진중임.
- 해양산업클러스터는 유희화된 항만부지를 단순 재개발이 아닌 해양산업 관련 기업을 유치하여 항만기능은 유지하면서 새로운 부가가치 산업을 창출하는 형태로 추진됨.
- 1차 기본계획(2016)에서는 부산항과 광양항을 지정하였으며, 2차 기본계획(2022)에서 인천항 남항과 군산항이 해양산업클러스터 검토 가능구역으로 지정됨.
- 현재 가능구역인 인천항을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계획 지정을 위한 정부 건의를 위해 적합한 핵심산업(군) 선정하고 클러스터 지정 효과 증대를 위하여 기본구상이 필요함에 따라 본 연구를 수행하였음.

2. 해양산업클러스터 추진현황 및 사례분석

- 항만과 해양을 대상으로 클러스터의 개념을 도입한 것은 2000년대 이후로 원활한 화물의 흐름을 위해 항만이라는 동일한 공간에서 다양한 연관산업과 관련기관 간 네트워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함.
- 해운산업의 규모 축소, 국제경쟁력 저하 등을 겪은 영국, 노르웨이, 일본 등의 국가들이 해사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연관산업을 통한 해운산업을 부흥하는 모델을 수립하고 있는 점을 벤치마킹하여 국내로 도입하고자 하였음.

- 해양산업클러스터는 신규 항만시설 건설에 따라 노후화된 기존 항만시설의 유희부지를 新해양산업을 집적·중점 육성하여, 해양산업 발전과 지역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음.
 - 따라서 전제조건이 있는데 지정 대상이 화물처리 중심 항만인 무역항이고 항만시설이 유희화되어 있어야 할 것, 유희항만시설을 포함하여 3만㎡ 이상 부지를 확보 등임.
- 현재까지 국내의 해양산업클러스터는 부산항 우암부두와 광양항 1단계 4번 선석 및 중마일반부두가 유일하며, 기반시설 준공 후 관련 업종 유치중에 있음.
 - 해당 클러스터 핵심산업군 위주의 해양산업 및 해양연관산업을 대상으로 임대 형태로 입주기업 모집하고, 법인세 감면, 인센티브 지급 등 재정적 지원이 미흡한 까닭으로 입주기업 유치가 어려움이 있음.
- 독일, 일본, 이탈리아 등에서는 쇠퇴한 조선, 해운 관련 부두를 항만기능을 유지시키면서 해상풍력, 레저용 선박 건조 등의 전후방 산업을 집적화에 성공하여 세계적인 해양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한 것으로 나타남.

3. 인천항 해양산업클러스터 도입 핵심산업 선정

- 사례연구를 통해 해양산업클러스터는 어떠한 핵심산업을 선정하여 구상하는가가 중요한 것으로 조사됨.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천지역의 핵심 해양산업을 검토하기 위하여 1차적으로 지역특화도를 검토하고, 이후 해양산업의 성장 여건을 분석함.
- 인천의 해양산업은 전반적으로 산업구조가 양호하고, 지역의 경쟁력도 높아 국가성장 효과를 충분히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해운·항만 물류분야는 입지계수도 1.0인 세부산업이 다수 포진해 있고, 산업구조와 지역의 경쟁력 모두 양호하여 해양산업 중 가장 높은 순성장 효과를 보였음.
 - ‘해양바이오 관련 사업’은 인천지역에 클러스터화 되어 있으며, 산업구조와 지역 경쟁력 모두 양호하여 지역 성장에 양(+)의 효과를 미침.
 - 이는 국제 물류 인프라인 인천항과 인천공항이 입지하고, 송도국제도시와 인천 각 공단 내 화장품, 의약품 등의 사업체가 집적화되어 있는 영향으로 보임.
- 기존 정책과 인천시 지역특화도를 검토한 결과 핵심산업 검토대상으로 설정될 수 있는 산업은 해운·항만물류업, 해양바이오, 조선기자재 제조업, 수산물 가공 및 유통업 등임.
 - 특히 조선기자재 제조업은 신재생에너지설비인 해상풍력, 태양광 등의 사업과 연계됨.

4. 해양산업클러스터 구축 기본구상

- 남항 SICT와 EICT부두는 인천항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지정이 가능하지만 해당 부두 내 사유지 면적이 전체 60%에 육박함. 대상지역 전체의 지정에는 소유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현재 민간 소유자들은 토지 매매를 고려하지 않고 자사 자체계획 추진을 고려하고 있음.
 - 국유지만으로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을 고려해야 하기에 지정으로 인한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현재 인천시는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으로 해상풍력 유지보수항만으로 기능 수행을 고려하고 있지만, 국유지로 한정될 경우 협소한 부지 규모로 인해 기능 수행에 제한이 발생하여 도입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됨.
- 인천항의 또 다른 유희화 가능 시설인 내항, 남항 석탄부두와 ICT부두를 추가 고려할 수 있음. 내항은 유희화시설이 일부 있지만 제물포르네상스의 주요 입지로 이미 항만 재개발이 진행중인 관계로 제외함.
 - 석탄부두는 동해항으로 2029년 이전에 계획되어 있고, ICT부두는 신항 1-2단계 운영사 공모에 참여할 예정으로 해당 부두의 진행상황에 따라 지정이 가능함.
- 대안지역에서는 인천의 전략산업(신재생에너지)과 탄소중립에 대응하는 해양에너지클러스터의 기능을 도입하는 것으로 설정함.
 - 해상풍력 배후항만과 수소·암모니아 보관 및 배송기능, 연료전지·ESS 기능 등

5. 정책제언

❖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 대상구역의 확대가 필요

- 항만을 중심으로 한 해양산업클러스터를 활성화·집적화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유희부지 이외에 추가적인 지정요건에 대한 확장성이 필요함.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항만시설 등에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그 인정범위의 적용이 모호하여 보다 구체적인 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 현행 법에서 가능지역의 대상이 무역항에 한정되고, 유희항만시설 중에서도 안벽, 야적장, 컨테이너 장치장 및 컨테이너 조작장 등만 지정가능함.
 - 무역항에 한정된 기능을 연안항, 어항 등으로 확대하여 수산업 및 지역 산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과거 준설투투기장을 항만재개발법으로 개발을 진행한 사례가 있어, 준설투투기장을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지정하여 해양산업을 집적화시킬 수 있게 법적인 요건의 조정이 필요함.
- 인천항 영종도 준설투투기장 2단계 구역은 향후 몇 년 이내에 준설이 완료되어 토지이용계획의 수립이 필요함. 이를 해양산업클러스터법에 의한 개발을 추진하게 되면 해양산업 관련 기업의 집적화와 다양한 기업들의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기업유치를 위한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공 필요

- 해양산업클러스터법에서는 입주기관·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제19조) 사용 특례(제20조) 등 인센티브 근거는 있으나, 실제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상황임.
- 연구개발특구,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타 경제특구 현황을 고려하면 입주기업에 대한 국제 감면을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해양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공간 제공 외에도 세제지원, 투자유치, 컨설팅, 인력양성 등 산업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 필요함.

❖ 입주자격요건 핵심산업외 관련 해양산업기업으로 범위 넓혀야

- 성공적인 해양산업클러스터 구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의 입주율을 제고시키는 것이 중요함. 국내 사례를 검토한 결과, 입주기업의 업종을 해양산업의 세부분야로 제한하여 유사분야 기업들의 입주를 제한한 결과를 초래함.
- 법적요건에 대한 핵심산업에서도 보다 포괄적인 입주 자격요건의 변경이 필요함. 핵심산업 분야를 해양수산분야 전체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기본계획에서 검토한 해당 지자체의 핵심산업군은 현재 상태의 입지계수(LQ지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지자체의 전략산업도 병행하여 핵심산업을 제시하고 있음. 객관화된 지수 뿐만 아니라 산업 트렌드를 함께 검토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 성장동력을 이끌 수 있는 핵심산업군을 설정한 기본구상 검토가 필요함.

글로벌 물류허브 육성을 위한 인천형 물류 체계 연구

■ 김운수 교통물류연구부 선임연구위원

1. 연구배경 및 목적

- 글로벌 물류허브 선점 경쟁은 2000년대부터 선진 항만도시에서 물류공급망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국가나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공항과 항만 등 물류 인프라에 대한 투자 확대로 이어지고, 기업 유치를 위한 각종 경제특구를 지정하는 등 제도적 보완을 거쳐 글로벌 물류 허브도시가 되었음.
 - 민선 8기 인천광역시는 인천이 세계 초일류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으로 2023년 “뉴홍콩시티 프로젝트”를 추진중이며, 인천형 물류체계에 대한 구상의 필요성을 제안함.
- 이에 본 연구는 로테르담·두바이·홍콩·상하이·싱가포르 등 사례처럼 글로벌 물류 허브도시로 도약하기 위하여 공항과 항만 인프라를 활용한 융복합 물류 활성화 방법을 모색하고, 인천시가 글로벌 물류 허브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음.

2. 글로벌 물류 트렌드 변화 및 인천지역 물류산업 현황 분석

- 최근 몇 년간 가장 큰 변화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거래로 인한 전자상거래의 급격한 성장과 자국 보호주의가 강조된 글로벌 공급망의 붕괴현상이 나타난 점임.
 - 전자상거래의 발달은 물류창고의 대형화와 풀필먼트 서비스의 강화가 크게 나타나고, 항공화물의 증가로 이어졌음.
 - 팬데믹으로 인해 의약품, 백신 등과 1인 가구, 소비행태 및 수요의 변화 양상에 따라 새로운 콜드체인 물류 수요의 증대됨.
 - 반도체, 요소수, 백신공급 등 사태를 통해 국가 차원에서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 구축에 필요성이 대두됨.

- 무엇보다 물류부문에서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탈탄소화와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이 핵심전략으로 요구되고 있다는 점임.
 - 선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노력과 항만부문 육상전원 사용, 항공부문 친환경연료(바이오연료) 도입 및 경제적 운항으로 배기가스 감축 등
- 인천은 수출입 화물 위주의 국제물류거점, 국내 지역간 물동량을 주로 처리하는 광역물류거점, 인근 시군구 단위의 물동량을 처리하는 지역물류거점이 모두 위치하는 명실상부한 물류도시로 인식하고 있음.
 - 인천지역 물류산업은 사업체 기준 전국 17개 시·도에서 4위 수준이며, 종사자는 전국 대비 5.3%를 점유함.
 - GRDP 중 '운수 및 창고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여 년간 10% 내외 수준으로 부산시(10.7%)를 제외하고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음.
 - 인천지역의 물류산업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입지계수를 보였으며, 특히 국제항공화물 처리량 세계 2위인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한 영향으로 인천지역은 항공 화물운송업의 경우 전국 평균보다 약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항공화물과 관련한 매우 높은 지역특화도를 보유함.

3. 글로벌 물류 허브도시 경쟁요인 및 사례 분석

- 물류허브는 장기적으로 도시의 경제성장 기반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항만 및 공항이 입지해 있는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 결절점이어야 하고, 도시의 경제활동과 물류여건을 확대시킬 수 있는 성장잠재력 및 물류허브로서의 경쟁력을 갖추는 것임.
 - 항만 및 공항을 통해 수입 및 수출화물, 환적화물 등을 처리하므로 가공, 조립, 포장, 상표부착, 생산, 금융, 보험 등과 같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배후단지 및 물류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가 필요함.
- 선진 물류 허브도시로 발전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은 각 산업과 물류산업의 클러스터가 잘 형성되었기 때문이며, 국제적 물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항만·공항 및 배후시설 등 물류 관련 시설을 완비하고, 배후지역에 각종 경제특구를 활용한 산업기반의 지원이 있다는 점임.
 - 로테르담은 유럽배후권의 관문으로 물류기반시설도 매우 뛰어나지만, 산업기반에 자동화터미널 등 선진 시스템의 최우선 적용하였고, 현재는 수소항만으로 발전모델 추구하고 있음.

- 두바이와 상하이는 공항만 이외 배후권까지 포함한 자유무역존으로 산업과 물류중심지로 육성하였고, 싱가포르와 홍콩은 제조기반은 미약하나 금융이나 해사클러스터를 활용한 지원기능이 탁월하여 환적경쟁력이 높음.

4. 글로벌 물류 허브도시를 위한 인천형 물류체계 구축

- 글로벌 물류 허브도시로서 최소한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인천이 글로벌 물류 허브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공·항만 인프라를 바탕으로 전략산업을 함께 연계하여 고부가가치 물류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인천은 국제적인 규모인 인천공항과 인천항을 보유하여 물류 허브도시로서의 최소한의 조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인천의 규모와 수도권역을 배후권역으로 보유하고 있어 물류 허브도시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인천형 물류체계 모델로 공항(Air port)과 항만(Sea Port)을 중심으로 전략산업과 인적·경제적 지원이 가능한 경제권역을 가지고 있는 허브도시(Metropolis)를 목표로 하는 “포트로폴리스(Portropolis)”를 구현을 제안함.
 - 공항과 항만을 중심으로 글로벌 복합운송망을 구현하며, 인천 전 지역을 산업, 금융 등을 지원하는 물류서비스지원 1차 배후권역을 두고 경기도와 서울을 2차 배후권역으로 둔 글로벌 물류 허브도시를 제안함.
- 전문가들 대상으로 글로벌 물류 허브도시의 경쟁력 요인과 인천의 현재 수준을 IPA 분석한 결과와 인천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인천형 물류체계 구축 과제를 제안함.
 - 첫째, 세계적인 수준의 공항네트워크와 컨테이너, 카페리를 활용한 충분한 해상운송 역량을 보유한 최적의 복합운송 물류중심지로 이를 지원하는 글로벌 네트워크에 초연결 가능한 인프라 구축
 - 둘째, 고부가가치 물동량 창출을 위해 물류·제조·유통 공급사슬 연계한 생태계 구현

[그림 1] '포트로폴리스' 구현 인천형 물류체계 구상도



- 셋째, 대외 개방성과 기업유치를 위한 산업과 물류의 연계기능이 경쟁력에 필수적인 요건으로 공항과 항만에 자유항(Free Port) 지정
- 넷째, 세계적인 이슈인 탈탄소, 탄소중립 등을 목표로 한 블루 포트(Blue Port) 구현임. 수소 항만 구축, 물류시설에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함.
- 다섯째, 물류 인프라를 기반으로 배후도시의 물류서비스 및 정책적 지원 강화
- 주요 선진 물류허브들은 물류시설 잘 갖추고, 자유항 등 제도적 기반이 탄월하여 허브로 성장하였음. 하지만 지금도 끊임없이 물류시설의 확장 및 범위를 늘리고 있으며, 공항과 항만에서의 미래 환경에 대비한 준비를 추진하고 있음.
- 물류허브화는 다양한 수송수단의 연계보다 기능적 연결성이 중요하며, 물류허브는 인프라뿐만 아니라 제도·지원체계 구비해야 함.
- 물류기능 뿐만 아니라 금융·비즈니스·관광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 도시경제권의 확대에도 주목해야 함. 즉 물류와 산업 그리고 배후도시와의 연계가 유기적으로 기능연계에 초점을 둔 전략이 필요함.

송도 트램계획을 고려한 인천타워대로~첨단대로 자전거 전용도로 구축 방안 검토

■ 박민호 교통물류연구부 연구위원

1. 서론

- 인천시 연수구에 위치한 송도국제도시에 위치한 인천타워대로 및 첨단도로에는 중앙분리대 녹지공간(인천타워대로 일부구간은 보도측)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2010년에 조성되어 운영중에 있으나, 교차로내 자전거 횡단이 전면 제한됨에 따라, 중앙 자전거 전용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임.
- 인천타워대로 및 첨단도로에 설치된 중앙 자전거 전용도로는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볼 수 없는 형태의 자전거 전용도로로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을 모색해야 할 시점인데, 인천타워대로 및 첨단대로 일부구간에는 도로 중앙에 송도 트램 노선에 대한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어 이와 연계한 활용방안 마련이 필요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 수립된 송도 트램 계획을 고려하여 자전거의 소통 및 이용자의 안전에 대한 사항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적의 자전거 전용도로 구축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자전거도로 현황, 유형 및 구축사례

- 인천시의 경우에는 전국 7대 특별·광역시 중 서울시에 이어 두 번째로 긴 자전거도로가 건설되어 있으나, 전국적인 특징과 마찬가지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가 가장 많은 비중(노선수 및 연장)을 차지하고 있음.
- 자전거도로의 노선수는 서구, 중구, 부평구의 순으로 많으며, 자전거 도로 연장은 서구, 중구에서 200km 이상, 남동구에서 100km이상이 건설되어 인천시 관내 기초자치단체별로 편차가 큰 것을 알 수 있음.

- 자전거 교통사고는 자전거 도로 연장이 가장 긴 서구, 중구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였는데, 중구에서는 5명의 사망자수가 발생, 서구에서는 203건의 사고건수에 218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여 인천시 관내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자전거 도로의 유형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되며, 도로구간별(본선, 평면교차)로 상황에 따른 설계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며, 자전거의 안전에 가장 큰 중점을 두고 있음.
- 국내·외 자전거 전용도로 구축사례를 살펴보면, 자전거만의 이동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도로 환경이 구축되어 있음.
- 자전거 전용도로가 도로 중앙에 설치된 경우, 블라드, 펜스 등의 구조물로 자동차와의 상충을 완전히 차단하였으며, 도로 여건상 자동차와 동일한 차선을 운행하더라도 상충 구간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 트램 노선과 병행하는 경우에는 트램 신호와 자전거 신호를 동시에 작동하도록 설계하여 자전거의 이동성 및 안전성을 보장함.

3. 현황조사 및 대안 분석

- 본 연구는 자전거 이용자의 이동성과 안전성을 고려한 자전거 전용도로의 구축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주목적 이기에 자동차 교통량뿐만 아니라, 자전거 이용자가 많은 시간대를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자동차 교통량 및 자전거를 이용한 지하철 통행량을 조사하여 이를 동시에 만족하는 화요일 오전 8시를 기준으로 주요 교차로 9개소에서 교통량 조사를 실시함.
- 자전거 전용도로 구축에 대한 대안은 4가지 경우로 설정함.
 - 현황: 1~3구간은 중앙, 4구간은 보도측 자전거 전용도로
 - 지그재그: 1, 3 구간은 중앙, 2, 4구간은 보도측 자전거 전용도로(트램계획 수용)
 - 중앙-보도: 1구간은 중앙, 2~4구간은 보도측 자전거 전용도로(트램계획 일부수용)
 - 보도측: 전구간 보도측 자전거 전용도로
-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차로 구간에서의 방향별 교통량 및 신호현시 등을 입력하고, 자전거의 이동성(통행시간) 및 안전성(상충수)을 효과척도(MOE, Measure Of Effect)로 하여 대안별 자전거 이동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고자 함.

- 분석결과, 전구간 보도측 자전거 전용도로로 구축하는 ‘보도측’이 자전거의 이동성 및 안전성에서 가장 뛰어난 대안으로 도출되었음.
 - (자전거 통행량 100대/시 기준) 이동성의 효과적도인 통행시간은 ‘보도측’에서 상행 2,033초(약 34분), 하행 1,840초(약 31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남.
 - 통행시간이 가장 긴 것으로 분석된 현황과 비교하면, 상행 911초(약 15분), 하행 1,394초(약 23분)이 절약되는 것으로 분석됨.
 - 중앙 자전거 전용도로가 일부 포함된 현황, ‘지그재그’ 및 ‘중앙-보도’의 경우에는 도로 본선구간에서 중앙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하다가 교차로 구간에서는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교차로 구간 통과 후, 다시 중앙 자전거 전용도로로 진입하기 위한 신호 대기시간으로 인해 통행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자전거 통행량 100대/시 기준) 안전성의 효과적도인 상충수는 ‘보도측’에서 327.1로 도출되어 가장 안전한 대안으로 도출되었음.
 - 상충수가 가장 많은 현황과 비교하면, 약 81의 상충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교차로 구간에서의 상충수가 많이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남(상충 분포도).
 - 이는 통행시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중앙 자전거 전용도로 구간이 포함되면, 횡단보도를 이용해야 하는 횡수의 증가로 인해 자동차 또는 자전거와의 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도로 일부 구간에서라도 중앙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교차로 구간에서의 횡단으로 발생하는 문제로 인하여 이동성 및 안전성 측면에서 비효율적인 것으로 분석됨.
- 구간별로 살펴보게 되면(부록), 자전거 교통량이 300대/시를 초과할 경우, 일부구간에서 통행시간 및 상충수가 급속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자전거 교통량이 시간당 300대를 초과하게 될 경우, 자전거 전용도로의 용량을 증대시키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자전거 이용자의 이동성 및 안전성 측면에서 최적으로 도출된 ‘보도측’에 대한 개략적인 자전거도로 공사비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음.
 - 현황에서 보도측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구축되어 있는 4구간을 제외한 1~3구간의 보도측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를 위한 공사비는 대략 8.24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산정됨.

4. 제언

1) 트램신호와 연계한 자전거 우선신호 운영

- 대상구간인 첨단대로와 인천타워대로에는 편도 3~4차선 및 중앙 녹지대로 인한 넓은 면적의 교차로가 다수 존재하며, 이로 인해 횡단거리가 길어질 수 밖에 없어 자전거의 통행시간 증가와 더불어 자동차와의 상충이 많아질 수밖에 없음.
- 이에 보행자 횡단보도 신호를 자동차의 직진 신호보다 3~7초 먼저 켜지게 하는 방식인 자전거 우선신호의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트램 운영을 위한 신호체계 변경 시, 자전거 우선신호의 적용을 통해 보행자 및 자전거의 이동성 및 안전성을 향상 시킬 수 있음.

2) 충분한 용량 및 환승을 고려한 자전거 보관대 계획 수립 필요

- 현재 인천타워대로 구간에는 인천 도시철도 1호선의 4개역(지식정보단지역, 인천대입구역, 센트럴파트역, 송도달빛축제공원역)이 위치하고 있는데, 향후 트램노선이 완공되고 나면, 자전거의 이용이 더욱 증가할 수 있기에 트램역사 주변에도 자전거 보관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송도달빛축제공원역, 인천대입구역, 지식정보단지역은 트램 정거장이 예정되어 있어 자전거 수요를 고려하여 충분한 용량의 자전거 보관대 뿐만 아니라, 환승의 편리함을 고려한 위치 계획까지 수립되어야 함.

3) 자전거 전용도로로서의 기능 유지를 위한 계획 수립

- 자전거 전용도로는 자전거 이용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보행자, 적치물, 이면도로 출입구, 버스정류장 등으로 인해 이동의 불편 및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경우가 많음.
- 보도측 자전거 전용도로 구축 시, 보행공간과의 분리 계획 및 표지판등을 통해 보행자 및 적치물로부터 이동 및 안전이 보장되어야 하며, 특히, 이면도로 출입구와 버스정류장 구간에서는 설계기준을 만족하는 설계가 이루어져야 함.
- 교통량이 많고 면적이 넓은 교차로에서는 자동차와 자전거 각각의 통행권과 통행속도를 확보해주며, 상충을 최소화하여 교통안전과 관련된 문제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전거 전용 회전교차로 또는 고가연결로의 건설도 고려해 볼 수 있음.



영종국제도시 신교통수단 도입 기본구상 연구

정동재 교통물류연구부 연구위원

1. 연구요약

- 최근 영종국제도시 내 공동주택 준공(사용승인) 및 입주율 증가로 영종지역 인구가 많아지면서 교통유발 요인이 높아짐
- 교통수요 증가 속도에 비해 대중교통 서비스는 더디게 확충되어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다는 지역 주민의 목소리가 높음. 특히 영종하늘도시에서 영종역과 공항신도시(운서역)까지 각각 대중교통 최단노선 연결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음
- 현재 지역주민 요구뿐만 아니라 장래 택지개발 계획에 따른 지역 여건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신교통수단을 포함한 대중교통 서비스 확충계획 수립이 필요한 실정임
-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영종지역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신교통수단 및 노선을 구상하고, 재무적 관점의 운영 지속가능성과 수요처리 가능성을 중심으로 신교통수단 도입의 적합성을 검토함. 연구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표 1]과 같음
 - 영종도 일반현황 및 관련계획 검토(2장), 대중교통체계 분석(3장)을 통해서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및 확충계획 수립의 필요성과 추진방향을 검토함
 - 그 검토 내용을 토대로 노선선정 5대 기준을 설정하고 (1) 영종지역 생활권역 중심의 (2) 통행행태에 부합하는 노선이면서 (3) 공항철도와 제2공항철도를 남북으로 연결하는 격자형 교통망을 구성하여 교통망 효율성을 높이고 (4) 상위계획 노선과 상호 사업 타당성을 저해하는 구간이 아니면서 (5) 인천 및 국가 차원의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는 3개 노선을 분석대상 노선으로 선정함
- 분석대상 3개 노선에 대한 신교통수단(BRT, 바이모달트램, 노면전차, 경량전철) 도입의 적합성을 평가한 결과, 재무적 운영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신교통수단 도입이 부적합한 것으로 도출됨. 단, 장래 계획인구가 전제된 운행 여건에서는 비교적 적합성이 높아짐

[표 1] 주요 연구 결과 및 정책방향

영종도 일반현황 및 관련계획 검토(2장)	영종도 대중교통체계 분석(3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종도 인구 증가율은 인천시 다른 구군의 인구 증가율에 비해 두드러지게 높고 계획인구를 고려하면 증가 추세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점차 높아질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요구에 대비한 대중교통 서비스 확충계획 필요 영종도 내 영종하늘도시, 공항신도시, 미단시티 등 대규모 주거단지가 위치한 영종동, 영종1동, 운서동의 높은 인구 비중 및 증가율을 고려해 생활권 중심의 대중교통 서비스 공급정책이 우선 필요 단, 영종도의 면적당 인구지표는 인천시 다른 구군 지역에 미해 현저히 낮으므로 고밀도 토지이용 지역에서 효율성이 높은 대중교통 확충안 검토 시 재무적으로 지속운영 가능한 지 여부에 관해 신중한 검토 필요 영종지역 장래 개발계획을 고려하면 현재보다 대규모, 고비용의 대중교통 도입 및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나 이미 드러난 바와 같이 계획인구 총량 및 입주시기에 불확실성이 있으므로 신교통수단 도입계획 수립 시 보수적 접근 필요 영종지역의 높은 승용차 수송담당률에서 드러나는 승용차 의존성과 대중교통 공급 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대중교통 서비스 확충계획 필요 영종지역 주거 및 생활 거점과 철도 거점 간 거리는 5~6km 내외이고, 이 정도 중거리 통행의 수송에서는 일반적으로 버스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영종지역 주거 및 생활거점에 대중교통 서비스 확충계획 수립 시 버스 서비스 확충을 우선 검토할 필요 영종지역 교통계획과 상위 관계계획에서 검토된 대중교통 계획노선의 사업추진 우선순위와 역할 및 기능을 고려해 중복투자되지 않도록 노선을 구상하고, 특히 영종하늘도시를 통과하는 제2공항철도 계획과 상호 사업 타당성을 저해하는 노선구간 배제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종지역 생활권, 특히 상주 인구가 많은 영종동, 영종1동, 운서동 생활권의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이 전반적으로 저조하여 버스 노선 신설, 차차 혹은 신교통수단 도입 등을 포함한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필요 (단 이 연구는 신교통수단 도입 구상에 초점을 둠) 주로 영종-내륙 간 중장거리 간선 교통수단 역할을 하는 영종지역 철도 교통축이 영종하늘도시, 미단시티 등 대규모 주거지역과는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신교통수단 도입계획 수립 시 철도거점까지 접근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한 역할 및 노선 구상 필요 영종지역 버스는 주로 내부통행을 처리하며 지·간선 교통수단 역할을 특성상 노선 경로가 최단 경로 대비 꽤 우회하고 통행시간 측면에서도 승용차 대비 상당히 경쟁력이 떨어지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거점간 굴곡도가 낮은 신교통수단 도입계획 및 노선구상 필요 버스, 택시, I-MOD 통행량이 많은 주요 교통축은 영종지역 생활거점과 영종역, 운서역 철도거점 간 교통축으로, 이처럼 통행행태 측면에서도 영종하늘도시, 미단시티 등 대규모 주거단지에서 영종역, 운서역, 두 역의 권역을 잇는 교통축의 중요성이 드러나므로 이 축에 초점을 둔 신교통수단 도입계획 및 노선구상 필요 영종지역 택시, I-MOD 등 준교통수단의 주요 교통축이 버스의 주요 교통축과 동일한 것은 대중교통 서비스 불편에 따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해당 교통축에 대한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이 선결될 필요
	
영종도 신교통수단 도입 구상(4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2장, 3장 검토 결과를 토대로 노선선정 5대 기준을 설정하고 그 5대 기준에 따라 (1) 영종지역 생활권역 중심의 (2) 통행행태에 부합하는 노선이면서 (3) 공항철도와 제2공항철도를 남북으로 연결하는 격자형 교통망을 구성하여 교통망 효율성을 높이고 (4) 상위계획 노선과 상호 사업 타당성을 저해하는 구간이 아니면서 (5) 인천 및 국가 차원의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는 3개 노선을 분석대상 노선으로 선정함 3개 분석대상 노선에 대한 신교통수단(BRT, 바이모달트램, 노면전차, 경량전차) 도입의 적합성을 재무적 운영 지속가능성과 수요처리 가능성 측면에서 평가한 결과, 재무적 운영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신교통수단 도입이 부적합한 것으로 도출되는 한편 그중에서는 1, 3번 노선대안인 2번 노선대안보다 경쟁우위가 있음 장래 계획인구가 전제된 운영 여건에서는 비교적 적합성이 높아지고 국내외 준거사례와 비교해도 어느 정도 공급이 허용할 수 있으나, 계획인구 총량 및 입주시기에 불확실성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정책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종국제도시 택지개발 및 인구증가 속도를 고려한 '장단기 단계적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추진 ✓ 신교통수단 운영 여건이 조성되는 시기를 대비한 '장래 신교통수단 도입 준비전략' 수립

- 즉 단기적으로는 신교통수단 운영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사업 추진이 비효율적이며, 향후 영종지역 택지개발 및 입주 완료 등에 따라 인구가 증가하여 신교통수단 운영 여건이 조성되는 중장기적 시점을 목표로 신교통수단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임

2. 정책제언

- 이 연구는 영종지역 신교통수단 도입에 관한 두 가지 정책방향을 제안함
 - 첫째, 영종국제도시 택지개발 및 인구증가 속도를 고려해 '장단기 단계적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방안을 추진해야 함
 - 둘째, 신교통수단 운영 여건이 조성되는 시기를 대비해 '장래 신교통수단 도입 준비전략'을 수립해야 함

1) 장단기 단계적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 영종지역 주거 및 생활권, 특히 상주 인구가 많은 영종동, 영종1동, 운서동의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이 전반적으로 저조하여 버스 노선 신설, 증차 혹은 신교통수단 도입을 통한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이 필요함
- 그런데 현재 영종지역의 통행수요 및 개발밀도 수준으로는 신교통수단을 도입 및 운영하는 것이 재무적 관점의 지속 운영가능성 측면에서 적합성이 떨어지므로 향후 영종지역 택지개발 및 입주 완료, 제3연륙교 개통 등에 따라 인구가 증가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어 신교통수단 운영 여건이 조성되는 시점을 목표로 신교통수단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임
- 따라서 단기적으로 신교통수단 운영여건이 미조성된 시기에는 버스 노선신설과 증차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신교통수단 운영여건이 충족된 후부터는 신교통수단 운영을 통해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함

[표 2] 단계적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방향

구분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방향
단기 방안 (신교통수단 운영여건 미조성 단계)	버스 노선신설, 증차를 통한 영종지역 주거 및 생활거점과 철도거점 간 접근교통체계 구축
장기 방안 (신교통수단 운영여건 충족 단계)	신교통수단 도입을 통한 광역, 간선, 지선 교통망 간의 유기적인 연계교통체계 구축

2) 장래 신교통수단 도입 준비전략 수립

- 단기적으로는 신교통수단 운영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신교통수단 도입이 비효율적이지만 향후 장기적으로 신교통수단 운영 여건이 충족되는 시점에 맞춰 영종지역 연계교통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신교통수단 도입이 검토될 수 있음
- 신교통수단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실질적인 의사결정은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통해 결정되므로 적기에 신교통수단을 개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업 추진의 타당성이 확보되어야 함
- 또한 신교통수단은 일반 버스 수단에 비해 운영 및 건설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그 비용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경쟁 우위가 명확해야 사업 추진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음
- 장래 신교통수단 도입 요구에 대비해 신교통수단 사업 추진의 타당성 혹은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섯 가지 준비전략을 [표 3]과 같이 제안함

[표 3] 장래 신교통수단 도입 준비전략

준비전략	목표
사업 추진 목표 설정	사업 추진 목표에 따른 추진전략 및 기대효과 구체화
핵심 노선 발굴	통행수요 및 이용률이 높은 지역(고밀도 토지이용 지역, 주거 및 생활 거점, 철도 거점)에서 운행하여 고용량의 신교통수단 운행 타당성 확보
최적 개통 시기 검토	신교통수단 운영 여건이 조성되는 최적 개통 시기를 고려한 사업추진 우선순위 설정 및 예산투입 효율성 증대
신교통수단 유형 및 사양 선정	도입 목적과 여건에 적절한 신교통수단 유형 및 사양을 선정하여 비용대비 효과 제고
대중교통수단 간 경쟁 및 분쟁(저항) 최소화	대체 대중교통수단과의 경쟁 강도를 최소로 하여 이용률과 수송 효율성 향상, 분쟁과 중복투자 방지
사업비 분담 및 자원조달 원칙 마련	사업 추진의 안정성 확보, 신중한 의사결정 유도, 적정 공급규모 결정

특별교통수단 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

정동재 교통물류연구부 연구위원

1. 연구요약

- 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차량으로서 보행이 어려워 이동할 때 휠체어에 의존해야 하는 사람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동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운행되는 교통수단임
- 특별교통수단의 역할과 기능은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요구와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공감의 높아지면서 점차 강조될 것으로 보이나 서비스 수준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임
-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인천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특별교통수단 운영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해 논의함. 실증 자료를 분석하여 특별교통수단 운영체계의 미흡한 점을 진단하고,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함
- 이를 위해 우선 관련 법령 및 계획을 검토하고 특별교통수단 보급과 운영에 관한 법정 기준과 중앙정부 및 인천시의 정책 방향을 살펴봄. 또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체계 개선에 필요한 고려사항과 시사점을 도출함
 - 첫째, 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차량으로 정의되며 임차택시, 바우처택시 등 휠체어 탑승설비가 없는 교통약자 이동 지원 차량과 특징 및 용도가 구분됨. 따라서 특별교통수단은 법적 정의(특징, 용도)에 맞게 이용대상자를 휠체어 이용자로 한정해 운행하는 것이 효율적임
 - 둘째, 특별교통수단 법정 운행대수는 중증보행장애인 150명당 1대 이상으로, 최소 의무기준 이행 점검을 위한 단기 목표치로 활용하되 장기 보급목표로는 부적합함. 장기 보급목표는 운행지역의 수요와 공급 특성을 전제로 교통약자의 사회활동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로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임
 - 셋째, 특별교통수단 운영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전반이 조례로 위임돼 있음. 지자체별 운영체계의 차이점은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향 도출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넷째, 중앙정부 및 인천시 중장기 계획에서 제시된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문제의식과 개선방향은 지난 16년간 4회의 계획에서 반복 제기된 것으로, 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이어서 특별교통수단 운영체계의 지역별 현황과 특징을 검토함. 이를 통해 인천시 특별교통수단 운영체계의 미흡한 점 혹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운영체계 요소(이용대상 규정, 운행대수, 운행범위, 운행시간, 요금체계, 접수방법, 급여체계 등)별로 진단하고 개선방향에 관해 논의함
- 첫째, 특별교통수단의 주요 이용대상자는 공통적으로 보행이 어려워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임. 다만 엄격한 제한이 있지 않고, 지역별 대상자 범위가 다양함. 지역 간 특별교통수단 환승, 연계 체계 구축에 대비하여 이용대상자 규정을 정비해야 함. 또한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범위가 법정 운행대수 산정 기준보다 포괄적이므로 법정 운행대수를 보급목표치로 하는 현행 특별교통수단 보급계획을 재검토해야 함
- 둘째, 인천시 보급률(법정 운행대수 기준)은 2023년 5월 기준 76%로 특별·광역시 중에서 최하위 수준임. 더 적극적으로 특별교통수단을 보급해야 함. 실질적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서는 의무이행을 위한 법정 운행대수 이상을 목표로 보급 확대에 힘써야 함
- 셋째, 인천시 현행 특별교통수단의 운행범위에 대해 이용자 편의 증진 관점과 공급자 효율성 증대 관점에서 적정한지 평가하고 필요시 조정해야 함. 향후 지역 간 환승, 연계 체계 도입과 연계하여 논의해야 함
- 넷째, 인천시 특별교통수단은 연중무휴로 매일 24시간 운행함. 다만 24시간 동안 동일한 수준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님. 운행시간대에 따라 근무인원을 차등 조절하고 있기 때문임. 시간대별 운행률이 적정한지 평가하고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경우 근무인원 충원을 우선 고려해야 함. 현재 인원을 충원하면 차량의 운행률을 더 높일 수 있는 여건임
- 다섯째, 특별교통수단의 요금은 통행거리에 비례하여 부과되나 요금 수준이 저렴하여 장거리 통행 유인이 높음. 지자체별 요금체계는 구체적인 적용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거리별 요금의 절대적 차이는 미미함. 또한 운송수입금으로 운영비용(지출액)을 조달하는 비율도 공통적으로 미미함. 향후 요금체계 개편을 검토할 때 단순히 운송수입금 증대를 통한 운영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삼는 것은 노력에 비해 효과가 미미한 실효성 없는 목적 설정이 될 수 있음. 요금체계 개편은 이용자 간 형평성(특히 단거리, 장거리 이용자간 형평성) 향상이나 수혜 이용자 확대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임

- 여섯째, 인천시 특별교통수단은 이용 당일 즉시이용 신청과 사전 예약이용 신청 방식으로 콜센터와 웹 두 가지 수단을 통해 접수함. 다만 콜센터를 통한 접수에 편중돼 있으므로 웹 접수 비중이 높아지도록 유도하여 운영 효율을 높여야 함. 또한 현행 예약 접수 방식의 배차시작 시점에 의한 비효율성 문제를 개선하여 운영 효율을 높여야 함
- 일곱째, 특별교통수단 운영 성과는 운전원, 상담원의 생산성에 의존하나 업무 성과에 대한 보상체계가 미흡함. 현행 급여(특히 수당)체계에 직원이 생산성을 높이도록 유인할 수 있는 업무 성과에 대한 금전적 보상체계가 마련돼야 함
- 결론적으로 지난 16년 동안 반복 제기되는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문제의식 세 가지를 개선하기 위해 개선 기본방향을 ‘차량 보급 확대’, ‘운영 효율화’, ‘지역 간 환승·연계 체계 정비’ 세 가지로 설정하고, 세부 개선방안 12개를 제안함. 개선방향은 정부와 인천시 중장기 계획의 중점 개선방향과 같은, 즉 상위계획과 일관성 있는 방향이고, 세부 개선방안은 실증 자료 분석을 통해 구체성과 실효성이 고려된 방안임
- ‘차량 보급 확대’를 위해 특별교통수단 보급목표 재설정, 운전원 충원을 통한 운행률 제고, 일부 이용자의 서비스 편중 완화의 세 가지 세부 개선방안을 제시함
- ‘운영 효율화’를 위해 운행마감 시간대의 비효율 개선, 성과 인센티브로 인한 운전원 생산성 제고, 예약 접수건의 배차시점 조정, 비활체어 이용자 탑승 금지, 비침두시간 마일리지 도입, 웹 접수 마일리지 도입, 거점 연계형 접근교통수단 역할 강화 방안을 제안함
- ‘지역 간 환승·연계 체계 정비’를 위한 지역별 운영체계 정비 방향과 환승, 연계 지점 선정 시 고려사항에 관해 논의함
- 세부 추진과제가 체계적, 전략적으로 추진되도록 각 과제의 추진 용이성, 구체성, 추진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단기, 중기, 장기 추진과제로 구분한 과제 추진 로드맵을 제시함
- 또한 개선방안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한 세 가지 기반사업(중장기 법정계획 반영, 데이터 수집체계 정비, 외부위탁 운영 성과 및 서비스 평가)을 제안함
- 마지막으로 인천시 특별교통수단은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콜택시’, ‘특장차’ 등으로 불리고 있으나 적합하지 않은 명칭이므로 이름을 공모하여 명명해야 함

[표 1] 주요 연구결과

관련법령 및 계획 검토 (2장)		
관련법령 검토	관련계획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 정의(특징, 용도): 이용대상 제한의 당위성 파악 • 법정 운행대수: 장기 보급목표로서 부적합성 파악 • 운영체계의 조례 위임: 지자체별 비교 필요성 파악 • 법정계획: 정부 정책 기본방향 및 목표 이해 필요성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및 인천시 중점 추진과제: 차량 보급 확대, 운영 효율화, 지역 간 이동편의 제고 • 4회의 계획에서 동일한 문제의식이 반복 제기되므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 모색 필요 	
↓		
특별교통수단 운영체계 분석 (3장)		
검토결과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대상) 이용대상자 범위가 법정 운행대수 산정 기준보다 더 포괄적이고, 주요 이용대상자에 대한 엄격한 제한 규정이 없음 • (운행대수) 인천시 특별교통수단 보급률은 76%로 특별·광역시 중에서 최하위 수준임 • (운행범위) 운행범위는 관할구역 전역과 관할구역 경계를 접하는 인접지역으로 한정되며, 왕복통행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음 • (운행시간) 24시간 운행하나, 운행시간대에 따라 운전원, 상담원 근무인원 등 공급 수준이 다름 • (요금체계) 거리비례 요금체계이나 저렴하여 장거리 통행 유인이 높고, 운송수입금은 미미함 • (접수방법) 콜센터 접수에 편중돼 있음. 또한 예약접수 방식의 배차시작 시점에 따른 운행 비효율 발생함 • (급여체계) 운영 성과가 직원의 생산성에 의존하나, 업무 성과에 대한 보상체계가 미흡함 	
시사점 (개선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대상) 특별교통수단 특징 및 용도를 고려해 휠체어 이용자로 엄격히 제한해야 함. 또한 법정 운행대수(중증보행장애자 기준)를 보급목표치로 하는 현행 보급계획을 재검토해야 함 • (운행대수) 실질적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법정 운행대수 이상의 장기 보급목표를 수립하고 적극적인 보급확대 필요 • (운행범위) 특별교통수단의 운행범위에 대해 이용자 편의 증진 관점과 공급자 효율성 증대 관점에서 적정한지 평가하고 필요시 조정해야 함. 향후 지역 간 환승·연계 체계 도입과 연계하여 논의될 필요 • (운행시간) 시간대별 운행률이 적정한지 평가하고 공급이 부족한 경우 근무인원 충원을 우선 고려해야 함 • (요금체계) 요금체계 개편은 운영재원 확보 목적보다 이용자(단거리, 장거리 이용자)간 형평성 향상이나 수혜 이용자 확대 목적으로 필요 • (접수방법) 웹 접수 비중을 높이는 유도 정책과 예약 접수의 배차시작 시점 조정 방안 필요 • (급여체계) 현행 급여(특히 수당)체계에 업무 성과에 대한 금전적 보상체계 마련 필요 	
↓		
특별교통수단 운영체계 개선방안 (4장)		
기본목적	대기시간 단축, 지역 간 이동편의 증진	
기본방향	1. 차량 보급 확대	2. 운영 효율화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급목표 재설정 • 운전원 충원 및 운행률 제고 • 일부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편중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행마감 시간대의 비효율 개선 • 성과 인센티브 도입 • 예약 접수건의 배차시점 조정 • 비휠체어 이용자 탑승 금지 • 비첨두시간 마일리지 도입 • 웹 접수 마일리지 도입 • 거점 연계형 접근교통수단 역할 강화
		3. 지역 간 환승·연계 체계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 운영체계 통합 정비 • 지역 간 환승·연계 지점 선정
↓		
정책제언 (5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부 추진과제가 체계적, 전략적으로 추진되도록 과제 추진 로드맵(단기, 중기, 장기) 제시 ✓ 중장기 추진과제가 일관성 있게 지속 추진되도록 법정계획 반영 제안 ✓ 데이터에 기반을 둔 정확하고 과학적인 평가를 위한 데이터 수집체계 정비 제안 ✓ 운영 성과 및 서비스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위해 외부기관에 의한 평가 수행 제안 ✓ 인천시 특별교통수단 명칭 공모 제안 	

인천시 중앙버스전용차로 추진 연구

■ 김종형 교통물류연구부 선임연구위원

- 인천시는 1994년부터 가로변 버스운영차로를 운영하고 있으나 불법 주정차량, 버스전용차로 간 연결성 미흡, 정시성 저하 등의 이유로 운영 비효율성이 나타남.
- 중앙버스전용차로는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보다 다른 차량과의 상충횟수가 적어 버스의 통행속도와 정시성을 확보할 수 있음.
-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도입하기 위해 기존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11개 구간을 검토하였고,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규정과 부합하고 버스전용차로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6개 구간을 중앙버스전용차로 우선추진 구간으로 분류함.
- 우선추진 구간 6개 노선 중 부평·계양대로, 경원대로, 남동대로는 남-북축의 교통수요를 담당하고, 경인로 1구간, 구월로, 인주대로는 동-서축의 교통수요를 담당하는 역할을 함.
- 중앙버스전용차로의 가장 큰 기대효과는 버스의 통행권을 확실하게 보장하여 버스 통행속도 개선 및 통행시간을 절감할 수 있음. 결과적으로 버스의 정시성을 확보하여 시민들의 이동 편의성을 보장하고 만족도를 충족시켜 버스 이용률을 높힐 수 있음.
- 또한, 인천시내 철도 수단(경인선, 인천 1·2호선)과 연계할 수 있는 버스전용차로는 버스 서비스 향상과 동시에 도시철도와 버스 간의 환승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음.
- 장래 인구감소 및 고령자 증가에 따른 장래 대중교통 수요 감소 추세를 고려할 때 우선추진 구간인 6개 노선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제안함.
- 도입 이후 도로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하고, 버스전용차로 전체의 연결성을 위해 기존 가로변의 불법 주정차량 단속 및 집행도 강화해야 함.

시내버스 준공영제 효율화 방안(안)

■ 김종형 교통물류연구부 선임연구위원

- 인천시는 버스 운영이 민간의 효율성 추구하고 대중교통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9년부터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며, 준공영제는 시민의 편익 증진과 승용차 이용률 감소, 환경오염 감소, 운송종사자 처우 개선 등의 목표를 가지고 있음
- 준공영제 도입 후 승용차 이용자 증가, 도시철도 확충 등으로 인해 버스 이용객 감소로, 운송수지출의 지속적으로 감소와 재정부담 규모가 커지고 있음. 인천시는 운송업체의 재정지원을 담당하고 있지만 노사임금 협상 시 당사자가 아니기에 임금 협상의 한계가 있음
- 인천시는 시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버스준공영제 이행협약서’와 준공영제 관련 조례 등을 검토하거나 개정하여 준공영제 운영의 주도권을 확보하여 공공성, 효율성 등을 강화시키고자 함
- 준공영제 도입 후 인천시는 적자노선 등에 대해 재정지원을 하고 있으며, 매년 감소하는 버스 이용객과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재정지원금 급등, 인건비·연료비 급증 등 재정부담 규모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 인천시는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운수업체 인건비(운송임원관리직)를 표준운송원가를 재산정하여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고, `15년 이후 동결된 요금인상, 비수익선 노선 개발 등을 재정부담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음
- 준공영제의 효율적인 운영과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민, 공무원, 노사관계자, 교통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실무협상단을 구성하여 시민 의견 수렴과 제도 개선을 통해 인천시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준공영제 운영이 필요함

해사전문법원 인천 설립 당위성

■ 강동준 교통물류연구부 연구위원

1. 배경과 목적

- 우리나라는 해운강국이라는 국제적 위상에도 해상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독립된 해사법원이 부재하여 외국의 재판과 중재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해외 유출비용은 연간 2,000~5,000억 원 규모로 추산됨
- 해사법원의 수요 부족 등의 우려에도 국내 해사법원 설립의 공감대는 형성되었으나 설치지역 등의 문제는 지역 간 의견이 상충되고 있어 인천, 부산, 서울시가 해사법원 유치를 위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임
- 본 이슈브리프에서는 국내 해사전문법원 설립에 고려해야 할 해사 관련 산업입지 및 국내외 이해관계자 접근성, 해양사고의 범위와 특성 등 검토해 인천 해사전문법원의 객관적이고 타당한 설립 근거를 제시함

2. 정책제안

- 해사전문법원 인천설립을 위해서는 시민, 학계, 법조계, 언론 등 지역 내 목소리를 듣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과 더불어 적극적인 지지와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유치활동을 전방위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음
- 인천시의 국제기구 유치 경험을 토대로 해양·해사 관련 주요 국제기구 및 해양도시 측면의 지역균형을 이루기 위한 국내 관련 기관 유치에 노력하고 기 설치되어 있는 UNCITRAL과의 연계 방안을 모색해야 함
- 해사전문법원과 고등법원의 동반 유치 추진을 통해 인적·물적 인프라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대시민 법원서비스 제공 및 법률서비스 산업 구축을 통한 지역 내 긍정적인 경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해양·해사산업에 대한 중요도와 관심이 증가하면서 관련 분야 인재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인천 내 관련 전문대학이 부재하여 지역 내 인재가 타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는 상황으로 전문인력 양성 노력이 필요함

2023년도 연구결과 요약집

도시공간연구부

2023년도 연구결과 요약집

I

도시계획 분야

- 기초연구

인천개항장 기후친화 보행공간 계획기법 시범적용 및 효과분석 연구

- 기획연구

인천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방안 연구

- 정책연구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및 지원을 위한 정책방향

인천시 공공주택공급을 위한 정책방향

인천광역시 특별건축구역 활성화 적용 방안

인천광역시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

근로자임대아파트 활용방안 연구

영흥 공공사업 추진부지 활용방안 연구

- 현안연구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을 위한 개발 관련 법률 특례 방향

뉴홍콩시티 및 제물포르네상스 추진을 위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방향

인천광역시 중·동구 인구감소 대응 정책방향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을 통한 수도권규제 해소방향 연구

- 이슈브리프

내항일원 고층건축물 증가에 따른 도시경관 관리 제안

반려동물을 위한 도시계획: 인천 동물친화도시 구상

인천개항장 기후친화 보행공간 계획기법 시범적용 및 효과분석 연구

■ 김유정 도시공간연구부 부연구위원

1. 연구개요

- 우리나라는 극한기상, 폭염 등 기후재해의 증가에 따라 도심공동화, 보행활동 저하, 보행자 건강악화가 심화하고 있다. 수도권에 지속적인 도시개발에 따른 과밀화, 불투수 면적 증가, 녹지감소로 인해 도시열섬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인천시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폭염과 도시열섬 증가에 따라 인적·물적·경제적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인천시는 기후재해 대응 관련 정책과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2년 제1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폭염·한파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기후변화 취약계층 대상 지원 확대하고, 관련 시범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천시는 다양한 기후변화 적응 연구사업들을 도시회복력과 친환경·녹색도시 조성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 인천시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시 공공공간, 특히 보행환경을 대상으로 하는 기후적응 차원의 관련 사업과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도시열섬 대응과 온열쾌적성 증진을 위한 기후친화 도시공간 계획 및 설계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인천시에 직접 적용해보는 시범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 본 연구는 원도심 가로활력도 증진을 위한 기후친화 보행공간 계획기법을 시범적용하고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도시미기후를 고려한 기후변화 적응형 및 친환경 보행공간 계획 및 설계기법을 인천개항장 내 중구청 일대와 1·8부를 중심으로 시범적용하고, 계획적용에 따른 보행자 온열쾌적성 증진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2. 인천개항장 기후 및 도시열섬 분석

- 개항장의 기후 및 기상현황 조사결과 2023년 여름철 7월~8월 두 달간 평균 대기온도는 약 26.1℃로 측정되었다. 일 최고 기온은 34.6℃, 일 최저기온은 20.5℃로, 폭염일수는

총 12.1일로 조사되었다. 평균 강수량은 13.7mm로, 태양일사의 경우 여름철 두 달간 평균 일사량은 17.1 MJ/m²로 나타났다. 여름철 평균풍속은 2.28 m/s로, 여름철 풍향은 주로 남서 방향에서 겨울철에는 북서 방향에서 불어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도시열섬 분포 조사결과 신포패션 문화의 거리, 신포국제시장, 아트플랫폼 그리고 차이나타운을 포함하는 중심상업지구를 중심으로 대형 도시열섬 현상이 관찰되었다. 무엇보다 개항장 내 도시열섬과 유동인구의 공간적 분포가 상당부분 일치하고 있어, 여름철 폭염과 열섬, 그리고 강한 일사로 인한 외부활동 감소로 인한 가로활력도 저하가 우려된다.
- 보행가로 온열쾌적성 평가 결과 개항장 일대의 보행가로 온열쾌적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행자의 에너지 평형값은 148.2 W/m²로 매우 더운 것으로 평가되었다. 열스트레스의 경우 신포문화의 거리가 위치한 상업지구와 중구청 일대가 가장 높은 반면, 자유공원, 홍예문, 하버파크 호텔 주변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여전히 매우 더운 지역 (125.0 W/m²)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폭염에 따른 열섬이 발생할 경우, 개항장 내 장시간의 야외활동이 매우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개항장의 도시열섬, 도시녹지, 보행자 공간분포 분석을 통해 도출된 개항장의 문제점은 ① 내항 1·8부두의 높은 표면온도로 인한 수변공간의 열저감 효과 미비 ② 중구청 일대 도시열섬으로 인한 야외활동 저하우려 ③ 자유공원의 고립된 녹지축과 바람길 부재로 인한 온열쾌적성 저하 ④ 취약한 보행환경으로 인한 보행자 열스트레스 증가 ⑤ 기후재해 취약성 평가체계 미비 및 관련 계획과 시범사업 부족으로 조사되었다.

3. 기후친화 보행공간 기법 적용

1) 계획기법 도출 및 적용방안

- 중구청 및 1·8부두를 중심으로 하는 인천개항장 보행가로의 온열쾌적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공간구상을 위한 4가지 기본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그린인프라 조성을 통한 녹지 바람길 네트워크 구축, 둘째는, 녹색-보행전용지구 조성을 통한 도시열섬 저감, 셋째는 내항 1·8부두 수변통경축 조성, 마지막은 유희부지를 활용한 쿨링스팟 조성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기후친화 보행공간 계획기법을 위의 그림과 같이 제시하였다. 계획기법은 4대 목표, 10대 전략, 22개 세부 설계기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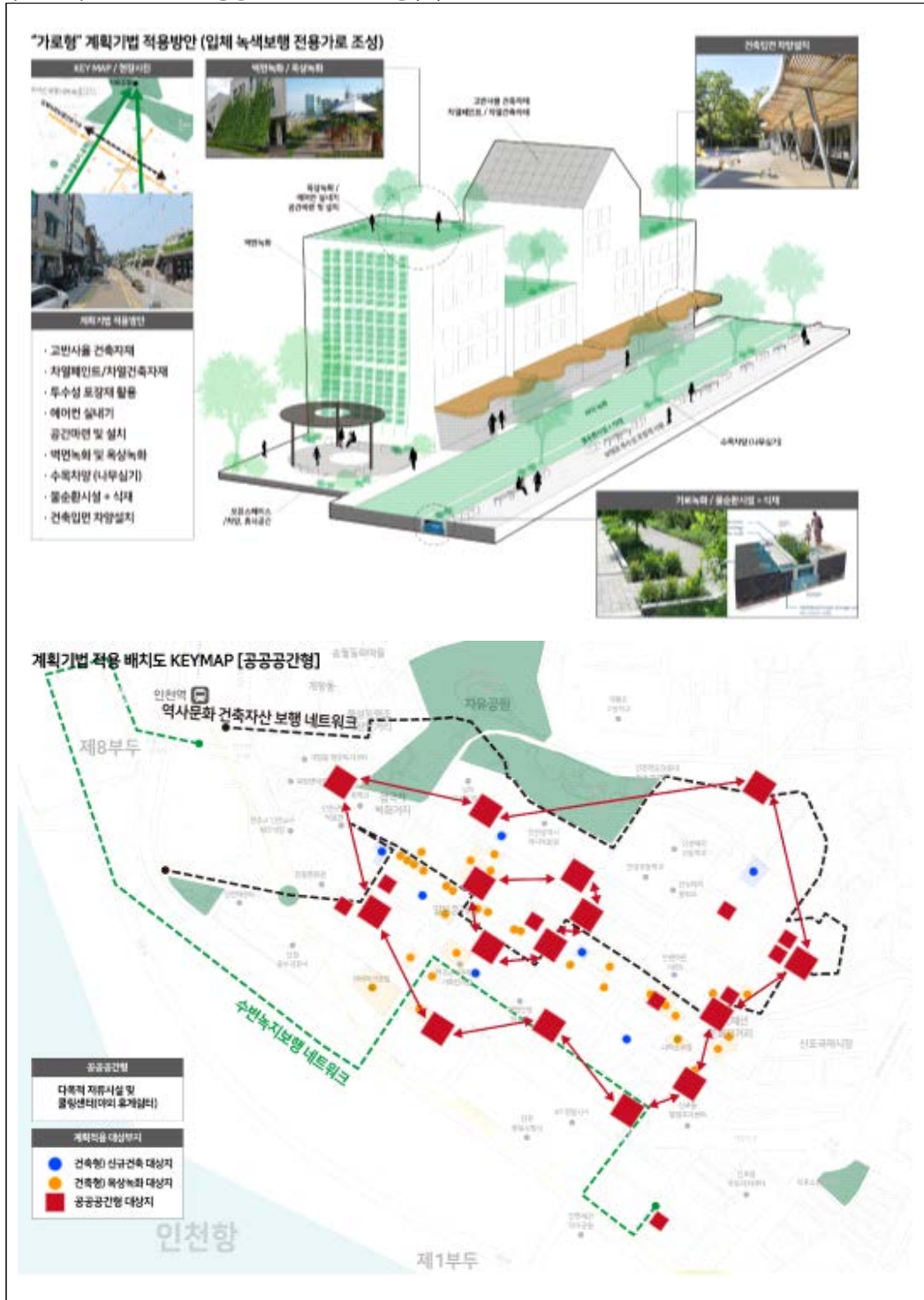
[그림 1] 기후친화 보행공간 조성을 위한 목표, 전략 및 계획기법

기후친화 보행공간 계획모형

4대 목표	바람길 조성	복사열 감소	온도저감	우천대응 및 물순환
10대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람길 조성 • 통기성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양복사열 저감 • 지표복사열 저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발냉각 촉진 • 온열부하 감소 • 인공열원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천대응 • 수재해방지 • 물순환시스템
22개 기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배치 및 높이조정 • 녹지 및 공터 연결 • 가로폭 및 방향 설정 • 건축입면 통풍구 설치 • 오픈형 건축기단부 구성 • 공기역학적 건축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자 차양 제공 • 건축 음영공간 생성·활용 • 차열성소재의 사용 • 건물녹화 추진 • 천개울 및 세장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경시설 설치 • 도시녹화 • 투수성 도로포장재 • 환기량 증가 • 사잇 바람길 조성 • 인공열원 제거 및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천용 가설지붕 설치 • 다기능 저류시설 구축 • 수면 완충녹지 설치 • 임시 흡수방어 구조물 • 저영향개발기법 적용

- 기후친화 보행공간 계획기법의 적용을 위한 시범사례 대상지는 크게 원도심과 신규개발형으로 구분하였다. 원도심은 개항장 보행가로를 대상으로 하고, 근대건축문화 자산과 유동인구 그리고 주요 대중교통 역세권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반면 신규개발형은 중구 개항장 1.8 부두와 부두에 바로 인접한 도시기반시설 및 선형녹지를 포함하는 지역으로 선정하고 관련 기법을 적용하였다.
- 원도심 중구청 일대에는 다음 계획기법의 시범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
 - 건축시공 시 고반사율 건축자재 사용, 투수성 높은 도로 포장재를 사용 및 인공열원 제거, 식재 설치와 벽면녹화를 통한 3차원 녹색보행 가로설치, 오픈스페이스에 인공 및 자연 차양을 설치하여 태양복사열 차단, 건축물을 활용한 차양생성 및 음영공간에 공공공간 배치, 공공공간의 녹화를 통한 대기온도 저감 및 다목적 홍수 저수지 설치, 통기성 높은 건축물 입면설계를 통해 공기순환 촉진 및 공기질 개선, 오픈형 저층기단부 설계를 통한 공기순환 및 바람길 조성, 레인커버 설치 및 임시홍수방어 구조물 비치
- 신규개발지인 내항 1·8부두를 대상으로 다음 계획기법의 시범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
 - 바람길 조성을 위한 보행가로 패턴 및 건축물 고저의 차 조정, 천개울 및 도로세장비 조정을 통한 주야간 지표복사열 저감, 도시공원이나 녹지지대를 연계한 그린 네트워크 중심의 바람길 조성, 보행로나 건물사이로 바람통로를 확보토록 공공공간 설계, 수변공간에 녹지 및 유희지를 배치하여 홍수피해 완화, 건축물 공기역학적 설계, 건축물 사잇바람통로 조성을 통한 온도저감 촉진

[그림 2] 기후친화 보행공간 계획기법 적용(안)



4. 계획기법 적용에 따른 효과분석

1) 계획기법 적용효과

- 시나리오별 계획기법 적용에 따른 온열스트레스 저감효과 및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내향 1·8부두 개발의 경우 중·저밀도 개발에 가로폭에 충분한 여유를 주어 통경축을 고려한 계획의 경우 중구청 일대의 열섬형성 및 보행자 열스트레스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미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밀도 개발의 경우에도 판상형 건물 설계를 지향하고, 통경축을 고려한 건축 및 가로 배치, 그리고 건축물 기반부 계획을 세심히 할 경우 중구청 일대 열스트레스 상승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구청 일대 보행가로 계획기법의 경우 개별 적용시 온열쾌적성 증진 효과는 상대적으로 미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나리오의 경우에 따라 개별계획 기법의 적용효과(약 -0.04%~-5.12% 저감)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그 효과가 보행자가 실질적으로 체감이 가능할 만큼의 개선효과를 보이지는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계획기법을 두 개 이상 동시 적용할 때 상당한 열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모든 경우에 상당한 열스트레스 저감 효과가 있었으며, 최소 3.7% ($6.53\text{W}/\text{m}^2$)와 최대 45.8% ($79.88\text{W}/\text{m}^2$)로 나타났다. 두 가지 이상의 계획기법을 동시에 적용할 경우 온열쾌적성이 “매우 더움”에서 “더움” 수준으로 감소하여 실질적으로 체감가능한 변화가 있었다.

2) 향후과제

- 인천시를 대상으로 하는 향후과제로 4계절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형 도시미기후 심화연구, 폭염대응을 위한 온열쾌적성 및 열취약성 평가 제도개선 방안연구, 스마트도시 개발사업과 연계한 기후환경 IoT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방안 연구, 기후친화 보행공간 가이드라인 제작 및 시범사업 발굴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방안 연구

■ 윤혜영 도시공간연구부 연구위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014년 도시재생사업 첫 선도사업 선정 이후 현재 약 10년이 지났으며, 인천시는 2016년 강화 도시재생사업과 개항창조도시사업 선정을 시작으로 다수의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였고 현재 상당수 마중물 재원 지원 종료 시기를 맞이함
 - 계획서상 기간이 종료된 지역은 총 13개소이며, 이 중 계획 변경을 통해 2023년 이후로 변경한 4개소를 제외하면 총 9개소로 1차 조사됨
 - 9개소 중 2023년 9월 기준 관련자 확인을 통해 확정된 실제 사업 종료지는 3개소로, 강화군 「왕의 길」을 중심으로 한 강화읍 도시재생, 동구 「다시, 꽃을 피우는 화수(花水) 정원(情園)마을」, 남동구 「만수무강 만부마을」이 해당됨
- 본 연구는 도시재생사업 마중물 지원이 종료된 도시재생사업지역의 현황분석을 통해 사후관리 관점에서의 이슈와 과제를 도출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음

2. 인천시 도시재생사업 추진 현황과 완료사업 이슈

1) 인천시 도시재생사업 마중물 지원 종료지역 현황 및 사후관리 필요성

(1) 강화군 왕의 길 도시재생사업

- 강화군 도시재생사업(인천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신문리, 남산리 일원 / 1.01km²)은 2016년 일반근린형으로 선정되었으며, 2022년까지 7년간 사업이 시행되었고 총사업비 903억 원을 투입하여 총 29개 사업을 추진하였음

- 대상지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된 시설 방치 우려가 있어 이용 측면에서 운영에 대한 방안이 보완되어야 하는 한편 거점 시설 이용의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이용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

(2) 동구 화수정원 도시재생사업

- 화수정원 도시재생사업(동구 화수동 7-36 일원 / 21,277㎡)은 2017년 12월 우리동네살리기형으로 선정되었으며, 2020년까지 3년간 사업이 시행되었고 총사업비 193억 원을 투입하여 총 13개 사업을 추진하였음
- 대상지는 주민협의체 운영이나 마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마중물 지원 이후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모니터링과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하고 하드웨어 사업의 지속적인 시설물 유지관리와 모니터링이 요구되었음
- 또한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의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방안 모색의 필요성이 있음

(3) 남동구 만부마을 도시재생사업

- 만부마을 도시재생사업(남동구 만수동 1번지 / 48,506㎡)은 2018년 우리동네살리기형으로 선정되었으며, 2022년까지 5년간 사업이 시행되었고 총사업비 335.8억 원을 투입하여 총 30개 사업을 추진하였음
- 대상지는 주거복지 및 삶의 질 향상 측면에서 주요 거점공간에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고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와 운영이 필요하며, 또한 도시재생사업의 규모나 특성 면에서 유동인구, 매출액 등의 지표로 도시재생사업의 성과를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사후관리를 통해 후속지원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3. 사업지역 이슈

- 마중물 지원 종료지역에서 발생한 이슈 및 과제를 알아보기 위해 대상지별 담당자 인터뷰를 시행하였으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1) 지자체 및 공동이용시설

- 지자체에서는 공무원의 지식과 경험이 후임자에게 계승되지 않는 문제, 마중물 지원 종료가 사업종료로 인식되는 문제, 사후관리 필요성에 대한 다른 견해, 관리지원에 관한 근거마련 문제 등을 제시하였음
- 공동이용시설은 공동체 활동 적극성이나 전문성이 높지 않은 일부의 경우 사업 종료 이후 미활용 시설로 남을 가능성이 높음
- 거점시설 활용 조직의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운영비의 지원 근거에 대한 고민이 요구되며 결국 지자체의 관리부담으로 작용함

2) 주민협의체, 주민조합 및 기타 과제

-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생겨난 활동의 경우 적극적 창업의지를 가지고 모인 것이 아니고 특정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사업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관리지원 필요여부 결정, 그리고 이윤발생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갈등의 가능성 등이 있음
- 조직내 활동이 소수인원 만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경우 피로도와 부담이 높은 상황에서 수익발생을 통한 갈등, 개인적 감정으로 인해 부정적 결과가 야기되는 경우도 있음
-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직된 협의체나 조합의 활동은 사회적 경제의 영역으로 이해되며, 사업지원 종료 이후 주요 관리주체에 대한 고민이나 업무 연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4. 사후관리 방안 구상

1) 인천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목표 및 정책 방향

-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목표는 궁극적으로 지역의 재쇠퇴를 막고자 하는 것으로, 기투입된 공공재원에 대한 효율성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지역 활성화와 주민조직의 자립이 사후관리의 목표 중 하나로, 도시재생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조직 형성과 활동은 사업 시작 시기보다 상당수 늦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활동에 대한 미비점 보완, 수익 창출을 통한 자립 구조 형성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 등 다양한 관점에서 활동의 지속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방향으로는 예산 지원이 중심이 아닌 활동의 경쟁력과 역량강조의 측면에서의 관리, 활동 진행 과정에서 상담과 논의가 가능한

인적 지원구조의 마련, 지자체에서 해당 지역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측면에서의 사후관리 근거마련 등을 검토할 수 있음

2) 지역주도의 도시재생 사후관리 지원방안

(1) 사후관리 조례의 제정

- 원칙적으로 기초지자체가 사후관리의 논의, 지원주체가 되며 인천시는 인천시 도시재생 조례 내에 사후관리에 필요한 지원이 가능한 근거 마련 등을 검토할 수 있음
- 조례는 기초지자체 여건과 특성에 맞추어 기초 레벨에서 제정하고 인천시는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필요한 비용지원과 공공서비스 재원부담 등이 가능하도록 도시재생 사후관리조례 제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사후관리를 진행하고자 하는 지역에 우선지원 추진

(2) 사업관리 거버넌스 구축 제안

- 사업관리 거버넌스는 기초지자체 담당부서와 주민조직 또는 주민조합, 그리고 기초 지원센터와 인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인천시 광역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지원조직으로 구성하여 사후 관리체계 구축을 제안함
- 마중물 지원이 종료된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과정에 대한 경험을 남겨 현장의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으며, 관련 전문인력의 활용의 측면에서 기초센터 설치·운영을 적극 권장함

(3) 거점시설 용도별 운영방안 검토

- 공공선이나 다수의 이익을 위한 용도와 수익 창출을 통한 경제적 활성화의 거점 역할을 하는 시설을 구분할 필요가 있음
- 유희거점시설이 있는 경우 싱크대 등 주방시설이나 조리장이 갖추어진 거점시설이라면 주민조직의 활동을 통한 활용을 우선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주민공동이용시설과 같은 다양한 역할이 가능한 공간은 지역 내에서 필요한 사회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공간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4) 사업 모니터링과 컨설팅 검토

- 여러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 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 사업을 모니터링하여 피드백을 주는 역할로서 모니터링과 컨설팅 기능이 부여됨

-
- 사업의 부족함을 보완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모니터링과 컨설팅 측면의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지원주체 거버넌스와 연계할 수 있음

(5) 연계사업 추진 검토

- 도시재생사업지역은 지자체 내에서도 쇠퇴정도가 높고 활성화가 어려운 지역이며, 향후 재쇠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대상지역 주변부에 연계사업 추진을 검토할 수 있음
- 이는 정돈된 물리환경 조성으로 방문인구 유입을 목표로 하며 장기적으로 지역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주민조직활동 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및 지원을 위한 정책방향

■ 기윤환 도시공간연구부 선임연구위원

1. 연구개요

- 정부는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행복주택, 청년전세임대주택 등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청년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음
- 하지만,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의 청년계층은 주거취약계층으로 편입되고 코로나19 이후 주택 및 자산가격 상승, 소득불안정, 금리증가에 따른 금융비용부담,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 등으로 주거복지, 주거환경 등 삶의 질이 하락하고 있음
- 인천시는 청년주택공급을 위해 행복주택과 매입임대주택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청년주택에 대한 개념정립, 조례 등의 근거, 공급정책 등이 미흡한 상황임
- 이에 본 연구는 청년계층의 특성을 고려하여 역세권 청년주택의 개념 정립,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기준 및 지원방향, 사업시행을 위한 근거 등을 마련하는데 있음

2. 인천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및 지원 방향

1) 인천시 역세권 청년주택 개념 정립

- 인천시 역세권 청년주택은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역세권에 공급되는 공공주택특별법상의 행복주택, 등의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법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정의함
- 역세권은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와 청년주택공급사업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역 출입구를 기준으로 반경 500m로 설정함
- 인천시 역세권 청년주택은 인천시의 행·재정적 지원에 의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으로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이 추진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포함함

2) 인천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및 계획수립 방향

- 역세권 청년주택은 청년계층의 교통편리성 확보와 주거안정성 제공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에 한정함
 - 「공공주택 특별법」상 공공임대주택 중에서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등으로 한정함
 - 「민간임대주택법」상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포함함
-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사업은 기본적으로 주택건설이 가능한 「건축법」에 의한 건축,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등에 의해 추진함
 - 일정 규모 이상의 임대주택공급이 가능한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민간임대주택법」에 의한 공공지원민간임대 촉진지구 등에 의해 추진함
 - 주거지 정비 중심의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정비사업 등과 신개발 형태로 이루어지는 도시개발사업, 경제자유구역, 공공주택지구 등의 사업은 제외하는 것이 적합함
- 사업시행자는 공공임대주택 중에서 매입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의 선매입 등을 통한 공급을 위해 인천도시공사(IH)가 적합함

3) 인천시 역세권 청년주택 지원정책 방향

❖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을 위한 규제 완화 방향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확보를 위해서는 기반시설용량을 고려한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등의 기준과 인세티브를 통하여 청년임대주택을 확보토록 유도해야 함
 - 특히, 용도변경에 따른 용적률 상승시 변경되는 용도지역에 따른 용적률 상승분에 대한 공공기여율을 산정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일반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시 주거와 비주거 비율을 정하여 주거환경을 확보토록 유도해야 함
- 청년주택은 1~2인 가구 중심으로 대부분 주택전용면적 60㎡ 이하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주택단지내 주차장 설치기준의 50% 범위에서 완화를 유도함

❖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방향

- 인천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근거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건설, 관리·운영 등을 위한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신속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에 근거한 가칭 ‘인천광역시 공공주택 건설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공공주택공급과 지원, 통합심의위원회 등의 근거를 마련해야 함
- 역세권 청년주택의 공급은 역세권 특성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중심으로 건설이 예상되며, 인천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역세권 청년주택 건설, 공급 등을 위한 통합심의기구를 마련해 행정절차 간소화를 유도해야 함
- 인천형 역세권 청년주택정책의 차별화를 위해서는 커뮤니티 공간 및 시설 확보, 빌트인 구조의 임대주택 등 주택 및 주거환경의 질적 수준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이에, 공모형 우리집 사업에 지원되는 호당 3천만원의 지원금을 매입임대주택 중 청년임대주택 커뮤니티 공간, 빌트인 구조 등을 위한 지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인천형 역세권 청년주택공급을 차별화하기 위해서는 역세권 중심의 사업에 의존하기 보다는 인천시 차원의 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역세권 지역내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3. 정책제언

❖ 인천형 공공임대주택 ‘우리집’ 사업의 확대 변경 추진

- 인천형 공공임대주택 ‘우리집’의 유형은 영구임대주택으로 계층별 특성에 부합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에는 한계가 있어 확대 변경이 필요함
- 우리집의 명칭은 지속 사용하여 정책의 지속성과 연계성을 확보하는 것이 적절함
 - 사업목적은 공공임대주택의 질적 수준 향상과 계층별 특성에 부합한 수요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우리집 사업은 인천시의 행·재정적 지원에 의해 건설·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을 확대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인천시 자체재원이 투입된 공공임대주택으로 커뮤니티 공간 확보 지원, 빌트인 시설 설치비 지원 등이 이루어진 인천도시공사 중심으로 공급된 공공임대주택으로 설정함

- 확대된 우리집 사업에 역세권 청년주택 등을 포함하고 인천시 공공임대주택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인천형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체계화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인천 원도심 역세권 활성화방안과 연계 추진

- 역세권 청년주택의 공급은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인천 원도심 역세권 활성화방안과 연계 추진해야 함
- 역세권 활성화 구역 도출 및 사업설정, 거점사업 발굴, 시범사업지구 사업화 등은 사업추진시 공공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확보와 함께 청년계층에 필요한 임대주택의 확보가 가능함

❖ 사업추진을 위한 인천도시공사 등 협업

- 역세권 청년주택의 공공부문 사업시행 주체는 인천도시공사가 적합하며, 역세권 청년주택인 매입임대주택, 제물포역 및 굴포천역 도심공공복합개발사업에 의한 공공주택공급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인천시, 인천도시공사와 협업을 통해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인천도시공사를 인천형 공공임대주택 사업시행자로 지정해야 함
- 인천시는 기본계획 수립, 행정절차 이행 및 지원, 공급을 위한 재정지원 등 역세권 청년주택계획의 총괄 역할을 수행하고, 인천도시공사는 역세권 청년주택공급 사업추진, 청년주택 운영 및 관리, 사업계획수립 등 공급 및 사업추진을 담당해야 함

❖ 역세권 청년주택 정책 추진을 위한 후속 과제 수행

- 인천시 역세권 청년주택 추진을 위해서는 ‘청년주택공급 기본계획’ 마련하여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계층별 정책추진방향과 역세권, 신시가지 등 지역별 공급방향 등의 계획수립이 필요함
- 이를 위해 후속과제로 청년계층의 수요조사, 인천시 청년주택공급 기본계획,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및 운영 지침, 관련 조례 제정 및 개정(안) 등의 수행이 필요하며 전문기관의 지원을 받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함

인천시 공공주택공급을 위한 정책방향

■ 기윤환 도시공간연구부 선임연구위원

1. 서론

- 공공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서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거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과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으로 구분됨
 - 공공주택공급의 목적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있으며, 저렴하게 주택을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토록 유도하는데 있음
- 인천시의 공공임대주택재고율은 2022년 기준 8.4%(약 9.7만호)이며, 이 중에서 약 89% 정도는 LH 중심으로 공급되어 인천시 차원의 공공주택공급은 미미한 상황임
- 2020년 인천주거종합계획수립을 통해 인천시 주거정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세부 실행계획 차원에서 인천형 공공주택의 정립과 공급방안에 대한 추진은 미흡한 실정이며, 영구임대주택 중심의 우리집 프로젝트도 추가 공급 여건의 변화, 계층수요 및 특성에 부합하는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한계 등으로 사업의 변화가 필요한 상황임
- 본 연구는 인천시 차원에서 공급할 수 있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등의 분양형 공공주택과 역세권 청년주택 등 청년임대주택 등의 공공임대주택의 인천형 공급유형 및 사업방식, 시범사업 가능 대상지 등 인천형 공공주택공급을 위한 정책방향을 마련하는데 있음
 - 2017년 1월 20일 주택법 개정을 통해 무주택 서민을 위해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도입하였고, 2021년 9월 21일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해 공공주택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과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도입함

2. 인천시 분양형 공공주택 공급정책방안

1) 인천시 주택수요 추정

❖ 인천시 주택재고 현황

- 2021년 기준 인천광역시의 총 가구수는 약 120만 가구이며, 이 중에서 1인 가구 30%, 노인가구 20.3% 등으로 1인·노인가구가 전체 가구의 50% 이상을 차지함
- 2021년 기준 주택재고량은 105만호이며, 지난 10년간 100만~110만호 내외를 유지하고 있으나, 공동주택의 비중이 2013년 77%에서 2020년 89.9%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다가구주택 비중이 2013년 14.7%에서 2020년 2.3%로 감소함
- 인천광역시의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은 2022년 기준 98,677호로 공공임대주택비율이 8.4%이며, 인천도시공사 약 1.3만호, LH 8.5만호를 차지함
 -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은 남동구가 가장 많고, 서구, 미추홀구, 부평구 등의 순이며, 중구, 동구 등 원도심의 재고량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대기자는 2022년 기준 약 1만명, 평균 대기기간 26개월이며, 영구임대주택은 3,042명이 대기 중이며 대기기간도 53개월에 달함
- 2021년 기준 인천시 민간임대주택 재고량은 83,218호이며, 2021년 인천시 주택수 1,053,451호의 7.9%임

❖ 인천시 주택수요 추정 결과

- 주택수요추정은 가구기반모형으로서, 가구별 주택수요를 기반으로 가구소득과 주거비를 고려하여 추정함
- 2022~30년까지 인천시 주택수요는 약 23.2만호의 추가 수요가 요구되는 것으로 추정됨
 - 흡수율을 고려한 신규수요는 13.75만 호(자가 8.84만호, 차가 4.85만호)이며, 향후 예상되는 총 멸실수요는 9.68만호임
 - 2023~2030년 기간 중 지역별 추가 수요량은 남동구 3.7만호, 부평구 3.7만호, 서구 3.5만호로 가장 높고, 미추홀구도 3.1만호 수준임

[표 1] 2022~2030년간 인천광역시 최종 신규 주택수요 결과

구분		총 수요량	비고
추정수요	신규수요	A 133,600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기반 수요모형 적용 - 가구수(통계청), - 소득/주거비 증가율(10년평균)
	인구유입율 (흡수율)	B 101.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출인구 대비 전입인구 비율
	대체수요 (별 실주택)	C 96,82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재고 증가율(10년평균), - 멸실률(10년평균)
	총수요	A x B + C 232,310호	

❖ 공공임대주택 목표량 시나리오별 신규 공급량

- 공공임대주택은 수요추정보다는 정책적 목표 설정을 통한 공급량 추정이 적절한 상황으로 공공임대주택 재고율 기준, 가구수 기준, 무주택가구수 기준에 따른 총량으로 추정함
 -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수요추정이란 표현보다는 공공의 재원부담을 고려해서 공급목표량을 설정하는 개념이 적절함
- [시나리오 1] 2030년 공공임대주택 재고율 10.5% 가정 → OECD 평균치
 - 2030년 주택수 약 143만호의 10.5%를 목표로 할 경우,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약 15만호로 연간 6,400호 신규 공급이 필요함
- [시나리오 2] 2030년 가구수 대비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15%로 가정
 - 2030년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은 19.5만호(2030년 가구수 대비 15%)로 2023~2030년 기간 동안 연간 약 1.1만호의 신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함
- [시나리오 3] 2030년 무주택가구 대비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25%로 가정
 - 2030년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14만호(2030년 무주택 가구수 대비 25%)로 2023~2030년 기간 동안 연간 약 5천호의 신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함
 - 무주택가구 25%를 공공임대를 통해 지원한다는 의미로 인천시의 무주택가구 특성 분석을 통해 세밀하게 조정될 필요가 있음

[표 2] 공공임대주택 재고량 목표치

(단위: 천 가구, 천 호)

구분	시나리오1			시나리오2			시나리오3		
	A 주택수요 (재고기준) 추정 치	B. 공공임대 주 택재고	B/A	A. 가 가구수	B. 공 공임대	A/B	A. 무 주택 가구수	B. 공 공임대	A/B
2022	1,210.6	98.6	8.1%	1,197	98.7	8.2%	515	98.7	19.2%
2023	1,212.8	105.1	8.7%	1,212	109.4	9.0%	521	103.3	19.8%
2024	1,241.4	111.5	9.0%	1,226	120.2	9.8%	527	107.9	20.5%
2025	1,270.7	118	9.3%	1,241	130.9	10.6%	533	112.4	21.1%
2026	1,301.0	124.4	9.6%	1,254	141.6	11.3%	539	117	21.7%
2027	1,332.1	130.8	9.8%	1,267	152.4	12.0%	545	121.6	22.3%
2028	1,364.0	137.3	10.1%	1,279	163.1	12.7%	550	126.2	22.9%
2029	1,396.9	143.7	10.3%	1,291	173.9	13.5%	555	130.8	23.6%
2030	1,430.6	150.2	10.5%	1,302	195.3	15.0%	560	140	25.0%

- 2030 인천주거종합계획과 비교했을 때, 인천시 공공임대주택공급 목표량은 2030년 기준 15만호가 필요하며, 2022년 공공임대주택 98,677호를 고려할 때, 신규 공급목표량은 5만호 수준이 적절함

2) 인천형 공공주택의 개념 설정

- 인천형 공공주택은 인천시 차원에서 인센티브 등 정책적 지원, 건설비 등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공공주택을 의미함
- 인천형 공공주택은 주택소유가 가능한 공공분양주택과 저렴한 임대료가 보장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구분하고, 수요가 높은 유형으로 설정함
- 주택소유가 가능한 공공분양주택은 지분적립형 주택을 활용하여 신혼부부, 30대 중후반의 계층이 주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정책적 목표를 설정함
- 공공임대주택 중 매입임대주택과 신도시 통합공공임대주택 중 10% 범위내 확보, 민간임대주택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으로 설정하되, 임대주택의 질적 수준 향상을 목표로 하여 주택면적상향, 커뮤니티시설 확보, 빌트인시설 설치 등을 위한 인천시 차원의 재정적 지원을 실시함

- 인천형 공공주택은 ①지분적립형 주택, ②매입임대주택, ③신도시 지역의 통합공공임대주택의 10%, ④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의 유형으로 설정함
- 인천형 공공임대주택의 맞춤형 공급을 위한 청년형, 신혼부부형, 노인형으로 설정하고, 시범적으로 역세권 청년주택, 신도시 청년주택 등 추진

[표 3] 인천형 공공주택의 유형과 특징

구분	분양형 공공주택	구분	공공임대주택
관련법	• 공공주택 특별법	관련법	• 공공주택 특별법
자가전환 소요 기간	• 20년 또는 30년	공공임대	• 매입임대주택 • 신도시 통합공공임대주택 중 10% 확보
임대료 / 매입비용	• 공공 소유지분에 대해 인근 시세대비 80% 이하 임대료 납부	민간임대	• 근거: 민간임대주택법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거주의무 / 전매제한	• 5년간 실거주, 10년간 전매행위 제한	유형	• 1인 가구 청년형 (역세권 청년주택) • 신혼부부형 • 노인형
처분방법	• 전매제한 종료 후 제3자에게 주택 전체 매각 가능 • 처분 시점의 지분 비율대로 처분 이익 배분	공공지원	• 주택면적 확장 • 커뮤니티시설 확보 • 주택내 빌트인 시설

3) 인천형 분양형 공공주택 공급방안

❖ 정책목표 설정: 인천형 지분적립형 5,000호 공급

- 무주택 수요자 중 소득은 있으나 자산이 부족한 실거주 무주택자가 낮은 비율의 초기자본으로 주택을 소유하여 주거안정 도모
- 목표연도 2030년 기준 인천시 주택신규수요 23.2만호 중 임차자가 자가소유를 희망하는 신규 자가 수요 4.85만호의 10% 수준인 5,000호를 공급목표로 설정

❖ 공급방안

- 신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계양테크노밸리와 구월2공공주택지구의 공급물량 33,000호 중에서 공공분양형 주택의 10% 이내에서 지분적립형 주택 공급

- 33,000호 중에서 2,000호 이내의 지분적립형 주택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국토부, LH, iH 등과 협의를 통하여 확보 유도
- 도심공공복합개발사업이 굴포천역, 제물포역, 동암역 등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공공분양주택 중 일부를 지분적립형으로 확보
 - 굴포천역 남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총 2,530호 주택공급량 중에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200호, 제물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총 3,687호 주택공급량 중 300호, 동암역 남측 공공주택 복합지구 총 1,800호 주택공급량 중 100호 정도 등 역세권 지역 600호 공급량이 가능함
 - 향후 역세권 활성화 사업 등을 통해 동인천역, 인천역, 부평역 등의 지역에 공공이나 민간의 복합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함
- 역세권 복합개발사업시 일반분양, 공공분양, 공공임대 등의 주택공급계획시 공공분양형 주택을 지분적립형 주택으로 유도하여 추가 확보가 가능함
- 2030년까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기존 계획 2,600호 + 향후 사업을 통한 2,400호 확보 등을 통하여 5,000호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지원방안

- 지분적립형 주택은 취득한 지분 이외에 대한 대가로 이자에 해당하는 임대료가 책정되어 있음
- 인천시 차원에서 전월세 보증금 또는 주택구입자금에 대한 이자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임대료 지원 수준은 최대 20만원/월(연간 240만원 이내) 수준으로 하여 형평성을 유지하고, 인천시의 재정적 여건을 고려하여 지원 기간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3. 인천시 역세권 청년주택 시범사업 추진방향

1) 인천시 공공임대주택 2030년 15만호 달성 ; 신규 5만호 공급 필요

- 시나리오에 따라 무주택가구 대비 공공임대주택 재고량 25%, 가구수 대비 공공임대주택 재고량 15% 등으로 가정할 경우 2030년까지 총 14만호~19.5만호의 재고량이 필요하며, 이를 기준으로 신규공급물량은 4만호~10만호 수준임
- 인천도시공사와 2030년 인천주거종합계획의 2030년 공공임대주택 목표치는 공공임대주택 재고율 10.5% 달성으로 설정됨
- 이 경우 2030년 인천시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은 약 15만호로 신규로 공급할 목표치는 5만호 정도임

2) 인천형 공공임대주택 1만호 프로젝트 추진

❖ 인천형 공공임대주택 우리집 1만호 프로젝트 재설정 필요

- 인천형 공공임대주택 ‘우리집’의 유형은 영구임대주택으로 계층별 특성에 부합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에는 한계가 있음
- 2017년~2022년 동안 우리집 13,436호 공급으로 목표 조기 달성에 따른 신규 공공임대주택 정책 마련 필요
- 원도심 지역 내 신축형 우리집의 신규 공급을 위해서는 시·구유지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원도심 지역 내 시·구유지의 고갈, 지역주민의 민원 증가 등으로 우리집의 유형을 영구임대주택에서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우리집에서 가칭 ‘공감주택 1만호 프로젝트’ 시범사업 추진

- 목표: 공감주택 1만호 공급 → 인천형 자체 공공임대 20% 확보
 - 공공임대주택 5만호 중에서 인천형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은 신규 추가 물량 중에서 20% 이상으로 설정하여 인천형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은 1만호 수준으로 정책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적절함(2022년 공공임대주택 대기자는 약 1만 가구가 존재함)
- 인천시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LH 중심으로 공급되어 인천시와 iH 공급비율이 10% 수준으로 향후 인천형 공급 목표치를 2배 이상 확보하는 것은 커다란 의의가 있음

- 2030년 공공임대주택 신규 공급량은 5만호, 이 중에서 인천형 공급물량은 1만호 수준으로 정책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적절함

❖ 인천형 공공임대주택 기준

- 인천형 공공임대주택의 면적 기준은 세대수와 개별법 기준을 준용하며, 최저주거기준면적 이상인 1인 가구 원룸의 기준을 20㎡ 이상으로 상향하는 것이 적절함
 - 국토교통부 기준 면적 14㎡에서 거실 등 공간확보를 위해 6㎡ 이상을 추가하여 주거공간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유도해야 함
 - 「민간임대주택법」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면적 기준은 40㎡ 이하로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1인 가구와 신혼부부 등 2인 가구에 따라 차별적 적용이 필요함
- 커뮤니티 시설은 임대주택 공급호수에 따라 규모를 정하고, 매입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고 인천시의 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조성토록 유도함
 - 매입임대주택은 20호 미만의 소규모 단지로 인천시의 재정지원과 입주자 특성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일정 규모 이상의 단지형태로 공급되어 공급 호수에 따라 커뮤니티 설치면적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커뮤니티 시설의 용도는 입주자 수요, 지역특성에 따른 기여정도 등에 따라 유연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청년계층이 선호하는 빌트인 시설은 붙박이장, 에어컨, 냉장고 등으로 가구와 가전제품 등으로 구분하여 설치토록 유도하고 재정지원을 통해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 기본 빌트인 시설로는 현관 수납장(신발장), 붙박이장(옷장), 욕실 수납장 등으로 주택설계시부터 이를 고려하여 계획토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가전제품은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인덕션 또는 가스레인지 등 청년계층의 주거비 완화를 위해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빌트인 시설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공공임대주택은 인천시 등의 지원이나 계약금액에 반영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3) 시범사업 2030년 목표 ‘역세권 청년주택’ 5,000호 공급

❖ 목표: 공감주택 1만호 중에서 청년주택 50% 공급

- 인천형 공공임대주택 중 50%를 청년형으로 공급하고, 50%는 노인형으로 구분하여 공급목표 설정
 - 이 중 청년형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1인 가구 청년형과 신혼부부형으로 추진
- 청년형 목표량 5,000호 중에서 1인 가구 청년형 3,000호, 신혼부부형 2,000호 등으로 구분, 1인 가구 청년형은 역세권 지역과 직주근접형으로 구분 필요
- 공급목표량은 역세권 청년주택 2,000호, 직주근접형 1,000호 등으로 설정하고 시범사업으로 역세권 청년주택을 설정함

❖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유형

- 역세권 지역은 대규모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한계가 있어 공공과 민간의 역세권 복합사업과 연계하여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역세권 도심공공복합개발사업은 통합공공임대주택 유형으로 공급되고 있으며, 민간중심의 사업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유형으로 공급됨
- 역세권 지역에 확보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은 소규모 형태의 매입임대주택의 활용이 적합하여 인천도시공사가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이 적절함
- 인천도시공사 공급 통합공공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등을 시범사업 유형으로 설정하고, 향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신도시내 공공임대주택 중 10% 범위내로 확대

❖ 역세권 청년주택 시범사업 공급방안

- 현재 추진 중인 굴포천역, 제물포역, 동암역 도심공공복합개발사업에서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확보 가능한 물량은 총 175호가 가능함
 - 굴포천역 남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60호, 제물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75호, 동암역 남측 공공주택 복합지구 40호 등
- iH의 매입임대주택은 매년 1,000호를 목표로 공급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50% 수준인 500호를 역세권에 공급토록 유도

- 이 중에서 청년형 35%, 신혼부부형 35% 정도를 할당하여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최소한 매년 350호, 2030년까지 1,225호의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향후 동인천역, 인천역, 부평역 등의 역세권 지역에 복합개발사업 추진 시 청년형으로 200호 이상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현재 추진 중인 ‘인천 원도심 역세권 활성화방안’과 연계하여 공공 및 민간 추진 사업을 발굴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활용한 400호 이상 확보 가능

4. 신혼부부 1,000원 주택 시범사업 추진방향

1) 가칭 ‘1,000원 주택’ 개념

- 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의 지자체와 정부가 협력하여 신혼부부에게 최소 부담하에 공공임대주택 시범공급
- 대상: 신혼부부(유자녀 우선공급), 무주택자,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소득기준
- 입주자 부담비용: 1일 임대료 1,000원, 보증금 2,000만원* 이하
 - * 한도(2천만원) 초과시 지자체 부담

2) 신혼부부 1,000원 주택 200호 시범 사업 추진

- 공공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활용
 - 선호입지 및 주거소요에 부합한 양질의 주택을 적지적소에 공급가능하고 주택도시기금*(기금이율 1→0.5% 완화 추진) 등 활용시 지자체 부담완화 가능
- 매입임대주택 지원단가: 출자 45%, 기금 50%(이율 1%), 입주자 5%(일부 유형 상이)
- 조건부 공급: 지역거주의무 10년, 주택거주의무 5년

3) 출산에 따른 면적 상향

- 청년 및 신혼부부 대상 매입임대주택은 청년/신혼I/신혼II 등으로 유형이 구분되어 각각 입주 요건과 주택 면적 등이 다양
 - 매입임대 유형에 따른 주택규모: 청년 < 신혼부부I < 신혼부부II

[표 4] 매입임대주택 특징

구분	대상	임대료	임대기간	매입기준
청년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청년(19~39세)	시세 50%이내	최대 6년	일반매입주택 중 대학교 인근 또는 교통 편리 지역
신혼부부	월평균소득 70%(맞벌이 90%) 이하 (예비)신혼부부	시세 50%이내	최대 20년	일반매입주택 중 방 2개 이상 - 다가구주택 등
신혼부부	월평균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예비)신혼부부	시세 80%이내	최대 6년	일반매입주택 중 방 2개 이상 - 아파트, 주거용오피스텔 등

- 결혼 후 출산할 경우 현재보다 넓은 면적의 주택이 필요하며, 가족구성·소득이 변경되면 입주요건을 초과하여 타 주택으로 이주해야 할 수도 있어 결혼에 걸림돌
- 보다 넓은 타 임대주택으로 이동하려면 별도 입주신청을 통해 선정되어야 하나, 경쟁률이 높을 경우 선정되지 못한 상태에서 현재 주택 계약기간이 종료될 수 있음
- 출산으로 추가 면적이 필요할 경우 현재 주택에 거주하면서 보다 넓은 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동을 지원하는 제도 마련
- 무자녀 60㎡ 이하, 1자녀 60~85㎡, 2자녀 85㎡ 이상
 - 85㎡ 초과시는 가구원수 5인 이상시 가능
 - 인천형으로 정립하여 신혼부부 대상 2자녀 이상시 공급

4) 잔여 보증금 연계 금융상품 마련

- ‘(가칭)1,000원 주택’ 입주시 낮아진 보증금(예시; 기존 보증금 - 2,000만원) 연계한 금융상품 제시
- 지자체 지역금고와 연계하여 잔여 보증금 예금 가입시 기존 이율보다 1.5~2배 수준의 금융상품을 만들어 향후 주택구입자금으로 활용토록 지원
- 추가 금리: 지역금고와 지자체가 각각 50% 씩 부담
- 예시 : 기존 정기예금 4.0% → 신규 정기예금 6% 수준 상품 개발(지역금고 1%, 지자체 1% 부담)

인천광역시 특별건축구역 활성화 적용 방안

■ 조상운 도시공간연구부 선임연구위원

1. 연구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특별건축구역 제도는 2007년 10월 건축법 개정을 통해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 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어 2021년 기준 전국 70개 구역이 지정·운영중임
- 인천시에 지정된 사례는 없으나, 민선8기 공약으로 제물포르네상스와 연계하여 원도심 지역에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한 창의적 건축 및 새로운 도시경관을 창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임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천시 원도심(특히, 중·동구)을 중심으로 창의적 건축물의 건축을 통한 새로운 도시경관 창출을 위해 특별건축구역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특별건축구역 제도의 효과적 운영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과제를 살펴보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제도 적용 방향, 적용가능 지역 검토 및 운영방안을 살펴봄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경제자유구역 등 신도시를 제외한 인천시 원도심 전체를 대상으로 하되, 특별건축구역 적용가능 지역 검토는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 공간범위인 중동구 지역에 한하여 분석함
- 연구의 방법은 제도 및 지정 현황, 운영실태 등에 관한 문헌조사와 타 시도 특별구역 지정운영 사례분석, 원도심 내 지정대상 사업과 관련한 현황 분석 및 지정 목적 달성과 연계한 지역지구에 대한 공간 데이터 분석을 진행함

2. 특별건축구역 제도 특성 및 지정현황

1) 제도 취지 및 개정방향

- 특별건축구역은 2005년 ‘대통령자문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에서 건축 설계의 창의력 제한 문제를 해결하고 건설기술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법 자유구역’ 도입 필요성이 처음 제기됨
- 이후 논의를 거쳐 2007년 10월 17일 건축법 개정을 통하여 제도화되었으며, 2008년 1월18일부터 시행됨
 - 건축법 제8장 특별건축구역 등의 제69조에서 제77조의3에 독립적으로 특별건축구역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이후 제도 활성화 및 불합리한 운영 개선을 위한 법 개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짐
 - 주요 개정사항은 특례적용 대상 확대, 민간 제안에 의한 특별건축구역 지정, 도시재생을 위한 결합 건축 특례 대상 확대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한 사항과 도심 내 건축 리뉴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됨

2) 지정현황

- 2007년 특별건축구역 제도가 도입된 이래 2021년까지 70개 구역이 지정·운영중에 있으며, 서울시가 29개소로 가장 많고, 세종시 25개소, 경기도 12개소, 부산시 4개소의 순으로 인천시는 현재까지 지정된 곳이 없음
 - 그간 특별건축구역은 서울과 경기 지역과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조성한 세종시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외에는 부산시에 한정되어 지정됨
- 사업방식별로 보면, 행복도시법에 의한 행복도시 사업지구가 24개 구역으로 가장 많고,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지구, 도시재정비촉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가 각 16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구역이 6개 구역 등의 순임
- 건축물 용도별로는, 공동주택이 63개 구역 9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이외 복합용도 3개 구역 등 대부분 공동주택 유형에 집중되고, 한옥은 3개 구역임

3. 제도 운용 및 지정사례

1) 지정사례 특례적용사항

- 공동주택 세 곳(서울 강남세곡지구 보금자리주택, 신반포1차 재건축사업, 돈의문1 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사업)과 한옥 등 단독주택지 세 곳(은평뉴타운, 수원시 팔달 한옥촉진단지, 북촌 및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사례를 조사함
 - 특례적용사항을 살펴보면 공동주택의 경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진입도로의 너비 등을 완화적용함
 - 한옥 등 단독주택의 경우 건폐율, 대지의 조경, 대지안의 공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배제 또는 완화받음

2) 지자체 운용사례

- 지자체 차원에서는 지역 정체성 확보 및 공동주택 디자인 향상, 도시·건축디자인 혁신 수단으로서 특별건축구역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특별건축구역 적용을 위한 운영 지침을 별도로 제정하여 운영하는 지자체가 있음
 - 서울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에 대한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운영지침, 건축물 심의기준 내 특별건축구역의 적용, 서울시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방안 등을 마련
 - 부산시는 '2030 부산 건축도시디자인 혁신방안', 부천시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위한 운영지침'을 별도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특별건축구역에 한정된 건축법 적용 완화만 아니라 도시 전체의 디자인 혁신을 위한 국제공모, 신속한 행정지원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마련하여 통합적으로 운영함

4. 인천 원도심 특별건축구역 활성화 방안

1) 기본원칙 및 지정목적

- 인천 특별건축구역의 도입 시 창의적 기술 적용, 우수한 디자인 건축 유도를 통한 도시경관 창출 등 법의 본래 취지를 달성하고, 지정 남발 및 법 배제 또는 완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하여 인천 특별건축구역 활성화를 위한 기본원칙과 지정목적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원도심 특별건축구역 지정의 기본원칙은 1)원도심 특성을 고려한 도시관리적 측면 우선고려, 2)건축의 창의성혁신성을 통한 도시경관 창출의 공공적 가치 중시, 3)명확한 비전 제시를 통한 제도 도입의 타당성 확보임
- 지정 목적은 인천 원도심 특성을 고려하여, 1)우수한 디자인 건축 유도를 통한 지역이미지 및 가치 향상, 2)주변지역과 조화로운 건축경관 형성, 3)지역특성에 맞는 건축디자인을 통한 특화경관 창출 세 가지로 설정함

[그림 1] 원도심 특별건축구역 지정목적



2) 특별건축구역 지정대상 검토

- 검토대상지인 중동구 내 건축법 제69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 특별건축구역 대상사업 현황을 조사하고, 지정목적 달성과 관련된 지역·지구 현황을 분석함
- 검토대상 사업과 관련 지구를 중첩한 결과
 - 첫째, 역사문화자원의 보존·활용과 관련하여 문화재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건축자산 등 근대 역사문화자원은 중구 개항장문화지구 일대 및 동구 창영초등학교 일대를 중심으로 집중 분포하고 있음
 - 둘째, 월미지구 특별계획구역, 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이 인천항 및 개항역사문화 중점경관관리구역 내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구역별 경관 가이드라인 준수가 필요한 사업이라 할 수 있음
 - 셋째, 건축물의 용도, 밀도 등 토지이용규제와 관련 있는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및 고도지구에 포함되는 단위사업은 없음
 - 넷째, 동인천역 재정비촉진구역과 인천역 복합역사개발사업 대상지는 인천시에서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을 통한 복합용도 개발을 구상하고 있는 지역임

[표 1] 특별건축구역 지정 검토 대상사업과 관련 지구의 중첩 결과

사업구분	사업명	중점경관 관리구역		역사문화자원		용도지구		복합 개발	비고
		개항역 사문화	인천항	역사 문화 환경 보존 지역	건축 자산	역사 문화 특화 경관 지구	고도 지구		
정비구역	경동울목 재개발			○	○				답동성당
	경동 재개발			○	○				용동큰우물
	화수화평 재개발			○	○				화도진지
	송현1,2차A 재건축			○	○				송현배수지
	송월 재개발								
	송월아파트 재개발								
재정비촉진지구	동인천역 재촉지구						○		예정)공간혁신구역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월미지구	○							
	만석지구	동일방직			○				건축자산(동일방직)
		태성철강 동아원			○	○			
기타 (복합적 토지이용)	항만재개발사업구역		○						
	인천역 복합역사개발사업						○		예정)공간혁신구역

○ 이를 토대로 앞서 설정한 지정목적 중 두 가지 이상의 복합적 목표에 해당되는 사업을 우선순위로 할 것을 제안함

[표 2] 목표와의 부합성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검토 우선순위

우선 순위	사업명	지정목적					비고
		랜드마크 (상징성, 복합토지이용)	주변과 조화로운 건축 경관	특화경관			
				역사	수변	가로	
1	인천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	○	○	○	○	○	
2	인천역 복합역사개발사업	○		○	○	○	
	동인천역 재정비촉진구역	○		○		○	
3	월미지구 특별계획구역	○			○		· 선광선창부지
	만석지구 특별계획구역	○		○			· 동일방직부지, 태성철강부지, 동아원부지
4	역사문화자원 인접지역 정비사업		○	○		○	· 경동울목 재개발, 경동 재개 발, 화수화평 재개발, 송현 1,2차A 재건축
5	기타 정비사업		○			○	· 송월 재개발, 송월아파트 재개발

[요약그림 2] 특별건축구역 지정 관련 지역 현황 종합도



3) 운영방안

- 인천 원도심 특별건축구역 운영방안으로 현재 제정된 국토부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도록 하되 이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1)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등과의 통합심의 필요
 - 2) 특별건축구역 지정대상 사업별로 구역 지정검토 및 결정 시기 고려
 - 3) 합리적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자문기구 설치·운영
 - 4) 지역 및 사업특성에 적합한 공공성 체크리스트의 필수항목 부가항목 구분 적용
 - 5) 구역지정 및 특례적용에 따른 모니터링 의무적 실시 등

4) 정책건의

- (특별건축구역 지정검토 대상 선제적 제시)사업성 확보 수단으로 이용되는 무분별한 특례 적용을 방지하기 위해 대상을 선제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제도 도입 초기단계임을 감안하여 인천시 원도심에 우선검토 대상을 다음과 같이 제안함
 - ①근대건축자산이나 역사적 공간의 경관관리 필요지역, ②수변경관의 관리가 필요한 지역, ③주요 산이나 구릉지 주변 자연경관 관리가 필요한 지역, ④장래 도시구조 변화원도심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제물포르네상스, 인천대로 주변 활성화사업 등
- (공공성 확보 수준에 따른 특례적용 범위 등 적용원칙 마련) 특혜시비 등을 방지하기 위해 특례적용 항목 및 기준에 대한 명확한 원칙방향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①특례적용 항목은 공공성을 일정 수준 이상 만족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며, ②건축위원회 구역지정 심의시 결정된 개별 공공성 항목의 실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해당 특례적용 확정, ③용적률이나 건폐율, 그리고 높이 완화 범위 등 해당 특례적용 수준은 해당 공공성 확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결정하도록 함
- (공공주도 개발에 대한 특별건축구역 지정 우선 활용)인천시 내 공공 개발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정·운영하여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우수한 공간형성을 선도함
 - 국가 주택공급정책과 연계하여 추진중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나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의 핵심사업으로 추진예정인 내항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 동인천역 또는 인천역 복합개발사업 등에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혁신적 디자인 건축을 위한 통합적 행정체계 운영) 본격적으로 특별건축구역이 적용되면 부서간 업무협이나 관련 서류의 검토, 행정절차 이행 등 업무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운영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인천 도시·건축디자인 제안(공모) 제도 신설 제안) 현재 서울, 부산에서 운영중인 ‘도시·건축혁신디자인’ 정책을 참고로 새로운 방안을 제안함
 - ①인천시는 혁신적 도시·건축디자인을 통한 도시경관의 창출 및 도시가치를 향상시킨다는 정책방향 설정, ②각종 행정시스템을 지원하는 ‘디자인 우선 행정시스템’ 채택, ③혁신적이고 창의적 건축물이 원도심 전역에 건립되도록 공공분야와 민간분야로 구분하여 운영, ④(가칭)인천 도시·건축 혁신디자인 제안(공모) 시범 운영

인천광역시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

■ 김유정 도시공간연구부 부연구위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공공건축이란 공공기관이 건축하거나 조성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의미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조).
- 2007년 건축기본법 및 2014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제정되면서 공공건축의 발전과 국민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음. 이를 통해 공공건축의 체계적인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여건이 마련되었음.
- 인천광역시는 각종 도시개발 및 도시재생 사업에 따라 지속적으로 공공건축 조성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
- 본 연구의 목적은 인천광역시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음. 인천시 여건과 현황을 반영한 지원센터의 설립을 통해 공공건축 조성절차를 체계화하고, 사업기획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며, 사업부서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인천시의 공공건축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인천시 공공건축 검토수요 등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 도입배경

- 인천시 공공건축 품질문제의 지속적인 제기
 - 시민을 위한 공공건축은 도시환경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발전을 위한 주요한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인천시의 공공건축물은 전반적으로 디자인 수준이 미흡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
- 인천시 공공건축 품질향상을 견인할 주체와 제도의 부재
 - 건축기본법(2007) 및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2014) 제정을 통해 공공건축의 발전과 국민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기반이 제도적으로 마련되고 있으나 인천시는 공공건축을 체계적이고

견인할 조직이 부재하고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황임. 특히,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공공건축 관련 전문조직 설립과 운영 및 재원마련을 위한 제도적 기틀조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음.

- 인천시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공공건축 조성수요 대응체계 마련 필요
 - 공공건축 2023년 인천시 공공부문 건설사업 발주계획은 총 46개 기관 2,441건(약 2조 9,378.4억 원)으로, 그 중 공공건축 건립사업은 37건이 추진 중에 있음.
 - 설계공모 및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상을 설계비 2.1억 원에서 1억 원이상으로 확대 변경됨. 이에 인천시 공공건축물 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상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인천시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필요
 - 인천시는 공공건축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증가하는 사업계획 사전검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수립이 필요함. ‘인천광역시 건축산업서비스 진흥조례’를 제정하여 센터설립을 위한 제도적 기틀마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건축기본계획, 공공디자인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장소중심의 종합적 공공건축 디자인 관리체계 수립이 필요하며 지역현안에 대응하는 공공건축 조성전략 수립이 필요함.

3. 인천시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운영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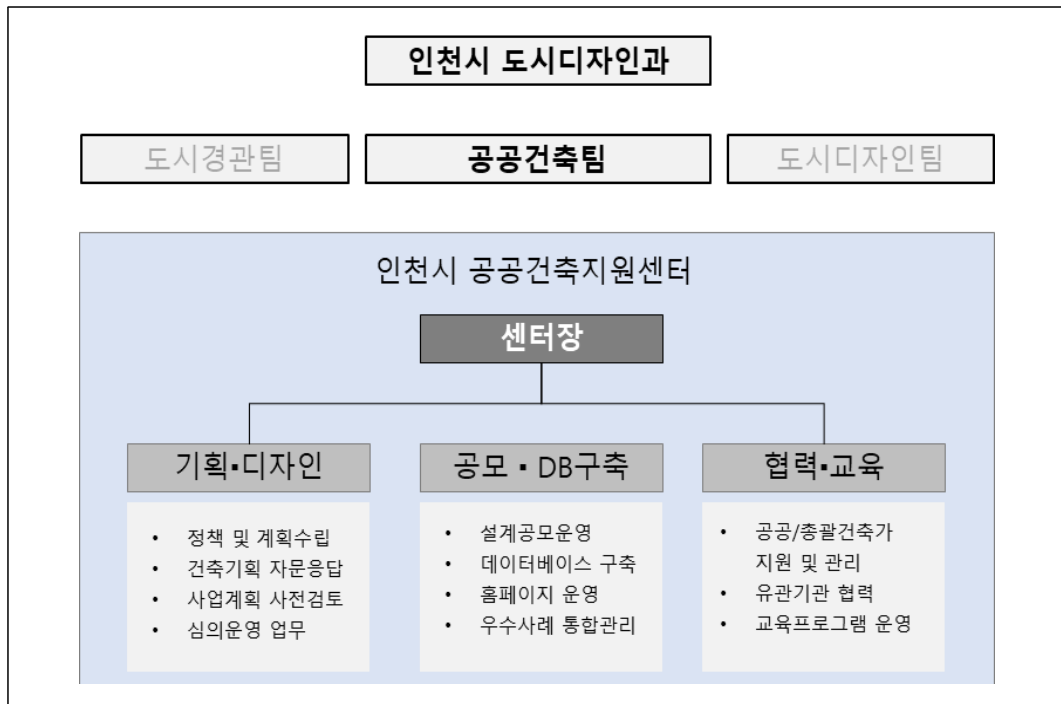
1) 지원센터의 목표 및 역할

- 지원센터의 목표는 고품질의 공공건축을 조성하기 위함이며 이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균형 발전기여, 거주환경 개선에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고자 함.
- 지원센터의 역할은 다음과 같음
 - 합리적인 건축기획 및 사업계획 수립지원
 - 공공건축 통합적 조성/관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 효율적 심의업무 운영 및 우수디자인 촉진
 - 상위계획과의 적합성 유지 및 인천 지역현안 대응

2)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방안

- 인천시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를 위해 다양한 구축방안 및 설립형태에 따른 대안을 검토함.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인천시 도시디자인과 내 ‘인천광역시 지역공공 건축지원센터’ 설치를 제안하고자 함.
 - 인천시 도시디자인 정책과 연계한 공공건축 조성 관련 업무추진이 용이함. 공공건축팀은 공공건축과 및 총괄건축과 관련된 정책수입 및 지원업무를 전담하고 있어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에 적합함.
 - 공공건축 조성을 위한 통합적인 관리 및 운영이 가능함. 공공정책 업무를 인천시 내부에서 종합적으로 연계추진이 가능하며 효율적인 조성정책의 사업추진이 상대적으로 용의함. 또한 건축기본계획,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경관계획 등 관련 계획 및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 창출 및 예산절감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음.
 - 지원센터 운영은 인천시 예산으로 설립 및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지원 조직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공사 및 연구원 등 외부 유관조직의 형태보다 인천시 행정조직으로 운영하는 것을 제안함.

[그림 1] 인천시 공공건축지원센터 조직도(안)



3)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업무 제안

- 인천시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업무는 ‘공공건축 조성업무’와 ‘공공건축 지원 및 관리’ 업무로 구성되도록 제안함.
- ‘공공건축 조성지원 업무’는 공공건축 조성과정에 직접 연관되어 있는 업무들로 ①건축기획 지원 업무, ②사업계획 사전검토 업무, ③공공건축 심의업무로 구성되어 있음. 이는 공공건축의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업무들로 공공건축 지원센터의 핵심업무들임.
- ‘공공건축 정책지원 및 관리 업무’는 공공건축 조성을 위한 지원업무들 ①자문응답 및 교육, ②데이터베이스 구축, ③설계공모 운영으로 구성되어 있음. 본 업무들은 조성과정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지만, 올바른 공공건축 조성문화와 유관기관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업무들로 구성됨.

4. 정책제언

1) 법제도 개선방안

- 인천시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원활한 설립과 운영을 위해, 공공건축 디자인 및 조성절차 관리와 관련한 사항을 ‘인천광역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로 제정토록 함.
- 공공건축 디자인 및 조성절차 관련하여 설계의도 구현, 조성절차 관리, 사업발주방식과 관리체계의 적절성을 포함할 것을 제안함. 우수설계자 선정 및 지원 관련하여 사업특성을 고려한 발주방식과 우수 설계자 선정을 위한 제도 연계를 선정하도록 함.
- 공공건축가를 활용하여 사업 특성 및 디자인 방향의 검토·자문, 적절한 발주방식 결정, 교육프로그램 운영, 디자인프로세스를 관리 및 설계단계 참여 등의 기획업무 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2) 센터설립 및 운영 지원방안

- 제안하는 센터조직 규모는 약 5명으로 센터장을 중심으로 기획·디자인, 공모·DB 운영, 협력·교육 업무를 수행토록 구성되어 있음. 인원확보에 있어 신설부서절차 및 부서간 인원 조정등을 통하여 인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나, 건축설계 및 디자인에 특화된 전문인력을 영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재원부분은 상설기구이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한 부담은 적을 것으로 판단되나, 관련 운영 및 사업비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행적 및 재정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민약, 공공의 행정지원 또는 서비스 차원으로 접근할 경우 국비 또는 지방비에 의한 예산확보를 통하여 지원하는 것도 제안함.

3) 공공건축 통합계획 및 사후평가제 도입

- 인천시 공공건축의 효율적 활용과 공급을 위해서 공공건축 통합계획의 일환으로 ‘인천시 공공건축 마스터 플랜 수립’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공공건축 실태와 향후 수요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공공건축 조성과 유지관리 전략과 함께 구체적인 이행 및 지원방안을 담은 통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공공건축 사업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사업계획과 시행의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지원 성과를 평가토록 할 필요가 있음. 공공건축 특별법(2022년 시행)은 시행시 준공 1년 이내에 성과평가를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음.

4) 관련 유사기관·단체와 네트워크 구성

- 인천시 공공건축지원센터는 인천시 및 군구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업무 분담 및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국가 공공건축 및 타 지자체 지역공공건축센터와 네트워크를 형성토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함.
 - 인천시 공공건축지원센터는 인천시 및 군구 행정담당자, 실무자, 전문가 등 공공건축 조성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군구의 실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토록 함.
 - 인천시 공공건축지원센터는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와 정책지원 논의, 교육 및 홍보확대, DB구축 등 협력체계를 마련해야 함. 또한, 인천시의 공공건축 지원센터는 국가공공건축센터로부터 안정적, 장기적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요청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음.

근로자임대아파트 활용방안 연구

■ 안내영 도시공간연구부 연구위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인천시 서구 가좌동 소재의 근로자임대아파트는 인천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미혼 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임대아파트임
- 1984년 준공된 후 인천시 미혼 근로 여성들의 주거복지에 기여해 왔으나 임대아파트가 노후화되면서 다른 주거에 비해 주거성이 떨어짐
 - 1984년 준공 이후 몇 번의 수리를 거쳤으나 노후화가 심각
 - 아파트의 구획이나 형태가 현재 생활양식에 맞지 않아 임대료가 매우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주변 대체 가능한 주거지에 비해 경쟁력이 부족
- 행정 목적을 상실한 공유재산인 근로자임대아파트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방안을 다각도로 탐색하고자 함

2. 근로자임대아파트 현황과 활용방안 검토 필요성

1) 근로자임대아파트 현황

- 명칭: 인천광역시 근로자임대아파트
- 위치 / 준공일: 서구 가좌로 96번길 47 / 1984년 12월 10일(1985년 2월1일 입주)
- 대지규모 / 용도지역: 3480.4㎡ / 일반공업지역
- 건축물 용도 / 연면적: 공동주택(아파트) 2개동 100세대 / 3782.88㎡
-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 30.68㎡(큰방 9.36㎡, 작은방 7.29㎡, 공용 14.04㎡)
- 현재 최대 수용인원 200명, 호당 2명
- 현재 월사용료는 큰방 25,000원, 작은방 19,000원(보증금 큰방: 50,000원, 작은방: 38,000원)임

[그림 1] 위치도(좌) 및 아파트 외부(우)



2) 근로자임대아파트 활용방안 검토 필요성

- 첫째, 근로자임대아파트는 1984년 준공 이후 30년이 넘는 건축물로 몇 번의 수리가 있었지만 노후도가 심하며 2023년 2월 현재 200명 수용인원 중 2명만 거주
- 둘째, 일반공업지역내 공장들로 둘러싸인 곳에 입지하고 있어 타 주거지역과 비교하여 정주여건이 양호하지 않음. 인근에 있는 축산물시장으로 인한 악취와 어두운 골목환경도 취약한 주거환경의 한 요소임
- 셋째,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한 근로자임대아파트는 1980년대 우리나라 산업화 시절 여성 근로자들의 복지여건 개선을 위해 조성된 것으로 낙후된 시설이 현재 생활 방식과 맞지 않는 면이 많음. 물리적인 노후 문제뿐만 아니라 공간 형태가 거주 수요 변화 대응하지 못하면서 활용 용도에 대한 전면적 검토 필요성이 높아짐
- 넷째, 연구대상지 근로자임대아파트는 행정재산(공공용재산)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하여 매각, 교환, 대부 등을 할 수 없으며 입지여건상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양여, 교환하기도 어려움. 근로자임대아파트를 타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용도를 폐기하고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바꾸는 절차 필요

3 근로자임대아파트 활용방안

- 대상지의 도입 기능을 검토하기 위해서 인구, 종사자, 사업체 현황, 생활SOC 현황, 건축물 용도 현황을 분석하고 인터뷰 등 수요를 조사함
- 조사 결과 대상지를 포함한 블록과 가좌4동의 주차장 수요가 가장 크게 부각됨

- 인터뷰에서는 체육시설과 휴게공간 부족이 제기되었으며 생활SOC 분석에서는 도서관의 수요가 파악됨
- 상위계획과 기타 사례분석에서는 공유오피스, 메이커스페이스, 스튜디오 등 문화산업과 창업을 위한 지원시설이 파악됨
- 이러한 수요를 바탕으로 5가지 대안을 도출하고 가능한 형태와 관련 절차를 검토하였음

1) 대안 도출과 대안별 장단점 검토

- 대안1은 주차전용건축물로 건축하여 부족한 주차공간을 공급하는 방안임. 가장 시급한 수요에 대응하는 대안이나 주차장만의 개발은 토지이용 효율에서 아쉬움
- 대안2는 주차장을 기본기능으로 하고 옥상공원과 간이운동장을 공급하는 방안임. 시급한 주차수요를 해결하고 주변 근로자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함
- 대안3은 공유오피스, 메이커스페이스, 스튜디오, 회의실, 휴게공간, 주차장을 결합한 복합건축물임.
- 대안4는 매각하는 것으로 토지비에 해당하는 소득을 얻을 수 있음
- 대안5는 철거 후 토지 임시사용 방법이 있음. 당장 활용방안을 찾기 어렵다면 임시로 토지만을 사용하고 향후 필요한 용도 출현 시 활용

[표 1] 대안별 장단점 검토

구분	시설형태	장점	단점
대안1	주차장	• 지역에서 가장 시급한 수요를 해결	• 개발용량을 모두 채우는 450면은 과공급 우려. 활성화 기여도 낮음
대안2	주차장+옥상공원, 간이운동장	• 시급한 주차수요를 해결하면서 주변 근로자에게 휴식공간 제공 • 주차장 건설에 약간의 추가비용으로 큰 효과	• 기존 주변 사람들을 위한 시설로 활성화 측면에서는 아쉬움
대안3	공유오피스, 메이커스페이스, 회의실, 주차장 등 복합시설	• 주변 기업의 지원기능과 창업지원 기능을 추가하여 산업발전과 주변 지역 활성화에 기여	• 건설비용이 큼
대안4	매각	• 토지매각으로 재정 확보	• 향후 유사 토지자원 재확보 필요시 매각대금보다 높은 가격 예상
대안5	철거 후 토지임시 이용	• 현 상태에서 초기 비용이 가장 적음 • 향후 수요에 대처할 수 있음	• 미래 관리방안 수립 필요 • 장기간 저이용 상태로 방치 우려

2) 정책제언

❖ 유희재산의 점검과 목록화

- 근로자임대아파트는 1984년 준공 후부터 2010년대까지 근로자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한 건립 목적을 비교적 충실히 이행 해왔음
- 근로자임대아파트와 같이 과거 시대 요구에 의해 만들어졌던 시설들이 시대상 변화에 따라 역할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경우가 발생하여 기능이 저하된 시설과 유희시설을 시설을 활용하는 등 새로 부상하는 수요(돌봄시설, 문화여가시설 등)로 전환하고 있으나 시설별로 산발적으로 이뤄짐
- 유희시설과 기능이 저하된 시설들을 조사하고 목록화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유연한 공유재산의 운용 방안 모색 필요

- 행정재산은 고유의 목적을 가지는 공유재산으로서 그 목적을 훼손하거나 임의적인 전용을 막기 위해 행정재산의 교환, 양여, 대부, 사권 설정 등을 제도적으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분류된 유희시설이 제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움에도 다른 기능으로 전환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음
- 행정재산의 무분별한 전용은 막아야 하지만 기능이 저하된 유희시설을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절차 필요
- 유희재산의 점검과 목록을 통해 관리가 이루어지면서 유연한 활용 가능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면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사용과 시 재정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임

영흥 공공사업 추진부지 활용방안 연구

■ 윤혜영 도시공간연구부 연구위원

1. 서론

- 영흥 공공사업 추진부지는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 외리 2448-1 일원, 면적 약 890,486㎡로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에 맞춰 해당 부지에 인천시의 자체 폐기물을 매립하는 인천형 자체매립지 조성을 목적으로 민선 7기 시기인 2021년에 약 617억 원에 매입한 부지임
- 민선 8기에서 매립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을 전면 폐기하여 매입한 공공부지의 활용방안을 새롭게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이에 민선 8기는 해당 부지의 활용에 있어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활용방안을 마련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기도 함(김중국, 2022.7.11., 이서인, 2022.8.31.)
- 해당 부지의 활용에 대한 여러 관심과 함께 공공재원으로 매입한 부지의 유희화를 우려하는 의견도 나타나 공공부지의 적절한 활용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강조됨
- 본 연구는 영흥 공공사업 추진부지의 적절한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해당 부지의 토지 특성과 주민 의견, 부지 활용의 공공성, 지역 발전과의 연계 등을 고려하여 단기 활용과 중·장기 활용 대안을 모색하고자 함

2. 대상지역의 이해

❖ 지역여건

- 대상지역은 영흥면 외리에 위치하며, 고령인구 비중이 높고 인구는 소폭이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주산업별 종사자는 숙박 및 음식점업과 전기·가스·증기 공급업 및 건설업이 높게 나타나지만 농가 및 어가 종사자 수가 많아 1차산업 비중이 높음
- 최근 대상지 주변의 공공사업 추진 등이 진행되면서 다양한 특성화 사업들이 추진되었으며, 가시화 단계에 이르러 방문객 증가와 지역활성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음

❖ 기 부지활용여건

- 대상부지는 인천시의 자체매립지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에서 매입한 것이 계기가 되어 주민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킨 바 있음
- 에코랜드로 명명된 이 사업의 계획은 부지 현황과 폐기물 처리를 비롯한 여러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추진되었으나 이후 폐지되었으며, 해당 부지를 대상으로 옹진군에서 원예단지과 수산업경제단지, 농업경제단지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음

❖ 부지현황

- 대상부지는 다수 물이 차오른 상태이지만 지목별 약 92%가 유지로 분류된 것 보다는 육안상 토지 분량이 더 많으며 염분에 강하게 노출되어 있음
- 진입 여건이 열악하며 수질 관리가 필요한 시설(수산자원연구소)이 연접하고 있음
- 주변으로 쓰레기나 불법 민간시설, 방치물 등이 있으며, 묘역이나 전력 공급을 위해 설치된 다수의 송전탑 등은 경관저해요소로 볼 수 있음
- 수변 접근성, 화력발전소와 풍력발전기의 조망 등은 장점으로 볼 수 있음

3. 대상지역 필요기능 및 조성방향 검토

1) 검토 기준

- 해당부지는 공유재산 중 행정 자산으로 향후 활용하고자 할 경우 용도폐지 후 일반재산으로 변경 절차가 필요하며 사전에 사용 목적 또는 활용 계획을 미리 세울 필요가 있음
- 부지 활용에 있어서는 인천시와 인천시민 전체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며, 공공성과 활용성이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임
- 토지 특성은 유지와 연약지반으로, 면적 규모는 5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부지이지만 현재 상황에서 토지로의 활용은 대단히 한계가 있으며, 적극적으로 '토지'로서 이용하고자 할 경우 매립을 전제해야 함
- 토지이용계획상 대규모 인구집중을 초래할 수 있다고 규정된 학교나 공공청사, 연수시설 등을 제외하고 제한적인 개발이 가능함

2) 주민 의견조사

❖ 개요

- 주민 의견조사는 대상 부지에 대한 인식과 향후 대상 부지의 활용 여건 및 방향 등에 대한 기본적인 주민 의향과 인식을 알아보고자 시행함
- 영흥군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인천시 매립지정책과를 통하여 2023년 4월 10일부터 4월 21일까지 진행되었으며, 회수된 총 164부 중 유효부수 151부를 분석함

❖ 부지 인식

- 전체 응답자의 80%가 부지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부지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할수록 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됨
- 개발 인식 정도에 따른 개발 추진 시기에 대한 선호도는 개발이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의 41.7%가 개발을 1년 이내 추진을 선택하였으며, 개발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의 60.7%가 1~3년 이내의 단기계획 수립을 통한 추진을 선택함

❖ 부지소유관계

- 설문 응답자의 60.7%가 영흥 공공사업 추진부지가 사유지임을 알고 있으며, 부지가 사유지인 것을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가 선호하는 부지 이용자 범위는 영흥 주민과 옹진군 주민 중심으로 나타남
- 주 이용자 범위에 대한 의견과 관련하여 연령대별 특징은 20대의 경우 인천광역시 시민이 주 이용자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3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0대의 17.9%, 50대 응답자들의 20%가 전국 규모의 이용자 범위를 선택함

❖ 개발방향인식

- 사업추진 방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에 필요한 시설 제공 등 지역 활성화 사업에 대한 선호가 확인됨
- 주민들이 생각하는 필요한 시설로는 복지시설이 30.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 24.3%, 문화시설 19.8%, 보건·의료시설 9%, 교육 및 교통·운송 시설 각 8.1% 순으로 조사됨

4. 영흥 공공부지 활용방안 구상

1) 활용방안 구상의 전제

❖ 파편 개발 지양

- 대상 부지는 영흥면에서도 다소 접근성이 개선될 필요성이 있는 위치에 해당하며, 방문 유도가 가능한 형태로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다양한 활용방안 구상이 가능하나 먼저 일체형 계획 내에서 그 기능을 분할하는 방향을 전제하여야 하며, 토지의 일부 등의 활용 등 파편적 개발을 지양하도록 함

❖ 환경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조건

- 현재 가동 중인 영흥화력발전소의 경우 지역사회의 반대 여론이 있었음에도 영흥에 입지하게 되어 현재까지 지역 환경에 대한 부정적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음
- 또한 대상부지의 매입 원인인 매립지로서의 활용 발표시에 지역 주민의 환경오염을 원으로 하는 거부여론이 상당히 높아, 환경 측면에서 더 이상 부담을 주는 시설을 도입하는 방향으로의 활용은 검토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함

❖ 지역주민과 인천시민의 이익에 부합

- 인천시의 시유지인만큼 인천시민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방향으로 설정할 필요성이 있음
- 지역 주민이 필요한 시설 또는 기능 중 인천시에서 필요한 기능 중 여가나 관광, 문화 등 기본 생활의 영위에 위협을 주지 않으면서도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 긍정적인 기능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민간 참여시 공익성과 개발이익을 확보

- 해당 부지는 토지로서 적극적 활용을 하고자 할 경우 매립이 필수 전제되며, 이에 투입되는 사업비 규모도 일반 토지보다 클 것이 확실한 상황임
- 최근의 국·공유지 활용방향의 기조는 적극개발을 도모하는 방향이며, 민간의 참여를 포함하여 활용방향을 설정하는 경우 민간의 사업비 회수가 가능한 구조가 제안될 수 밖에 없음
- 이에 시유지로서 활용방안 내 일정부분 공익성을 확보하는 기능을 도입하도록 하는 조건의 설정과 공익성 기준과의 적합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 상황에서의 용도변경 또는 폐지 선행

- 해당 부지는 매립지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득된 행정재산으로 현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임
- 이후 유효한 활용을 위해서는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가 선행되어야 하며, 활용방안의 공공성 비중을 고려하여 검토되어야 할 사안임

2) 활용 구상 및 추진방향

- 사유지의 적절한 활용과 주민 의견의 반영, 공공성의 확보 등을 위하여 인천시 등 지자체에서 주관하여 계획 수립기간을 포함하여 3~5년의 중기 계획으로 진행할 것을 제안함
- 이하의 내용은 추진주체와 목적에 따른 부지활용의 예시로 제시하고, 지표 평가를 반영하여 활용방안 마련시 보조할 수 있음

[표 1] 대안별 기대치 달성 지표

<p style="text-align: center;">부지 전체 활용</p> <p>활용방안에서 대상으로 하는 공간적 범위가 부지 전체인가에 대한 여부</p>	<p style="text-align: center;">경제적 활성화</p> <p>활용방안 추진을 통해 비용 대비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으며,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가</p>
<p style="text-align: center;">방문객 증가</p> <p>활용방안 추진을 통해 대상부지를 방문하고자 하는 외부인의 증가가 기대되는가</p>	<p style="text-align: center;">공공성 확보</p> <p>활용방안의 일부 또는 전체 내용을 통해 인천시민과 영흥주민의 활용 제고와 공공성 확보가 가능한가</p>

❖ 공공성의 강조

- 공공성 강조 방안의 하나로 영흥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문화+복지시설 입지 등을 검토할 수 있으며, 향후 인천시민 의견을 반영한 시설 등을 추가 검토할 수 있음
-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시설로 계획할 경우 그 규모나 입지, 접근성 등으로 규모 측면에서 한계가 있으며, 인천시민이나 주변 지역 주민으로 방문객을 확대하고자 할 경우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장소의 특징성을 부각하거나 장애, 간호, 호스피스, 교육문화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복지기능의 도입 등을 검토할 수 있음

❖ 공공주체와 민간협력

- 민간과의 협력 방안의 하나로 토지를 매립하여 관광 기능을 가진 체육시설이나 레저시설 등을 조성하고, 일부 공간에 공공성 확보를 위해 복지시설이나 문화시설, 휴게시설 등을 입지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또는 영흥화력발전소와 연계하여 에너지를 주제로 하는 산업클러스터 조성 등이 구상 가능하며, 이 경우 일부 민간기업의 협력과 정부 지원으로 추진 가능함
- 관광기능 위주와 일부 공공기능으로 설정할 경우 부지 방문객의 다수는 지역 외에 거주하는 관광객으로 상정되며, 그 외 일부 지역 주민 중 문화나 복지시설 등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어 공공성 확보나 시유지로서의 가치 확보는 다소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민간투자를 통한 지역활성화

- 수변과 연계하여 대규모 스포츠 레저시설과 숙박시설, 생태테마관광시설 등의 복합화 클러스터 등을 검토할 수 있음
- 위와 같은 사례에서는 부지 전체의 활용이 가능하고 수익 기대가 있으며 방안에 따라 다수의 방문객 증가가 예상되지만, 공공성의 확보가 어렵고 발생한 수익의 지역 분배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또한 사업성이나 시장 변화에 따라 사업 추진이나 완료 기한이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한계가 있으며, 민간 유치의 어려움에서 부지가 장기간 활용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음
- 이상의 예시는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작성할 때 주도 주체나 주요 재원에 따라 예상 가능한 상황을 토대로 구상한 것이며, 본 과제에서 제안한 지표 등을 활용하여 향후 보다 세밀한 과업 수행과 의견 수렴을 통한 방안 수립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을 위한 개발 관련 법률 특례 방향

■ 기윤환 도시공간연구부 선임연구위원

- 경제자유구역은 20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총량관리제, 핵심전략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수시지정 방식 도입 등으로 전환되었음에도 지역산업 연계 및 여건변화에 따른 지자체의 경제자유구역 확대 및 추가 지정 수요는 증가하고 있음.
- 경제자유구역 개발 관련 제도는 최상위 계획법에서 일반법 수준으로 후퇴하였고, 개별법 우선 권한에 의한 지자체의 자율적 권한 약화, 중앙정부 중심의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 지연 및 추진동력 약화 등의 문제점이 도출됨.
- 경제자유구역법 개발 관련 특례 방향은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자체 권한 위임을 위해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확보, 환경영향평가의 시·도조례 우선 실시, 정주여건 확보를 위한 주택·의료·교육 등의 권한 위임이 요구됨.
- 개발 권한 강화를 위한 개별법 이양 특례로는 경제자유구역 계획권 확보를 위해 항만재개발사업의 우선적 지위 확보, 산업단지 등 개별법 의제 처리에 대한 지위 확보가 필요함.
- 기반시설 국비지원 및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신속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기반시설의 국비지원 의무화와 예타 면제, 국내복귀기업·첨단기술기업 등 수도권 유치, 국내기업 투자유치를 통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유도, 경제자유 구역내 국·공유재산의 외투기업 특수관계인 제공 완화 등의 개선이 필요함.
-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및 국내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특화구역제도를 신설 하고, 개발규제완화, 기업인센티브 확대, 지자체 자율적 운영 등을 위한 입체 복합용지 개념 도입이 요구됨.

뉴홍콩시티 및 제물포르네상스 추진을 위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방향

- 기윤환 도시공간연구부 선임연구위원
- 이종현 도시공간연구부 선임연구위원
- 채은경 도시사회연구부 선임연구위원
- 윤석진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에 대한 근본적 개선, 지방분권 맥락에서의 사무 이양을 통한 접근방안 모색, '새로운 법안' 제정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 새로운 법안 제정은 ①강원도나 경기북부와 같은 특별법제정, ②인천지역의 지정학적 특성을 강조한 '공항경제권 관련 특별법'과 같은 법안 제정, ③지방자치법에 의한 특별지방자치단체제도를 통한 법안 제정안 등임.
- 수도권 규제 해소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개정 방향으로는, 수도권정비 계획법을 특별법의 하위법으로 규정하는 방안과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제는 유지하더라도 개별법 각종 지원조항의 수도권 배제항목은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을 특별법에 신설할 필요가 있음.
- 개발 관련 특례 방향은 지자체 권한 위임을 위해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확보, 환경영향평가의 시·도조례 우선 실시 등의 권한 위임이 요구됨. 개별법 이양 특례로는 항만재개발사업의 우선적 지위 확보, 산업단지 등 개별법 의제 처리에 대한 지위 확보가 필요함. 국비지원 의무화와 예타 면제, 국내복귀기업·첨단기술기업 등 수도권 유치, 외국인 및 국내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특화구역제도 신설 등이 필요함.
- 기업인센티브 측면에서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법인세·소득세의 감면을 일정한 조건에 따라 제한적으로 부활시키는 법 개정을 제안함. 보조금 및 현금 등의 자금 지원에 관하여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에 제한을 두는 경제자유 구역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은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삭제되는 것이 바람직함. 인천시 투자유치 관련 조례는 인천시의 전략산업 명시와 특례적 지원을 규정 하여 인센티브 제공의 기준과 대상을 명확히 할 수 있음.

인천광역시 중·동구 인구감소 대응 정책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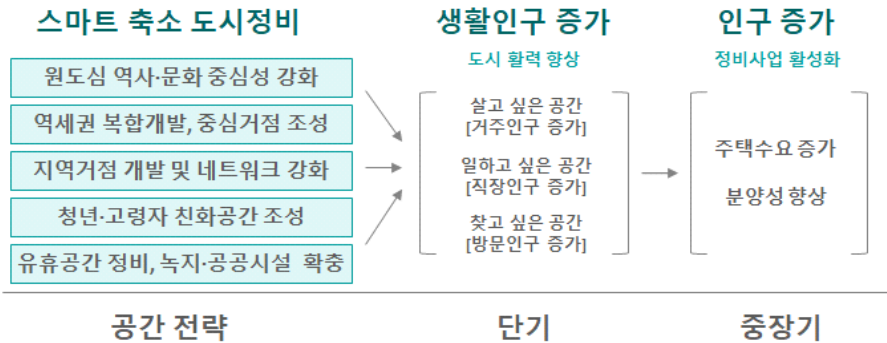
민혁기 도시공간연구부 연구위원

비전 **스마트 축소로 모두에게 매력적인 중·동구 실현**



공간전략

1. 원도심 역사·문화 중심성 강화
2. 역세권 복합개발을 통한 중심거점 조성
3. 지역거점 개발 및 네트워크 강화
4. 청년·고령자 친화공간 조성
5. 빈집·유휴공간 정비를 통한 녹지 및 공공시설 확충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을 통한 수도권규제 해소방향 연구

■ 이종현 도시공간연구부 선임연구위원

- 수도권규제는 1970년대 서울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인한 난개발 증가 및 도시기반시설 부족문제 해결을 위하여 시작되었고 현재는 서울인구 정체로 정책목표는 달성되었으나, 그동안의 규제로 국가경쟁력 부족 및 비수도권과의 역차별이 증가하면서 접경지역은 전국 최하수준의 낙후도를 보이고 있음
-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시행령에서는 수도권 및 과밀억제권역 범위를 정하여 공장, 대학, 대기업 등의 입지를 제한하고, 개별법에서는 해당지역의 각종 인센티브 및 조세혜택을 제한하고 있음
- 4차에 걸친 수도권정비계획 내용의 변경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나 접경지역지원 특별법 등 수도권의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지만, 원도심에는 수도권 규제가 아직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음. 주로 '수도권'의 경제자유구역에는 각종 개별법규의 다양한 역차별조항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시 수도권규제 개선조항이 필요함.
-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개정 방향으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특별법의 하위법으로 규정하는 방안과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제는 유지하더라도 개별법 각종 지원조항의 수도권 배제항목은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을 특별법에 신설할 필요가 있음.
- 대안1은 특별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항에서 '이 법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우선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비수도권의 반발로 개정안 통과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대안2는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경제자유구역'은 수도권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 개정이 필요하여 비수도권의 반발이 예상됨.
- 대안3은 특별법에서 나열하는 각종 개별법규의 '수도권 제외' 단서항목은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특별법에 산입하는 방안이지만, 이후에도 계속 만들어질 개별법의 역차별조항을 특별법에 주기적으로 추가해야 하는 부담이 있음.
- 기타 대안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시행령의 관련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에는 4년제 대학을 신설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

내항일원 고층건축물 증가에 따른 도시경관 관리 제안

■ 이인재 도시공간연구부 선임연구위원

1. 배경과 목적

- 중·동구 및 내항일원에 고층건축물이 증가하는 추세임
- 원도심에서 고층건축물의 증가는 원도심의 지역경제 활성화로 인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나, 반면에 주변지역의 기반시설 부족, 스카이라인 부조화 등 도시계획 및 도시경관의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음
- 인천 중·동구 및 내항일원은 자연적 경관자원인 해안 및 자유공원 등의 녹지지역과 인공적 경관자원인 건축물의 조화가 중요한 지역임
- 중·동구 및 내항일원은 제물포르네상스계획이 수립되고 있어,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중·동구 및 내항일원의 고층건축물 높이, 스카이라인 등을 검토하여 관리방안을 제시함

2. 정책제안

- 중·동구 및 인천내항 일대의 경관관리를 위한 기본방향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도심부의 높이관리를 통한 우수한 바다 및 구릉지 등 도시내 자연경관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원도심과 항만지역을 포함하는 도심부 건축물 높이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관리할 것을 제안함
- 항만 주변지역 등 자연경관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서는 경관자원조사를 통해 경관적 측면에서 중요한 지역 설정하여 뷰콘 등 도시경관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함
- 항만과 인접한 일정 지역에 대해서는 가로구역별 높이 기준 수립을 통해 ‘선계획, 후개발’ 원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반려동물을 위한 도시계획: 인천 동물친화도시 구상

■ 윤혜영 도시공간연구부 연구위원

1. 배경과 목적

- 1·2인가구 등 가구 규모의 축소 경향으로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반려가구의 증가 경향이 최근 이슈가 되고 있음. 인천시도 2022년 1인가구 비중이 38.4%에 달할 정도로 높은 실정으로 이와 무관하지 않음
- 그러나 현재의 도시계획의 관점은 인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반려동물 생애에 필요한 인프라나 제도 등에 대한 관심 정도는 아직까지 크지 않은 실정임
- 최근에는 반려가구의 규모 증가와 함께 반려동물 친화도시를 표방하는 지자체도 늘고 있으며, 인천시에서도 도시 내의 반려가구 증가에 대한 인지와 동시에 도시 내에 어떠한 변화가 필요한지를 이해할 필요성이 있음
- 본 연구는 반려동물 생애 전반에 필요한 시설이나 인프라, 제도 등을 분류하는 한편, 도출된 사항들에 대한 인천시의 수용 가능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2. 정책제안

- 가구 규모 감소와 1인가구 증가, 도시 내 반려동물 수의 증가 경향이 향후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 아래 반려가구의 수요와 니즈를 도시 내에서 충족시켜나갈 수 있도록 하는 관점이 필요함
- 인천은 반려가구 비율이 높은 도시로 함께 거주하는 생명으로서 동물이 살기 편한 지역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으며, 반려가구의 경우 거주 또는 이주 결정에 동물친화성을 고려할 수 있음
- 동물에게 필요한 시설을 반려동물 공원과 놀이터, 위탁시설과 보호센터, 동물병원과 장묘장 등으로 보았을 때 다수 시설이 민간 영역에서 수요에 반응하여 설치되는 점에서 가능성이 있으며, 반려견 공원 조성 등 공공시설의 적극적 설치 운영 등을 검토할 수 있음
- 향후 동물의 거주뿐 아니라 이동성이나 접근 가능한 시설을 확대하고 이를 안내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적극적 행보를 통하여 동물친화도시로서의 위상을 가질 수 있음

2023년도 연구결과 요약집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

I

2023년도 연구결과 요약집

투자분석 분야

- **기획연구**

공공 문화·체육시설의 공간적 불균형 분석

- **정책연구**

인천경제자유구역 산업용지 개발의 공공성 확보 방안

- **현안연구**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인천 개최의 경제적 효과 분석

신규 조성 산업단지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중봉터널 민간투자사업 사전검토 및 민간 투자사업 검토 절차 제언

- **이슈브리프**

2023년 인천 부동산 시장 진단

공공 문화·체육시설의 공간적 불균형 분석

■ 박찬운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정기투자심사에서 다루는 문화·체육시설 사업은 매년 10건 정도로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함(2020년 10건, 2021년 8건, 2022년 8건). 해당 시설의 투자심사 검토의뢰서를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바는 해당 지역은 문화를 향유 할 공공인프라가 부족하다는 것임. 하지만 그에 대한 근거자료로 해당 지역 인근의 유사 시설 등은 미제시함.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화·체육시설의 공간적 분포를 파악하여 과연 해당 지역이 문화적으로 소외지역인지 투자심사 검토의견서에 중복성 검토 방법을 모색함. 이를 통해 투자심사 의뢰서에서 제시하지 못하는 내용을 일부 보완하여 올바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아울러 문화·체육시설의 공간적 불균형을 파악하여 공급이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을 파악하여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정책을 유도함. 즉, 공공에서 추진한 문화·체육시설의 공간적 분포를 확인하여 균형 있게 분포되었는지 정량적으로 확인한 후 지역에 맞는 시설 공급방안 등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함.

2) 연구의 내용

- 본 연구에서는 문화·체육시설의 불균형 파악에 앞서 법률적인 문화·체육시설의 정의 및 투자심사 매뉴얼에서 제시하는 시설을 파악함. 그리고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서 문화·체육시설의 수요 및 영향권 범위에 대해서 검토함. 그리고 공간적 불균형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를 검토함.
- 문화·체육시설의 공급 현황을 검토하여 현재 인천시에 어떠한 시설물들이 어떠한 지역에 있는지 파악함. 해당 자료는 문화시설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공하는 문화기반시설 총람의 자료를 활용함. 체육시설 역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공하는 전국공공체육시설현황자료를

이용함. 그리고 장래에 건설될 예정인 문화·체육시설은 인천시에서 구축한 투자심사대상 자료를 활용함.

-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해당 시설의 주소지 중심, 또는 반경으로 공간적 분포를 확인하는 기존의 방식이 아닌 네트워크 거리, 동단위 이하를 세분화하여 분석할 예정임
 - 또한 문화·체육시설의 시설성격에 따라서 영향권을 달리하는 방안도 고민하여 적용할 예정임. 문화·체육시설의 영향권은 관련 문헌 또는 국가 기준을 참고할 것임.
- 문화·체육시설의 불균형은 2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예정임. 해당 지역에 문화·체육시설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가를 중심으로 보는 것이 첫 번째임. 그리고 두 번째는 개별 문화·체육시설이 특정지역에 집중되어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임. 단, 두번째 관점을 주요하게 살펴볼 예정임.
 - 특정지역에 문화·체육시설이 분포되어 있는지 확인 행정동 단위로 제시할 예정이며, 해당 동의 인구를 반영한 1000명당 시설수 결과도 함께 제시할 것임. 또한 특정시설의 공간적 집중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입지계수도 적용해서 공간적 불균형을 파악함.

2. 문화·체육시설 정의 및 선행연구고찰

○ 문화시설

-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용에 이용되는 시설을 의미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함. 그리고 문화예술 활동에 대해서 다양한 창작활동을 폭넓게 인정하며 시민들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시설의 설치조건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참고로 할 때 ‘이용자가 접근하기 쉽도록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주거생활의 평온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할 것’, ‘역의 문화발전과 문화증진을 위하여 지역의 특성과 기능을 고려할 것’ 등임. 즉, 문화시설 설치시 이용자를 고려해서 접근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지역의 특수성도 반영해야 한다는 것임.
- 문화시설 분류로는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지방문화원, 문화산업단지 및 문화산업진흥시설, 과학관, 전시시설, 국제회의시설, 도서관이 일반적인 것으로 확인함.

○ 체육시설

- 체육시설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환경에서 실제 운동경기를 하는 과 그 부대시설을 말함. 다양한 운동경기를 할 수 있는 시설물을 의미하지만 이는 생활체육시설이며, 운동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전문체육시설도 체육시설 범주에 포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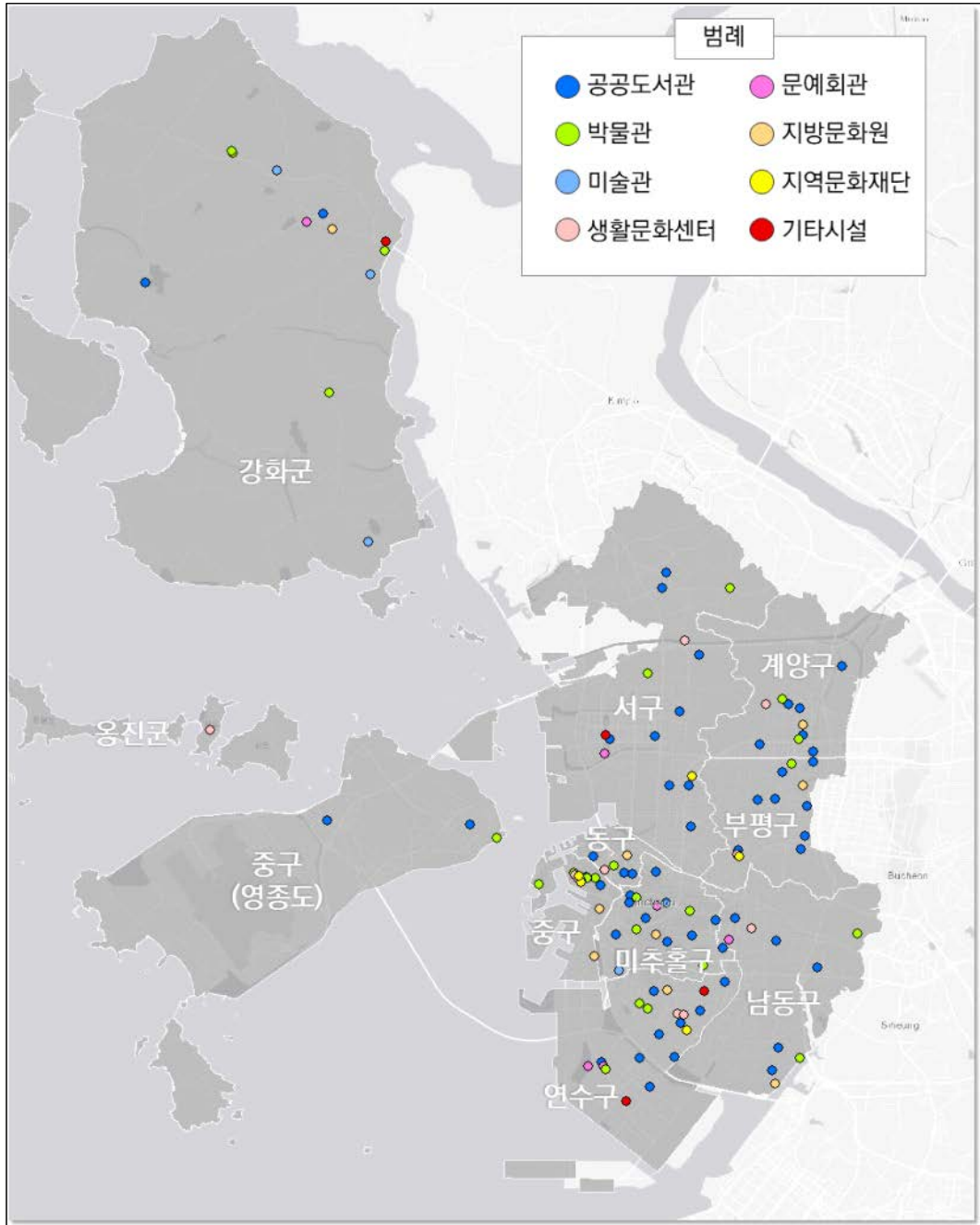
- 체육시설의 설치조건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주요 시설물의 주변이나 인구밀집지역에 설치하지 않도록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다만, 생활체육시설은 주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할 것’으로 제시됨. 즉, 전문체육시설은 국제경기와 관람 중심이므로 인구밀집지역에서는 설치를 지양하며, 생활체육시설은 주거지역 인근에 설치를 지향함.
- 체육시설 분류는 운동 종목, 시설 형태, 전문/생활 체육시설을 파악하여 이용 목적 등에 맞게 분류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3. 문화·체육시설 현황

1) 문화시설

- 인천광역시 공공 문화·체육시설 공급 현황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공하는 “2022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2022년 전국 공공체육시설 현황”을 토대로 구축함.
 - 인천광역시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 사업 중 심사 통과 이후 상기 문체부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완공된 시설을 추가 조사하여 자료를 보완함.
 - 이 외에도 각 군·구 차원에서 운영 및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각 구의 시설 담당부서 및 담당자에게 현황 자료를 요청하였으며, 앞서 구축한 자료를 검토 및 보완함.
- 결론적으로 인천시 공공 문화시설은 공공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생활문화센터,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지역문화재단, 기타시설로 분류하였음. 그리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각 시설별 현황, 공간적 불균형을 분석함.
- 행정구역별 문화시설별 개소수와 지리적 위치 현황은 [그림 1]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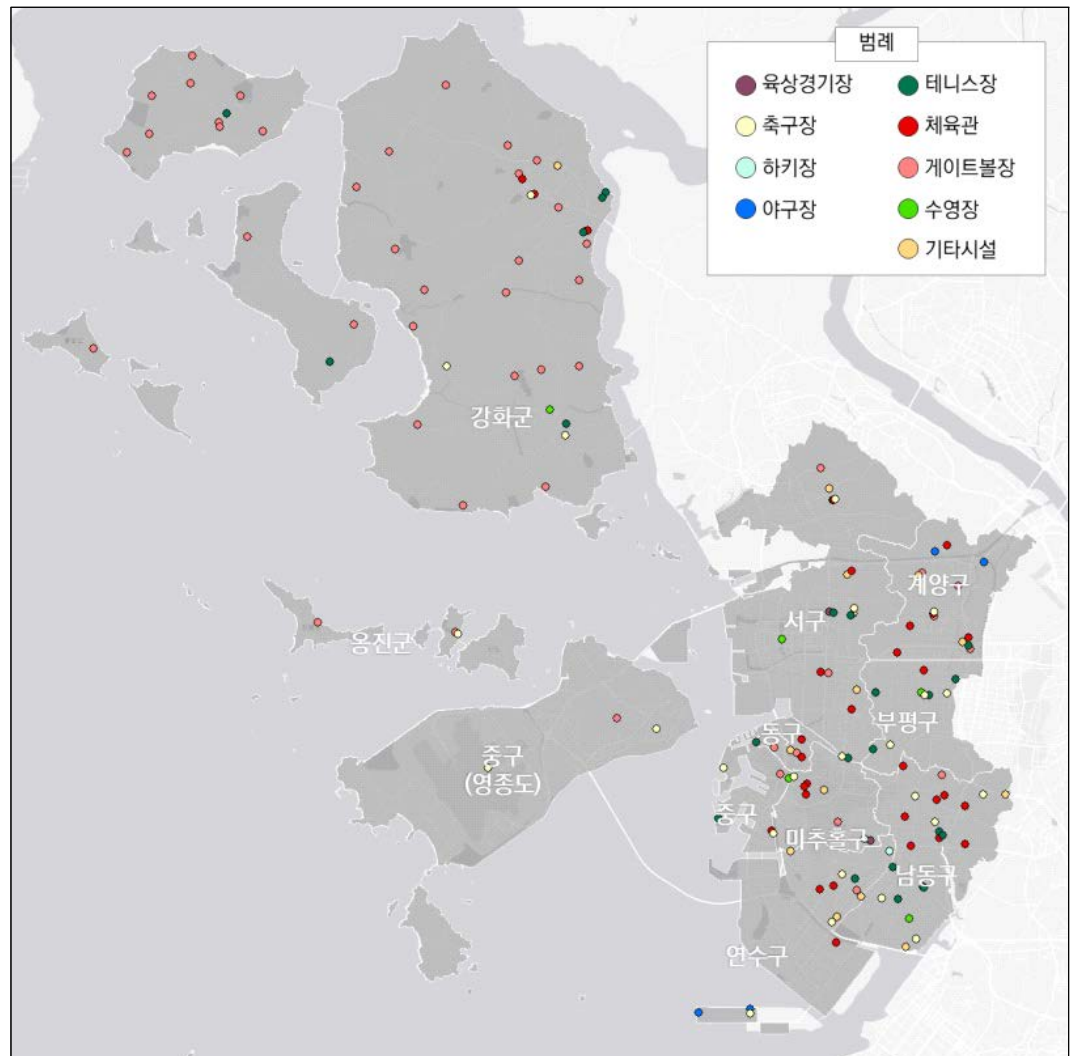
[그림 1] 인천광역시 행정구역별 문화시설별 위치 현황



2) 체육시설

- 인천시 공공 체육시설은 육상경기장, 축구장, 하키장, 야구장, 테니스장, 체육관, 게이트볼장, 수영장, 기타시설로 분류하였으며, 각 시설별 현황을 분석함.
- 행정구역별 체육시설별 개소수와 지리적 위치 현황은 [그림 2]와 같음.

[그림 2] 인천광역시 행정구역별 체육시설별 위치 현황



4. 문화·체육시설 불균형 파악

1) 문화·체육시설별 불균형 분석 방법

- 공공 문화·체육시설의 공간적 불균형 분석을 위한 자료는 크게 네 가지 자료가 사용되었음.
 - 문화·체육시설 정보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 및 체육시설 총람을 기초자료로 사용함. 아울러 2003년부터 2023년까지 지방재정투자심사 현황 자료를 토대로 장래 공급예정인 문화·체육시설 자료를 구축하였음.
 - 격자 자료(grid cell)는 국토지리정보원의 국토정보플랫폼 국토정보맵에서 제공하는 250m 단위 자료를 활용함.
 - 도로망 자료 및 행정구역 공간 자료는 국가교통DB(KTDB)에서 제공하는 교통망 GIS DB자료를 사용함.
- 본 연구에서는 인천시에 문화·체육시설을 중심으로 영향권을 설정하여 각 지역에 문화·체육시설이 위치하는지를 파악함. 영향권 파악은 특정시설을 중심으로 최소 통행시간 기준을 적용하였으며, 실제 도로 네트워크에 기반하여 분석하였음.
 - 본 연구에서는 각 시설물의 위치자료를 생성한 후 인천시 도로망과 중첩하여 통행시간을 기준으로 영향권을 설정함. 그리고 인천시의 전 지역을 250mX250m 격자로 구분하여 각 격자가 시설물의 영향권에 포함되는지 파악함.
 - 전체적인 분석과정에서 1단계는 해당시설물의 주소정보를 활용해서 위치자료를 생성하고 도로망 자료와 중첩함.
 - 2단계는 인천시 도로망에 근거하여 시설물의 영향권을 도출하고 250m단위의 격자 자료와 매칭함. 도로와 인접한 지역은 해당 도로를 통해서 시설물로 접근이 가능하므로 특정 시설물로부터 통행시간이 10분~20분인 지역이 특정시설의 네트워크 영향권이 되는 것임.
 - 3단계는 네트워크 영향권과 격자단위를 결합하여 250미터 격자단위로 특정시설물의 영향권을 도출함. 그림에서 회색지역은 시설물의 영향권 밖에 지역이며 파란색 지역이 특정시설의 영향권으로 봄.

- 격자단위로 구축한 시설물의 분포를 '동' 단위로 집계하여 최종적인 시설물의 분포정도를 제시함. 예를 들어 청라 1동의 250m격자는 30개가 위치하며 각 격자에 특정시설의 영향권에 포함되는 만큼 숫자로 표현됨.
- 도서관을 예로 들면 어떠한 격자는 A 도서관의 영향권내에도 포함되고, B도서관의 영향권내에도 포함되면 2개의 도서관이 위치해 있다고 집계함. 이러한 방식으로 각 격자는 도로 영향권내에 몇 개의 시설물이 위치해 있는지 집계되며 격자들이 모여 '동'을 구성하므로 각 격자들에 도서관이 몇 개 있는지 평균하여 해당 '동'에 도서관이 어느정도 분포해 있는지 파악하게 됨.
- 격자에 위치한 시설 수는 단순 산술평균이 아닌 격자 내의 정보중에서 인구 정보를 활용하여 격자 인구 가중 평균을 하여 해당 '동'의 시설물 수를 제시함.

2) 문화·체육시설별 불균형 분석 결과

❖ 인천시의 공공 문화·체육시설은 전반적으로 중동구 원도심, 연구수 원도심에서 일정시간 내 접근할 수 있는 시설이 많은 것으로 파악됨

- 공공문화시설은 중구에 많이 위치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공공문화시설 중에서 도서관, 박물관, 문예회관, 생활문화센터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으며, 공공체육시설중에서는 축구장, 테니스장, 실내체육관, 수영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음.
- 영향권을 고려한 '동'별 공공문화·체육시설 위치한 수 기초통계를 살펴보면 도서관은 평균적으로 동에서 5개 정도는 영향권 내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음. 반면에 박물관은 6.18개 문예회관은 7.39개, 생활문화센터는 1.11개인 것으로 알 수 있음.
- 공공 체육시설 중에서 축구장은 평균적으로 2.55개 위치해 있으며, 테니스장은 2.81개, 실내체육관 5.95개, 수영장 3.88개인 것으로 나타났음.
- 평균과 표준편차의 크기로 살펴보면 문예회관은 비교적 전체 동에 균형있게 분포해 있는 것으로 파악됨. 반면에 생활문화센터, 테니스장은 평균과 표준편차가 비슷하여 동별 편차가 큰 것을 알 수 있음. 문예회관이 균형있게 분포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유는 문예회관은 영향권이 넓기 때문으로 판단함(영향권은 통행시간 60분 적용). 반면에 도서관은 통행시간으로 10분으로 영향권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표준편차가 평균보다 낮아 비교적 균형있게 분포해 있는 것으로 파악됨.

[표 1] 공공문화·체육시설 위치수 '동'별 기초통계

시설 구분		'동' 단위 집계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중윗값
공공문화시설	도서관	5.06	3.34	0.00	11.95	5.16
	박물관	6.18	4.63	0.00	15.00	4.77
	문예회관	7.39	3.19	0.00	9.00	9.00
	생활문화센터	1.22	1.11	0.00	4.01	1.00
공공체육시설	축구장	2.55	1.48	0.00	5.63	2.66
	테니스장	2.81	2.02	0.00	9.16	2.65
	실내체육관	5.95	3.72	0.00	13.59	6.17
	수영장	3.88	2.31	0.00	9.25	4.16

- 2011년 이후 투자심사를 통과한 사업 중에서 문화·체육시설을 검토하였을 때 일부 소외지역에 해당 시설물을 투입하려는 정책방향을 알 수 있음. 도서관의 경우에는 서구 아라뱃길 북측지역과 송도국제도시에 공급이 이루어지며 실내체육관이 문예회관이 서구와 계양구, 송도국제도시에 신규로 건설될 전망이다.
- 또한 투자심사 사업의 최근의 경향을 살펴보면 공공문화·체육시설은 생활문화센터, 도서관, 실내체육관을 중심으로 공급하려는 경향을 보여줌. 투자심사 의뢰 후 통과된 자료를 살펴보면 공공문화·체육시설은 중소 규모의 생활문화센터와 실내체육관을 중심으로 공급이 이루어짐. 하지만 기존에 구축된 시설과 비교하여 새롭게 공급되는 시설수가 많지 않다 보니 공급 불균형의 획기적인 개선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다만 일부 미 공급지역에 건설하려는 경향을 파악할 수 있었음.
- 허핀달-허쉬만지수(이하 HHI지수)를 통해 행정동 내 문화·체육시설의 집중도를 파악함. HHI 지수의 값이 클수록 특정 시설이 집중되어 있거나 부족하다고 해석할 수 있음. 반대로 HHI 지수 값이 작을수록 행정동 내 여러 문화·체육시설이 균등하게 분포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일정시간 내에 접근할 수 있는 시설도 많으면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지역으로는 연수구 원도심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5. 정책제언

❖ 영종지역, 서구 아라뱃길 북측지역 문화·체육시설 공급 필요

- 공공도서관의 경우에는 영종지역, 서구 아라뱃길 북측지역이 타 지역보다 적은 것으로 도출되었음. 인구를 고려한 1000명당 도서관수를 살펴보아도 이들 지역은 적은 것으로 도출되었으며, 송도국제도시 역시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공공도서관은 당장 건설하기가 어려우므로 도서관 수가 적은 지역은 신규로 행정복지센터를 건설할 경우 작은 도서관을 반드시 포함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보임.
- 박물관도 마찬가지로 중동구에서 접근이 용이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최근의 인천시 인구 분포를 고려할 때에는 서구와 연수구, 영종도 중심으로 박물관 공급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단 박물관의 특성상 원거리에서도 이용자들이 방문하므로 지역적 접근성을 고려해서 적정한 지역을 선정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함.
- 문예회관은 기존의 연구를 참고로 하여 영향권을 통행시간 60분 이내로 하였음. 따라서 분석결과는 인천시에 전반적으로 균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다만 인천시 외곽지역에 위치한 ‘동’들은 타 지역 보다는 접근이 쉽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하지만 문예회관의 특성상 넓은 영향권을 보여주므로 외곽지역에 배치하기 보다는 지역거점에 위치하는 것이 적정할 것임. 따라서 문예회관을 건설한다면 인구의 분포를 고려하되 상징성 있는 지역을 발굴하여 수요 또한 적지 않은 위치에 건설하는 것이 적정할 것임.
- 생활문화센터의 경우에는 연수구 원도심과 중동구에서 접근이 용이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생활문화센터는 공급이 비교적 최근부터 이루어진 시설이므로 각 동별로 접근이 가능한 시설 개수가 많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음(사용승인일이 2016년 부터임). 생활문화센터는 최근에 행정복합센터가 복합화 되면서 일정 지역내서 기능 중복을 고려해서 입지를 결정해야 함. 따라서 향후에 생활문화센터의 지역적 불균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복합 행정복지센터 등 생활 SOC 자료까지 함께 분석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함.
- 축구장의 경우에는 중동구와 부평구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영종지역과 청라지역은 일정시간 내에 접근할 수 있는 축구장이 많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테니스장 역시 원도심과 연수구 원도심, 가정동등에서는 영향권내에 다수 입지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실내체육관 역시 영종지역과 서구 아라뱃길 북측지역이 적은 것으로 검토되었음. 수영장 또한 원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가 되어 있으며 영종도, 서구, 송도 국제도시는 적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다만 체육시설은 민간 시설의 입지도 고려해 할 것으로

판단함. 특히 수영장은 공공 수영장외에도 민간 수영장, 공동주택 커뮤니티 수영장 등의 입지도 고려해서 공급을 결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함.

- 문화·체육시설이 부족한 곳을 중심으로 신규 시설을 투입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기존시설의 용량을 증대하여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 그리고 역세권 등 교통접근성이 우수한 지점에 시설을 배치하여 최소의 시설 수로 이용 효율성을 늘릴 수 있는 입지 방안을 모색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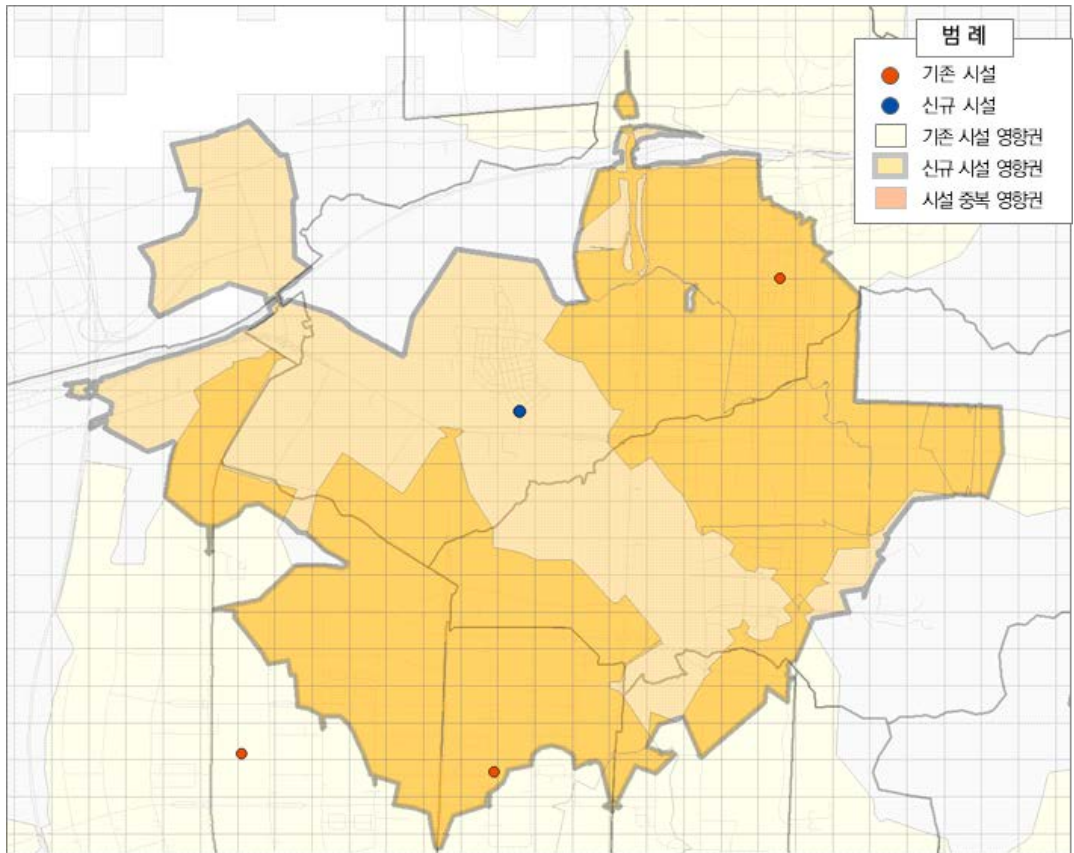
[표 2] 공공문화·체육시설 공간적 불균형 분석결과 정리 및 검토사항

시설 구분		상위지역	하위지역	향후 검토 사항
공공문화시설	도서관	울목동, 도원동	블로대곡동, 영종동	하위 지역 중심으로 행정복지센터 신축시 작은도서관 고려
	박물관	송림동, 금창동	영종동, 청라3동	상징성과 접근성을 고려해서 입지를 선택하는 것이 적정함
	문예회관	송림동	영종동	
	생활문화센터	금창동	영종동, 논현1동, 서창 2동 등	미 공급지역을 중심으로 우선적 도입 검토 필요, 기공급된 지역은 기능 중복을 최소화하여 공급
공공체육시설	축구장	송림동, 울목동	운서동, 청라동	미 공급지역을 중심으로 공급 입지를 고려
	테니스장	송림동, 관교동	영종동, 검단동	
	실내체육관	금창동, 울목동	영종동, 청라동	민간 시설, 공동주택 커뮤니티 시설과의 중복성을 고려하여 입지 선택
	수영장	송림동, 금창동	영종동, 송도동	

❖ 본 연구에서 구축한 공간적 불균형 분석 방법을 기초로 재정 투자심사 사업 검토 시 유사 시설과의 중복성 검토 방안을 제언함

- 영향권 내 인구수, 영향권 내 유사시설 수, 영향권 내 최근접 유사시설까지 거리, 유사시설과의 영향권 중첩성분석 결과 등을 제시하여 투자심사 검토 단계에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함.

[그림 3] 유사 시설과의 중복성 검토 예시



유사시설과 중복성 검토	
• 신규 시설 영향권 내 인구수:	5,000명
• 신규 시설 영향권 내 유사시설 수:	2개
• 최근접 유사시설과의 거리:	18분(차량통행시간 기준)
• 유사시설과의 중첩성:	55% (중첩성 = $\frac{\text{중복 영향권 면적}}{\text{전체 영향권 면적}} \times 100$)

인천경제자유구역 산업용지 개발의 공공성 확보 방안

■ 박찬열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 배덕상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1. 연구 개요

❖ 연구배경

- 경제자유구역 산업용지는 주로 실수요 외국인투자기업 테넌트에게 제공되어 해당 기업이 입주하는 방식으로 개발됨.
 -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토지매입, 건축 및 시설투자 등 초기투자비용이 커 다수의 기업이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이를 보완하기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이 밀집형 산업시설을 건립하고, 국내외 기업에게 저렴하게 공급하여 유관 산업을 집적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경제자유구역 내에 초기투자비용이 낮은 산업시설에 대한 수요가 있음에도 기업 입주 공간이 밀집된 산업시설 공급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있음.
 - 다만, 이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부동산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형태로서 입주기업의 초기투자비용 절감에 한계가 있고 국내 개발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연구목적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산업용지에 입주하는 테넌트가 아닌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익적 목적을 지닌 밀집형 산업시설을 건립하는 경우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중심으로 정책적 개선방안을 검토함.
- 여기서 공공성은 「경제자유구역법」의 목적에 근거하여 ‘개발 촉진’과 ‘운영 활성화’의 관점을 중심으로 살펴봄.

2. 사업추진 여건 및 주요 쟁점

❖ 사업추진 여건

- 본 연구에서 검토하는 사업은 지식산업센터 유형의 다층형 건축물 및 도시형공장에 해당하는 제조시설을 포함하는 업무, 교육연구, 편의상업 등의 복합용도 건축물로 전제함.
 - 지식산업센터 건립현황과 계획을 살펴본 결과 전국적으로 민간 개발 방식에 의한 지식산업센터가 최근 크게 늘었고, 공급물량 자체는 많은 상황이나 공공주도에 의한 임대형 지식산업센터의 공급은 부족한 실정임.
 - 결국 공익적 관점에서의 산업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특정 산업에 특화된 산업시설 건립이 필요하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임.
- 특정 산업 관점에서 송도 경제자유구역의 핵심 전략산업이라 할 수 있는 바이오 산업 현황을 살펴보면, 산업적 특성상 이처럼 기업 초기 투자 비용을 줄여주는 산업시설 건립의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음.
 - 최근 인천에 대규모 앵커 기업이 입주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바이오 기업의 50% 이상은 서울, 경기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인천 소재 기업은 3% 미만에 불과함.
 - 소규모 기업 비중이 높고, 연구개발비 투자 위주로 시설투자 여력이 낮은 특성을 보이고 있어 초기 투자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산업시설 공급이 필요함.
 - 이와 유사한 개념에서 바이오 산업의 스타트업 육성 정책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나, 실제 기업 입주 수효는 기업수요 조사 등이 추가로 필요함.

❖ 주요 쟁점

- 대안 모색에 앞서 공공성 관점에서 예상되는 주요 쟁점을 ‘개발 촉진’과, ‘운영 활성화’ 측면에서 각각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논의를 전개함.
- 개발 촉진 측면에서는 관련 법령 및 현행 제도하에서 개발 촉진을 위한 수단과, 기존 조성토지 공급 사례에서의 쟁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기존과 다른 형태의 산업용지 개발 시 사업 검토 및 추진단계의 개선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함.
- 운영 활성화 측면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용지 개발 이후 운영단계에서도 운영방식, 시설 수준, 임대료 수준, 특정 산업 특화 등 사업목적 달성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 관리 수단을 공공이 확보할 필요가 있음.

3. 산업용지 현황 및 개발 사례

❖ 공급 현황 및 사례

- 관련 현황 파악을 위해 송도 경제자유구역 내 제조시설 입지가 가능한 유희부지 현황과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내용 및 허용용도 등을 살펴봄.
 - 송도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용지는 구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복합용도 개발이 가능하고, 입주업종은 비교적 광범위하게 설정하고 있음.
- 기존 산업용지는 주로 바이오 산업 및 ICT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다수의 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위를 인정받아 수의계약 방식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함.
 - 최근 '21년에도 외국인투자기업 수의계약 1건과 , 국내기업 공모에 의한 계약 2건을 체결함.
- 기존 사례에 비추어 현행 방식은 실수요 기업의 입주에 중점을 둔 토지매각 또는 무상임대 등의 방식으로 공급되고 있음.
 - 이러한 입주기업의 직접 투자가 아닌 공익적 목적을 지닌 산업용지 개발사업 추진 시 이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와 공공성 확보 대안이 필요함.

❖ 현행 제도 및 절차

- 현행 조성토지 공급방식과 관련한 법령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사업 검토 및 추진 절차를 살펴보고 개선 대안을 모색함.
- 외국인투자기업 입주를 위해 조성토지를 공급하고 민간이 직접 개발 및 운영하는 방식은 사업의 형태 및 목적이 명료하므로 공공성 확보에 큰 문제는 없음.
- 그러나, 외국인투자기업의 산업용지 개발사업은 사업의 형태가 복잡하기 때문에, 사업목적 달성 가능성과 우회투자 이슈 등을 포함한 사업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절차적, 제도적 개선 대안이 필요함.
- 특히 직접 입주하지 않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수의계약 방식으로 낮은 가격에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것은 특혜시비가 발생할 수 있어 공공성 확보를 담보할 수 있는 매우 신중한 의사결정이 필요함.

4. 사업추진 대안 모색

❖ 대안 설정

- 본 연구에서는 조성토지 공급단계와 건립자산 운영단계를 구분하여 개선 대안을 제시함.
- 첫째, 조성토지 공급단계에서는 현행 환매특약조건부 매매에 비교하여 가등기 설정 대안과 프로세스 개선 대안을 제시함.
- 둘째, 건립자산 운영단계에서는 현행 실시계획에 의한 관리에 대한 개선 대안으로 자산관리회사(Asset Management Company: AMC) 참여 대안을 제시함.
- 셋째, 조성토지 공급 및 운영을 포괄하는 개선 대안으로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roject Financing Vehicle: PFV) 출자에 의한 민관공동개발 대안을 제시함.

❖ 대안별 장단점 분석

- 현행 방식을 포함하여 각 대안에 대한 공공성 확보 가능성과 공공과 민간의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안별 장단점 및 적용 가능성을 판단함.
 - 첫째, 매매가 완료되기 전 가등기를 설정하는 대안은 공공성 확보 측면에서 현행 환매특약조건부 매매 방식에 의한 5년의 환매 기한을 일부 연장할 수 있는 효과가 있으며, 공공 수용성은 다소 낮더라도 적용 가능한 대안으로 보임.
 - 둘째, 프로세스 개선 대안의 경우 공공과 민간 모두 수용 가능한 대안으로 판단되며 특히, 사업구조가 복잡한 경우 전문적인 검토 절차 보완은 공공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함.
 - 셋째, 공공의 AMC 참여를 통한 운영 관리 개선 대안은 공공성 측면에서 긍정적 영향을 클 것으로 보이나, 공공의 입장에서도 행정적 부담이 수반되고 무엇보다 민간의 수용성이 낮을 것임.
 - 넷째, 공급 및 운영을 포괄하는 PFV 출자에 의한 민관합동개발 방식은 사업추진 및 운영에 공공이 직접 참여한다는 점에서 공공성 확보에 긍정적 영향이 크지만, 관련 심의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행정적 부담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행 조성토지 공급방식을 유지하며 사업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프로세스 개선 대안이 현실적으로 가장 우선시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
- 또한 가등기 우선 설정을 통해 현행 환매특약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표 1] 대안별 효과 검토 요약

구분	조성토지 공급			건립자산 운영		공급+운영	
	현행 (매각+환매 특약)	개선		현행 (실시계획 관리)	개선 자산관리회사 참여		
		가등기+매각 +환매특약	프로세스 개선			SPC(PFV) 출자	
정의	매각+특약 (환매특약 등) 소유권 민간이전	가등기+매각 +환매특약 (가등기 기간 소유권 미이전)	접수 후 사업부서 검토 시 외부기관에 검토 의뢰	실시계획에 따른 건립 대상 및 입주 업체 산업군 제한	SPC(PFV)의 자산관리회사에 지분 참여	SPC(PFV)에 현물출자(토지) 하여 JV 구성	
효과	공공성 확보	↔	↑	↑	↔	↑	↑
	공공 수용성	↔	↓	↔	↔	↓	↓↓
	민간 수용성	↔	↑	↔	↔	↓↓	↔
	총합	↔	↑	↑	↔	↓	↓

주: ↔: 현행과 동일 또는 유사, ↑: 현행 대비 증가, ↓: 현행 대비 일부 감소, ↓↓: 현행 대비 크게 감소

5. 결론 및 제언

❖ 외국인투자기업에 의한 산업용지 개발은 신중한 접근 필요

- 사업구조가 복잡하므로 객관적인 검증 과정을 보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사업수익 실현 가능성, 외국인 투자 확보 가능성, 우회투자 여부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증하여 사업이 왜곡될 소지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현행 매각 방식은 환매특약과 같은 제도적 장치만으로는 운영 활성화를 위한 안전장치 확보에 한계가 있음.
- 공익적 목적의 사업이라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사전검토가 필요함.

❖ 외부 전문기관 검토 절차 신설

- 현행 사업 추진절차는 내부적인 검토뿐 아니라 단계별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절차 등을 포함하고 있어 비교적 공정한 의사결정 체계를 마련함.
- 그러나 복잡한 구조의 사업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 및 심의 과정만으로는 사업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검토에 한계가 있음.

- 최소한의 사업성 검토를 공공의 입장에서 수행하고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것은 사업의 지연 및 사업내용의 왜곡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음.
- 협약 체결 과정에서도 사업목적 실현에 필요한 특약사항을 충분히 포함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기관의 검토나 자문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인천시 조례에 근거하여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하거나, 민간 회계법인 및 법무법인 등 외부 전문기관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운영단계 관리를 위한 참여 수단 요구

- 운영 활성화를 위한 공공의 참여를 위해 현행 매각 방식의 개선 대안으로 AMC 참여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민간의 수용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수익성이 높고, 사업추진 여건이 좋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상 수단으로서 운영단계 관리에 대한 참여 수단을 요구할 필요가 있음.
- 국내 시행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만큼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이 있고, 최소한 협약체결 시 세부 특약사항 조율의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음.

❖ 사업 추진 단계에서 다양한 사업방식 검토

- 공익적 필요성이 높은 사업이라면, 사업 추진 단계에서 다양한 사업 방식을 검토하여 개발 촉진과 운영 활성화를 함께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을 채택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의한 개발사업을 전제로 하였으나, 공익적 목적이 큰 사업의 경우 재정사업 추진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개발 촉진을 위해 민간투자사업 추진이 불가피한 경우 현행 매각 방식 외에도 개선 대안으로 제시한 PFV 출자 등 다양한 민관공동개발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입주 기업이 아닌 외국인투자기업에 의한 산업용지 개발이 형평성 관점에서 특혜시비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경쟁 공모에 의한 사업추진도 검토해 볼 수 있음.

❖ 연구의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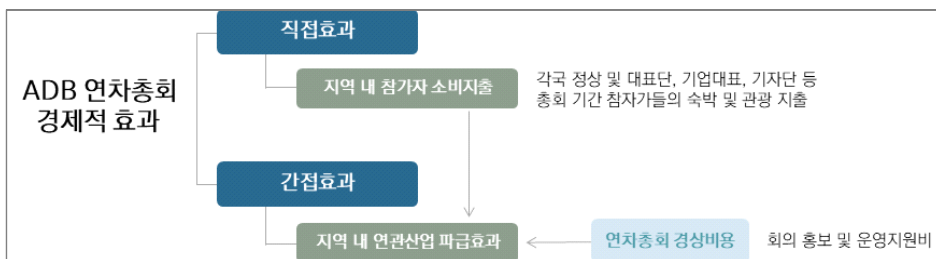
- 본 연구는 사업추진 방식과 절차적 개선 대안을 중심으로 하고, 구체적인 협약 내용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음.

-
- 계약의 세부 특약사항은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기반하여 작성되어야 하므로 이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함.
 - 공급과 운영단계 통합 관리 방안으로 PFV 출자 방식만을 제시하고, 지주공동개발방식이나, 민간투자법에서 정하는 BTO, BTL 방식 등은 생략함.
 - 지주공동개발방식은 운영단계 관리와 리스크를 민간에 일임하는 것으로서 운영 활성화를 위한 관리 수단 확보 목적에는 맞지 않아 제외함.
 - 민간투자법에 의한 개발방식은 개발촉진 관점에서 적용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여 검토에 포함하지 않음.
 - PFV 출자에 의한 민관공동개발방식의 적용을 위한 세부적인 조건이나, 지역 산업정책 관점에서의 접근 등은 별도의 후속 연구가 필요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인천 개최의 경제적 효과 분석

■ 박찬열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 배경 및 목적
 - 인천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한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23.5.2~ 5.6) 백서 발간을 위해 운영실적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하여 제시함
- 개최 현황 및 실적
 - 참가자 수 : 등록 인원 기준으로 66개 ADB 회원국을 포함한 120여개 국가 5,242명 등록으로 당초 ADB 예상을 초과하여 역대 최고인 '17년 요코하마 총회에 근접
 - 숙박 : 초청된 ADB 직원과 세미나 연사, 거버너와 대표단, 일반참가자에게 호텔 정보, 예약 절차 등을 제공하여 총 946개 객실 예약
 - 관광프로그램 : 거버너, ADB 이사, VIP 배우자, 미디어 및 일반 총회 참가자 등을 대상으로 총 17회 프로그램 운영하여 420명 참가하였으며 만족도 매우 높음
 - 비즈니스행사 : ADB 프로젝트 브리핑 국내기업 104개사 193명, 해외 발주처 40명 등 참가, 1:1 프로젝트 상담회에서 총 298건(41,175백만 달러 규모)의 상담 진행, 한국기업 설명회 참석자 90여 명, 홍보 전시 부스 방문자 3,700여 명
- 인천 ADB 연차총회 경제적 효과
 - 직접효과인 참가자 숙박 및 관광소비지출 규모는 약 117억 원으로 추정
 - 간접효과는 직접효과의 소비지출 금액과 연차총회 경상운영비 투자의 산업파급효과를 산업연관 분석을 통해 산출하였으며, 전국 단위 생산유발효과는 361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191억 원, 취업유발효과는 455명으로 추정



신규 조성 산업단지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 박찬열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 배경 및 목적
 - 인천시가 수립 중인 '인천 미래산업 지도 구상'의 타당성을 판단하고 사업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동 계획의 신규조성산단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
- 신규 산업단지 조성계획
 - 현재 추진 중 또는 계획하고 있는 신규 산업단지는 총 7개 산업단지가 있으며, 이들 산업단지의 추정 총사업비 합계는 4조 8,950억원

[표 1] 인천시 신규 조성 예정 산업단지

산업단지명	사업기간	총면적 (천㎡)	총사업비 (억원)
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	2017 ~ 2023	233	2,236
계양 일반산업단지	2020 ~ 2024	243	1,869
남촌 일반산업단지	2020 ~ 2023	256	2,423
검단 일반산업단지(2단계)	2020 ~ 2026	770	4,109
계양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2013 ~ 2028	757	11,200
영종 반도체/바이오 산업단지	미정	3,624	20,000
인천로봇랜드	2009 ~ 2024	769	7,113
합계		6,652	48,950

주: 영종 반도체/바이오 산업단지 사업비는 인천시 내부자료의 추정치 임
 자료: 인천시 산업입지와 내부자료

- 신규 산업단지 조성의 경제적 효과
 - 분석 대상인 신규 조성 산업단지들은 기본구상 단계의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어 운영단계 효과에 대한 분석은 한계가 있으나 주요 유치업종에 대한 계획을 반영하여 운영단계 효과를 포함해 개략 추정

- 직접효과는 각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시 입주기업 신규투자에 의한 신규부가가치 창출효과를 의미
- 간접효과는 조성사업비 투자 및 운영단계 산단 입주기업 생산활동에 따른 인천 지역내 산업파급효과를 종합한 것



- 분석 결과 현재부터 2050년까지 직접효과 합계는 약 73.8조원의 신규부가가치창출 효과가 있으며, 간접효과는 442.5조원의 생산유발효과, 265.4조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1,663.2만명의 취업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

[표 2] 현재부터 2050년까지의 경제효과

(단위: 십억원, 명)

산업단지명	직접효과 (신규부가가치창출)	간접효과		
		생산유발	부가가치유발	취업유발
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	2,829	18,412	11,992	64,381
계양 일반산업단지	2,724	17,618	5,953	68,611
남촌 일반산업단지	3,524	22,884	14,913	79,805
검단 일반산업단지(2단계)	7,418	47,864	16,159	185,868
계양IV 도시첨단산업단지	10,813	70,697	45,976	248,762
영종 반도체/바이오 산업단지	42,662	239,765	161,840	914,879
인천로봇랜드	3,825	25,303	8,609	100,942
합계	73,795	442,543	265,443	1,663,249

자료: 연구진 작성

중봉터널 민간투자사업 사전검토 및 민간 투자사업 검토 절차 제언

■ 박찬운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 연구위원

■ 배덕상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 연구위원

- 중봉터널 건설사업은 인천시 서구 경서동 경서삼거리에서 서구 왕길동 검단2 교차로까지 총 길이 4.567km에 양방향 4차로의 지하차도를 건설하려는 것임. 민간투자 사업 제안서를 살펴보면 총 투자비용은 4,487억원이며, 이 중에서 정부지원 요구금액은 1,381억원 민간투자비용은 3,106억원임. 단, 해당 사업은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으로 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서 별도의 적격성 조사가 착수하였음.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천시 측면에서 검토해야 하는 사항과 향후 인천시 민간투자 사업 절차 개선안을 중심으로 기술함.
- 교통량 예측치는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한정적이므로 정확한 교통수요 분석은 한계가 존재함. 해당 사업구간의 예측교통량은 인근의 무료 경쟁도로, 유료도로에 대한 이용 저감 등의 이유로 교통량이 예상치보다 적을 확률이 크다고 판단함.
- 재무 분야 검토 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①타인 자본 조달 관련하여 보완이 필요함. 특히, 후순위 관련 사항에 대한 보완이 요구됨. ②사업구조 상 BTO-a가 적절한지에 대한 추가 검토 필요함. ③인플레이션이 비교적 높게 잡힌 것으로 보이며 2.7%/년 수준으로 조정 필요함.
- 민간투자사업 검토 절차 개선에서는 전문기관의 검토를 통해 사업의 세부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간략한 절차를 제언함. 민간 투자업체에서 제출한 자료 및 보완자료를 바탕으로 일정 기간동안 공투센터에서 사업구조 적절성(BTO, BTO-a 등 적절성 검토), 제안 현금흐름 검증, 간이VfM(재정 VS 민자사업), 적정 기대 수익률 등을 검토할 수 있는 절차를 제시함.

2023년 인천 부동산 시장 진단

■ 배덕상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 연구위원

1. 배경과 목적

- 수도권 중 인천 부동산 시장 변동성이 컸으며, 그 여파는 송도 등 신도시와 원도심 모두에 미침
- 인천 부동산 시장 현황 진단 관련 시범 연구 성격으로 수행되었으며, 송도·청라·부평 지역의 대표성을 띠는 아파트 단지 1개소를 선택하여 집중 분석함
- 현황 진단을 통해 정책 당국자에게 인천 부동산 시장 환경 및 리스크 요소를 계량적으로 전달하여 정책 효과성을 높이고, 시민에게 정확한 인천 부동산 시장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인천 부동산에 대한 각종 정보 왜곡(유튜브·인터넷)에 따른 가치 변동성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임

2. 정책제안

- 연구 대상지 외 다른 지역(특히 원도심)에서 이슈(전세보증금 문제 등) 발생 가능성이 높음. 또한, 이러한 진단은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됨. 이를 위해, 부동산 시장 연구 플랫폼 개발을 제안함
- 시청 및 관계 관청 간 주기적 대화 채널 개통. 지역 부동산 시장 현황은 인천시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이 업무 수행하는 데 있어 관심 사항임. 각 기관은 정보를 개별 수집하나 공유하는 채널이 전혀 없음. 현재와 같은 경제 급변기에 위기 공동 대응을 위해 주기적 대화 채널 개통이 필요함
- 대시민 인천 부동산 시장 현황 정보 제공. 서울 대비 인천 부동산 시장 정보 부족으로 왜곡된 정보들이 인터넷·유튜브 등을 통해 전파되고, 왜곡 정보로 인해 지역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음. 시민에게 현황에 대한 질 높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시장 왜곡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2023년도 연구결과 요약집

국내·국제 학술행사

I

2023년도 연구결과 요약집

국내 학술행사

2023 인천시정연구네트워크 정기총회 및 공동연구발표회
 2023 도시정보 콜로퀴움
 “재외동포와 함께하는 글로벌도시, 인천” 전문가토론회
 인천 미래 경제·산업 발전 방향 시민공청회
 도시연구세미나 (제24~25회)
 한국ITS학회 2023년도 춘계학술대회 인천 세션
 제물포르네상스 전문가발표회 (제1~2차)
 인천경제발전 시민 대토론회
 2023년 인천경제연구회 3차 세미나
 인천광역시의회-인천시정연구네트워크 정책소통 토론회
 2023년 제3차 수도권포럼
 제물포르네상스 연구성과 공유회
 인천도시역사포럼 (제1~2차)
 2023 황해평화포럼
 인천연구원-한국은행 인천본부 공동주최 인천시 경기진단 세미나
 인천연구원 글로벌산업전략연구단 연구성과 토론회
 2023 인천 안전도시 세미나
 2023년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 세미나
 시민행복연구단 연구성과 공유회
 인천녹색기후아카데미 (2023년 제1~4차)
 인천기후환경포럼 (2023년 제1~4차)
 황해평화포럼 정책세미나 (제26~28차)
 인차이나클러스터 (2023년 제1~13차)

2023 인천시정연구네트워크 정기총회 및 공동연구발표회

■ 행사 목적 및 성과

- 인천시정연구네트워크(ICReN)는 인천 관내 공공기관 중 정책연구 기능 또는 연구수요가 있는 총 15개 기관이 모여 결성한 공동연구 협의체임.
- ICReN 회원기관들은 2023년 총회를 통해 2023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의결하고 2022년에 수행한 공동연구 성과를 공유함.

■ 행사 개요

- 일시 : 2023년 2월 23일(목) 10:00~13:30
- 장소 : 오라카이송도파크호텔 로즈홀
- 주최 : 인천연구원, 인천도시공사, 인천교통공사, 인천관광공사, 인천시설공단, 인천환경공단, 인천광역시의료원, 인천신용보증재단, 인천테크노파크, 인천문화재단,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인천여성가족재단,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정책연구소)
- 주관 : 인천연구원

■ 의결 및 발표

□ 보고/의결 안건

- 2022년 운영성과 및 수지결산
- 2023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 2023 공동연구 및 네트워크 사업
 - 기후위기가 인천시민에게 미치는 성별 영향 (인천여성가족재단 + 인천연구원)
 - 인천시사회복지관 ESG 경영 적용방안 연구 (인천사회서비스원 + 인천테크노파크 등)
 - 인천광역시의회-인천시정연구네트워크 정책토론회

- 「혁신」 관련 공동세미나 (인천신용보증재단)
- 「ESG」 관련 세미나 (인천사회서비스원)
- 비예산 네트워크 사업 13건

□ 2022년 공동연구 성과발표

- 발표 1 : 심진범 (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선임연구위원)
 - “인천시 관광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정책 방향”
- 발표 2 : 심진범 (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선임연구위원)
 - “개항장 관광콘텐츠 육성 방안 연구”
- 발표 3 : 김동관 (인천테크노파크 기업지원센터 책임연구위원)
 - “특허정보를 활용한 인천지역 미래 유망기술 탐색에 관한 연구”
- 발표 4 : 김지영 (인천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실장)
 - “인천광역시 아이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연구”

<행사 사진>



2023 도시정보 콜로кви움

■ 행사 목적 및 성과

- 디지털 대전환이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인공지능 기반의 머신러닝과 딥러닝 기술이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빅데이터 활용과 맞물려 다양한 분야에 응용되고 있음.
- 2023년 도시정보 콜로кви움은 도시 차원에서 A.I. 및 머신러닝을 활용하고 있는 사례와 최신 기술 동향 등을 통해, 데이터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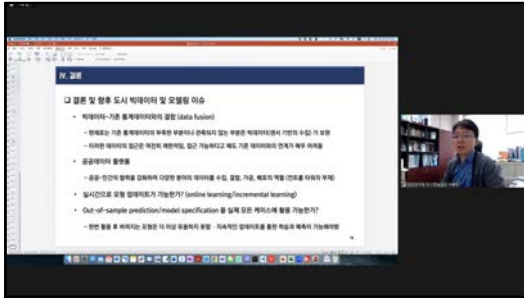
■ 행사 개요

- 일시 : [제1차] 2023년 2월 24일(금) 10:00~11:30
[제2차] 2023년 3월 17일(금) 10:00~11:30
- 장소 : 온라인 화상회의(ZOOM) + 온라인 녹화방송(Youtube)
- 주제 : “도시정보 콜로кви움 「A.I.와 머신러닝」”
- 주최 : 인천연구원
- 주관 : 인천연구원 도시정보센터

■ 발표 및 토론

- [1차] 이동우 (인천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
 - “도시 빅데이터 및 머신 기반 모형 연구와 적용방안”
- [2차] 장요한 (국토연구원 국토모니터링연구센터 국토데이터랩 부연구위원)
 - “AI와 머신러닝을 이용한 정책연구 활용사례”

<행사 사진>



“재외동포와 함께하는 글로벌도시, 인천” 전문가토론회

■ 행사 목적 및 성과

- 신설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를 위해 다방면의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과 토론회를 개최하여 재외동포와 함께하는 도시, 인천의 여건과 과제를 다각적으로 모색함.
- 이를 통해 재외동포청 소재지로서 인천이 갖는 역량과 타당성, 재외동포 사회와 함께 나아가는 지역의 미래 발전상을 탐색함.

■ 행사 개요

- 일시 : 2023년 3월 16일(목) 14:00~17:00
- 장소 : 제물포구락부 매켄지홀 + 온라인 생중계(Youtube)
- 주제 : “재외동포와 함께하는 글로벌도시, 인천”
- 주최 : 인천연구원, 인천광역시
- 주관 : 인천연구원

■ 발표 및 토론

- 발 표 1 : 정은주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교수)
- “현대 이주의 성격과 재외한인”
- 발 표 2 : 임영언 (재외한인학회 회장)
- “재외동포 현황과 협력 과제”
- 토론사회 : 김수한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글로벌도시연구단장)
- 지정토론 : 이현식 (인천문화재단 정책협력실장) - 역사문화
이재승 (인천영상위원회 사무국장) - 영상예술
박봉수 (디아스포라연구소 소장) - 지역사회
배은주 (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선임연구위원) - 교육
임지혜 (인하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연구원) - 다문화
박경용 (인천광역시 글로벌도시기획과장) - 정책

<행사 사진>



인천 미래 경제·산업 발전 방향 시민공청회

■ 행사 목적 및 성과

- 인천시 전략산업 후보군의 특징을 시민사회에 소개하고 향후 인천시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여 정책추진 과정에 반영하고자 시민공청회를 개최함.
- 인천시 전략산업 육성과 관련한 경제 현안에 대해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관련 시정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에 필요한 것들은 무엇인지 전문가 및 지역사회와 함께 모색함.

■ 행사 개요

- 일시 : 2023년 3월 28일(화) 15:00~17:00
- 장소 :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 주제 : “인천 미래 경제·산업 발전계획: 전략산업 후보군 유형별 특성과 육성 방향”
- 주최 : 인천연구원, 인천광역시
- 주관 : 인천연구원

■ 발표 및 토론

- 주제발표 : 서봉만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 “인천 미래 경제·산업 발전계획: 전략산업 후보군 유형별 특성과 육성 방향”
- 토론사회 : 김대중 (인천광역시의회 시의원)
- 지정토론 : 김 일 (인천경영자총협회 사무국장)
김칭우 (인천일보 경제부장)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류윤기 (인천광역시 글로벌도시국장)

<행사 사진>



도시연구세미나 (24~25회)

■ 행사 목적 및 성과

- 「도시연구세미나」는 도시 관련 전 분야에서 최신 이론과 연구성과를 공유하는 학술행사로 학술지 『도시연구』 편집위원회가 주관하여 상·하반기 연 2회 개최하고 있음.
- 매회 오전에는 신진 연구자를 대상으로 논문공모를 통해 연구결과가 주목되는 논문을 선정하여 발표회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중견 연구자를 대상으로 연구주제에 대한 발표 및 토론 과정에서 정책시사점을 도출함.
- 이를 통해, 도시연구에 대한 관심과 연구의욕을 고취하고, 최신 연구동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학술지 「도시연구」 원고의 질적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 행사 개요

- 일시 : [제24회] 2023년 4월 07일(금) 10:00~16:30
[제25회] 2023년 9월 22일(금) 10:00~16:30
- 장소 : 온라인 영상회의 [패널 화상회의(Zoom) + 온라인 생중계(Youtube)]
- 주제 : [제24회] “주거 안정과 주택정책”
[제25회] “도시와 대중교통”
- 주최 : 인천연구원
- 주관 : 인천연구원 학술지편집위원회

■ 발표 및 토론

□ 제24회 발표 및 토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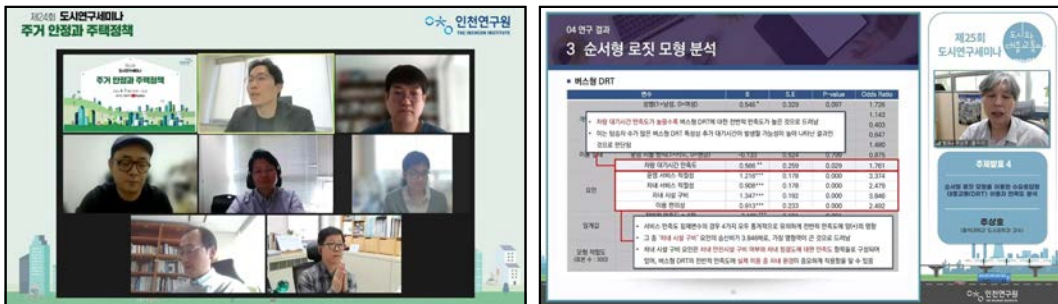
- 주제 1 : “청년과 노인 가구의 주거 불안정 유형별 수준의 차이와 영향요인 : 2010년, 2020년 주거실태조사 비교를 중심으로”
- 발표 : 정수영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박사후연구원)
김은지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석사과정)

- 토론 : 김호기 (서울연구원 도시인프라계획센터 부연구위원)
- 주제 2 :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과 공공위탁 운영실태 비교분석
: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 발표 : 윤 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
 - 토론 : 이정철 (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연구위원)
- 주제 3 : “구조, 성능, 환경 특성을 반영한 최저주거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 서울시 관악구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을 중심으로”
 - 발표 : 조우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석사)
 - 토론 : 유명수 (인천대학교 도시건축학부 교수)
- 주제 4 : “통근이 거주 중인 지역(군/구)에 대한 만족도 및 소속감에 미치는 영향
: 인천광역시 거주 근로자를 대상으로”
 - 발표 : 양은모 (성균관대학교 경제대학 연구교수)
배호중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일과생애연구본부 부연구위원)
 - 토론 : 이종현 (인천연구원 도시공간연구부 선임연구위원)
- 주제 5 : “공공임대주택 정책 성과평가 기준에 관한 연구
: 국내외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 발표 : 고진수 (광운대학교 스마트융합대학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부교수)
김천일 (강남대학교 부동산건설학부 조교수)
지규현 (한양사이버대학교 디지털건축도시공학과 교수)
 - 토론 : 봉인식 (경기연구원 도시주택연구실 선임연구위원)
- 주제 6 : “수요자 중심 주거복지정책이 가능한가?
: 주거복지센터의 역할과 주거복지 지방화를 중심으로”
 - 발표 : 박동하 (경기연구원 도시주택연구실 연구위원)
양희진 (한동대학교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 교수)
김나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박사과정)
김준형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토론 : 남원석 (서울연구원 공간교통연구실 연구위원)

□ 제25회 발표 및 토론

- 주제 1 : “지속가능한 도시 이동의 (재)구성
: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나타나는 사회문화적 실천”
 - 발표 : 김진주 (전남대학교 문화인류고고학과 박사과정)
 - 토론 : 김우중 (인천대학교 동북아물류대학원 교수)
- 주제 2 : “고령 디지털 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복지에 관한 연구
: 폴란드 ‘포즈난’과 ‘대전광역시’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 발표 : 전숙연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박사과정)
 - 토론 : 이주용 (경기대학교 창의공과대학 도시·교통학전공 교수)
- 주제 3 : “인과성 분석을 통한 고령자 통행행태와 교통복지 정책효과 분석”
 - 발표 : 이동우 (인천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
이현수 (인천대학교 도시행정학과 학생연구원)
 - 토론 : 이동민 (서울시립대학교 교통공학과 교수)
- 주제 4 : “순서형 로짓모형을 이용한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이용자 만족도 분석”
 - 발표 : 추상호 (홍익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박유진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도시계획과 석사과정)
 - 토론 : 백주현 (고양시정연구원 도시정책연구실 연구위원)
- 주제 5 : “교통카드 자료를 활용한 수도권 지하철 중심의 접근성 지표 구축”
 - 발표 : 신성일 (서울연구원 공간교통연구실 선임연구위원)
 - 토론 : 박호철 (명지대학교 교통공학과 교수)

<행사 사진>



한국ITS학회 2023년도 춘계학술대회 인천 세션

■ 행사 목적 및 성과

- 인천광역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도시교통 기초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하여 교통정책의 기본이 되는 교통량과 속도 등을 조사하고 있음.
- 도시교통 기초조사는 교통수요 추정 및 운영·관리, 대중교통 운영·관리, 비용, 대중교통 연계 방안 등의 측면에서 통합적인 고려가 필요함.
- 이에, 전문가 의견 청취 및 토론을 통해 인천광역시 교통정책, SOC 투자사업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통행량 기반 수요추정 고도화 방안을 논의함.

■ 행사 개요

- 일시 : 2023년 4월 20일(목) 13:30~15:00
- 장소 :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 세미나실
- 주제 : “도시교통 기초조사 활용 고도화: 인천시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 주최 : (사)한국ITS학회
- 주관 : 인천연구원

■ 발표 및 토론

- 발 표 1 : 장경욱 (한국교통안전공단 박사)
 - “인천시 대중교통 이용률 향상방안: 알뜰카드를 중심으로”
- 발 표 2 : 신성일 (서울연구원 공간교통연구실 선임연구위원)
 - “승객 통행 기반 지하철-버스 환승 접근성: 수도권, 인천시 사례”
- 토론사회 : 추상호 (홍익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 지정토론 : 김도경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
김성인 ((주)미래교통 상무이사)
최찬영 (SKT 플래닛 부장)

<행사 사진>



제물포르네상스 전문가발표회 (1~2차)

■ 행사 목적 및 성과

- 인천연구원에서는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에 대응하기 위해 ‘제물포르네상스연구단’을 구성하여 정책을 지원하고 있음.
- 2023년 연구주제는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 실천적 대안 모색’ 및 ‘인천 내항 일원 장소적 가치 발견 및 공간의 재해석’으로 설정하고 총 12개 세부 연구과제를 수행함.
-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토론회를 개최하여 프로젝트 적용과 실현을 위한 종합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함.

■ 행사 개요

- 일시 : [1차] 2023년 5월 19일(금) 14:00~16:00
[2차] 2023년 5월 26일(금) 14:00~16:00
- 장소 : 인천연구원 대강당
- 주제 : “제물포르네상스 실천적 대안 모색 및 장소적 가치 창출”
- 주최 : 인천연구원, 인천광역시
- 주관 : 인천연구원

■ 발표 및 토론

□ 1차(5/19)

- 발 표 1 : 이한석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건축·에너지자원공학부 교수)
- “항만 재생과 지속 가능한 워터프런트”
- 발 표 2 : 홍주석 (URBANPLAY 대표이사)
- “크리에이터가 모이는 지속 가능한 동네 생태계”
- 토론사회 : 조상운 (인천연구원 제물포르네상스연구단장)

- 지정토론 : 윤세형 (인천도시공사 미래도시연구소 소장)
장철배 (인천광역시 제물포르네상스계획과장)
기윤환 (인천연구원 도시공간연구부 선임연구위원)
김운수 (인천연구원 교통물류연구부 선임연구위원)

□ 2차(5/26)

- 발 표 1 : 남지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 “산업유산의 가치와 활용”
- 발 표 2 : 장남중 (동해종합기술공사 사장)
- “성수동 일대 산업유산의 변용과 과제”
- 토론사회 : 조상운 (인천연구원 제물포르네상스연구단장)
- 지정토론 : 남 진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나인수 (인천대학교 도시건축학부 교수)
정재구 (인천광역시 제물포르네상스개발과 팀장)
안내영 (인천연구원 도시공간연구부 연구위원)

<행사 사진>



인천경제발전 시민 대토론회

■ 행사 목적 및 성과

- 인천광역시와 인천연구원이 공동으로, 경제 관련 학계, 산업계, 노동계 등 경제·산업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심층 토론회를 개최함.
- GRDP 100조 시대를 넘어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을 조성하기 위해, 경제 상황 진단 및 토론을 통한 인천경제의 나아갈 방향을 설정함.

■ 행사 개요

- 일시 : 2023년 6월 19일(월) 14:00~16:00
- 장소 : 미추홀타워 미추홀관
- 주제 : “GRDP 100조 시대를 넘어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 조성”
- 주최 : 인천연구원, 인천광역시
- 주관 : 인천광역시

■ 발표 및 토론

- 발 표 1 : 조인권 (인천광역시 경제산업본부장)
- “인천경제의 현황과 과제”
- 발 표 2 : 김하운 (前 한국은행 인천본부장, (사)함께하는인천사람들 이사장)
- “인천 실물경제지표의 의미와 과제”
- 토론사회 : 박호균 (인천연구원 원장)
- 종합토론 : 참석자 전원(공무원, 유관기관·경제단체 대표, 대학생 등)

<행사 사진>



2023년 인천경제연구회 3차 세미나

■ 행사 목적 및 성과

- 인천경제연구회는 인천연구원, 한국은행 인천본부,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 등이 2022년 발족한 지역경제 연구기관 간 연구 네트워크로, 인천시 지역경제 혁신과 관련한 학문적·정책적 담론을 나누는 자리를 정기적으로 마련함.
- 인천연구원이 주관한 3차 세미나는 지역산업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해 인천시 바이오산업의 성장 과정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향후 바이오산업 혁신클러스터 육성 정책 방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모색함.

■ 행사 개요

- 일시 : 2023년 8월 18일(금) 14:00~16:30
- 장소 : 인천연구원 대회의실
- 주제 : “인천 바이오산업의 성장경로 특성 분석”
- 주최 : 인천경제연구회
- 주관 : 인천연구원

■ 발표 및 토론

- 발표 : 김윤수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인천 바이오산업의 성장경로 특성 분석: 지역산업 네트워크 분석 모형 적용”
- 사회 : 서봉만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 토론 : 참석자 전원(한국은행 7명, 인천대 2명, 인하대 2명, 인천연구원 4명)

<행사 사진>



인천광역시의회-인천시정연구네트워크 정책소통 토론회

■ 행사 목적 및 성과

- 입법권 등 정책 실행력을 갖춘 인천광역시의회와 정책 연구역량을 갖춘 인천시정연구네트워크가 긴밀한 협업으로 토론회를 개최하여, 참신하고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시행함으로써 시민의 행복과 더 나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자 함.
- 이를 통해, 상임위원회별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협조·지원체계를 공고히 구축해 조사연구, 계획수립, 사업운영 등의 성과가 정책 실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로 삼음.

■ 행사 개요

- 일시 : 2023년 8월 29일(화) ~ 8월 30일(수) [2일간]
- 장소 : 인천광역시의회 본관 중앙홀, 별관 세미나실/회의실
- 주제 :

시 간	주관기관	주 제	비 고
29일	15:00~16:10	인천연구원 [행정안전 분야] “인천광역시 중대시민재해 주요 이슈 및 대응 방안”	205호
	15:00~16:10	인천연구원 [문화복지 분야] “지역맞춤형 보건의료연계 통합돌봄서비스 활성화 연구”	304호
30일	15:00~17:10	인천테크노파크 [산업경제 분야] “인천광역시 환경오염 행위 근절을 위한 정책방안” “인천 스마트공장 보급성과 및 디지털 전환 전략”	405호
	15:00~16:30	인천도시공사 [건설교통 분야] “경쟁력 관점에서의 인천경제자유구역 정주 여건 분석”	505호
	16:00~17:30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 [교육 분야] “과잉행동 등 위기학생과 교원 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	605호

- 주최 : 인천연구원, 인천광역시의회, 인천시정연구네트워크
- 주관 : 인천광역시의회(입법정책담당관), 인천시정연구네트워크

■ 발표 및 전시

□ 행정안전 분야 (인천연구원)

- 좌 장 : 신동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장)
- 사 회 : 윤하연 (인천연구원 연구기획실장)
- 발 표 : 조성윤 (인천연구원 연구위원, 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장)
 - “인천광역시 중대시민재해 주요 이슈 및 대응 방안”
- 지정토론 : 이정철 (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연구위원)
 - 김정욱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
 - 김기원 (인천광역시 안전예방과장)
- 종합토론 :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이단비)
 -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 (박시중)

□ 문화복지 분야 (인천연구원)

- 좌 장 : 김종득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
- 사 회 : 채은경 (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장)
- 발 표 : 이용갑 (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선임연구위원)
 - “지역맞춤형 보건의료 연계 통합돌봄서비스 활성화 연구”
- 지정토론 : 김지영 (인천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실장)
 - 이충권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초빙교수)
 - 김명숙 (인천광역시 복지서비스과장)
- 종합토론 :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장성숙)

□ 산업경제 분야 (인천테크노파크)

- 좌 장 : 정해권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사 회 : 권전오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장)
 - 신용덕 (인천테크노파크 정책팀장)
- 발 표 1 : 이유봉 (한국법제연구원 혁신법제사업본부 연구위원)
 - “인천광역시 환경오염 행위 근절을 위한 정책 방안”
- 발 표 2 : 이한홍 (인천테크노파크 제조혁신센터장)

- “인천 스마트공장 보급 성과 및 디지털 전환 전략”

- 토 론 1 : 나상길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우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선임연구위원)
구지선 (국가녹색기술연구소 제도혁신센터 선임연구위원)
정낙식 (인천광역시 대기보전과장)
- 토 론 2 : 정지원 (인천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이정철 (한국생산성본부 스마트제조컨설팅센터 팀장)
마남석 (인천광역시 산업입지와 산단정책팀장)
- 종합토론 :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이순학, 이명규)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 (권오용, 정창훈)

□ 건설교통 분야 (인천도시공사)

- 좌 장 : 유승분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 사 회 : 윤세형 (인천도시공사 미래도시연구소장)
- 발 표 : 윤혜영 (인천연구원 연구위원)
 - “경쟁력 관점에서의 인천 경제자유구역 정주여건 분석”
- 지정토론 : 장동민 (청운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김재형 (인천도시공사 스마트도시사업처 수석부장)
강영훈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영종청라계획과장)
- 종합토론 :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김종배)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 (유용준, 이왕기)

□ 교육 분야 (인천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

- 좌 장 : 임춘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 사 회 : 장동숙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 소장)
- 발 표 1 : 정혜진 (인천장아초등학교 교사)
 - “내가 만난 교실 속 정서행동 위기학생”
- 발 표 2 :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관교중학교 교사)
 - “정서행동 위기학생 실태와 지원을 위한 정책 제안”

- 발 표 3 : 박계신 (나사렛대학교 유아특수교육과 교수)
 - “학교-교육청-지역사회 차원 정서행동 위기학생 문제 해결 정책 제언”
- 지정토론 : 서향원 (인천송도꿈유치원 원감)
 - 임혜영 (인천경연초등학교 교사)
 - 이성숙 (인일여자고등학교 교감)
 - 진미영 (청인학교 교감)

<행사 사진>



2023년 제3차 수도권포럼

■ 행사 목적 및 성과

- 2023년 3월, 수도권 시도연구원(인천연구원, 서울연구원, 경기연구원)은 「수도권 광역 교통 관련 연구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도권 공통 현안에 대한 광역적 차원의 논의와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정례 학술행사 개최에 합의함.
- 이에 경기연구원 주관 <수도권 광역교통 세미나>에 이어, 수도권 인구정책을 주제로 서울연구원 주관 <제2차 수도권포럼>을 개최하였으며, 윤번제에 따라 인천연구원 주관 <제3차 수도권포럼>에서 수도권 지역 자원순환 정책을 함께 모색함.

■ 행사 개요

- 일시 : 2023년 9월 6일(수) 10:00~13:30
- 장소 : 인천연구원 대회의실
- 주제 : “수도권 자원순환 정책”
- 주최 : 인천연구원, 서울연구원, 경기연구원
- 주관 : 인천연구원

■ 발표 및 토론

- 발 표 1 : 김고운 (서울연구원 환경안전연구실 연구위원)
- “서울시 자원순환 정책”
- 발 표 2 : 이정임 (경기연구원 기후환경연구실 선임연구위원)
- “경기도 자원순환 정책”
- 발 표 3 : 윤하연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선임연구위원)
- “인천시 자원순환 정책”
- 토론사회 : 윤하연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선임연구위원)

- 지정토론 : 조석연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처 자원순환성과부장)
유기영 (서울연구원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장, 선임연구위원)
한진이 (경기연구원 기후환경연구실 연구위원)
권전오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장, 선임연구위원)

<행사 사진>



제물포르네상스 연구성과 공유회

■ 행사 목적 및 성과

- 인천연구원에서는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에 대응하기 위해 ‘제물포르네상스연구단’을 구성하여 정책을 지원하고 있음.
- 연구단의 2023년 연구 주제는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 실천적 대안 모색’ 및 ‘인천 내항 일원 장소적 가치 발견 및 공간의 재해석’으로 설정하고 총 10개의 세부 연구과제를 수행함.
-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의 효과적 실현을 위해 연구과제 수행 성과를 공유함.

■ 행사 개요

- 일시 : 2023년 9월 7일(목) 14:00~17:20
- 장소 : 하버파크호텔 하버베이홀
- 주제 : “제물포르네상스 실천적 대안 모색 및 장소적 가치 창출”
- 주최 : 인천연구원
- 주관 : 인천연구원

■ 발표 및 토론

- 발표 1 : 이왕기 (인천연구원 도시공간연구부 선임연구위원)
- “제물포르네상스 역사문화자원 보전형 주거지 정비모델”
- 발표 2 : 윤혜영 (인천연구원 도시공간연구부 연구위원)
- “시민참여형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 실천 전략”
- 발표 3 : 이인재 (인천연구원 도시공간연구부 선임연구위원)
- “제물포르네상스 도시디자인 계획 요소”
- 발표 4 : 김성우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선임연구위원)

-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 환경적 쟁점 및 대응 방향”
- 발표 5 : 민혁기 (인천연구원 도시공간연구부 연구위원)
 -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 스마트도시 구현방안”
- 발표 6 : 안내영 (인천연구원 도시공간연구부 연구위원)
 - “인천 내항 배후 산업공간의 역사적·장소적 가치 해석”
- 발표 7 : 기윤환 (인천연구원 도시공간연구부 선임연구위원)
 - “인천 내항 일원 수변공간 가치 창출을 위한 친수공간 조성 방향”
- 발표 8 : 조상운 (인천연구원 도시공간연구부 선임연구위원)
 - “제물포르네상스 도시형 혁신공간 조성을 위한 실천 대안”
- 발표 9 : 권전오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선임연구위원)
 - “제물포르네상스 공원녹지 정비 및 네트워크 구축”
- 발표 10 : 심진범 (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선임연구위원)
 - “제물포르네상스 공공공간을 활용한 장소만들기 전략”

<행사 사진>



인천도시역사포럼 (제1~2차)

■ 행사 목적 및 성과

- 인천은 다양한 근대 역사·문화자산을 기반으로 형성되었으나, 그 형성 과정을 경험한 세대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제물포 르네상스와 같은 주요한 도시계획 사업에서 역사·문화 자산을 기반으로 한 도시 정체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다양한 세대와 분야 간 논의를 담는 기회가 필요함.
- 이에 지역 전문가와 로컬 크리에이터가 함께 인천의 역사·문화자산에 관한 체계적인 자료 수집과 분석, 활용 방안 등 다양한 논의를 통해 어젠다를 설정하는 토대를 마련함.

■ 행사 개요

- 일시 : [1차] 2023년 09월 22일(금) 14:00~16:00
[2차] 2023년 11월 24일(금) 14:00~16:00
- 장소 : 인천연구원 대회의실
- 주제 : [1차] “인천시 역사와 문화자산: 탐색과 가능성”
[2차] “인천의 도시문화자산과 2024년 인천도시역사포럼 운영 방향”
- 주최 : 인천연구원
- 주관 : 인천연구원

■ 발표 및 토론

□ 1차(9/22)

- 토론사회 : 서봉만 (인천연구원 도시정보센터장)
- 종합토론 : 김아영 (인더로컬 대표) / 김용하 (前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양태석 (금풍양조장 대표) / 오석근 (사진작가)
이규영 (루비레코드 대표) / 나서경 (협동조합 청풍 대표)

이의중 (웅노만어 대표) / 손민환 (부평역사박물관 학예연구사)
이인재 (인천연구원 도시공간연구부 선임연구위원)

□ 2차(11/24)

- 발 표 1 : 김창수 (인하대학교 초빙교수)
- “인천 도시자산 콘텐츠화 구상”
- 발 표 2 : 서봉만 (인천연구원 도시정보센터장)
- “2024년 도시역사포럼 운영 방안”
- 종합토론 : 김아영 (인더로컬 대표) / 손민환 (부평역사박물관 학예연구사)
오석근 (사진 작가) / 이규영 (루비레코드 대표)
이의중 (웅노만어 대표)
이인재 (인천연구원 도시공간연구부 선임연구위원)

<행사 사진>



2023 황해평화포럼

■ 행사 목적 및 성과

- 2022년 신정부 출범에 따른 변화된 대내외 통일환경에 맞춰 정부가 구상하는 ‘신통일 미래 구상’ 및 ‘재외동포청’ 출범과 연계하여, 인천의 통일 공감대 모색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해 숙의형 통일 대화를 추진함.
- <2023 황해평화포럼>에서는 한반도 통일의 미래 구상, 한·독 수교 140주년 기념 독일통일의 교훈 성찰, 해외 동포의 통일의지 및 지지여론 결집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 등에 관한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해, 정부와 민선 8기 인천시의 통일정책 방향에 조응하면서, 통일 준비 방안을 모색함.

■ 행사 개요

- 일시 : 2023년 10월 19일(목), 09:30~18:00
- 장소 : 인천하버파크호텔 하버베이홀
- 주제 : “통일의 관문 인천, 대응과 준비”
- 주최 : 인천광역시, 인천연구원
- 주관 : 인천연구원
- 후원 : 통일부, 인천광역시의회, 주한독일대사관, 남북사회통합연구원, 내나라연구소

■ 발표 및 토론

□ 기조발표

- 기조발표 : 홍용표 (前 통일부 장관,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어떻게 통일 공감대를 높일 것인가?”

□ [세션 1: 통일 비전 세션]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이반도”

- 세션사회 : 홍양호 (남북사회통합연구원 이사장 / 전 통일부 차관)
- 발 표 1 :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 (정치군사)
 - “통일비전과 한반도 평화와 안보”
- 발 표 2 : 홍순직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동북아센터 객원연구원) (경제분야)
 - “한반도 통일비전과 여건 조성을 위한 인천의 역할”
- 발 표 3 : 전영선 (북한연구학회 회장 /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교수) (사회문화)
 - “통일미래 개념 디자인”
- 발 표 4 : 김수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인도인권)
 - “북한주민의 보편적 인권 구현을 위한 방안”
- 발 표 5 : 주재우 (경희대학교 중국어학과 교수) (국제협력)
 - “미래통일비전과 국제정세 : 인천에 대한 함의”
- 지정토론 : 남창희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세션 2: 한·독 수교 140주년 기념 세션] “독일통일의 교훈과 성찰적 통일”

- 세션사회 : 이규영 (전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장)
- 발 표 1 : 김영운 (남북물류포럼 회장)
 - “독일의 분단과 통일, 그리고 교훈”
- 발 표 2 : 이종희 (한독사회과학회 회장,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 교수)
 - “통일 과정에서 정치지도자의 리더십: 독일의 교훈과 함의”
- 발 표 3 : 허준영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동서독 도시협력 사례와 정부의 역할”
- 지정토론 : 롤랜드 윌슨 (조지메이슨대 분쟁분석해결학과 교수)
이용갑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영수 (한스자이텔재단 사무국장)

□ [세션 3: 재외동포청 출범 기념 세션] “재외동포와 함께 여는 통일과 인천”

- 세션사회 : 김영래 (내나라연구소 이사장, 전 동덕여자대학교 총장)
- 발 표 1 : 유제현 (유럽한인총연합회 회장)
 - “유럽동포사회가 보는 통일과 인천”
- 발 표 2 : 박해준 (재일본한국인총연합회 부회장)
 - “재일동포사회가 보는 통일과 인천”
- 발 표 3 : 이진영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소장)
 - “재외동포와 통일공공외교”
- 지정토론 : 김정호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형수 (인천일보 주필)
이정철 (인천연구원 연구위원)

<행사 사진>



인천연구원-한국은행 인천본부 공동주최 인천시 경기진단 세미나

■ 행사 목적 및 성과

- 인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센터추진단은 매월 인천의 경기 동향 및 경제지표 추이를 살필 수 있는 정기간행물(인천경제동향 및 최근 인천경제)을 작성·배포하여 지역의 경제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 최근 한국은행은 지역 단위의 경제 상황을 시의성 있게 확인하기 어려운 지역소득(GRDP) 및 지역 경기지수 통계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분기별 ‘지역경기전망지수’를 개발함.
- 세미나를 통해 지역경기전망지수를 인천에 적용하고, 실물경제 지표 및 인천경기종합지수와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함.

■ 행사 개요

- 일시 : 2023년 11월 08일(수) 12:00~16:00
- 장소 : 인천연구원 대회의실
- 주제 : “인천시 지역 경기 상황 진단 및 경기지표 활용방안 모색”
- 주최 : 인천연구원, 한국은행 인천본부
- 주관 : 인천연구원

■ 발표 및 토론

- 발 표 1 : 김효영 (인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센터추진단 연구원)
- “인천지역 최근 경제동향과 경기종합지수 이해”
- 발 표 2 : 김규식 (한국은행 인천본부 기획조사팀 과장)
- “지역경기상황지수(RECI) 현황과 활용”
- 종합토론 : 참석자 전원

<행사 사진>



인천연구원 글로벌산업전략연구단 연구성과 토론회

■ 행사 목적 및 성과

- 2023년 글로벌산업전략연구단의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경제·산업 분야 전문가 및 정책 담당자들과 토론을 통해, 인천시 산업발전 현황과 산업전략의 이슈를 진단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함.
- 이를 통해, 전략산업 인적자원 육성, 연구개발 역량 강화, 투자유치 활성화 등에 관한 현황 파악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 및 핵심 전략산업에 대한 산업정책 기능 수행 필요성에 관한 전문가 공감대를 형성함.

■ 행사 개요

- 일시 : 2023년 11월 10일(금) 14:00~17:00
- 장소 : 인천연구원 대회의실
- 주제 : “인천의 산업발전 전략, 진단과 모색”
- 주최 : 인천연구원
- 주관 : 인천연구원

■ 발표 및 토론

- 기조발표 : 이준영 (산업연구원 지역정책실 부연구위원)
 - “지역별 성장회계 분석과 인천에 대한 시사점”
- 발 표 1 : 민규량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 “인천시 전략산업의 인적자원 육성방안”
- 발 표 2 : 이정영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부연구위원)
 - “인천시 연구개발 특성과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방안”

- 발 표 3 : 윤석진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글로벌산업연구단장)
- “인천시 글로벌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
- 토론사회 : 문미성 (경기연구원 경제사회연구실 선임연구위원)
- 지정토론 : 김목한 (서울연구원 전략연구단 선임연구위원)
김민경 (인천인적자원개발위원회 책임연구원)
신용덕 (인천테크노파크 전략기획실 정책팀장)
박문수 (단국대학교 산학협력융합대학 교수)

<행사 사진>



2023 인천 안전도시 세미나

■ 행사 목적 및 성과

-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54조 및 제69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는 지역의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연구 및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전문가 및 실무자 의견 청취를 통해, 인천광역시 재난·안전 분야(행정, 경찰, 소방) 현안을 살펴보고, 지속적인 연구 및 사업추진을 위한 협력적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함.

■ 행사 개요

- 일시 : 2023년 12월 01일(금) 14:00~16:30
- 장소 : 인천연구원 대회의실
- 주제 : “인천광역시 재난안전 현안 토론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 주최 : 인천연구원
- 주관 : 인천연구원 안전도시연구센터

■ 발표 및 토론

- 발 표 1 : 이창길 (인천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
- “재난안전정책 개선 및 발전 방향 제안”
- 발 표 2 : 박영준 (인천경찰청 경무기획과)
- “「인천의 이미지가 미치는 영향」 인천의 체감안전도와 저조 원인”
- 발 표 3 : 이인효 (인천소방본부 소방행정과)
- “인천광역시 소방본부 2024년 계획”
- 토론사회 : 조성운 (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장)
- 지정토론 : 안승현 (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 연구위원)
 염재원 (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 연구위원)
 정경국 (인천소방본부 소방행정과)

<행사 사진>



2023년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 세미나

■ 행사 목적 및 성과

- 서울, 경기, 인천 등 공공투자관리센터의 민간투자사업 관련 지방정부 지원 사례와 대응 현안을 공유함.
- 건설과 금융 등 민간사업자의 관점에서 투자 동향과 이슈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공공투자 관리업무의 역량 강화 방향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함.

■ 행사 개요

- 일시 : 2023년 12월 5(화) 14:00~17:40
- 장소 : 송도센트럴파크호텔 사파이어홀
- 주제 :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의 민간투자사업 대응 이슈 현황 공유”
- 주최 : 인천연구원, 인천광역시
- 주관 : 인천연구원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

■ 발표 및 토론

- 1부 : 민자사업 관련 지방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지방정부 지원 사례
 - 진행사회 : 박찬열 (인천연구원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 연구위원)
 - 발표 1 : 배덕상 (인천연구원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 연구위원)
 - “민간투자 조례 제정 및 공공투자관리센터 역할”
 - 발표 2 : 권용훈 (서울연구원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팀장)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서울시 지원 사례 공유”
 - 발표 3 : 최지은 (부산연구원 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 팀장)
 - “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의 부산시 지원 사례 공유”
 - 토론사회 : 이왕기 (인천연구원 부원장)

- 지정토론 : 김성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재영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투자분석센터 평가부장)
 명삼수 (인천광역시 재정관리담당관)
 유재광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팀장)
 정창용 (경남연구원 경남공공투자관리센터장)
 한명주 (경기연구원 경기공공투자관리센터 투자분석평가부장)

□ 2부 : 민간사업자(건설, 금융 등)의 민간투자사업 투자 동향

- 진행사회 : 배덕상 (인천연구원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 연구위원)
- 발 표 1 : 권석훈 (IBK기업은행 차장)
 - “국책은행 관점 민간투자사업 사례 공유”
- 발 표 2 : 이진용 (GS건설 팀장)
 - “건설사 관점 민간투자사업 사례 공유”
- 토론사회 : 김성규 (청운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 지정토론 : 복준호 (이지스네오밸류자산운용 대표이사)
 오두원 (도화엔지니어링 전무)
 이재민 (중앙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이정우 (서우회계법인 이사/회계사)
 정창훈 (인하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정철희 (인천도시공사 스마트도시사업처장)

<행사 사진>



시민행복연구단 연구성과 공유회

■ 행사 목적 및 성과

- 2023년 시민행복연구단의 연구성과를 보건의료, 평생교육, 관광정책, 재난안전 분야 정책 담당자들과의 공유를 통해, 시민행복과 밀접한 정책 분야의 관련 여건을 점검하고 정책 방향과 과제를 제안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함.
- 도시정책과 시민행복에 관한 정책적 담론을 고찰하고 인천시민의 행복 수준과 시민이 인식하는 행복 요소를 살펴보았으며,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시민행복 증진을 위한 실천 대안과 정책개발 방안을 모색함.

■ 행사 개요

- 일시 : 2023년 12월 13일(수) 14:00~17:00
- 장소 : 인천연구원 대회의실
- 주제 : “도시정책과 시민행복”
- 주최 : 인천연구원
- 주관 : 인천연구원

■ 발표 및 토론

- 발 표 1 : 이용갑 (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선임연구위원)
- “지역맞춤형 보건의료연계 통합돌봄서비스 활성화 연구”
- 발 표 2 : 배은주 (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선임연구위원)
- “시민행복과 포용적 평생교육”
- 발 표 3 : 심진범 (인천연구원 시민행복연구단장)
- “시민행복과 관광향유”
- 발 표 4 : 조성운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 “시민 안전과 재난복지”
- 토론사회 : 석종수 (인천연구원 교통물류연구부장)
- 지정토론 : 김지영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실장)
고은경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시민대학부장)

이은정 (인천광역시 관광미이스과 관광미이스정책팀 주무관)
한아름 (인천관광공사 국내스마트관광팀장)
김진아 (인천광역시 시민안전본부 안전기획팀 주무관)
신상준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행사 사진>



인천녹색기후아카데미 (2023년 제1~4차)

■ 행사 목적 및 성과

- 녹색도시 인천이라는 비전을 공유한 지역공동체 구축을 위해 관내 공무원, 기업체, 시민단체, 대학생 등 관심층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
- 이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의식을 제고시키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함.

■ 행사 개요

- 일시 : [1차] 2023년 2월 28일(화) 15:00~17:00 / 실시간 온라인 강의
[2차] 2023년 6월 29일(목) 15:00~17:00 / 인천광역시교육청 평생학습관
[3차] 2023년 10월 5일(목) 15:00~17:00 / 인천YWCA
[4차] 2023년 12월 19일(화) 15:00~17:00 / 실시간 온라인 강의
- 주제 : [1차] “해양쓰레기와 우리의 역할”
[2차] “친환경 건축물에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유”
[3차] “기후위기와 우리의 건강”
[4차]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 실천”
- 주최 : 인천연구원 인천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
- 주관 : 인천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

■ 강사

- [1차] 윤병일 (경기·인천씨그랜트센터 부센터장)
- [2차] 박지영 (인하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 [3차] 채수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미래질병대응연구센터장)
- [4차] 김인호 (환경부 국가환경교육센터장)

<행사 사진>



인천기후환경포럼 (2023년 제1~4차)

■ 행사 목적 및 성과

- 지역사회와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문체계를 구축하고자 관련 전문가와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포럼위원을 구성하여 전문가 위주의 정례적인 포럼을 진행함.
-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분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관련 현안 이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해 선제적인 대응방안 마련에 활용함.

■ 행사 개요

- 일시 : [1차] 2023년 3월 30일(목) 15:00~18:00 / G타워 8층 회의실
[2차] 2023년 7월 10일(월) 15:00~18:00 / 인천연구원 대회의실
[3차] 2023년 10월 23일(월) 14:00~18:00 / 인천연구원 대회의실
[4차] 2023년 12월 12일(화) 14:00~18:00 / 하버파크호텔 코너베이홀
- 주제 : [1차] “국가 및 인천광역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2차] “인천광역시 항만 및 공항 부문의 탄소중립 전략 및 추진현황”
[3차] “국가 및 인천의 학교 환경교육 정책과 사업”
[4차] “글로벌 탄소중립 아젠다를 위한 지방정부의 준비”
- 주최 : 인천연구원 인천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
- 주관 : 인천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

■ 발표

□ 2023년 1차 포럼

- 발표 1 : 이규진 (아주대학교 지속가능도시교통연구센터 교수)
-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 발표 2 : 조경두 (인천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장)
 - “인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및 후속 조치”

□ 2023년 2차 포럼

- 발표 1 : 변규섭 (인천항만공사 항만환경부장)
 - “인천항 친환경·탄소중립 추진전략 및 성과”
- 발표 2 : 정진학 (인천국제공항공사 그린에너지팀장)
 - “인천국제공항 저탄소·친환경 전략”

□ 2023년 3차 포럼

- 발표 1 : 남신동 (한국교육개발원 환경·통일교육연구실장)
 - “현 단계 학교 환경교육의 발전 과제”
- 발표 2 : 남선정 (인천광역시교육청 AI융합교육과 장학사)
 - “인천광역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 2023년 4차 포럼

- 발표 1 : 손봉희 (ICLEI 한국사무소 부소장)
 - “글로벌 탄소중립과 지방정부”
- 발표 2 : 이태휴 (인천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 책임연구원)
 - “지역탄소중립 정책지원을 위한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방향 및 이행점검”

<행사 사진>





황해평화포럼 정책세미나 (제26~28차)

■ 행사 목적 및 성과

- 대내외적 환경 변화와 국정 및 시정 방향을 반영하여, 기존 전문 분과위원회별 분과회의 형식에서 이를 일원화해 주요 이슈를 주제로 하는 정책세미나 형식으로 변경함.
- 포럼 운영과정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평화통일 교육 등 시 사업과 관련된 주제를 선정하며, 시민의 삶과 밀접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안들을 논의하는 플랫폼으로 운영함.

■ 행사 개요

- 일시 : [제26차] 2023년 2월 22일(목) 15:00~17:00
[제27차] 2023년 6월 21일(화) 15:00~17:00
[제28차] 2023년 9월 21일(금) 15:00~17:00
- 장소 : 인천연구원 대강당
- 주제 : [제26차] “인천상륙작전, 보수와 진보의 대화”
[제27차] “인천시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모색”
[제28차] “황해에서의 도시협력 네트워크와 인천”
- 주최 : 인천연구원
- 주관 : 인천연구원

■ 발표 및 토론

□ 제26차 정책세미나

- 좌 장 : 이준한 (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발 표 : 남근우 (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연구위원)
- “국가보훈의 핵심 가치로 본 인천상륙작전”
- 토론 1 : 임형신 (극동문제연구소 초빙교수)
-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의 필요성과 방향”

- 토론 2 : 이성재 (인천자주평화연대 상임대표)
 - “인천상륙작전, 기념이 아니라 기억해야”

□ 제27차 정책세미나

- 정책 브리핑 : 이승리 (인천시 정책기획관 주무관)
 - “인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 소개”
- 발표 1 :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
 -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정책 방향과 지자체의 역할”
- 발표 2 : 문인철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종합계획과 지원 사례”
- 발표 3 : 박철성 (인천하나센터 센터장)
 - “인천시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모색: 위기가구 현황 및 지원방안”

□ 제28차 정책세미나

- 좌 장 : 최중기 (인하대학교 생명해양과학부 명예교수)
- 토론 1 : 권기영 (인천대학교 문화대학원 교수)
 - “황해에서의 도시협력 네트워크와 인천의 이니셔티브”
- 토론 2 : 최현아 (한스자이텔재단 수석연구원)
 - “환황해 생태계 보전을 위한 도시간 초국경 협력 방향”

<행사 사진>



인차이나클러스터 (2023년 제1~13차)

■ 행사 목적 및 성과

- 중국 교류협력 플랫폼 「인차이나포럼」 운영사업의 일환으로, 중국 전문가 회의인 <인차이나 클러스터>를 운영함.
- 국내외 각계 중국 전문가들과의 회의를 통해,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한 의제를 발굴하고 인천의 실천과제와 역할을 정립하고자 함.

■ 행사 개요

구분	일시	주제
1차	03/13(월) 11:00~16:00	인차이나클러스터 (1차): 인천 공공기관 중화권 교류 실무자 회의 - “2023년 중화권 교류 방향과 주요 사업”
2차	04/28(금) 13:50~16:00	인차이나클러스터 (2차) - “국제정세 진단 및 인차이나포럼 운영 등 제언”
3차	05/13(토) 09:45~12:00	인차이나클러스터 (3차): 인천문화재단 공동 한국-대만 국제회의 - “동아시아 사회문화 교류 과제 발굴”
4차	05/26(금) 10:00~12:00	인차이나클러스터 (4차): 한양대학교 국제대학원 공동 전문가 회의 - “중국의 주변국 인식 및 대외정책 탐색”
5차	06/09(금) 13:00~18:00	인차이나클러스터 (5차): 현대중국학회,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공동 전문가 회의 - “신진연구자를 통해 본 중국의 변동”
6차	06/16(금) 14:00~16:00	인차이나클러스터 (6차) - “2023 인차이나포럼 국제콘퍼런스 착수보고회”
7차	07/14(금) 09:45~12:00	인차이나클러스터 (7차) - “미중 경쟁의 양상 및 우리의 대응”
8차	07/17(월) 13:00~15:00	인차이나클러스터 (8차) - “동아시아 인문유대 현황 및 우리의 과제”
9차	07/21(금) 09:45~12:00	인차이나클러스터 (9차) - “국제정세 및 한중관계”
10차	08/24(목) 10:00~17:00	인차이나클러스터 (10차): 대학생 논문공모전 발표 - “변화하는 세상, 청년이 그리는 한중관계”
11차	11/10(금) 10:00~12:00	인차이나클러스터 (11차) : 인천대 공자학원 공동 한중 국제세미나 - “한중 인문교류 발전을 위한 진단과 제언”
12차	12/07(목) 10:00~15:00	인차이나클러스터 (12차) : 인천 공공기관 중화권 교류 실무자회의 - “기관별 사업내용·계획을 상호 공유 및 2024년 협력과제 발굴”
13차	12/13(수) 16:00~18:00	인차이나클러스터 (13차) : 인천지역 대학·학술기관 전문가 회의 - “인천대 중국학술원, 인천대 중국연구소 학술사업 방향 공유”

■ 발표 및 토론

□ 1차 회의 (인천 공공기관 중화권 교류 실무자 회의)

- 사 회 : 김수한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 참 석 자 : 김은진 (인천광역시 국제협력담당관실 중국교류팀장)
 노윤오 (인천교육청 동아시아국제교육원 팀장)
 김락기 (인천문화재단 경영본부장)
 함지현 (인천상공회의소 차장)
 김성일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책임)
 김지선 (인천연구원 전임행정원)

□ 2차 회의

- 사 회 : 김수한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 발 표 : 최필수 (세종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허재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지역전략팀 부연구위원)
 표나리 (국립외교원 아태연구부 교수)
 이현주 (국토연구원 한반도 동아연구센터 연구위원)
 이재준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선임연구원)

□ 3차 회의 (인천문화재단 공동 한국-대만 국제회의)

- 사 회 : 김수한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 발 표 1 : 정민섭 (인천문화재단 평화교류사업단장)
 - “인천의 평화문화 예술 현황과 한-대 교류 매개 검토”
- 발 표 2 : 하범식 (국립가오슝대학교 동아시아어문학과 교수, 한국연구센터장)
 - “대만의 한국학 교육·연구의 발전과 남부 권역의 지역성”
- 발 표 3 : 최세훈 (중국문화대학교 한국어문학과 조교수)
 - “대만 한국학 교학의 현황과 현지화된 한국학교원 양성의 필요성”
- 발 표 4 : 우권광 (국립대만해양대학교 해양문화연구소 조교수)
 - “대만의 평화·해양 연구 동향 및 인천과의 협력과제”

□ 4차 회의 (한양대학교 국제대학원 공동 전문가 회의)

- 토론사회 : 민귀식 (한양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김수한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 발 표 1 : 채지혜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연구교수)
 - “전후 일본에 대한 중국학계의 인식 고찰: 1946~1949년 시기의 世界知識을 중심으로”
- 발 표 2 : 이윤희 (한양대학교 국제대학원 연구원)
 - “시진핑 집권기 대인도 외교정책 변화요인”
- 발 표 3 : 황상필 (한양대학교 국제대학원 연구원)
 - “중국의 대북정책과 북한의 대응 전략”
- 발 표 4 : 최원선 (한양대학교 국제대학원 연구원)
 - “중국 문화산업 정책에 따른 드라마 산업 변화 연구”
- 지정토론 : 문현미 (한양대학교 현대한국연구소 연구위원)
 양 철 (강원연구원 부연구위원)

□ 5차 회의 (현대중국학회,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공동 전문가 회의)

- 1) 제1세션 (청년연구자 발표회)
 - 사 회 : 안치영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원장)
 - 발 표 1 : 강애리 (중국 푸단대학교 국제관계학원 박사과정)
 - “중국 상하이학파의 국제공생론에 관한 연구”
 - 발 표 2 : 전유정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박사과정)
 - “중국 탄소중립 지역별 이행 여건 및 산업전략 분석”
 - 발 표 3 : 김한솔 (인천대학교 중어중국학과 석사 졸업)
 - “개혁 초기 중국공산당의 제3세대 건설과 의의”
 - 토 론: 허재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현수 (경상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조형진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부원장)
- 2) 제2세션 (신진연구자 학술회의)
 - 사 회 : 장호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 발 표 1 : 정해영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객원연구원)
 - “약속과 배반의 도시: 중국의 토지개발과 물질성의 정치”

- 발 표 2 : 정수현 (심연북한연구소 연구위원)
 - “중국식 국가자본주의의 이해: 지대추구 국가의 관점에서”
 - 발 표 3 : 김봉준 (대만대학교 역사연구소 박사)
 - “근대적 전환인가, 전통의 변용인가: 문서형식의 변천을 통해 본 19세기 말 조청 관계”
 - 토 론 : 김수한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 김재관 (전남대학교 정외과 교수)
 - 이명제 (전남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학술연구교수)
- 6차 회의 (2023 인차이나포럼 국제콘퍼런스 착수보고회)
- 사 회 : 김수한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 참 석 자 : 김영신 (인천광역시 국제협력과장)
 - 김락기 (인천문화재단 경영본부장)
 - 이창훈 (인천상공회의소 국제통상실장)
 - 배민령 (인천시교육청 동아시아국제교육원 연구사)
 - 조형진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부원장, 교수)
 - 민귀식 (한양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중국문제연구소장)
 - 장영희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 연구실장)
 - 이충석 (인천연구원 연구기획실 소통홍보팀장)
- 7차 회의
- 사 회 : 김수한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 발 표 1 : 주장환 (한신대학교 유라시아연구소장, 교수)
 - “거세지는 미중 갈등… 부상하는 실용적 외교”
 - 발 표 2 : 장영희 (성균중국연구소 연구실장)
 - “글로벌 공급망 전략… 실용적 자세로 접근해야”
 - 발 표 3 : 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한·중 경제 기대와 우려 공존… 전략적 유연성 절실”
 - 발 표 4 : 민귀식 (한양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중국연구소장)
 - “중국 시장 여전히 중요… 공급망 구축 큰 그림 필요”

- 발 표 5 : 남대엽 (계명대학교 중어중국학과 교수)
 - “급변하는 국제정세… 균형 있는 실리외교 펼쳐야”

□ 8차 회의

- 사 회 : 김수한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 발 표 1 : 장호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국학과 교수)
 - “경제·안보 연동체제…기층교류 활성화가 해법”
- 발 표 2 : 송영현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
 - “청년 중심 도시외교…한중관계 재구축 디딤돌로”
- 발 표 3 : 조형진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부원장)
 - “인천, 동북아 국제 이주 협력 구축 앞장서야”
- 발 표 4 : 윤종석 (서울시립대학교 중어문화학과 교수)
 - “인천, 글로벌 인재 플랫폼 최적의 장소”

□ 9차 회의 (인천-제주 정책 교류회)

- 사 회 : 김수한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 발 표 1 : 김지영 (국립통일교육원 교수)
 - “한중 인문교류 중심지…제물포 르네상스 활성화를”
- 발 표 2 : 차정미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 “탈냉전, 끝 아닌 제2막…새 한중관계 설계해야”
- 발 표 3 : 양갑용 (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우리 안의 중국인 주목…내향형 공공외교 필요”
- 발 표 4 : 정주영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상임연구원)
 - “한중 경험 돌파구…녹색협력으로 뚫어야”
- 발 표 5 : 김칭우 (인하대학교 겸임교수, 인천일보 경제부장)
 - “동아시아 거점도시 인천…중국 교류 중심지로”

□ 10차 회의 (대학생 논문 발표회)

- 발 표 1 : 김유경, 정태운 (서울시립대학교)
 - “높아진 반중감정에 대한 해결방안: 팝업스토어를 중심으로 한 한중청년교류 공간의 설계”

- 발 표 2 : 김주영, 신민교, 이경서, 진윤주 (인하대학교)
 - “한중 교류 프로그램을 통한 인식 제고: 〈또 와~, 모두 놀자!〉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 발 표 3 : 박선주, 정유리, 조유성 (경북대학교)
 - “한국인 대학생의 ‘협중’ 현상 분석 및 해결방안: 〈한중 문화 다이빙 챌린지〉”
 - 발 표 4 : 임경은, 장샤오판, 천베이베이, 장준한 (연세대학교 대학원)
 - “재한판다 ‘바오가족’ 사례를 통해 본 한중관계 개선의 길: 〈전지적할부지시점〉 한중
댓글 텍스트 마이닝 분석”
- 11차 회의 (인천대학교 공자학원 공동 한중 국제세미나)
- 토론사회 : 김수한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 발 표 1 : 민귀식 (한양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중국문제연구소장)
 - “변화하는 국제환경과 한중인문 교류”
 - 발 표 2 : 이계정 (수원대학교 국제대학 교수)
 - “한중 수교 이래 한국 중국어 교육의 현황과 미래”
 - 지정토론 : 장영덕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학술연구교수)
 - 정민섭 (인천문화재단 평화교류사업단장)
 - 왕시우칭 (중국 취푸사범대학교 교수, 안동대학교 공자학원 부원장)
 - 자오칭 (중국 베이징어언대학교 교수, 계명대학교 공자학원 부원장)
- 12차 회의 (인천 공공기관 중화권 교류 실무자 회의)
- 사 회 : 김수한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 참 석 자 : 김은진 (인천광역시 국제협력과 중국교류팀장)
 - 홍준상 (인천상공회의소 국제통상실 주임)
 - 이연우 (인천문화재단 평화교류사업단 주임)
 - 노윤오 (인천광역시교육청 동아시아국제교육원 팀장)
 - 김성일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본부 책임)
 - 최성호 (인천관광공사 해외마케팅팀장)
 - 이충석 (인천연구원 소통홍보팀장)

□ 13차 회의 (인천지역 대학·학술기관 전문가 회의)

- 사 회 : 김수한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 참 석 자 : 조형진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부원장, 교수)
정주영 (인천대학교 중국연구소 상임연구원, 중국지역학회 총무위원장)

<행사 사진>



II

2023년도 연구결과 요약집

국제 학술행사

- 제7회 동아시아 문호도시 정책포럼
- 제3회 저탄소도시 국제포럼
- 2023년 인천 국제재난복원력 지도자 포럼
- 제7회 인차이나포럼 국제콘퍼런스
- Megacity Think Tank Alliance Forum
- 제10회 국제기후금융·산업컨퍼런스
- 제16회 인천연구원-기타큐슈시립대학 공동연구발표회

제7회 동아시아 문화도시 정책포럼

■ 행사 목적 및 성과

- 문화도시 정책포럼은 글로벌 경제의 주요한 공간 축으로 부상하고 있는 동아시아 수도권에서 해당 지역 관문도시들의 도시발전 경험과 정책사례를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 과제를 공동으로 모색하기 위한 국제학술행사임.
- 중국 톈진에서 개최하는 <제7회 동아시아 문화도시 정책포럼 겸 2023 중국 톈진 도시거버넌스 국제포럼>에 참석하여, 기조연설 및 발표·토론 등을 통해 참가한 해외학자와 학술교류를 진행하고 이를 연구에 반영하고자 함.
- 이번 포럼의 내용을 인천에서 개최하는 인차이나포럼 등 인천연구원 주관 국제학술회의의 기획과 운영에 참고함.

■ 행사 개요

- 일시 : 2023년 6월 28일(수) 09:30~17:00
- 장소 : 중국 톈진 샹그리나호텔 연회장
- 주제 : “우호도시의 협력과 도시 국제화”
- 주최 : 인천연구원, 톈진사회과학원
- 주관 : 톈진사회과학원

■ 발표 및 토론

□ 기조연설 및 주제발표

- 기조연설 : 박호균 (인천연구원장)
- 주제발표 : 황춘옌 (黃春艷, 톈진시 대외교류협회 전임 부회장)
 슈 용 (舒勇, 중국사회예술협회 부주석 및 중국미술가협회 이사)
 왕이웨이 (王义桅, 중국인민대학교 국제관계학원 교수)

류샤오화 (陆小华, 텐진대학교 뉴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원장)

공슈카이 (巩书凯, Yidian Yichuang 회장 및 Humi Technology CEO)

□ 세션 1 : “우호협력 회고 및 전망: 텐진-인천 30주년, 텐진-고베 50주년”

- 세션사회 : 리우저 (刘哲, 텐진사회과학원 부원장)
- 발 표 1 : 김수한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 “변화하는 국제환경과 한·중 지방정부의 협력: 인천-천진을 중심으로”
- 발 표 2 : 장지평 (张李风, 전 중국사회과학원 일본연구소 부소장)
 - “한중일 관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자매도시 협력 강화”
- 발 표 3 : 다카하시 겐지 (高桥健司, 일본 고베 텐진대표사무소 수석대표)
 - “고베시와 텐진시 간의 우호도시 교류”
- 발 표 4 : 텡샨란 (田香兰, 텐진사회과학원 아시아태평양협력개발연구소장)
 - “텐진시와 인천시 간의 자매도시 30년 회고와 전망”
- 발 표 5 : 저우샤오샤 (周晓霞, 텐진사회과학원 아시아태평양협력개발연구소 부연구원)
 - “텐진시와 고베시 자매도시 50년 회고와 전망: 일본 언론 매체의 보도 사례를 중심으로”
- 지정토론 : 핑리쥘 (平力群, 텐진사회과학원 동북아지역협력연구소 연구원)

□ 세션 2 : “도시 이미지 형성과 국제화”

- 세션사회 : 왕리옌 (王立岩, 텐진사회과학원 과학연구조직처장)
- 발 표 1 : 가네코 유키요시 (金子由芳, 고베대학교 사회시스템혁신센터 부소장)
 - “자매도시 교류의 미래비전: 항만 인공섬·사이언스파크 구상 사례를 중심으로”
- 발 표 2 : 장위라이 (张玉来, 난카이대학교 일본연구원 부원장)
 - “자매도시 교류의 새로운 선도 모델: 텐진의 원점과 새로운 시작”
- 발 표 3 : 슈에유 (薛钰, 텐진시 도시국제화연구센터 부주임)
 - “새 시대의 도시 국제화 발전을 위한 대안과 경로”
- 발 표 4 : 지홍수 (季泓旭, 텐진사회과학원 아시아태평양협력개발연구소 연구원)
 - “국제적 관점에서 영화·영상을 통해 살펴본 텐진시의 도시 이미지”
- 발 표 5 : 울란투야 (乌兰图雅, 텐진사회과학원 동북아연구소 부연구원)
 - “한중일 항구도시의 자매도시 건설 현황과 새로운 대안 모색”
- 지정토론 : 이정철 (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연구위원)

□ 세션 3 : “도시 외교와 국제 영향력 구축”

- 세션사회 : 마오젠 (苗健, 텐진사회과학원 동북아연구소장)
- 발 표 1 : 저우핑핑 (周萍萍, 중국외교대학교 일본연구센터장)
 - “인류운명공동체의 개념과 국제 자매도시 교류의 새로운 길 모색”
- 발 표 2 : 장무휘 (张暮辉,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과 부교수)
 - “한중일 도시외교의 현황, 발전 및 향후 과제”
- 발 표 3 : 추이선 (崔勋, 중국아시아경제발전협회 민관협력실무위원회 위원장)
 - “향촌 활성화를 통한 글로벌 브랜드 건설 및 도시 글로벌 이미지 제고”
- 발 표 4 : 장레이 (张磊, 텐진직업기술사범대학교 루반공방국제개발연구센터장)
 - “텐진 교육의 국제 서비스 역량”
- 지정토론 : 텐칭리 (田庆立, 텐진외국어대학교 지역·국가연구센터장)

<행사 사진>



제3회 저탄소도시 국제포럼

■ 행사 목적 및 성과

- 저탄소도시 국제포럼은 UNESCAP의 지식과 경험, 인천광역시의 도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각 도시의 이니셔티브를 논의하여 협력 시너지를 창출하고자 개최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와 국제기구, 지역 및 도시 네트워크, 전문가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함께 각 도시의 현재 이니셔티브를 보완하고, 도시 수준의 기후행동 강화 방안을 논의함.
- 제3회 저탄소도시 국제포럼은 기후변화 및 적응에 대한 다양한 레벨의 이해관계자가 모이는 UNFCCC 적응주간에 개최하여, 인천을 비롯해 동북아시아 도시네트워크가 그간의 노력을 상호 공유함.

■ 행사 개요

- 일시 : 2023년 8월 29일(화) 09:00~17:20
- 장소 : 송도컨벤시아 프리미어볼룸 A홀 [온/오프라인 병행]
- 주제 : “동북아 도시 주도의 기후 행동”
- 주최 : UNESCAP, 인천광역시
- 주관 : 인천연구원(인천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 GCF, 시티넷, 기후변화센터, 이클레이, 글로벌혁신개발연구소(중국),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지방정부협의회

■ 발표 및 토론

□ 세션 1 : “지역 기후행동에서 도시와 도시네트워크의 역할”

- 세션사회 : 박현정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부소장)
- 주제발표 : 강민경 (인천연구원 인천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 책임연구원)
Tatiana Naumova (러시아 모스크바 공식행사 및 의전국장)
Nozomi Shimazu (일본 교토 글로벌환경정책관)

Xuan Xie (ICLEI 동아시아사무소 프로그램오피서)

Cheis DiGennaro (CityNet 사무국 프로그램오피서)

□ 세션 2 : “지역 기후행동을 위한 기술과 혁신”

- 세션사회 : Bapon Shm Fakhruddin (GCF 완화및적응부서 수자원 관리 수석전문가)
- 주제발표 : Enkhtuvshin Ganbaatar (몽골 에너지부 투자생산본부장)
Junko Akagi (일본 지구환경전략연구소 연구책임자)
Xingxing Cai (푸단대학교 생명과학대학)
Amgad Elmahdi (GCF 경감및적응분과 물분야 선임전문가)
강동균 (K-water 녹색전환이니셔티브본부 차장)

□ 세션 3 : “저탄소도시를 위한 민관 협력”

- 세션사회 : 박 현 (서울시립대학교 국제도시과학대학원 교수)
- 주제발표 : 김묵한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정준성 (삼성전자 사업개발부장)
Liuchaun Tong (중국 Tencent 선임전략매니저)
Zolzaya Enkhtur (몽골 기후캠페인 창립자 및 경영이사)
Liu Xueye (중국 글로벌탈탄소화연구소(iGDP) 애널리스트)
이권표 (U-Saver 기후변화센터 서포터즈)

<행사 사진>



2023 인천 국제재난복원력 지도자 포럼

■ 행사 목적 및 성과

- MCR 2030 복원력 허브 도시인 인천광역시와 UNDRR ONEA & GETI, 인천연구원 등이 주최하는 연례 국제행사로서, 세계 각국의 지역 지도자들이 재난과 기후변화에 직면한 도시와 지역의 복원력을 높이기 위한 경험과 실현 가능한 해결책을 공유하는 플랫폼임.
- 동북아, 아세안 지역 및 기타 대륙의 지도자들과 국내외 전문가들이 지역 차원의 기후 및 재난위험 경감 기술 활용 사례, 거버넌스 구축, 인명구조를 위한 조기경보 체계 등과 같은 보다 접근하기 쉽고 사람 중심적인 기술 솔루션에 대한 혁신적인 파트너십과 포괄적인 접근의 기회를 논의함.

■ 행사 개요

- 일시 : 2023년 9월 18일(월)~19일(화)
- 장소 : 송도컨벤시아 그랜드볼룸
- 주제 : “기후 및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기술 활용 및 파트너십 구축”
- 주최 : 인천광역시, 유엔재난위험경감사무국, 인천연구원
- 후원 : 행정안전부

■ 발표 및 토론

□ 제1세션 : “동북아 지도자 라운드테이블”

[1부] 동북아 지진연구와 공동 대응 방안

- 사회 : Ms. Loretta Hieber Girardet (UNDRR위험정보모니터링 및 역량개발부서 국장)
- 연사 : Ms. Makiko Ohashi (일본, 내각사무처 재난관리국 수석 부국장)
박우진 (행정안전부 지진방재관리과 과장)
Mr. Baasansuren Demberelnyam (몽골, 중앙위기관리청 재난위험관리부 국장)

[2부] 동남아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협력 및 기술

- 사회 : Ms. Loretta Hieber Girardet (UNDRR위험정보모니터링 및 역량개발부서 국장)
- 연사 : Mr. Raditya Jati (인도네시아, BNPB 시스템 및 전략 부국장)
Mr. Hussain bin Moh (말레이시아, NADMA 부국장)
Mr. Albert A. Mogol (필리핀, 민방위청 국방과 지역국장)
Mr. Anthony Toh (싱가포르 민방위군 부청장)
Mr. Boontham Lertsukekasem (태국, 재난 예방 및 경감부 국장)
Mr. Martinho Fatima (동티모르, 시민보호청, 토지운영 부국장)
Mr. Ta Ngoc Tan (베트남, 재난 및 제방 관리청 고위공무원)
Ms. Anh Son Nguyen (ASEAN 재난관리 및 인도적 자원과 고위 책임자)

□ 제2세션 :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DRR 기술 활용에 관한 도시 우수사례”

- 사회 : Ms. Violeta Seva (지진과 메가시티 이니셔티브(EMI) 사무총장)
- 연사 : 박찬훈 (인천광역시 시민안전본부 본부장)
Mr. Yasufumi Shiraiwa (일본 센다이시 경제국 혁신부 수석국장)
Mr. Saharuddin Hamid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시 수석부국장)
Ms. Tavida Kamolve (태국, 방콕광역지역 부지사)

□ 제3세션 : “전 세계 MCR 2030 도시의 DRR 기술 활용에 관한 도시 우수사례”

- 사회 : Ms. Dilanthi Amaratunga (히더스필드대 재난위험경감 교수)
- 연사 : JOSE LUIS FLÓREZ VALENCIA (콜롬비아, 도스크브라다스시 위험경감사무소 국장)
Mr. Momodou BK Ceesay (감비아 서해안지역, 재난관리 조정관)
Mr. Joseph Uapingen (나미비아 빈트후크 시장)
Ms. Luisa Salgueiro (포르투갈 마토지뉴스 시장)

□ 제4세션 : “기후 변화 및 재난위험 경감을 위한 기술 활용”

- 사회 : 조 성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과 교수)
- 연사 : Ms. Jie Wu (저탄소생태계획연구센터 부소장, GZPI)
Mr. Rajib Shaw (게이오대학 교수)

박병철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지진방재센터장)

장대원 (LIG 시스템 재난안전관리연구소장)

□ 제5세션 : “재난 위험 경감을 위한 글로벌 협력 및 파트너십”

- 시회 : 류현숙 (한국행정연구원 행정안전연구실 선임연구위원)
- 연사 : Ms. Betül Ergün Konukcu (튀르키예, 이스탄불시 지진 및 토지분석 과장)
Ms. Olga Dzhumaeva (국제적십자사연맹 동아시아단 대표)
Mr. Helmi Abidin (UCLG ASPAC, 재난위험경감/ 복원력 코디네이터)
조한나 (한국환경연구원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 연구위원)

<행사 사진>



인차이나포럼 2023 국제콘퍼런스

■ 행사 목적 및 성과

- 인차이나포럼은 2016년 인천광역시가 민·관·산·학 각계와 공동으로 창립한 중국 교류 및 비즈니스 종합 플랫폼으로, 상생·창조·소통의 한중관계를 위한 협력과제를 발굴하고 인천의 역할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함.
- 2023년에는 인천-톈진 자매도시 결연 30년을 기념한 특별기획을 통해, 한중 수도권 중심지인 두 도시의 발전 경험과 정책을 상호 학습하고 미래 비전을 공유함으로써, ‘초일류도시 인천’을 위한 국제협력 기반 조성에 기여함.

■ 행사 개요

- 일시 : 2023년 9월 19일(화) 9:30~17:00
- 장소 : 송도컨벤시아 프리미어볼룸 [온·오프라인 병행]
- 주제 : “변화하는 세상, 다시 그리는 한중관계”
- 주최 : 인천광역시, 주한중국대사관
- 주관 : 인천연구원, 인천상공회의소, 인천문화재단, 인천대 중국학술원, 현대중국학회, 한양대 중국문제연구소

■ 발표 및 토론

□ 1부 개막식 및 기조연설

- 기조연설 :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 2부 한중 청년대화

- 1세션 : ‘청년 논문 공모전’ 수상자 발표·토론
- “변화하는 세상, 청년이 그리는 한중관계”

□ 3부 전문가 세션

- 기조발언 : 증휘빙 (톈진사회과학원 원장)
민귀식 (인차이나포럼 조직위원, 한양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 [Part I] “도시의 역사·문화 자산을 활용한 미래발전 구상 및 협력”
- 세션사회 : 장호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현대중국학회 회장)
- 발 표 1 : 런지동 (톈진사회과학원 역사문화연구소장)
- “톈진의 도시재생과 지역발전-역사거리 보호 및 활용”
- 발 표 2 : 조상운 (인천연구원 제물포르네상스연구단장, 선임연구위원)
- “인천 내항 일대 도시재생사업의 경험”
- 지정토론 : 헨상란 (톈진사회과학원 아태협력연구소장)
이정철 (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연구위원)
윤중석 (서울시립대학교 중국어문화학과 교수)
김지영 (국립통일교육원 교수)
- [Part II] “인천-톈진의 혁신 신산업의 육성과 협력 과제”
- 세션사회 : 조형진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부원장, 교수)
- 발 표 1 : 서봉만 (인천연구원 도시정보센터장, 연구위원)
- “인천시 경제산업 동향과 미래 전략”
- 발 표 2 : 왕휘지 (톈진사회과학원 시정연구센터 부소장)
- “중국 탄소피크·중립전략 및 톈진 녹색 저탄소 발전”
- 지정토론 : 왕리엔 (톈진사회과학원 과학연구처 처장)
윤석진 (인천연구원 글로벌산업연구단장, 연구위원)
허재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협력·부대 행사

- 인천문화재단 : “개항도시, 인천” 사진전
- 인천상공회의소 : 한중 수출상담회
- 인천광역시 : 인천-톈진 결연기념 전시
- 인차이나포럼·인천일보 : 연재칼럼 도서 전시
- 시민참여 : 퀴즈부스, 인생네컷, 포토존, 만족도조사

<행사 사진>



제7회 Megacity Think Tank Alliance Forum

■ 행사 목적 및 성과

- Megacity Think Tank Alliance Forum은 대도시 당면 문제와 시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아시아지역 거대도시들의 시정 지원 연구기관 국제 네트워크임.
- 2023년에는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도시 전환 정책”을 주제로 연례 학술행사를 통해 도시문제와 그 해결책에 관한 정보를 공유함.

■ 행사 개요

- 일시 : 2023년 10월 26일(목) 13:30~17:00
- 장소 : 부산 호메르스호텔 오딧세이홀
- 주제 :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도시 전환 정책”
- 주최 : Megacity Think Tank Alliance Forum(인천연구원, 서울연구원, 부산연구원, 베이징성시규획설계연구원, 상하이성시규획설계연구원, 싱가포르 살기좋은도시센터, 호치민개발연구원, 하노이도시계획연구원, 말레이시아계획가협회)
- 주관 : 부산연구원

■ 발표 및 토론

- 기조연설 : 신현석 (부산연구원 원장)
 - “지속가능한 그린 스마트시티 이니셔티브를 통한 부산의 변화”
- 발 표 1 : ZHANG JIAYI (베이징성시규획디자인연구소)
 - “베이징 도시계획에 있어서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성찰”
- 발 표 2 : LIMIN HEE (싱가포르 살기좋은도시센터)
 - “싱가포르의 지속가능한 이동성”
- 발 표 3 : DUC HUNG NGUYEN (하노이도시계획연구소)

- “하노이의 Net-Zero 비전: 미래의 도시 형성”
- 발 표 4 : 조성윤 (인천연구원)
 - “회복력 있는 인천: 지속가능하고 안전하며 포용적인 도시를 향한 비전과 전략”
- 발 표 5 : 윤서연(서울연구원)
 - “서울 수변지역(한강) 변화를 위한 노력과 프로젝트”
- 발 표 6 : 남호석 (부산연구원)
 -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Net-Zero 부산을 향하여”

<행사 사진>



2023 국제기후금융·산업컨퍼런스

■ 행사 목적 및 성과

- 파리협정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체 중 특히 지방정부와 도시의 역할이 중요함. 이에 인천광역시는 한국 내 기후변화 대응의 선도적 역할 수행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제기후금융·산업컨퍼런스를 매년 개최함.
-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 지구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다양한 레벨의 이해관계자와의 협력과 논의가 필요함.
- GCF 사무국 출범을 기념해 2014년 국제기후금융·산업 컨퍼런스가 시작되어 10회를 맞이한 올해 컨퍼런스는 '협력과 거버넌스'를 주제로, 중앙 및 지방정부, 시민, 기업, 국제기구 등이 함께 모여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함.

■ 행사 개요

- 일시 : 2023년 11월 9일(목) 09:30~16:30
- 장소 : 송도컨벤시아 프리미어볼룸, 1층 회의실 [온·오프라인 병행]
- 주제 : “글로벌 협력을 위한 탄소중립 거버넌스”
- 주최 : 인천광역시, 인천연구원
- 주관 : 인천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 국가녹색기술연구소
- 후원 : 기획재정부, 환경부

■ 발표 및 토론

□ 개회식 및 기조연설

- 개 회 식 : 개회사, 환영사, 축사
- 기조연설 : 김상협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장)
- 컨퍼런스 10년 경과보고 : 조경두 (인천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장)

□ 세션 1 : “탄소중립을 향한 글로벌 협력”

[라운드테이블]

- 세션사회 : 손성환 (인천광역시 GCF 자문대사)
- 패 널 : 김철수 (인천광역시 환경국장)
Simon Wilson (GCF 대외협력국 부국장)
Ganbold Baasanjav (UNESCAP 동북아시아사무소장)
이상협 (국가녹색기술연구소장)
김주진 ((사)기후솔루션 대표)

□ 세션 2 : “기후금융의 확대 및 민간의 참여”

- 세션사회 : 김종대 (인하대학교 녹색금융대학원 교수)
- 발 표 1 : Mayuresh Patange (GCF 민간섹터 기후투자 매니저)
- “Scaling up Climate Finance”
- 발 표 2 : 안주희 (KDB산업은행 녹색금융기획부 팀장)
- “KDB’s Endeavor for Global Net Zero”
- 발 표 3 : 최지우 (Acumen Fund 전략이니셔티브 부문장)
- “Acumen’s Africa Energy Access Project and its partnership with Korean banks and businesses”
- 지정토론 : 문진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세션 3 : “탄소중립을 위한 지역 협력 강화”

- 세션사회 : 김익수 (환경일보 편집대표)
- 발 표 1 : 조경두 (인천탄소중립지원센터장)
- “인천광역시 탄소중립을 위한 지역간 협력 이슈와 과제”
- 발 표 2 : 유정민 (서울탄소중립지원센터장)
- “서울시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한 해외/지역간 협력 필요성과 향후 과제”
- 발 표 3 : 박수진 (강원탄소중립지원센터장)
- “강원도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역할과 탄소중립 추진 사례”
- 발 표 4 : 정광영 (대통령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공정전환과장)
-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과 추진과제”
- 지정토론 : 박연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장)

□ 세션 4 : “기후기술과 협력 활성화”

- 세션사회 : 김경남 (고려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 교수)
- 발표 1 : 신종석 (국가녹색기술연구소 선임연구원)
 - “Data-driven Approach and Strategy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Achieve Net-Zero”
- 발표 2 : 강수일 (CTCN 협력연락사무소 조정담당관)
 - “CTCN’s activities for the facilitation of climate technology development and transfer of developing countries”
- 발표 3 : 김은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 “Global Efforts to Achieve Carbon Neutrality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Plans for the Korean Climate Tech Industry”
- 지정토론 : 임은정 (공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이준성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자원산업실장)

□ 세션 5 : 탄소중립을 위한 비즈니스 전략과 과제

- 세션사회 : 이종일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기술경영학과 교수)
- 발표 1 : 김우영 (SK인천석유화학 Net-Zero팀장)
 - “SK Net-Zero 전략과 로드맵”
- 발표 2 : 박상원 (인천항만공사 물류전략처 대리)
 - “친환경 탄소중립 전력과 이행성과”
- 발표 3 : 이다연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책임연구원)
 - “기후공시 동향과 탄소중립 전략 달성을 위한 대응 방안”
- 지정토론 : Kate Kalinova ((사)기후솔루션 연구원)

<행사 사진>



제16회 인천연구원-기타큐슈시립대학 공동연구발표회

■ 행사 목적 및 성과

- 2006년 기타큐슈시립대학과의 연구교류 협정에 따라, 연구교류의 일환으로 공통 현안에 관한 연구사례를 선별하여 운번제로 발표회를 개최함.
- 공동연구발표회는 도시정책 연구의 상호 벤치마킹과 연구성과의 심화를 위해 양 기관 관련 연구자를 대상으로 개최하며, 해외교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연구협력을 통해 연구 수준의 제고에 활용해 왔음.
- 2023년은 '커뮤니티'를 주제로 한 공동연구 2차 연도로, 사회적경제기업, 지역사회 돌봄 사업, 초고령화 시대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 등에 관해 연구성과를 공유함.

■ 행사 개요

- 일시 : 2023년 12월 11일(월) 13:30~17:30
- 장소 : 기타큐슈시립대학 프랭크 우 아시아국제교류홀
- 주제 : "커뮤니티의 새로운 정책 전개"
- 주최 : 인천연구원, 기타큐슈시립대학
- 주관 : 기타큐슈시립대학 지역전략연구소

■ 발표 및 토론

- 발표 1 : 이금동 (기타큐슈시립대학 지역전략연구소 특임준교수)
- "축소도시 기타큐슈시의 도시농업 커뮤니티"
- 발표 2 : 서봉만 (인천연구원 도시정보센터장,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 "인천시 사회적경제기업과 마을활동가의 도시재생사업 참여 경험 평가와 정책 시사점"
- 발표 3 : 안도 신타로 (기타큐슈시립대학 국제환경공학부 건축디자인학과 준교수)
- "개호예방을 실현하는 거주와 커뮤니티의 창조"
- 발표 4 : 정혜은 (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연구위원)
- "인천광역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례"

<행사 사진>



II 정책연구보고서 2024-01

2023년도 연구결과 요약집

발행인 박호군

발행일 2024년 3월 31일

발행처 인천연구원

[22711]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98

TEL. 032) 260-2600

FAX. 032) 260-2629

<http://www.ii.re.kr/>

©인천연구원 2024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로서 인천연구원의 공식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사는 금합니다.

Summaries of 2023 Research Reports

